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를 마치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민선 5기째인 이번 지방선거에는 시·도 지사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선출해 역사상 최대인 8개 선거를 동시에 치렀습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54.5%로 과거 5번 치뤄진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야 후보간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의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높였고, 천안함 침몰·세종시 논란·노풍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이슈가 많아 유권자들의 관심을 키운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함에도 대형 이슈에 묻혀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견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선거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의 경우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특집 기획 기사를 연재하면서 리더십 평가, 후보자 공약 분석 등 바람직한 선거보도 유형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언론은 과거의 보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다수 언론은 천안함 침몰 이후 관련 내용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들을 주로 기사화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현황을 살펴보면 선거기간 초기에는 현직 지자체장을 부각시키는 홍보성 기사에 대해 많은 제재가 이뤄지다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급격하게 제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을 인용해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 조사결과 공표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사에 대한 제재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0년 제16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여덟 번째로 설치됐습니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 삼 승



160건의 자체심의 및 18건의 시정요구에 대해 심의·의결했습니다. 역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현황 중 가장 많았고 지난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의결건수 8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많은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 등 선거 종류가 늘어났고, 지역언론에서 현직 지자체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많이 게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 신문 중에는 4차례 이상 제재를 받은 언론사가 7곳이나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이 명백하고 의도성이 농후한 선거기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 유형 중 경고문 게재문의 형식을 세분화해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른 제재를 내렸습니다.

선거기사심의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심의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 상설화가 바람직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 심의·의결 유형을 잘 분석해 향후 심의위원회에서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의 기준 및 제재 유형에 대한 부분도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언론의 공정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언론은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선거 관련 정보 제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적인 식견으로 선거기사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언론중재위원장을 비롯한 전문 심의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ontents

제1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007
	제1장 위원회 구성	008
	제2장 심의·의결 절차	010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012
제2부	심의·의결 현황	015
	제1장 심의개요	016
	제2장 심의·의결현황 및 분석	017
	Ⅰ. 심의·의결 현황	017
	1. 자체 심의	017
	2. 시정요구 심의	019
	Ⅱ. 자체심의 분석	020
	1. 위반유형별 분석	020
	2. 결정내용별 분석	026
	3. 매체유형별 분석	035
	Ⅲ. 시정요구심의·의결 현황	042
	1. 정정보도문 게재	043
	2.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043
	3. 경고문 게재	044
	4. 반론보도문 게재	045
	5. 기각	046

제3부	종합평가	049
	제1장 심의위원 평가	050
	제2장 결산좌담	058
제4부	심의·의결 사례	069
	제1장 자체심의	070
	1. 경고결정문	070
	2. 경 고	098
	3. 주 의	282
	4. 권 고	369
	제2장 시정요구심의	401
	1. 정정보도문 게재	401
	2.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405
	3. 경고문 게재	411
	4. 반론보도문 게재	428
	5. 권 고	439
	6. 기 각	441
	7. 각 하	450
부 록		453
	1. 선거기사심의기준	454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457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69
	4. 심의대상 매체현황	481
	5. 색 인	484

제 1 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1장 위원회 구성
- 제2장 심의·의결 절차
-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제 1 장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사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 2010년 2월 2일 전일인 2월 1일부터 선거일후 30일(2010년 7월 2일)까지 활동했다.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 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 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9.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2. 구 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자에 포함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언론학회, 신문협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 추천을 의뢰했으며, 추천권자인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추천단체	비 고
위 원 장	양 삼 승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위원장	박 기 동	변 호 사	언론중재위원회	
위 원	박 문 웅	공선협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시민단체)	
	원 병 설	배재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 병 철	전 세계일보 주필	한나라당	
	한 국 연	전 CBS 상무이사	언론중재위원회	
	배 정 근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신문협회(언론인단체)	
	김 동 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이 용 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민주당	

3. 기 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 2 장

심의 · 의결 절차

1. 자체심의

전문 모니터요원과 실무팀은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모니터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안전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문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문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1. 공직선거법 개정(위원회 관련)

2009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2010. 1. 25.시행)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 중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변경이다. 그동안 재·보궐 선거시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재·보궐 선거시에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둘째,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권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후 국회 교섭정당이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보도록 했다.

셋째,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기간이 변경되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가능했던 반론보도청구가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2. 심의위원회 규칙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칙을 전면 개정(2010. 1. 26.)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권자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위원 추천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심의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하도록 했다. 또한 시정요구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정요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각하 또는 기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관련 서식을 신설했다.

3.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

개정 「공직선거법」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 보도에 관한 조항인 제108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심의기준에 포함했다.

즉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를 신설하여 언론사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보도할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거나 서열화하여서는 안되도록 했으며,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결과 보도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도록 했다.

제2부

심의 · 의결현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장 심의개요

제2장 심의 · 의결현황 및 분석

제 1 장

심의개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운영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사과문게재’ 결정은 선거법상 규정돼 있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 중의 하나이지만, 사과문게재 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정보도문게재’ 결정은 양 당사자의 제출 자료나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해당 기사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왜곡되고 잘못되었다고 밝혀진 경우 결정하도록 했다.

‘반론보도문게재’ 결정은 정정보도문게재 결정과는 달리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았으나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사하기로 했다.

‘경고문게재’ 결정은 동일 유형의 위반을 반복하거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 특정 후보를 부각 보도함으로써 불공정성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리기로 했다.

‘경고’ 결정은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부각보도하거나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 광고 게재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주의’, ‘권고’ 결정은 비록 기사로 인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긴 하나 의도성이 거의 없거나 위반 수위가 미약한 경우 경중을 따져서 내리도록 했다.

제 2 장

심의 · 의결현황 및 분석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기사심의는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심의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I. 심의 · 의결 현황

1. 자체심의

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심의실무 팀에서 대상매체(중앙일간지 31종, 지역일간지 100종, 종합주간지 34종, 교육주간지 13종, 지역주간지 230종, 월간지 36종, 뉴스통신 2종 등 446종)의 선거관련 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낸 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 ·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교육 관련 매체를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14차례 회의를 개최해 160건의 자체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160건 중 경고가 91건(56.9%)로 가장 많았고, 주의 45건(28.1%), 권고 16건(10.0%) 그리고 경고문 게재 결정 8건(5.0%)이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100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기고 32건(20.0%), 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 24건(15.0%)이었다.

자체심의 회차별 의결현황

구 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2차	28	28						6	16	6
3차	28	20	2			6		8	12	8
4차	17	7	5			5		10	7	
5차	24	8	2		3	11		19	4	1
6차	4	3				1	1	2		1
7차	9	6	1			2		9		
8차	9	4	1			4		8	1	
9차	5	3	2					2	3	
10차	7	4	2			1		6	1	
11차	16	10	4		1	1	4	12		
12차										
13차	6	2	4				1	5		
14차	4	2	1			1	2	2		
15차	3	3						2	1	
총 계	160	100	24		4	32	8	91	45	16
	100.0%	62.5%	15.0%		2.5%	20.0%	5.0%	56.9%	28.1%	10.0%

각 매체 유형별 의결현황을 보면, 일간지는 112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중앙종합일간지는 10건, 지역종합일간지는 92건, 일반경제지 4건 그리고 스포츠지와 무료일간지가 각각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73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기고 22건(19.6%), 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 16건(14.3%)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일간지의 경우 외부기고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21건으로 타 매체 유형보다 많은 제재를 받았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가 56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39건(34.8%), 권고 11건(9.8%) 그리고 경고문게재결정이 6건(5.4%)으로 나타났다.

주간지는 40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종합주간지는 16건, 지역주간지는 24건의 제재를 받았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형평성 위반이 21건(52.5%), 외부기고 9건(22.5%), 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 7건(17.5%), 광고제한 3건(7.5%)이다. 특히 지역주간지 또한 지역일간지와 마찬가지로 외부기고로 인한 제재(6건, 25%)가 많았다. 결

정내용별로는 경고가 28건(70%)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와 권고가 각각 5건(12.5%) 그리고 경고문게재가 2건(5.0%)으로 나타났다.

월간지는 7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형평성 위반으로 6건, 외부기고 1건이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 6건, 주의 1건으로 나타났다. 뉴스통신은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로 1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자체심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1건으로 기각되었다.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의결현황

구 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일간지	중 앙	20	11	8		1		9	6	5
	지 역	92	62	8		1	21	6	47	33
종합주간지	16	7	6			3		11	4	1
지역주간지	24	14	1		3	6	2	17	1	4
월 간 지	7	6				1		6	1	
뉴 스 통 신	1		1					1		
총 계	160	100	24		4	32	8	91	45	16
	100.0%	62.5%	15.0%		2.5%	20.0%	5.0%	56.9%	28.1%	10.0%

2. 시정요구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18건으로 중앙일간지 1건, 지역일간지 7건, 지역주간지 8건, 월간지 및 뉴스통신이 각각 1건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을 들은 후 안건을 심의, 결정했으며, 처리결과는 정정보도문 게재 2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2건, 경고문게재 4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권고 1건, 기각 4건, 각하 1건이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4건으로 2건은 기각되었으며, 2건은 인용결정을 내렸다. 인용결정 중 일부인용은 1건, 원심 취소는 1건이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사건은 한건도 없었다.

시정요구심의 처리현황

구 분 간 별 계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사과문 게재 등	경고문 게재 등	정정보도 게재 등	정정보도 게재결정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결정	경고문 게재결정	반론보도 게재결정	권고	기각	각하
일간지	중 앙	1		1						1	
	지 방	7	1	1	5	1		4	1	1	
지역주간지		8	2	2	4	2	1	3		1	1
지역월간지		1		1						1	
뉴 스 통 신		1	1				1				
총 계	18	4	3	11	2	2	4	4	1	4	1
	100.0%	22.2%	16.7%	61.1%	11.1%	11.1%	22.2%	22.2%	5.6%	22.2%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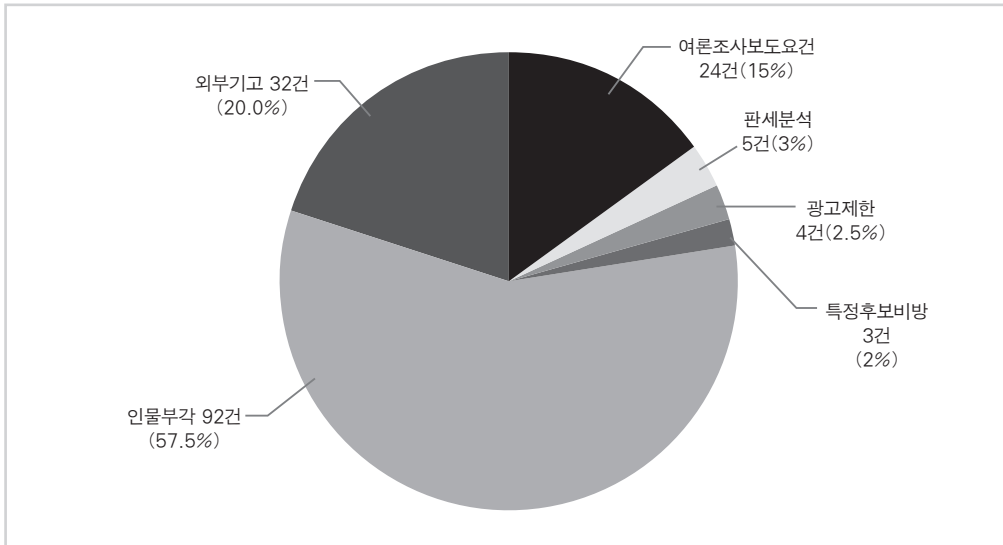
II. 자체심의 분석

1. 위반유형별 분석

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해 제재조치를 한 선거기사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부기고와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기간 중 특이한 점은 선거기간 초반에는 현직 지자체장을 부각시키는 홍보성 기사에 대해 많은 제재가 내려졌으며,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와 공표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 제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할 경우 제재를 했으며 선거에 임박할수록 제재 건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해 제재를 받은 언론사도 있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해 의결한 총 160건을 위반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00건(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 칼럼 등 외부기고가 32건(20.0%),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24건(15.0%), 광고제한 위반이 4건(2.5%)이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들을 세분해 살펴보면 인물부각이 92건, 판세분석이 5건, 특정 후보 비방기사가 3건이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1) 인물 부각

선거기사 중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유형은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는 기사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현직 지자체장의 실적과 성과를 부각하는 홍보성 기사와 인터뷰 기사가 많았다. 이 기사들은 대부분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지나치게 우호적인 표현과 성과를 과장해 보도함으로써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당간 경합이 치열했던 수도권과 충청지역 후보에 대한 부각기사가 많았다.

일부 언론사들은 특정 후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한 선거구에 여러 후보가 있음에도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제재를 받았다. 이들 매체에 대해서는 경고문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특정 후보를 부각 보도해 제재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데일리스포츠월드는 2010년 2월 4일자 20면 “행정 달인이 말하는 행복 비법”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모구청장의 출판기념회를 보도하면서 인물사진을 지나치게 크게 부각하고 구정활동의 성과 및 자질과 능력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역일간지인 호남매일은 2010년 5월 4일자 7면 “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

점 ‘화제’” 제하의 기사에서 여성 최초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하며 주요 공약과 경력 등을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이 지역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는 광주 5명, 전남 6명임에도 여성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우호적으로 부각보도해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인물부각 기사 중 특정 후보의 활동만을 수 차례 보도한 언론사도 있었다. 전남지역 지역주간지인 강진고을은 군수로 출마한 현 군수의 동향 및 실적을 다룬 기사와 인터뷰를 인물 사진과 함께 3주에 걸쳐 우호적으로 부각보도했으며, 같은 지역주간지인 나주투데이도 특정 후보예정자의 이력과 활동사항을 다수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보도했을 뿐 아니라 이 후보의 출마관련 기사와 칼럼을 수차례 호의적으로 보도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충청지역일간지인 대전일보, 충남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는 특별히 인터뷰를 할 계기가 없음에도 특정 도의원 후보를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했으며, 인터뷰 내용도 후보자의 학력, 경력, 정치철학, 인맥 등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다뤄 그 정도에 따라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동일한 후보에 대한 부각 기사라도 게재 시점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무료일간지인 데일리노컷뉴스와 더데일리포커스 그리고 시사주간지인 시사저널에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인물부각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게재시점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반면, 동일 인물에 대한 부각 기사를 게재한 지역일간지인 중부일보와 우리일보에 대해서는 선거가 임박한 때임을 감안, ‘경고’ 결정을 내렸다.

(2) 판세분석

선거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과 지지율 등을 분석하는 판세분석은 부동산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선택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대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찍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정당 자체분석, 정밀취재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판세분석 보도를 해야 한다.

판세분석 보도 형태는 주로 경마식 보도로 나타나는데, 이번 지방선거 선거보도에서도 특정 후보가 유력하다거나 특정정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제재를 받은 언론사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판세를 분석하며 제목과 본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의 우세나 열세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5건의 보도에 대해 제재를 했다. 5건 중 지역일

간지가 4건, 중앙일간지가 1건이고, 결정 유형별로는 경고문게재 1건, 경고 1건, 주의 2건, 권고 1건이다.

충청일보는 선거를 앞둔 5월 25일자 1면과 5면에 각각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황금분할’”,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각종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 ‘황금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세를 분석하며 제목에서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단정 보도했으나 충남도지사와 충북도지사 선거의 경우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내외로 큰 격차가 없고, 대전시장의 경우 기사 본문에 여론조사 결과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같은 날 5면에 충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올해 25차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표로 제시하며 정우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4번 1위를 차지했음을 근거로 ‘압도적 1위’라고 보도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정우택 후보가 타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오해하여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심의위원회는 판단했다. 두 건의 기사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경고문게재’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투데이는 2010년 2월 2일자 5면 “요동치는 충청권 판세는? 수도권 단체장 판세는?” 제하의 기사에서 수도권 및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객관적 기준 없이 제목과 사진을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들을 유력후보라고 부각 보도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광주일보는 2010년 2월 8일자 5면 “민주당 공천=당선 후보 5명 각축” 제하의 기사에서 제목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해당 정당 소속 후보예정자들만 소개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헤럴드경제는 2010년 5월 3일자 5면 “텃밭제외 표심 ‘예측불허’… 한나라 10곳 수성 최대관심” 제하의 기사와 도표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각 정당별 판세를 분석했고, 도표(경남도지사)에는 기사내용과 달리 특정 정당이 우세한 것으로 표기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3) 비방기사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상대 후보를 폄훼하거나 불리하게 보도해 제재를 받은 기사는 3건이다. 3건 모두 ‘경고’ 결정을 받았으며, 2건은 지역일간지이고 1건은 지역주간지이다.

아시아일보는 2010년 4월 14일자 7면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서장원 포천

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문제 있다” 제하의 칼럼에서 현직 시장을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 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평가를 전하면서 해당 후보예정자를 비방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지역 주간지인 강남내일신문은 2010년 4월 8일자 1면 “강남을 뚫고보고 60살 넘은 여성후보야”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 후보예정자에 대해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보도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충청일보는 2010년 4월 29일자 23면 “배신의 계절” 제하의 칼럼에서 전임 부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여 재임시 보좌하던 단체장과 경쟁하게 된 상황을 배신이라고 비방 보도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나. 외부기고 제한

외부기고(칼럼) 제한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적용된 선거기사관련 위 반사항으로, 이번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32건의 기사에 대해 자체심의 의결했다. 매 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일간지가 2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역주간지가 6건, 중앙일간지와 월간지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결정유형별로는 경고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고가 2건, 경고문게재와 주의가 각각 1건이었다.

외부기고 금지는 크게 두 가지 조항으로 나뉜다. 우선 선거와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해 제재를 받은 건수는 2건이다. 영남일보는 2010년 3월 2일자 13면 “인사발령” 제하의 외부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게재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인천신문은 2010년 4월 20일자 15면 “두 명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와 두 개의 보이콧” 제하의 외부기고문을 게재하면서 인천시장 후보예정자 두 명의 환경정책 및 도덕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도덕성이 뒤떨어진다고 해 ‘주의’ 조치했다.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해 제재를 받은 것은 30건이다. 이 중 심의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예정자가 칼럼을 게재할 경우,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약한 점을 감안해 낮은 수위의 제재를 했다. 새만금일보 2010년 4월 2일자 15면 “따뜻한 카리스마” 제하 칼럼의 경우 ‘권고’ 조치했는데, 이 칼럼은 전주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예정자가 작성한 것이다.

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 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실효성에 대해 정치계·학계·언론계 등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 여론조사 및 그 보도 형태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에서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한 건도 없다. 다만 여론조사 보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도해 제재를 받은 건수는 24건이다. 경고 결정이 가장 많은 14건이고 주의가 9건, 권고가 1건이다. 여론조사 보도 공표요건 미준수로 제재를 받은 매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가 8건, 지역일간지가 8건, 시사주간신문은 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언론사명이나 조사일시 등을 밝히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14일자 13면 “한나라 8, 민주 3 선진 1곳 우세… 4곳은 혼전” 제하의 기사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를 실시한 언론사명과 게재일자 등 출처를 밝히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겨레는 2010년 5월 11일자 15면 “진보후보 약진 … 보수후보들 단일화 변수” 제하의 기사에서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타 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할 경우 인용 매체의 보도일자 및 매체명을 밝혀 독자들이 해당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

라. 광고제한

선거기사심의기준과 공직선거법은 언론사의 의견광고와 상업광고의 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언론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되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고제한을 위반한 건수는 총 4건으로 지역일

간지 1건, 지역주간지 3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경고’ 조치했다.

4건 가운데 3건은 선거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명서 발표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심의위원회는 선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의견을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 게재지면의 위치와 무관하게 이를 의견광고로 판단했다. 거창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주간지인 거창군민신문, 거창신보, 한국시사는 특정인의 거창군수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일부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전재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대구일보는 2010년 5월 10일자 2면 광고란 ‘부고’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모친상을 알리는 부고 광고를 게재하면서 후보자의 성명, 경력을 부각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2. 결정내용별 분석

가. 경고문 게재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총 8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지역일간지가 6건, 지역주간지가 2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7건, 외부기고 위반이 1건이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선거기사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인 ‘경고문게재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된 선거 기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월간지의 경우 선거가 끝난 뒤에 발행이 될 경우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고결정문 게재 유형을 세분화해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을 하도록 했다. 위반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해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원 보도의 게재지면과 관계없이 1면 우측 상단에 굵은 글씨체로 게재 하도록 했으며, 수위에 따라 그 게재문 형식과 지면을 다르게 하도록 했다.

경고문게재 결정 8건 중 중급 정도 제재를 받은 것은 2건이며, 나머지 6건은 낮은 수위의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08	나주투데이	2010.3.1. 2010.3.8. 2010.3.15. 2010.3.22. 2010.3.22.	1 6 1 1, 4 6	신 시장 대법원 판결로 직위상실 김노금이 함께 하는 세상 이야기-나주의 미래 어디로 흘러가나 주향득 나주시장 후보추대위 후보수락 촉구 주향득 나주시장 출마 공식선언/주향득 그녀는 누구인가 김노금이 함께 하는 세상 이야기-나주의 여성 정치인들
2010지선152	호남매일	2010.5.4.	7	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점 '화제'
2010지선153	호남신문	2010.4.20.	9	"힘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될 때 광주가 살아납니다"
2010지선154	호남신문	2010.4.19. 2010.4.28. 2010.4.30.	1 1 1	"잘사는 장성의 미래 책임지겠다" 모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어르신, 노후 편안할 권리 있다
2010지선156	강진고을	2010.4.21. 2010.4.28. 2010.5.5.	1 23 1, 3	"황주홍식 교육실험" 대성공 '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외연확대에 성공 "당 보다는 사람 선택을" / "민생을 최우선으로 행기는 군수 되겠다"
2010지선169	충청일보	2010.5.25	1 5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황금분할'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2010지선176	내외일보	2010.5.6. 2010.5.10.	6 8	양태홍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 양태홍 예비후보, "지역쿼터제 도입"

외부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77	우리일보	2010.5.26	14	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 은 거대정당의 횡포 무상급식 tv토론기획 박탈

나. 경 고

자체심의로 의결한 160건 중 경고 결정은 91건으로 56.9%를 차지했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9건, 지역일간지 47건, 지역주간지 17건, 종합주간지 11건, 월간지 6건, 뉴스통신 1건이다. 중앙일간지에 대한 제재 9건 중 5건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반면, 지역일간지의 경우 인물부각으로 제재를 받은 건이 총 47건 중 2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의 위반 유형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신문들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현직 지자체장들이나 후보를 부각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앙일간지의 경우 전국 판세 분석 기사를 게재하면서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일간지의 경우 후보자 칼럼 게재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많은 이유는 신문제작진들이 선거법이나 심의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의 경우 후보자 칼럼 게재로 4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았다.

경고결정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45건, 외부기고 28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14건, 광고제한 4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45건 중 41건은 인물부각으로 경고 결정을 받았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4	뉴스저널	2월호	108~109	강한 추진력의 서울 시민 참 대변인 실물경제 전문성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끌어
2010지선5	시사매거진	2월호	38~39	젊은 정치리더, 변화와 변혁의 중심에 서다
2010지선6	데일리포츠헤드	2010. 2. 4.	20	행정 달인이 말하는 '행복 해법'
2010지선7	중앙매일	2010. 2. 11. 2010. 2. 16.	16 16	지역 경제 살리기 · 신(新) 성장 동력 확충 투자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전 행정력 집중할 것"
2010지선15	전라일보	2010. 2. 11.	14	"주민 복리 · 전주발전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2010지선19	대한매일신문	2010. 2. 9.	16	서민배려와 원칙이 있는 행정
2010지선32	내외일보	2010. 2. 10.	16	오원석총장,통합시동북아의성장동력만들겠다 "우리는두려움보다는희망이라는 가능성을 선택했다"
2010지선35	수도일보	2010. 3. 8.	16	살기좋은 친환경 거주지 만들기
2010지선43	전주일보	2010. 3. 4. 2010. 3. 8.	16 16	명품 홍삼 진안 발전 힘을 더한다 차별화된 '명품홍삼' 국내시장이 좁다
2010지선62	중앙매일	2010. 3. 3.	16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건설에 최선 다할 것
2010지선63	중앙매일	2010. 3. 10.	16	대한민국 녹색섬표 관광 단양건설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행정 실천
2010지선64	중앙매일	2010. 3. 19.	16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으로 성장동력 확보" 2010년 새해설계 최승우 예산군수
2010지선66	시사매거진	3월호	32~33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힘쓸터
2010지선80	파이낸셜뉴스	2010. 3. 22.	10	삼각산,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
2010지선82	대한매일신문	2010. 3. 23.	5	삼각산 애국지사 묘역, 명소될 것
2010지선84	새만금일보	2010. 3. 24.	15 16	진안군의 '우공이산' 을 기대한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변화하는 진안 만든다!
2010지선85	전주일보	2010. 3. 22.	16	'지성감민' 시정 운영...참 공약실천 '앞장'
2010지선86	일요서울	2010. 3. 21.	12	청와대, 정부부처, 지방행정 경험 행정전문가
2010지선109	중부일보	2010. 4. 2.	21	'유천호' 강화군수 출마
2010지선110	중부일보	2010. 4. 9.	21	'안상수'를 다시 공천하는 이유
2010지선114	수도권일보	2010. 4. 15.	17	"인구 50만명 도시에 걸맞는 시정 펼쳐겠다"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15	시사포커스	2010. 4. 15.	17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행정 실정 바로 잡겠다”
2010지선116	교육연합신문	2010. 3. 31.	7	‘작은 도서관’ ...지역 ‘삶의 질’ 향상의 터전
2010지선117	김천문화신문	2010. 3. 23.	2	비전, 누가 갖다주는 것 아닙니다.
2010지선118	서경신문	2010. 3. 15.	17	강석진 전 군수, 청와대 ‘특별한 선물’ 받아
2010지선119	한국시사	2010. 3. 15.	17	거창군수로 출마 예정인 강석진씨에게 청와대에서 격려의 화분이 배달되었다.
2010지선125	충남일보	2010. 4. 20.	3	“도정현안 지원에 의회가 최선 다할 것”
2010지선126	충청투데이	2010. 4. 19.	11	“도청이전 신도시 차질없이 건설 대책제전 · 대충청방문의 해 지원”
2010지선127	아시아일보	2010. 4. 14.	7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서장원 포천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문제 있다
2010지선128	강남내일신문	2010. 4. 8.	1	“강남을 뽐로 보고 60살 넘는 여성후보야”
2010지선136	중도일보	2010. 4. 29.	9	“도정현안 적극지원...9대의회 성공적 출범 가교 역할”
2010지선137	충청일보	2010. 4. 29.	23	배신의 계절
2010지선141	매일신문	2010. 4. 29.	4	“각종 인프라 신(新)기업정책 만족, 수도권 갈 이유 없어요” “기업이 웃어야 구미가 행복” 업체 민원 해결률 96%
2010지선142	우리일보	2010. 5. 4.	14	민선 3 · 4대 이어 5대까지 간다...안상수
2010지선143	월간중앙	5월호	288~289	강진 주민 11명 늘어어요
2010지선151	전남매일	2010. 4. 19.	10	민주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듣는다
2010지선155	일요서울	2010. 5. 2.	34	“서민과 중산층의 도시로 만들겠다”
2010지선157	전광일보	2010. 5. 10.	14	“전남교육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희망신인’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2010지선158	호남신문	2010. 5. 10.	9	“농어촌 · 중소도시 살리는 교육 이뤄내겠다”
2010지선159	시사IN	2010. 5. 8.	28~30	서울시민이 원하는 복지, 그게 한명숙 전공이다
2010지선160	뉴스포스트	2010. 4. 25. 2010. 5. 9.	6~7 4~5	‘인천 바람’ 일으켜 정권 교체 이끌겠다 “쇼맨십은 이제 그만... ‘경제도지사’ 필승불패”
2010지선168	evening	2010. 5. 24.	17	정당 후보 아닌 무소속으로 평가 받겠다
2010지선178	종로저널	2010. 5. 24.	5	선거 판세는 이미 결정, 앞으로 일주일만 관건
2010지선182	월간중앙	6월호	64~68	54% 지지율 ‘훈風’ 이 부는데... 광화문광장에 앉아 청와대를 슬쩍 바라보다
2010지선183	마포타임즈	2010. 5. 19.	4	“서울교육청 청렴도 꼴지, 반드시 1위로 만들겠다!”

외부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53	강원도민일보	2010. 3. 4.	19	속초와 동우대학이 살 길
2010지선54	새전북신문	2010. 3. 8.	11	전주 열린 시민강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2010지선55	시민일보	2010. 3. 5.	7	녹색환경 도시를 가꾸자
2010지선56	인천일보	2010. 3. 4.	16	구도심 재개발의 상생 방안
2010지선57	인천일보	2010. 3. 9.	16	다섯가지 인간의 질
2010지선67	강원일보	2010. 3. 9.	7	원주~강릉 복선전철 당장 결정하라
2010지선68	동국일보	2010. 3. 18.	15	세계와 소통하는 다보스포럼
2010지선69	대전일보	2010. 3. 9.	22	한자 교육, 문화수준과 국격 높인다
2010지선70	인천일보	2010. 3. 18.	15	인천 교육이 걱정된다
2010지선71	충청투데이	2010. 3. 12.	16	청렴은 아름다운 미래다
2010지선88	경기헤럴드	2010. 3. 18.	2	민주당은 시장출마를 포기하고 범진보 통합단일후보에 동참해야한다
2010지선92	서울신문	2010. 3. 25.	30	지방자치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2010지선93	강원도민일보	2010. 3. 22.	19	강원교육 단단하게 키우기
2010지선94	광주일보	2010. 3. 18.	17	학교 내 갑압 · 폭력 절대 안된다
2010지선95	인천신문	2010. 3. 10.	14	끊이지 않는 교육비리
2010지선96	충북일보	2010. 3. 24.	14	세종시 해법, 오로지 원안사수뿐
2010지선97	충청투데이	2010. 3. 19.	17	‘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 우리가 주역
2010지선98	시사신문	2010. 3. 21.	5	시민이 잘 사는 ‘시민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010지선99	시사신문	2010. 3. 28.	5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2010지선100	시사포커스	2010. 3. 31.	13	시민이 잘 사는 ‘시민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010지선101	성북신문	2010. 3. 18.	3	학교 운동장 잔디운동장으로 전환해야
2010지선120	인천일보	2010. 4. 13.	17	교장공모제 확대와 부작용
2010지선121	주간 시정신문	2010. 3. 25.	15	은혜로운 언어행실
2010지선130	경북일보	2010. 4. 21.	22	발레오만도의 정상화를 바라며
2010지선131	중구신문	2010. 4. 13.	3	“건강보험공간의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2010지선132	중구자치신문	2010. 4. 14.	2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2010지선145	여수여수사람들	5월호	10~13 99~100	여수! 박람회 준비 이대로 좋은가 숨털보다 가벼운 눈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요!
2010지선161	강남포스트	2010. 5. 6.	3	“믿음없는 정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74	충청일보	2010. 3. 17.	7	충남도지사 가상대결서 선진당 이태복 후보 '1위'
2010지선122	주간조선	2010. 4. 12.	54~55 55~56	62 지방선거-충남지사 與 '이완구 공천' 여부 최대 변수 자유선진, 박상돈·이태복 신경전 김태환 지사 빠진 자리 예측불허 혼전 與 현명관·무소속 우근민 지지율 경쟁
2010지선124	충청일보	2010. 4. 13.	6	대전시장 '4파전' 구도 압축
2010지선146	아주경제	2010. 5. 10.	A4	홍건표 우세속 김만수 바짝 추격
2010지선147	연합뉴스	2010. 5. 10.	6.2지방선거	제주지사 선거판 '요동'.. '돈뭉치' 파문
2010지선163	조선일보	2010. 5. 14.	A13	한나라8 민주3 선진 1곳 우세...4곳은 혼전
2010지선164	한겨레	2010. 5. 11.	15	진보후보 약진...보수후보들 단일화 변수
2010지선165	아주경제	2010. 5. 11. 2010. 5. 12.	A4 A4	한나라 수도권 우세속 충청권 '혼전' 경전철이나 9호선 연장이나
2010지선166	민주신문	2010. 5. 16.	12~13	당의 운명 걸고 선거전 스타트
2010지선170	서울신문	2010. 5. 24.	8 9	경기도정치1번지 수원 오차범위 혼전 부평·중구 초점전...與 수성 쉽지않을듯
2010지선172	세계일보	2010. 5. 20.	6	野 단일화효과 기대속 '北風' 변수
2010지선173	중앙일보	2010. 5. 25.	22	'영남=한나라, 호남=민주' 변화 바람
2010지선174	밀양사람들	2010. 5. 20.	1	후보 단일화 과정 긴박한 상황 연출 관심 높았다
2010지선179	사건의 내막	2010. 5. 30.	4 5	'충청' 안상수 맞대결 구도 '호남' 송영길 '한나라' 박성효vs '선진당' 엄홍철

광고제한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89	거창군민신문	2010. 3. 18.	2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10지선90	거창신보	2010. 3. 9.	13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10지선91	한국시사	2010. 3. 8.	14 15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안녕하십니까?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의 아들 강석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0지선162	대구일보	2010. 5. 10.	2	부고

다. 주 의

자체심의 의결 건수 중 주의 결정은 45건에 대해 내려졌다.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 6건, 지역일간지 33건, 종합주간지 4건, 지역주간지 1건, 월간지 1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9건, 외부기고 위반 1건이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2	광주일보	2010. 2. 8.	5	민주당 공천=당선 후보 5명 각축
2010지선9	파이낸셜뉴스	2010. 2. 23.	22	"노인인력 방치 사회, 경제적 낭비"
2010지선12	데일리스포츠월드	2010. 2. 3.	14	살고싶은 도시...3년 연속 '환경대상'
2010지선13	아시아일보	2010. 2. 4.	5	구로구, 청년인턴 100% 정사원화 힘찬 '시동'
2010지선14	아시아일보	2010. 2. 18.	8, 16	한국의 알프스 양평 으뜸 생태마을 명성 드높다
2010지선16	전북일보	2010. 2. 12.	12 13	전국 제일 생활스포츠클러스, 지역발전 디딤돌로 집집마다 돈 버는 부농 꿈 실현
2010지선17	경인종합일보	2010. 2. 9.	20	다양한 인적자원 공존 시민중심 행복도시
2010지선18	경인종합일보	2010. 2. 10.	20	2010년 꿈이 실현되는 도시 Vision 남구
2010지선20	수도권일보	2010. 2. 8.	16	군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최우선
2010지선22	전국매일	2010. 2. 5.	20	새출범 통합시 '대한민국 최고 명품도시' 기대
2010지선23	전국매일	2010. 2. 11.	20	고달픈 구민이 풀하면 언제든 통화
2010지선24	전국매일	2010. 2. 19.	20	다양한 문화 혜택 균등한 복지 매진
2010지선25	중도일보	2010. 2. 5.	9	중부권 첫 슬로시티 선정, 올해 기반 조성에 심혈
2010지선26	중도일보	2010. 2. 11.	9	인구 100만 시대 대비...경제도시 건설에 매진
2010지선27	중부일보	2010. 2. 4.	17	소통과 희망으로 주민 곁에 '한 발 더...'
2010지선28	중부일보	2010. 2. 9.	12	조화로운 발전 '강화 2025 프로젝트' 시동
2010지선36	시민일보	2010. 3. 2.	20	청년인턴 참여자들 정규직 전환 '충대됐다'
2010지선37	아시아경제	2010. 2. 24.	8	경제자유구역 탄력 '부자충복' 만들겠다
2010지선38	우리일보	2010. 2. 19.	20	성동구, 교육인프라 구축에 '총력'
2010지선39	우리일보	2010. 2. 26.	20	꿈과 희망! 힘찬미래! 준비하는 성북구
2010지선40	인천일보	2010. 2. 25.	12	집에서 의료, 교육, 민원업무 원스톱 서비스 지능형 홈네트워킹 세상 눈앞
2010지선41	전주일보	2010. 2. 19.	16	미래 준비하는 희망도시 향해 힘찬 '날개짓'
2010지선42	전주일보	2010. 2. 24.	16	새만금 중심 관광도시 '부안시대' 개척
2010지선44	현대일보	2010. 3. 5.	4	어느 간부공무원의 명예퇴임식
2010지선45	시사뉴스	2010. 3. 15.	46~47	군민들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최우선
2010지선50	주간함양	2010. 2. 15.	6	서춘수 자서전 출간 기념식...대선 출정식 방불
2010지선51	경제풍월	3월호	64~69	공교육 활성화 길 있다
2010지선60	경기신문	2010. 3. 16.	14	글로벌 구리인이여, 세계와 호흡하라
2010지선61	일간전북타임스	2010. 3. 2.	12	세계로 뻗어가는 진안, 진안 홍삼, 중국시장 '노크'
2010지선65	충북일보	2010. 3. 11.	4	'눈치우기 달인' 남상우 시장
2010지선81	대전일보	2010. 3. 27.	5	임기 짧지만 지역현안 해결 역할 다할 것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83	새만금일보	2010. 3. 17.	16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잘사는 '주식회사 김제' 건설 올인
2010지선135	조선일보	2010. 4. 22.	E3	"자녀와 찾으면 더 유익한 과학도시" 박성효 대전시장 "청정자연 속에 편히 쉬다가세요" 정우택 충북지사
2010지선144	헤럴드경제	2010. 5. 3.	5	텃밭제의 표심 '예측불허' ...한나라 10곳 수성 최대관심
2010지선184	대한투데이	2010. 5. 31.	4	아버지는 군민을 사랑하기에 출마했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59	경북일보	2010. 2. 17.	4	예비후보자 오차범위 내 접전
2010지선72	광남일보	2010. 3. 9.	3	'수성vs탈환'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2010지선73	전남일보	2010. 3. 17.	5	유창동, 선두 최형식 맹추격
2010지선75	일요서울	2010. 3. 7.	10	대구시장 김범일 현시장 vs 서상기 시장위원장 2파전
2010지선76	위클리경향	2010. 3. 23.	20	친이·친박 '지방선거의 결투'
2010지선102	새만금일보	2010. 3. 17.	3	오근량 예비후보 지지율 '최고'
2010지선103	월요신문	2010. 3. 21.	7	당심 바로미터 '집안(?)' 선거
2010지선138	국민일보	2010. 4. 28.	3	'친노' 김두관 단일화 경남 '대마' 이완구 불출마 충남 新격전지 반집승부?
2010지선139	동아일보	2010. 4. 28.	A8	여론조사 착시? 충북지사 사수? 수도권 기초장?

외부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29	인천신문	2010. 4. 20.	15	두명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와 두 개의 보이콧

라. 권 고

권고 결정은 16건이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5건, 지역일간지 6건, 종합주간지 1건, 지역주간지 4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3건, 외부기고 위반 2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1건이다. 권고 결정은 심의위원회 설치 초기에 주로 내려졌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	아시아투데이	2010. 2. 2.	5	오동치는 충청권 판세는? 수도권 단체장 판세는?
2010지선3	데일리노컷뉴스	2010. 2. 4.	10	첨단·친환경-인천이 도시의 패러다임 바꿀 것
2010지선8	파이낸셜뉴스	2010. 2. 5.	15	3년간 22조 투자 유치 '자율적 노사합의 유도' 주효
2010지선10	기호일보	2010. 2. 1. 2010. 2. 4.	20 3	자연의 숨길 가득 품고 새로이 태어나는 물길 '로드맨' 이 바라보는 수원 미래상
2010지선11	동국일보	2010. 2. 11.	3	녹색의 도시 IT·명품의 도시로 비상
2010지선21	스포츠동아	2010. 2. 10.	14	"동계훈련 메카... '스포츠 도시' 발돋움"
2010지선33	더데일리포커스	2010. 2. 23.	A12	"콤팩트·스마트, 그리드가 인천 미래"
2010지선34	경기신문	2010. 2. 23.	14	살기좋은 '고품격 친환경 도시' 이끈다
2010지선46	시사저널	2010. 3. 2.	40~43	명암 갈리는 현역들의 도전 인천은 '순탄', 대전은 '가시밭'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 직접 마무리할 기회 갖고 싶다"
2010지선47	미래교육신문	2010. 2. 12.	4	"전남교육 선진화 기필코 실현할 터"
2010지선48	서해안신문	2010. 2. 11.	12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은 한편의 감동드라마
2010지선49	주간시정신문	2010. 2. 18.	20	특급 손님맞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2010지선87	강원리뷰	2010. 3. 6. 2010. 3. 19.	12~13 8~9	"2015년 인구 10만명, 영동지역의 중심도시로 비상위해 혼신의 노력다할것" "국제특구 도시 녹색성장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터"

외부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52	영남일보	2010. 3. 2.	13	인사발령
2010지선111	새만금일보	2010. 4. 2.	15	따뜻한 카리스마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58	세계일보	2010. 2. 22.	4	서울시장·경기지사 한나라 앞서/충남지사·대전시장 야권이 우세

3. 매체유형별 분석

제5회 지방선거 선거기사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일간, 주간, 월간으로 대별해 총 446종으로 일간지 131종(중앙지 31, 지역지 100), 종합주간지 34종, 교육주간지 13종, 지역주간지 230종, 월간지 36종, 뉴스통신 2종이었다.

이 가운데 중앙일간지 14개, 지역일간지 46개, 종합주간지 12개, 지역주간지 22개, 월간지 5개, 뉴스통신 1개 등 모두 100개 매체가 선거기사 심의기간 중 최소 1건 이상 지적돼 제재를 받았다. 심의대상 매체 대비 위반 매체 비율은 22.4%로 지역일간지(46%)와 중앙일간지(45.2%)가 높게 나타났다.

중앙일간지는 31개 자체심의대상 매체 중 14개 매체에 대해 경고 9건, 주의 6건, 권고 5건의 결정을 받았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이 8건, 외부기고 1건이다.

지역일간지는 자체심의대상 100개 매체 가운데 46개 매체에 대해 92건을 결정했다. 결정 내용별로는 경고문 게재 6건, 경고 47건, 주의 33건, 권고 6건이고,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2건, 외부기고 21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8건, 광고제한 1건으로 나타났다.

종합주간지는 34개 자체심의 대상 매체 중 12개 매체에 대해 16건의 제재를 했다. 경고 11건 주의 4건 권고 1건이었으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7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6건, 외부기고 3건이다.

지역주간지와 교육주간지 심의대상 243종 중 22종에 대해 24건의 제재를 했다. 경고문게재 2건, 경고 17건, 주의 1건, 권고 4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4건, 외부기고 6건, 광고제한 3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1건으로 나타났다.

월간지는 5개 매체에 대해 7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종합월간지 4개, 지역월간지 1개이다. 경고 결정이 6건이었으며, 주의가 1건이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이었고 외부기고 위반이 1건이었다.

심의대상 매체 중 4회 이상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모두 7곳으로 대부분 후보자간 경합이 치열했던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일간지였다. 특히 인천일보는 총 5회 제재를 받았다.

매체별 위반현황

간 별	매체명	구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중 앙 일 간 지	국민일보	1		1						1	
	더데일리포커스	1	1								1
	데일리노컷뉴스	1	1								1
	데일리스포츠월드	2	2						1	1	
	동아일보	1		1						1	
	서울신문	2		1			1		2		
	세계일보	2		2					1		1
	스포츠동아	1	1								1
	조선일보	2	1	1					1	1	
	중앙일보	1		1					1		
	파이낸셜뉴스	3	3						1	1	1
	한겨레	1		1					1		
	헤럴드경제	1	1							1	
	evening	1	1						1		
	소 계	20	11	8			1		9	6	5
지 역 일 간 지	강원도민일보	2					2		2		
	강원일보	1					1		1		
	경기신문	2	2							1	1
	경인종합일보	2	2							2	
	광남일보	1		1						1	
	광주일보	2	1				1		1	1	
	경북일보	2		1			1		1	1	
	기호일보	1	1								1
	내외일보	2	2					1	1		
	대구일보	1				1			1		
	대전일보	2	1				1		1	1	
	대한매일신문	2	2						2		
	대한투데이	1	1							1	
	동국일보	2	1				1		1		1

구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 별	매체명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지 역 간 지	매일신문	1	1						1		
	새만금일보	4	2	1			1		1	2	1
	새전북신문	1					1		1		
	수도권일보	2	2						1	1	
	수도일보	1	1						1		
	시민일보	2	1				1		1	1	
	아시아경제	1	1							1	
	아시아일보	3	3						1	2	
	아시아투데이	1	1								1
	아주경제	2		2					2		
	영남일보	1					1				1
	우리일보	4	3				1	1	1	2	
	인천신문	2					2		1	1	
	인천일보	5	1				4		4	1	
	일간전북타임스	1	1							1	
	전광일보	1	1						1		
	전국매일	3	3							3	
	전남매일	1	1						1		
	전남일보	1		1						1	
	전라일보	1	1						1		
	전북일보	1	1							1	
	전주일보	4	4						2	2	
	중도일보	3	3						1	2	
	중부일보	4	4						2	2	
	중앙매일	4	4						4		
	충남일보	1	1						1		
	충북일보	2	1				1		1	1	
	충청일보	4	2	2				1	3		
	충청투데이	3	1				2		3		
	현대일보	1	1							1	
	호남매일	1	1					1			
	호남신문	3	3					2	1		
	소 계		92	62	8		1	21	6	47	33

간 별	매체명	구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종 합 주 간 지	뉴스포스트	1	1						1		
	민주신문	1		1					1		
	사건의내막	1		1					1		
	시사뉴스	1	1							1	
	시사신문	2					2		2		
	시새IN	1	1						1		
	시사저널	1	1								1
	시사포커스	2	1				1		2		
	월요신문	1		1						1	
	위클리경향	1		1						1	
	일요서울	3	2	1					2	1	
	주간조선	1		1					1		
	소 계	16	7	6			3		11	4	1
지 역 주 간 지	주간 강남내일신문	1	1						1		
	강남포스트	1					1		1		
	강원리뷰	1	1								1
	강진고을신문	1	1					1			
	거창군민신문	1				1			1		
	거창신보	1				1			1		
	경기헤럴드	1					1		1		
	교육연합신문	1	1						1		
	김천문화신문	1	1						1		
	나주투데이	1	1					1			
	마포타임즈	1	1						1		
	미래교육신문	1	1								1
	밀양사람들	1		1					1		
	서경신문	1	1						1		
	서해안신문	1	1								1
	성북신문	1					1		1		
	종로저널	1	1						1		
	주간 시정신문	2	1				1		1		1

간 별	매체명	구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 결과 보고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지 간 지	주간함양	1	1							1	
	중구신문	1					1		1		
	중구자치신문	1					1		1		
	한국시사	2	1			1			2		
	소 계	24	14	1		3	6	2	17	1	4
월 간 지	경제풍월	1	1							1	
	뉴스저널	1	1						1		
	시사매거진	2	2						2		
	여수여수사람들	1					1		1		
	월간중앙	2	2						2		
	소 계	7	6				1		6	1	
뉴스 통신	연합뉴스	1		1					1		
	소 계	1		1					1		
총 계		160	100	24		4	32	8	91	45	16
		100.0%	62.5%	15.0%		2.5%	20.0%	5.0%	56.9%	28.1%	10.0%

가. 중앙일간지

제재를 받은 14개 중앙일간지를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지 7개, 경제지 2개, 스포츠지 2개, 무료지 3개로 나타났다. 종합지는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가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고,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가 각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경제지는 파이낸셜뉴스가 3건, 헤럴드경제가 1건 제재를 받았다. 스포츠지는 데일리스포츠월드가 2건, 스포츠동아가 1건이고, 무료지는 더데일리포커스, 데일리노컷뉴스, evening이 각각 1건씩 제재를 받았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55%),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8건(40%)로 나타났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경우 대부분 인물부각(10건)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간지 중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다른 매체 유형보다 많았는데, 특히 종합일간지의 경우 총 9건 중 8건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로 제재를 받았다. 이는 전국 선거판세 분석 기사에서 판세분석의 근거가 되는 타 언론사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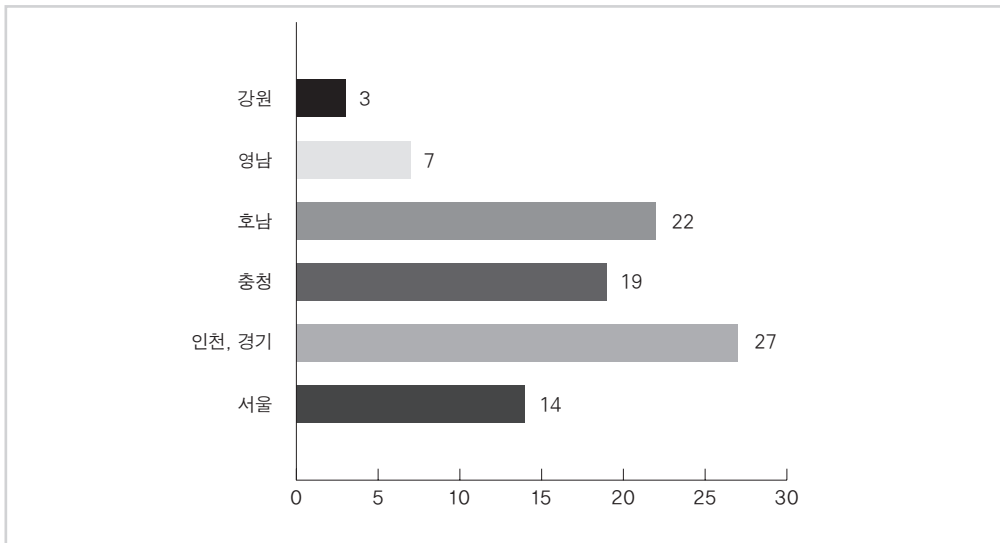
결정내용별로는 경고가 9건, 주의 6건, 권고가 5건이다. 종합일간지는 경고 6건, 주의 3건, 권고 1건으로 나타났고, 경제지는 경고 1건, 주의 2건, 권고 1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선거 초반에는 인물부각에 대한 제재가 많다가 선거에 임박할수록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제재를 받았다. 경고 조치를 받은 건수 중 5건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다.

나. 지역일간지

지역일간지는 100개 심의대상 매체 중 46%인 46개 매체가 92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는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2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부기고 위반 21건(21%),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8건(8%), 광고제한 위반 1건(1%)순이었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 47건(47%), 주의 33건(33%), 권고 6건(6%), 경고문게재 6건(6%)이었다.

발간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지역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지역 22건, 충청지역 19건, 서울지역 14건, 영남지역 7건, 강원지역 3건으로 나타났다. 후보간 경합이 치열했던 수도권과 충청지역, 매체수가 많은 호남지역의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간지역별 위반현황



서울 및 수도권에서 발간되는 지역일간지의 경우 제재를 받은 41건(서울 14건, 인천·경기 27건) 중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31건(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지역 일간지(16건, 72.8%)와 충청지역 일간지(13건, 68.4%)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반면, 강원지역 일간지의 경우 3건 모두 외부기고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고, 영남지역 일간지는 외부기고 위반이 3건(42.8%)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문게재 결정을 받은 지역일간지는 내외일보, 우리일보, 충청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이다. 내외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은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 보도해 경고문게재 결정을 받았으며, 충청일보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판세분석을 왜곡해 제재를 받았다. 우리일보는 선거 직전 특정 후보자의 논평을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다. 종합주간지, 지역주간지

종합주간지는 심의대상 34개 매체 중 12개 매체가 16건의 지적을 받았다. 시사주간지와 시사주간신문이 각각 6개 매체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7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6건, 외부기고 위반이 3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사례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경고 11건, 주의 4건, 권고 1건의 결정을 내렸다.

특히 다른 매체 유형과는 달리 여론조사 보도 요건 미비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많았다. 선거 판세 분석을 하면서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이다. 위클리경향과 주간조선은 도지사 선거관련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세 분석 기사를 게재했으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민주신문, 월요신문, 일요서울, 사건의 내막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특정 후보만을 부각하는 기사를 게재해 제재를 받은 종합주간지는 시사IN, 시사뉴스, 시사저널, 시사포커스, 뉴스포스트, 일요서울 등이다. 시사신문은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칼럼을 게재해 제재를 받았다.

지역주간지의 경우 심의대상 230개 매체 중 20개 매체, 22건에 대해 제재를 했으며, 교육주간지 심의대상 13개 매체 중 2개 매체에 대해 2건의 제재를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들 위반사례들에 대해 경고문게재 2건, 경고 17건, 주의 1건 권고 4건의 결정을 내렸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4건, 외부기고 위반이 6건, 광고제한 위반이 3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1건이었다.

지역주간지의 경우 지역별로 서울 지역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영남 8

건이었으며 경기, 충청, 강원 지역이 각 1건이었다. 호남지역에서 발간되는 지역주간지 중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나주투데이와 강진고을이었으며, 두 매체 모두 특정 후보자를 수차례 부각보도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영남지역 주간지의 경우, 거창지역 시민단체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 거창군민신문, 거창신보, 한국시사에 대해 광고제한 위반으로 경고 결정을 했으며, 특정 거창시장 후보를 부각보도한 서경신문과 한국시사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내렸다.

라. 월간지, 뉴스통신

월간지는 종합월간지 8종, 여성지 6종, 지역월간지 16종, 교육월간지 6종 등 총 36종에 대해 심의를 했다. 이 중 월간지 5종에 대해 제재를 했으며, 종합월간지 4종, 지역월간지 1종에 대해 7건의 결정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 외부기고 위반이 1건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의 경력이나 인생관, 정치적 소신과 향후 포부 등을 다룬 특집기사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역월간지인 여수여수사람들은 후보자의 칼럼을 같은 호에 두 차례 게재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월간중앙은 5월호와 6월호에 각각 광진군수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통신사 중 제재를 받은 연합뉴스는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판세분석 기사를 게재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언론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III. 시정요구심의 · 의결 현황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는 총 18건이다. 처리결과별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2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2건, 경고문 게재 결정 4건,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4건, 권고 1건, 기각 4건, 각하 1건이다. 재심청구는 4건이었으며 기각 2건, 인용 2건이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1건, 지역일간지 7건, 지역주간지 8건, 월간지와 뉴스통신이 각각 1건이다. 시정요구인 현황을 살펴보면, 도지사 후보 1건, 교육감 후보 1건, 시장 후보 6건, 구청장 후보 4건, 군수 후보 5건, 시의원후보 1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건, 경기와 인천 각 1건, 충청 6건, 호남 2건, 영남 5건, 제주 1건이다.

1. 정정보도문 게재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2건이다. 보령시장에 출마한 임 세빈 후보가 보령지역 주간지인 ‘주간보령’과 ‘보령시민신문’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주간보령은 임 후보를 시의원 후보로 잘못 기재했으며, 보령시민신문은 후보자의 출마기호를 잘못 기재했다. 해당 언론사는 편집 실수로 발생했다는 의견진술을 했으며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이후 바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2.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구로오늘신문은 2010년 4월 10일자 1면과 3면에 양대웅 구로구청장과 관련한 특혜 의혹 기사를 게재했다. 양 구청장의 친동생이 소유한 골프클럽에 대해 세금징수를 해주고 골프클럽 주변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양 구청장은 시정요구서를 통해 징수유예를 해준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것이며 골프클럽 부지의 용도가 변경된 바가 없다며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요구대상 기사에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시정요구대상 기사가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감안해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양 구청장의 친동생 소유 골프클럽부지가 용도변경이 된 바 없음에도 부제목에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적시한 것은 바로 잡아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일간대구경북은 2010년 5월 10일자 3면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영천시의회 여성비례대표 1번으로 전묘순씨가 확정되자 영천지역 대부분 단체들과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4년 전 비례대표 내정시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 씨가 적절하지 않다고 알린 바 있고, 전씨가 운영하고 있는 가정문제상담소가 문을 열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자신이 비례대표로 선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한 바 없으며, 4년 전 본인에 대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없고, 가정문제상담소는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4년 전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시정요구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시정요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정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가정문제상담소 운영에 관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만을 근거로 기사화한 반면,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3. 경고문 게재

시정요구에 대한 경고문 게재 결정은 4건으로 지역주간지가 3건, 뉴스통신이 1건이다. 시정요구인은 도지사 후보 1건, 교육감 후보 1건, 군수 후보 2건이다.

함안지역 주간신문인 THE함안신문은 2010년 2월 12일자, 26일자, 3월 11일자에 6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편향된 기사와 인터뷰를 게재했다. 이는 특정 후보예정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시정요구인인 현 함안군수를 비롯한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시정요구인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청구 이유도 없고 재심청구 취지도 타당하지 않아 기각했다.

제주지역 주간신문인 제주프레스는 2010년 3월 31일 1면, 2면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돌파 ‘빈축’” 제하의 기사에서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보도했고,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 현명관 후보는 위 보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요구인의 사생활 관련 소문을 충분한 사실확인 과정없이 보도한 것은 시정요구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피시정요구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이유 없다고 판단, 기각했다.

지역주간지인 진천군민신문은 2010년 5월 27일자 1면, 2면, 3면, 4면, 5면, 7면에 걸쳐 민주당 유영훈 진천군수 후보가 자신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 내용과 진천군의 각종 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들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래연합 진천군수 후보인 시정요구인은 위 기사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고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천군 사업 관련 기사는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이유도 없고 피시정요구대상 매체가 격주간 발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보도의 시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통신사인 뉴시스는 2010년 4월 20일자 “교육감 선거 진흙탕 싸움되나…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 제하의 기사에서 오근량 후보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언론에 배달되어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

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근량 시정요구인은 음해성 투서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과문 게재와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제보자가 확실하지 않은 우편물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보도한 것은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개연성이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정에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4. 반론보도문 게재

시정요구에 대한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4건으로 모두 지역일간지에 대해 내려졌다. 시정요구인 유형별로는 시장 후보 2건, 구청장 및 군수 후보 각 1건이다. 시장 후보 2명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요구한 것이다.

한남일보는 2010년 3월 2일자 7면 “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 제하의 기사에서 경상남도가 함양군에 배정한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모 전 국장이 자신의 측근에게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위 사업과 관련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요구대상 기사가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정정보도 게재를 인용할 수 없지만 시정요구인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대전일보는 2010년 4월 7일자 18면 “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 제하의 기사에서 우건도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충주부시장 재임시 시가보다 싸게 고급빌라를 매입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건도 후보는 시정요구 대상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 대상 기사가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입증자료가 없고 시정요구인에 대한 충분한 반론과 해명이 미흡한 점을 고려,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인천일보는 2010년 4월 27일자 3면 “한나라 이홍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인천 동구청장 이홍수 후보가 천안함 순직 장병 조문을 다녀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단체 기념사진을 첨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 이에 대해 이홍수 후보는 사진은 조문과 무관하고 선거에 홍보할 목적은 없다며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사 사진 배경이 제2연평해전 전적비임에도 제목에서 애도현장이라고 적시해 마치 빈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는 점 등을 감안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동양일보는 2010년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 수색” 제하의 기사에서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BTL 하수관거사업을 진행 중인 모 기업으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 과장 기사라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부분은 시정요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정정보도 게재 결정은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인이 관할 경찰서에 수차례 확인한 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피시정요구인은 원심대상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어 반론보도문 게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 심의위원회는 피시정요구인의 주장 일부를 수용해 반론보도문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결정했다.

5. 기각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기각 결정은 4건이다.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지역월간지 각각 1건이다. 구청장 후보와 군수 후보가 각각 2건을 시정요구 했다.

한겨레 2010년 3월 11일자 4면 한나라당 고위관계자가 도봉과 서초, 광진, 강북구청장은 교체로 가닥이 잡혔다는 “한나라, 서울 구청장 반 이상 물갈이”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요구대상 보도가 특정 정당의 선거전략 등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전남지역주간지인 함평천지신문 2010년 3월 30일자 1면 “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제하의 기사에 대해 김성호 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가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김 후보가 공천심사에서 배제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김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한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김 후보의 재심신청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용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후속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으나, 함평천지신문은 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김 후보가 후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해 원심 결정을 이행할 이유가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심의위원회는 피시정요구인의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했다.

매일신문은 2010년 3월 23일자 3면에서 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인 김부기 후보의 직책을 이명박 대선후보 직능 특보라고 보도했으나, 김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후보 경선 직능특보 경력을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 게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된 후 매일신문 4월 13일자 4면에 시정요구인의 경력을 바로 잡는 정정보도가 게재됐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홍성신문은 2010년 5월 10일자 4면 “민주당-야4당 군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결렬” 제하의 기사에서 김용일 민주당 홍성군수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후보단일화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 요구도 수용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측의 입장과 진술을 고려해 볼 때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실상 결렬’이라는 표현은 언론의 의견표명으로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했다.

제 3 부

종 합 평 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2장 결산좌담

제 1 장

심의위원 평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언



배 정 근 위원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1. 총평

선거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미디어는 그 꽃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름이다. 현대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미디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주요한 선거 이슈 등을 미디어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유권자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도 작동할 수 없다.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많은

점에서 역대 선거와는 다른 양상과 진기한 기록을 남겼다. 우선 선출 인원 자체가 3,991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1만 명에 육박하는 후보자들이 출마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에서 교육의원까지 무려 8명을 한 번에 뽑는 생소한 투표방식에 크게 당황하기도 했다. 선거운동도 과거에 비해 매우 복잡해지고, 전에 없던 새로운 행태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러한 선거환경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심의해야 할 매체들도 많아지고, 심의 안전도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160건의 자체심의 안전을 다뤘는데, 이 수치는 이전 지방선거에 비해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위원회는 밀려드는 심의 안전을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주일에 두 번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강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심의 안전이 급증한 배경에는 과거 선거에 비해 불공정한 보도가 많아진 까닭도 있겠지만, 선거보도 모니터링 활동이 강화되고 정교해진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자체심의를 대폭 늘였으나, 시정요구는 과거 선거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이 그 근거다. 다시 말해 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선거보도 감시가 그만큼 제 기능을 했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 임하면서 무엇보다 추상적인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제재 결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사를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도의 공정성이다(제8조). 이 법의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중립성을 심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회적 또는 학문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객관성이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공정성을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객관성이 공정성의 전

제조건이라는 주장도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현실은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요인들이 개입해 사회적으로 재구성된 현실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객관적 보도란 신기루를 쫓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편부당의 자세로 정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건강한 상식은 심의의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그런 전제에서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기사의 주제, 기사의 양, 편집 방식, 기사의 내용 등에 따라 구체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선거에 임박하면 할수록 제재 강도를 높인다거나, 같은 언론사가 동일한 문제로 다시 심의기준을 어길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등의 몇 가지 원칙에도 사전합의를 보았다.

위원회는 또한 사후 제재 못지않게 올바른 선거기사에 대한 사전 홍보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언론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에도 관심을 쏟았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자들의 취재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이 요즘 언론 현실이다. 분초를 다투는 속보경쟁을 하다보면 기자들은 늘 시간에 쫓긴다. 게다가 최근에는 다매체의 출현으로 업무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언론사들이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인력확충을 기피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렵다. 그 결과 엄격한 내부 게이트키퍼 기능이 약화되어 완성도가 낮은 기사들

이 양산될 위험성이 있다. 선거 기사를 다루는 기자들이 선거기사 심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심의에 저촉되는 기사를 쓰는 경우도 흔하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바로 언론사에 알리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언론이 선거기사에 보다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했다.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3차례 심의결과를 정리해 언론에 발표했다. 특히 예민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방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모든 심의대상 언론사에 긴급 배포하기도 했다.

선거기사 심의가 사후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언론보도 관행에 제동을 거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시했다. 전체 결정의 절반 이상이 '경고' 또는 '경고문게재'일 정도로 제재 수위가 높았던 배경이다. 지면에 직접 반영되는 경고문게재는 언론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결정이다. 제재의 실효성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경고문게재 결정도 다시 상·중·하 3단계로 세분화했다. 가장 상위 단계에서는 '엄중경고'라는 문구를 제목에 포함시키고, 위치도 1면 상단에 눈에 띄게 신도록 했다. 하지만 경고문게재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언론사에 충분한 소명 및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

2. 심의에서 드러난 선거보도의 문제점

지난 지방선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심의결과가 말해주듯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편파적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자체심의로 의결한 160건의 위반사항 가운데 95건이 특정인물을 부각시킨 기사라는 사실을 이를 뒷받침한다. 일부 기사들은 편집방식이나 기사 내용 등에서 해당 후보와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언론에서 특정후보를 미화하는 기사를 실으면 해당 후보측은 그 신문이나 잡지를 대량으로 사들여 유권자에게 뿌리는 검은 거래도 있다. 이는 공정하게 선거를 감시해야 할 언론이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원하며 선거판에 개입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선거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가. 편파적 보도

대표적인 유형은 인터뷰 형식을 빌려 현직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기사였다. 이런 기사들은 신문 1개 면 전체, 잡지의 경우 여러 쪽에 걸쳐 특집식으로 편집하고, 후보의 사진과 이력을 크게 다룬다. 흡사 홍보전단지를 방불케 한다.

언론 입장에서 지자체장은 지역 행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뉴스메이커임이 분

명하다. 지자체장과 개별 인터뷰를 갖는 기회도 흔한 일은 아니다. 때문에 지자체장과 인터뷰는 다른 기사에 비해 크게 취급하는 것이 언론의 관행이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기사들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뉴스가치가 있는 현안들은 거의 다루지 않은 채 주인공의 치적만을 홍보하기에 급급했다. 똑같은 지자체장을 다룬 기사가 여러 신문에 실렸는데 기사 내용이 동일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기자들이 취재해서 쓴 기사가 아니라 지자체장 쪽에서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는 심증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기사의 편파성은 기사의 핵심적 내용을 표현하는 제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행정 달인이 말하는 행복 해법”, “서민 배려와 원칙이 있는 행정”, “아버지는 군민을 사랑하기에 출마했다” 식으로 최소한의 균형감각마저 상실한 제목들이 많았다.

아무런 뉴스성이 없는 후보를 크게 다룬 기사들은 더욱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 충청지역의 몇몇 일간지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도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도의원 후보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기사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수많은 도의원 가운데 유독 그 의원만을 인터뷰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보도는 중앙일간지보다 지역신문에서 더욱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다. 이번 선거기간 중 최소한 한 번 이상 제재를 받은 100개 언론사

중에서는 지역일간지가 46개로 가장 많았다. 심의대상 매체 대비 위반 매체 비율에서도 지역일간지(46%)가 제일 높았다. 지역에서도 광역보다는 군 단위 같은 기초단체로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좁은 지역사회의 속성 상 언론과 후보가 유착관계를 형성할 개연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쓰는 경우다. 전남의 한 지역주간지는 군수에 출마한 현 군수의 기사를 3주에 걸쳐 1면, 3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전남의 또 다른 지역주간지도 특정 여성 시장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기사와 칼럼을 5차례에 걸쳐 실었다가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 여성 시장후보를 지지한 이 주간지는 최소한 겉으로는 객관적 보도를 표방하는 다른 매체들과 달리 드러내놓고 그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이 주간지는 진보적 노선을 가진 후보를 지원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선거 기간에 신문사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는 서구 언론들이 특정 정치집단과 연계된 정론지(政論紙)에서 시작된 역사적 전통과 무관치 않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공개지지 하더라도 이는 사실과 사고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밝히는 게 전부다. 대신 일반적인

선거보도에서는 신문의 입장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보도방식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특정 후보를 비판, 비방하는 보도 역시 편파적 보도의 전형적 유형이다. 예를 들어 경남의 모 지역 주간신문의 경우 군수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기사를 6차례에 걸쳐 우호적으로 보도한 반면 현직 군수에 대해서는 비판적 보도만 하는 편파적 태도를 노골화했다. 충남의 모 일간지는 전임 부단체장이 단체장선거에 출마하여 재임시 보좌하던 단체장과 맞서게 되자 이를 ‘배신’이라고 비방하기도 했다.

나. 부정확한 판세 보도

편파적 보도와 함께 우리 언론의 선거 보도 행태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이 흥미위주의 경마식 보도다. 후보의 자질과 정책보다는 선거운동의 양상과 판세 분석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비판이다.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후보 간의 지지율이 어떠하다든지, 어느 후보가 당선에 유력하다는 보도가 그런 유형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여론조사는 정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험칙이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그 생생한 증거이다. 서울과 인천, 경남도를 비롯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는 선거 전에 보도된 여론조사의 지지율 판도와는 전혀 달랐다.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대변한다.

따라서 선거판도 분석 기사는 각별히 신중해야 하며,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진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특정 후보가 유, 불리하다고 보도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 신문들은 관행처럼 자의적 기준을 가지고 선거판세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곤 한다. 충청지역의 한 일간지는 각종 여론조사를 근거로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경고문게재 결정을 받았다. 실제 선거결과에서도 그 후보는 당선되지 못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에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도록 한 선거기사심의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전형적 위반사례다. 자체심의 결정에서 여론조사 보도미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15%에 이른다. 특히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언론사명이나 조사일시 등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물론 일간지의 경우 선거 기사를 쓰는 데 있어 지면제약이 심하고, 많은 지역 기사를 한꺼번에 다루다보면 여론조사 방법까지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원회도 이를 감안해 출처, 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를 같은 최소한의 조사방법만 제시했으면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기사의 경우 후보자 본인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 여론조사인양 보도해서 제재를 받았다.

다. 언론인의 전문성 부족

많은 언론인들은 진실 추구를 자신들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론적 회의도 있지만 언론인이 추구하는 진실은 다분히 기능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다. 그 요체는 철저한 사실확인과 검증, 진정한 의미와 맥락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인들은 단순한 사실 하나를 취재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취재한 사실도 이중, 삼중으로 재차 확인하는 엄격한 취재윤리를 미덕으로 삼는다. 벽돌로 집을 짓듯이 이렇게 철저히 검증된 개별 사실들이 모여 진실이라는 집을 완성한다고 믿는다. 선거기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취재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를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취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언론인도 있었다. 특정 후보를 편파적으로 미화하는 기사를 쓴 한 지역 주간지 기자는 그 이유를 묻자 “상대 후보는 우리 신문에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또 한 뉴스통신사는 지역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언론사에 배달됐다는 기사를 썼다. 이 우편물은 발신자가 누구인지조차 적혀있지 않았지만, 해당 언론

사는 논문 표절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문제된 논문이 정말 표절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기사 끝 부분에 표절 사실이 없다는 후보의 반론을 함께 다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취재보도 활동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면서도 알기 쉽게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매우 전문적 작업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측면 못지않게 사회적 사명을 잊지 않는 윤리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언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제도개선 제안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사 심의는 매체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소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로 3원화되어 있다. 매체 특성에 따라 상이한 선거기사 보도 행태를 충분히 감안해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비슷한 사안을 놓고도 위원회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할 위험성이 있다. 매체 사이 심의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위원회 자체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소관기관도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

다. 따라서 각 위원회의 심의기준과 실제 결정사항이 최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거기사 심의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심의의 일관성 문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내부에도 구조적 장애요인들이 존재한다. 먼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상설조직이 아니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임시 조직이다. 따라서 이전 위원회 활동에서 수립되고 적용된 심의기준과 노하우가 다음 위원회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부작용이 있다. 태생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상설조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사심의 기준이 다분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도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를 제공한다. 주요 심의 원칙인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형평성은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 배열에 균형 유지', 객관성은 '정확한 사실보도'와 '다양한 관점과 견해 취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언급돼 있을 뿐이다. 천차만별의 사안과 기사를 다루다보면 포괄적인 심의기준이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정

교화할 여지는 많다고 생각된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현행 심의기준이 실질적인 심의활동에 참고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판단에서 별도의 운영 매뉴얼을 만들 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 건의했다.

선거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기사심의는 사후 징벌적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언론의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공정한 보도관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제재방식이 그런 효과를 이끌어 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제재조치 가운데 정정보도 결정은 위원회에 사실관계 조사 권한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과문게재 결정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문화된 상태다. 나머지 제재수단 가운데 '경고문게재 결정'을 제외한 '권고' '주의' '경고' 결정은 언론사에 통보하는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적다.

특정 후보와 유착된 언론사가 작성하고 편파적 보도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장치는 마땅치 않다. 또한 일간지와 달리 발행 간격이 긴 주간지와 월간지는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하더라도 제재를 통해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으라는 제재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미 선거가 끝난 뒤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대표적으로 경고 제재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언론사가 이를 자신들의 매체에 공지하도록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경고를 받는 사실만을 알리기 때문에 경고문게재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이 방식은 언론사 스스로 보도에 문제가 있음을 공개하는 셈이어서 해당 언론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불공정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거나, 언론기금 지원 심사 등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정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공적인 제재는 자칫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부분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사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정확하거나 언론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한 공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재를 하지 않거나 경감 조치했다.

위원회에서는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제재결정이 공직선거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위헌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어떤 경우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은 제8조에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밝히고 있으나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제8조의3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으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내용심의와 관련해서는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과문과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사과문과 정정보도문 외의 제재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사들이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식에 보다 충실할 때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의 이상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프로필

고려대출

뉴욕주립대 석사

고려대 언론학 박사 수료

한국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現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제 2 장

결산작담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작담

□ 일 시 : 2010. 6. 24.(목) 09:00

□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참 석 자 명 단

양 삼 승(심의위원장, 변호사)

박 기 동(부위원장, 변호사)

박 문 용(공선협 공동대표)

원 병 설(배재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조 병 철(전 세계일보 주필)

한 국 연(전 CBS 상무이사)

배 정 근(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김 동 규(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용 성(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운영 활동을 마무리하는 좌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관련 선거제도 실태와 심의위원회 운영성과, 제도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의위원장 : 오늘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2월 1일에 구성되어, 151일 동안 자체심의 160건, 시정요구 18건을 처리했으며, 재심은 5건 청구되어 이를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사심의팀장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설치기간 동안 자체심의 160건과 후보자의 시정요구사건 18건에 대해 의결했으며,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의 의결건수인 8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자체심의 160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일간지가 92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지역주간지 24건, 중앙일간지 20건, 종합주간지 16건, 월간지 7건, 뉴스통신 1건순이었습니다. 결정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고 91건, 경고문 게재 8건, 주의 45건, 권고 16건순이었습니다. 또한,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 100건, 외부기고 금지 32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24건, 광고위반이 4건을 차지했습니다. 후보자의 시정요구는 전체 18건 중 12건에 대해 정정보도문·경고문 게재 등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의위원장 : 이는 제4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볼 때, 시정요구는 약간 줄었지만 자체 심의를 포함한 전체 의결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병설 위원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 지 10여년이 지나 심의시스템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요구는 건수가 감소하긴 하였지만, 자체심의가 늘어난 것은 선거기사심의가 활성화 되고 모니터링도 안정화 되었다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 자체심의가 늘어난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등 선거의 종류가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로 지역 언

론사에서 의도성이 짙은 기사를 많이 게재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선거기사가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심의 안건이 제4회 지방선거 때 보다 늘었다는 것은 선거보도 전반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자체심의의 노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선거보도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으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장 :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동시에 실시되었는데, 자체심의 안건 중에서도 해당 선거와 관련된 기사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매체별 심의의결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신문 중에서 4차례 이상 제재를 받은 언론사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차례 이상 제재를 받은 매체 중에서는 경기 및 충청 지역의 언론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후보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연 위원 :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체심의 의결사항과 시정요구 결과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알려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불공정한 보도를 방지해야 총체적인 선거기사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심의 의결건수가 늘어난 것은 심의가 활성화되고 모니터링도 안정화 되었다는 지표라고 생각 ... 재·보궐선거에도 운영되므로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설화가 필요”

- 원병설 위원

김동규 위원 : 제재의 실효성이 제대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사에서 제재 받을 것을 알면서도 불공정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거기사심의와 관련된 세 기구가 연합하거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단독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발표,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의결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정근 위원 : 매체별로 선거기사심의 기구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각 파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여 운영성과를 논의하는 세미나 자리를 가지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병설 위원 : 선거기사심의기준 중 외부기고 금지나 여론조사공표는 객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지만, 공정성과 형평성 부분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들이 예규로서 실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설치되는 기구이므로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제재수위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형평성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된 사항들을 잘 정리하여 집약하면 매뉴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재·보궐선거 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되므로 상설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평 ... 심의위원회 상설화가 적극 추진되었으면 한다”

- 박문용 위원



박문용 위원 :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이 필수적입니다. 입 후보자들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의식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덜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선거가 민주적으로 잘 마무리된 데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심의위원장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와 관련하여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치제도를 개선하는 기회가 오면 우리의 의견을 확실하게 개진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병철 위원 :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수위가 신속하고도 강력해야 할 것인데, 이는 언론자유와 신장과는 상충되기도 합니다. 외부기고 금지와 광고제한과 같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1차에서 바로 경고문게재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나 합니다. 선거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의 경우 법령에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사에서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낙천되거나 낙선할 것을 예상한 후보자가 상업성을 띤 영세한 지역 언론과 공모하여 불공정한 보도가 나가는 경우 처음부터 제재수위를 높여 선거기간 중에 그러한 보도가 중단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상설화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도 준상설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후 운영성과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여는 것도 의미있을 듯 … 특정 후보자만 부각하는 홍보성 기사 게재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도 필요”

- 배정근 위원

배정근 위원 : 심의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기사는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하는 기사였으며, 이슈와는 무관하게 한면 전체를 인물 홍보성 내용으로 채우는 기사에 대해 많은 제재를 했습니다. 이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에 일정 시점부터는 이런 형태의 기사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 이번 선거보도에서 최악으로 평가받는 측면이 여론조사 관련 보도일 것입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 기준이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여론조사가 잘못 실시되었을 수도 있으며, 심의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집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여론조사보도로 인해 언론사도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도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고 언론사가 정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심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여론조사보도로 인해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심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것”

- 김동규 위원



조병철 위원 : 한국의 여론조사는 조사기법의 수준이 높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정파성도 강합니다. 여론조사에는 중립성이 중요한데, 외형적으로는 중립성을 지키지만 의뢰기관의 성향과 구미에 맞게끔 조사합니다. 따라서 기관별 여론조사 결과가 상이한데, 이번 선거보도에서는 언론이 자기의 의견에 유리한 것만 인용하면서 출처를 안 밝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정확한 여론조사를 부정확하게 인용하여 부정확한 결과를 낳는 악순환이 있었는데, 언론사에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공지해주고 해당 조항을 조금 더 원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장 : 외부기고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듯 명확한 규정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망설임 없이 제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의 정확성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조사된 여론조사결과를 정확히 보도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불공정한 보도 방지해야 선거기사 질도 향상될 듯…제재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권고와 주의를 통합해 제재
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연 위원



한국연 위원 : 제재종류에는 권고, 주의, 경고, 경고문게재, 사과문게재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재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위단계의 권고와 주의를 하나의 제재로 합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 권고와 주의로 나누어 제재하지만, 언론사에서는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면 권고와 주의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병철 위원 : 제재종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제재내용을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언론사로 하여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특정 기사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토록 한다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병설 위원 : 선거에 임박하여 보도의 영향력이 커지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고문 게재를 상중하로 나누는 것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선거일로부터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는 언론사의 자유를 존중하여 강한 제재보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제재가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세한 지역 언론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선거보도 보다는 선거를 통한 영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하거나 예방이 중요할 것인데, 언론현실을 생각해보면 예방만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연 위원 : 경고문 게재 외에도 제재의 내용을 간단히 공지하도록 하는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병철 위원 : 제재 받은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보도한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매체유형별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만 심의단계에서부터 이 차이를 고려해야할지 고민해봐야 한다...심의기구 통합은 매체별 심의의 차별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 논의해야 한다”

- 이용성 위원

심의위원장 :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권고, 주의, 경고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안이므로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고 정도만 간단히 제재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고, 주의와 권고는 실효성이 없지만 지금과 같이 언론사에 위반사항을 알려주는 정도의 조치로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거기사심의기준과 형식을 좀 더 명확하게 정해야 위원 구성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있게 심의할 수 있을 듯”

- 박기동 부위원장



박기동 부위원장 : 심의기준은 제재수위를 정하는 것이고 이는 내부적인 효력만 있는데, 법률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심의기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심의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해두면 다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위원구성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사로 하여금 제재 받은 내용을 게재토록 하는 방안 도입 필요 … 부정확한 여론조사 부정확하게 인용해 부정확한 결과를 낳는 악순환 개선을 위해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 조병철 위원



이용성 위원 : 선거기사심의기준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도 적용되는데, 매번 결산좌담회 때마다 심의기준 적용에 관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이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해놓은 기준들이 모두 반영이 되지 않고 새롭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심의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을 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심의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어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야 하므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작업일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매체별의 차이인데, 예컨대 정간물의 경우 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매체유형별 차이를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심의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하는 효율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됨으로써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현재 매체별로 심의기구가 나뉘어져 있고 심의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체별로 심의에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선거기사 심의기구를 통합하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체별 차이에 따라서 각기 심의하고 있는 3개 심의기구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깨질 우려가 있어서 상설화 문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뒤에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병설 위원 : 상설화 문제에 대해 이용성 위원이 의견을 주셨는데, 매체 간 특성과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과 상설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상설화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통합은 매체 간 특성이 있어 심의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는 것이지만, 상설화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상 설치기간이 단절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주요 선거 시에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므로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 재·보궐선거 시에도 운영이 된다면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상설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연 위원 : 심의기준의 형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의기준에 양형기준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 심의·의결 유형을 잘 분석해 향후 심의위원회에서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심의 기준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듯”

- 양삼승 심의위원장



심의위원장 : 원론적인 내용부터 세부적인 부분까지 활발히 논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언론사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를 내부적인 판단 기준에 맞게 적절히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형기준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도 그러하듯이,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는 세분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나친 세분화는 판단의 재량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호 의논하고 양보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은 법원 판례가 쌓이는 것과 같이 결정 유형을 잘 모아서 차후 심의·의결 시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제 4 부

심의 · 의결 사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1장 자체심의
- 제2장 시정요구심의

제 1 장

자체심의

1. 경고결정문

의 결 번 호	2010지선10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나주투데이 전남 나주시 이창동 191 대표이사 이 민 교
심의대상기사	나주투데이 2010년 3월 1일자 1면 『신 시장 대법원 판결로 직위상실』 및 2010년 3월 8일자 6면 『김노금이 함께하는 세상 이야기 나주의 미래 어디로 흘러가나』 및 2010년 3월 15일자 1면 『주향득 나주시장 후보추대위 후보수락 촉구』 및 2010년 3월 22일자 1면 『주향득 나주시장 출마 공식선언』, 4면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주향득 그녀는 누구인가?』, 6면 『김노금이 함께하는 세상 이야기 나주의 여성 정치인들』 제하의 기사
주 문	주식회사 나주투데이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나주투데이> 1면 우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0년 3월 22일자 1면 ‘주향득 나주시장 출마 공식 선언’ 기사의 부제목(“혁신도시·민생정치 반드시 지키겠다”)크기로, 본문은 위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나주시장) 후보예정자인 주향득 씨의 농민운동가로서의 이력과 능력을 다수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등 주 후보의 출마관련 기사와 칼럼을 수차례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3.1.자 1면 「신시장 대법원 판결로 직위상실」, 2010.3.8.자 6면 「김노금이 함께하는 세상이야기, 나주의 미래 어디로 흘러가나」, 2010.3.15.자 1면 「주향득 나주시장 후보추대위 후보수락 촉구」, 2010.3.22.자 1면 「주향득 나주시장 출마 공식선언」, 4면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주향득 그녀는 누구인가?」, 6면 「김노금이 함께하는 세상이야기, 나주의 여성 정치인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나주시장)와 관련, 본지가 주향득 후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면서 주 후보의 농민운동가로서의 이력과 능력을 다수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식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지역정가가 주씨의 향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이다.(후략)

신 시장 대법원 판결로 직위상실

주향득씨 “출마하라” 여론 급물살

(전략)하지만 일각에서는 신 시장의 명예회복과 현재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보다는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부인인 주향득씨를 후보로 내세워야한다며 추대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의 최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시민들도 주향득씨의 출마를 원하고

김노금이 함께하는 세상 이야기

나주의 미래 어디로 흘러가나

(전략)많은 이들이 신 시장 못지않은 능력과 출중한 지혜로 조직을 이끌어 오는데 내조를 해 온 검증된 그의 부인 주향득씨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능력과 조직 장악력으로 치자면 그만한 인물이 또 있을까 싶게 그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구원투수처럼 보인다.(중략)

신 시장 대법원 판결로 직위상실

무주공산 노린 시장선거 요동칠 듯 주향득씨 “출마하라” 여론 급물살

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신정권 시장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의 원심 판결 판결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나주시 시장 선거판에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11인 회합)는 1심 판결에서 국고보조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해 상선무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무주공산'을 노린 선거전의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언론에서 '무주공산'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무주공산 시장으로 탈바꿈한 신 시장의 낙

마로 민주당이 압력의 경우 기점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신 시장 낙마로 인한 선거판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하더라도 내각직을 해소 등 남아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공천이 초기 과열되면서 파벌들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 시장추보 여론조사에서 출구 전략을 펼치던 김대중 전 시장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출마를 공직 선언함으로써 민주당의 결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

김 전 시장은 탈당하면서 "지역 정치에서 나는 사람은 수심위원을 했다는 소문이 분분하고 눈 앞에는 선

거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급속선거 촉박까지 제기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다소 속임 신 시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농민회와 시민사회단체 교섭의 구상안이 누가 될 것인지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 시장측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출마에 관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아예 무주공산임을 명확히 하는 않고 있지만 신 시장을 대신할 후보로 누구를 신임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 부시장과 아직까지 정파적 입장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 출

마 전담도전신정권대통령을 연임하는 안목이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신 시장의 명예회복과 현재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보다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주향득씨를 후보로 내세워야한다며 추대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의 최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시민들도 주향득씨의 출마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지역정가가 주씨의 향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원래 신 시장은 해례도지정청 과정에서 국고보조금과 신 시장금을 불법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후 2심에서 2년 징역에 처량한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전

/김민준기자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출마 결심
무소속연대 통한 지방자치 실현 의지 천명

나주시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주예비후보

■ 주향득 그녀는 누구인가?

86년, 89년 두 차례 투옥, 농민운동의 잔다르크 애칭 출마 결심해 한 법정 최후진술 '어머니의 손' 화제

주향득은 1986년, 1989년 두 차례 투옥된 농민운동의 잔다르크 애칭을 지녔다. 출마 결심해 한 법정 최후진술 '어머니의 손' 화제

주향득은 1986년, 1989년 두 차례 투옥된 농민운동의 잔다르크 애칭을 지녔다. 출마 결심해 한 법정 최후진술 '어머니의 손' 화제

주향득은 1986년, 1989년 두 차례 투옥된 농민운동의 잔다르크 애칭을 지녔다. 출마 결심해 한 법정 최후진술 '어머니의 손' 화제



주향득은 1986년, 1989년 두 차례 투옥된 농민운동의 잔다르크 애칭을 지녔다. 출마 결심해 한 법정 최후진술 '어머니의 손' 화제

해 두 사람은 동지적 관계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 한 길을 걷게 된다.

주향득을 말할 때 2001년 '쌀 생산비 보장'을 외치며 농협중앙회 정문에서 8시간 동안 철제서터에 매달렸던 고공시위는 지금도 빠질 수 없는 일이다.

한나절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서터문에만 매달려 있는 주 예비후보에게 건강을 염려해 내려올 것을 권유하던 재야대표도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농민생존권 투쟁의 현장에서 이처럼 몸을 아끼지 않았기에 지금도 주 예비후보의 이름 앞에는 농민운동의 잔다르크 애칭이 붙어있다.

주 예비후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일을 돕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농사에 첫발을 내

딛었다. 대대로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아버지가 “자식만은 농사를 안 짓게 하겠다”며 광주의 고등학교로 진학시켰지만, 어머니가 몸져누우면서 대신 농사를 돕기 위해 돌아온 것이 농사를 ‘업으로’ 삼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주 예비후보의 아버지는 주씨가 계속해서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완강히 반대했다.(중략)

농민운동으로 다져진 불의에 굴하지 않았던 삶 속에서도 인정 많고 친근한 이미지로 지역민의 신망을 받았던 주 예비후보가 딸 같고 며느리 같이 민생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켜볼 일이다.

제4부 심의의결사례

나주의 여성정치인들

(전략)나주시장 후보 추대위원회의 강력한 수
락 촉구에 몇 번이나 거절했던 주향득 그가 이제로
나주시장후보로 나선다고 한다.

지역의 원로요 어르신으로 존경받는 팔순이 된 득님으신 한두현 전 나주시 노인회장과 오양호 전 남도여원이 수락을 촉구하는 공동 상임대표를 맡은 부분이 어찌지 크나큰 무게감으로 와 닿는다.

이미 전남은 화순과 장성에서 남편의 후광을 업은 여성자치 단체장이 선출된 예가 있다. 그러나 주향득 후보는 남편 신정훈을 만난 20수 년전부터 어렵고 소외된 이들과 손을 맞잡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조직을 꾸려온 검증된 후보임에 마음이 놓인다.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세상,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주를 지켜가도록 그를 지지하는 모든 이에게 주향득 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화답해 줄 것인지 자못 기대가 된다.

결정 후 보도문

경고 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조)로부터 2010.3.1.자 1면 「신시장 대법원 판결로 직무실행」, 2010.3.8.자 6면 「김노규가 합세하는 세상이야기」, 나수의 미래 어디로 흘러가나」, 2010.3.15.자 1면 「주향동 나주시장 후보추대위 후보추락 촉구」, 2010.3.22.자 1면 「주향동 나주시장 출마 공식선언」, 4면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주향동 그녀는 누구인가?」, 6면 「김노규가 합세하는 세상이야기, 나수의 미래 정지인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만났습니다.

선거기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나주시장)와 관련, 본지가 주월동 후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면서 수 후보의 농민운동가로서의 이력과 능력을 다수의 시민과 함께 우호적으로 평가해 오고 있는 경향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우려가 있으므로, 공식적 절차와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평정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52(자심)
언 론 사	(주)호남매일신문사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17-13 덕성빌딩 대표이사 구 양 술
심의대상기사	호남매일 2010년 5월 4일자 7면 『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점 ‘화제’』 제하의 기사
주 문	(주)호남매일신문사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호남매일> 7면 우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고영을 광주시 교육감 후보”)크기로, 본문은 위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시 교육감)와 관련하여 여성 최초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하며 주요 공약과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5월 4일자 4면 (친밀함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점 ‘화제’)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광주시교육감)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5명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만을 한 개면 전체에 소개하며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경력 및 활동상황을 인물사진 등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점 ‘화제’

■ 고영을 광주시 교육감후보

(고구려대학교 이사장)

“30년 교단경험으로 교육 ‘백년대계’ 도모”

급여 전액 장학금 기탁...교육 복지에 투자

공교육 살리는 길 오피니언, 교원잡무 대폭 축소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저마다 ‘적임자’임을 주장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에 여념 없다.

특히 올 지방선거는 지난 민선 4기때와는 달리 교육감 선거까지 직선제로 뽑게돼 적잖은 혼란이 예견되고 있다.

과거 교육위원들만의 투표권이 시민들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저마다 “광주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저마다 각축전을 벌이며 멀고 먼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들이 제기한 공약이나 비

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점 ‘화제’

고영을 광주시 교육감후보
(고구려대학교 이사장)

“30년 교단경험으로 교육 ‘백년대계’ 도모”
급여 전액 장학금 기탁... 교육 복지에 투자
공교육 살리는 길 올린, 교원업무 대폭 축소

올해부터 민선 5기 광주시 교육감도 직접선거로 뽑는다. 거기에 여성 교사 출신인 고영을 후보가 출마 표를 던졌다. 과거 교육위원이나 시의원 등에 여성들이 일부 진출하는 일도 있었으나 이번처럼 여성이 교육감 선거에 나오기는 초유의 일이다. 출마의 반에 “32년 일선 교단의 경험을 살려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광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100년 교육대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면접자 주



지 본 교육자로서 평생 교육에 헌신해 오고 있는 고영을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 “30년 교단경험으로 교육 ‘백년대계’ 도모”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32년 일선 교단의 경험을 살려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광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100년 교육대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고영을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 “30년 교단경험으로 교육 ‘백년대계’ 도모”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32년 일선 교단의 경험을 살려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광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100년 교육대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고영을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 “30년 교단경험으로 교육 ‘백년대계’ 도모”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32년 일선 교단의 경험을 살려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광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100년 교육대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고영을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 “30년 교단경험으로 교육 ‘백년대계’ 도모”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32년 일선 교단의 경험을 살려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광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100년 교육대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고영을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 “30년 교단경험으로 교육 ‘백년대계’ 도모”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32년 일선 교단의 경험을 살려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광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100년 교육대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고영을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 “30년 교단경험으로 교육 ‘백년대계’ 도모”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32년 일선 교단의 경험을 살려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광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100년 교육대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고영을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 “30년 교단경험으로 교육 ‘백년대계’ 도모”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32년 일선 교단의 경험을 살려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광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100년 교육대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전 제시는 여타 선거와 별반 차이 없는 내용을 되풀이 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아 초반부터 식상한 분위기다.

상황이 이러니 교육감 선거 후보는 눈길조차 주어지지 않은 분위기다.

답장에 자녀를 두고 학교와 밀접하게 살아 가는 학부모들조차 매 마찬가지.

이런 가운데 선거 초반부터 관심을 사고 있는 후보가 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중 유일한 홍일점 후보이자 스스로를 ‘엄마교육감’이라 자처하는 고영을 씨(사진)가 주인공.

우선 우리네 정서상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교육감 후보에 여성이 당당하게 나선것도 그렇지만 뒤장내을 나는 친서민적 정책이 유독 눈에 들어 온다.

그녀가 애써 교육감직에 출사표를 던진데는 실

제 일선학교교사(중등)로 32년간 재직하다 느낀 경험을 살려 보다 차원 높은 미래교육을 구현하고 싶어서다.

타성에 젖은 교육환경의 구태를 없애는데는 무엇보다 일선의 경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물론 타 후보들의 교단 경험도 없지는 않으나 가장 최근까지의 교사생활을 접고 바람직한 교육행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접목시키려는 용기는 찬사받을만 하다.

여기다 ‘엄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친근감을 준다.

‘엄마교육감’이라는 슬로건은 단순히 교육자라는 영역에 안주하기 보다 학부모 시각에서 광주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거기엔 요즘 사회적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점차 힘을 잃어가는

공교육 현장을 바로 세워보고자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말로만 강조하는 대안 제시보다 그 실천방안을 내놓는 것은 더 한층 이채롭다.

지금까지 주 한, 두시간에 그치는 형식적인 방과 후 학습에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학부모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돋보이는 것은 그녀가 실제 교단에서 느낀 '과중한 잡무' 해소에 팔을 걷어 부쳤다는 것.

학생들을 위한 교육현장이 온통 교육 외적인 잡무로 일관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보조교사제를 충원하고 행정 보조 시스템을 가동,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름하여 '교단 로드맵'을 제시 했다.

이 같은 고후보의 공약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평소 "교사들이 학생을 위한 교안연구나 교과

연구, 교외지도 등에만 나설수 있도록 미국의 시스템처럼 수석교사와 조교제를 시급하게 도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

벌써부터 교과부의 움직임과 이런 비전을 능동적으로 제시할 경우 가능성은 얼마든지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 후 보도문

경고 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5월 4일자 7면 [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원점 화제]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광주시 교육감)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5명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특정후보만을 한 개면 전체에 소개하며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경력 및 활동상황을 인물사진 등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53(자심)
언 론 사	(주)에이치앤프레스(호남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857 5층 대표이사 김 형 철
심의대상기사	호남신문 2010년 4월 20일자 9면 『“힘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될 때 광주가 살아납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주)에이치앤프레스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호남신문> 9면 우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변화와 발전’ 내건 젊은 광주시장 후보 정용화”)크기로, 본문은 위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광역시장)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소개하며 주요 업적 및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4.20.자 9면 『“힘있는 여당후보가 시장이 될 때 광주가 살아납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광역시장)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전면에 게재하며 후보자의 출마 사유, 주요 업적, 학력,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힘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될 때 광주가 살아납니다”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는 서울대와 동대학원 정치학박사, 하버드대 초빙연구원, 연세대 연구교수, 동경대 객원연구원 등으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학력과 경력을 가졌다.

그가 잘 나가던 교수직을 버리고 누군가는 지

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광주시장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중략)

- 그 동안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위낙 민주당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가 광주시장에 출마한 이유가 광주시의 발전과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온 만큼 광주시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래상가 방문을 비롯해 민주당 후보들이 경선에 주

력하느라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광주의 서민들을 직접 만나 광주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광주지역 언론의 보도가 편파적인 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TV토론도 민주당 후보들만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보도도 민주당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고 광주시민 모두를 위해 보편타당한 소식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민주당 후보를 보도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광주시민에게 민주당 이외의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심하게 말하면 언론사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권여당 후보를 배제하는 보도행태는 광

주를 고립된 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등 광주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 후보를 무시하는 언론의 행태는 광주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 이번에는 한나라당 후보로서,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광주는 민주주의 성지이자 시대정신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한나라당이 시대정신을 따라잡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민이 한나라당을 외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은 많이 변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

“힘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될 때 광주가 살아납니다”

‘변화와 발전’ 내건 젊은 광주시장 후보 정용화



동화와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는 서민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후보는 동화대 경영학과 학생으로 여러 나라로 순회하는 여행과 경험을 거쳤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버리고 누군가를 지키는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광주에 사는 광주인이자 어떤 광주사람이 다시 도전하기 때문이다.

정 후보가 우리 광주사람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광주에 열린 마음으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시민과 함께 광주를 바꾸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이 되면 무엇보다 해결을 두고 싶을 것 생각하십니까?

정 후보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후보로는 당선 가능성이 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장 후보로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정치의 경계를 넘어서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이 되면 무엇보다 해결을 두고 싶을 것 생각하십니까?

정 후보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 동안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정 후보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제가 광주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광주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이 되면 무엇보다 해결을 두고 싶을 것 생각하십니까?

정 후보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이 되면 무엇보다 해결을 두고 싶을 것 생각하십니까?

정 후보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 동안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정 후보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이 되면 무엇보다 해결을 두고 싶을 것 생각하십니까?

정 후보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다들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이 되면 무엇보다 해결을 두고 싶을 것 생각하십니까?

정 후보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이 되면 무엇보다 해결을 두고 싶을 것 생각하십니까?

정 후보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 동안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정 후보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이 되면 무엇보다 해결을 두고 싶을 것 생각하십니까?

정 후보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광주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후보로서,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광주는 민주주의 성지이자 시대정신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한나라당이 시대정신을 따라잡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민이 한나라당을 외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은 많이 변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

제 4 부 심의 의결 사례

지, 시대정신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50%대를 넘나들고 있고, 광주에서도 20~30%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광주시민과 한나라당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또 저 정용화가 광주시장에 출마하면서, 변화를 바라는 광주시민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광주의 미래는 광주시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에게 광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번에 출마를 포기한 박광태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광주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 중앙당이 원하는 사람이 광주시장이 되는 어찌구무 없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정체되어 있는 광주, 사람들이 떠나는 광주, 민주당만 신경쓰는 시장을 원한다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잘 사는 광주,

당당한 광주, 세계속의 광주를 원하신다면 저 힘있는 여권 후보인 정용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 현명하고 당찬 광주시민들의 현명한 결단을 믿습니다.

결정 후 보도문

경 고 결 정 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 4. 20.자 9년 『합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될 때 광주가 살아납니다』 재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광역시)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위적 기사를 전면에서 게재하며 후보자의 출마 사유, 주요 업적, 학력,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54(자심)
언 론 사	(주)에이치애프레스(호남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857 5층 대표이사 김 형 철
심의대상기사	호남신문 2010년 4월 19일자 1면 『“잘 사는 장성의 미래 책임지겠다”』, 2010년 4월 28일자 1면 『“모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010년 4월 30일자 1면 『“어르신, 노후 편안할 권리 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주)에이치애프레스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호남신문> 1면 우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0년 4월 30일자 1면 기사의 부제목(“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 독거어르신 특별공약”)크기로, 본문은 위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장성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 소식과 주요 공약, 특별 공약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1면에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4.19.자 1면 『잘사는 장성의 미래 책임지겠다』, 2010.4.28.자 1면 『어르신, 노후 편안할 권리 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장성군수)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3차례에 걸쳐 1면에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잘사는 장성의 미래 책임지겠다”

이청 장성군수가 6·2지방선거를 위해 16일 장성군선관위에 장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청 군수는 당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선을 위해 무소속 현직 군수로 첫 주자로 선거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청 군수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장성의 미래를 위한 포부와 비전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거짓 없는 마음으로 군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이청 군수는 지난 2007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 전국 유일의 여성군수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2년 반 동안 군정을 이끌어 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군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6월 2일 선거 직후 다시 복귀하게 된다.

이청 군수는 주요 선거 공약으로 ▲첨단 농업

“잘사는 장성의 미래 책임지겠다”



이청 장성군수

‘전국 유일’ 여성 군수
2년 반 동안 균형 수행
낙후 장성 획기적 개선

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 등록 ‘본격 선거재비’

무소속 현직 군수로 본 선거전 첫 출발 신호탄

‘이제 인물로 심판하는 시대’ 깨끗한 선거 제안

‘원스톱 건강 친국’·테라피밸리 조성 등 제시

이청 장성군수가 6·2지방선거를 위해 16일 장성군선거위원회에 장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청 군수는 당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선을 위해 무소속 현직 군수로 는 첫 주자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이청 군수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장성의 미래를 위한 포부와 비전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거짓 없는 마음으로 군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이청 군수는 지난 2007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 전국 유일의 여성 군수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2년 반 동안 균형을 이끌어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군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6월 2일 선거직후 다시 복귀하게 된다.

이청 군수는 주요 선거 공약으로 ▲첨단 농업 소득원의 개발, 대대적 지원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원스톱 건강 친국’ 실현 ▲기업 유치 TF전담반 구성, 일자리 창출 유도 ▲축령산 치유의 숲, 테라피밸리 조성 ▲황룡강의 문화, 건강 공원과 사업 추진 ▲홍길동테마파크, 장성호 등 관광개발 ▲600만 장성 관광객 유치 선언 등을 내걸었다.

이청 군수는 재임 기간동안에 낙후된 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으로 500억원의 국비를 이끌어온 것을 비롯, 군단위 전국 최초 국민대 아파트 800세대를 유치하고, 첨단 나노산단 조성 500억 토지매입 자금 확보, 전남 최초의 공립노인요양병원 건립, 광역도시가스 공급 확정 등 국고지원사업과 생활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으로 500억원의 국비를 이끌어온 것을 비롯, 군단위 전국 최초 국민대아파트 800세대를 유치하고, 첨단 나노산단 조성 500억 토지매입 자금 확보, 전남 최초의 공립노인요양병원 건립, 광역도시가스 공급 확정 등 국고지원사업과 생활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현재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전남지역 현직 단체장은 이청 장성군수를 비롯, 황주용 강진군수, 박우람 신안군수, 이성을 광양시장 등이며 광주광역시에서는 황일봉 남구정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와함께 무소속 후보군으로서 강력한 주자들이 부상하고 있는 송병태 국민참여당 공산구청장 후보(전 공산구정장), 허남석 전 곡성경찰서장, 임호영 전 화순군수, 신성훈 나주시장의 부인 주향득 후보, 전정태 전 구례군수 등이 예비후보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어 무소속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선거에서는 이들 10여 곳의 강력한 주자들이 최근 열고 있는 민주당 지성원에 합일이 무소속 연대본 붐을 밀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민철 기자

“모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

농업 우대정책 선언

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는 27일 “지구 온난화에 따라 이상기온이 계속되면서 농작물의 정상적인 수확에 비상이 걸렸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농업대책을 호소했다.

이청 예비후보는 “장성 지역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농업군인 장성에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전 농작물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성군에서는 사과 배 포도 등 7개 품목에만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시설채소와 수박, 고추, 콩 등 18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료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득원의 개발, 대대적 지원 ▲완벽한 노후를 보장하는 ‘원스톱 건강 친국’ 실현 ▲기업 유치 TF전담반 구성, 일자리 창출 유도 ▲축령산 치유의 숲, 테라피밸리 조성 ▲황룡강의 문화, 건강 공원과 사업 추진 ▲홍길동테마파크, 장성호 등 관광지개발 ▲600만 장성 관광객 유치 선언 등을 내걸었다.

이청 군수는 재임 기간동안에 낙후된 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으로 500억원의 국비를 이끌어온 것을 비롯, 군단위 전국 최초 국민대 아파트 800세대를 유치하고, 첨단 나노산단 조성 500억 토지매입 자금 확보, 전남 최초의 공립노인요양병원 건립, 광역도시가스 공급 확정 등 국고지원사업과 생활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후략)

“모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 농업 우대정책 선언

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는 27일 “지구 온난화에 따라 이상기온이 계속되면서 농작물의 정상적인 수확에 비상이 걸렸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농업대책을 호소했다.

이청 예비후보는 “장성 지역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농업군인 장성에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전 농작물에 대해 농작물재보



험료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성군에서는 사과 배 포도 등 7개 품목에만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시설채소와 수박, 고추, 콩 등 18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료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르신, 노후 편안할 권리 있다”

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 독거어르신 특별공약

“어르신, 노후 편안할 권리 있다”

이청 장성군수 예비후보, 독거어르신 특별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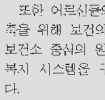
이청 장성군수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102만명에 달하고, 장성의 경우 4만 7천명 가운데 1만여명이 어르신층”이라고 설명하고 “어르신들은 노후를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실버권리주장을 선언했다.



들의 행복을 위해 각 읍면별로 독거노인 공동생활공간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순차적으로 펼치며 각 마을 회관과 경로당에

이 군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0년 뒤에는 150만명, 20년 뒤에는 22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경제적 궁핍, 외로움, 질병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공동생활 중심의 일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 후보는 공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각 읍면별로 독거노인 공동생활공간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순차적으로 펼치며 각 마을 회관과 경로당에 반찬비와 김장 지원,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구축을 위해 보건 의료와 읍면 단위 보건소 중심의 원스톱 완벽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청 장성군수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102만명에 달하고, 장성의 경우 4만 7천명 가운데 1만여명이 어르신층”이라고 설명하고 “어르신들은 노후를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실버권리주장을 선언했다.

이 군수는 “65세 이상 어르신층이 10년 뒤에는 150만명, 20년 뒤에는 22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경제적 궁핍, 외로움, 질병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공동생활 중심의 일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 후보는 공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각 읍면별로 독거노인 공동생활공간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순차적으로 펼치며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반찬비와 김장 지원,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구축을 위해 보건 의료와 읍면 단위 보건소 중심의 원스톱 완벽 어르신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결정 후 보도문

경 고 결 정 문

본지는 선거가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상승)로부터 2010. 4. 19. 자 1면 「장사는 장성의 미래 책임지겠다.」, 2010. 4. 28. 자 1면 「어르신, 노후 편안할 권리 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가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장성군수)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3차례에 걸쳐 1면에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가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56(자심)
언 론 사	유한회사 강진고을신문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3-25 대표이사 이 원
심의대상기사	강진고을 2010년 4월 21일자 1면 『“황주홍식 교육실험” 대성공』, 2010년 4월 28일자 1면 『황주홍군수 55% 확실한 1위』, 3면 『‘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외연 확대에 성공』, 2010년 5월 5일자 1면 『“당 보다는 사람을 선택”』 및 3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군수 되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유한회사 강진고을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강진고을> 1면 우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0년 4월 28일자 3면 기사의 제목(‘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외연확대에 성공)크기로, 본문은 위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강진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동향을 다루는 기사 및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3주에 걸쳐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회 양상승)로부터 2010. 4. 21.자 1면 『“황주홍식 교육실험” 대 성공』, 2010. 4. 28.자 3면 『‘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외연확대에 성공』, 2010. 5. 5.자 1면 『“당 보다는 사람을 선택을”』, 3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군수 되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강진군수)와 관련, “현직 군수인 특정 후보자의 재임 중 지역교육 성과, 활동상황, 인터뷰 등을 담은 기사를 인물사진과 함께 3주간 4회에 걸쳐 지극히 우호적으로 부각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황주홍식 교육실험” 대 성공

(전략)◆ 황주홍 군수 ‘강진교육 살리기’ 승부수

정치학 박사로 건국대 교수 출신인 황주홍(59) 강진군수는 지역인재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그를 “침체된 강진교육에 새 물꼬를 텃다”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역대 군수

중 유일한 교육군수”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2004년 취임하자마자 황 군수는 “교육으로 지역을 살려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리고 2005년 4월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군민들의 기부가 일상화되면서 매년 20억원이 모였다. 군민 4만 2000여명 중 9000여명이 10만원 미만의 쌈짓돈으로 참여했다.(중략)

자신은 못 배우고 가난해도 자식·손자는 제대로 교육시키겠다는 군민의 염원이 쌓인 것일까. 농어민·식당주인·공무원·교직원·기업인·군인·경찰·독거노인·출향인사 등 각계 각층에서

방행정은 주민 생활과 더 밀접하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와는 별개로 생각하려는 유권자의 판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현직인 황 군수에게 유리한

[illegible]

지역 정가에서는 “강진군수 선거는 이미 끝났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번 여론조사는 강진의 '바다 민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결국 6·2 강진군수 선거가 황주홍 현 군수의 대세론으로 굳어질 공산이 매우 커졌음을 방증(傍證)한다.

‘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외연확대에 성공

황주홍(59) 강진군수를 생각하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이 함께 떠오른다. 그리고 '강진군민장학재단', '스포츠마케팅', '깨끗한 공무원인사', '공무원 드림팀세', '군정 일기', '무소속' 등의 이미지들이 줄줄이 연상된다.

85

‘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외연확대에 성공



교육복지로 새로운 기대와 지지층을 불러 모아

황주홍(59) 강진군수를 생각하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이 함께 떠오른다. 그리고 ‘강진군민정책재단’, ‘스포츠크레임’, ‘깨끗한 공무원연사’, ‘공무원 드림팀제’, ‘군정 일기’, ‘무소속’ 등의 이미지들이 줄줄이 연상된다.

황 군수의 행보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황 군수는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로, ‘법국민적 정당공천 폐지운동’을 주도하면서 ‘스타 군수’로 대중에게 이미 각인됐다.

여기에 지역민들에게 황 군수의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인 똑똑함과 부지런함의 이미지까지 실어주었다.

그렇다면 강력한 포스(force)를 발휘하고 있는 황 군수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지난해 9월 이후 정책 및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GH KOREA, 아이비정보가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황 군수의 현실과 미래를 암시하는 주요 텍스트(text)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황주홍 군수가 ‘부동(不動)’의 1위*에 랭크됐다. 강진 ‘민심(民心)’이 이대라면 가히 ‘황주홍 대세론’으로 압될 만하다.

‘대세론’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황주홍 독주(獨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황 군수는 누가 지지하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연령·직업·지역 등 모든 계층에서 지지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그동안 황

주홍을 지지했던 계층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과 20·30대에서 황 군수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즉, 황 군수 지지층의 외연(外延)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지지층을 확장시킨 것일까.

첫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을 주도하며 보여준 소신있는 모습이다. ‘신뢰’와 ‘약속’이란 키워드(keyword)를 일관되게 노출하며 원칙적 태도를 견지하는 모습은 분명 ‘스타군수 황주홍’을 도드라지게 돋보이게 했다.

그리고 이는 국민들이 정치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덕목 중 하나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강단있는 모습’이란 기준을 만족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황주홍의 새로운 컨텐츠(content)’이다. 2005년 강진군민정책재

단을 설립하면서 지역 사회에 선보이기 시작한 ‘교육(敎育)’과 ‘복지(福祉)’라는 컨셉(concept)이다.

일종의 ‘선점 효과(first mover’s advantage)’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교수 출신인 황 군수가 ‘교육복지’라는 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기대와 지지층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쨌든 지금까지 황 군수의 행보는 대단히 성공적이다.

하지만 앞으로 6·2 지방선거까지는 37일이란 시간이 남아있다. 황 군수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는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관건은 역시 ‘황주홍 컨텐츠’이다.

주요한 정치적 현안이나 쟁점이 제기됐을 때 황 군수가 기존의 이미지를 확대 보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가에 따라 황 군수의 지지율은 또 다시 변곡점을 그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송승환 기자

여기에 지역민들에게 황 군수의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인 똑똑함과 부지런함의 이미지까지 실어주었다.(후략)

황주홍 강진군수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 보다는 사람 선택을”

황주홍 강진군수 예비후보는 4일 오전 10시부터 종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황주홍 강진군수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 보다는 사람 선택을”

황주홍 강진군수 예비후보는 4일 오전 10시부터 종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강진읍 남성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황주홍”이란 홍보 문구를 크게 내걸었고 종일 지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질 않아 행사를 수차례 반복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황주홍은 “89세 어머님을 지금까지 모시고 있는데, 5만 군민을 어머니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 왔다”고 자평하고

“어머님께서는 출근할 때마다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을 5년간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는 5만 군민의 희망사항이며 5천만 국민이 투쟁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기를 원하는 일”이라고 덧붙이면서 “고향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창읍 선거사무장의 멘트에 따라 박수가 터져 나오는 등 열기로 가득했으며 끝까지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했다.

(송승환 기자)

강진읍 남성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황주홍”이란 홍보 문구를 크게 내걸었고 종일 지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질 않아 행사를 수차례 반복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황주홍은 “89세 어머님을 지금까지 모시고 있는데, 5만 군민을 어머니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 왔다”고 자평하고 “어머님께서는 출근할 때마다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을 5년간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는 5만, 군민의 희망사항이며 5천만 국민이 투쟁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기를 원하는 일”이라고 덧붙이면서 “고향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창읍 선거사무장의 멘트에 따라 박수가 터져 나오는 등 열기로 가득했으며 끝까지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행기는 군수 되겠다”

무소속 황주홍 후보

(전략)4일 “민생(民生)을 최우선으로 행기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힌 무소속 황주홍(59) 군수후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면 질문에도 막힘없는 대답과 거침없는 태도로 취재기자를 '울고 웃게' 만들었다. 적당한 재치와 수다로 인터뷰 내내 분위기를 띄운 황 후보는 "편안하게 인터뷰 하자"면서도 이 날 만큼은 '철저히 취재대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솔직담백한 폴스토리를 풀었다.

■ 고향의 '가난 해방'에 관심 많은 황주홍 후보

황 후보는 누구보다 고향을 비참하게 하는 '가난 해방'에 관심이 많다.

2004년 10월 강진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58.7%득표율)했고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무난히 재선(76.1%)에 성공한 그는 행정가로서 가난과 낙후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고향을 발전시키고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했다.

황 후보는 인구 4만 1000여명에 불과한 강진군을 전국에서 손꼽히는 '축구 메카'로 키워냈다.

그는 스포츠가 피폐해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새로운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전국 최초로 스포츠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강진군은 축구를 비롯해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겨울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황 후보는 강진군의 성공 요인으로 지속적인

인프라(infra) 구축 외에 모든 군민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펼친 것을 들었다.

황 후보를 보고 있으면 '고군분투(孤軍奮鬪)'라는 말이 떠오른다. 낙후된 고향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걸 극복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황후보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인생을 건 진짜 '검투사(劍闘士)'였다.

결정 후 보도문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경고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2. 내용 :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 4. 21.자 1면 『“황주홍식 교육실현” 대성공』, 2010. 4. 28.자 3면 『“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의원확대에 성공』, 2010. 5. 3.자 1면 『당 보다는 사람을 선택』, 3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쟁기는 군수 되겠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전남 강진군수)와 관련, “현직 군수인 특정 후보자의 재임 중 지역교육 성과, 활동상황, 인터뷰 등을 담은 기사를 인물사건과 함께 3주간 4회에 걸쳐 자극적 우호적으로 부각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69(자심)
언 론 사	(주)충청일보 재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34 대표이사 이 규 택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2010년 5월 25일자 1면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황금분할’』 및 5면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제하의 기사
주 문	(주)충청일보 재단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충청신문> 1면 우측 상단에 <별지>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황금분할’』의 부제목(대전·충북 오차범위 밖 격차) 크기로, 본문은 위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전광역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와 관련하여 각종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 ‘황금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제목에서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단정 보도했으나 충남도지사와 충북도지사의 경우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내외로 큰 격차가 없고, 대전시장의 경우 기사 본문에 여론조사 결과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충북도지사 선거와 관련, 올해 25차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표로 제시하며 정우택 후보가 24번에 걸쳐 1위를 차지하였음을 근거로 ‘압도적 1위’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정우택 후보가 타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오해하여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제6조(사실보도),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항 및 제14조(기사제목),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5월 25일자 1면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황금분할’’, 5면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본지는 위 기사의 제목을 통해 특정 후보자들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한 근거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충남도지사와 충북도지사의 경우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외의 차이이고, 대전시장의 경우 기사 본문에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 유력한 것처럼 제목을 표기하거나 ‘압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80(재심) (원심결정 : 2010지선169(자심))
재 심 청 구 인	(주)충청일보재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34번지 충청일보 빌딩 발행인 이 규 택
재심청구대상 기 사	충청일보 2010년 5월 25일자 1면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황금분할’』 및 5 면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2010지선169(자심) 경고결정문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대상 보도는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 분석 한 뒤 기사화 한 것으로 기사내용에 여론조사 보도 요건을 정확히 명시했으나, 대 전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적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 겠으나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제하의 기사는 25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도표로 첨부해 기사화했기 때문에 도표를 확인한 독자라면 기사제목이 뜻 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위 기사와 관련해 상대 후보측이나 일 반 독자들로부터 불만제기가 없어 독자들이 잘못 판단할 것이라는 지적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여지므로 원심 결정을 재고하는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취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의 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결정을 내린 원심의 결정은 적합한 바, 당위 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황금분할’

수도권과 영·호남권 등 비교적 관세가 뚜렷한
지역과 달리, 전국 최대 관심 선거구로 꼽히고 있
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 ‘황금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중략)

각 언론사
의 이번 여론
조사에서 제외
된 대전시장
후보의 경우
기존 조사를
반영하면, 대
전시장과 충북
지사선거는 오
차 범 위 밖
1~2위가 고
착화 될 가능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황금분할’



대전·충북 오차범위 밖 격차 충남 팽팽...최대 격전지 부상

수도권과 영·호남권 등 비교적 관
세가 뚜렷한 지역과 달리, 전국 최대
관심 선거구로 꼽히고 있는 충청권 광
역단체장 선거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 ‘황금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영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
난 22일 충남 유권자 600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
수준 95%·표본오차 ±4.0%p)에서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가 46%의 지지
를 민주당 이시종 후보의 34%를 12%p
앞섰다.

충남지사의 경우 민주당 안희정 후
보가 27.7%를 얻어 2위의 자유선진당

박성준 후보의 24.9%보다 2.8%p의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한나라당 박
해준 후보 지지율은 17.2%에 그쳤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
난 22·23일 충북 유권자 1000명을
CATI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표본
오차 ±3.1%p)에서도 한나라당 정우
택 충북지사 후보는 43.1%의 지지율
로 민주당 이시종 후보의 35.2%에 7.
9%p 앞섰다.

또 전국적인 투표의사율을 대량으
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우택 45.3%,
이시종 37.1% 등으로 8.2%p를 격차
가 더 벌어졌다.

KBS의 3차례 여론조사는 △5월 3-
5일(정우택 40.6%·민주당 이시종
30.9%) △5월 14-16일(정우택 43.4
%·이시종 39.2%) △5월 22-23일(정
우택 43.1%·이시종 35.2%)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 3-5일 9.7%p의 격차가 이
시종·이재정 단일로 확인 5월 14-16
일 4.2%p로 줄어들었다가 5월 22-23
일 또 다시 7.9%p로 벌어지는 등 ‘정
우택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KHNS의 충남지사 후보 지지율 조사
에서는 민주당 안희정 후보가 27%로
자유선진당 박성준 후보의 25.1%를

1.9%p 앞섰고, 한나라당 박해준 후
보는 15.2%에 그쳤다.

국민일보가 G1리서치에 의뢰해 지
난 21-22일 충북 유권자 700명을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
뢰수준 95%·표본오차 ±3.7%p)에서
도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는 50.8%의
지지율로 43.6%인 민주당 이시종 후
보를 7.2%p 앞섰다.

충남지사의 경우 민주당 안희정 후
보가 38.4%의 지지율로 자유선진당
박성준 후보의 28.5%를 9.9%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언론사의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
외관 대전시장 후보의 경우 기존 조사
를 반영하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선거는 오차범위 밖 1-2위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충
남지사 선거는 오차범위 내 격차를 여
고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충청남지사 선거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결정 후 보도문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올 25차례 실시...24:1로 이시종 앞서

을 들어 25차례 실시된 각 언론사의 충북도지사 지지도 조사에서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는 24번에 걸쳐 1위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이시종 후보는 단 1차례 승리하는데 그쳤다.

특히 정우택 후보는 연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최대 21.5%p 앞서는 등 '압도적 1위'를 기록하다가 5월 13~14일 후보등록 시점에 지지율 격차가 3.2~4.2%p로 좁혀졌지만, 5월 24일 이후 실시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최소 7.2%p, 최대 12%p로 격차를 벌렸다.(후략)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을 25차례 실시 ... 24:1로 이시종 앞서

을 들어 25차례 실시된 각 연선사의 충북도지사 지지도 조사에서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는 24.1%를 얻어 1위로 기록한 반면, 민주당 이시종 후보는 단 1차례 승리한 데 그쳤다.

특히 청주와 우주는 연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최대 21.5%p 앞서는 '봄' '알뜰서 1위' 등 기록을 세웠다. 3월 13~14일 후보등록 첫선에 지지율 격차가 3.2~4.2%p로 줄었지만, 5월 24일 이후 실시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조소 7.2%p, 최다 12%p 격차로 벌었다. <표준조사>

정우택·이시환 후보 간 지지율 변
화는 △한진 스코비움 △세종시 수성
동반 △청주·청원 통합 △호남안일화
△신안원 좌불 △노무현 선 대응
에서 1주가 틀 5가지의 경향에 따라
틀림을 거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지난 1월 중 CJB 정국방송과
온라인신문이 신사와 여론조사에서
정우택-이시종 후보 간 격차는 3.14
%-1.7%p에 달했다. 반면, 중부의
약어 지난 1월 18일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는 이시종 후보가 정우택 후보를
3.0%p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어 2월에 실시된 환경개선문과 중목업권 여론조사에서는 7.9%~11.9%p 차이를 드러냈고, 3월 중 실시된 4차레와 여론조사에서는 최소 8.2%p에서 최대 21.5%p 차이'를 드러내는 등 여론조사 결과가 급변할 수 있다.

1~3월까지 실시된 9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정우택 후보는 단 한차례도 이시광 후보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다. 3월 2일 원각초선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무리 21.5%p의 격차를 벌렸다. 지금까지 실시된 25차례 여론조사 중 가장 큰 격차였다.

4월에 실시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호반은 5.7%p-15.1%p를 유지했고, 후보등록 이전인 5월 13일 이전에 실시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6.7%p-9.0%p에 달하는 임정화 감점을 유지했다.

하지만, 후보군으로 동시에 실시된 3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동아일보-0.3%p △한국경제신문-3.2%p △KBS-MBC 4.2%p 등으로 지지율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100

보 나타났다.

정지권은 민주당 이시종 후보의 아들과
단임과 빛 수호를 아카데미에서 따온
중청권 '내부'로, 정국의 한 나라
남 내 친이계의 서정시 수정 강행 물
지의 등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이러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0일 이후 실시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최소 7.2%p~최대 12%p 차로 또 다시 격차를 벌였다.

곰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우

경고 결정문

본지는 선거가사의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5월 25일자 1면 '영흥철·정우택·안희정 '황금분할'', 5면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본지는 위 기사의 제목을 통해 특정 후보자들이 당선
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한 근
거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충청도지사와의 총복도지사의 경우 대부분이 여론조사 결과와 오차범위 내의 차이이고, 대전시장의 경우 기사 본문에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 유력한 것처럼 제목을 편조하거나 '압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판단기준을 줄 우려가 있어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시장을 후보 간 정책·공약·인물
대결이 본격화된다. 대다수 후보들은 동
을 봉와 그동안 바일에 살았었던 각
후보지역의 중심전력이 유권자 등에
게 노출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
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힌 23~24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 기념 23일 이후 실시된 여집인 2~3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취재반

의 결 번 호	2010지선176(자심)
언 론 사	(주)내외엔이더블유에스(내외일보)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45-51 광장빌딩 4층 대표이사 박 길 덕
심의대상기사	내외일보 2010년 5월 6일자 6면 『양태홍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 5월 10일자 8면 『양태홍 예비후보, “지역쿼터제” 도입』 제하의 기사
주 문	(주)내외엔이더블유에스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내외일보> 6면에 <별지>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 기사 중 2010년 5월 6일자 6면 『양태홍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의 부제목(“필요한 사항 빠짐없이 점검할 것”)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할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리시장)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사업 추진계획 및 발주 공사 지역쿼터제 도입에 대한 주요 공약을 2차례에 걸쳐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및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5월 6일자 8면 ‘양태홍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 5월 10일자 8면 ‘양태홍 예비후보, “지역쿼터제” 도입’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심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리지방)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3명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공약만을 2차례에 걸쳐 인물사진 등과 함께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양태홍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

양태홍(사진) 한나라당 구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공공관리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구리뉴타운을 투명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공약에 따라 당선과 동시에 조속히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연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팀은 주민이 불투명하고 비리로 얼룩진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구체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양태홍 예비후보는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준비하는 자세는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후보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관리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약속했다면 그에 대한 실천방안도 갖추고 시민들께 내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

이라고 말했다.

또 “현실성을 갖춘 책임있는 공약만이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을 갖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태홍 예비후보, “‘지역쿼터제’ 도입”

발주공사 관내업체 최대 49% 의무적 참여

구리시 양태홍 한나라당 구리시장 예비후보(사진)는 지난 7일 구리시장으로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최대 49%를 구리 관내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쿼터제’를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쿼터제 도입은 지난 4년간 다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파적으로 자기 사람 끌어안기식의 석연찰은 계약으로 인해 구리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이주를 가거나 폐해의식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더 이상 업체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채택했다.

양 예비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

양태홍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

“필요한 사항 빠짐없이 점검할 것”

양태홍(사진) 한나라당 구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공공관리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구리뉴타운을 투명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공약에 따라 당선과 동시에 조속히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연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팀은 주민이 불투명하고 비리로 얼룩진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일이 없

도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구체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수립,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양태홍 예비후보는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준비하는 자세는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후보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

관리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약속했다면 그에 대한 실천방안도 갖추고 시민들께 내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현실성을 갖춘 책임있는 공약만이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을 갖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호 기자



양태홍 예비후보, “‘지역쿼터제’ 도입”

발주공사 관내업체 최대 49% 의무적 참여

구리시 양태홍 한나라당 구리시장 예비후보(사진)는 지난 7일 구리시장으로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최대 49%를 구리 관내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쿼터제’를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쿼터제 도입은 지난 4년간 다소 형평성에 맞지않게 편파적으로 자기 사람 끌어안기식의 석연찮은 계약으로 인해

구리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이주를 가거나 폐해의식을 알고 있는 점을 감안해 더 이상 업체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채택했다.

양 예비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판단은 발주기관이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업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수의 업체들이 구리시에 입점해 경쟁력 강화로 우수한 사업을 진행하게 될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 향상에 지대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구리시를 아끼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에서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호 기자



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면서 “판단은 발주기관이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업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수의 업체들이 구리시에 입점해 경쟁력 강화로 우수한 사업을 진행하게 될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 향상에 지대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구리시를 아끼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에서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결정 후 보도문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원장 양삼승)으로부터 2010년 5월 6일자 8면 ‘양태홍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 5월 10일자 8면 ‘양태홍 예비후보, “지역쿼터제” 도입’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심사위원회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구리시장)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3명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공약만을 2차례에 걸쳐 언론 사진 등과 함께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77(자심)
언 론 사	(주)우리일보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592번지 두손브릿지 3층 대표이사 유 장 수
심의대상기사	우리일보 2010년 5월 26일자 14면 『무상급식 TV 토론기회조차 박탈』, 『인천 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 제하의 기사
주 문	(주)우리일보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우리일보> 1면에 <별지>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 대상 기사 중 2010년 5월 26일자 14면 『무상급식 TV 토론기회조차 박탈』 제하의 기사 제목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우리일보는 2010년 5월 26일자 14면 『무상급식 TV 토론기회조차 박탈』 제하의 기사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교육감)와 관련하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논평을 게재했으나, 이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 및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2010년 5월 26일자 14면 『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시장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특정 정당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 것은 해당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5월 26일자 14면 ‘무상급식 TV토론기회조차 박탈’, ‘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교육감)와 관련, ‘특정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 및 저술을 금지하는 공직 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시장 선거와 관련 ‘인천시장 후보자 TV토론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후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특정 정당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 것은 해당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 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알려왔습니다.

보도내용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

무상급식 TV 토론기회조차 박탈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벌어졌다. 흑백 화면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 최첨단 3D TV에 재현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4일,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주제에서 '무상급식'를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2일 제시된 토론주제에 대해 우리 김상곤 선거사무소가 무상급식을 의제에 포함시켜달라고 이의신청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4일 오후 재논의했지만 무상급식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교육감 후보자토론회의 주제는 모두 9가지로 최종 확정됐다. 공통질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고, 개별질문은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학교폭력, 교원집해와 학생인권, 교육환경개선, 교원인사의 공정성, 교장 공모제 새 교육과정 등 8가지이다.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편파적이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다수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다른 시도지사 후보의 TV토론회에서도 주제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무상급식 원조'인 김상곤 후보에게만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구나 선관위 주최 토론회는 교육감 후보가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돼 있다. 무상급식은 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의제선정 여론조사에서 74.8%인 도민이 “반드시 토론주제로 선정돼야 한다”고 답한 의제이다. 그런데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67.3%의 지지를 받은 교장공모제와 62.6%의 지지를 받은 고교평준화를 포함시키면서도, 무상급식은 제외시켰다. 국민의 관심은

TH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

무상급식 TV 토론기획조차 박탈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입에 재간을 물리는 일이 벌어졌다. 흑백 화면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 최첨단 3D TV에 재현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4일,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주제에서 '무상급식'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2일 제시된 토론주제에 대해 우리 김상곤 선거사무소가 무상급식을 의제에 포함시켜달라고 이의신청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4일 오후 재논의했지만 무상급식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교육감 후보자토론회의 주제는 모두 9가지로 최종 확정됐다. 공통질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다. 개별질문은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학교폭력,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교육환경개선, 교원인사의 공정성, 교장공모제, 새 교육과정 등 8가지이다.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
치는 편파적이라 할 것이다. 무

상급식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다수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다른 시도지사 후보의 TV토론회에서도 주제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무상급식 원조'인 김성곤 후보에게만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구나 선관위 주체 토론회는 교육청 후보가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돼 있다. 무상급식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의제선정 '반드시조사회' 74.8%의 득표인 "예산지 토론 주제로 선정돼야 한다"고 답한 의제이다. 그런데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67.3%의 지지율 받은 교육감공약도와 62.6%의 지지를 받은 교직원총회를 포함시키면서도, 무상급식은 제외시켰다. 국민의 관심은 물론 자신들이 한 여론조사 결과와 매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결정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아무리 상식과 비상식이 뒤섞인 시대라 하더라도 정도는 있어야 한다.

〈여야 후보들의 노선 및 성명은 본보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진보신당 인천시장 성명서 :

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

진보신당은 지난 25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열리는 지방선거를 보자 초청 MBC TV토론회에 임할 시장 후보 4명이 드문 참석률로 토론회

진보신당은 원내외로 한 후보의
인정할 줄 후보에게 공식요청 했으
나 유독 송 후보만 이를 거부하거
다고 전해 왔다.

송 후보 측은 진보신당 김삼배
후보는 있지만 후보선정에는 백
보좌는 물론이지 않겠다는 것이었

다. 대외 경제민주화 백서부 후보가 총 후보에 대해 지난 2004년 8월 1일 임종석씨-조인동 당시 임원추진단 385명은 5명도 베트남을 방문해 대기업으로부터 로비·성직과 의혹을 밝혀내는 요구했다. 이어 내한 시기와 저당방제할 약속한 바

음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장도 타당성이 없었다.

1. 송 후보의 논리로 따져본다.
유호준씨는 한나라당 입후보로
자기는 1999년 6.3 직선제 때
후진후보로써 100만정착금
1천을 받아 지금 1,000억이 수
단 1억 원의 자금을 받은 것을
지 내음을 받은 적자만 1백억
원(+)이 돼보았는 것이다.
이제 내보 유호준씨를 고치라
송 후보가도 요구에 대해 무엇
해서서 아니냐 반박했다.

속 후난의 논리라고 보 후보
보도 전제전제를 뜻한다. 안 후보
이 예 모순을 거부하니까 년
차면서 각 후보는 임의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심변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것

그야말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
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다
른 얘기로 역전시키는 것을 원하는
데 이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표백은 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이다. 다만 중도보궐이 아니라 상
하원의 장대한 교섭체결 경우나
는 표백 권역이 크습니 아님만
있을 뿐이다.

송 후보는 이런 것들에 대해 인심속에서 확실한 선전이냐 하는 질문에도 자못 고민해볼 만치 못했다고 유권자들에게 사보초하 하지 않았다. 송 후보의 주장대로 유권자의 양심과 자열에서 정복의 열매는 것도 기대할 만치 시장을 쫓아다니는 권익을 추구한다.

2. 백 주브 카와 티프남 실 쥘과
와 대가인 르네 오희에 대해

“사실 프랜차이즈는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프랜차이즈라고 하면 강 건너 초처럼 세워진 뒤 위아래로 도둑어 닳듯하고 자신이 아니냐고 브로커에게 다짜서 경매하 불매 후회브의 잘못을 남방에 앞장 잡았어 전스안어 이름 후미하고 대박하구 그런 것도 모자라 이거야 안 모는 거냐고

도와, 이따저러 해서 꼭 보자고 사서들고, 흔적성질을 향하고 있는 것이요, 조그만 한방 한방 한방고 있다. 이걸 사서들러 가지고 있는 것도, 도두지 아파할 수 없는 중증이다.

백. 호근의 의뢰에 사서들려면 유서는 약간 시도하는 것이 있고, 백. 호근과 사서들고 나서 흔적성질을 향하고 있는 것이요, 조그만 한방 한방 한방고 있다. 이걸 사서들러 가지고 있는 것도, 도두지 아파할 수 없는 중증이다.

대원 들어가는 것은, 조그만 한방 한방 한방고 있다. 이걸 사서들러 가지고 있는 것도, 도두지 아파할 수 없는 중증이다.

송 후리가 안 후브에게 주었다.
 눈사람 번복해 4차 보문을 부신다
 된 것은, 운변자들에게 열려라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 특별히 유
권자를 보호하기이다.

지난 5월 20일과 21일 뉴시스가
사들 50여 명을 통해 전국각지 관제
지는 "전국각지 관제에 맞게 TV로
를 해야 한다"는 "열을 열거하"의
출판한 것은 후보들의 TV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전 저의 2011년 10월 11일
은 수정하는 무시하는 것이
이것들이 아니라, 더욱이, 이
경사 2011년 10월 11일
임종 2011년 10월 11일

한나라의 안창수 시종도 공자이다.
 그의 후손은 토굴로 합치 동여서를
 찬란히 정한 기온 내에 저축하지
 않았다.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신당 김성이 후보를 부활한 3
 자 후보자를 후보로 뽑아야 한다.
 그런데 김씨가 4자 보전권을 주장

· 두 후보가 드브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창하 후보는 참석을 거부

자, 이 건조 중독 회복음의 조제
환여용 통해 사탕냄새가 들끓어 온
책의 쪽을 빌려주자고 하였고 3차
보통까지 정해해 보았다. 환여하
다는 의사를 제 때 받아지 않은 후
보조지 보위하야 한다든 여자하
점 원치 않고, 결과적으로 3차 보통
제일 고수하야 마땅하다

이것은 정식으로 군소정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군소정당에 유력자들이 총 후보를 붙여달라는 의도가 있는 것은 유채현 전직이장이라는 관원인 남도다.

한 후보에게 자비를 못하게 하고 병병비 어찌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 군소 정당을 해버리는 것이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총 후보에게 밝히라고 일언지과다. 이 자들의 잘못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프론트인 논리적이 보충을

기사게보 광고

은 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확실한 필증이 있으
면 밝히고, 없으면 더 이상의 의혹
제기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지 말
아야 할 것이다.

선언으로 본래가 있다.
토목학 한서 통사서를 선관에게
정한 한서 제 제출하지 않은 채
보는 결사처가 없었다는 의사를
한 것이므로 배후라는 것이 아닌
선관으로 보아 한서 정할때 불구로
그것으로는 이해되는 뜻과 조종
여러한 상을 아들은 여지 돈의
선관정당을 대려하는 것처럼 국
선 검거자임을 보므로 마저 격
관 조작을 거듭한다.
선관정당도 참여시켜 유권자들
의 양심적 선출을 위해 제1회
시정당 선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관공로 후정관 선관정당을 포함
본인의 집합 시정당 선출을 관
는데 이용한다 것이다.

813-6699

물론 자신들이 한 여론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선거사무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아무리 상식과 비상식이 뒤섞인 시대라 하더라도 정도는 있어야 한다.

진보신당 인천시장 성명서

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

진보신당은 지난 25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지방선거후보자 초청 MBC TV토론회에 인천시장 후보 4명이 모두 참석해 토론회를 개최를 원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 안 후보와 민주당 송 후보에게 공식요청 했으나 유독 송 후보만 이를 거부하겠다고 답해 왔다.

송 후보 측은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는 되지만 흑색선전하는 백 후보와는 토론하지 않겠다는 것

이었다.

다만,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가 송 후보에 대해 지난 2004년 8월 15일(광복절)~20일 당시 열린우리당 386의원 5명과 베트남을 방문해 대기업으로부터 로비·성접대 의혹을 밝히려는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도 타당성이 없었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상승)로부터 2010년 5월26일자 14면 '무상급식 TV토론기회조차 박탈', '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교육감)와 관련, '특정후보자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 및 저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시장 선거와 관련 '인천시장 후보자 TV토론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후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특정 정당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 것은 해당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알려왔습니다.

2. 경고

의 결 번 호	2010지선4(자심)
언 론 사	(주)뉴스저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백상빌딩 6층 대표이사 박 상 민
심의대상기사	뉴스저널 2010년 2월호 108~109면 『강한 추진력의 서울 시민 참 대변인』 및 110~111면 『실물경제 전문성 살려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끌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객관적 기준 없이 후보예정자인 현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선별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의정활동 성과와 학력·경력 등을 여러 컷의 사진과 함께 과도하게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백방으로 뒀던 결과,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후략)

강한 추진력의 서울 시민 참 대변인

이지철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상임위 예산심의시 불요불급한 예산 1백억원을 삭감하여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 예산 등으로 반영하여 주목을 받았다.

예산안 심사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회안정망 차원의 공공일자리를 더욱 늘려가야 한 다며 경기침체와 내부수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 다.(중략)

한편, 이지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특위활동을 펼쳤다.(중략)

이 위원장의 지역구인 서울강동은 서울 동부권의 관문이며 중심지역이면서도 경제활동 규모나 교통인프라 측면에서 많이 뒤쳐졌던 것이 사실이나 강동이 처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물경제 전문성 살려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끌어

앞으로는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학자금 상황이 한결 여유로워 진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채봉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현행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 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의 시행을 통해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고등교육 및 학비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학자금대여제도가 청년실업의 심화와 더불어 경제적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낭비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후략)

강한 추진력의 서울 시민 참 대변인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지철 위원장



이처럼 서울시의회 행정감정위원장은 상임위 예산 심의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위원을 시급하여 청년실업 등 민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위를 맡겼다.

여간한 길에서 그르면, 교통위기의 여파도 중기 전망이 뒤흔들릴 상황에서 교통부장이 언뜻 서치안전만 내놓은 중공일파에선 더욱 그러기가 쉽다며 잊기엔 한 해 내수물동으로 여기를 갈고 있는 심민 산업부의 새연안에도 세 가지가 있다.

2009년도 일과자의 예산안 심사제안은, 공영기업들은 '작은 시골을 찾아가' 중 8월 8일의 11억 5,400원을 줄은 것으로 하고, 한양여고 설립비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년의 10억 7,200만 원은 증액하여 9억 1,300만 원으로
순증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정보과기3천원, IT
관련제조업에서 50억 원은 삭감하고, 정보노무
생산 PC 보급사업 1억 원은 증액하여 수정가결됐다.

경북도농협은행은 청년인턴 대체 지원 45억 원, 순
돌기를 대폭 늘려내 사업 차입 20억 원, 사출금주거
·도산 육성사업 지원 3억 원 등 모두 133억 2,400만 원
을 금차하고, 영업유니온을 맺었지만 아직 17억 원, 연
비도 5~6억 원에 불과한 지역 1인회 800여 회, 영농
간접비 지원 대상 1만 1천 가구에 1억 3,800만 원 등
·, 82억 2,400만 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수습가점했다.

[illegible]

1000

실물경제 전문성 살려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끌어

서울시의회 채봉석 의원



앞으로의 '다들'은 '조각 화경미화원' 지녀들의 창작을
'향하여' 한편 여유있게 편다.

이 조례안은 원로 3년까지 3년 공직보통공무원 명칭을
3년 거쳐 2년 공직보통공무원 명칭으로 전환하고 상하급
별의 인원으로도 계층 등을 중요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지평을 통해 화경이외의 서자들의 고종교육 및 연방당국을 일기 위해 도입된 학자(金澤)이제노가 청년 실업의 완화와 태평에 정적인 봉양요소가 사출되고 있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여 붓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새해 제약을 위한 의결청동에서는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느꼈다. 신장은 새해

이제는 30여년 가까이 한치음 국고 음금계 기업을 운영해 온 김원환을 불러 김원환을 사모한 의정환을

“저의일은 종종평일이요 때론을 생애로 일평하고 있는
것이고 일과를 태워서도 편히 감수하는 권리와 의무가
중요하였습디다. 따라서 저의직의회는 저를사람들을
위한 기쁨으로 내리치 않은 것은 바로제 참마아 관대
한소원을 기쁨으로 받들어 주었습니다.”

[illegible]

의 결 번 호	2010지선5(자심)
언 론 사	시사매거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31-7 시사매거진 B/D 3층 대표 김 길 수
심의대상기사	시사매거진 2010년 2월호 38~39면 『젊은 정치리더, 변화와 변혁의 중심에 서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서울시의회 의원의 구체적인 의정활동 계획과 정치이념, 경력 등을 인물사진 등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젊은 정치리더, 변화와 변혁의 중심에 서다

살기좋은 명품도시 건설로 옛 명성 찾기 위한

초석 될 터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과 그의 행정부 출범이 크게 이슈화 된 것은 미국정치 역사에 처음을 장식하는 흑인대통령이라는 타이틀 때문이기도 했지만 세계를 이끌어 가는 미국이 선택한 그들의 리더가 너무도 젊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30대의 도지사를 비롯해 20대 여성 초선의원이 지역구의 중의원을 따돌리고 당선되는 등의 파란이 일고 있다. 세계의 정치가 젊어지는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신선한 아이디어와 활동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젊은 리더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키워드를 젊은 인재들의 트인 생각과 과감한 도전정신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젊은 정치지도자 바람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

니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를 타파하고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문화와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류를 타고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만 들고 있다.

동대문구 개발프로젝트 기획으로 지역민들의 삶 업그레이드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계의 블루칩으로 젊은 시절부터 차근차근 정치의 기초를 쌓으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가 차세대 젊은 정치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치이념에 있어서도 남다른 자기고집을 과시한다. 그가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이다. 그동안 이어져오던 권위주의적 태도를 타파하고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 섬김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 고 의원은 이런 자신의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노하우를 발휘하여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최근까지 각종 지역현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

의 결 번 호	2010지선6(자심)
언 론 사	(주)데일리스포츠월드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5 대표이사 윤 정 로
심의대상기사	데일리스포츠월드 2010년 2월 4일자 20면 『행정 달인이 말하는 ‘행복 해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서초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서적 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예정 소식을 전하면서 인물사진을 지 나치게 크게 부각하고 구정활동의 성과 및 자질·능력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하 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행정 달인이 말하는 ‘행복 해법’

정치나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행복 증진에 있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이 30년동안 현장에 서 갈고 닦은 풍부한 경험을 담은 에세이집 ‘행복 디자인’을 펴냈다. 도시행정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박 구청장은 30여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의 해법을 제시한다. 멀게만 느껴지는 ‘행정’의 실상을 39가지 주제별로 정리, 행정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39가지 ‘행정의 실상’ 소개

6일 양재동 서초구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 열려

‘신형 엔진’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추진력이 뛰어난 박 구청장이 인구 43만의 서초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한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화려한 성과 뒤에 감춰져 있던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극복과정도 실감나게 그렸다. ‘행정

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저자는 특히 국내의 수백가지 사례, 그리고 고사 성어와 격언 등을 섞어가며 행정의 정수를 선보이고 있다.

저자는 행복해지려면 머뭇거리지 말라고 외친다. 왜 먼저 변화하고 직원들과 나아가 주민, 기업까지 어떻게 글로벌 정신으로 무장시켜 나갔는지, 또 의사소통과 목표달성에 있어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박 구청장은 서초구의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며 주목을 받았다. 구청 여러 부서를 돌아야만 했던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OK민원센터’를 도입하는가 하면 관공서 영어사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어간부회의를 단행하기도 했다. 기초지자체인 서초구가 왜 영어통용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누에다리’라는 독특한 디자인 다리 건설과 경부고속도로를 덮어 공원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왜 추진하려는지 그 이유도 밝혔다.

저자는 특히 책에서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음 세대의 앞날을 밝게 해준다고 강조한다. 국가간 경쟁보다 도시 간 경쟁이 우선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 전통의 현대적 승화, 의전의 중요성, 선진국의 우수사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갖춰

이밖에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들도 수록했으며, 친구의 중요성, 시련을 이기는 법 등 인생 철학도 진솔하게 이야기 한다.

국수 이창호와 대국일화, 주민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은 사연, 호주 퍼스 여시장의 특별한 인연, 학창시절 여학생들을 사로잡은 노트이야기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읽는 재미를 더한다.

박 구청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보다 나은 방법을

고안하며 명품을 만든다는 자세로 임했지만 때로는 작은 실수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기도 했다"며 "참다운 행복을 디자인하려면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그 어떤 역경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좀 더 행정을 이해하고 행복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디자인’ 출판기념회는 6일 오후 4시 양재
동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다. (주)페이퍼앰씨
펴냄. 312쪽. (02)529-4124

[illegible]

의 결 번 호	2010지선7(자심)
언 론 사	(주)중앙매일 대전 중구 대흥동 513-1 운송빌딩 10층 대표이사 이 병 양
심의대상기사	중앙매일 2010년 2월 11일자 16면 『지역 경제 살리기·新 성장 동력 확충 투자』, 2010년 2월 16일자 16면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전 행정력 집중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청양군수) 후보 예정자인 현 군수의 군정운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동일한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두 번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중앙매일 신년대담〉 최명오 청양군수에게 2010 새해설계를 듣다

지역 경제살리기 · 新 성장 동력 확충 투자

1> 지난 한 해 청양군은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는데 지난해 청양군청을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청양군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군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한 차원 높게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제61회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청양군의 위상제고와 함께 군민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으며 농촌활력과 지역개발, 관광기반 조성 사업 등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준공한 천장호 출렁다리와 칠갑

산 천문대에 연말까지 36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관광기반 사업들이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대한민국 지역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청양고추구기자축제는 세계고추산업 박람회를 병행 개최하면서 지역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는 선진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학당농공단지에는 ADM21을 비롯한 유망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최신설비의 노인요양원을 신축해 품격 있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자원 봉사활동과 위기가구 지원, 이동빨래방 운영 등 주민복지지책을 다양하게 전개해 타 지역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양군은 농촌활력증진사업 전국 우수상, 체육분야 풀뿌리 자치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홍보영상대전 최우수상, 지역협력단 운영 최우수상, 추계도로 정비 최우수상, 작목별 연구회 육성 우수상, 제2회 하모니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끊임없이 찾아내 업무를 개선하고 군정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10년 청양군정의 역점시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양군은 2010년도에 정부정책변화에 부응하며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의 의지를 모아 미래지향적인 견인사업을 적극추진하며 지역경제살리기와 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게 됩니다. △잘사는 농촌, 돈 버는 농촌 건설 △한 차원 높은 주민복지실현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성장기반 구축 △관광·체육·문화시설 확충 주민 삶의 질 향상 △창의와 실용을 중시한 공직사회 구현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군정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획, 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의 적기집행과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군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자율과 참여의 민·관 협치행정 및 민간역량 접목으로 군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61회 충남도민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전환점으로

로 보는 관광에서 체험 체류하는 관광으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판단 외국체험 관광마을조성, 까치 내 관광휴양지조성, 칠갑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 누구나 찾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청양'을 위하여 장기적인 비전으로 계획 수립과 동시에 적극적인 실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를 적극 유치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며 농촌활력증진 사업을 통한 농업비전체제로 지역경제의 소득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타력사업은 파워7 감특화 사업추진으로 지속적인 명품화를 통한 소득화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산업화를 이뤄 지역경제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농업육성을 위하여 농업예산을 올해 대비 22% 증액된 527억원을 편성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감에 군민 모두의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인연령층 사회보장체계 확대를

〈중앙매일 신년대담〉 최병우 청양군수에게 2010년 새해설계를 묻다

지역 경제살리기 · 新 성장 동력 확충 투자

1) 지난 한 해 청양군은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는데 지난해 청양군정을 높이평가했던 어찌 볼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최병우 청양군수: 지난 한 해 청양군은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는데 지난해 청양군정을 높이평가했던 어찌 볼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최병우 청양군수: 지난 한 해 청양군은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는데 지난해 청양군정을 높이평가했던 어찌 볼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2) 2010년 청양군정의 역점시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우 청양군수: 2010년도에 정부정책변화에 부응하며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의 의지를 모아 미래지향적인 견인사업을 적극추진하며 지역경제살리기와 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게 됩니다.



3) 청양군을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해오셨는데 올해의 성과가 대성인 되고 있는데 중점에 추진해오셨던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최병우 청양군수: 올해의 성과가 대성인 되고 있는데 중점에 추진해오셨던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최병우 청양군수: 올해의 성과가 대성인 되고 있는데 중점에 추진해오셨던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4) 청양군을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해오셨는데 올해의 성과가 대성인 되고 있는데 중점에 추진해오셨던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최병우 청양군수: 올해의 성과가 대성인 되고 있는데 중점에 추진해오셨던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최병우 청양군수: 올해의 성과가 대성인 되고 있는데 중점에 추진해오셨던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제4부 심의·의결 사례

도모하는 한편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과 방문진료, 무료건강검진 확대 등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모두의 교육기회 참여
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
다. 이외에 군정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역동
적인 지역개발로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을 마련하
고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
다. (중략)

6) 마지막으로 청양군민들과 독자들에게 전하
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 해는 민선4기의 알찬마무리와 민선5기 출범
기반을 구축하게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에 대
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를 믿고 청양군수라
는 중책을 맡겨 주신 군민 한분 한분을 생각하며
쉽 없이 달리겠습니다. 우리 청양의 미래 가치는
밝고 높습니다. 군민 모두와 함께 반드시 청양발전
을 이루어 내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매사에 임하
겠으니 군민 여러분께서도 군정에 대해 주인의식
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힘
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
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전 행정력 집중할 것”

2010 새해설계

김시화 청양군수

“청양군은 2010년도 역점사업으로 ‘잘사는 농촌, 더 나은 농촌 건설’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계획입니다” 김시환 청양군수는 “정부정책변화에 부응하며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의 의지를 모아 미래지향적인 건안 사업을 적극추진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와 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 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잘사는 청정건설에 매진 할 것이라 말했다.

◀최지우>



▲ 김시현 청양군수

[illegible]

▲청양군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자원세
력으로 벤치마킹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의 특징은?

이런 우려에 지난년부터 신안군계는 자
유권 후보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일본 고령자 대량 사망 사태
성당에서 장례받은 4명의 장례가 끝나고
연간 장례 인원도 10만 개를 넘는다

2015년 7월 초 일본 도쿄에서 한 여성이 자살해 숨진 후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에는 4명이 참석했다. 장례를 치른 후 장례식장에 있던 4명의 고령자도 잇달아 사망했다. 장례식장에 있던 고령자도 잇달아 사망했다. 장례식장에 있던 고령자도 잇달아 사망했다. 장례식장에 있던 고령자도 잇달아 사망했다.

사실상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이 시기의 주요 활동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지원,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정돈하는 등의 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이 시기의 주요 활동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지원,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정돈하는 등의 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이 시기의 주요 활동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지원,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정돈하는 등의 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이 시기의 주요 활동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지원,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정돈하는 등의 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 시기의 주요 활동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지원,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정돈하는 등의 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시기의 주요 활동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지원,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정돈하는 등의 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이 시기의 주요 활동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지원,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정돈하는 등의 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이 시기의 주요 활동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지원,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정돈하는 등의 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0년대 후반부터 2030년대 초반까지, 이 시기의 주요 활동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지원,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정돈하는 등의 일로 집중되어 있었다.

[illegible][illegible]

대당 = 최명오 청양주재 극장

▲지난 한 해 청양군은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는데 2009년 청양군정을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 까요?

[illegible]

가 있다. HR 정책의 실효성 또한 중요하다. A사의 HR 정책 실효성 평가는 4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경영자의 인식과 의지, 둘째, 인사담당자의 인식과 의지, 셋째, 인사담당자의 교육수준, 넷째, 인사담당자의 업무능력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차원에서 평가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교육수준과 업무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경영자의 인식과 의지, 인사담당자의 인식과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HR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인사담당자의 인식과 의지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외국채권 조달다툼조심, 하반기 관행추방

[illegible]

▲ 청양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인데요

[illegible]

7월7일은 ▲농업인 연수가 평균비 저축
450명 9만5천원 ▲농가도우미 45명
연봉 35명 7만6천원 ▲농촌인 자매 학자
지원 교육비 특약결정 400명 3억4천원
등의 사업을 시행해 계획이며 농촌인련
과 관련 부처에서 매년 동력 부족을 해
고에 공방이출생해와 농업생산성향 등
상하·지 2억원의 예산 운영기 계획사
는 추진계획이다. 또 12일에는

$\frac{1}{\sqrt{2}} \begin{pmatrix} 0 & 1 \\ -1 & 0 \end{pmatrix} = i \sigma_y$, $\frac{1}{\sqrt{2}}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 \sigma_z$, $\frac{1}{\sqrt{2}} \begin{pmatrix} 0 & 1 \\ 1 & 0 \end{pmatrix} = \sigma_x$

의 결 번 호	2010지선15(자심)
언 론 사	(주)전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 대표이사 유 춘 택
심의대상기사	전라일보 2010년 2월 11일자 14면 『오늘의 전북인 ‘독심의원’ 김명지 전주시의원 의원 “주민복지·전주발전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주시의회 의원) 후보 예정자인 현 시의회 의원의 철학, 의정활동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 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오늘의 전북인 ‘독심의원’ 김명지 전주시의원

“주민 복지·전주발전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전주시의회 재선의원인 김명지의의원(우아1, 호성동·사진)은 의회 안팎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독심의원’으로 통한다.

제8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지낸 김의원은 지난해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의정활동에 더 많은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지역구 주민들의 복지와 개발을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며 특유의 순발력과 치밀함은 물론 리



오늘의 전북인 ‘독심의원’ 김명지 전주시의원

“주민 복지·전주발전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전주시의회 재선의원인 김명지의의원(우아1, 호성동·사진)은 의회 안팎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독심의원’으로 통한다.

제8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지낸 김의원은 지난해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의정활동에 더 많은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지역구 주민들의 복지와 개발을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며 특유의 순발력과 치밀함은 물론 리더십까지 갖춰 많은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전라선복선화 작업과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로 활동하면서 그는 공시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정을 발코 뛰고 있다.

또한 전주시가 추진하는 아트플러스 조성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나름의 신조를 밝혔다.

곧 주민을 반기고 주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

위한 정관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상대적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8지구 도심 공동화 대책을 시에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 주민들 편에서 활발한 의정

그의 지역구인 우아동과 호성동은 도농 복합지역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는 전주 중부권 개발에 분주하다. 35사단 이장에 따른 호성동지역과 연계한 북부권 개발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향후 전주권 광역도시 도약을 위한 종합터미널의 전주권 인근 이전과 관련, 버스와 철도를 연결하는 종합 교통망이 필요하다는 주민 편의에 맞춘 전주시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의원 임기 5개월여를 남겨 둔 그는 “지난 8년에 동안 주민들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에도 주민 복지와 전주발전 위해 모든 노력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희성기자·kns@

더십까지 갖춰 많은 분야에서 빛을 발휘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전라선복선화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로 활동하면서 그는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고 있다.

또한 전주시가 추진하는 아트폴리스 조성을 위한 경관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상대적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6지구 도심 공동화 대책'을 시에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 주민들 편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나침의 신조를 밝혔다.

곧 주민을 받들고 주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것.

그의 지역구인 우아1동과 호성동은 도농 복합 지역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는 전주 동부권 개발에 분주하다. 35사단 이전에 따른 호성동지역과 연계한 북부권 개발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향후 전주권 광역도시 도약을 위한 종합터미널의 전주권 인근 이전과 관련, 버스와 철도를 연결하는 종합 교통망이 필요하다면서 주민 편의에 맞춘 전주시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의원 임기 5개월여를 남겨 둔 그는 “지난 8년여 동안 주민들을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에도 주민 복리와 전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9(자심)
언 론 사	(주)대한매일신문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 대호빌딩 신관 402호 대표이사 김 기 수
심의대상기사	대한매일신문 2010년 2월 9일자 16면 『서민배려와 원칙이 있는 행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성북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재임 중 구정활동 성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를 인물사진 및 4컷의 관련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민배려와 원칙이 있는 행정

지하 경전철 유치 기억남아 ‘역동적 발전 이미지’ 제고할 것 민생안정 재정 조기집행 ‘총력’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희망근로,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에 지난해 44억 원보다 2배 많은 87억 원을 투입한다.

서 구청장은 평소 리더가 될수록 겸손한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하나의 크고 작은 정책들로 이를 보여준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

- 이번 민선 4기 임기 중에 가장 보람있었던 일을 꼽아주신다면.

▲ 지역의 교통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임기 중에 잇달아 결실을 맺게 된 것이 큰 보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성북구는 구릉지역이 많고 또 대규모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적인 도로 확장이나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7월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제가 서울시에 처음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결과, 분당선을 연장하는 장위지역 지하경전철 유치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 밖에 우이-정릉-신설 간 지하경전철사업도 2008년 10월에 착공이 됐고요.

장위지역 지하경전철 유치의 경우,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이디어를 내 여론을 조성하며 꾸준히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예산 1조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무척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1년여 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실을 본 동(洞) 통폐합도 기업에 남습니

다. 30개였던 동을 20개로 대폭 줄였는데요, 단순히 동의 개수를 줄였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복지공간으로 주민들에게 그 결실이 구체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제 임기 중에 '불량주택이 많은 낙후지역'이라는 성북구에 대한 고정관념이 '서울에서 개발이 가장 역동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보람을 느낍니다.

- 올해 구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은

▲ 2010년은 성북의 또 다른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또한 “2010 성북비전”을 완성하고 “2020 성북비전”을 마련해 새로운 성북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태도시 성북의 중심축이 될 성북천과 정릉천 복원사업은 올 상반기까지 모든 구간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서경로, 한성대진입로, 성신여대진입로 확장공사를 금년 중에 완료해 인근 교통문제 해소하고 길음·정릉 뉴타운과 장위뉴타운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 고품격 주민 행복공간으로 조성하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지역특성이 감안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디자인해 나가겠습니다. 성북동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전통체험

지대를 조성하고 주민의 사랑을 듬뿍받고 있는 락예술무대는 성북구의 대표적인 예술무대의 장으로 더욱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다문화 음식축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성북다문화빌리지 센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외국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이다.

이미 착공된 우이~정릉~신설동 간 지하경전
철사업에 이어 앞서 말씀드린 종암~월곡~강위지
역을 통과하는 지하경전철 동북선도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버 세대에 활력을 드리고 있는 성북구민의
실버남성요리교실과 실버모델교실도 더욱 내실있
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후략)

[illegible]

의 결 번 호	2010지선32(자심)
언 론 사	(주)내외엔이더블유에스(내외일보)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45-51 광장빌딩 4층 대표이사 박 길 덕
심의대상기사	내외일보 2010년 2월 10일자 16면 『오원석 총장, 통합시 동북아의 ‘성장동력’ 만들겠다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란 가능성을 선택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통합 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한 특정 후보자의 출마의 변, 시정활동 계획 등을 여러 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오원석 총장, 통합시 동북아의 ‘성장동력’ 만들겠다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란 가능성을 선택했다”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립 거창대학 오원석 총장이 마창진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해 통합시인 마창진 초대 시장 자리를 놓고 박완수 창원시장, 황철곤 마산시장과 함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마창진 통합시장의 출마를 선언한 오원석 총장이 밝힌 출마의 변을 들어봤다.

도립 거창대학 오원석 총장이 8일 마산시 구암동 소재 국립 3.15 묘지를 방문해 분향한 뒤 참배

하고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통합 마창진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총장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21세기의 새로운 10년을 맞았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둔고 앞날에 대한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창진의 통합으로 새롭게 비약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와 기대를 더욱 갖게 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중략)

끝으로 오 총장은 “자신이야 말로 경험, 이론, 정책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지방자치의 전문가이며 통합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끌어올릴 실력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며 피력했다.

마산 출신인 오 총장은 마산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특채시험을 통해 경남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남도 공보관, 거제부시장, 농수산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도정 요직을 두루 거쳐 정책과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원석 총장, 통합시 동북아의 '성장동력' 만들겠다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란 가능성을 선택했다”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립 거창대학교 오원석 총장이 마창진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해 통합시민 마창진 초대 시장 자리를 놓고 박완수 창원시장, 황철곤 마산시장과 함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창진 통합시장의 출마를 선언한 오원석 총장이 밝힌 출마의 변을 들어봤다.



오우석 편찬이 비결전 시절 출판 기획위원을 맡고 세장 출판에 입사했다.

노병 거창대의 요양소 총장이 8일 파견지 구암동 소재 극원 315 묘지내 봉분에 안장한 뒤 화해하고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크리스챤센터에서 열린 마장전 시종 참가를 공식 선언했다.

오종장은 “광복 직후에 2000년 21세기”의 새로운 100년을 맞았다. 민족 최대의盛事 ‘삼’을 앞두고 앞날에 대한 밝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다. 민족 전체는 비장함과 절망으로 차곡차곡 비아하는 역사적인 순간의 영도(영도)에 임하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다.”고 종장의 말을 밝혔다.

또 그는 “대한정 물품은 대일본제국에 속해있는 시민의 사물이니 가장 보편적인 유통방법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어떤 상점에 행을 하는 것에 따라 물품의 방류로 질을 보장할 것이며 화폐와 통일의 상징이다”¹⁶⁾ 이 제 법은 많은 주한민들의 호응을 얻어 곧바로 제정된다는 자는 자라 간혹은 반박을 취소하고 통합시의 역량을 확대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제정된 상을 신장시켰다”고 말했다.



노원석 총장이 취임 315 날에: 영국에 생애마크 두네

존재의 본질을 오히려 부정하고, 사람을 행동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경관의 이해를 전하는 사람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사람으로의 역할 전환이다. 또 영웅의 몰락에서 과거의 사회정착에 대항하는 지도자가 아닌

리테일의 위기를 제지하고 발전을 돕는 수 있는 자산채권 세트업 인본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전 봉환시에 대한 비전에 대해 오 율흥은 "봉환사를 대령양을 향해 일민 등복에 시대의 절친거지 도시로 만들어 사색이 모이고, 자상이 노아고, 가을이 흐르는 청정 도시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여는 봉환시와 문화·예술·교육·관광도시, 첨단산업과 청정도시로, 미래를 선언·경제·관광도시로 부흥발전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오 총장은 창원, 마산, 진해 각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비전을 밝혔다.

창원을 동북아 경계권 중심지역으로

한재 "형은 최단시간과 병설의 증진책으로 중국과 인도,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제력 우위 확보를 위해 정보·기술·문화가 결합한 기술융합형 전략산업과 다자간협력, 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은 더욱 개발과 통틀어 경제력의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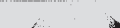
타산을 행복하 주거 중심도시로

수업내용에 기초한 대안적응수업과 문제해결, 프로젝트, 협력적 학습활동의 도입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위와 같은 학습 활동을 도입하는 것은 100%의 수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호튼의 수업에 영구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영구적인 단점을 보완하는 학습 활동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진해군 항만물류의 중심도시로

마지막으로 “전희는 동국사 문헌연구의 중심도서로 판각했다”며 아울러 “오늘에 해당하는 조선·한국유언으로서 김충현을 일컫는 동산시의 영조원 어록을 구출할 것이다. 개항과 조선이 관영을 이루는 국경적인 도서, 평안도 문헌을 비롯하여는 서관들의 도서로 판각했다”고 발간방향을 적었다.

오 총장은 북한서 정치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로 통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행동도 시·지속적으로 사회개혁에 대한 공론화 일익을 담당. 결국, 조국 통일과 경쟁할 수 있는 「비판제도」 확립, 불명확하고 침묵장면 제도를 바로 사용고, 사민(의) 도시 인민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경제주체의 취여 공생체, 대대적인 외교의 정보도시를 건설하 자란한다(통일상의 새로운 보리평을 만드는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 black and white portrait photograph of a man with dark hair, wearing glasses and a suit with a tie. He is looking slightly to his left with a serious expression. The photo is set against a light background and has a thin black border.

또한 "농카시"는 정책과 농민을 잇는 연결로
자랑행진 전문인구교로써 변화와 개혁, 권익을 위
해 농민의 이익을 수호하며, 농민에게서 농민의 이익을

한 우물로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삼강인공의 철학 '하루에 한 가지 할 일'을 지역사회의 청 원공약, 자신과 같은 꿈을 지닌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경영의 핵심으로 연결했다.

한반도 최고의 도시로 꼽아준다는 신뢰와 보증을 갖추고 있는 인성이다'라 피력했다.

대신 출신이요, 유 공장은 거친고려 왕조(高麗)의 종언하고 공주府 牧宰(牧宰)를 통해 정난도(定南道)로 옮겨 감치(監止)에 임명되니, 정난도 공판은, 거제(巨濟)진, 동소산(洞所山)정, 자지령(紫地嶺)정 등 조영(造營)을 두루 관여(管與)하여 군역을 거듭받았다는 평가는 맞고 있다.

글/이현수 기자
사진/이진희 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35(자심)
언 론 사	수도일보 주식회사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5-6 석산빌딩 5층 대표이사 임 승 수
심의대상기사	수도일보 2010년 3월 8일자 16면 『살기 좋은 친환경 거주지 만들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양평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와 향후 시정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살기좋은 친환경 거주지 만들기

다음은 김선교 군수와의 일문일답니다.

- 최근 친환경 주거지로 양평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렇다. 양평이 수도권에서 친환경적인 전원생활 하기에는 최적이다. 또한 물이 좋고 공기 좋고 사람살기 제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전원지로 생각하고 많이 이사를 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한 시간 내에 서울을 도착할 수 있는 통근거리이기 때문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난해 말 용문역까지 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울 진입이 1시간 이내로 가까워 졌으며 지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 여러가지 이유 중 서울과 가깝고 중앙선 복선이 개통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개통효과가 있는 지.

지난 해 12월23일 개통돼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지만 전철 개통이후 양평역과 용문역의 경우 1일 평균 6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개통 전보다 이용객이 2~4배 가량 늘었다.

매일 코레일에서 통계숫자가 나오고 있다.

또 역에 놓이는 관광객자 및 양평소식지가 금방금방 동이 날 정도로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으며 전통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택시, 식당영업 부분의 매출액이 30~40% 가량 크게 늘었다.

또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용문산을 정점으로 등산객이 많이 늘었고 65세 이상은 전철요금에 무료다 보니 연세드신 등산객들도 많아졌다.(중략)

-친환경 주거지로 주목받는 양평이 중부내륙고속도로나 제2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두 세 곳의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더 생긴다는데,

우선, 2012년 개통예정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현재 옥천면에 시공중인 양평IC가 강박 산악지역과 수변구역에 위치해 개발가능지가 부족하고 향후 개통시 국도6호선의 교통정체가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개발가능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고 소통이 원활한 양평읍 시가지와 직접 연결되는 강상 IC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설치를 해야 양평읍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통과할 수 있으므로 교량이 하나 신설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사업비는 130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우리군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해

의 결 번 호	2010지선43(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전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47 전주일보빌딩 7층 대표이사 임 용 택
심의대상기사	전주일보 2010년 3월 4일자 16면 『‘명품 홍삼’ 진안 발전 힘을 더한다』, 2010년 3월 8일자 16면 『차별화된 ‘명품 홍삼’ 국내시장이 좁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안군수) 후보 예정자인 현 군수의 인터뷰 및 역점 추진사업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유사 내용의 기사를 두 번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명품홍삼’ 진안 발전 힘을 더한다

진안은 예로부터 산고수장(山高水長)의 고장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자연을 가지고 있다. 진안 인삼은 다른 지역보다 특히 향이 진하고 향암효과에 탁월한 사포닌 성분이 높다. 생산량은 전국 인삼의 7.9%다. 인삼은 수삼으로 판매되거나 홍삼으로 가공되어 판매된다. 연간 수삼판매를 통해 42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홍삼가공을 통한 소득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은 홍삼한방산업을 진안의 미래를 열어갈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있다.(후략)

소비자 신뢰가 해외시장 공략 성패 좌우

송영선 진안군수는 진안 홍삼의 해외시장 공략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척도를 소비자의 신뢰로 꼽았다.

그는 “물량 공세를 앞세운 미국산과 중국산 홍삼에 밀려 국제무대에서 한국 홍삼의 위상이 지난 1990년대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진안 홍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군수는 신뢰를 얻는 방안으로 진안 홍삼 명품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총사업비 66억원을 들여 최근 문을 연 홍삼연구소를 통해 고기능성 홍삼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인삼농사와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품질인증시스템을 도입해 인삼밭에서 소비자까지 판매되기까지의 모든 이력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며 표준화된 인삼을 생산해 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홍삼·한방산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진안 홍삼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무공해친환경재배방법 확산, 홍삼가공기술 표준화 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 군수는 “한국 홍삼이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에서는 고려인삼을 위조해서 판매할 정도로 고려인삼의 명품 이미지는 여전히 강하다”며 “국제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 홍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별 기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명품홍삼’ 직간 발전 힘을 더했다

진안군 의료복지 산보수향 사업추진단은 고령화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가진 진안군에, 진안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삼가공으로 연간 1000억 판매
진한향·사포닌 함량 높아 전국명품
홍삼·한방산업 메카 도약 가속도



진안군은 지난 2014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진안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2014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진안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 터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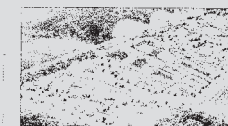
송영선 군수



소미자 신뢰가
해외시장 공략
성패 좌우

진안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 의료복지 산보수향 사업추진단은 고령화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가진 진안군에, 진안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별화된 '명품홍삼' 국내시장이 좁다
(전략)진안 홍삼 및 특산품의 중국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달 26일 신형군 중국 선양총영사 일행이 진안군을 방문해 송영선 진안군수와 만나 진안 홍삼과 특산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번 방문은 진안군이 지난 1월 선양총영사관

의 도움을 받아 선양에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선에 지사장)을 설립하고, 진안홍삼 홍보관 개관 및 중한 웰비테크 연구개발 세미나를 개최한 데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송영선 진안군수는 "진안 홍삼과 김치 등 지역 특산품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선양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53(자심)
언 론 사	(주)강원도민일보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7 대표이사 안 형 순
심의대상기사	강원도민일보 2010년 3월 4일자 19면 『속초와 동우대학이 살 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원도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도의회 의원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속초와 동우대학이 살 길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는 사자성어에 맞는 일이 강원도 속초와 원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원주시민에게는 달콤한 꿀로서 원주 문막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속초시민에게는 배속에 칼을 빼 속초시민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속초 동우대학은 1981년 개교할 당시 시유지 5만 4900여평을 평당 1900여원에 총 1억여원 들여서 학교용지로만 사용하겠다고 하고서는 헐값에 매입하고 이중 토지비의 10%인 817만원을 납부하고 81년 3월에 개교했다.

이렇게 싼값에 사유지를 불하한 것은 속초시민들이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기부하였던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동우대학은 그 어느 사학재단보다 운영이 잘되었고 엄청난 많은 수익을 올렸다. 얼마전 언론에 동우대 전재욱 이사장이 지난 2000년에 동우대의 교비 257억을 횡령해 경문대를 인수하는데 사용하다가 횡령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고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억원의 죄값을

치렀다고 보도됐다. 또 동우대는 현금보유액으로 599억을 통장에 예치하고 있고, 2008년에도 9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우대에서 주장하는 학생 모집이 힘들어서 학교운영의 안 되서 원주로 옮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동우대학은 지난 2005년 1월 21일 주민대책위공동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원주로의 이전 학과는 등록율이 22.8%에 불과한 폐과 직전의 학과만 원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또 2005년 3월 동우대와 주민대책위원장간의 합의서에는 보건계열5개학과 신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동우대학은 주민과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고, 2009년 11월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쟁력 있는 보건계열학과를 모두 원주 문막으로 이전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히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속초시민들은 동우대학에 무한한 열정과 사랑을 보내왔다. 교육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비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기부받다시피한 땅을 매입해 교육장사를 하고 이 돈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여기에 더하여 속초 시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된단 말인가?

동우대학이 원주로 이전하게 되면 속초 시내 거리에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고 지역경

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동우대학의 빈자리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이며,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공동화시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속초시와 강원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이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우리 강원도는 중앙정부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성토하고 비판하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도

시계획위원회에서 동우대의 원주이전도시계획 요구를 수용할 시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의 외침은 강원도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속초시민은 강력히 원한다. 당초 합의한 대로 보건계열학과는 속초에 남겨 두어야 한다. 이것만이 속초가 살고 동우대학도 사는 유일한 길이다.

기 고



김 시 성

도의원(속초)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는 사자성어에 맞는 일이 강원도 속초의 원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원주시민에게는 날카로운 칼로서 원주 문막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속초시민에게는 배속에 칼을 꽂아 속초시민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속초 동우대학은 1981년 개교한 당시 시유지 5만4000여평을 평당 1900여원에 총 1억여원 늘어서 학교용지로만 사용하겠다고 하고서는 할값에 매입하고 이중 토지비의 10%인 817만

원을 납부하고 81년 3월에 개교했다.

이렇게 싼값에 시유지를 불하한 것은 속초시민들이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입념으로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기부하였던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동우대학은 '아! 사학재단보다 운영이 잘되었고 엄청난 많은 수익을 올렸다. 얼마전 언론에 동우대 전재욱 이사장이 지난 2000년에 동우대의 교비 257억을 횡령해 감봉대를 얻

책익공동위원장에 보낸 공문에서 원주로의 이전 학과는 등록율이 22.8%에 불과한 배과 직전의 학과만 원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또 2003년 3월 동우대와 주민대책위원장의 합의서에는 보건계열5개학과 신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동우대학은 주민과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고, 2009년 11월 19일 기자 회견을 사칭해 강행력이 있는 보건계열

판단 말인가?

동우대학이 원주로 이전하게 되면 속초시에 가리에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고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동우대학의 빈자리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이며,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공동화시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속초시와 강원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이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우리 강원도는 중앙정부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성토하고 비판하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우대의 원주이전도시계획 요구를 수용할 시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의 외침은 강원도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속초시민은 강력히 원한다. 당초 합의한 대로 보건계열학과는 속초에 남겨 두어야 한다. 이것만이 속초가 살고 동우대학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속초와 동우대학이 살 길

수하는데 사용하다가 횡령혐의로 장악 1년6개월을 구형받았고 집행유예 2년에 벌금10억원의 죄값을 치렀다고 보도했다. 또 동우대는 현남보유액으로 599억을 통장에 예치하고 있고, 2008년에도 9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우대에서 주장하는 학생 모집이 합법에서 학교운영의 안 돼서 원주가 옮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동우대학은 지난 2005년 1월21일 주민대

학과를 모두 원주 문막으로 이전하겠다고 낭랑하게 말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속초시민들은 동우대학에 부당한 열정과 사랑을 보내왔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비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거부받다시피한 땅을 매입해 교육장지를 하고 이 돈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여기에 더하여 속초 시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짓밟아도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54(자심)
언 론 사	(주)새전북신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청1길 6 현대빌딩 4층 대표이사 박 명 규
심의대상기사	새전북신문 2010년 3월 8일자 11면 『전주 열린 시민강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주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주 열린 시민강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평생교육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전주 시민강좌서 인생의 감동 담아가길

학습은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준다는 점에서는 꼭 필요한 삶의 수단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행복과 즐거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학습을 통해 개인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사회는 역량을 키워나가게 된다.

배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스스로 학습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사회는 젊고 건강하기 마련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의 열망이 적은 사회는 구성원의 평균 연령대와는 무관하게 급속한 노화와 쇠퇴에 이르게 된다.

더구나 최근 들어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학습만이 무한경쟁의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간에는 정부의 교육정책도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20대까지의 초기교육 중심에서

인생전반을 아우르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고용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탄력적인 교육환경이 제대로 마련돼야 사회구성원의 안정은 물론이고 국가의 발전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입각해서다.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평생학습과 인재양성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인재 자체가 지역경쟁력의 필수적인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 역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도서관 건립, 평생학습센터 운영, 성인문해·인문교육, 평생학습 전문강사 배출,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된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는 전주시의 평생학습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최고의 저명인사들이 직접 전주를 방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문화·건강·자녀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재미있는 강연을 펼치기 때문이다. 그간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를 통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장관, 강지원 변호사, 김홍신 전 국회의원 등 각 분야의 석학들을 비롯해 전원주, 이상벽, 사미자씨 등 자신

의 분야에서 최고를 이룬 스타 강사들이 전주를 찾았다. 45회에 이르는 열띤 강연을 찾은 시민도 2만5,000명에 이른다.

호기심에 찾았다가 매년 참석하는 열혈 청강생으로 바뀐 시민도 부지기수고 '열린 시민강좌'를 통해 평생학습에 재미를 느껴 전주시가 제공하는 다른 평생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실 바쁜 시정활동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필자 역시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의 열렬한 팬이다.

다양한 정보를 통해 시정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할 수 있고 삶이나 시민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인생의 감동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의 가장 큰 매력이다.

희망찬 새 봄, '2010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도 힘차게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벌써부터 공부의 즐거움에 빠진 시민들과 함께 할 생각에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올해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배우고 때로 익

히는(學而時習·학이시습)' 행복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하며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에 대한 많은 참여와 성원 당부 드린다.

전주 열린 시민강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

기고
송하현 / 전주시청

학습은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은 현대 사회는 꼭 필요한 삶의 수단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행복과 즐거움이 된다. 젊어서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학습을 통해 개인은 자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사회는 역량을 키워나가게 된다.

배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스스로 학습하는 분위기가 짙은 사회는 젊고 건강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의 열망이 적인 사회는 구성원의 평균 연령대와는 무관하게 급속한 노화와 쇠퇴에 이르게 된다.

더구나 최근 들어 고령화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노년화가 심화되면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학습이 노년 생활의 화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근간에는 정부와 교육정책도 취업이나 진학은 위한 20대까지의 초기교육 중심에서 인생전반을 아우르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고령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탄력적인 교육환경이 제대로 마련돼야 사회구성원의 인생은 물론이고 국가의 발전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일각에서다.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평생학습과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현재 자체가 지역경제의 실수직인 위치가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 역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도 도서관 건립, 평생학습센터 운영, 성인문화·인문교육, 평생학습 전문강사 배출,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된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는 전주시와 평생학습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도 많은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최고의 재능인사들이 직접 전주를 방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문화·건강·자연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재미있는 강연을 펼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를 통해 아이부터 노인 부 장관, 삼평군 전 문화관광차장, 강지은 변호사, 감홍산 전 국회의원 등 각 분야의 석학들을 비롯해 김 완주, 이상범, 사마지혜 등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이룬 스타 강사들이 전주를 찾았다. 45회에 이르는 열띤 강연을 찾은 시민도 2만5,000명에 이른다.

호기심에 찾았다가 매년 참석하는 열혈 청강생으로 바뀐 시민도 부지기수고 '열린 시민강좌'를 통해 평생학습에 재미를 느껴 전주시가 제공하는 다른 평생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평생교육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전주 시민강좌에서 인생의 감동 담아가길

다양한 정보를 통해 시정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할 수 있고 삶이나 시민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인생의 감동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의 가장 큰 매력이다.

희망찬 새 봄, '2010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도 힘차게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벌써부터 공부의 즐거움에 빠진 시민들과 함께 할 생각에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올해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배우고 때로 익히는(學而時習·학이시습)' 행복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하며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에 대한 많은 참여와 성원 당부 드린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55(자심)
언 론 사	(주)시민일보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충호빌딩 601호 대표이사 최 정 호
심의대상기사	시민일보 2010년 3월 5일자 7면 『녹색환경 도시를 가꾸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시의원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녹색환경도시를 가꾸자

향후엔 녹색국가를 이룩해야만 세계의 지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녹색은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내용적으로도 선진화 되어야만 선진한국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지구가 급격히 더워지면서 모든 부문에 녹색성장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린스타트 운동이란 조직을 이끌며 환경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5년엔 제주도에 세계환경 보존 총회를 유치하며 선진국과의 환경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정책과 국민의 환경의식 구조를 재조명하며 녹색환경 도시를 이룩하고자 몇자 제안하고자 한다.

녹색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환경 여건이 유럽과 다른 한국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먹는 물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공사를 하는 중에도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

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비료 때문에 발생하는 인을 강 밖으로 처리토록 해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야 하고, 특히, 샛강을 우선 정비하여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먹는 물, 버리는 물을 깨끗이 해야한다.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하수는 고도처리하고, 가능하면 강변 여과수 처리로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 건물, 아파트 등도 중수도 처리를 활성화시켜서 물을 아껴써야 한다.

물은 현명한 이용이 최고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향후엔 업소별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도입해서 버리는 양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전주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2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개인별로 탄소 포인트제를 만들어 세금가면을 해주는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차타고 오신 분과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오신 분과는 차별화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건물도 공공건축물부터 탄소 다이어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연료를 안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LED 조명과 자동차도 적용시키고 향후엔 기름값도 이원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입지규제 방식을 배출규제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 공장에서 해로운 것이 배출되면 규제를 하고, 무해하게 배출이 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수처리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예로, 베트남, 캄보디아,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진출하여 수질관리 및 수질을 정화시켜 주고 있다.

최근 석면, 미세물질 나노, 분진, 라돈 등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어린이의 아토피병, 젊은 여성들의 기형아 출산 등도 여기에서 기인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이러한 해로운 물질을 감시하고, 산업체에서는 무해성 물질을 생산토록 해야 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훌륭한 의사를 육성하여 환경물질 병원을 특별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녹색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녹색을 생활화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 녹색제품의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양성된 녹색지도자가 꾸준히 계몽하고 모범적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한적이고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에너지로 여름철엔 냉동기 역할로, 겨울엔 보일러 역할을 한다. 이것은 안정된 에너지를 갖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투자비가 과다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지열은 금융지원과 지속적인 A/S가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새로운 것만이 있는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실천해 온 것들을 효율적,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천해 나간다면 보다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대국민 홍보를 광범위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민·관·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실천하도록 제언해 본다.

녹색환경 도시를 가꾸자

단 상



구 효 서
경기 광주시의원

많은 녹색국가들이 이미 아란 세계의 지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온다. 녹색을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복지를 포괄하여 내용적으로도 선진화 되어야만 선진화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지구가 급격히 바뀌면서 모든 부문에 녹색성장을 대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린스타트 운동이란 조지를 이끌며 환경대약을 리딩하고 있으며, 2015년엔 제주도에서 세계환경보존 총회를 유치하며 선진국과의 환경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경제에서 시행하는 환경정책과 국민의 환경의식 부조를 제고하며 녹색환경 도시를 이룩하고자 및 자 제안하고자 한다.

녹색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한다.

환경 여건이 유익과 다른 면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다. 하지만 실정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량 수입으로 쓰는 물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공사를 하는 중에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닐배우에 반생되는 인을 감 밖으로 처리토록 해 깨끗한 물을 공급보내야 하고, 특히, 생강을 우선 감비하여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먹는 물, 버리는 물을 깨끗이 해야 한다.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하수는 고도처리하고, 가능하면 강변 여과수 처리로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 건물, 아파트 등도 중수도 처리를 활성화시켜서 물을 아껴 써야 한다.

물은 생명만 이용이 최고다. 양치를 쓰러기 줄여나가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양후에 양소탈로 음식을 쓰러기 줄여나가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양후에 양소탈로 음식을 쓰러기 줄여나가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개인별로 탄소 포인트를 만들어 시간당 면을 해주는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자 타고 오신 것과 차를 타는 차가니 걸어서 오신 분과는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건물도 공공건축물부터 탄소 다이어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연료를 안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LED 조명을 자동적으로 작동시키고, 양후에 건물도 자동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양후에 방식을 배출규제 방식으로 바꾸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 과정에서 해로운 것이 배출하면 규제를 하고, 무해하게 배출이 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수처리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예로, 베트남, 캄보디아,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진출하여 수질관리 및 수질을 정화시켜 주고 있다.

최근 석면, 미세물질 나노, 분진, 라돈 등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어린이의 아토피병, 젊은 여성들의 기형아 출산 등도 여기에서 기인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이러한 해로운 물질을 감시하고, 산업체에서는 무해성 물질을 생산토록 해야 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훌륭한 의사를 육성하여 환경물질 병원을 특별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녹색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녹색을 생활화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 녹색제품의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양성된 녹색지도자가 꾸준히 계몽하고 모범적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한적이고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에너지로 여름철엔 냉동기 역할로, 겨울엔 보일러 역할을 한다. 이것은 안정된 에너지를 갖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투자비가 과다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지열은 금융지원과 지속적인 A/S가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새로운 것만이 있는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실천해 온 것들을 효율적,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천해 나간다면 보다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대국민 홍보를 광범위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민·관·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실천하도록 제언해 본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56(자심)
언 론 사	(주)인천일보 인천 중구 항동4가 중봉로 222 대표이사 박 민 서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0년 3월 4일자 16면 『구도심 재개발의 상생 방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 후보 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구도심 재개발의 상생방안

도시는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해 주는 요소 중의 하나가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이 보다 윤택하기 위해선 도시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을 띠,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다듬어져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인천시 도시정책, 특히 서민들을 한숨짓게 하는 구도심개발은 재논의가 필요하다.

안상수 시장 8년 동안 인천시 도시정책은 송도 국제도시에 집중돼 있었다. 2009년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투입된 25조원의 사업비 중 17조원이 송도국제도시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인천에는 송도밖에 없느냐는 구도심 주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인천시는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220곳의 도시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지정해 일방적이고 마구잡이식 구도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이고 마구잡이식 구도심개발의 문제점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구도심 개발사업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주민은 안중에 없고 시의 일방

적이고 독선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십년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강제 수용 당하고 쫓겨나야 할 형편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인천시는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그 노력조차 진정성이 결여돼 있었다.

둘째, 서민들의 이주대책 없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보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시안적 사고를 갖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수용 당하는 서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은 서민들의 재정착률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하는 서민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삶의 평형적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삶이 존중되면서도 낙후된 구도심을 세계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구도심 개발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구도심개발의 중심은 주민이 돼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이 우선이라는 인본주의적 정책적 사고가 필요하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도시재개발사업이 돼야 한다. 개발사업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터전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수익적 동기에서 출발하면 그 사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구도심 개발방향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구도심 개발은 단순히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고층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짓는 하드웨어적 환경개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고 앞으로 살게 될 주민들에 대한 문화, 복지, 교육, 경제 수준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적 환경개선이 더 중요함을 명확히 인식해야한다. 또한 구도심개발은 계획은 공공이 개발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은 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셋째, 거버넌스형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21세기 행정은 거버넌스 행정이며 행정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키를 잡는 것이다.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유혹에서 벗어나 공공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국가간 경쟁시대에서 도시간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도시의 경쟁력은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을 살리며 국가를 살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구도심 개발은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구도심 개발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 고



유필우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도시는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맛 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해 주는 요소 중의 하나가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이 보다 윤택하기 위해선 도시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을 띠, 인간

적 사고를 갖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수용 당하는 서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하는 서민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삶의 평형적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삶이 존중되면서도 낙후된 구도심을 세계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인거양육의 구도심 개발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구도심개발의 중심은 주민이 되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이 우선이라는 인본주의적 정책적 사고가 필요하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도시재개발사업이 되어 한

구도심 재개발의 상생 방안

의 삶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다듬어져야 한다. 야강은 관점에서 인천시 도시정책, 특히 서민들을 한층있게 하는 구도심개발은 재논의가 필요하다.

인상수 사장 8년 동안 인천시 도시정책은 송도국제도시에 집중돼 있었다. 2009년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투입된 25조원의 사업비 중 17조원이 송도국제도시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인천에는 송도밖에 없느냐는 구도심 주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인천시는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220곳의 도시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지정해 일방적이고 마구잡이식 구도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아래와 동시다발적이고 마구잡이식 구도심개발의 문제점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구도심 개발사업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주민은 나중에 없고 시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십년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강제수용 당하고 쫓겨나야 할 형편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인천시는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그 노획조차 진정성이 결여돼 있었다.

둘째, 서민들의 이주대책 없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보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시안

다. 개발사업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터전을 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수익적 동기에서 출발하면 그 사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셋째, 구도심 개발방향에 대한 분명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구도심 개발은 단순히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고층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짓는 하드웨어적 환경개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고 앞으로 살게 될 주민들에 대한 문화, 복지, 교육, 경제 수준을 어떻게 제고 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적 환경개선이 더 중요함을 명확히 인식해야한다. 또한 구도심개발은 계획은 공공이 개발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은 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넷째, 거버넌스형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21세기 행정은 거버넌스 행정이며 행정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키를 잡는 것이다.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유혹에서 벗어나 공공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국가간 경쟁시대에서 도시간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도시의 경쟁력은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을 살리며 국가를 살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구도심 개발은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구도심 개발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의결번호	2010지선57(자심)
언론사	(주)인천일보 인천 중구 항동4가 중봉로 222 대표이사 박 민 서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0년 3월 9일자 16면 『다섯가지 인간의 질』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 남구의회 의원) 후보예정자 인 현 구의원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다섯가지 인간의 질

이 세상에는 약 68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 중 한반도에는 7천 400여만명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살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웅다웅 다투며 살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대체로 사람들의 질(質)은 다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의 질은 가장 좋은 특질이다.

특질은 자기를 희생해 조국과 민족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위대한 분들이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면서도 인류의 죄를 대신해 목숨을 바친 예수그리스도 왕자의 몸이면서도 인간과 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고행의 길을 걸었던 석가. 온갖 쾌락을 멀리한 채 유학을 정리하고 후배 양성의 길만을 걸었던 공자. “악법도 법이다”고 정의를 내리고 청소년 교육에만 일생을 바친 소크라테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으나 온갖 명예를 마다한 채 아프리카의 무지하

고 몽매한 식민종들을 위해 일생동안 봉사로 일관한 슈바이처.

열여섯 살의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포들의 행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다 잔악한 일제에 목숨을 빼앗긴 유관순 열사.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수 많은 부하들을 살려 낸 강제구 소령 등이 특질의 인간이다.

둘째는 양질이다.

옆 사람이 힘들어 할 때 도와주는 사람, 이웃이 병들고 배고플 때 함께 나누어주고 거들어 주는 사람, 질서를 지키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 겸손하고 염치를 아는 사람들이 양질의 사람이다.

셋째는 범질의 사람이다.

다시 말해 평범한 사람들이다. 내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완수는 하되 나는 나이고, 남은 남이다는 생각으로 자기 본위로 사는 사람이 범질의 사람이다.

네 번째는 저질의 사람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더럽고 추하게 사는 사람, 질서 안 지키고 아무 데나 침뱉고 휴지 버리는 사람, 한 마디로 덜 떨어진 사람이 저질이다.

다섯 번째는 악질인 사람이다.

남이 싫다는데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사기, 강간, 강도, 폭행 등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다시 말해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악질이다.

우리는 다섯 가지 종류의 인간의 질을 생각해 보았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21세기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질의 인간이 되

어야 할까. 자기가 어느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할지, 그것은 각자의 자유이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와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에서 쟁취하는 것이다. 값진 자유는 힘든 싸움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다. 온갖 욕망과 유혹으로 가득찬 이 세상을 살아 나갈 청소년들은 좋은 질의 인간이 되기 위해 값진 노력을 끝없이 계속해야 할 것이다.

세상 思



조봉휘

전 인천남구의회의원

특질은 자기를 희생해 조국과 민족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위대한 분들이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면서도 인류의 죄를 대신해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 왕자의 몸이면서도 인간과 죄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고행의 길을 걸었던 석가. 온갖 패락을 떨친

긴 유관순 열사.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수 많은 부하들을 살려 낸 강제구 소령 등이 특질의 인간이다.

둘째는 양자이다.

열 사람이 힘들어 할 때 도와주는 사람, 아랫이 병들고 배고플 때 함께 나누어주고 거들어 주는 사람, 실서를 지키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

셋째는 자질을 버리는 사람. 한 마디로 덜 떨어진 사람이 저질이다.

다섯 번째는 악질인 사람이다.

남이 싫다는데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사기, 강간, 강도, 폭행 등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다시 말해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악질이다.

우리는 다섯 가지 종류의 인간의 질을 생각해 보았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21세기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질의 인간이 되어야 할까. 자기가 어느 종류의 질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느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할지, 그것은 각자의 자유이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와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에서 쟁취하는 것이다.

값진 자유는 힘든 싸움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다. 온갖 욕망과 유혹으로 가득찬 이 세상을 살아 나갈 청소년들은 좋은 질의 인간이 되기 위해 값진 노력을 끝없이 계속해야 할 것이다.

다섯가지 인간의 질

이 세상에는 약 68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 중 한반도에는 7천400여만명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살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다무어 살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대체로 사람들의 질(質)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의 질은 가장 좋은 특질이다.

둘째 유학을 정리하고 후배 양성의 길만을 걸었던 공자, “악법도 법이다”고 정의론 내리고 청소년 교육에만 일생을 바친 소크라테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으나 온갖 명예를 마다한 채 아프리카의 무지하고 풍매한 식민지들을 위해 일생동안 봉사한 일관한 슈바이처.

열여섯 살의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포들의 행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다 전막한 일제에 목숨을 빼앗

겨 손하고 염치를 아는 사람들이 양질의 사람이다.

셋째는 범질의 사람이다.

다시 말해 평범한 사람들이다. 내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완수하는 하되 나는 나이고, 남은 남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본위로 사는 사람이 범질의 사람이다.

네 번째는 저질의 사람이다.

답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더럽고 추하게 사는 사람, 실서 안 지키고 아무 데나 침

의 결 번 호	2010지선62(자심)
언 론 사	(주)중앙매일 대전 중구 대흥동 513-1 운송빌딩 10층 대표이사 이 병 양
심의대상기사	중앙매일 2010년 3월 3일자 16면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건설에 최선 다할 것” 2010년 새해설계 남상우 청주시장』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청주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의 시정활동 성과 및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건설에 최선 다할 것”

(전략)▲ 올 해에는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등 시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시정 운영방향과 시정목표는?

올해에는 차츰 경기도 회복되어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 2010년은 청주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올해 시정운영 방향은 첫째, ‘활력있는 지역경제 실현’으로 정하고 향토기업 육성과 서

민 경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맑은 고을 녹색청주로 도약하기 위해 녹색수범도시 청주의 강점을 살려 전국 제일의 녹색도시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농상생의 광역기반’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하는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기반을 구축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시민복지’를 구현하고, ‘수준 높은 교육문화’를 이루어 나가겠으며 ‘행복주는 감동행정’을 확산시켜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인 저를 비롯해 1800여 공직자는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 발전에 꼭 필요한 각계각층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시정참여를 부탁드립니다.(후략)

제 4 부 심의 · 의결 사례

의 결 번 호	2010지선63(자심)
언 론 사	(주)중앙매일 대전 중구 대흥동 513-1 운송빌딩 10층 대표이사 이 병 양
심의대상기사	중앙매일 2010년 3월 10일자 16면 『‘대한민국 녹색섬표’ 관광 단양 건설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행정 실천 2010년 새해설계 김동성 단양군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단양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의 군정활동 성과 및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동성 단양군수는 “올해는 민선 4기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군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적성대교가 개통되고,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확정과 구 군부대 이전지 개발 등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마련되면서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건설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해였다.”고 말하고 올해에도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남한강 물길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들의 구상과 아울러 대한민국 녹색섬표 관광 단양, 휴양관광의 진흥과 저 탄소 녹색성장 청정 환경의 조성, 함께하는 감동행정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 밝혔다. 이에 본지는 김동성 단양군수의 새해설계를 들어봤다.

▲ 경인년 새해의 군정 운영의 핵심은?

2010년도 우리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경제 회복을 견인하여 4.0% 이상의 실질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경기도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지방세입은 소폭 감소하여 지방재정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군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금년도,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팽팽하게 조여매어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음악, 유익한 음악을 들려준다는 마음으로 민선 4기 군정목표를 알차게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후략)

제 4 부 심의 · 의결 사례

의결번호	2010지선64(자심)
언론사	(주)중앙매일 대전 중구 대흥동 513-1 운송빌딩 10층 대표이사 이 병 양
심의대상기사	중앙매일 2010년 3월 19일자 16면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으로 성장동력 확보’ 2010년 새해설계 최승우 예산군수』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산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의 군정활동 성과 및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으로 성장동력 확보”

“예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최승우 예산군수는 “그 동안 노력한 사업들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2010년 대충청권 방문의 해와 2011년 예산 방문의 해에 발맞춰 슬로시티 기반조성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항토사와 명품화 사업, 친환경 농산물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인년 새해 예산군정의 역점시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예산군이 노력한 사업들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는 만큼 그 동안 친절과 봉사,

신뢰, 행정을 밑거름으로 쌓아온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가운데 하나는 먼저 황새마을 조성 및 슬로시티 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10만㎡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6월에 유치하여 앞으로 자연환경 훼손으로 멸종되었던 천연기념물 텃새 황새 복원을 통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는 물론 다양한 경제적 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슬로시티 기반조성 사업은 2010년 대충청권 방문의 해와 2011년 예산방문의 해에 발맞춰 중부권에서 최초로 슬로 브랜드를 선점해 1000만명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국내에서 6번째로 가입완료하였고, 올해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명실상부한 슬로시티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조성에 매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예산테크노 밸리, 예산일반산업단지 등 3개 지구와 보령의약전문농공단지 1개 지

의 결 번 호	2010지선66(자심)
언 론 사	시사매거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31-7 시사매거진 B/D 3층 대표 김 길 수
심의대상기사	시사매거진 2010년 3월호 32~33면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힘쓸 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경기도의회 의원의 구체적인 의정활동 계획과 정치이념, 경력 등을 인물사진 등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것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힘쓸 터

“사명에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경제위기에 따른 구성원들의 고용불안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자는 ‘일자리나누기’에 대해 공감할 뿐 아니라 각 기업과 지자체도 고용창출형 워크셰어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는 일꾼들이 있기에 지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만하다.

자랑스러운 세계 문화유산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효의 도시 경기도 수원,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인 수원시는 조선 22대왕 정조 때 제2의 한양 건설이 추진되었던 도시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지역민들의 가슴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차희상 의원은 오랜 세월 지역 돌봄이 역할을 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역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이며 몸소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해야 진정 지역을 사랑하는 의원”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지금의 현실은 다소 불안하고 어렵지만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불씨를 당기는 것은 바로 지역에 터를 두고 있는 지역민들의 몫입니다. 수원시민들이 연대하고 소통한다면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씨가 불꽃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자신이 모르는 것은 잘 보지 않는 끈은 성격,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이루고 마는 열정. 이러한篤심이 있었기에 오늘 날 자신이 있었다고 밝힌다.

차희상 의원은 “열정이 있기에 변화에 적응하고 기본과 원칙을 중요시하며 남보다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확신을 갖고 일했습니다. 지역민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줄 것이라 약속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수원 토박이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지역을 위한 참된 일꾼으로 지역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중략)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로 지역발전 견인

차희상 의원은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체육과 외래교수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경기도의회 6대를 거쳐 현재 7대 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신평초 총동문회장, 수원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자혜학교 후원회장, 아주정책포럼 회장, 수원해병전우회 명예회원, 경기도 태권협회, 국민생활체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6K2FZL), 수원환경운동센터, 녹색환경보존연합회, 경기도환경기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 대한노인회, 스포츄스야구단, 한국B.B.S,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 상임부회장, 경기국학원, 백범정신실천저레연합 공동대표 등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는 것이 차 의원의 열정과 에너지다. 그는 특히 봉사활동에 욕심이 많다.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힘쓸 터

"사명에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경제위기에서 빠른 사회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더 이상 타개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를 준비하거나 참을여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경제위기에서 빠른 사회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더 이상 타개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를 준비하거나 참을여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차희상 의원은 경제위기에서 빠른 사회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더 이상 타개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를 준비하거나 참을여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차희상 의원은 경제위기에서 빠른 사회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더 이상 타개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를 준비하거나 참을여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30년 가까이 국제로타리클럽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장애인, 노숙자, 한가죽부불우이웃돕기 공방방 등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며 의원으로서가 아닌 이웃으로 돌봄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관심이 많은 그는 수원시 자혜(정신지체자)학교 후원회장이기도 하다.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몫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도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립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장애는 신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략)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로 지역발전 견인

차희상 의원은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체육과 외래교수이기도 하다.



차희상 의원은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체육과 외래교수이기도 하다.

차희상 의원은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체육과 외래교수이기도 하다.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의 결 번 호	2010지선67(자심)
언 론 사	(주)강원일보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53 대표이사 이 희 중
심의대상기사	강원일보 2010년 3월 9일자 7면 『원주~강릉 복선전철 당장 결정하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원도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원주~강릉 복선전철 당장 결정하라

요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부가가치 상품이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스포츠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동계스포츠 강국이라던 나라들을 제치고 종합성적 5위에 우뚝 선 우리나라 선수단이 매우 자랑스럽다. 그동안 한국은 쇼트트랙에서만 금메달을 땀기에 어딘가 부족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민적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의 염원도 더욱 높아졌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만의 희망이 아닌 국가적 대사이자 필수적인 과제로서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오는 15일까지 유치신청을

위한 신청도시 파일(비드파일)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2010과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IOC와 약속했던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정부는 2008년 9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은 국가기간 교통망의 중심축으로 여객과 산업물류의 대동맥 효과가 기대되어 선정된 사업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국가기간 SOC 투자는 현재의 경제성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미래의 투자가치로 결정해야 한다”며 미래를 예측하는 장기적 투자를 강조한 바 있어, 현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을 환영했었다.

총 연장 120.46km의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건설된다면 강릉의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 삼척 LNG기지는 물론 동해안권의 연 2,000만 톤 이상의 시멘트 물량 등을 수송하는 국가의 기간 철도망 역할이 기대된다. 부산에서 포항~강릉~원산~나진을 연결하는 한반도종단철도(TKR) 구축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의 연결 시 수도권, 중서남부권 등과 이어지는 등 그 사업효과와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가 ‘단선’으로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

2009년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민간 자 격적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원주~강릉 간 전철 사업은 단선으로 추진될 경우 2조7,832억원이 소요되고 복선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3조4,92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부에서 주장하는 사업비 절감액은 2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주~강릉 전철사업을 단선으로 건설할 경우 완공 10년 후인 2030년이면 용량부족 현상이 발생해 추가 확장이 필요해질 것이고, 그때 다시 복선으로 확장하려면 4조원 가량이 더 소요되어야 한다고 하니 정부의 경제성 명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에 위한 현지실사 시 두 번이나 복선전철로 건설하겠다고 보증하고도 그 약속을 변경하려는 것 같아 국가적 신뢰도

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원주~강릉 간 전철 사업은 반드시 '복선'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비드파일 제출 이전에 확정하여 정부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이 강원도만을 위한 SOC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기간 교통망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도시 파일에 '고속화 철도'가 아닌 '복선전철'로 명기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참가선수단의 오찬에서 "정부와 체육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듯이 '동계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를 기원해 본다.

요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부가가치 상품이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스포츠는 흥성 없는 전장이다'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동계스포츠 강국이라던 나라들을 제치고 종합성적 5위여 우측 선 순위나 선수단이 매우 자랑스럽다. 그동안 한국은 쇼트트랙에서만 금메달을 땀겨서 어딘가 부족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스라프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민주권자감을 높이고 동시에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민의 염원과 더욱 높아졌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강원도만의 호관이 아닌 국가적 대사이자 필수적인 과제로서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오는 15일까지 유치신청을 위한 신청도시 파일(비드파일)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2010과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IOC와 약속했던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정부는 2008년 9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동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은 국가기간 교통망의 중산축으로 여객과 화물물류의 대동맥 효과가 기대되어 선정된 사업이다. 또한 이명박 대

원주~강릉 복선전철 당장 결정하라

통령도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국가기간 SOC 부자는 현재의 경제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투자기치로 결정해야 한다"며 미래를 여측하는 장기적 부자관 강조한 바 있어, 현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을 환영했다.

총 연장 120.46km의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건설된다면 강릉의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 삼척 LNG기지는 물론 동해안의 연 2,000만 톤 이상의

시멘트 물량 등을 수송하는 국가의 기간 철도망 역할이 기대된다. 부산에서 포항~강릉~원산~나진을 연결하는 한반도중단철도(TKR) 구축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의 연결 시 수도권, 중서남부권 붐이 이어지는 등 그 사회효과와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가 '단선'으로 군도를 축소하

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

2009년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민간 자 격적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원주~강릉 간 전철사업은 단선으로 추진될 경우 2조7,832억원이 소요되고 복선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3조4,92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부에서 주장하는 사업비 절감액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주~강릉 전철사업을 단선으로

로 건설할 경우 완공 10년 후인 2030년이면 용량부족 현상이 발생해 추가 확장이 필요해질 것이고, 그때 다시 복선으로 확장하려면 4조원 가량이 더 소요되어야 한다고 하니 정부의 경제성 명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에 위한 현지실사 시 두 번이나 복선전철로 건설하겠다고 보증하고도 그 약속을 변경하려는 것 같아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원주~강릉 간 전철 사업은 반드시 '복선'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비드파일 제출 이전에 확정하여 정부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이 강원도만을 위한 SOC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기간 교통망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도시 파일에 '고속화 철도'가 아닌 '복선전철'로 명기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참가선수단의 오찬에서 "정부와 체육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듯이 '동계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를 기원해 본다.

강원포럼

최재규 도의장



의 결 번 호	2010지선6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동국일보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194-1 대표이사 장 영 미
심의대상기사	동국일보 2010년 3월 18일자 15면 『세계와 소통하는 다보스 포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세계와 소통하는 다보스 포럼

세계화와 양극화의 극치라는 반세계화 세력의 비난도 있지만, 다보스포럼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반향이 적지 않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글로벌 의제 선점 및 이슈화에 탁월한 역할을 해왔고 글로벌 리더들의 대표적 모임이 되었다는 점이 클라우스 슈바프 교수가 1971년 유럽의 기업인을 초청해 시작한 다보스포럼이 올해로 벌써 40회째 이어지며 전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이유일 것이다.

엄청난 회비 및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들이 속속 몰려든다. 이번 다보스포럼 역시 역대 최다 인원인 2,700여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취리히에 내리자마자 호텔방의 TV에서는 연신 다보스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었다.

다보스 뿐 아니라 스위스 전체가 포럼으로 뒤덮인 것 같다.

하긴 스위스 정부는 작은 오지마을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이 관광수입에도 상당히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보스라는 지역이 19세기 영국에 의해 개발된 겨울 스포츠의 중심지 이니까 당연히 관광지로서의 입지도 있을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TV의 자막에는 세계의 경제 지도자들이 다보스에서 스키를 즐기고 있다는 기사가 흘러나온다.

스위스 정부는 포럼 준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보안 및 악천후 대비를 위해 최대 5,000명의 군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는 등 다보스포럼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한적한 겨울 스포츠 휴양지 다보스는 스키를 매고 다니는 남녀, 썰매형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이 엄마의 모습 등 한편으로는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저곳의 교통통제 및 보안 검색 등으로 철통같은 보안 태세를 보여주는 상반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각국 정상만 20여명, 빌 게이츠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인은 셀 수도 없을 정도이니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보안 덕에 이대통령은 정상회담만 5번이나 할 수 있었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 기업 지도자, 언론인 사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수많은 양자 혹은 다자회담 및 개별세션은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레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다보스포럼의 가진 힘이 아닐까 싶다.

우리도 이런 토론 포럼 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좋고, 미끄럽고, 호텔도 넉넉지않은 이 불편한 오지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새삼스레 부러워졌다.

다보스 포럼은 언제나 세계의 관심을 받아 왔지만, 올해는 유달리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세계 금융 위기 탈출을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도 화두이지만(포퓰리즘적 선거용 주장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 선언이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서 폭발력을 과시했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라서, 오지로 가는 새벽 어둠 속의 특별열차안에서부터 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가 사실상 가능하겠느냐는 비판론부터 시작해서 월가가 지금 이대로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의 슈바르츠발트와의 일문일답 시간에 정리되었다. 금융산업의 건강하고 건전한 변화는 필요하나 이것이 정부 주도보다는 금융종사자들 스스로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로버트 다이아몬드 버클레 이스 은행장이 '과도한 규제가 은행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론하고, 조지 소로스가 '오바마의 규제 방향은 찬성하나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하는 등 격론이 이어졌으니, 역시 금융개혁은 내내 뜨거운 이슈였음이 분명하다.

내가 만난 몇몇 은행장들

역시 이에 관해서 걱정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바마식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산업계의 우려는 확실히 큰 것 같다. 반면 사르코지 대통령의 '자본주의의 도덕적 개조론'은 오바마의 금융개혁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여하튼, 금융개혁논쟁은 지금도 뜨겁게 진행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단독특별 연설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건설하자'는 슬로건에 바로 맞닿아 있다. 국제 금융위

세계와 소통하는 다보스 포럼



나 경 원

<한나라당원>

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다보스 포럼의 가치관이 아닐까 싶다.

우리도 이런 토론 포럼 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좋고, 미끄럽고, 호텔도 넉넉지않은 이 불편한 오지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새삼스레 부러워졌다.

다보스 포럼은 언제나 세계의 관심을 받아 왔지만, 올해는 유달리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세계 금융 위기 탈출을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도 화두이지만(포퓰리즘적 선거용 주장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 선언이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서 폭발력을 과시했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라서, 오지로 가는 새벽 어둠 속의 특별열차안에서부터 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가 사실상 가능하겠느냐는 비판론부터 시작해서 월가가 지금 이대로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의 슈바르츠발트와의 일문일답 시간에 정리되었다. 금융산업의 건강하고 건전한 변화는 필요하나 이것이 정부 주도보다는 금융종사자들 스스로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로버트 다이아몬드 버클레 이스 은행장이 '과도한 규제가 은행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론하고, 조지 소로스가 '오바마의 규제 방향은 찬성하나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하는 등 격론이 이어졌으니, 역시 금융개혁은 내내 뜨거운 이슈였음이 분명하다.

내가 만난 몇몇 은행장들 역시 이에 관해서 걱정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바마식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산업계의 우려는 확실히 큰 것 같다. 반면 사르코지 대통령의 '자본주의의 도덕적 개조론'은 오바마의 금

융개혁을 지향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여하튼, 금융개혁논쟁은 지금도 뜨겁게 진행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단독특별 연설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건설하자'는 슬로건에 바로 맞닿아 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신흥개도국, 저개발국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갭(gap)의 개선 필요성은 바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개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 이상 소수 선진국만의 거버넌스는 안 된다는 인식,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흥개도국의 의사를 적극 수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그리고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대동방이 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바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을 역량을 펼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올해, G20 의장국의 임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위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 단독 특별연설자료의 초청된 것이나 카무르로부터 수많은 러브콜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중간자로서의 한국은 그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한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아이터 재건은 아이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틀 안에서 비 대통령의 언급처럼 이제 국제사회는 과거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생각하는 힘'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세계 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열차를 타고 눈이 폭풍처럼 내리는 길에 우리는 이곳 작은 마을 다보스에 모인 지도자들은 여기저기 나라별 기업별 행사를 부지런히 구경하듯 한다. 무슨 정보를 내놓을 것이냐, 나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 없나 해서이다.

한국의 행 행사는 그 중에서도 유달리 빛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물론, 구리나 OECD 사무총장 등 유수의 참석자들이 행사의 격을 높였고 수준 높은 공연과 경연하고 맛있는 음식 및 볼거리가 참석자들의 눈과 귀, 혀를 만족시켜 준 까닭이다. 모든 것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니 좋은 행사가 되고 훌륭한 외교성교가 된다.

이제 국제정치나 국내정치나 조화를 이루어 성과를 올려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남아오는 현재의 우리 헌정 너머로 보이는 세계 밖을 저 천

독자들의 심한한 비판과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투고를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동국일보 dgyonhap@hanmail.net

기 이후 신흥개도국 저개발국을 포함하지 못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갭(gap)의 개선 필요성은 바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개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 이상 소수 선진국만의 거버넌스로는 안 된다는 인식,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흥개도국의 의사를 적극 수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그리고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대통령이 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바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을 역할을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올해, G20 의장국의 임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위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 단독 특별연설자로의 초청된 것이나 각국으로부터의 수많은 러브콜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중간자로서의 한국은 그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아이티 재건도 아이티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언급처럼 이제 국제사회는 과거의 룰을 그대로 적용하려해

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생각하는 힘'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세계 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협궤를 타고 눈이 폭폭 빠져 구두는 신기도 어려운 이곳 작은 마을 다보스에 모인 지도자들은 여기저기 나라별 기업별 행사에 부지런히 기웃기웃한다. 무슨 정보를 나눌 것은 없나, 나의 의견을 개진할 것은 없나 해서이다.

한국의 밤 행사는 그 중에서도 유달리 빛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유수의 참석자들이 행사의 격을 높였고 수준 높은 공연과 정갈하고 맛있는 한식 및 막걸리가 참석자들의 눈과 귀, 혀를 만족시켜 준 까닭이다. 모든 것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니 좋은 행사가 되고 훌륭한 외교성고가 된다.

이제 국제정치나 국내정치나 조화를 이루어 품격을 높여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돌아오는 협궤의 유리 천정 너머로 보이는 곧게 뻗은 저 전나무처럼...

의 결 번 호	2010지선69(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대전일보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74-7 대표이사 신 수 용
심의대상기사	대전일보 2010년 3월 9일자 22면 『한자교육, 문화수준과 국격 높인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전시 교육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자 교육, 문화수준과 국격 높인다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질과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중의 하나가 한자 교육이다.

한자는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국제 공용어이다. 우리나라는 약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다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정책’ 이후 40여 년간 소홀히 해 왔다. 한자는 한글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공용언어로 역사와 문화, 정서가 함께 담겨져 있으며 한글의 70% 이상이 한자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국민교양과 의사소통, 어휘력 신장에 도움이 되며 아시아 및 국제 교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문화수준과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이 G2국가로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도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자를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은 지당한 일이다. 지난 2002년 민관식 외 13명의 전직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제출했고, 2009년에 전직 총리 20명이 청와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회의원 161명 중 145명(90%)이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적극 찬성하였다. 2010년 1월엔 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학교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바가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하면 학부모 89%, 교사 77%가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찬성하였고,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에 포함. 명문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한자 교육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이 없고 일부 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부분적으로 지도하였을 뿐이며, 중학교는 교과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컴퓨터, 환경, 직업 등과 함께 학교별 임의선택 지도하였으며, 고등학교도 교양과목이나 재량활동 시간에 학교별로 임의 선택하여 지도하였다. 현재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초중고교 공히 재량활동 시간에 임의선택으로 지도하고 있을 뿐 정규교과로 지정하거나 강조하는 어구는 찾아볼 수 없다. 한자 교육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국·영·수’와 함께 필수교과 또는

필수선택교과로 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한다.

21세기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이며 다양화 시대이다. 세상 어느 곳에 가나 한국인이 있고 한글이 국제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위상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자가, 세계적으로는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세상의 기운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집중하여 '동방의 햇불'이 세상을 밝히고 있음을 직시할 때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수준에 걸맞은 문화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글 한글과 한자 교육에 매진해야 할 때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교양과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글과 한자공용은 필요충분조건이다.

한자 교육, 문화수준과 국격 높인다

열린마당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질과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중의 하나가 한자 교육이다.

한자는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국제 공용어이다. 우리나라는 약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오다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정책' 이후 40여 년간 소홀히 해 왔다. 한자는 한글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공용어이자 역사와 문화, 정서가 함께 담겨져 있으며 한자의 70% 이상이 한자외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국민교양과 의사소통,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아시아 및 국제 교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 G20 의창국으로서 한국의 문화수준과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중·고·고2학기로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도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자 필수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은 지대한 의미이다. 지난 2002년 민관학사 외 18명의 전직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제출했고, 2009년에 전직 총리 20명이 청와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회의원 161명 중 145명(90%)이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적극 찬성하였다. 2010년 1월엔 교육과정편찬위원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바가 있다. 교육과정편찬위에 의하면 학부모 89%, 교사 77%가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찬성하



최기현

였고,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에 포함 범문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제7차 교육과정으로 한자 교육을 산포하면 초등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이 없고 일부 학교에서 창의적 재능발달 시간에 부분적으로 지도하였을 뿐이다. 중학교는 교과(국어·영어·수학)와 창의적재능활동 시간에 선택, 원강, 직업 등과 함께 학교별 임의선택 지도하였으며, 고등학교도 교양과목이나 재탐활동 시간에 학교별로 임의 선택하여 지도하였다. 현재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초·중·고교 동등히 재발달 시간에 임의선택으로 지도하고 있을 뿐 중·고교로 지정하거나 강조하는 어구는 찾아볼 수 없다. 한자 교육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국·영·수'와 함께 필수교과 또는 필수선택 교과로 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한다.

21세기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다양화 시대이다. 세상 어느 곳에 가나 한국인이 있고 한글이 국제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위상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자가, 세계적으로는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세상의 기운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집중하여 '동방의 햇불'이 세상을 밝히고 있음은 직시할 때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수준에 걸맞은 문화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글 한글과 한자 교육에 매진해야 할 때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교양과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글과 한자 공용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전 대전둔원고등학교 교장

의 결 번 호	2010지선70(자심)
언 론 사	(주)인천일보 인천 중구 항동4가 중봉로 222 대표이사 박 민 서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0년 3월 18일자 15면 『인천 교육이 걱정된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 남구청장)와 관련하여 선거 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 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천 교육이 걱정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2009년도 법정전입금 917억5천1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1천353억 원 등 모두 2천270억5천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 1월 18일 밝힌 ‘2009년도 전국 16개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전입 현황’ 자료를 보면 시는 3천978억100만원의 예산 중 76.94%인 3천60억5천만원만 시교육청에 지급했다.

2009년도 법정전입금 미지급금 917억5천100만원은 그 규모가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이고, 미전입률은 전북(73.79%)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오늘날 인천 지역사회는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나빠다’, ‘대학 진학 성적이 뒤진다’는 등 그 원인과 책임을 교육계에 돌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차적 책임은 교육계에 있지 않고 인천교육행정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주체인 시장과 시의회 등의 부족한 교육적 지원노력과 교육재정 지원 실적에 있다.

필자는 교육재정 투입의 몇 가지 교육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재정은 교육 효과의 원칙에 맞게 투입해야 한다.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학습성장 발달 단계에 맞춰 제때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 학습력을 결정하는 교육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인적 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재정은 이들 3가지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기본요소이다.

둘째, 시의 법정전입금 지연은 교육의 준비 원칙을 뿌리째 뒤흔들게 된다. 교육의 준비 원칙은 교육을 위한 교육적 학습준비 프로그램과 그에 맞는 물리적 학습 환경, 훌륭한 선생님과 보조교사, 보조 인원 등 인적 학습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면 학습효과가 크게 오른다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리적 학습환경이나 인적 학습환경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이전인 2월과 8월의 방학 시기 등에 미리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시가 시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물리적 학습환경이나 학습준비 등이 제대로 갖춰질 수 없을뿐더러 적정한 선생님과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게 돼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법정전입금은 시교육청에 시장 맘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되는 ‘고무줄 재정’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한 법정전입금이다. 이들 법정전입금은 인천시민이 시교육청에 직접 납부해야 하나 그 절차가 복잡해 인천시민이 시교육청에 지급을

전제로 시장에게 일시 맡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법으로 정한 법정전입금이다.

그런데 시장이 이 법정전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미룬다면 이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거나 시장이 다른 항목, 다른 곳에 예산을 전용 또는 유용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넷째, 교육은 오늘의 지역사회 경제이며, 미래의 지역사회 경제 성장의 바탕이다. 시장이 법정전입금 등을 장기간 늦춰 교부하는 동안 인천의 교육환경이 계속 뒷걸음질 치게 되자 결국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중산층 이상이 교육환경이 뒤진 인천을 떠나고 있다. 소득이 높고 구매력이 큰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인천을 떠나고 나면 자연히 지역사회의 구매력은 감소하고 고용 기회도 함께 줄어드는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재인 두뇌와 인재가 인천을 떠나면 인천의 미래 또한 암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시의회는 법정전입금 미지급 사유와 그 배경을 밝힐 행정사무조사에 나서야 한다.

인천의 교육을 일으켜 세우려면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에 강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시장, 교육감, 시의원, 교육의원, 구청장, 군·구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기 고



신승순

전 인천시의회의장

인천시는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2009년도 법정전입금 917억5천100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1천353억 원 등 모두 2천270억5천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의 준비 원칙은 교육을 위한 교육적 학습 준비 프로그램과 그에 맞는 물리적 학습 환경, 훌륭한 선생님과 보조교사, 보조인원 등 인적 학습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면 학습효과가 크게 오른다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리적 학습환경이나 인적 학습환경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이전인 2월과 8월의 방학 시기 전에 미리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시가 시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물리적 학습환경이나 학습준비 등이 제대로 갖춰질 수 없음 뿐더러 적절한 선생님과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게 돼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법정전입금은 시교육청에 시장 단계로 줄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고무줄 재질'이 아닌 법으로 규정한 법정전입금이다. 이들 법정전입금은 인천시민이

인천 교육이 걱정된다

시교육청이 지난 1월 18일 밝힌 '2009년도 전국 16개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전입 현황' 자료를 보면 시는 3천978억100만 원의 예산 중 76.94%인 3천609억5천만 원만 시교육청에 지급했다.

2009년도 법정전입금 미지급액 917억5천100만 원은 그 규모가 16개 시·도 가운데 '둘째'이고, 미전입률은 전국(73.79%)에 이어 꼭짜에서 두 번째다.

오늘날 인천 지역사회는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나쁘다', '대학 진학 성적이 뒤진다'는 등 그 원인과 책임을 교육계에 돌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인천지역 책임은 교육계에 있지 않고 인천교육행정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주체인 시장과 시의회 등의 부족한 교육적 지원 노력과 교육재정 지원 실효에 있다.

필자는 교육재정 투입의 몇 가지 교육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재정은 교육 효과의 원칙에 맞게 투입해야 한다.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학습성장 발달단계에 맞춰 제때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 학습력을 결정하는 교육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인적 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재정은 이들 3가지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다.

둘째, 시의 법정전입금 지원은 교육의 준비 원칙을 뿌리째 뒤흔들게 된다. 교육

시교육청에 직접 납부해야 하나 그 절차가 복잡해 인천시민이 시교육청에 지급을 전제로 시장에게 일시 맡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으로 정한 법정전입금이다.

그런데 시장이 이 법정전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미룬다면 이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거나 시장이 다른 항목, 다른 곳에 예산을 전용 또는 유용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넷째, 교육은 오늘의 지역사회 경제이며, 미래의 지역사회 경제 성장의 바탕이다. 시장이 법정전입금 등을 장기간 늦춰 뒷걸음질 치게 되자 결국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중산층 이상이 교육환경이 뒤진 인천을 떠나고 있다. 소득이 높고 구매력이 큰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인천을 떠나고 나면 자연히 지역사회의 구매력은 감소하고 고용 기회도 함께 줄어드는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재인 두뇌와 인재가 인천을 떠나면 인천의 미래 또한 암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시의회는 법정전입금 미지급 사유와 그 배경을 밝힐 행정사무조사에 나서야 한다.

인천의 교육을 일으켜 세우려면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에 강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시장, 교육감, 시의원, 교육의원, 구청장, 군·구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71(자심)
언 론 사	(주)충청투데이 대전광역시 서구 둔원1길 50 대표이사 정 남 진
심의대상기사	충청투데이 2010년 3월 12일자 16면 『청렴이 아름다운 미래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계룡시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청렴은 아름다운 미래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를 보면 艷姿(염자) 牧之本務(목지본무) 萬善之源(만선지원) 諸德之根(제덕지근) 不廉而能牧者(불렴이능목자) 未之有也(미지유야)라는 말이 있다. 이는 청렴한 목민관의 기본 임무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고 모든 덕(德)의 근본이기 때문에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 노릇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선비 정신의 바탕은 재물 욕심이 없는 청렴에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공무원의 부정으로 인해 국가적 으로나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풍백화점 참사일 것이다. 원설계대로 건축되지 않았고, 시공과정에서도 술한 불법변경이 있었으며,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량시공을 했고, 공무원은 이를 묵인해 주고 건축감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은 수백명의 인명 피해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패추방을 위해 우리나라는 부패방지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2002년부터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들이 직접 공공기관들에 대한 부패진단을 실시하고 각 기관들은 그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예방 및 척결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 계룡시는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실시 결과 전국 161개 시·군 자치단체중 종합청렴도 8.92점으로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또한 2009년도에는 충남도반부패·청렴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을 받는 등 우리시 공직자들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이며,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가 하나하나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도 우리시는 반부패 청렴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클린 계룡’ 구현과, 적극적이고 다양한 ‘청렴 실천’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렴생활 특강 등을 통한 윤리의식 고양, 6.2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 등 자체 감사활동 강화 ▲부패 취약분야 법령 및 제도개선 적극 발굴 ▲반부패 청렴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제작 배부와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및 비위공직자 척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패신고 분위기 조성 ▲온라인을 통한 신고, 고발 기능 강화 등 비위 및 부패공직자 척결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 향상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을 통한 공직사회 청렴분위기 확산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계룡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전직원의 청렴 혁신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청렴도 향상 도모를 위하여 청렴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과거에 비해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성숙해졌지만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38위로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등 경쟁국 보다 한참 아래로 우리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청렴도 세계 1위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0위권인 세계 복지선진국인 핀란드 보다 더 높은 청렴 선진국 건설을 위하여는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과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또한 청렴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 고

ALL INFORMATION

최 홍 목
계룡시장



청렴은 아름다운 미래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복민심서를 보면 廉(廉)收之本(복지본부)萬民之望(만민지원)諸德之根(제덕지근)不取(不取)而能收(能收)廉(廉)아는 말이 있다. 이는 청렴한 복민관의 기본 입부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고 모든 덕(德)의 근원이기 때문에 청렴하지 않고서는 복민관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선비 정신의 바탕은 재물 욕심이 없는 청렴에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시 공직자들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이며, honest의 노력을 다한 결과 하나하나 결실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에도 우리시는 반부패 청렴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결실 계룡' 구현과, 적극적으로 다양한 '청렴 실천'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렴생활 특강 등을 통한 윤리의식 고양, 6.2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 등 자체 감사활동 강화 △부패 취약분야 법령 및 제도개선 적극 발굴 △반부패 청렴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제작 배부와 시청소식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및 비위공직자 척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패신고 분위기 조성 △온라인을 통한 신고고발 기능 강화 등 비위 및 부패공직자 척결 △시장에 대한 시민 신뢰 향상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한 공직사회 청렴분위기 확산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계룡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전직원의 청렴 혁신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청렴도 향상 도모를 위하여 청렴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과거에 비해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성숙해졌지만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38위로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등 경쟁국 보다 한참 아래로 우리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청렴도 세계 1위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0위권인 세계 복지선진국인 핀란드 보다 더 높은 청렴 선진국 건설을 위하여는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과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또한 청렴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38위 공직자 역할·노력등 필요

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풍백화점 참사일 것이다. 원설계대로 건축되지 않았고, 시공과정에서도 순한 불법변경이 있었으며,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량시공을 했고, 공무원은 이를 묵인해 주고 건축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은 수백명의 인명 피해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패추방을 위해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법들을 제정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2002년부터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들이 직접 공공기관들에 대한 부패진단을 실시하고 각 기관들은 그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예방 및 척결노력을 해나가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 계룡시는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실시 결과 전국 161개 시·군·자치단체중 중한청렴도 8.92점으로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또한 2009년도에는 충남도 반부패·청렴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을 받는 등 우리

의 결 번 호	2010지선74(자심)
언 론 사	(주)충청일보재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34 충청일보빌딩 3,4층 대표이사 이 규 택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2010년 3월 17일자 7면 『충남도지사 가상대결서 선진당 이태복 후보 1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남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충남도지사 가상대결서 선진당 이태복 후보 '1위'

자유선진당 이태복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충남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후보(민주당)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이태복 후보 선거사무소가 의뢰한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충남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3048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을 이용해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실시한 결과 이태복 후보는 26.6%, 안희정 후보는 21.5%, 홍문표 후보는 17.7%, 이용길 후보(진보신당)는 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후보(한나라당)는 17.7%, 이용길 후보(진보신당)는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층은 남성 50대 이상·공주시·보령시·아산시·예산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또 세종시와 관련해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안과 정부에서 수정발표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안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원안 추진이 58.7%로 수정안 25.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원안 찬성 지지층은 남성 30~50대 공주시·논산시·서산시·서천군·연기군·홍성군·자유선진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다. 후보들의 세종시에 대한 입장이 후보선택에 영향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67.4%에 달했다.

충남도지사 가상대결서 선진당 이태복 후보 '1위'

자유선진당 이태복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충남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후보(민주당)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이태복 후보 선거사무소가 의뢰한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충남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3048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을 이용해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실시한 결과 이태복 후보는 26.6%, 안희정 후보는 21.5%, 홍문표 후보(한나라당)는 17.7%, 이용길 후보(진보신당)는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층은 남성 50대 이상·공주시·보령시·아산시·예산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또 세종시와 관련해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안과 정부에서 수정발표

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안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원안 추진이 58.7%로 수정안 25.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원안 찬성 지지층은 남성 30~50대·공주시·논산시·서산시·서천군·연기군·홍성군·자유선진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다. 후보들의 세종시에 대한 입장이 후보선택에 영향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67.4%에 달했다. /천안·김병환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80(자심)
언 론 사	파이낸셜뉴스신문(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대표이사 조 영 권
심의대상기사	파이낸셜뉴스 2010년 3월 22일자 10면 『“삼각산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강북구청장) 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구정활동 추진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삼각산,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사진)의 애칭은 ‘삼각산 도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25개 자치구청장과 화상회의 때 그를 보고 “어이쿠, 삼각산 도사님 나오셨군요”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그는 삼각산과 인연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가 추구하는 구정 목표는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다. 강북구 ‘행복’의 근원을 삼각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구정 철학이다.

‘솔직히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 가운데 하나가 이곳 강북구’라고 생각한 그는 어떻게 하면 낙후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심했다고 털어놨다.

그의 결론은 삼각산에 강북구를 알릴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렇게 되면 고용이 창출돼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어느 나라 수도에 이런 명산이 있겠는가”라는 그가 삼각산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

우이동 도봉도서관 앞에 있는 솔밭공원 역시 명품이다. 이곳은 최소 수령 100년이 넘는 소나무가 1000여그루나 자라고 있는 자연 녹지 공원으로 찾는 이들은 4계절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 당초 이곳은 사유지인데 온갖 쓰레기더미로 방치된 애물단지였다가 지역 명소로 탈바꿈했다.

이어 삼각산에 많이 피는 진달래를 활용, 축제를 여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직원들의 반대가 심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직원들을 설득했다. 진달래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직원들은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우선 지난 2004년 보광사로 이어지는 길에 진달래 2만그루를 식재한 데 이어 이듬해 4월부터는 ‘삼각산 진달래 축제’를 열고 있다. 축제와 함께 결들인 글짓기와 사생대회에 의외로 주민들이 큰 반응을 나타냈다. 삼각산의 문화관광상품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치과의사, 문화원장 등을 하면서 이곳 강북구

에서만 40년 이상 살아온 김 구청장은 삼각산을 관광지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다.

“주민들이 믿든 안 믿든 구청장을 하게 된 동기는 지역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강조했다.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분야는 관광이 제격이라고 믿었기 때문.

김 구청장은 “4·19탑 뒤편의 애국지사 묘역 탐방로와 삼각산 테마공원, 우이령 맨발길을 오는 2011년까지 만들고 자연학습 체험장, 국제 야영 캠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역사문화관, 산악박물관 등을 지어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각산,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사진)의 애칭은 ‘삼각산 도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25개 자치 구청장과 화상회의 때 그를 보고 “어이쿠, 삼각산 도사님 나오셨군요”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그는 삼각산과 인연을 매우 숭모한다. 그가 추구하는 구정 목표는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다. 강북구 ‘행복’의 근원을 삼각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구정 철학이다.

‘속직히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 가운데 하나가 이곳 강북구’라고 생각한 그는 어떻게 하면 낙후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심했다고 털어놨다.

그의 결론은 삼각산에 강북구를 알릴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렇게 되면 고용이 창출돼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어느 나라 수도에 이런 명산이 있겠는가”라는 그가 삼각산

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

우이동 도봉도서관 앞에 있는 숲밭공원 역시 명품이다. 이곳은 최소 수령 100년이 넘는 소나무가 1000여그루나 자라고 있는 자연 녹지 공원으로 찾는 이들은 4개월 신

區 상징 관광단지로 조성

진달래 필면 축제도 열어

사람들 찾다보니 소득도 ‘쑥’

내년까지 테마공원 만들 것

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 당초 이곳은 사유지인데다 온갖 쓰레기터미로 병치런 애물단지였다가 지역 명소로 탈바꿈했다.

이어 삼각산에 많이 피는 진달래를 활용, 축제물 여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직원들의 반대가 심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직원을



을 설득했다. 진달래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직원들은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우선 지난 2004년 보광사로 이어지는 길에 진달래 2만그루를 식재한 데 이어 이듬해 4월부터는 ‘삼각산 진달래 축제’를 열고 있

다. 축제와 함께 걸었던 글짓기와 사상대화에 의뢰로 주민들이 큰 반응을 나타냈다. 삼각산의 문화 관광상품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치과의사, 문화원장 등을 하면서 이곳 강북구에서만 40년 이상 살아온 김 구청장은 삼각산을 관광지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다.

“주민들이 믿든 안 믿든 구청장을 하게 된 동기는 지역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강조했다.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분야는 관광이 제격이라고 믿었기 때문.

김 구청장은 “4·19탑 뒤편의 애국지사 묘역 탐방로와 삼각산 테마공원, 우이령 맨발길을 오는 2011년까지 만들고 자연학습 체험장, 국제 야영캠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역사문화관, 산악박물관 등을 지어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dkim@innews.com】김두일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82(자심)
언 론 사	(주)대한매일신문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 대호빌딩 신관 402호 대표이사 김 기 수
심의대상기사	대한매일신문 2010년 3월 23일자 5면 『“삼각산 애국지사 묘역, 명소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강북구청장) 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사업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삼각산 애국지사 묘역, 명소될 것”

“삼각산(북한산) 일대 애국지사 묘역 성역화와 함께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한국 민족의 얼과 혼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해마다 1천만명 이상이 찾아 서울 도심의 유일한 명산으로 꼽히는 삼각산(북한산) 일대, 이곳에는 헤이그 밀사로 파견됐다가 순국한 이 준 열사를 비롯해 손병희, 여운형, 이시영, 김창숙 선생 및 안중근 의사의 장녀인 안현생, 오상순, 이용문, 16기의 독립 유공자묘가 있다. 또한 신익희, 신숙, 조병옥 선생 등 건국에 기여한 문화 예술인 등의 묘가 있는 역사적 장소다. 하지만 묘역을 찾는 이들이 드물고 무관심속에 방치돼 왔다.

이에 강북구는 애국지사 묘역을 성역화, 국립화를 적극 추진하고 문화관광 시설을 확충해 삼각산 일대를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묘지와 사업은 묘역 성역화와 함께 순례코스를 조성, 역사문화관과 산악박물관, 민속박물관, 청소년 유스호스텔 등 강북구의 삼각산문화관광

프로젝트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으로 스토리텔링을 갖춘 역사문화성지로 조성 된다.

국립공원 수유분소~ 조병옥 선생 묘역~ 통일교육원~ 솔밭공원~ 손병희 선생 묘역의 탐방로 등이 하나로 이어지고 우이령을 따라 양주시로 넘어가는 명상길까지 이르면 삼각산을 한바퀴 돌아 오는 ‘도심 올레길’이 탄생하게 된다.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수천년 역사와 문화를 품은 삼각산이야말로 최고의 관광자원”이라며 “4·19탑 뒤편의 애국지사 묘역 탐방로와 삼각산 테마공원, 우이령 맨발길을 오는 2011년까지 만들고 자연학습 체험장, 국제 야영캠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역사문화관, 산악박물관 등을 지어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19묘지를 방문하는 역대 대통령 누구도 순국선열 묘역까진 참배하지 않더라.”며 “관심 밖에 놓인 묘역에 탐방로와 기념관 등 순례코스를 조성해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문익환 목사 생가인 통일의 집도 있다.

“모든 시설은 2016년에 완성이 된다.”

김 구청장은 삼각산을 관광지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를 ‘삼각산(북한산) 도사’로 불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때 붙여준

별명이다. 이 대통령은 화상회의 화면에 한복차림으로 나타난 김 구청장을 보고 “어이쿠, 삼각산 도사님 나오셨군요”라고 말했고 이후 애칭이 됐다.

삼각산은 북한산의 본래 이름인 삼각산으로 조만간 서울시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옛 이름을 되찾게된다. 김 구청장이 지난 7년 재임기간 지명 찾기 운동에 앞서왔다고 한다.

구는 묘역 국립화 추진을 위해 ‘삼각산 애국지사묘역 국립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삼각산 애국지사묘역 성역화 범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가 사적 지정 등 성역화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김현풍 강북구청장

“삼각산 애국지사 묘역, 명소될 것”

이금연 기자 / “삼각산(북한산) 일대 애국지사 묘역 성역화와 함께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한국 민족의 얼과 혼을 낼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해마다 1천만명 이상이 찾아 서울 도심의 유일한 명산으로 꼽히는 삼각산(북한산) 일대. 이곳에는 해이고 밑사로 파견됐다. 순국한 이 존 알사를 비롯해 손병희, 여운영, 이시영, 김철수 선생 및 안중근 의사의 장녀인 안한성, 오상순, 이흥문, 16기의 독립 유공지표가 있다. 또한 신익희, 신석우, 조방목, 선생 등 건국에 기여한 문화 예술인 등이 묘가 있는 역사적 장소다. 하지만 교역을 찾는 이들이 드물고 두관산속에 방치돼 왔다.

이에 강북구는 애국지사 묘역을 성역화 국립묘지를 적극 추진하고 문화관광 시설을 확충해 삼각산 일대를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묘지화 사업은 묘역 성역화와 함께 순례코스를 조성, 역사문화관광과 산악 박물관, 민족박물관, 청소년 유스호스텔 등 강북구의 삼각산문화관광 프로젝트를 연계한 다양한 사업으로 스토리텔링을 갖춘 역사문화성지로 조성 된다.

국립공원 수유분소, 조경육 선생 묘역, 통일교유원, 송파공원, 순병희 선생 묘역의 탐방로 등이 하나로 이어지고,

우이령을 따라 양주시로 넘어가는 명상길까지 이르면 삼각산을 한바퀴 돌아오는 ‘도심 울타리’가 탄생하게 된다.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수천년 역사와 문화를 품은 삼각산이 앞으로 최고의 관광 자원”이라며 “1·19를 뒤덮는 애국지사 묘역 탐방로와 삼각산 테마공원, 우이령 연결길을 오는 2011년까지 만들고 자연학습 체험장, 국제 야생랜드, 청소년 수련 시설, 역사문화관, 산악박물관 등을 지어 서울의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19묘지를 방문하는 역대 대통령 누구도 순국선열 묘역까지 참배하지 않았다”며 “관심 밖에 놓인 묘역에 탐방로와 기념관 등 순례코스를 조성해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문익환 목사 생가인 동산의 절도 있다.

“모든 시설은 2010년에 완성이 된다.”

김 구청장은 삼각산을 관광지로 개발해 나간다는 생각을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를 ‘삼각산(북한산) 도사’로 불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때 붙여준 별명이다. 이 대통령은 화상회의 화면에 한복차림으로 나타난 김 구청장을 보고 “어이쿠, 삼각산 도사님 나오셨군요”라고 말했고 이후 애칭이 됐다.

삼각산은 북한산의 본래 이름인 삼각산으로 조만간 서울시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옛 이름을 되찾게된다. 김 구청장이 지난 7년 재임기간 지명찾기 운동에 앞서왔다고 한다.

구는 묘역 국립화 추진을 위해 ‘삼각산 애국지사묘역 국립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삼각산 애국지사묘역 성역화 범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가 사적 지정 등 성역화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84(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새만금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6-8 대표이사 이 재 춘
심의대상기사	새만금일보 2010년 3월 24일자 15면 『진안군의 ‘우공이산’을 기대한다』, 2010년 3월 24일자 16면 『지속적인 교육으로 변화하는 진안만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안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인터뷰 기사 및 칼럼에서 군정활동 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진안군의 ‘우공이산’을 기대한다

나이 아흔의 우공은 길을 막고 있는 태항산과 왕옥산을 옮기려고 온 가족을 동원해 산의 흙을 파내어 다른 곳으로 날랐다. 이웃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우공은 자손 대에까지 계속 흙 나르기 작업을 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우공의 분투에 감동한 상제는 신선을 보내 두 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바로 열자(列子)의 탕문편(湯問篇)에 나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故事)다.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말로 불가능한 목표라도 우직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유사한 고사성어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마부위침, 磨斧爲針),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쌓여 연못을 이룬다(적수성연, 積水成淵), 티끌이 모여 큰 산을 이룬다(진합태산, 塵合泰山) 등이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다.

잘 알다시피, 미켈란젤로는 4년간의 제작 기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그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완성해냈다. 피레는 60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파우스트’라는 대작을 완성했다. 세계적 건축가 가우디가 40년의 인생을 바쳐 건축해 온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00년이 넘는 지금도 아주 조금씩 지어지고 있다.

각설하고, 진안군 이야기를 해보겠다.

진안군의 2010년 화두가 바로 우공이산(愚公移山)이다. 농업·농촌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한 삽 한 삽 파내려 가면서 산을 옮긴 것처럼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송영선 군수는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송 군수는 진안의 대표적 상품인 홍삼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15곳에 홍삼 판매장을 열고, 홍삼·한방농공단지도 분양에 나섰다. 또 홍삼을 활용해 아토피를 예방하는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진안은 대규모 공단이 없어서 청정 자연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도 심한편이 아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청정 자연은 인삼과 홍삼을 비롯한 한약재의 주 생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재산인 셈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힘입어 2007년 25농가에 불과했던 연소득 1억 이상 부농숫자가 지난해에는

148농가로 늘었고, 올해는 250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질 퇴비사를 설치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홍삼을 비롯해, 약초, 고추, 오디, 갯잎 등 특화 및 틈새 작목을 집중 육성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1억원 이상 고소득농가가 2년 사이 6배로 증가한 것을 보면 진안군이 지향하고 있는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실현의 목표는 결코 무리이거나 허황된 것이 아닐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바닥인 시골 군에서는 다음 선계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연임을 계산한다면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로포장이나 다리 건설 같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 발전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멀리 보는 해안이 필요하다.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힘은 단체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다. 발은 현실을 딛고 서 있지만 머리와 가슴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 계획은 1~2년이 아니

라 5년, 10년, 더 나가서는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태는 인고의 세월 끝에 얻게 되는 달콤한 결실보다는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잠깐의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오래 꿈꾸어온 큰 목표를 포기하고 보다 쉬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우직한' 우공을 '미련하고 융통성 없는 늑대'로 치부해 버릴지 모를 일이다.

눈앞의 이익과 성과에만 급급한다면, 인생의 성공도 지역과 나라의 발전도 이룰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혹여 지금 당장 눈앞의 성과만을 재촉하는 일부의 목소리에 송영선 군수의 우직한 '우공이산·정책기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변화하는 진안 만든다!

■매회 평균 200명 총 3만2000여명 경청

진안군이 교육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앞장

칼럼



전용성
진안발전국장

진안군의 '우공이산'을 기대한다

나이 아흔의 우공은 길을 막고 있는 태환산과 왕목산을 뚫기려고 온 가족을 동원해 산의 흙을 파내어 다른 곳으로 날렸다. 이곳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우공은 자손 대에까지 계속 흙 나르기 작업을 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우공의 부녀에 감동한 삼재는 산재를 보내 두 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바로 열자(列子)의 탐문론(探問論)에 나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故事)다.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말로 불가능한 목표라도 우직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유사한 고사성어로 도끼를 잡아 바늘을 만든다(마부위척, 磨斧為針),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쌓여 연못을 이룬다(적수성연, 積水成淵), 리밭이

모여 큰 산을 이룬다(진함태산, 陳翰臺山) 등이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다.

잘 알다시피, 비평란정로는 4년간의 재작 기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그 유명한 '지스타나 성당의 찬양화'를 완성해냈다. 과거는 60여년이 라는 긴 세월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파우스트'라는 대작을 완성했다. 세 계적 건축가 가우디가 40년의 인생을 바쳐 건축해 온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00년이 넘는 지금도 아주 조금씩 지어지고 있다.

각설하고, 진안군 이야기를 해보겠다.

진안군의 2010년 화두가 바로 우공이산(愚公移山)이다. 농업·농촌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한 산 한 산 파내려 가면서 산을 옮긴 것처럼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송영선 군수는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송 군수는 진안의 대표적 상품인 홍삼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의 15곳에 홍삼 판매장을 열고, 홍삼·한방농공단지도 분양에 나섰다. 또 홍삼을 활용해 아토피를 예방하는 '아토피프리 플러스'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진안은 대규모 공단이 없어서 청정 자연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도 심한 편이 아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청정 자연은 인삼과 홍삼을 비롯한 한약재의 주 생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재산인 셈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힘입어 2007년 25농가에 불과했던 연소득 1억 이상 두농수자가 지난해에는 148농가로 늘었고, 올해는 250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질 퇴비사를 설치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홍삼을 비롯해, 약초, 고추, 오디, 갯잎 등 특화 및 틈새 작목을 집중 육성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1억원 이상 고소득농가가 2년 사이 6배로 증가한 것을 보면 진안군이 지향하고 있는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실현의 목표는 결코 무리이거나 허황된 것이 아닐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바닥인 시골 군에서는 다음 선계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연임을 계산한다면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로포장이나 다리 건설 같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멀리 보는 해안이 필요하다.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힘은 단체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다. 발은 현실을 딛고 서 있지만 머리와 가슴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 계획은 1~2년이, 아니라 5년 10년, 더 나가서는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태는 인고의 세월 끝에 얻게 되는 달콤한 결실보다는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잠깐의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오래 꿈꾸어온 큰 목표를 포기하고 보다 쉬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우직한' 우공을 '미련하고 융통성 없는 늑대'로 치부해 버릴지 모를 일이다.

눈앞의 이익과 성과에만 급급한다면, 인생의 성공도 지역과 나라의 발전도 이룰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혹여 지금 당장 눈앞의 성과만을 재촉하는 일부의 목소리에 송영선 군수의 우직한 '우공이산·정책기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본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변화하는 진안 만든다!

송영선 진안군수 인터뷰

2006년 12월 시작한 마이학당, 주민·공무원 시대변화 대응할 수 있는 지식 배움터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강사들 매주 목요일 강의... 다양한 분야 정보 제공

■매회 평균 200명 총 3만2000여명 경청

장안군이 교육을 통한 자민정통력 제고에 앞장서 온 것은 지난 2008년 권선4기 승임선 근무 취임이후부터다.

당시 그는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에게 배움의 기쁨·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발달도 전환을 위해서는 리치해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매우 한 방울 교육 감정을 엿다보니 시골 출가에는 입적 반발도 있었다. 시골과 여산 남자가 이리저리 우물과 북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 제바다 총 군수는 "지속적인 교육은 진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며 "미래를 내다보는 해양교육 가져달라"고 설득을 거듭했다.

신문지식·정보 습득의 장

전문지식·정보 습득의 장

전안군은 광복 물과 깊은 계곡, 기암절벽 등 자연친화적

인 지산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인 명품인 용삼과 경적적 있는 청정농산물도 많다. 이 같은 대부분의 지산을 성장동력으로 키워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진안군은 앞으로 1~2년의 무렵을 중요한 골자로 보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키우는데 힘쓰고 있다.

2006년 12월 시작한 대외해협은 주권과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외관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접하는 배움터다. 국내 최고급 강사들이 매주 특유의 삶이 숨쉬는 지혜와 경험을 120분 동안 쏟아낸다.

장미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장의 첫 감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앓음편지도 왕수근 박사 등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 132명이 다녀갔다.

대회 참가 200명 중 임원 3인, 1,659명이 대구 북교인 연리는
교육을 통해 농업·관광·경제·문화·교육·건강 등 다양
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

연예인 등 화려한 감사진

바야흐로 장수들은 유령 연세인, 전직 장관과 감시인장 등이
이러한 데다 다 알만한 유명인사다.

대 객원교수). 한승헌(전 감사원장), 하영호(탐학가) 등 152명이 감사로 초빙됐다.

강의 내용도 다양하다. 최남선 건국대 보수의 '임, 알아야
어진다', 조동훈 반민정권회의 회장의 '몽학한 가장 만들
기', 공해법 전 의원전반기지의 '외사들이 절대 반해주지 않
는 건강 이야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제

전주에 장선일 교수의 '이토와 없는 세상 만들기', 김병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김아 분과 천천초의 비레', 정진영 한국자유농업연회장의 '유기농업의 필요성과 이레기 천천초 농업의 방향' 등 지어 발전과 인제할 수 있는 아이터에도 받 았다.

특히 김성호 이미지메이킹센터 소장의 리더십을 키우는
책 좋은 이미지, 원인은 중앙대라고 부총장의 일제가 행정
리더십의 변화와 대응' 등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낸
만화 내용도 있었다.

군은 감사들이 다녀간 뒤 내용을 정리해 회마다 김연길씨를 발간하고, 적안지역 학교, 주민자치센터, 문화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고 있다. ·전통시장부흥사업추진과



“첫생 공부 안에 미래가 있다”

“현재 공부 안에서 바래가 있습니다. 그 바래는 진양군의 회령에서 우리 나라의 바래가 된 것입니다.”
 장영전 국사는 “교육의 목표는 청정 농어촌에 보이지 않는 공자는 갈수록 보고 알지 않음은 높아져 온다”며 “교육자들은 정부와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진양의 바래의원을 다루는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 우리 전만의 여건에서 타시도 주민, 타시도 공무원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되는 특수한 위치와 특수가 없다"며 "시와 면에 어울릴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어 올 빈 의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군수는 "저를 2000당원인 시작할 때만 해도 걱정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의 교육 혁신으로
바뀌었다"며 "2000년도 주민주권에 위하는 공약의
포괄에 다양한 분야의 길이내용으로 군민과 공직자 개
개인 분은 물론 지역사와 발전에 이가 되고 싶어 하는 마
이책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온 것은 지난 2006년 민선4기 송영선 군수 취임 이후부터다.

송 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마이학당 운영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당시 그는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에게 배움의 기쁨·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는 마이한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매주 한 번씩 교육 강좌를 열다보니 시행 초기에는 일부 반발도 있었다. 시간과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 때마다 송 군수는 “지속적인 교육은 진안의 변화를 더 빨리 불러올 것”이라며,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달라”고 설득을 거듭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교육은 지속돼 왔다. 그 결과 진안은 교육을 통해 얻어진 힘을 바탕으로 '생태건강도시 진안'을 향한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후략)

“평생 공부 안에 미래가 있다”

“평생 공부 안에서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진안군의 희망이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될 것입

니다”

송영선 군수는
“교육의 효과는 당
장 눈에 보이지 않
지만 시간이 갈수
록 크고 알찬 결실

로 돌아오게 된다"며 "마이학당은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진안의 미래비전을 이루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진안의 여건에서 타시도 주민, 타시도 공무원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낙후의 악순환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어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군수는 “처음 마이학당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안군의 교육 핵심으로 성장했다”며 “2010년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강의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강의내용으로 군민과 공직자 개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마이학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85(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전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47 전주일보빌딩7층 대표이사 임 용 택
심의대상기사	전주일보 2010년 3월 22일자 16면 『‘지성감민’ 시정운영… 참 공약실천 ‘앞장’』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김제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김제시장의 공약사업 결산 및 성과보고회 개최 소식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성감민’ 시정 운영… 참 공약실천 ‘앞장’

이진식 김제시장은 5.31 지방선거 당선 후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전환하여 각 업무기능별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후, 부서별 점검을 통해 5대분야, 40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확정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자체점검을 정례화해서 예산 미확보사업 등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전국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최우수’ 공약사업 98% 이행·모든 분야 A등급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경제활성 기어

김제시는 도내 지자체중 가장 먼저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동참했고, 참 공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

수상 등 두차례의 수상으로 공약이행에 대해 이미 대내외적으로도 검증받은 바 있다.(중략)

지난 16일, 민선4기 김제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결산 및 성과보고회에서 4년동안 이 시장은 공약사업의 98.06%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분야별 평정에 있어서는 5대 분야 모두가 성공적 이행수준(A등급)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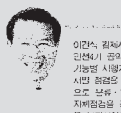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 A등급(성공적 이행수준)으로 평가받기 까지 이시장은 공약 전반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매 분기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장공약사항관리 지침을 제정,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행체계를 견고하게 다져가고 있으며,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시장은 공약의 모토를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로 정하고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성감민(至誠感民) 시정을 운영하며 열악한 지역 여건속에서도 새만금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705억원 규모의 김제 자유무역 지역지정, 새만금 간석지 210만평에 5,000여억원이 투입될 대규모 농어업 회사 설

립, 240억원의 국립 김제 농업생명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 유례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향후 10년후인 2020년경 30만 광역경제도시로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장기검토 대상사업(1개)인 시민이 주인 되는 우수고등학교 설립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예의 주시해서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성감민’ 시정 운영… 참 공약 실천 ‘앞장’



이건식 김제 시장



이
관
가
세
으
자
등
계

김재식은 도내 자치
체니퍼스본 심판은
'참 공안 살인'에 앞
국대니퍼스본 심판은
전국 자치단행령 예
의 경진대외에서 최
의 수상으로 공안단
단행령을 앞둔 김재

이런식 경제시장 환경
지배관계 시장 확보 중
호민선생 경제시장
원천하여 각 업무 기능
고려를 계획한 후 비
해 5대분야 중시세부
완성하였다.

김지사는 그동안 공약사업의 분기별 추진 상황을 자체점검을 통해 확보해 예산이 확보된 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고 청과자으로 권려되었다.

[illegible]

식 김제 시장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 결산 및 성과보고회

지난 10일, 권선47기
한시업에 대한 견산 1
서 4년동안 이 시점

김제시 금악이영농
가 전과 지남까지 추
악축산 4개 사업종
의 지원으로 전산

장기검토 사업이 1개 분야로 추진실적은 육키우기 10개사업중 검토가 1개이며 농업·수산업 중 원료가 2개, 사료·농산물 가공·보존 등 6개, 생산물·사양

단체장 매년
98% 이행 ·
책사업 유치
전국 도시민들

공적 이행으로 나타났으며 25%에 해당하는 1개 사업은 장기검토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이렇기 전 분야에 걸쳐 A등급(상
우수)과 B등급(우수)을 차지한 분야

이시장은 공약 전반에 대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매 분기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장공약사항관리 지침을 제정,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행 여부를 견고하게 다져가고 있으며, 공약이행평가에 대해 철저한 추진

최우수' A등급
한성 기여

기 8기사업에 관료 27개이다.

최근 이명경기는 만
차일 주 4근의 사육어
가운데 임가과 완
만종인 금악으로 국
상수준, 부진, 불이영
였으며 사업이었던 주
회, 개지천, 복복임성
를 수기 일작을 제거하
였고, 열거방법은 최
(A), 보통의 이명수준
임수준(C)으로 정형화
다.

사업별 경영성과와 전
년 대비 성장률에 대한

강민(姜敏) 시정을 분영하며 현
안한 자의 여권속에서도 새만공의 중
심지라는 지리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

현재 70여년 국외의 각종 지주단체
여러가지, 대단히 간직치 210만명
0.000여만명! 무자비한 대국로 놓여있
다! 살인, 240여만대! 국외 길게
열업형 원소수수원 권립을 주려있
는 대규모 범죄자집단을 유지하고 있
는것을 2024년 30만 명정거정
도인도 비정할 제대상을 기려한다.
그러나 '정거정' 대상을(기려)인
'시민이 주이되는 무수고정형'과
'선'은 정거'로 극대정형을 예외 주
해서 가혹한 정거고, 자정형 사립고
등등 유지되는 만만 정거를 강해하
다 결성이다. [동적=현을을 기려]

김제=한유승 기자

분야별 주요 공약사업 평가

업도시로의 확대를 미원하였고 서

지·국·입리적·형상·구·어·설정·노·
'재판금·간제'를·반드시·확보·하·
여·검제·미래·성장·심·역·기·반·구·출·
력·하고·있다.

북한, 곤란한 국도, 김정 김씨
선' 다윈 이론과 브레드를 사용,
축산업과 영농을 통일관리로 세
이 믿고 할 수 있는 막기로 스
고 통관브레드 자방선 로고99 제
계반, 10개 상류부 상류부용과
통관 통일관리, 연방비통관
다. 본에서 비통관비 해야 한다
관비 통관, 거점별 유류농지용
이 현 자에서 식량, 사료장비 제
물들은 불이 고 경관조성과 농가
상에 가져와서 농 품업의 사비
러일것 결정여은 것은 농업으로

백산(인) 일원 293리(89만평)에
서 일관 산업단지화 조성, 특수구
인(SIC) 설립, 산업은행과의 금융
안정협력, 기공식(10.1.20) 등을
경연한지 중8% 입주율 희망해
조기 분양되었고 산업단지가 완
25,000가 앞자리, 4조7천억원의 경
금요자를 거둬 것으로 전망된다.

²⁵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운

복지분야에서도 전국 최초로
인 여성위 생활가정 그룹을
서 2000년 3개소를 시범 운영하
년까지 76개소로 확대하였고, 불
거소들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3
과와 접목한 독거노인 U-Care 시
구출하인 후: 1. 신촌 노인 2,500



민간은 전국 지영단체장 매니페스트

에 보건위생 인사를 설치함으로써 실시간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 예방하는 등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광명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도시환경분야에서는 물과 숲이 부족
한 우리 지역과 특색있는 기호수를 식
재하고, 지구환경을 이룩한 도시 이미
제고효과를 이루는 도시 이미지 제고하
는에 노력한다.

특히, 한대식 및천근로토 심사로 삼
화기근로토는 물, 산, 산호화기근로토
심사 없이 지는는 물, 산호화기근로토
기근로토를 연간 905만1천원의 비용잔과
인원배, 시근로토, 도시환경, 매년잔과
은 2천 700의 효과로 지두한다. (한대식

주변정부를 통해 임시농민주거 현안을
압박해 줄 양대하여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
다. 현안이 처음부터 문화관광정책으로 선
정된 지공산책유산을 통해 바깥세계를 전국
적,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몫을 차지
했으며 지난해 국내·외 관광객 150여
만명이 다녀갔으며, 바깥·안쪽 세계를

경제 과급효과를 거두었다.

문화체육공원에 수백만 관객을 여가·
산책, 운동용 휴게소가 가칭 '열린공원'
으로 조성하는 한편, 주변이 생활체육
공원,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레크리에이션과 인접한 생활체육
활동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은 유급근로자, 저소득층, 장애인, 노

민간장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 41억원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함께 스포츠 이용시설 확대와 여가시설, 생활체육 주변환경을

김종진 의원은 "한국의 47개 출판사가 잘사는 김치책을 만들기 위해 10만 시민과 공무원이 손잡아야겠다"며 "책은 모든 국민과 국가의 200년대비(1.23%)와 재정부담(2.9%)을 줄여주고, 책·노예·비밀정보를 제공했다. 2000년 취임 당시 지방에 254만여 권, 229만여 권을 발행하여 현재 3만여 권이 남아 있는 신간으로 한평생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 = 한우를 기

김제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시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86(자심)
언 론 사	(주)일요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쌍림동 151-11 쌍림빌딩 13층 대표이사 고 재 구
심의대상기사	일요서울 2010년 3월 21일자 12면 『청와대, 정부부처, 지방행정 경험 행정전문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성남시장) 후보예정자의 인터뷰 기사에서 가족관계와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청와대, 정부부처, 지방행정 경험 행정전문가

“융합의 성남, 여성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

“성남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다른 광역시보다 크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사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실천계획으로 성남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난 4일 공직에서 사퇴하고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은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현 차병원 그룹 부회장)의 친동생이다. 특히 유능한 공무원으로 평가를 받아온 황 예비후보는 특히 하계도 청와대에서 세 번씩이나 근무한 경력을 가져 국정운영에 대해서 식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인맥으로는 경남지사에 출마할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후배이며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대학 선후배 관계로도 유명한

다. 풍부한 여야 인맥과 청와대, 정부부처, 지방행정 등 각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을 강조하며 ‘통합의 성남시장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중략)

“출마전 대통령과 사전 교감 있었다” 간접 시사 “황영기 동생 황준기 아닌 황준기 형 황영기로”

- 공직을 사퇴하고 성남시장 출마하게 된 배경은 뭔가.

▲ 성남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이지만 몸집은 광역시 급이다. 그리고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은 여타 광역시보다 크다. 이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하나라고 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대도시와 경쟁을 하고 실제 대도시급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제 경기도가 아닌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청와대와 중앙정부에서 국정운영 시스템을 경험했고 폭 넓은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 성남의 행정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각부처의 장 차관, 청와대 등과의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 (중략)

-성남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 성남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구 시

가지, 판교, 분당 등이다. 각자 성격이 다른데 판교는 판교대로 미래 몇거리를 창조해 가야하고 분당은 리모델링을 통해 강남보다 더 행복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구 시가지는 적어도

10~20년 후에 분당, 판교 보다 더 잘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남을 위해 헌신하겠다.



6.2 지방선거 '4차의 후보' 인터뷰 ① 성남시장 후보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

"성남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다른 광역시 보다 크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사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실천계획으로 성남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난 4월 공직에서 사퇴하고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은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황경기 전 KB금융지주 회장(현 사령원 그룹 부회장)의 친동생이다. 특히 유능한 공무로써 평가를 받아온 황 예비후보는 특이하게도 정

외대에서 세 번씩이나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국정운영에 대해서 식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안목으로는 강남지사에 종말을 앞둔 전 영남부 장관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배이며 민주당 성동경 의원과 대역 선출배 관계로도 유명하다. 공무원, 여인택과 중앙대, 정부부처, 지방행정 등 각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을 강조하며 '통합의 성남시장'이 되겠다'고 출마표를 단것.

청와대, 정부부처, 지방행정 경험 행정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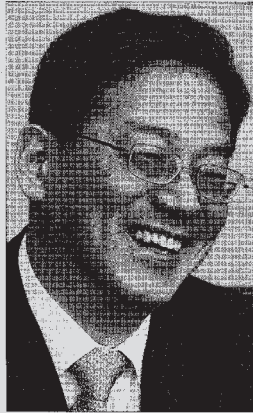
"융합의 성남, 여성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

지난 11월 최근 호청청사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성남시장 출마표를 던진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은 성남시는 "첫걸음"을 뚫힌 도시라고 인연을 소개했다. 공직 첫 보직으로 성남시 감사실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이후 청와대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잠시 성남을 떠났다 2001년 두 번째로 성남으로 이사했다. 이후 이달간 전 행정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명박 대통령 탄핵사 인수와 활동을 통해 여성부 차관으로 종신에 근무했다.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출마 배경과 관련해서 그는 "공직에 있는 사람, 특히 장차관에 있는 인사는 마음대로 출마를 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사정에 의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출마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성남시 정치인 4인 "통합의 성남시를 만들겠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황 전 차관은 "분당은 리모델링을 통해 강남보다 나은 도시로, 판교는 시작하는 명품도시로, 구 시가지는 이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며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황 전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공직을 사퇴하고 성남시장 출마하게 된 배경은 뭔가.

▲ 성남이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물질은 광역시 급이다. 그리고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은 여타 광역시 보다 크다. 이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하나라고 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대도시와 경쟁을 하고 싶게 내도시 급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제 경기도가 아닌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청와대



▲ 워낙 기존에 집 행이 됐던 것이고 정부가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어 지리라 본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이란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민약 3개시가 통합을 추진한다면 이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민주적으로 통합이 된다면 좋겠다.

- 전 여성부 차관으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한다면, ▲ 여성정책 차원에서 여성 문제는 크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재취시 잘 복합과 농업협력사업을 한 것이다. 박재과 경기도가 농업협력 사업을 하면서 단 1원의 한금지 없이 통합 이날 30만원 농지에 경기도가 농약, 비료, 농기구, 인력 등을 제공했다. 2005년부터 지방사업을 해서 2006년 본적 사업에 착수했는데 협력사업 이후 생산량이 두 배 기량 차이가 났다.

- 이대엽 시장의 호청청사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신청사 문제 같은 것도 나름대로 복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시민이나 전문가 의견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속산나 재건축 할 가능성은 있나.

▲ 예산을 다뤄본 사람들은 그런 소리 못한다. 사람들에게 이야기 물어보면 우리 동네에 좋은 건물이 있다는 것은 자랑해야 하는데 우리 동네에 저런 건물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그런 걸 시민들에게 들려줘야 한다고 본다.

- 성남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 성남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구 시가지, 판교, 분당 등이다. 각자 성격이 다른데 판교는 판교대로 미래 몇거리를 창조해 가야하고 분당은 리모델링을 통해 강남보다 더 행복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구 시가지는 적어도 10~20년 후에 분당, 판교 보다 더 잘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남을 위해 헌신하겠다.

〈인터뷰=홍준철 정치부장
질리=전성무 기자〉
maricop@daum.net

"출마전 대통령과 사전 교감 있었다" 간접 시사

"황영기 동생 황준기 아닌 황준기 형 황영기로"

와 중앙정부에서 국정운영 시스템 경험했고 축 넓은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 성남의 행정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각 부처의 장 차관, 청와대 등과의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

- 성남시와의 인연을 소개한다면.

▲ 공직생활을 시작하며 첫 발령을 받은 곳이 성남이다. 고시 합격 해서 수업을 마치고 성남시 감사실장으로 정식 발령 받았다. 첫 보직으로 성남에 6개월 밖에 안됐지만 처음이라 의미가 깊다. 이게 첫 번째 인연이다. 두 번째 인연은 분당 신도시가 조성되고 95년도에 입주할 때였는데 장차중앙고에 입학했다. 이것이 성남과의 두 번째 인연이다.

-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출범이 사실상 무산 되는 분위기인데...

개 2가지로 봐야 한다. 여성들은 신적적 특성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는 성폭력, 가정폭력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여성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또는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불행하게 살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여성 정책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안고 가야 한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게 자치단체가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면 이런 여성 문제들이 줄어든다. 성남에서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보고 싶다.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 하이힐이 보도블록에 끼는 것 등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웠던 것들을 보완 할 것이다

- 30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그간의 업적 중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은.

의 결 번 호	2010지선8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경기헤럴드 경기 군포시 금정동 725-2 태을빌딩 6층 대표이사 임 종 호
심의대상기사	경기헤럴드 2010년 3월 18일자 2면 『민주당은 시장출마를 포기하고 범진보 통합 단일후보에 동참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경기헤럴드는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 군포시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이와 동일한 유형의 후보예정자의 칼럼, 저술을 게재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당은 시장출마를 포기하고 범진보통합단일후보에 동참해야 한다.

한나라당 노재영시장이 구속되었다. 따라서 한나라당 4년의 지방자치가 비리와 뇌물로 종말을 고했다.

주민의 공익을 위한다면서 출범한 한나라당 지방 행정이 지역이권과 시장의 탐욕이 결합되면서 군포시민들을 농락하고 치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반성해야 할 한나라당이 또 다시 시장 후보를 내세우고 시민들에게 행정 권력을 달라고 한다. 무슨 목적인가? 다음에는 비리를 저질러도 법망을 잘 빠져 나갈 수 있는 시장을 내보내겠다는 의미인가? 후안무치와 실종된 책임정치 of 극한을 달리고 있는 것이 현재 군포 선거판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떠한가?

한나라당 시장이 구속되자 다음에는 이미 자신이 시장이나 다 된 것처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내부경선 문제서부터 한국 정치사상 최초인 5야당 선거연합정치에서 군포지역을 민주당 독식지역으로 추진하는 등 오만함과 한나라당과 동일하게 무책임한 정치의 극을 달린다.

이것은 이번 한나라당 4년 이전에 8년간의 민주당 시장 행정에 대한 군포시민의 거센 비판과 거부감에 대한 무시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번 한나라당 4년간의 비리와 주민무시 행정이나 당시 민주당 8년간의 ‘비리백화점’ 행정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객관적 사실 및 군포시민들의 평가를 일거에 망각하는 철면피한 형태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시장이 뇌물비리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과거사가 어떻게 시민들이 무조건 민주당한테 다음 시장을 맡길 것이라는 오만과 판단착오에서 기인한다.(중략)

이에 민주당은 현재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는 5+4 정치협상에서 군포지역을 민주당 독식지역으로 고집하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시장후보를 포기하여 진보정당과 시민진영의 통합적 후보에 동참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오만과 탐욕으로 자신들이 또다시 군포

시정을 독차지하겠다고 후보를 출마시킬시에는 진보정당과 시민후보 진영에서 단일화된 범진보통합후보는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여세를 몰아 군포시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모아 반성할지 모르는 탐욕과 독선적인 민주당까지 심판하게 될 것이다.

2010. 3. 12.

민주노동당 군포시장후보 송재영

성명서

민주당은 시장출마를 포기하고 범진보통합단일후보에 동참해야 한다.

한나라당 노재영시장이 구속되었다. 따라서 한나라당 4선의 지방자치가 비리와 뇌물로 종말을 고했다. 주민의 공익을 위한다면서 출범한 한나라당 지방 행정이 지역이권과 시장의 탐욕이 결합되면서 군포시민들을 농락하고 착취감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반성해야 할 한나라당이 또 다시 시장 후보를 내세우고 시민들에게 행정 권력을 달라고 한다. 무슨 목적인가? 다음에는 비리를 저질러도 법망을 건너쳐 나갈 수 있는 시장을 내보내겠다는 의미인가? 후안무치와 실종된 책임정치의 극한을 달리고 있는 것이 현재 군포 선거권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떠한가?

한나라당 시장이 구속되자 다음에는 이비 자신들이 시장이나 다 된 것 처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내부경선 문제부터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54년 선거 연합정당에서 군포지역을 민주당 독식 지역으로 추진하는 등 오만함과 한나라당과 동일하게 무책임한 정치의 극을 달린다.

이것은 이번 한나라당 4선 이전에 8년간의 민주당 시장 행정에 대한 군포 시민의 거센 비판과 거부감에 대한 무시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번 한나라당 4년간의 비리와 주민부시 행적이나 당시 민주당 8년간의 '비리배화결' 행적이나 대충소이다라는 객관적 사실 및 군포시민들의 원가를 일거에 망각하는 철면피한 행태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시장이 뇌물비리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과거사가 어쨌든 시민들이 부조진 민주당한테 다음 시장을 맡길 것이라는 오만과 판단착오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군포시민들의 자존심을 안겨에 무시하는 것으로 시민이 참주인이 되는 음모를 주권자이자 풀뿌리민주주의를 연화하는 군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염원에 대한 배반이요 정치적

실패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후안무치를 수감하려는 군포시민들의 열렬한 의사에 동참하는 의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시장후보를 포기하고 지역의 진보정당 및 시민진영에서 단일후보로 경쟁하는 후보에 동참함으로써 민주당의 과거사를 반성함과 동시에 범진보세력에 동참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민주노동당과 시민후보 진영은 시민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의 주체가 되어 단일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의 '국민참여단일화경선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풀뿌리지방 자치이기 때문이다. 시민주체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할 때만이 그동안 누락된 당하고 부정비리로 만연한 군포의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주민이 주안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나가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보수정치세력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는 544 정치협상에서 군포지역을 민주당 독식지역으로 고정하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시장후보를 포기하여 진보정당과 시민진영의 통합적 후보에 동참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오만과 탐욕으로 자신들이 또 다시 군포시정을 독차지하겠다는 민주당 후보를 출마시킬시에는 진보정당과 시민후보 진영에서 단일화된 범진보통합후보는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여세를 몰아 군포시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자지를 모아 반성할지 모르는 탐욕과 독선적인 민주당까지 심판하게 될 것이다.

2010. 3. 12.

민주노동당 군포시장후보 송재영

의 결 번 호	2010지선89(자심)
언 론 사	(주)군민신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82-32 대표이사 김 순 란
심의대상기사	거창군민신문 2010년 3월 18일자 2면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거창군민신문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특정인의 거창군수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일부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전재했다. 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거창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기 위한 의견광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6조(의견광고)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유형의 의견광고를 게재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07년 12월 7일.

당시 강석진 거창군수는 임기를 채워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첩보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습적으로 군의회 의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퇴서를 제출한 뒤, 퇴임식도 하지 않은 채 서울로 출행장을 쳤다. 김태호 군수에 이어 두 번째 군수 중도사퇴였고, 모두 유권자인 주민들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정치적 욕망 실현을 위한 사퇴였다. 덕분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4번의 군수선거를 치렀고, 거창의 지방자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수 억원의 주민혈세가 선거비용으로 쓰여 가뜩이나 어려운 거창군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군수직을 중도사퇴 한 뒤 한 달여 만에 거창에 나타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다시 서울로 갔던 강석진 씨, 지방자치의 짓밟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우리 거창에 상처와 고통만 남겼던 강석진 씨가 다시 거창에 왔다. 이번엔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군수”라는 자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군정에 반영해, 주민의 삶과 거창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지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강석진 씨는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낙하산을 타고 나타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창을 떠난 정치인이다. 단언 하건대 강석진 씨는 이미 정치지도자로서의 검증이 끝난 인물이다. 아니, 스스로 정치지도자의 자격을 내동댕이쳤다.

강석진씨께 정중히 충고 드린다. 정말 거창을 사랑한다면, 거창 주민들의 행복을 기원한다면 거창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라. 이것이 강석진씨가 거창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예의이다. (중략)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겨우 아물어 가는 거창 주민들의 가슴에 난 상처가 덧나지 않기를 바라며, 한나라당과 신성범 국회의원 그리고 강석진 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나라당, 신성범 국회의원, 강석진 씨는 진심으로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주민의 혈세로 치러진 지난 군수 보궐선거 비용부터 거창군에 배상하라.

2. 한나라당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강석진 씨를 군수후보군에서 제외시키고,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3. 강석진 씨는 지금이라도 군수 출마를 포기하고, 지난 날 자신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로 상처를 안겨 준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2010. 3. 5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적십자병원노조, 거창 YMCA, 민예총거창지부, 사회보협 노조거창지부, 푸른산내들, 함께하는 거창, 행동하는 언론 소비자연대 거창지부(준), 희봉위생공사노조

성명서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07년 12월 7일,

강석진 씨가 거창군수 선거를 위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약속을 지키라는 주민들의 민원이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한 정면처럼 기술적으로 군의회 의정실 등을 걸어 잠그고 사퇴서를 제출한 뒤, 드디어 석조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출정장을 했다. 김태호 군수에 이어 두 번째 군수 중도사퇴였고, 모두 유권자인 주민들과의 약속을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정치적 욕망 실현을 위한 사퇴였다. 유권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4번의 군수선거를 치렀고, 거창의 지방자치의 실패를 감수시켰다.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수 억 원의 주민혈세가 선거비용으로 쓰여 가뭄이 나 어려운 거창군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군수직을 중도사퇴한 뒤 한 달여 만에 거창에 나타나 국민 여론에 비추도록 등록했으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지지 못했다. 만도 없이 다시 서둘러 갔던 강석진 씨, 지방자치의 실패로 유권자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채 우리 거창에 상처와 고통만 남겼던 강석진 씨가 다시 거창에 왔다. 이번엔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군수"라는 자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거둬야 하고 공정에 반영해, 주민의 삶과 거창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지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임의행위가 아니다. 강석진 씨는 주민들의 뜻과 상반없이 낙하산을 타고 나타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창을 떠난 정치인이다. 단연 하향의 강석진 씨는 이제 정치지도자로서의 실증이 끝난 인물이다. 아니, 스스로 정치지도자의 자격을 대동댕이쳤다.

강석진씨에 정중히 충고 드린다. 정말 거창을 사랑한다면, 거창 주민들의 행복을 기원한다면 거창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라. 이것이 강석진씨가 거창 주민들을 위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제의이다.

이유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거창만의 문화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지역 정치지도자들 지역 주민들이 볼수록 하지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그런데 떠돌아다니는 주민들이 떠돌아다니는 상판없이 대부분 중앙정치권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거나, 중앙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인망으로 낙하하는 식이다.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에 편승해 종속되어 있고, 정당권력은 이것을 합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버렸다.

정당을 통해 기초 행정권위까지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원형론은 지역 정

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한미화하는 구실로 전락해 버렸다.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들이 곳곳에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고, 비리와 개인적 정치적 욕심으로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지방자치의 이름은 훼손해도 그들을 공천한 정당은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은 없고 기득권 정치가만 남아있을 뿐이다. 거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석진 씨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군수를 사퇴할 때 그를 공천한 한나라당은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더구나 군수사퇴 후 한 달여 만에 낙하산인 후보로 나선 그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더니 정권의 핵심 기관인 청와대 직원으로 발탁했다. 그리고 이제 강석진 씨가 스스로 공개했던 군수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신성범 의원은 진정으로 정당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창의 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강력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갖는 폐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겨우 아물어 가는 거창 주민들의 가슴에 난 상처가 덧나지 않기를 바라며, 한나라당과 신성범 국회의원 그리고 강석진 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나라당, 신성범 국회의원, 강석진 씨는 진심으로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주민의 혈세로 치러진 지난 군수 보궐선거 비용부터 거창군에 배상하라.
2. 한나라당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강석진 씨를 군수후보군에서 제외시키고,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3. 강석진 씨는 지금이라도 군수출마를 포기하고, 지난 날 자신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로 상처를 안겨 준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2010. 3. 5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적십자병원노조, 거창 YMCA, 민예총거창지부, 사회보협노조거창지부, 푸른산내들, 함께하는 거창, 행동하는 언론 소비자연대 거창지부(준), 희봉위생공사노조

의 결 번 호	2010지선90(자심)
언 론 사	(주)거창신보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02 대표이사 박 정 자
심의대상기사	거창신보 2010년 3월 9일자 13면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거창군민신문은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특정인의 거창군수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일부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전재했다. 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거창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기 위한 의견광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6조(의견광고)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유형의 의견광고를 게재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지선89(자심) 참조

성명서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07년 12월 7일.

당시 강석진 거창군수는 임기를 채워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첩보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술적으로 군의회 의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회서를 제출한 뒤, 퇴임식도 하지 않은 채 서울로 출행량을 쳤다. 김태호 군수에 이어 두 번째 군수 중도 사퇴했고, 모두 유권자인 주민들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정치적 욕망 실현을 위한 사퇴였다. 덕분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4번의 군수선거를 치렀고, 거창의 지방자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수 억 원의 주민 형세가 선거비용으로 쓰여 가뜩이나 어려운 거창군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군수직을 종료사퇴한 뒤 한 달여 만에 거창에 나타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온갖가다 말도 없이 다시 서울로 갔던 강석진씨. 지방자치란 짓밟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헛심작처럼 내뿜어 쳐 우리 거창에 상처와 고통만 남겼던 강석진씨가 다시 거창에 왔다. 이번엔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군수"라는 자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 담아 듣고 군정에 반영해, 주민의 삶과 거창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지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강석진씨는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낙하산을 타고 나타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창을 떠난 정치인이다. 단언하건대 강석진씨는 이미 정치지도자로서의 검증이 끝난 인물이다. 아니, 스스로 정치지도자의 자격을 내뽐내야 했다.

강석진씨에게 참종히 충고 드린다. 정말 거창을 사랑한다면, 거창 주민들의 행복을 기원한다면 거창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라. 이것이 강석진씨가 거창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예의이다.

이유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거창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지역 정치지도자를 지역 주민들이 뽑도록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민들이 비판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중앙정치권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거나, 중앙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 일방적으로 낙점하는 식이다.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고, 정당공천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버렸다.

정당을 통해 기초 행정단위까지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원칙론은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합리

화하는 구실로 정략해 버렸다.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들이 곳곳에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고, 비리와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해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지방자치의 이념을 훼손해도 그들을 공천한 정당은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은 없고 기득권 행기만 남아있을 뿐이다. 거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석진씨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군수를 사퇴할 때 그를 공천한 한나라당은 주민들이 납득한 만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더구나 군수사퇴 후 한 달여 만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그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더니 정권의 핵심 기관인 청와대 직원으로 발탁했다. 그리고 이제 강석진씨가 스스로 팽개쳤던 군수에 다시 출마하겠다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의 의심을 가질 수 없다. 한나라당과 신상범의원은 지정으로 정당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창의 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강력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갖는 패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제도 개선에 앞장 서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겨우 아물어 가는 거창 주민들의 가슴에 난 상처가 덧나지 않기를 바라며, 한나라당과 신상범 국회의원 그리고 강석진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나라당, 신상범 국회의원, 강석진씨는 진심으로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주민의 형세로 저러진 지난 군수 보궐선거 비용부터 거창군에 배상하라.

-한나라당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강석진씨를 군수후보군에서 제외시키고,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강석진씨는 지금이라도 군수출마를 포기하고, 지난 날 자신의 부책임한 정치적 행위로 상처를 안겨 준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2010. 3. 5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직실지병원노조, 거창YMCA, 민예총거창지부, 사회보험노조거창지부, 푸른산내들, 함께하는 거창,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거창지부(준), 화북위생공사노조

의 결 번 호	2010지선91(자심)
언 론 사	(주)한국시사정보신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82 3층 대표이사 백 강 희
심의대상기사	한국시사 2010년 3월 8일자 14면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10년 3월 8일자 15면 『안녕하십니까?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의 아들 강석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한국시사는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특정인의 거창군수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일부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 및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거창군수)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방법 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6조(의견광고) 및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동일한 유형의 의견광고 및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제하 기사는 2010지선89(자심) 참조

〈거창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의 아들 강석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의 아들 강석진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창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군수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거창을 잠시 떠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번민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거창군민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과 아쉬움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한 채,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배려와 격려로 새 정부의 중추기관인 청와대에서 정치·행정의 경륜을 더 쌓게 되었고, 술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정치상황,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은혜와 거창군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최근에 고위공직자단, 2급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거창 군민 여러분!

거창 군민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은 사람으로서, 장차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거창 군민과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 더 크게 보은하는 길인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거창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보은하고, 거창 군민들의 행복과 희망에도 보은하는 길을 선택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청와대에서의 폭 넓은 국정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공적(公的) 사적(私的)으로 다양한 인맥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토대는 거창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상처의 톱 모델”인 오바마 대통령은 “상처는 희망의 토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 오바마 대통령처럼 저도 “사퇴의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어 내겠습니다. (중략)

농민에게는 농업에서 희망을, 공무원은 업무에서 희망을, 교육, 경제, 일자리 창출에서도 희망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품위와 격조 높은 농업지역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로, 전국 최고의 창

의성과 열정으로 임하는 공무원으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로, 거창 군민 모두가 “희망”으로 넘쳐나는 도시로, 변화를 창조하겠습니다. “희망의 도시 거창!” “살고싶은 도시 거창!”으로 전국 최고의 군으로 일구어내겠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기면서,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3. 5

강 석 진 드림

〈강석진씨 거창군수 출마 선언에 대한 거창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07년 12월 7일.

당시 강석진 거창군수는 임기를 채워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협보영호의 한 장면처럼 기습적으로 군의회 의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퇴서를 제출한 뒤, 퇴임식도 하지 않은 채 서울로 출항장을 쳤다. 김태호 군수에 이어 두 번째 군수 중도사퇴였고, 모두 유권자인 주민들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정치적 욕망 실현을 위한 사퇴였다. 덕분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4번의 군수선거를 치렀고, 거창의 지방자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수 억 원의 주민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쓰여 가뜩이나 어려운 거창군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군수직을 중도사퇴한 뒤 한 달여 만에 거창에 나타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지지 온다간다 받도 없이 다시 서울로 갔던 강석진씨. 지방자치를 짓밟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현실판처럼 내팽개쳐 우리 거창에 상처와 고통만 남겼던 강석진씨가 다시 거창에 왔다. 이번엔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군수”라는 자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군정에 반영해, 주민의 삶과 거창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따라 휘사선택하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강석진씨는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낙하산을 타고 나타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창을 떠난 정치인이다. 단연하건대



강석진씨는 이미 정치지도자로서의 검증이 끝난 인물이다. 아니, 스스로 정치지도자의 자격을 내동댕이쳤다.

강석진씨께 정중히 묻고 드린다. 정말 거창을 사랑한다면, 거창 주민들의 행복을 기원한다면 거창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라. 이것이 강석진씨가 거창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예의이다.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거창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지역 정치지도자를 지역 주민들이 뽑도록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민들이 바람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중앙정치권에 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거나, 중앙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일반적으로 낙점하는 식이다.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에 출제해 종속되어 있고, 정당공천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제도화시켜버렸다.

정당을 통해 기초 행정단위까지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일련된 은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전락해 버렸다.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들이 곳곳에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고, 비리와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해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지방자치의 이념을 훼손해도 그들을 공천한 정당은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은 없고 가득한 쟁기만 남아있을 뿐이다. 거창에서도 마

찬가지였다. 강석진씨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군수를 사퇴할 때 그를 공천한 한나라당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더구나 군수사퇴 후 한 달여 만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그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더니 정권의 핵심 기관인 청와대 직원으로 발탁했다. 그리고 이제 강석진씨가 스스로 맹기쳤던 군수에 다시 출마하겠다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 가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신성범의원은 전 정으로 정당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창과 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

도록 강력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갖는 폐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제도 개선에 앞장 서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겨우 아들이 가는 거창 주민들의 가슴에 난 상처가 덧나지 않기를 바라며, 한나라당과 신성범 국회의원 그리고 강석진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나라당, 신성범 국회의원, 강석진씨는 진심으로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주민의 혈세로 치러진 지난 군수 보궐선거 비용부터 거창군에 배상하라.

—한나라당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강석진씨를 군수 후보군에서 제외시키고,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강석진씨는 지금이라도 군수 출마를 포기하고, 지난 날 자신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로 상처를 안겨 준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2010. 3. 5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직식사법원노조, 거창YMCA, 민예총거창지부, 사회보합노조거창지부, 푸른산대들, 함께하는 거창,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거창지부(문), 화봉여성생소노조

〈거창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의 아들 강석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의 아들 강석진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창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군수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거창을 잠시 떠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고충과 번민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거창군민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과 아식음은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가 일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배려와 격려로 새 정부의 중추기관인 청와대에서 정치·행정의 경륜을 더 쌓게 되었고, 숭현 생활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정치상황,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은혜와 거창군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최근에 고위공직자단, 2급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거창 군민 여러분!

거창 군민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은 사람으로서, 장차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거창 군민과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 더 크게 보은



하는 길인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거창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보은하고, 거창 군민들의 행복과 희망에도 보은하는 길을 선택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청와대에서의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공적(公的) 사적(私的)으로 다양한 인맥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대는 거창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체계적인 "상처의 톱 보낼"인 오

바마 대통령은 "상처는 희망의 모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 오바마 대통령처럼 저도 "사뭇의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어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도 공존합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희망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잘 자라려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병환하던 시절에도 부보 맞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재혼 실패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부모 일장에 서브려고 노력하였고, 열등감 투성이의 상처를 희망과 자신감의 꽃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여 "희망을 상징하는 리더"가 된 오바마!

저는 오바마가 보여주는 희망의 미소를 좋아하고, 또 닮고 싶습니다. 거창 곳곳을 누비며, 중앙을 오

르나리며 거창군민의 행복을 위한 희망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창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통합시도 가는 새로운 정치 상황에서, 거창이 중심이 되도록 반드시 일구어 내겠습니다.

농민에게는 농업에서 희망을, 공무원에게는 업무에서 희망을, 교육, 경제, 일자리 창출에서도 희망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품위와 격조 높은 농업지역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로, 전국 최고의 창의성과 열정으로 일하는 공무원으로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로, 거창군민 모두가 "희망"으로 넘쳐나는 도시로, 변화를 창조하겠습니다. "희망의 도시 거창!" "살고 싶은 도시 거창!"으로 전국 최고의 군으로 일구어내겠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기면서,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

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3.5.

강 석 진 드림

의 결 번 호	2010지선92(자심)
언 론 사	(주)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이 동 화
심의대상기사	서울신문 2010년 3월 25일자 30면 『지방자치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노원구청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방자치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실시된 지 16년째다. 적잖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경찰권이나 교육자치권도 없고 행정권조차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많은 문제들을 피부로 느꼈다. 지방자치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건전한 지방자치 재정의 기반 조성이다. 정부는 2008년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담보가 시급하다. 재산세 이외에 이렇다 할 재원 마련의 길이 없는 상태에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비 등을 충당하느라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 8대 2(서울시 9대1)에 머무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각종 권한을 과감히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주택 건축·도시계획 인허가 등 권한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틀어쥔 채 획

일적 통제를 하고 있다.

셋째, 권력기관화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제도의 통·폐합 개선이다. 기초단체에서 무엇 하나 하려면 현장행정을 잘 모르는 위원회의 제도에 부딪힌다. 부결 또는 수차례 반려됨으로써 사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폐해가 커진다. 과거와는 달리 이전 기초자치단체도 전문가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넷째, 경직된 관료주의 폐해다. 현 정부 들어서 행정규제 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관료사회는 규제 마인드에 젖어 있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건의해도 긍정적 사고로 검토하기는 커녕 묵살해 버리기 일쑤다. 이러한 규제마인드가 사회적 생산성과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다.

지방자치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발언대

이 노 군
서울 노원구청장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실시된 지 16년째다. 적잖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경찰권이나 교육자치권도 없고 행정권조차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첫째, 건전한 지방자치 재정의 기반 조성이다. 정부는 2008년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담보가 시급하다. 재산세 이외에 이렇다 할 재원 마련의 길이 없는 상태에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비 등을 충당하느라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

아진다. 따라서 현재 8대 2(서울시 9대1)에 머무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각종 권한을 과감히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주택 건축·도시계획 인허가 등 권한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틀어쥔 채 획일적 통제를 하고 있다.

셋째, 권력기관화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제도의 통·폐합 개선이다. 기초단체에서 무엇 하나 하려면 현장행정을 잘 모르는 위원회의 제도에 부딪힌다. 부결 또는 수차례 반려됨으로써 사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폐해가 커진다. 과거와는 달리 이전 기초자치단체도 전문가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넷째, 경직된 관료주의 폐해다. 현 정부 들어서 행정규제 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관료사회는 규제 마인드에 젖어 있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건의해도 긍정적 사고로 검토하기는 커녕 묵살해 버리기 일쑤다. 이러한 규제마인드가 사회적 생산성과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93(자심)
언 론 사	(주)강원도민일보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7 대표이사 안 형 순
심의대상기사	강원도민일보 2010년 3월 22일자 19면 『강원교육 단단하게 키우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원도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 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 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원교육 단단하게 키우기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즉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을 좌우한다'는 환경론은 교육학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상식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의 미래, 강원도의 미래를 함께 보았다.

강원지역 학생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0.9%, 중학교 4.8%로 각각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고등학교도 4.1%로 8위를 차지하는 등 전년도에 이어 다시 한 번 우수한 학력 향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양구는 초등학교 평가에서 기초미달 비율이 사회과목에서 1명만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 나머지 4개 과목은 0.0%라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며, 한국 사교육 시장의 상징인 서울 강남의 초교생들의 학력과 비교해도 앞서는 것이어서 더욱 값지고 의미가 있다.

전형적인 농촌에 인구도 2만여명에 그치고 1개의 분교를 포함한 11곳의 초등학교에 학생 수도 1411명에 불과한 작은 고을에서 기적이 나온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교육 성공 모델로서 주목 받고 있는 일본 아키타 산골학교의 교육기적에 필적할 만하다. 일본 47개 지역 가운데 평균소득이 최하 위권인 아키타 현이 도쿄 등 대도시를 제치고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일본 열도가 발각 뒤집혔는데,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학원도 적고 경제력도 없는데다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었기에 더욱 놀라게 했던 것 같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양구와 많이 닮아 있어 세간에 '양구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듯하다.

하지만 양구의 기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교육, 방과 후 학교, 종일 돌봄 교실 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는 등 열정적인 교사와 학교, 교육청, 학부모들의 관심과 함께 지자체의 지원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것이다. 양구군은 강원도 최초로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양구군 지방세의 40%를 교육발전 전입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61억 4600여만원이 조성된 양록장학금은 작년에만 167명의 학생에게 총 1억 940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지역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였다.

또 양구고와 양구여고가 기숙형 공립고 전환, 강원외고 개교 등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교육을 위해 떠

나는 사람들에게 강원교육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강원도의 오랜 문제점인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막 희망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 강원교육을 더욱 단단하게 키우고 길게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차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인 무료급식을 하루 빨리

도입하여 더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장들은 의지를 가지고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학업성과와 함께 높은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과 시·군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백년지대계를 실천할 수 있는 명석을 펼쳐주는 일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기 찬
도의원(양구)

교육의 '반익민 브러쉬', 즉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을 좌우한다'는 환경론은 교육학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상식이 되어버린사 오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의 미래, 강원도의 미래를 함께 보았다.

강원지역 학생의 기초학력비율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0.9%, 중학교 4.8%로 각각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고등학교도 4.1%로 8위를 차지하는 등 전련도에 이어 다시 한 번 우수한 학력 향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양구는 초등학교 평가에서 거초비율 비율이 사회과목에서 1명만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 나머지 4개 과목은 0.0%라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며, 한국 사교육 시장의 상징인 서울 강남의 초교생들의 학력과 비교해도 앞서는 것이어서 더욱 값지고 의미가 있다.

전원적인 농촌에 인구도 2만여명에 그치고 1개의 분교를 포함한 11곳의 초등학교에 학생 수도 1411명에 불과

강원교육 단단하게 키우기

한 작은 교육에서 각색이 나온 것이다.

자립자치단체 공교육 성공 모델로서 주목 받고 있는 양구 아키타 산공학교의 교육기서에 필적할 만하다. 일본 47개 지역 가운데 평균소득이 초하위권인 아키타 현이 도쿄 등 대도시를 제치고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는데, 전원적인 농촌마을에 학원도 적고 경제력이 없는데다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었기에 더욱 놀

라게 했던 것 같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양구와 많이 닮아 있어 세간에 '양구의 각색'이라는 말이 나오는 듯 하다.

하지만 양구의 기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학생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교육, 방과 후 학교, 통일 돌봄 교실 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는 등 열정적인 교사들 학교, 교육청, 학부모들의 관심과 함께 지자체의 지원이

립고 전환, 강원외고 개교 등 방목교 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교육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에게 강원교육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강원도의 오랜 문제점인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막 희망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 강원교육을 더욱 단단하게 키우고 길게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차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인 무료급식을 하루 빨리 도입하여 더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장들은 의지를 가지고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학업성과와 함께 높은 인성을 갖춘 인재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과 시·군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백년지대계를 실천할 수 있는 명석을 펼쳐주는 일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94(자심)
언 론 사	(주)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대표이사 유 제 철
심의대상기사	광주일보 2010년 3월 18일자 17면 『학교 내 강압·폭력 절대 안된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남도 교육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학교 내 강압·폭력 절대 안된다

지난 2월 경기도의 어느 중학교에서 벌어진 졸업생들의 뒤풀이 행태는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졸업식을 마친 남녀 학생들이 교복을 벗고 인간 피라미드를 쌓고, 그것도 모자라서 길거리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졸업식 때마다 일부 학생들이 교복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리고 달걀을 던지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대낮에 알몸으로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고등학교 선배들의 강압에 따른 것이라고는 밝혔지만, 선배들 또한 학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학교교육에 어딘가 빈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먼저 교복을 찢는 까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졸업을 했으니 더 이상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이야말로 물건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소비행태가 아닌가 싶다.

요즘 여러 학교에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는데, 자기가 안 입으면 후배들에게라도 물려주

면 될 일이다. 교복값이 비싸다고 학부모들이 나서 공동구매 운동을 벌이는 학교도 많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복을 물려주면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는가.

과거에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서도 자기의 학창시절을 기념하기 위해 교복을 소중히 간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졸업식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기도 전에 멀쩡한 복장에 이물질을 뿌리고 갈기갈기 찢고 있으니, 아무리 풍요의 시대를 사는 청소년이라지만 물건을 아끼는 정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이 교복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경시 풍조도 한 몫을 한 듯해 더욱 씁쓸하다. 과거에는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눈물까지는 안 흘리더라도 졸업식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경건해야 하는데,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별다른 감동이 없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너무 삭막한 느낌이 들 정도다. 오늘날 누구나 받는 것이 학교교육인데, 학교 졸업이 무슨 큰일이냐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그리고 선배들이 졸업식 뒤풀이를 빙자해 후배들에게 옷을 벗도록 한 것은 분명 하나의 폭력이다. 아무리 졸업을 축하한다지만 추운 날씨에 누군들 야외에서 옷을 벗고 싶겠는가?

선배들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

겠지만, 문제는 그런 강압과 폭력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왜 하필 옷을 벗는 일을 시켰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같은 모든 것은 교육자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

학생들의 비뚤어진 행동을 비난하고 처벌하는데 그칠 것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아울러 인생의 통과의례의 하나인 졸업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전하게 기념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인성교육을 통해 예절과 질서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공동체사회에서 섬김과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기 고

한 이 춘



지난 2월 경기도의 어느 중학교에서 벌어진 졸업생들의 뒤돌아 행태는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졸업식을 마친 남녀 학생들이 교복을 벗고 인간 피라미드를 쌓고, 그것도 모자라서 길거리를 환보했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졸업식 때마다 일부 학생들이 교복을 벗거나 밑가투를 뿌리고 달걀을 던지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대낮에 알방으로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학생들이 교복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경시 풍조도 한 몫을 한 듯해 더욱 씁쓸하다. 과거에는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눈물까지는 안 흘러더라도 졸업식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경건해야 하는데,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발다른 감동이 없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너무 삭막한 느낌이 들 정도다. 오늘날 누구나 받는 것이 학교교육인데,

학교 내 강압·폭력 절대 안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고등학교 선풍기의 강압에 따른 것이라고는 밝혔지만, 선풍기를 또한 학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학교교육에 어딘가 큰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먼저 교복을 벗는 까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졸업을 했으니 더 이상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이야말로 불건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소비행태가 아닌가 싶다.

요즘 여러 학교에서 교복 불려주기 운동을 벌이는데, 자기가 안 입으며 후배들에게라도 불려주면 될 일이다. 교복값이 비싸다고 학부모들이 나서 공동구매 운동을 벌이는 학교도 많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복을 불려주면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가.

과거에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서도 자기의 학창시절을 기념하기 위해 교복을 소중히 간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졸업식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기도 전에 말쑥한 복장에 이복질을 뿌리고 감기잡기 붓고 있으니, 아무런 풍요의 시대를 사는 청소년이라지만 물건을 아끼는 정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 졸업이 무슨 큰일이냐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그리고 선풍기가 졸업식 뒤돌아 행태를 빙자해 후배들에게 옷을 벗도록 한 것은 분명 하나의 폭력이다. 아무런 졸업을 축하한다지만 추운 날씨가 누군들 아와 여서 옷을 벗고 싶겠는가?

선풍기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겠지만, 단서는 그런 강압과 폭력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왜 하필 옷을 벗는 일을 시켰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같은 모든 것은 교육자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

학생들의 비뚤어진 행동을 비난하고 처벌하는데 그칠 것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아울러 인생의 통과례의 하나인 졸업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전하게 기념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인성교육을 통해 예절과 질서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공동체사회에서 섬김과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전남대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의 결 번 호	2010지선95(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인천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96-1 대표이사 이 광 림
심의대상기사	인천신문 2010년 3월 10일자 14면 『끊이지 않는 교육비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 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 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끊이지 않는 교육비리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연일 고구마 줄기처럼 나타나는 각종 교육 비리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 아마도 이를 비단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로만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필자는 1년 반 전쯤에 교육계의 부조리와 교육비리 척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장천감오(長千監五·교장이 되려면 1천만원, 교감은 500만원을 써야 한다는 말)’를 소재로 기고를 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모든 교장과 교감들이 전부 ‘장천감오’로 승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필자는 교육계의 ‘오래되고 구조화된 일부 인사 비리’를 반드시 없애려는 마음에서 글을 썼었다. 이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로 인해 일부 교육 단체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었다.

다시 불거지는 교육계의 비리를 보면서, 그 비리들이 전체 교육자들이 아닌 일부 교육계 권력 상층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이기에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반성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인사 비리, 각종 학교 공사 비리, 심지어 방과후 학교 관련 금품수수 등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한 문제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 부실 공사와 관리 소홀 문제, 학교 시설 부실 시공 및 부적절한 계약과 관리·감독으로 재정 손실을 끼친 문제, 학교 급식 업체 선정, 순위를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이해할 수 없는 급식 행정 문제 등이다. 또 몇 년 전 교육과 학기기술부의 인천시교육청 감사 시 장학관과 교장 승진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아 당시 교육감 등이 ‘줄 경고’를 받았던 문제, 최근 ‘호화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문제 등 일일이 지면에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인천에도 있었다.

이런 교육계 부조리가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 재발해 온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 방편, 뉘집식 대응을 해온 교육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요즘 다시 교과부가 교육비리 근절 및 청렴 대책을 세우라고 일선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리자 인천의 경우 입고 있던 옷을 뒤집어만 입듯이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대책을 개선안으로 내놓고 있다. 문제는 외부나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보

여주시식 개선책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된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의 문제' 인데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전히 못 느끼는 듯하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모든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고 장기화할 때 반드시 부패한다. 교육 권력을 차지한 이들 역시 그들의 권력을 보다 오래 유지하기 위해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한다. 이들은 인사와 예산을 독점할 수 있는 '교육 마피아'를 형성해 깨지지 않는 끈끈하고 두터운 패밀리 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들이 한 팀이 돼 서로에게 적절한 이익을 보전해주며 관계를 유지하는 한 이들이 그 어떤 교육 비리를 저질러도 웬만해선 밖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 그 중 어느 한 사람이 불공정하게 작은

파이를 배분받았다고 느끼거나 조직에서 배제되어 배반할 때만이 이 교육 마피아 조직에 균열이 생긴다. 이것이 마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 교육 비리가 증명하듯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자녀교육을 잘해 주리라 믿으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서 성실하게 교육세를 내는 시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교과부나 검·경이 이번에는 전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을 발표하며,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란 각오 없이는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단지 내성만 키울 수 있다. 더 이상 자라나는 아이들 앞에 교육계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끊이지 않는 교육비리

기 고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연인 교우매 줄기처럼 나타나는 각종 교육 비리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 아마도 이를 비단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로만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필자는 1년 반 전쯤에 교육계의 부조리와 교육 비리 척결을 외치는 마음에서 '장천감오(長千監久·교장이 되려면 1천만 원, 교감은 500만 원을 써야 한다는 말)'를 소재로 기고할 때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모는 교장과 교감들이 전부 '장천감오'로 승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아주고 있었지만 필자는 교육계의 '오래되고 구조화된 일부 인사 비리'를 반드시 없애려는 마음에서 글을 썼었다. 이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일부 교육 단체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었다.

다시 볼거리는 교육계의 비리를 보면, 그 비리들이 전체 교육자들이 아닌 일부 교육계 권력 상층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가기에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반성은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서울시교육청의 장차관 인사 비리, 각종 학교 공사 비리, 심지어 방과후 학교

관련 과목수수 등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그 동안 이상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한 문제들이 피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임대형 민사사업(BTL) 학교 부설 공사와 관리 소홀 문제, 학교 시설 부실 시공 및 부적절한 계약과 관리·감독으로 재정 손실을 끼친 문제, 학교 급식 업체 선정 순위를 앞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순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어려울 수 없는 급식 행정 문제 등이다. 또 몇 년 전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천시교육청 감사 시 정 약관과 교장 승진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아 당시 교육감 등이 '폴 경고'를 받았던 문제, 최근 '호화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문제 등 일일이 지면에 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인천에도 있었다.

이런 교육계 부조리가 하루 아침에 이

런 것이 어쨌든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지적을 받고 개선되지 않고 반복, 재발해온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 방편, 껍질식 대응을 해온 교육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요즘 다시 교과부가 교육비리 근절 및 청렴 대책을 세우겠다고 인천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자 인천의 경우 인근 있던 웃음 뒤집어만 입듯이 예년과 반반 다르지 않은 대책을 개선안으로 내놓고 있다. 문제는 외부나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개선책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된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의 문제'인데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전히 못 느끼는 듯하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모든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고 장기화할 때 반드시 부패한다. 교육 권력을 차지한 이들 역시 그들의 권력을 보다 오래 유지하기 위해 이익

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들은 인사와 예산을 독점할 수 있는 '교육 마피아'를 형성해 깨지지 않는 끈끈하고 두터운 패밀리 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들이 한 팀이 돼 서로에게 적절한 이익을 보전해주며 관계를 유지하는 한 이들이 그 어떤 교육 비리를 저질러도 웬만해선 밖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 그 중 어느 한 사람이 불공정하게 작은 파이를 배분받았다고 느끼거나 조직에서 배제되어 배반할 때만이 이 교육 마피아 조직에 균열이 생긴다. 이것이 마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 교육 비리가 증명하듯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자녀교육을 잘해 주리라 믿으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서 성실하게 교육세를 내는 시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교과부나 검·경이 이번에는 전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을 발표하며,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란 각오 없이는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단지 내성만 키울 수 있다. 더 이상 자라나는 아이들 앞에 교육계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96(자심)
언 론 사	(주)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농수산물로 100 대표이사 변 근 원
심의대상기사	충북일보 2010년 3월 24일자 14면 『세종시 해법, 오로지 원안 사수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천군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세종시 해법, 오로지 원안사수뿐

요즈음 세종시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이는 2002년 대선에서부터 2005년 행복도시 건설특별법 통과, 그리고 2010년 현재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심지어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5회 전국지방선거까지 그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정치권의 핫 이슈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건설은 2002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인구분산을 이유로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 안은 국가 대단위 국책사업에서 매번 소외됐던 충청 이남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향수로 작용했고, 실제 이 공약으로 2002년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증론이다.

또한 2005년에는 한나라당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합의해 취 현재의 세종시 원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나라당은 분당으로 치닫는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한나라당 갈등도 위험수위로 치닫는 양상이다.

세종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그 중에서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정수뇌부와 경기도지사는 충청도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쏘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의 세종시 발언은 연일 화제가 됐다. 지난해 3월 세종시 중단발언에 이어 9월에는 뉴욕투자유치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에 박은 말뚝 중에서 제일 잘못된 말뚝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은 지난 ‘2차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에서 “행정부 15부 중 9부, 약 70%가 이전함으로써 나타나는 사실상 수도분할로 인한 부작용에 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세종시의 도시개념을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다. 즉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법개정을 공식 선언했던 것이다. 국정수뇌부와 경기 지사의 발언을 보고 있자니, 정말 실소할 노릇이다. 세종시가 사실상 수도분할이라면 과거에 수도권에 과밀됐던 인구를 분산한다는 이유로 이전한 과천청사와 대전청사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

통령에 대해 인신공격 수준의 맹비난을 일삼는 경기도지사의 신중치 못한 행위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세종시 건설에 대한 김 지사 개인의 소견에 불과함에도 마치 청와대, 광화문청사, 국회 등 중앙정부가 모두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인 양 선언적인 발표를 일삼는 것은 그답지 못한 행위이다.

이제 수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국회에 이송되면 의결만 남아있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 등 세종시 발언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예로 지난해 10·28 재보궐 선거와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듯 정치권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세종시에 대한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정부여당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대해 국민 찬반투표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충청도민들은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종시 건설은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법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그리고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 뿐이라고 믿는다.

현재로서 세종시 해법은 공통분보를 찾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정치적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오로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라는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가 바로 지금이 시점이다.

· 기 고

세종시 해법, 오로지 원안사수뿐



박 양 규

전원국무회의장

요즈음 세종시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이는 2002년 대선에서부터 2005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과, 그리고 2010년 현재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심지어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5회 전국지방선거에까지 그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정치권의 핫이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건설은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인구분산을 이유로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 안은 국가 대단위 국책사업에서 매년 소외됐던 충청 이남의 사람들에게 위와와 향수로 작용했고, 실제 이 공약으로 2002년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또한 2005년에는 한나라당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합의해 적 현자의 세종시 원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나라당은 분당으로 치닫는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한나라당 갈등도 위험수위로 치달는 양상이다.

세종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그 중에서 정당한 총리를 비롯한 국정수뇌부와 경기도지사는 충청도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찔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의 세종시 발언은 연일 화제가 됐다. 지난해 3월 세종시 중단발언에 이어 9월에는 뉴욕 투자유치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박은 땅속 중에서 제일 잘못된 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은 지난 ‘2차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에서 “행정부 15부 중 9부, 약 70%가

이전함으로써 나타나는 사실상 수도 분할로 인한 부작용에 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세종시의 도시개념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다. 즉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법개정을 공식 선언했던 것이다. 국정수뇌부와 경기 지사의 발언을 보고 있자니, 정말 실소를 낄 노릇이다. 세종시가 사실상 수도분할이라면 과거에 수도권에 과밀했던 인구를 분산한다는 이유로 이전한 과천청사와 대전청사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아가 안타까운 것은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 수준의 맹비난을 일삼는 경기도지사의 신중치 못한 행위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세종시 건설에 대한 김 지사 개인의 소견에 불과함에도 마치 청와대, 광화문청사, 국회 등 중앙정부가 모두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인 양 선언적인 발표를 일삼는 것은 그답지 못한 행위이다.

이제 수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국회에 이송되면 의결만 남아 있었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 등 세종시 발언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예로 지난해 10·28 재보궐 선거와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듯 정치권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세종시에 대한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정부여당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대해 국민 찬반투표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충청도민들은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종시 건설은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법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그리고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 뿐이라고 믿는다.

현재로서 세종시 해법은 공통분보를 찾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정치적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오로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라는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가 바로 지금이 시점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97(자심)
언 론 사	(주)충청투데이 대전광역시 서구 둔원1길 50 대표이사 정 남 진
심의대상기사	충청투데이 2010년 3월 19일자 17면 『‘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 우리가 주역』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여군수)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 우리가 주역

2010세계대백제전은 반세기 동안 지역축제로 이어져온 백제문화제를 세계인과 함께하는 지구촌 축제로 만들기 위한 메카 프로젝트이다.

백제는 한성, 웅진, 그리고 사비로 이어지는 700년간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만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중국,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멀리 인도에 이르기 까지 진출한 백가제해(百家濟海)의 대제국이다.

1500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다시금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지구촌이 공감하고 세계인이 함께 하는 소중한 인류 문화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2010세계대백제전이다.

처음 계획당시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개최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 부여군에서는 하나 하나 착실한 준비를 해왔고 충청남도가 함께 확대되어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정식 승인과 함께 국비도 지원을 받게 되었다.

국도비등 240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30일간 열리는 행사기간에 외국 관광객 20만 명을 비롯한 260만 명의 관광객

이 찾게 되고 관광객 단순 소비지출만으로도 17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백년이 넘는 백제문화제는 불과 수 년전에 비해 규모면에서도 몇십배의 성장을 이뤘고, 지역 축제에서 국내 축제로 다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2010세계대백제전을 준비하면서 부여의 관광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고속도로와 논산간, 공주간 국도가 확장 개통되었고, 백제문화단지 진입도로, 세계대백제전 지원도로 등 관련 교통망의 확충과 함께 주무대인 백제문화단지가 상반기에 조기 완공되고, 롯데 부여 리조트 콘도미니엄도 7월 오픈된다.

백마강을 오르내릴 7척의 황포돛배, 전선 지중화와 아름다운 간판 그리고 소나무길 등 도시경관과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구드래길 음식특화거리, 서동요 역사관광지와 서동공원, 부소산과 구드래의 사비 왕궁원과 백제역사마을 조성 등 손님맞이를 위해 한참 단장중에 있다.

올 해는 한국방문의 해이자 대충청 방문의 해이다. 그리고 세계대백제전이 개최된다.

한국관광공사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한마음으로 노력하고자 업무 협약을 가졌고, 부여를 비롯해 교토, 파리, 아테나, 비엔나 등 55개국 85개 회원도시로 구성된 세계역사도시연맹에서는 공식 후원을 결정하였고, 136개국 1000여 자치단체 모임

인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진흥기구, 그리고 국내의 12개 자매도시들이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대백제전의 초등학교 교과서 편성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초등학교생들의 현장학습 과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대백제전이 부여와 충청남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격조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찌우도록 프로그램하고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을 잘 맞는 일이다.

우리 지역의 영원한 고객이 되도록 꼼꼼히 배려하고 모셔야 한다.

군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절실한 가운데 우리군에서는 세계대백제

전 성공을 위한 범군민지원협의회의 발족을 앞두고 있고 군민 모두가 백제역사를 새롭게 펼치는 세계대백제전의 성공 주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0세계대백제전이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의 힘찬 도약과 성장을 위한 무한 동력이 되도록 군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가야할 때이다.

특별기고



김 무 한
부여군수

2010세계대백제전은 반세기동안 지역축제로 이어져온 백제문화제를 세계인과 함께 하는 지구촌 축제로 만들기 위한 메카 프로젝트이다.

백제는 한성, 웅진, 그리고 사비로 이어지는 700년간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만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중국,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멀리 인도에 이르기까지 진출한 백가제해(百家濟海)의 대제국이다.

1500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다시금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지구촌이 공감하고 세계인이 함께 하는 소중한 인류 문화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2010세계대백제전이다.

처음 계획당시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 부여군에서는 하나 하나 확실한 준비를 해왔고 충청

남도가 함께 하면서 확대되어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정식 승인과 함께 국비도 지원을 받게 되었다.

국도비등 240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30일간 열리는 행사기간에 외국 관광객 20만 명을 비롯한 250만 명의 관광객이 찾게 되고 관광객 단순 소비지출만으로도 17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백년이 넘는 백제문화제는 불과 수 년전에 비해 규모면에서도 몇십배의 성장을 이뤘고, 지역 축제에서 국내 축제로 다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2010세계대백제전을 준비하면서 부여의 관광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고속도로와 논산간, 공주간 국도가 확장 개통되었고, 백제문화단지 진입도로, 세계대백제전 지원도로 등 관련 교통망의 확충과 함께 주무대인 백제문화단지 상반기에 조기 완공되고, 롯데 부여리조트 콘도미니엄도 7월 오픈된다.

백마강을 오르 내릴 7척의 홍포돛배, 전선 지중화와 아름다운 간판 그리고 소나무길 등 도시경관과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구도래길 음식특화거리, 서동요 역사관광지와 서동공원, 부소산과 구도래의 사비 왕궁원과 백제역사마을 조성 등 손님맞이를 위해 한창 단장중에 있다.

올 해는 한국방문의 해이자 대중형 광군의

해이다. 그리고 세계대백제전이 개최된다.

한국관광공사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자 업무 협약을 가졌고, 부여를 비롯해 교토, 파리, 아테나, 비엔나 등 55개국 85개 회원도시로 구성된 세계역사도시연맹에서는 공식 후원을 결정하였고, 138개국 1000여 자치단체 모인인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진흥기구 그리고 국내와 12개 자매도시들이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대백제전의 초등학교 교과서 편성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초등학교생들의 현장학습 과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대백제전이 부여와 충청남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격조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찌우도록 프로그램하고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을 잘 맞는 일이다.

우리 지역의 영원한 고객이 되도록 꼼꼼히 배려하고 모셔야 한다.

군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절실한 가운데 우리군에서는 세계대백제전 성공을 위한 범군민지원협의회의 발족을 앞두고 있고 군민 모두가 백제역사를 새롭게 펼치는 세계대백제전의 성공 주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0세계대백제전이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의 힘찬 도약과 성장을 위한 무한 동력이 되도록 군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가야 할 때이다.

‘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 우리가 주역

의 결 번 호	2010지선98(자심)
언 론 사	(주)일간시사신문(시사신문) 서울 마포구 상수동 332-1 시사포커스빌딩 대표이사 강 동 오
심의대상기사	시사신문 2010년 3월 21일자 5면 『시민이 잘 사는 ‘시민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시민이 잘 사는 ‘시민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민 원희룡, 서울시의 꿈과 희망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당동, 봉천동, 흑석동……독산동, 도곡동, 원효로……저는 20대 이후 서울 시내 30여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서울의 어두운 면, 밝은 면 구석구석을 온 몸으로 겪으며 제 삶의 터전인 서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시민들의 땀과 눈물로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서울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기도 했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서울이 지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6%로 16개 시도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월급을 저축해 내 집을 마련하려면 40년이 걸립니다. 교육비리는 1등이고, 학업성취도는 꼴찌입니다.

합계출산률은 0.96으로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되곤 했습니다.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서울의 걸모습

을 치장하고 업적을 과시하는 데에 쓰였습니다.

시민들이 아파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서울시의 행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서울이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시정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시정의 제1목표는 시민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서울시민으로 사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걱정 없이 키우고,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일자리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유 있게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원희룡,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 위험이 있는 곳,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시정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교육, 집 문제 해결에 두겠습니다. 일.교.집 시장이 되겠습니다.

4년간 5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보육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 학습을 통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멈춰버린 뉴타운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풀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철

도지하화, 광화문 광장 재구성, 저탄소 녹색도시 플랜을 통해서 서울의 공간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품격있는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결치레 행정을 배격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남의 돈 쓰듯 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부패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소통과 나눔, 균형과 조화를 시정철학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도약기에 있습니다. 인구와 자원이 모여 있는 서울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서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칼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 원희룡, 서울시의 꿈과 희망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에 있습니다. 사당동, 봉천동, 흑석동…… 독산동, 도곡동, 원효로…… 저는 20대 이후 서울 시내 30여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서울의 어두운 면, 밝은 면 구석구석을 온 몸으로 겪으며 제 삶의 터전인 서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시민들의 꿈과 눈물로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서울시민

시민이 잘 사는 '시민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기도 했지만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서울이 지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8%로 16개 시도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월급을 저축해 내 집을 마련하려면 40년이 걸립니다. 교육비라는 1등이고, 학업성취도는 꼴찌입니다.

합계출산율은 0.96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되곤 했습니다.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서울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업적을 과시하는 데에 쓰였습니다.

시민들이 아파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서울시의 행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서울이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시정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의 제1목표는 시민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서울시민으로 사는 것이 행복해야 합

니다. 아이를 낳아서 걱정 없이 키우고,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일자리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유 있게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원희룡,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 위함이 있는 곳,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시장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교육, 집 문제 해결에 두겠습니다. 일, 교, 집 시장이 되겠습니다.

4년간 5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보육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학습을 통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멈춰버린 뉴타운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풀어나 서민과 중산층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철도지하화, 광화문 풍광 재구성, 저탄소 녹색도시 플랜을 통해서 서울의 공간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품격 있는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결치레 행정을 배격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남의 돈 쓰듯 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부패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소통과 나눔, 균형과 조화를 시정철학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도약기에 있습니다. 인구와 자원이 모여 있는 서울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서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99(자심)
언 론 사	(주)일간시사신문(시사신문) 서울 마포구 상수동 332-1 시사포커스빌딩 대표이사 강 동 오
심의대상기사	시사신문 2010년 3월 28일자 5면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서울시민은 지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움직임은 부산한데, 시민들은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위기는 벗어났는데 취직은 여전히 어렵고 아이 낳아 잘 기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서울을 만든 어르신들의 노후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600년 수도 서울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종시 문제로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자긍심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논란에서 보듯, 600년 수도의 역사와 문화를 지혜롭게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인과 어울려 살아가기에 서울은 여전히 불편한 도시입니다. 수도 서울의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임무는 막중한입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생활 챙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 분할 세력에 맞서, 서울 발전의 잠재력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분할 시정, 대권 시정이 아닌 실용 시정과 생활 시정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합니다.

일 중심의 실용 시정,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하는 생활 시정만이 위기의 서울을 구하고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도분할을 주장하는 서울시장, 대권만을 바라보는 서울시장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 시장 후보로 나선 이유입니다. 현명한 서울시민과 우리 당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당과의 소통 부족, 전시행정, 예산 낭비 논란이 새로운 서울 시정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에서 또 반복되어야 할까요? 당의 노선과 항상 차이를 보여주던 분이 한나라당의 대표로 나서 시민들의 지지를 뒤흔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수도 서울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준비하고 서울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도 서울 재창조의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수도 서울 재창조 위원회’를 만들어 산업경

제, 역사문화, 관광여가, 삶의 질 모든 측면에서 동아시아시대의 세계 4대 도시 서울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첨단산업, 창조 문화 산업, 녹색 산업 등을 서울 각 권역 특성에 맞게 활성화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즐겁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 보육, 교육, 안전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젊은 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 구현으로 은퇴한 노장년층이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이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품격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생활권 단위의 쉼터와 녹색 공간, 열린 공간을 확대해 거리, 공원, 광장 등을 마음껏 즐기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 정책으로 대기를 개선하고 사람 중심의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방법도 바꾸겠습니다. 시민소통시장으로 시민의 창의와 감성을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알뜰시장으로 세금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협력시장으로 당정과 긴밀히 협력하고 구청과의 논의하여 시의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고 담대하게 실천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서울 시민의 꿈과 희망을 반드시 실현시켜 성공한 여성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칼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서울 시민은 지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장의 움직임은 부산한데, 시민들은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위기는 벗어났는데 취직은 여전히 어렵고 아이 낳아 잘 기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서울을 만든 어른들의 노후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600만 수도 서울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종시 문제로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자긍심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논란에서 보듯, 600년 수도의 역사와 문화를 지혜롭게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인과 어울려 살아가기에 서울은 여전히 불편한 도시입니다. 수도 서울의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생활 행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 분할 재정에 맞서, 서울 발전의 잠재력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분할 시정, 대권 시정이 아닌 실용 시정과 생활 시정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합니다.

일 중심의 실용 시정,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하는 생활 시정만이 위기의 서울을 구하고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도분할을 주장하는 서울시장, 대권만을 바라보는 서울시장에게 서울의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 시장 후보로 나선 이유입니다. 현명한 서울시민과 우리 당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당과 의 소동 부족, 전신행정, 예산 낭비 논란이 새로운 서울 시장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에서 또 반복되어야

할까요? 당의 노선과 향상 차이를 보여주는 분이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지지를 땃듯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수도 서울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준비하고 서울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룰기 위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도 서울 재창조의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수도 서울 재창조 위원회'를 만들어 산업경제, 역사문화, 관광여가, 삶의 질 모든 측면에서 동아시아시대의 세계 4대 도시 서울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첨단 산업, 창조 문화 산업, 녹색 산업 등을 서울 각 권역 특성에 맞게 활성화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즐겁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 보육, 교육, 안전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젊은 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 구현으로 은퇴한 노장년층이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이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품격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생활권 단위의 쉼터와 녹색 공간, 열린 공간을 확대해 거리, 공원, 광장 등을 마음껏 즐기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 정책으로 대기를 개선하고 사람 중심의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방법도 바꾸겠습니다. 시민소통시장으로 시민의 창의와 감성을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알뜰시장으로 세금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협력시장으로 당정과 긴밀히 협력하고 구청과의 논의하여 시의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고 담대하게 실천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서울 시민의 꿈과 희망을 반드시 실현시켜 성공한 여성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00(자심)
언 론 사	(주)일간시사신문(시사포커스) 서울 마포구 상수동 332-1 시사포커스빌딩 대표이사 박 강 수
심의대상기사	시사포커스 2010년 3월 31일자 13면 『시민이 잘 사는 '시민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2010지선98(자심)〉 참조

의 결 번 호	2010지선101(자심)
언 론 사	성북뉴스 주식회사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90-701 대표이사 박 정 자
심의대상기사	성북신문 2010년 3월 18일자 3면 『학교 운동장 잔디운동장으로 전환해야』 제 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와 관련하 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 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학교 운동장 잔디운동장으로 전환해야

요즘 관내 송곡초등학교에 가보면 아이들 노는 모습이 달라졌다.

맨 땅에서는 서서 뛰며 놀 수 밖에 없던 아이들이 잔디운동장에서는 앉아서 놀고 엎드려서 놀며, 뒹구면서 노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성장한다고 본다.

예전에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거칠게 욱하며 싸우며 놀던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잔디운동장으로 전환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인간친화적인 모습으로 노는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차분해지고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지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며 학교내외 폭력 예방교육에도 일조하게 된다는 점은 교육현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자연친화적인 잔디운동장의 긍정적인 역할은 매우 많다.

첫째 아동들의 건강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된다. 늘 맨 땅에서 노는 아이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기 일쑤이다. 그러나 잔디운동장은 먼지가 없으므로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자명한 일이다. 더구나 신발에 묻어 들어오던 먼지가 교실이나 복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학교 전체에 먼지가 없어 아동들의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더구나 잔디 운동장에 뿌리는 칩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코팅된 것을 사용하면 아이들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또 체육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맨 땅으로 된 운동장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질퍽질퍽하여 한 동안 체육수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잔디운동장은 물 빠짐이 좋아 비가 그친 뒤 한시간 정도가 지나면 언제든지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눈이 그치면 잔디운동장에서는 흙이 묻지 않은 눈으로 눈싸움을 하고 놀 정도로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아래 공부에만 내몰려 달리 뛰어놀기 어려운 아동들의 체육수업은 그나마 보장되는 신체활동이다. 하지만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빼 먹었던 체육수업을, 비만 그치면 운동장에서 정상적으로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으니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관내에 좀 더 많은 잔디운동장이 신설

되어야 하는 이유다.

부디 더 많은 학교 운동장에 잔디운동장시설이 갖추어지길 바라며, 월곡축구잔디구장, 월곡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등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교체해 건강한 신체활동을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움이 필요한 자명한 일이다. 너무나 신발에 묻어 들어오면 먼지가 교실이나 복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학교 전체에 먼지가 없어 아동들의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더구나 잔디 운동장에 뿌리는 점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코팅된 것을 사용하면 아이들

학교 운동장 잔디운동장으로 전환해야

정형진 국회의원(민주당 바선거구)

요즘 관내 송곡초등학교에 가보면 아이들 노는 모습이 달라졌다.

맨 땅에서는 서서 뛰며 놀 수 밖에 없던 아이들이 잔디 운동장에서는 앉아서 놀고, 엎드려서 놀며, 뒹구면서 노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성장한다고 본다.

예전에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거칠게 욕하며 싸우며 놀던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잔디운동장으로 전환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인간친화적인 모습으로 노는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차분해지고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지면 생활지도와 인성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며 학교내외 폭력예방교육에도 일조하게 된다는 점은 교육현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자연친화적인 잔디운동장의 긍정적인 역할은 매우 많다.

첫째 아동들의 건강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된다. 맨 땅에서 노는 아이들은 머리카락이 발끝까지 온통 먼지를 뒤집어쓰기 일쑤이다. 그러나 잔디운동장은 먼지가 없으므로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에 매우

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또 체육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맨 땅으로 된 운동장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질퍽질퍽하여 한 동안 체육수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잔디운동장은 물 빠짐이 좋아 비가 그친 뒤 한 시간정도가 지나면 언제든지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눈이 그치면 잔디운동장에서는 흙이 묻지 않은 눈으로 눈싸움을 하고 놀 정도로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아래 공부에만 내몰려 달리 뛰어놀기 어려운 아동들의 체육수업은 그나마 보장되는 신체활동이다. 하지만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배 먹었던 체육수업을, 비만 그치면 운동장에서 정상적으로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으니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어것이 관내에 좀더 많은 잔디운동장이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다.

부디 더 많은 학교 운동장에 잔디운동장시설이 갖추어지길 바라며, 월곡축구잔디구장, 월곡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등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교체해 건강한 신체활동을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09(자심)
언 론 사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대표이사 임 재 울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0년 4월 2일자 21면 『‘유천호’ 강화군수 출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화군수)와 관련하여, 유천호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 소식과 함께 유 후보의 경력과 자질 등을 지극히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천호’ 강화군수 출마

유천호. 강화 바닥서 그 이름 모르면 ‘강화인’이 아니다. 그만큼 유명세가 붙은 사나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화’를 훌쩍 넘어섰다. 인천의 인물로 자치사에 기록될 한 페이지를 남겨놓고 있으니 그렇다. 유천호(인천광역시) 의원은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압축한 상징적 인물이 됐다. 스스로 삶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자치의 시대가 그를 키웠다. 권위주의시대였다면 한량명부에 들어가야 맞다. 유천호 의원의 강화군수 출마소식에 접하면서 얼핏 떠오른 그에 관한 콘셉트다.

유천호 강화군수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차렸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겠다는 결의다. 일성은 간결했다. “강화 재정자립도 16%서 뱅뱅 돌고 있다”고 강화 문제의 핵심을 짚어냈다. “이것 가지고 강화민의 삶의 질, 어찌고 한다면 그것은 난센스”라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특산물 생산을 연계해야 한다”고 그는 자신에 찬 그림을 그려냈다.

우리는 강화를 너무도 잘 안다. ‘항몽 40년’ 서

출발할 만큼 강화인의 인고(忍苦) 역사는 한국인의 모진 역사와도 같다. 유천호는 이런 기질적, 그리고 강화적 언저리를 훑어내는 데 익숙해, 한때 기자의 소양을 발휘했던 흔적을 더듬을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 ‘공명심’에 강했다. 아니 강화를 누구보다 아꼈다. 강화를 위해선 뒷골목은 그에게 없었다. 큰 길만을 걸을 만큼 강화를 위해서라면 전면에 나서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문교사회위원장을 맡으면서 강화 위한 활약은 그래서 강화인 모두가 높이 샀다. 학교마다 스쿨버스터 실내체육관 건설은 역시 그다웠다. 그의 강화를 위한 실용적 지방의원의 기질을 보여준 대목이다. 초선에 인천시의회 부의장 자리 올라탄 것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자치단체의 관료화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진부한 모습 그대로다. 탁상 아닌 현장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경영이 주축을 이룰 때 주민과 호흡을 함께할 수 있다. 오랜 관료화의 수직적 행정은 ‘자치’가 아닌 시혜의 중앙집권적 틀을 벗지 못한 기형이다. 스스로가 찾고 개척하는 길만이 중앙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는 첩경이다. 바로 이것은 오늘의 강화군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단체장의 CEO적 기질이 광폭(廣幅)으로 치달아 주민서비스 결여를 자초할 위험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제어장치로 행정을 기능적으로 책임화

시키는 단체장의 이원적 경영 스타일로 조정될 수 있다. 유천호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책임행정체제 도입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구상이 바로 이 같은 새 모델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강화군은 그 특성상 새로운 경영 모델을 도입할 필요는 있다. 16%라는 부끄러운 자립도의 열악성을 벗지 못하면 강화는 영영 중앙의 수직적 간섭의 예속 틀에서 헤어날 수 없다. 자치시대란 바로 한 번쯤 이런 낙후성의 늪을 벗어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자치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화와 유천호라는 특수관계는 新강화시대를 열어가는 기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천호 의원은 그의 지난 족적에서 어쩌면 기이하다할 만큼 의외성을 많이 보여 왔다. 이번 유천호의 강화군수 출마가 의외성과 필연성이 함께 하는 이유다. 낙후지역의 자립화, 새로운 개척 기대를 해볼 만 하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가져다주는 의외성의 미래다. 유천호 모델 말이다.

사 설

‘유천호’ 강화군수 출마

유천호, 강화 바닷서 그 이름 모르면 ‘강화인’이 아니다. 그만큼 유명세가 높은 사나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화’를 훌쩍 넘어섰다. 인천의 인물로 자치사에 기록할 한 페이지를 남겨놓고 있으니 그렇다. 유천호(인천광역시) 의원은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압축한 상징적 인물이 됐다. 스스로 삶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자치의 시대가 그를 키웠다. 권위주의시대였다면 한량 명부에 들어가야 맞다. 유천호 의원의 강화군수 출마 소식에 접하면서 얼핏 떠오른 그에 관한 콘셉트다.

유천호 강화군수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차렸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겠다는 결의다. 일성은 간결했다. “강화 재정자립도 16%서 뱅뱅 돌고 있다”고 강화 문제의 핵심을 짚어냈다. “이것 가지고 강화민의 삶의 질, 어쩌고 한다면 그것은 난센스”라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특산물 생산을 연계해야 한다”고 그는 자신에 찬 그림을 그려냈다.

우리는 강화를 너무도 잘 안다. ‘항몽 40년’서 출발할 만큼 강화인의 인고(忍苦) 역사는 한국인의 모진 역사와도 같다. 유천호는 이런 기질적, 그리고 강화적 삶의 언저리를 훑어내는 데 익숙해, 한때 기자의 소양을 발휘했던 흔적을 더듬을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 ‘공명심’에 강했다. 아니 강화를 누구보다 아꼈다. 강화를 위해선 뒷골목은 그에게 없었다. 큰 길만을 걸을 만큼 강화를 위해서라면 전면에 나서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문교사회위원장을 맡으면서 강화 위한 활약은 그래서 강화인 모두가 높이 샀다. 학교마다 스쿨버스며 실내체육관 건설은 역시 그다웠다. 그의 강화를 위한 실용적 지방의원의 기질을 보여준 대목이다. 초선에 인천시의회 부의

장 자리 올라탄 것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자치단체의 관료화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진부한 모습 그대로다. 탁상 아닌 현장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경영이 주축을 이룰 때 주민과 호흡을 함께할 수 있다. 오랜 관료화의 수직적 행정은 ‘자치’가 아닌 시혜의 중앙집권적 틀을 벗지 못한 기형이다. 스스로가 찾고 개척하는 길만이 중앙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접경이다. 바로 이것은 오늘의 강화군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단체장의 CEO적 기질이 광폭(廣幅)으로 치달아 주민서비스 결여를 자초할 위험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제어장치로 행정을 기능적으로 책임화시키는 단체장의 이원적 경영 스타일로 조정될 수 있다. 유천호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책임행정체제 도입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구상이 바로 이 같은 새 모델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강화군은 그 특성상 새로운 경영 모델을 도입할 필요는 있다. 16%라는 부끄러운 자립도의 열악성을 벗지 못하면 강화는 영영 중앙의 수직적 간섭의 예속 틀에서 헤어날 수 없다. 자치시대란 바로 한 번쯤은 이런 낙후성의 늪을 벗어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자치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화와 유천호라는 특수관계는 新강화시대를 열어가는 기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천호 의원은 그의 지난 족적에서 어쩌면 기이하다할 만큼 의외성을 많이 보여 왔다. 이번 유천호의 강화군수 출마가 의외성과 필연성이 함께 하는 이유다. 낙후지역의 자립화, 새로운 개척 기대를 해볼 만 하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가져다주는 의외성의 미래다. 유천호 모델 말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10(자심)
언 론 사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대표이사 임 재 울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0년 4월 9일자 21면 『‘안상수’를 다시 공천하는 이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사업추진 실적 및 자질 등을 지극히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안상수’를 다시 공천하는 이유

<인천시장>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경기지사 후보와 인천광역시장 후보에 현 단체장을 각각 공천하기로 한 것은 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사에는 김문수 지사가, 인천시장에는 안상수 현 시장이 각각 한나라당 후보로 나란히 공천됐다. 물론 이런 결정은 예상했던 일이지는 했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와 달리 안상수 시장은 한동안 경합자가 있어 설왕설래 했던터다. 안 시장의 8년 치적과 크게 벌여 놓은 사업의 연결성을 높이시 ‘안상수’를 빼면 그 뒷처리를 감당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안 시장이 벌여 놓은 사업이 ‘결자해지’의 뜻에서 선택됐다고 봐야 옳다.

우리는 지난 8년 재임기간 추진한 안상수 시장의 인천 개혁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다. 상전벽해라 할 인천의 개혁정책은 ‘안상수’가 아니고는 감히 개혁의 고삐를 잡을 사람은 없다. 그만큼 안 시장은 타고난 결단력과 후천적 경륜이 포개져 이루어 놓은 새 인천의 적임자로 꼽혀왔다. 누구나 납이 해 놓은 성과물에는 쉽게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출발하는 신도시와 달리, 기존의 도시를 시대에 맞게 바꾸기란 간단치 않다. 기존 도시의 개혁들은 보존과 개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안상수 시장이 8년전 새 인천 프로그램을 만들때 가장 고심했던 것이 이 대목이었다. 안상수의 새 인천 기본틀은 구상부터가 달랐다. 이미 8년전 글로벌 시대의 미래를 먼저 그는 떠올렸다. 인천의 입지적 조건을 최대 활용, 세계적 중심도시의 꿈을 그는 펼친 것이다. 이른바 동북아 ‘허브도시’다.

안 시장의 구상은 일단 ‘인천경제자유구역’이란 신경제의 틀속에서 이루어 나갔다. 그러기 위해선 외국인천투자기업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이 선결 과제로 지목됐다.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구상발표가 바로 그것이다. 구체안으로 2003년 송도, 영종, 청라지구의 우리나라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탄생이 그래서 됐다. 인천의 새 역사를 여기서 새로 쓰는 출발점으로 기록된다. 안상수 시장이 만들어 가고 있는 새 인천의 진행형은 그래서 그 누구도 바라 볼 수 없을 획기적 인천개혁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그러나 갈길은 아직 멀었다. 인천 도시 균형의 콘셉트는 보이지만 그 찬란한 인천경제의 매듭은, 그리 쉽게 다가서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외교는 그만큼 우리의 생각처럼 간단치 않다. 확실히 보여

야 들어오는 외국 기업인의 속성은 여전히 현재 인천 미래를 잣대로 가려 놓고 있다. 안상수 시장의 필요와 공천이 불가피한 이유다.

우리는 이같은 '인천경제'의 진행형에서 안상수를 굳이 한번 더 인천시장으로 권유한 한나라당의 공천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갈대밭에서 출발한 인천의 역사는 15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많은 역사의 질곡속에서도 끈기로 오늘에 이른 인천

이다. 그러나 글로벌 비즈니스시대를 눈앞에 둔 인천은 앞이 그리 밝게만 보이지 않는다는데 고민이 있다. 오늘의 이 고민을 잘 넘어서야 안상수도 살고 새 인천의 여명이 보일 수 있게돼 있다. 이번 안상수 시장의 또 한번 출마 권유는 그래서 인천시민에게도 새롭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위기속의 인천을 감당할 인물로 안상수를 공천한 이유다.

사 설

'안상수'를 다시 공천하는 이유

<인천시장>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경기지사 후보와 인천 광역시장 후보에 현 단체장을 각각 공천기로 한 것은 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사에는 김문수 지사가, 인천시장에는 안상수 현 시장이 각각 한나라당 후보로 나란히 공천됐다. 물론 이런 결정은 예상했던 일이지는 했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와 달리 안상수 시장은 한 동안 경합자가 있어 설왕설래 했던터다. 안 시장의 8년 치적과 크게 벌여 놓은 사업의 연결성을 높이샤 '안상수'를 때면 그 뒷처리를 감당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안 시장이 벌여 놓은 사업이 '결자해지'의 뜻에서 선택됐다고 봐야 옳다.

우리는 지난 8년 재임기간 추진한 안상수 시장의 인천 개혁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다. 상전벽해라 할 인천의 개혁정책은 '안상수'가 아니고는 감히 개혁의 고평을 잡을 사람은 없다. 그만큼 안 시장은 타고난 결단력과 추진적 경향이 포개져 이루어 놓은 새 인천의 적인자로 꼽혀왔다. 누구나 남이 해 놓은 성과물에는 쉽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출발하는 신도시와 달리, 기존의 도시를 시대에 맞게 바꾸기란 간단치 않다. 기존 도시의 개혁 틀은 보존과 개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안상수 시장이 8년전 새 인천 프로그램을 만들때 가장 고심했던 것이 이 대목이었다. 안상수의 새 인천 기본틀은 구상부터가 달랐다. 이미 8년전 글로벌 시대의 미래를 먼저 그는 떠올렸다. 인천의 입지적 조건을 최대 활용, 세계적 중심 도시의 꿈을 그는 펼친 것이다. 이른바 동북아 '허브 도시'다.

안 시장의 구상은 일단 '인천경제자유구역'이란 신

경제의 틀속에서 이루어 나갔다. 그러기 위해선 외국 인천투자기업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이 선결 과제로 지목됐다.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구상발표가 바로 그것이다. 구체안으로 2003년 송도, 영종, 청라지구의 우리나라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탄생이 그래서 됐다. 인천의 새 역사를 여기서 새로 쓰는 출발점으로 기록된다. 안상수 시장이 만들어 가고 있는 새 인천의 진행형은 그래서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을 획기적 인천개혁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그러나 길길은 아직 멀었다. 인천 도시 균형의 콘셉트는 보이지만 그 찬란한 인천경제의 매듭은, 그리 쉽게 다가서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외교는 그만큼 우리의 생각처럼 간단치 않다. 확실히 보여야 들어오는 외국 기업인의 속성은 여전히 현재 인천 미래를 잣대로 가려 놓고 있다. 안상수 시장의 필요와 공천이 불가피한 이유다.

우리는 이같은 '인천경제'의 진행형에서 안상수를 굳이 한번 더 인천시장으로 권유한 한나라당의 공천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갈대밭에서 출발한 인천의 역사는 15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많은 역사의 질곡속에서도 끈기로 오늘에 이른 인천이다. 그러나 글로벌 비즈니스시대를 눈앞에 둔 인천은 앞이 그리 밝게만 보이지 않는다는데 고민이 있다. 오늘의 이 고민을 잘 넘어서야 안상수도 살고 새 인천의 여명이 보일 수 있게돼 있다. 이번 안상수 시장의 또 한번 출마 권유는 그래서 인천시민에게도 새롭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위기속의 인천을 감당할 인물로 안상수를 공천한 이유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14(자심)
언 론 사	(주)수도권일보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39-3 대표이사 강 신 한
심의대상기사	수도권일보 2010년 4월 15일자 17면 『“인구 50만명 도시에 걸맞는 시정 펼치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파주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시장활동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구 50만명 도시에 걸맞는 시정 펼치겠다”

변화와 경쟁을 주도하는 파주시, 그 발전에 만족할 수 없으며 안주는 퇴보를 뜻한다는 류화선 파주시장은 어제의 성공방식으로 내일의 변화를 읽을 수가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류 시장은 인구 50만명의 도시 확장을 앞두고 시민행정주의를 나열, 3대 중점시책인 민원행정, 깨끗한 파주 만들기, 클로징10 시책의 결실을 떠나 더 새롭고 더 많이 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이용 촉진 및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춘 녹색생활 시민운동 확대를 이끌어 내 그린(Green)을 핵심가치로 자연과 생태를 보전하고 친환경 공간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시정을 이끌어갈 책임감이 무겁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DMZ 생태자원화 및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는 무관함을 강조, 흔들림 없는 평화와 반영의 길을 가기 위해 공무원은 원칙과 상식에 맞는 합법·합리·투명·윤리행정을 금과옥조로 삼아 정직과

신뢰의 시장구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일보 창간 19주년을 맞아 시류에 영향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시정,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파주 이미지 및 파주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끌어 올린 류화선 파주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편의 행정을 들어본다.(중략)

올해 증정 추진할 문화 사업에 대해

공공도서관을 대대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읍·면·동 별로 1개 또는 인구 5만명당 1개 시립도서관을 목표로 우선 52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다. 이 예산으로 5개 도서관 건립예정인 올해 말까지 10개의 시립도서관을 갖게 된다.

100평 이상의 시립도서관 건립과는 별도로 소규모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작은 도서관은 인구 1만명당 1개를 목표로 4~5개 시범·운영방안 검토 및 군부대에 병영도서관 2곳을 만들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독서스쿨을 운영해 큰 성과를 봤다. 이들 도서관은 앞으로 독서스쿨의 거점으로 운영돼 창작·예술활동의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파주삼릉정비 및 장릉개방을 문화재청에 요구해 실현시키고 제2출판도시 내에 3만1967㎡규모의 문화시설 용지 확보계획을 갖고 있다.(중략)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가지, 벌레 먹은 나무가 있더라도 숲은 숲이다. 소 지역 이기주의나 소집단 할거주의에 매몰되기 보다는 파주의 발전이나 미래를 내다보고 항상 대중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의 결 번 호	2010지선115(자심)
언 론 사	(주)일간시사신문(시사포커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32-1 시사포커스빌딩 대표이사 박 강 수
심의대상기사	시사포커스 2010년 4월 15일자 17면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행정 실정 바로 잡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관악구청장) 후보예정자의 경력 및 구체적인 공약과 구정활동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상국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부패하고, 무능한 한나라당 지방행정의 실정을 바로 잡겠다”며 “깨끗하고, 21세기 지방행정의 비전을 관악구에서 실현시켜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겠다”고 이번 6.2 지방선거 민주당 관악구청장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관악구청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김영부 전 노사모 회장 등 유망인사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김 예비후보가 이들과 함께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예비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써 서울시 및 구청에서 30여 년 간 주택, 복지,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고, 1급 고위공무원으로 검증된 ‘행정전문가’라는 평가 받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서울시 행정 경력을 두루 섭렵하면서 민주당 당원은 물론 서울 시 주민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가 관악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배경이 남다르다. 그는 출마의 변에서 “현재 한나라당 출신 전 관악구청장이 비리로 연루되면서 구청장

직을 상실해 구행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 그 결과 53만의 관악구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지금 구민들께서 청렴한 전문행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를 구현하고자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고 말했다.(중략)

이처럼 김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기 전에 지방선거 첫 관문인 민주당내 경선을 임하는 필승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관악구청이 비리로 얼룩진 만큼, 먼저 구정을 투명하고 주민편익의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관악구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자체감사 시 민간 전문가 명예감사관제 도입, 시민사회 단체 참여 구정협의체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민본정신을 구현을 하고자 ▲행정정보공개 범위 확대 ▲민원처리 실시간 온라인 공개시스템 확립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강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신규도입 ▲주요사업주민사전설명회 개최 등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관악구의 주거환경과 교통 환경 개선 등 구민들의 생활 편의 도모는 물론 관악산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민·중산층이 살기 좋은 관악구 건설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래시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 및 소

외계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보육시설개선, 확충 등 여성사회 참여여건 향상 ▲초·중·고 교육환경 및 의무교육 대상 무상급식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국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부패하고 부능한 한나라당 지방행정의 실정을 바로 잡겠다”며 “깨끗하고, 21세기 지방행정의 비전을 관악구에서 실현시켜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겠다”고 이번 6.2 지방선거 민주당 관악구청장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관악구청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김영부 전 노사모 회장 등 유망 인사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김 예비후보가 이들과 함께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예비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써 서울시 및 구청에서 30여 년 간 주책, 복지,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고, 1급 고위공무원으로 급등된 ‘행정전문가’라는 평가 받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서울시 행정 경력을 두루 섭렵하면서 민주당 당원은 물론 서울 시 주민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 김상국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행정 실정 바로 잡겠다”

김 예비후보가 관악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배경이 담겨있다. 그는 출마의 변에서 “현재 한나라당 출신 전 관악구청장이 버리고 연두 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해 구청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 그 결과 53만의 관악구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지금 구민들에서 청명한 선문행정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이를 구현하고자 출마표를 던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주민과 가까이하면서 직접 주민들에게 봉사는 주민위주의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당장 포부를 밝힌 뒤, “품격 있는 행정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21세기 지방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민주당이 추구하듯 정치사회 개혁, 지방분권, 경제정의 실현의 가치가 구성(構政) 전반에 확연히 드러나도록 힘을 쏟겠다”면서 “특히 복지와 일자리 창출, 계층·세대 양성을 아우르는 지방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월 관악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직후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고 자 불특정 주변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선거캠프를 조직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핵심 지원 조직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원으로 지역대의원 및 당원 가족, 각 단체 순방, 주요 거점별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활용 등 대중 접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오는 지방선거가 IT선거전을 방불케 하면서, 김 예비후보는 20~40대 젊은 층의 표심을 사기 하고자 미니홈피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구축해 적극 활용하면서 유권자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김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가운데 지방선거 첫 관문인 민주당내 경선을 임하는 발승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본지와 의 인터뷰에서 “현재 관악구청이 버리고 연두된 만큼, 먼저 구청을 투명하고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관악구 인사위원회 의 부인사 참여를 통한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자체감사 시 민간 전문가 명예감사관제 도입, 시민사회 단체 참여 구청협의회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민본정신을 구현하고자 ▲행정정보공개 범위 확대 ▲민원처리 실시간 온라인 공개시스템 확립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강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실행 도입 ▲주요사업주민사실설명회 개최 등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관악구의 주거환경과 교통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도 모든 물론 관악산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민·중산층이 살기 좋은 관악구 건설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래시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보육시설개선, 확충 등 여성사회 참여여건 향상 ▲초·중·고 교육환경 및 의무교육 대상 무상급식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세진/비판론 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116(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한샘이엔씨(교육연합신문)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5-1 청진네오스빌 205호 대표이사 한 승 균
심의대상기사	교육연합신문 2010년 3월 31일자 7면 『‘작은 도서관’…지역 ‘삶의 질’ 향상의 터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파주시장) 후보예정자의 인터뷰 기사에서 지방 교육발전과 관련 구체적인 시정활동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작은 도서관’…지역 ‘삶의 질’ 향상의 터전

(전략) ‘작은 도서관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다.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 우선 이 지역의 현실을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다.

파주는 현재 교육부문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소극적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만 간다. 파주는 현재 신도시 건설과 대형 생산시설, 출판인쇄단지의 조성 등으로 서울 등 타지에서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교육문제이다. 채 완공조차 되지 않는 신설 학교, 학교 주변의 정비되지 않은 환경 등 시설문제를 비롯해 교육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주민이 자녀를 일산이나 서울 등 다른 지역학교로 보내고 있다.

결국 현재 파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학부모들이 실력과 안전 모든 면에서 학교를 믿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육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하고 관할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의체계도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동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도서관’은 파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은 비용으로도 파주의 부족한 교육과 문화인프라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본인은 파주시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미 ‘문고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다.

문고사업을 더욱 확대해 동네주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책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작은 도서관 운동’이다.(중략)

파주의 출판, 문화, 인쇄 인프라를 활용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앞서 말한 것처럼 파주에는 국내 최대의 출판·인쇄단지 '북시티'가 있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기관 및 기업과 협조한다면 가격이나 품질 등에 있어 훨씬 좋은 조건으로 양질의 도서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작은 도서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북시티'에서는 해마다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

한 다양한 도서관 관련 축제와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목한다면 도서관마다 더욱 알찬 특화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작은 도서관'과 '북시티'가 연계해 파주만의 독특한 도서·문화축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시티'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순천을 넘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도서관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다. (후략)

'작은 도서관'...지역 '삶의 질' 향상의 터전

경기 파주시장 박석호 예비후보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 설립...『교육·문화·북지』의 지역공동체 형성
출판·인쇄단지 인적·적극 활용...예산은 「가치」인력양성책」 통해 조성

경기 북부의 대세로 꼽히는 출판·문화·북지라는 키워드를 연마해 온 예비후보 박석호는 지난 20일(수) 있는 선출직 선거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 파주시 시장 후보인 박석호 예비후보.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그는 파주시 시장에 출마한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17(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김천문화신문 경북 김천시 모암동 161-3 3층 702 대표이사 박 해 경
심의대상기사	김천문화신문 2010년 3월 23일자 2면 『비전, 누가 갖다주는 것 아닙니다』 제 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김천시장)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 의 변과 프로필을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비전, 누가 갖다주는 것 아닙니다

리더십있는 추진력으로 발전 기약

서른여섯에 지방정계에 입문, 시의원을 거쳐
도의회 3선 부의장을 지낸 김응규 도의원 예비후
보의 갈망은 고향 김천사랑이다. 현직 시장에 맞서
현재로서는 다른 후보자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
비후보로 등록한 그의 열정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른
다. 그로부터 희망과 비전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출마의 배경을 들어본다. <편집
자주>

김천시대 '확 바뀌어야 합니다'

출마배경 토하며 강한비전 제시

전국 5대 시장을 이루었고 경북에서 가장 먼저
시로 승격된 김천의 자존심을 지키고 김천 경제를
살리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김천은 2010년 2

월 현재 135,664명으로 줄어드는 등 2005년 이후
5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김천이 희망과 비전
없는 도시가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
니다. 저는 우리 김천에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김
천 경제시대를 활짝 열어 가야한다는 마음가짐으
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희망과 비전, 누가 갖다 주는 것 아닙니다. 시
민 여러분과 시장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2010년 김천은 KTX역사가 들어서고 혁
신도시가 건설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김천시장은 추진력 강
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김천 강
한 김천 건설이 저의 목표이자 14만 시민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의 살아온 결과 제시한 공약을 한번 꿈
꿔보시고 왜 김응규가 시장선거에 출마했
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김응규 반드시 김천 경제
를 살려, 선진 대한민국은 이끌어가는 김천 시대를
기필코 열어가겠습니다.(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118(자심)
언 론 사	(주)서경신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40 대표이사 소 영 태
심의대상기사	서경신문 2010년 3월 15일자 17면 『강석진 전 군수, 청와대 ‘특별한 선물’ 받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거창군수) 관련하여, 특정 후보에 정자가 청와대로부터 격려화분을 받는 등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경력 및 업적 등을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석진 전 군수, 청와대 ‘특별한 선물’ 받아

거창팔기 청와대에 납품…거창사과도 예정

강석진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에게는 다른 후보자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 배달되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창군수로 출마예정인 강석진 전 청와대 2급 선임행정관에게 청와대 봉황

이 새겨진 격려의 화분이 지난 10일 전달됐다.

특히 강 전 군수는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거창의 농수산물인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거창팔기(봉팔기·유지봉)가 청와대에 납품됐고, 5월 15일에는 미봉쌀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거창사과도 납품될 예정이라 거창의 우수농산물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받게 됐다. 이런 결실 뒤에는 강 전 군수의 청와대 선임행정관 시절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져 중앙인맥을 통한 강 군수의 청와대와 한나라당 근무 경험은 향후 거창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강석진 전 군수, 청와대 ‘특별한 선물’ 받아

거창팔기 청와대에 납품… 거창사과도 예정

강석진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에게는 다른 후보자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 배달되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창군수로 출마예정인 강석진 전 청와대 2급 선임행정관에게 청와대 봉황이 새겨진 격려의 화분이 지난 10일 전달됐다.

특히 강 전 군수는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거창의 농수산물인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거창팔기(봉팔기·유지봉)가 청와대에 납품됐고, 5월 15일에는 미봉쌀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거창사과도 납품될 예정이라 거창의 우수농산물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받게 됐다. 이런 결실 뒤에는 강 전 군수의 청와대 선임행정관 시절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져 중앙인맥을 통한 강 군수의 청와대와 한나라당 근무 경험은 향후 거창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19(자심)
언 론 사	한국시사정보신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82 3층 대표 백 강 희
심의대상기사	한국시사정보신문 2010년 3월 15일자 17면 『거창군수로 출마 예정인 강석진 씨에게 청와대에서 격려의 화분이 배달되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거창군수) 관련하여, 특정 후보에 정자가 청와대로부터 격려화분을 받는 등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경력 및 업적 등을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거창 군수로 출마 예정인 강석진씨에게

청와대에서 격려의 화분이 배달되었다

강석진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에게는 다른 후보자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 배달되었다. 이번에 거창군수로 출마할 예정인 강석진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2급)에게 청와대에서 격려의 화분이 배달되었다고 한다. 3월 10일 봉황이 새겨진 난 화분이 도착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청와대 식당에 거창의 농수산물인 납품되도록 격려함으로써 강력한 지지를 느끼게 하고 있다. 먼저, 일차적으로 딸기가 3월 9일 납품되었고(봉딸기: 유지봉), 5월 15일 미부인쌀이 들어간다고 한다. 또 연차적으로 사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연락이 된 상태이며, 점차 다른 품목들도 납품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거창의 농산물이 청와대 납품하게 됨으로써 청와대에 납품하는 우수농산물로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강석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역할이 매우 컸다.

강석진 선임행정관의 청와대 근무 경험은 광범위한 중앙 인맥은 향후 거창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거창 군수로 출마 예정인 강석진씨에게 청와대에서 격려의 화분이 배달되었다

강석진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에게는 다른 후보자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 배달되었다. 이번에 거창군수로 출마할 예정인 강석진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2급)에게 청와대에서 격려의 화분이 배달되었다고 한다. 3월 10일 봉황이 새겨진 난 화분이 도착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청와대 식당에 거창의 농수산물이 납품되도록 격려함으로써 강력한 지지를 느끼게 하고 있다. 먼저, 일차적으로 딸기가 3월 9일 납품되었고(봉딸기: 유지봉), 5월 15일 미부인쌀이 들어간다고 한다. 또 연차적으로 사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연락이 된 상태이며, 점차 다른 품목들도 납품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거창의 농산물이 청와대 납품하게 됨으로써 청와대에 납품하는 우수농산물로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강석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역할이 매우 컸다.



강석진 선임행정관의 청와대 근무 경험은 광범위한 중앙 인맥은 향후 거창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20(자심)
언 론 사	(주)인천일보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4가 중봉로 222 대표이사 박 민 서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0년 4월 13일자 17면 『교장공모제 확대와 부작용』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 교육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교장공모제 확대와 부작용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교육비리가 세상에 노출돼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고, 그 근절 대책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서울지역 교장은 100% 공모제를 실시하며 전국적으로 50% 이상을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는 교육계에선 가히 혁명적 차원의 개혁안을 발표해 국민들 동의를 얻는 듯, 일부 언론마저 이를 부채질함으로써 교장공모제 확대를 지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으로써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깊은 상념에 빠져들게 한다. 각급학교 교장공모제는 이미 1996년 '초빙형 공모제'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없이도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교육경력 없이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는 특성화학교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발전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관련정책들은 급변하는 지구촌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 관련 정책이 이런 경우 엄청난 시행착오를 감당해

야 하고 그 후유증이 몹시 크다.

1999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정년을 만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켜 초등교사 부족대란을 초래했으며, 퇴직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연금 및 수당 급증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증가에 의한 교육예산의 용도 역기능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권말기에 초등학교에서만 실시되던 학교급식을, 중학교는 실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등학교에 전면 실시한다는 급조된 학교급식 정책과 학급당 학생수를 평균 43명에서 35명 선 감축방침에 따라 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하고, 강당을 개조해 교실로 사용하는 등 일대 혼란을 초래하더니, 지금은 학생수 감소로 교실이 남아 돌아 처치 곤란인데다 관리·유지비만 증가시켜 학교시설·설비와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크게 해치고 있다.

교육정책은 점진적인 개선이라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교원정년을 단축할 때도 교육대학 입학생을 증원해 4년이 지난 후부터 점진적으로 단축을 했다면 무리없이 적응이 됐을 것이다. 학교급식도 초·중·고 순으로 급식시설을 완비한 상태에서 5~6년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직영급식을 했더라면 저질 위탁급식이 불러온 식중독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정부의 전격적인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는 교육정책은 교원 정년단축이나 준비되지 않

은 상태에서의 학교급식 확대, 학생수 증감 오만에 의한 교실 증축 정책,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교육의원 선거가 국회의원 3~4명이 선출되는 인구수의 지역에서 1명씩 선출되도록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법과 유사한 신중하지 못한 정책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비리는 반드시 처벌돼야 하며, 서울의 교장 7명 중 1명이 수사선상에 있다는 보도는 교육자들을 우울하게 해 부끄러움에 자정 노력을 이구동성으로 토로한다. 그러나 그 일이 전국의 40만 교원들을 잠정적으로 범죄인 취급하면서 우리와 여러 분야에서 조직 풍토가 다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미셸 리 교육감을 기대치로 내세우며, 어느 국회의원은 '교육원장범죄가중처벌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한 극약처방은 교원들 사기를 크게 위축시키게 되며 교원들 사기가 떨어지면 공교육은 점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잘못했다고 너무 성급하게 야단치려 하지만 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울은 100%, 다른 시·도는 50%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중앙집권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걸맞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교육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교장 임용제도의 선택과 점진적 확대 방안을 지시하지 말고 권장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장공모제 확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천일보 제6438호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교육비리가 세상에 노출돼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고, 그 근절대책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서울지역 교정은 100% 공모제를 실시하며 전국적으로 50% 이상을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는 교육계에선 가히 혁명적 차원의 개혁안을 발표해 국민들 동의를 얻는 듯, 일부 언론마저 이를 부채질함으로써 교장공모제 확대를 지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으로써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깊은 상념에 빠지게 한다. 각급학교 교장공모제는 이미 1996년 '초·중·고 교장공모제'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없이도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교육경력 없이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는 특성화학교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해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발전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관련정책들은 급변하는 지구촌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 관련정책이 이렇 경우 엄청난 시행착오를 감당해야 하고 그 후유증이 뒤따른다.

1999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정년율만 65에서 62세로 단축시켜 초등교사 부족대란을 초래했으며,

세상 思

허원기

안희대 교육대학원 객원교수



교장공모제 확대와 부작용

퇴직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연금 및 수당 급증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증가에 의한 교육예산의 용도 역기능은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권말기에 초등학교에서만 실시되던 학교급식을, 중학교는 실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등학교에 전면 실시한다는 급조된 학교급식 정책과 학급당 학생수를 평균 43명에서 35명 선 감축방정책에 따라 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하고, 강당을 개조해 교실로 사용하는 등 일대 혼란을 초래하더니, 지금은 학생수 감소로 교실이 남아 돌아 처지 곤란인데다 관리·유지비만 증가시켜 학교시설·설비와 교육제정의 안정화를 크게 해치고 있다.

교육정책은 점진적인 개선이라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교원정년율 단축할 때도 교육대학 입학생을 증원에 4년이 지난 후부터 점진적으로 단축을 했다면 무리없이 적응이 됐을 것이다. 학교급식도 초·중·고 순으로 급식시설을 완비한 상태에서 5~6년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작업급식을 했더라면 저질 위탁급식이 불어난 식중독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정부의 전격적인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는 교육정책은 교원 정년단축이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교급식 확대, 학생수 증감 오만에 의한 교실 증축 정책,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교육의원 선거가 국회의원 3~4명이 선

오피니언

출되는 인구수의 지역에서 1명씩 선출되도록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법과 유사한 신중하지 못한 정책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비리는 반드시 처벌돼야 하며, 서울의 교장 7명 중 1명이 수사선상에 있다는 보도는 교육자들을 우울하게 해 부끄러움에 자정 노력을 이구동성으로 토로한다. 그러나 그 일이 전국의 40만 교원들을 잠정적 범죄인 취급하면서 우리와 여러 분야에서 조직 풍토가 다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미셸 리 교육감을 기대치로 내세우며, 어느 국회의원은 '교육원장범죄가중처벌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한 극약처방은 교원들 사기를 크게 위축시키게 되며 교원들 사기가 떨어지면 공교육은 점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잘못했다고 너무 성급하게 야단치려 하지만 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울은 100%, 다른 시·도는 50%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중앙집권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걸맞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교육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교장 임용제도의 선택과 점진적 확대 방안을 지시하지 말고 권장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장공모제 확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21(자심)
언 론 사	(주)한국시정일보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24 대표이사 주 동 담
심의대상기사	주간 시정신문 2010년 3월 25일자 15면 『은혜로운 언어행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종로구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은혜로운 언어행실

오래 전에 나이스네트는 이 시대를 가리켜 정보의 시대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세계의 정보를 일순간에 접할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을 통해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컴퓨터나 위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다. 혹자는 이 같은 점을 더욱 강조해 인류는 지금 일초의 생활권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언어이다. 매순간마다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언어의 필요성과 절제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언어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한마디의 말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요즘 현대사회에는 말이 필요이상으로 범람하고 있다. 속어와 비어, 은어 더 나아가 세대가 다

르면 이해할 수조차 없는 유행어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면서 우리 교육의 가치관과 도덕관 세계관을 파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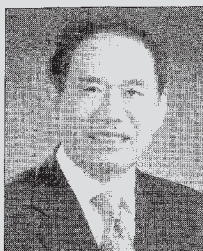
아무런 속고함이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의 자세를 바꾸게 된다는 사실 입증 해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언어, 살벌한 언어는 개인의 삶의 자세를 소극적이 되게 하고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삶의 가장 소중한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한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듯이 파괴적인 언어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중국에는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제되지 못한 말들이 범람해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히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는 이때에 치유언어를 통해 도덕성을 확립하고 인간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인간 본연의 모습을 갖게 하는 노력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언어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점이기 때문이다.

언어 공해 속에서 현대인들은 정제된 생명 같은 언어에 갈급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독자제언

오 금 남 전 구의원

오래 전에 나이스네트는 이 시대를 가리켜 정보의 시대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세계의 정보를 일순간에 접할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을 통해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컴퓨터나 위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다.

혹자는 이 같은 점을 더욱 강조해 인류는 지금 일초의 생활권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언어이다. 때 순간마다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언어의 필요성과 절제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언어

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한마디의 말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요즘 현대사회에는 말이 필요이상으로 범람하고 있다. 속어와 비어, 은어 더 나아가 세대가 다르면 이해할 수조차 없는 유행어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면서 우리 교육의 가치관과 도덕관 세계관을 파괴하고 있다.

아무런 숙고함이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의 자세를 바꾸게 된다는 사실 입증 해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언어, 살벌한 언어는 개인의 삶의 자세를 소극적이 되게 하고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삶의 가장 소중한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한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해듯이 파괴적인 언어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종국에는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제되지 못한 말들이 범람해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히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는 이때에 치유언어를 통해 도덕성을 확립하고 인간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인간 본연의 모습을 갖게 하는 노력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과거 어느 때 보다고 더욱 절실하게 언어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시점이기 때문이다.

언어 공해 속에서 현대인들은 정제된 생명 같은 언어에 갈급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위 기사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22(자심)
언 론 사	(주)CS뉴스프레스(주간조선)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김 창 기
심의대상기사	주간조선 2010년 4월 12일자 54~55면 『輿 ‘이완구 공천’ 여부 최대 변수 자유선진, 박상돈·이태복 신경전』, 2010년 4월 12일자 55~56면 『김태환 지사 빠진 자리 예측불허 혼전 輿 현명관·무소속 우근민 지지율 경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남도지사, 제주도지사)와 관련하 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여론조사 공표요 건을 밝히지 않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 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태복 후보는 26.6%, 안희정 후보는 21.5%, 홍문표 후보(한나라당)는 17.7%, 이용길 후보(진보신당)는 1.9% 순으로 나타났다.

輿 ‘이완구 공천’ 여부 최대 변수 자유선진, 박상돈·이태복 신경전

이완구, 4개월째 지지율 고공행진

(전락)충남지사 선거의 열쇠는 이완구(李完九) 전 지사(한나라당)의 손 안에 있다.

12월, 당시 이완구 지사는 정부가 세종시원안 포기를 선언하자 도지사 사퇴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사퇴 선언 이후 이완구 전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급상승했다. 그동안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이완구 전 지사는 이인제·박상돈·류근찬·이태복·안희정씨 등 야권 인사를 20~4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완구 전 지사가 출마하지 않았을 경우 한나라당 후보는 누가 나와도 이인제·류근찬·안희정씨 등에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은 이완구 전 지사를 공천하지 않으면 충남지사를 야당에 빼앗긴다는 결론이다.

이태복 예비후보 측이 지난 3월 16일 공개한

김태환 지사 빠진 자리 예측불허 혼전 輿 현명관·무소속 우근민 지지율 결정

‘성희룡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6일 실시한 한 중앙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 우 전 지사가 33.6%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지만 한나라당 강상주 예비후보와 가상대결에서의 격차는 불과 0.7%포인트에 불과했다.

현명관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엇치락뒤치락’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역 한 인터넷 신문이 지난 3월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온 현명관 예비후보가 34.3%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우근민 무소속 후보가 27.6%, 민주당 고희범 후보가 13.0%의 지지율을 보였다. 또 중앙 주간지가 지난 3월 24일 실시한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는 우근민 무소속 후보가 29.8%로 1위에 올랐고, 한나라당 현명관 예비후보가

25.3%로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 전 지사의 지지를 회복은 선거기간 내

내 집요하게 따라다닐 '성희롱 논란'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 0-2지방선거 - 충남지사

충남지사인 유인석(conservative)은 충남지사로 출마한 유인석은 지난 1월 17일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與 '이완구 공천' 여부 최대 변수 자유선진, 박상돈·이태복 신경전



다. 최근 공약을 천다구 제2회 지방선거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이완구, 이태복 지사를 공천할지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0-2지방선거 - 전북지사

전북지사인 유인석(conservative)은 전북지사로 출마한 유인석은 지난 1월 17일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김태환 지사 빠진 자라 야초출마후전 與 원당관·무소속 유권민 지지율 경쟁

김태환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김태환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김태환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김태환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김태환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김태환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김태환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김태환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김태환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김태환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김태환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김태환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민중, 신정당 출범까지 희망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유인석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의 결 번 호	2010지선124(자심)
언 론 사	(주)충청일보재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34 대표이사 이 규 택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2010년 4월 13일자 6면 『대전시장 ‘4파전’ 구도 압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전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전시장 ‘4파전’ 구도 압축

(전략)11일 한 언론사에서 19세 이상의 대전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김원웅 후보는 24.4%를 기록, 염홍철 후보

34.8%,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 27.9%에 이은 3위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김윤기 후보는 2.4%였다.

하지만 야4당 단일후보로 김원웅 후보를 묻자 28.2%의 지지율을 기록, 박성효 28.6%를 바짝 뒤쫓는 것으로 나타나 양 후보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접한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두 달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시점에서 세종시와 천안함, 그리고 박근혜 전대표의 행보 등이 이번선거를 가름짓는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장 ‘4파전’ 구도 압축

박성효-염홍철-김원웅-김윤기…국중련은 ‘미정’
세종시·천안함·박근혜 행보 등 지지율 최대변수

지난 주말을 고비로 극도의 난항사태로 치달았던 대전시장 후보군에 4파전으로 압축됐다.

문제의 발단은 한나라당에서 비롯됐다. 당초 선진당 염홍철 예비후보에게 두 자리수 이상 지지율이 뒤져 고령이 예상됐던 한나라당은 충남대 약대임 교수로 영입하면서 경선구도로 방향을 굳혀가는 듯했다.

하지만 11일 유교수가 전격 사퇴할

신원복 후, 12일 박성효 시장을 당락 공천하기로 결심함에 따라 대전시장 후보군은 박성효-염홍철-김원웅 3자 구도로 갈라졌다.

여기에 진보신당 김윤기 예비후보가 추경선에 나서 4파전 구도가 예상된다.

대전지역을 남북으로 선인한 국민승우연락에서는 후보 공모를 공고했지만 12일 현재까지 뚜렷한 후보가 거

문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후보자간 지지율 추이다.

염홍철 후보의 우세가 뚜렷이 이어지던 대전시장 선거는 12일 야4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민주당 김원웅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라는 현상을 낳고 있다.

11일 한 언론사에서 19세 이상의 대전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김원웅 후보는 24.4%를 기록, 염홍철 후보 34.8%,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 27.9%에 이은 3위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김윤기 후보는 2.4%였다.

하지만 야4당 단일후보로 김원웅 후보를 묻자 28.2%의 지지율을 기록, 박성효 28.6%를 바짝 바짝 뒤쫓는 것으로 나타나 양 후보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접한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두달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시점에서 세종시와 천안함, 그리고 박근혜 전대표의 행보 등이 이번선거를 가름짓는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필취재반

의 결 번 호	2010지선125(자심)
언 론 사	(주)충남신문 대전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라OF 20층 대표이사 박 영 예
심의대상기사	충남일보 2010년 4월 20일자 3면 『이슈인터뷰 “도정현안 지원에 의회가 최선을 다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청남도 도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도의원의 인터뷰 기사에서 정치적 견해 등을 사진 및 약력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도정현안 지원에 의회가 최선을 다할 것”

후반기 충남도의회 의장으로 9대의회 준비와 8대의정 마무리의 중책을 맡게 된 정순평 도의장은 충남일보와의 취입 인터뷰를 통해 “도청이전과 대백제전 등 거대프로젝트 지원 등 현안추진에 의회가 전방위적 지원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어느때보다 어려운 국내의 현실을 감안하면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도의회가 마지막까지 도민안정과 도정발전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의정수행과 관련, “도의회의 역할은 지금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세종시 문제부터 크고작은 현안이 준비하고 도지사 공백으로 인한 도정지원이 중요한 과도기적 시기”라며 “도의회가 이같은 역할 수행을 하는데 앞장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중략)

- 3개월이 남은 기간동안 의장으로서의 각오는
▲기본적인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 경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두겠습니다.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남도청 이전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 만큼, 형평성차원에서 필요한 국비가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고 여당에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도의원 2명과 교육의원 5명이 증원되고,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는 제9대 의회가 활기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중략)

-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의회 수장으로 선출된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올바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새 희망을 열어줄 수 있는 제9대 의회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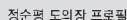
도민들의 뜻에 따라 끝까지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현안도 산적한 만큼 이를 도의회가 적극 지원
하는 것이 도리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의정상을 보
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도정현안 지원에 의회가 최선 다할 것”

[illegible][illegible]

-3개월여 남은 기간동안 의정으로서의 각오는
▲기존채널 오프라인 기능인 집합부 견제와
김시영 총선로 수행하는 데 우선 공헌을
무엇겠습니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
같습니



- ▲ 1994년 10월 정치외교학과 졸업
- ▲ 고려대학교 정치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 ▲ 대통령 경호실장 보좌관
- ▲ 국회입법조사처장
- ▲ 중앙헌법심사위원회 위원장
- ▲ 행정안전부재활팀 팀장

- ▲대한직업자사 중남시지침위원
- ▲중남도의회 제5·6대 의원
- ▲제13대 대한병인수상위원과 사후위원
- ▲중남도의회 제13대와 원내대표
- ▲한국개발연구원 상임연구위원
- ▲중남도의회 제13대의원 운영위원장
외장

1945년 8월, 미군정치는 제1차와 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시작되었다. 미군정치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시작되었다. 미군정치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시작되었다.

▶ 충청권 대대적인 세종시 수정권
대청군 개편에
▲청주·충주에 세종시 수정권 위
임권을 지급할지 결정... (반찬
뉴스) (2012.08.23)

▶대전·세종·충청권 세종시 분
개청정당으로 확대되었는지 이미 우
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일대 일제시대 유
물... (후) (후) (후) (후) (후) (후)
대전·세종·충청권 세종시 분
개청정당으로 확대되었는지 이미 우
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일대 일제시대 유
물... (후) (후) (후) (후) (후) (후)

▲미국: 노조원들이 보스턴에서 쉼을 하는 중 한 사람이 최근 커피의 판매에 생계를 꾸리는 노조원들이 커피를 사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노조원들은 커피를 사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노조원들은 커피를 사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외교통부의 예산절감과 행정경위와 대로 적극적으로 소경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받기 위하여 드디어 서스킷과 일정을 재변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고, 국민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란에게 당부하고 싶은말씀은
▲ 해브는오호 수장으로선정된 만찬도
같은 대의를 이루는 양도 지름은 같지
않고 건재한 양을 육성할 수있어야한다.
도란님의 처세태도와 심의적 양식을
해브님의 본보기로 양생 각 계층이
올바른 행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바라다.

지는 '인연사' 人情事理圖 '인연'이라는 말을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뜻에 따라 끝까지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석도(열석) 박 의원의 보은은 8:40에 열석 있는 선관부에 있고! 또한 천제로 보낸 옥녀 도깨비 같은 반지마의 영정 문화의 향연! 1인3역이 바빠 지킴은 전한다 신지바른 길! 어릴 도모로가 지금 지킴하는 것이 도민! 만민! 호신을 다하는 의정상을 밝게 푸른 도모를 하겠다!

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중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중화하여 도지공무원으로 영정(永正)을 영유할 기회를 주기로 시기를 정해 '도모로' / 이같은 여건 수행을 결정하였으므로 수구(守口)지원을 하고자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 피고에게 도모로 수행을 맡으시는데
 ▲우선 저번 주부터 시보를 의장으로 선출된후선 물리학과연구실 감사의 약속을 전합니다.

도모로 수행 공로로써 호헌(護憲)한

청년노조인 '이웃' 전역 북부지역을 방문한 김영철위원에서 발표한 북부가 전국 자원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할 바 있습니다.

또 2010 세계대박제전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노조의 2명과 교육의원 5명이 참여하고 교육의원 6개 신설되는 99의 의료기관 개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 시정개혁도 소중하게 하지 않겠습니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중요한
인건이 처리된 것으로 하는데

10월 22일과 23일(토·일)은 '제1회 전국 동계 장애인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한다.

▶ **최고 결정권자**에 의한 4년의
중간 전국 광역선거 및 발의한 조례
권로 22안에 불가하다는 비판도 제
되는 데

▶ **저는** 조래한 뒤의 전승적 의의들의
정확한 기록을 제공하기는 하였을 무고
나도 평가합니다.

▶ **도무지**의 저서 기록과 실제의 정, 장
의 차이를 느끼는 독자(독자)는 물론

● **총장 취임 최대현미는 무엇이고
방향이 있다면**

이런 '인사자(人事者) 天(天)'에
대한 말을 자주 인용하고 싶고 있다.
도덕의 뜻이 따라 끝까지 의지할
것을 도는도 더하여 준다.
열세(열세) 때부터 보므로 천(天)의
뜻은 '천(天)'이고 도덕 천(天)으로 보
면 '도(道)'이다. 천(天)은 곧 천(天)의
인(人)에 대해 적(적)을 보므로 천(天)
의 뜻을 보므로 적(적) 지(知)는 것이 도
덕(道)의 뜻을 보므로 천(天)의 뜻을 보
므로 천(天)의 뜻을 보므로 천(天)의 뜻을 보

의 결 번 호	2010지선126(자심)
언 론 사	(주)충청투데이 대전 서구 둔원1길 50 대표이사 정 남 진
심의대상기사	충남투데이 2010년 4월 19일자 11면 『“도청이전 신도시 차질없이 건설 대백제전·대충청방문의 해 지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청남도 도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도의원의 인터뷰 기사에서 정치적 견해 등을 사진 및 약력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도청이전 신도시 차질없는 건설 대백제전·대충청방문의 해 지원”

“제8대 의회가 200만 도민의 대의기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충남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임 충남도의회 수장으로 선출된 정순평(52) 의장은 ‘밝은 미래를 아는 충남도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8대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도민들의 편의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조

례제정, 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바라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8대의회 임기가 3개월여 남았는데, 의장으로서 각오는,

의회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인 도정,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생각이다. 전남도청 이전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충남도청 이전에도 국비가 전액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한나라당 소속 의장으로서 중앙당 요리에 이 같은 뜻을 이미 건의했다. 또한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6·2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2명과 교육의원 5명이 증원되고, 교육위원회가 신설된다. 따라서 제9대 의회가 활기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도록 하겠다.(중략)

- 도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힘쓰겠다. 아울러 오는 7월 제9대 의회가 한치의 오차 없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만만

의 재비를 갖추도록 하겠다. 평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좌우명처럼 도민들의 뜻에 따라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다.”

정순평 충남도의회 의장

“도청이전 신도시 차질없는 건설
대백제전·대충청방문의 해 지원”

“제8대 의회가 20대 국민의 대의가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앙노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내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illegible]

다. 세습식 분배를 조속히 폐지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주권과 도민들에 원하는 방향으로 결집하여야 한다. 앞으로 2014년 도민의 목소리와 여론의 추이, 그리고 국회에서의 세습지 법안 심의과정에 따라 새로운 대응에 나설 생각이다.

홍남기는 이완구 전 지사와 장무부지사 피자 시비에 열정무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인 채에도 운영되고 있다. 그만큼 도민의 대의기원 의외의 약점이 부각한다.

"지금까지의 마친가지도 집행부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선 날카롭게 간섭·감시한다. 현종재와 한 일이 있었던 적국작으로 인해라 하긴 하지만요.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산하관리에서도 얼마간 영향을 수월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설 생각입니다."

●정 1인 1명만 '2010 세계경제학자대회'와 '2010 동아시아문화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다스린 일 자를 아끼지 않는다.

지방선거 앞둔 공직사회 전제 충실
소의계층 지원조례 질적으로 우수
세종시는 지역주민 원하는 방향돼야
도청 이전 예산확보 다각적인 노력
3개월여 남은 8대의회 끝까지 최선

대담=나인문 정치부장

8년의 임기가 3개월이 남았...

“최초의 가난해진 의문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가난을 충실히 수행하고도 충실히 장년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전이 어떤 극도로 자유했던 것일 뿐입니다. 자도청 이전에도 금과 같은 자유재가 있었지만 변함이 없다. 하나의 나라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모든 다른 형태의 성공 계획과 외면의 자질에 없도록 하겠다. 11월 6-7 지방선거에서 과목의 5명도 충분히 충분하다. 민족위대한 때, 따라서 제대로의 학과가 될 것이다. 전이 모든 역량을 쏟아냈다고 하겠다.”

민선4기 임기 4년동안 전국 상하의 조례안이 평균 7건이 철회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illegible]

- 충청권 최대 반성인 세종시 논란에 대한 견해는
"정부와 국회에 세종시 수장이 관련 계장원을 서
훈할 때부터 국호로 공이 넘어간 실정이다. 그와
인 세종시 본체가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된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생각 한다. 그 결과 세종시 황폐하
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쪽이 양보할 수 없
는 반면에 이쪽은 이쪽의 신변을 지키고 있다"

·도정 최대영안인 도청여전에 대한 지원방안은,

[illegible]

“집행부의 예산집행과 행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견을 제시하고 감시와 비판기능을 발휘해 국민의 목소리

장수당 홍남호 역학의사는 "열마지기 않은 염기서만 노민들의 보려준전을 위해 의회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입법역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순평 의장은

- △1968년 2월 16일 출생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고려대 경제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 △해병대 중위 만기 전역
- △국회 의원선거권

▲전원 국경선우회 회장
 ▲충청남도체육회 이사
 ▲대한농협중앙회 충청지사 상임위원
 ▲충청남도의회 제1·2기 의원
 ▲제1기·2기 대통령선거추진위원과 자문위원
 ▲충청남도의회 인사담당 원내대표
 ▲한국농림수산식품부 상임정책기획위원
 ▲충청남도의회 제8기의회 운영위원

의 결 번 호	2010지선127(자심)
언 론 사	아세아일보(주)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5 대표이사 권 기 호
심의대상기사	아시아일보 2010년 4월 14일자 7면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서장원 포천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문제 있다』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포천시장)의 특정 후보예정자가 모 정당 후보로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평가를 전하면서 해당 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서장원포천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문제 있다

포천시가 서장원현시장이 한나라당 후보확정과 관련, 지역정가의 진흙탕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고조흥, 이흥구 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4월 7일 서장원 포천시장의 공천심사 금지가 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이는 서시장이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불복하고 당을 여러번 옮기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부적격사유에 해당된다는 해석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지역정가의 이러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나라당 경기도 당 공심위(위원장 원유철)는 지난 11일 서장원 시장을 포천시장 후보자로 확정함으로써 한나라당 현 국회의원인 김영우의원 전락공천밀약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다른 예비후보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법원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천자

를 발표한 것은 공정치 못하고 법원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6차레나 당원을 옮겨다니고 경선에 불복한 철새정치인을 공천자로 확정된 것은 시민은 물론 당원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고조흥, 이흥구 예비후보 및 서장원 시장은 지난 13일 서장원시장 공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다.

서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로 알려졌으며, 6차레나 당을 옮겨다니는 등 대표적인 철새정치인으로 지역정가에는 낙인이 찍힌지 오래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서시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시장후보로 확정함으로써 타 예비후보의 강력반발은 당연한 것으로, 한나라당 경기도당공심위의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서시장을 포천시장후보로 결정한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다 할수 있겠으나,民心이天心임을 감안할 때 밀약공천이나 대의명분을 거

스르는 공천은 주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것은 事必歸正이자 自縊自縛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백마디의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면 그뿐인 것이다.

이럴때만이 제2의 서시장같은 인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40여 일 동안 유력 후보들의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판이 어떻게 짜질지 아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누가 포천시장에 당선된다고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뜻에 전면배치되는 이번 포천시장후보결정을 보면서 누가 포천시장에 당선되어야 하는 것은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의 영달과 목적을 위해 진력을 다하는 후보보다는 진정 포천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후보가 포천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가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칼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서장원포천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문제 있다



문 양 휘 부국장

포천시가 서장원현시장이 한나라당 후보확정과 관련, 지역정가의 진흙탕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고조흥, 이흥구 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4월 7일 서장원 포천시장의 공천심사 금지 가져본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이는 서시장이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불복하고 당을 여러번 옮기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부적격사유에 해당된다는 해석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지역정가의 이러한 분위기에다 이렇듯하지 않고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위원장 원유철)는 지난 11일 서장원 시장을 포천시장 후보자로 확정함으로써 한나라당 현 국회의원인 김영우의원 전략공천 밀약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다른

예비후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법원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천자를 발표한 것은 공정치 못하고 법원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6차례나 당원을 옮겨다니고 경선에 불복한 철새정치인을 공천자로 확정하는 것은 시민은 물론 당원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관련 고조흥, 이흥구 예비후보 및 서장원시장은 지난 13일 서장원시장 공천금지 가져본신청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그리 稱讚(稱讚)치 않았다.

서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로 알려졌으며, 6차례나 당을 옮겨다니는 등 대표적인 철새정치인으로 지역정가에는 낯이 익힌지 오래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서시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시장후보로 확정함으로써 타 예비후보의 강력반발은 당연한 것으로, 한나라당 경기도당공심위의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뭔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것이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서시장을 포천시장후보로 결정 한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다 할수 있겠으나, 民心이天心임을 감안할 때 밀약공천이나 대의명분을 거스르는 공천은 주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것은 事必歸正이자 自縊自縛이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백마디의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면 그뿐인 것이다.

이럴때만이 제2의 서시장같은 인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40여일 동안 유력 후보들의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판이 어떻게 짜질지 아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누가 포천시장에 당선된다고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뜻에 전면배치되는 이번 포천시장후보결정을 보면서 누가 포천시장에 당선되어야 하는 것은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의 영달과 목적을 위해 진력을 다하는 후보보다는 진정 포천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후보가 포천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가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28(자심)
언 론 사	(주)강남내일신문 서울 강남구 청담동 5 경원하이츠텔 1413호 대표이사 최 광 호
심의대상기사	주간 강남내일신문 2010년 4월 8일자 1면 『“강남을 뭘로 보고 60살 넘는 여성 후보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강남구청장)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 후보예정자에 대해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보도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남을 뭘로 보고 60살 넘는 여성 후보야”

주민들,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 여성전략공천 움직임에 반발

한나라당이 서울 강남구 구청장 후보를 여성으로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에 강남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마감한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에 5명의 후보자가 접수했다. 이중 2명의 여성후보 가운데 신연희(62) 전 서울시 행정국장이 전략공천으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연희 전 국장은 한나라당이 전략공천 후보로 지목해 영입한 후보로 송파구청장으로 출마가 점쳐졌지만 예상을 깨고 이번에 강남구에 공천 심사를 냈다.

신 국장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강남구청장을 60살이 넘는 여성으로 전략 공천한다는 움직임이 보이자 강남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사동에 한 모 씨는 “아무리 강남은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강남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나이들은 여성이 온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걱정된다”며 “강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성구청장이 오면 11월에 국가적인 큰 행사인 G20정상회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전 모 씨는 “내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강남에 연고가 없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여성 후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젊은 여성도 아니고 나이 많은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강남주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강남이라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인데 젊고 유능한 인재가 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60살이 넘는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아무리 강남주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이렇게 아무나 공천하는 것은 강남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쾌

감을 표시했다.

여기에 강남구지역 한나라당 당원들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공천심사를 지켜보고 있다.

한 당원 “아직 누가 구청장을 될지 모르지만 강남을 전혀 모르고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인 60살 넘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 강남주민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며 “강남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전략공천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자로 공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60살이 넘는 여성구청장을 공천할 수 있다는 소식에 강남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강남구청장에 과연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후보자가 공천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과 여론조사를 거의 마치고 조만간 1차 심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남을 뭘로 보고 60살 넘는 여성 후보야”

주민들,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 여성전략공천 움직임에 반발

한나라당이 서울 강남구 구청장 후보들 여성으로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에 강남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마진한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에 5명의 후보자가 접수했다. 이중 2명의 여성후보 가운데 신연희(62) 전 서울시 행정국장이 전략공천으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연희 전 국장은 한나라당이 전략공천 후보로 지목해 영입한 후보로 송파구청장으로 출마가 임박했지만 예상치를 깨고 이번엔 강남구에 공천 심사를 냈다.

신 국장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강남구청장을 60살이 넘는 여성으로 전략 공천한다는 움직임이 보이자 강남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사동에 한 모 씨는 “아무리 강남은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강남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나이 많은 여성이 온다고 하는데 한미디로 걱정된다”며 “강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성구청장이 오면 11월에 국가적인 큰 행사인 G20정상회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현 모 씨는 “내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강남에 연고가 없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라는 소문에 따르면 여성 후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젊은

여성도 아니고 나이 많은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강남주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강남이라 하면 대량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인데 젊고 유능한 인재가 왜든 될까 말까 하는데 60살이 넘는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밋도 안 된다”며 “아무리 강남주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이렇게 아무나 공천하는 것은 강남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여기에 강남구지역 한나라당 당원들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공천심사를 지켜보고 있다.

한 당원은 “아직 누가 구청장을 될지 모르지만 강남을 전혀 모르고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인 60살 넘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 강남주민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며 “강남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전략공천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자로 공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60살이 넘는 여성구청장을 공천할 수 있다는 소식에 강남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강남구청장에 과연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후보자가 공천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과 여론조사를 거의 마치고 조만간 1차 심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수희 기자

의결번호	2010지선130(자심)
언론사	경북일보(주)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동동 579-12 대표이사 정 정 화
심의대상기사	경북일보 2010년 4월 21일자 22면 『발레오만도의 정상화를 바라며』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주시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 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 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발레오만도의 정상화를 바라며

지금 경주경제에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기업인 발레오만도의 직장폐쇄로 가족들과 지역상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사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몰아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들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듬직하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는 자상하고 믿음직한 가장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과 아빠의 실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회사와 동고동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회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측의 일방통행식의 직장폐쇄는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사양측이 하루 빨리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태가 장기화되면 각종 부작용이 심화

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노사 양측이 대화로 타협의 실마리를 풀어 가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노동자들에게 직장 폐쇄가 공지되어도 공장안의 현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20년이 넘게 숙련되고 전문화된 노동자들이 해오던 업무를, 사무직원과 버룩시장을 통해서 고용된 일용직이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하루빨리 원래의 그 자리에 노동자들이 복귀하여서 양질의 좋은 제품이 생산되길 고대합니다.

지역사회에 양질의 우수한 기업이 많으면 지역경제도 더불어 좋아집니다. 가까운 울산이 그 예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석유화학단지가 울산경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경주도 발레오만도라는 기업이 있어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지금의 발레오만도의 사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무엇보다 이윤창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도 함께 수반됩니다. 이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관계당국과 지역사회 단체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없습니다. 노조가 회사

의 이윤창출의 중심입니다. 노사가 서로의 방향만 추구하기보다는 상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극단적인 해결은 피해야할 것입니다.

발레오만도는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노사양측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관계당국과 시민단체들이 적극 중재에 나서 발레오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장기간의 직장폐쇄에 따라 경주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지역에 있는 기업이 노사 불화로 문을 닫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상생의 길을 찾기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기 고



강익수(경주시의원)

직장폐쇄로 가족·상인들 고통
노사양측 '상생의 길' 모색 중요

우수기업 문 닫을까 노심초사
당국·시민단체 중재 나서야

발레오만도의 정상화를 바라며

지금 경주경제에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기업이 발레오만도의 직장폐쇄로 가족들과 지역상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사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을 감격리로 몰아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들 보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는 자상하고 믿음직한 가정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실적으로 교훈스러워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회사와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회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측의 일방통행식의 직장폐쇄는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사양측이 하루 빨리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태가 장기화되면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노사 양측이 대화로 타협의 실마리를 풀어 가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노동자들에게 적장 폐쇄가 공지되어도 공장안의 현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함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20년이 넘게 숙면되고 전문화된 노동자들이 해오던 업무를, 사무직원과 비록시장을 통해서 고용된 일용직이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여차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하루빨리 원래의 그 자리에 노동자들이 복귀하여서 양질의 좋은 제품이 생산되길 기대합니다.

지역사회에 양질의 우수한 기업이 많은 지역경제도 더욱이 좋아집니다. 가까운 울산이 그 예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석유화학단지까지 울산경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경주도 발레오만도라는 기업이 있어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지금의 발레오만도의 사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

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무엇보다 이윤창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도 함께 수반됩니다. 이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관계당국과 지역사회 단체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없습니다. 노조가 회사와 이윤창출의 중심입니다. 노사가 서로의 방향만 추구하기보다는 상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극단적인 해결은 피해야할 것입니다.

발레오만도는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노사양측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관계당국과 시민단체들이 적극 중재에 나서 발레오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장기간의 직장폐쇄에 따라 경주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지역에 있는 기업이 노사 불화로 문을 닫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상생의 길을 찾기를 다시 한번 권고 합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31(자심)
언 론 사	중구신문 서울 중구 저동1가 이화빌딩 5층 대표 변 봉 주
심의대상기사	중구신문 2010년 4월 13일자 3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중구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클리닉에서 처음으로 받아보았다.

그동안 시간도 부족하고 평소에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생각과 가끔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던 터라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사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면서 공단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인 비용부담없이 좋은 건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많은 주민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나부터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공단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한 다음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생각했던 것 보다 깨끗한 시설에서 직원의 친절함 안내로 검진이 진행됐고 의사 선생님의 건강상담으로 평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공단관계자에 따르면 건강검진으로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검진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꾸준히 계도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로 건강검진의 질을 높여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 검진, 영유아검진 등 연령에 따라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09년 일반 검진 수검률이 67%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몰라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분들에게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자.

■ 특별기고 / 김기태 중구의회 의원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클리닉에서 처음으로 받아보았다.

그동안 시간도 부족하고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생각과 가끔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던 터라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사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면서 공단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인 비용부담없이 좋은 건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많은 주민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나부터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공단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검



진기관에 예약한 다음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생각했던 것 보다 깨끗한 시설에서 직원의 친절함 안내로 검진이 진행됐고 의사 선생님의 건강상담으로 평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공단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한 다음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생각했던 것 보다 깨끗한 시설에서 직원의 친절함 안내로 검진이 진행됐고 의사 선생님의 건강상담으로 평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공단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한 다음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생각했던 것 보다 깨끗한 시설에서 직원의 친절함 안내로 검진이 진행됐고 의사 선생님의 건강상담으로 평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32(자심)
언 론 사	중구자치신문 서울 중구 신당4동 340-54 수창빌딩 312호 대표 이 형 연
심의대상기사	중구자치신문 2010년 4월 14일자 2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중구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지난 4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클리닉에서 처음으로 받아보았다.

그동안 여러 사회활동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장소에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생각과 가끔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던 터라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사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공단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인 비용부담 없이 좋은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많은 주민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나부터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공단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한 다음 전날 저녁 9시부터 금식을 하고 당일 아침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한 시설에서 직원의 친절함 안내로 검진이 진행되었고 의사선생님의 건강상담으로 평소 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검진으로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검진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되도록 꾸준히 계도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진기관 관리로 건강검진의 질을 높여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검진 등 연령에 따라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09년 일반검진 수검율이 67%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몰라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 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왜 이렇게 좋은 건강검진을 안받으세요. 공단에서 검진비용도 다 내준다는데... 건강관리! 내가 챙겨야 하는 거잖아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지난 4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클리닉에서 처음으로 받아보았다.

그동안 여러 사회활동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평소에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생각과 가끔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던 터라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사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공단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인 비용부담 없이 좋은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많은 주민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나부터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공단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한 다음 전날 저녁 9



김기태
중구의회 의원

시부터 금식을 하고 당일 아침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한 시설에서 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검진

이 진행되었고 의사선생님의 건강

상담으로 평소 건강관리의 중요

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검진

으로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

에서 검진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되도록 꾸준히

제도와고 있다며 철저한 검

진기관 관리로 건강검진의 질을

높여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도 일반검진, 상애전환기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등 연령에 따라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09년 일반검진 수검율이 67%에 달한 정도로 국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몰라서, 혹은 바빠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 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왜 이렇게 좋은 건강검진을 안 받으세요. 공단에서 검진비용도 다 내준다는데... 건강관리! 내가 정겨야 하는 거잖아요!”

의 결 번 호	2010지선136(자심)
언 론 사	(주)중도매일 대전 중구 오류동 175-3 중도일보빌딩 대표이사 김 원 식
심의대상기사	중도일보 2010년 4월 29일자 9면 『“도정현안 적극지원…9대의회 성공적 출범 가교역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청남도 도의회 의원) 후보예정자 인 현 도의원의 인터뷰 기사에서 정치적 견해 등을 사진 및 약력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도정현안 적극지원…9대의회 성공적 출범 가교역할”

제8대 충남도의회가 막바지 의정활동 마무리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의 사퇴 이후 새롭게 원구성을 마쳤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곧 지방선거를 통해 차기 의회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지만, 8대 충남도 의원들은 도민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의정 활동이 마무리 돼가는 과정에서 지난 232회 임시회를 통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정순평(52·사진) 충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남은 기간 의정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과도기에 도의회 수장을 맡으셨는데 소감은?

▲ 우선 나를 후반기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도의회 수장 공백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내가 새로

운 의장을 맡게 됐다.

마지막까지 ‘밝은 미래를 여는 충남도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인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을 충실히 해내는 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도민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바라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나가겠다.

- 남은 기간 동안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가?

▲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기본적인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두겠다. 또 충남도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생각이다. 전남도청 이전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국비가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고 이미 여당에 적극 건의한 바 있다.

더불어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도의원 2명과 교육의원 5명이 증원되는 동시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는 제9대 의회가 활기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다. (중략)

- 평소 가져온 도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견해는?

▲ 집행부의 예산집행과 행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건강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발휘하여 도민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본다. 도민의 안정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생활에 직결된 각종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도민의 편의증진과 민원을 해소해 주어야만 한다.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다시 한번 새로운 의회 수장으로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올바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나아가 도민들에게 새 희망을 열어줄 수 있는 제9대의회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 개인적으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도민들의 뜻에 따라 끝까지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정현안 적극지원... 9대의회 성공적 출범 가교역할”

정순평 충남도의회장

제9대 충남도의회가 10월 26일(수)에 개회했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본문도·주)

도정현안 사전선별 모든 역량전출- 이렇게 극복지원 강력전진
교육청 전담 교육위원실 등 9대의회 준비위원 조례개정 순조
차질없는 도정·의정수행 위해 관한대행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정순평 충남도의회장

제9대 충남도의회가 10월 26일(수)에 개회했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충남도의회장

제9대 충남도의회가 10월 26일(수)에 개회했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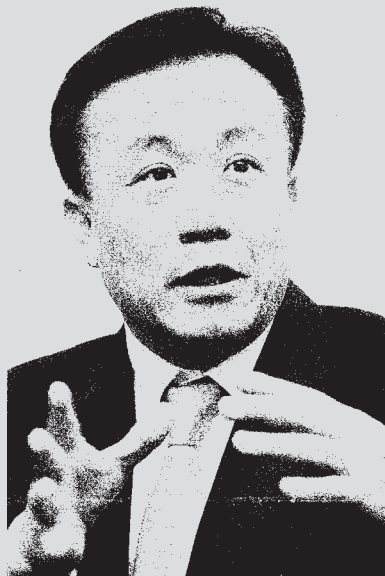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누구?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임대료 부담완화?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순평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37(자심)
언 론 사	(주)충청일보재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34 대표이사 이 규 택
심의대상기사	충청일보 2010년 4월 29일자 23면 『배신의 계절』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청원군수, 충주시장, 보은군수, 단양군수)에서 전임 부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여 재임 시 보좌하던 단체장과 경쟁하게 된 상황을 배신이라고 비방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부단체장 ‘충성맹세’ 말뿐

배신의 계절

언제부터인가 ‘의리’ 하면 건달 세계부터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남자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멋진 말이다. 남자에게 더 없는 찬사이다.

사실상 의리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다. 인간관계의 기본이 의리(義理)인 셈이다.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의리가 작용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드라마나 중국의 무협물 또는 역사물 등을 보면 도원결의가 자주 등장한다. 피도 한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오직 의리로 형제를 맺는다. 요즘 충청권 공무원 출신 일부 단체장 후보가 보여준 드라마의 핵심은 ‘의리와 배신’이다. 공직사회에서 부단체장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해당 단체장의 동의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시장·군수 입장에서 부 단체장을 선정할 때는 능력보다는 충성도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마련이다. 부 단체장 선임때 재임시 정치적 행보는 물론 퇴임 후에도 정치를 금할 것, 충성을 다해 단체장을 모실 것 등 요구 조건이 따르기 마련이다. 나중에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다.

충북의 경우 세종시 여파 등으로 한나라당 보다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아지자, 군수 후보로 부단체장이 야당 행을 선호했다. 이들은 부단체장을 나갈 때는 ‘충성맹세’를 했으나 주변 상황이 달라져 변심한 사람들이다.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 실무주역을 맡은 이종윤 전 청원부군수는 정우택 지사의 총애(?)를 받았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청원군수 후보로 출마했다. 2년 전 김시장은 고향 후배이자, 충주고 2년 후배인 우 부시장을 충주부시장으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부시장 퇴임 후 지난해 3월에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부임하는데 동의했다. 이향래 보은군수와 김수백 보은 전 부군수도 비슷한 경우다. 보은군수를 놓고 이 군수는 자유선진당 후보로, 김 전 부군수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왔다가 이 군수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마를 포기하는 바람에 불발이 됐다. 이 군수는 고향 1년 후배인 김 부군수를 받아들일 때, 이용희 의원 입회 아래 ‘충성맹세(?)’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효 대전시장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리턴매치’를 벌인다. 대전시장 후보로 박 시장은 한나라당, 염 전시장은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왔다. 둘 사이는 한때 시장과 국장관계였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

김동성 단양군수와 류한우 전 부군수도 비슷하다. 단양 군수를 놓고 김 군수는 한나라당 후보로, 류 전 부군수는 민주당후보로 '맞짱'을 뜬 뻔했다. 둘 사이는 2년을 군수와 부군수로 호흡을 같이했다. 하지만 류 전 부군수는 민주당 경선에서 이진표 전 단양군수에 밀려 정치포기 선언을 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에 적으로 변한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이다. 앞으로 단체장은 자신의 고향 출신을 부단체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

다. 물론 부단체장들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것이 은혜를 배신으로 대하고 도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인 배신은 본인에게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스스로 찾아낸 명분 앞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불신에서 비롯되는 배신은 또 거대하고 음험한 덩, 음모를 염두에 둔 행동과 무관치 않다. 물론 정치는 생물과도 같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게 현실이다.

金泰淳 칼럼



본보 편집국장

언제부터인가 '의리' 하면 건달 세 계부터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남자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멋진 말이다. 남자에게만 있는 전사이다. 사실상 의리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관계에서 미명하 지켜야 할 덕목인데 틀림없다. 의리(義理)는 사람으로서 미명하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다. 인간관계의 기본이 의리인 셈이다.

두 사람이 이상이었으면 의리가 작용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드라마나 중국의 무협물 또는 역사물 등을 보면 도원결의가 자주 등장한다. 피도 한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오직 의리로 영제를 맺는다. 요즘 충청권 공무원 출신 임부 단체장 후보가 보여준 드라마의 핵심은 '의리와 배신'이다. 공직사회에서 부단체장은

로 나가려면 반드시 해당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지 불가능하다. 시장·군수 임장에서 부 단체장을 선정할 때는 능력보다는 충성도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마련이다. 부 단체장 선임때 자일시 정치적 행보는 물론 퇴임 후에도 정치를 금할 것, 충성을 다해 단체장을 모실 것 등 요구 조건이 따르기 마련이다. 나중엔 '후회' 두렵기 때문이다.

부단체장 '충성맹세' 말뚝

중국의 경우 세종시 여파 등으로 한나라당 보다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아지자, 군수 후보로 부단체장이 야당 램을 선호했다. 이들은 부단체장을 나갈 때는 '충성맹세'를 했으나 주변 상황이 달라져 변심한 사람들이었다. 오송에 '철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 실무주역을 맡은 이종윤 전 청원부군수는 정우택 지사의 총애(?)를 받았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청원군수 후보로 출마했다. 이 부군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놓고 저울질하다 막판에 야당을 선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충주시장을 놓

배신의 계절

고 김호복 시장은 한나라당 후보로, 우건도 전 충주부시장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2년 전 김 시장은 고향 후배이자, 충주고 2년 후배인 우 부시장을 충주부시장으로 받아들였다. 나이가 부시장 퇴임 후 재난해 3월에는 충주세계조경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부임하는데 동의했다. 이윽고 보은군수와 김수백 보은 전 부군수도 비슷한 경우다. 보은군수를 놓고 이 군수는 자유선진당 후보로, 김 전 부군수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왔다가 이 군수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마를 포기하는 바람에 날 받아 됐다. 이 군수는 고향 1년 후배인 김 부군수를 받아들일 때 이용희 의원 입회 아데 '충성맹세(?)'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호 대전시장과 임홍철 전 대전시장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리턴매치'를 벌인다. 대전시장 후보로 박 시장은 한나라당, 임 전시장은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왔다. 둘 사이는 한때 시장과 국장 관계였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

김동성 단양군수와 류한우 전 부군수도 비슷하다. 단양 군수를 놓고 김 군수는 한나라당 후보로, 류 전 부군수는 민주당후보로 '맞짱'을 뜬 뻔했다. 둘 사이는 2년을 군수와 부군수로 호흡을 같이했다. 하지만 류 전 부군수는 민주당 경선에서 이진표 전 단양군수에 밀려 정치포기 선언을 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에 적으로 변한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이다. 앞으로 단체장은 자신의 고향 출신을 부단체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다. 물론 부단체장들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것이 은혜를 배신으로 대하고 도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인 배신은 본인에게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스스로 찾아낸 명분 앞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불신에서 비롯되는 배신은 또 거대하고 음험한 덩, 음모를 염두에 둔 행동과 무관치 않다. 물론 정치는 생물과도 같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게 현실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41(자심)
언 론 사	(주)매일신문사 대구 중구 서성로 26 대표이사 이 창 영
심의대상기사	매일신문 2010년 4월 29일자 4면 『“각종 인프라·신기업정책 만족, 수도권 갈 이유 없어요”』 및 『“기업이 웃어야 구미가 행복” 업체 민원 해결률 96%』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구미국가산단의 힘 어디서 나오나’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미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단체장의 투자유치 실적 등 책임 중 성과를 부각하고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각종 인프라·新기업정책 만족, 수도권 갈 이유 없어요”

구미국가산단이 힘 어디서 나오나

〈상〉 기업들이 구미를 찾는 까닭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수도권 규제 완화, 세종시 수정안 등 만만찮은 대내외적 투자 여건 속에서도 삼성, LG 등 국내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체들은 꾸준히 구미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구미에 가면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해주기에 굴지의 기업들이 구미로 몰려드는 것일까. 수도권의 산업단지를 체쳐두고 구미국가공단으로 임주를 결정한 기업체들의 내막과 구미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쏟아붓는 노력 등 투자유치와 관련한 일들을 상·하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해 본다. 구미는 지난해 각종 공단 유치로 국가공단 3천3000만㎡(1천만평) 시대를 활짝 연데 이어 국가산업 5단지(하이테크밸리)와 경제자유구역(구미 디지털산업지구) 등 1천6000만㎡ 규모의 공단 조성을 앞둔 기업 투자유

치가 또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중략)

엑손모빌은 2007년 한미 FTA 협상 이후 국내 처음으로 이끌어낸 미국 투자라는 점에서 정·재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엑손모빌 유치에 숨겨진 사실 하나가 더 있다. 엑손모빌 짐 해리스 부회장의 딸이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타운대학을 졸업했는데, 남유진 시장이 이 대학에서 유학생 활동을 했다. 짐 해리스 부회장이 자신의 딸과 대학 동문인 남 시장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진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타깃기업 책임자의 가족관계까지 꿰뚫는 지략이 돋보인 대목이다.

남 시장이 학연으로 덕을 본 건 엑손모빌뿐만이 아니다. 남용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권영수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이회국 LG실트론 대표이사 등과는 서울대 동문으로 최근 LG계열사들의 구미투자 때 적잖은 덕을 봤다. 지난해 11월 4단지에 임주한 STX솔리(주) 유치 때엔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구미 출신인 점을 감안, 수차례 고향 투자를 부탁했고 귀찮을 정도로 찾았다.

LS전선 안양사업장의 구미 인동사업장 이전 유치도 3년여의 세월이 걸렸다. 수도권 규제완화 이

의 결 번 호	2010지선142(자심)
언 론 사	(주)우리일보 인천 연수구 연수2동 592 두손브릿지 3층 대표이사 유 장 수
심의대상기사	우리일보 2010년 5월 4일자 14면 『민선 3·4대 이어 5대까지 간다…안상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에 정자의 주요 이력과 인생담을 소개하며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 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선 3·4대 이어 5대까지 간다… 안상수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겨내고 전문경영인, 국회의원, 인천시장에 오른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1946년 충남 태안에서 가난한 어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인천서립초등학교, 인천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에 입학했다. 대학시절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정교사, 신문배달, 월부 책 판매 등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학사모를 썼다.

미국 트로이주립대학교 대학원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트로이주립대 대학원 시절 그는 국내 처음으로 ‘국제금융 선물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제세산업과 동양그룹에서 무역, 금융,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맡았으며 동양증권(주) 이사, 감사, 부사장을 지냈다. 또 동양선물(주) 미국 시카

고 현지법인 대표이사, (주)데이콤 이사,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을 역임하는 등 40대의 나이로 전문 경영인의 기반을 다졌다.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기업을 떠나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것은 지난 1996년. 그해 2월 신한국당의 러브콜을 받으며 CEO영업 케이스로 정치에 입문했다. 같은 해 4·11 제 15대 총선(인천 계양·강화 갑)에서 낙선한 안 후보는 이어 1998년 6·4 인천시장(민선 2대) 선거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이듬해인 1999년 6·3 보궐선거(인천 계양·강화 갑)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지만, 2000년 4·13 제 16대 총선(계양)에서 또다시 낙선의 아픔을 맛봤다.

권도중래 끝에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 민선 3대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인천시장(민선 4대) 단독 후보로 나서 재선에 성공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2014인천아시아안경기대회 유치 등 인천과 대한민국에 비전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09년 12월 29일 한국언론인협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행정혁신분문을 수상했다. 앞서 재외동포신문 ‘2008 올해의 인물상’(2009

년 2월 20일), 우드로윌슨의 '2009 올해의 우드로윌슨상' (2009년 4월 10일)을 받기도 했다.

한편, 안 후보의 부인 정경임(58)씨는 결혼 1년6개월 만인 지난 1984년 뇌졸중의 일종인 '모야모야병'으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완쾌된 뒤 대학 강단에 섰지만, 1999년 여름 과로가 겹치면서 또다시 발병,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 이후 5년여 만에 의식을 회복하는 등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며 의료진마저 놀라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간병인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희귀병 아내의 손발이 왜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두 번의 기적을 불러일으킨 '안 시장의 애뜻한 사랑 얘기'는 정 씨가 입원했던 병원의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민선 3·4대 이어 5대까지 간다... 안상수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겨내고 전문경영인, 국회의원, 인천시장에 오른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1946년 충남 태안에서 가난한 어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인천시립초등학교, 인천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에 입학했다. 대학시절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정교사, 신문배달, 원부책 판매 등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학사모를 썼다.

미국 브라운주립대학교 대학원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트로이주립대학교 학원 시절 그는 국내 처음으로

'국제금융 선물증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제철산업과 동양그룹에서 무역, 금융,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맡았으며 동양증권의 이사, 감사, 부사장을 지냈다. 또 동양선물주 비국시카고 현지법인 대표이사, 주데이콤 이사, 동양그룹 총합조정실 사장을 역임하는 등 40대의 나이로 전문 경영인의 기반을 다졌다.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기업을 떠나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것은 지난 1996년. 그해 2월 신한국민당의 러브를 받으며 CEO영입 케이스로 정치에 입문했다. 같은 해 4·11 제15대 총선인천 계양·강화갑에서 낙선한 안 후보는 이어 1998년 6·4 인천시장(민선 2대) 선거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이듬해인 1999년 6·3 보궐선거(인천 계양·강화갑)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지만, 2000년 4·13 제16대 총선(계양에서 또다시 낙선의 아픔을 맛봤다.

권도중에 끝어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 내 경선을 통해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 민선 3대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인천시장(민선 4대) 단독 후보로 나서 재선에 성공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인천 세계도시추진 계획,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등 인천과 대한민국에 비전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09년 12월 29일 한국언론인협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행정혁신부분을 수상했다. 앞서 재외동포신문의 '2008 올해의 인물상' (2009년 2월 20일), 우드로윌슨의 '2009 올해의 우드로윌슨상' (2009년 4월 10일)을 받기

도 했다.

한편, 안 후보의 부인 정경임(58)씨는 결혼 1년6개월 만인 지난 1984년 뇌졸중의 일종인 '모야모야병'으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완쾌된 뒤 대학 강단에 섰지만, 1999년 여름 과로가 겹치면서 또다시 발병,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 이후 5년여 만에 의식을 회복하는 등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며 의료진마저 놀라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간병인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희귀병 아내의 손발이 왜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두 번의 기적을 불러일으킨 '안 시장의 애뜻한 사랑 얘기'는 정 씨가 입원했던 병원의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인천/박영재 기자
jie@hanmail.net



의 결 번 호	2010지선143(자심)
언 론 사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 서울 중구 순화동 2-6 중앙문화센터빌딩 7층 대표이사 김 광 수
심의대상기사	월간중앙 2010년 5월호 288~289면 『강진 주민 11명 늘었어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 강진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기사에서 재임 중 성과를 경력 및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진 주민 11명 늘었어요

‘쌀물농촌’ 43년 만에…부농·장학금·스포츠·청자·기업 등 살려낸 결과

살기 좋은 마을에는 사람이 늘어나는 법이다. 전남 강진군은 2002년 이전까지는 한 해 4000여 명이 줄어드는 8%대 인구감소율을 나타냈다. 2006년 4만 1938명, 2007년 4만 1352명, 2008년 4만 1153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4만 1164명으로 11명이 늘어나는 경사를 맞았다. 실로 43년 만의 경사였다. 먹고살기 좋아지고 생활이 여유로워진 덕분이다. 돌아오는 농촌이 된 것이다.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군정 구호를 아예 ‘인구감소 해결’로 정했습니다. 이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2010년 내에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1년 앞당겼습니다.” 황주홍(58) 군수는 무엇보다 이 목표를 달성해서 뿌듯하다고 밝혔다.

농촌 인구 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요즘 강진군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것일까?

“조직이 변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원이 먼저 변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우선 공무원이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사회를 변하게 하는 발판이 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황 군수는 재임 중 공무원 조직을 성과와 실적 위주의 ‘팀’ 제로 개편했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엘리트 조직인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문을 내렸다. 의사결정단계를 줄이고 공무원 간 경쟁 심리를 부추기는 시스템이었다. 이는 기존 13개 실·과와 56담당을 1실 25개 팀으로 개편, 기존 6급 담당(계장)을 실무인력으로 전환했다. 결재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다. 이것이 바로 전국적으로 열려진 ‘강진드림팀’ 제도.

그는 팀별로 성과지표를 수치·계량화해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 우수 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했다. 인센티브제도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바기는 시스템이었다. 효과는 빨랐다. 공무원 사회에 성과 경쟁의 불이 붙었다. 공무원들이 뛰기 시작하면서 무수한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서로가 잠자던 잠재력을 깨우고 토론하고 평가했다.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농·림·축·수산업의 부농화, 장학금 대폭 확충,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 청자산업의 세계화, 민간자본 투자유치 등 변화와 성과 등이 줄을 이었다. 결과적으로 ‘떠나는 농촌’이었던 강진군이 무려 43년 만에 ‘돌아오는 농촌’이 된 것이다.(후략)

이 사람 | 황주홍 군수가 만세를 불렀다

강진 주민 11명 늘었어요

‘별물농촌’ 43년 만에… 부농·장학금·스포츠·청자·기업 등 살려낸 결과

2 김재현 교수님

[illegible]

물론, 마음을 받들기 위해 공경 구호인 '아예' '전공'을
배려로 정했습니다. 이 책도, 무슨 일 없어도 20년
만에 재출판(아예 마음이었어!) 없었습니다" 할
수있도록 공적은 무엇인지 이 책을 다들해서 봐야
하네요.

농민연구회 김주자 지회위원으로부터 내뿜는 요구 장문장은 '나라
새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까?'
"조직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조직에 힘이 모아진다. 힘이
나, 스코틀랜드계로 온 신 공무원이 변화가 없다. (정)
이 지역에서는 변화가 오는 변화가 되고, 새가 일종의 원
동력이 될 수 있다."

[illegible][illegible]

귀농지로 인기 높아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는
미리미리 주님 주님 생각에 왜곡되 되려 한 것만 같다. '어
떻게, 전생애의 내가 "영광의 신"이라 하여 왔던 영광의 신
과 함께 영생의 신으로 함께 영생한다'고 기도한다.

[illegible]

이론 아니다. 현대 고전 경제 이론은 국민 300만명이
선물과를 산입하고 있다. 결국 실용 경제 수 이론은 2000
년 10월 1일 현재 100만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例 3】已知 $\{a_n\}$ 为等差数列, $a_1 + a_2 + \cdots + a_{10} = 10$, $a_1 + a_3 + \cdots + a_{19} = 10$, 则 $a_1 + a_3 + \cdots + a_{19} =$ _____.

분석, 지난해 미화 순이익과 총자산 8천69억 원이 순이익에 부러웠다. 미화 순이익도 70%였다. 지난해 11월 10일엔 사업제와 수출업자를 개편하고 20% 정도의 수익을 지출으로 올려부리는 분기별로 15%씩 이익 정도를 높이고 있었다.

교육에 관해서는 인재를 성장시키는 데 있었다. 비로
중요, 인재를 성장시키는 데 있었다. 비로
중요, 인재를 성장시키는 데 있었다. 비로

스스로 봉봉새인 장승은 스스로의 비결을 이렇게 풀
다. 온재이인 채도 조·치·이·을 등이 1529년 편지본인
제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60·761·762·763·764·765·766·767·768·76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90·791·792·793·794·795·796·797·798·799·800·801·802·803·804·805·806·807·808·809·810·811·812·813·814·815·816·817·818·819·820·821·822·823·824·825·826·827·828·829·830·831·832·833·834·835·836·837·838·839·840·841·842·843·844·845·846·847·848·849·850·851·852·853·854·855·856·857·858·859·860·861·862·863·864·865·866·867·868·869·870·871·872·873·874·875·876·877·878·879·880·881·882·883·884·885·886·887·888·889·890·891·892·893·894·895·896·897·898·899·900·901·902·903·904·905·906·907·908·909·910·911·912·913·914·915·916·917·918·919·920·921·922·923·924·925·926·927·928·929·930·931·932·933·934·935·936·937·938·939·940·941·942·943·944·945·946·947·948·949·950·951·952·953·954·955·956·957·958·959·960·961·962·963·964·965·966·967·968·969·970·971·972·973·974·975·976·977·978·979·980·981·982·983·984·985·986·987·988·989·990·991·992·993·994·995·996·997·998·999·1000·1001·1002·1003·1004·1005·1006·1007·1008·1009·1010·1011·1012·1013·1014·1015·1016·1017·1018·1019·1020·1021·1022·1023·1024·1025·1026·1027·1028·1029·1030·1031·103

다. 그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서 미안한 일이 있다. “책만 읽고 있어 배운 지식이 실제 영역에 적용이 안 된다. 말하고 싶어까지 영혼이 주변을 완전히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의 관여라고 믿고 있었는데, 안과 집사를 좀 더 거절하게 됐다. 갖이 또 수월이 되고 불쌍하다.”

그의 관여는 의의의 단절이다. 관여는 마음 속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경의 국소에서 30여년 전 살해 연재했습니다. 범인중의 하나인 이 배순이라는 친구는 조국에 남아있었고 곧 조국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 친구가 배순이었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배순이라는 친구가 배순이라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45(자심)
언 론 사	여수여수사람들 전남 여수시 학동 31-4 발행인 김 명 천
심의대상기사	여수여수사람들 2010년 5월호(통권 제10호) 10~13면 『여수! 박람회준비 이 대로 좋은가?』 및 99~100면 『숨털보다 가벼운 눈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여수시장)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여수! 박람회준비 이대로 좋은가?

1. 여수엑스포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가장 절실한가!

여수박람회지원특별법과 국회에 박람회특위가 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4명 선출은 하늘이 주신 전무후무할 선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여건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예산국회가 개최됐을 때 국회의원들마다 자기를 지역구사업 챙기느라 동분서주한 결과 정부 원안보다 1조원을 더 많이 통과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정작 여수박람회의 필수요건인 진입도로 건설비 1,931억원, 여수-남해간의 한려대교 실시설계비 10억원과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의 여수연장, 고흥-여수 간의 연륙연도교와 여수공항 확장과 항만사업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민선3기 때는, 일자리 창출과 대단위 숙박업소 확충, 구도심권 개발을 위해 우수한 시정직원들로 투자유치사업소를 만들어, 투명하게 윈스톱으로

인·허가를 내주자, 국내·외 기업들이 여수에 몰려들었으나, 민선4기 들어 투자유치사업소를 해체하고 축소시킨 반면 막대한 예산으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도 초라한 실적이다.

시내 간선도로망 재편과 간판정비사업 등의 조기완공과 전 국민적 열기를 끌어내기 위해 제89회 전국체전을 유치했지만 동네잔치로 끝내버렸고, 여수에는 경기장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낸 일이 참으로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립해양수산물물관도 인천·부산과 두 차례 싸워 유치 확정되었으나, 부산으로 뺏겨버렸고,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 중이던 시립종합박물관도 포기해버려, 엑스포 개최도시에 박물관이 하나 없는 참담한 현실로 전락시켰다. 여수에서 발견된 2,000여점의 소중한 역사적 매장문화재를 찾아 올 길은 막혔고, 3년전 안도에서 발견된 유물과 최근 GS공사현장에서 발굴된 '43.5cm의 세계적인 보물 마제석검'의 소유와 전시에는 관심도 없는 무지한 시정을 펴고 있다.

2004년 12월 14일, 박람회장을 60만평의 부지에 1,500만명의 관람객이 오는 여수박람회를 국가계획으로 확정시켰었다. 그 이후 4년 전에 40여만평에 800만명으로 축소되어 분통이 터져도 방안을 제시해 주었지만, 철저히 무시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잘돼 간다!'고 큰소리치며, 허송세월

하고 나서 2010년 1월13일 “지나치게 과장된 것을 몰랐다”고 축소소지를 내비쳤다. 이들의 무능과 직무유기는 엄중히 따지되, 전문가들로 재편해서 늦었지만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 대통령과 독대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상책이다.

박람회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기왕 추진해 오던 SOC사업들을 조기에 준공해 달라”는 건의나 축구는 안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이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연륙연도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이 축소되거나 착공도 안하고 박람회가 끝난 수년 후로 미뤄졌다.

이번에 준공된 여수역 건물을 보면 그동안 여수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모하게 일 해왔는지, 박람회가 어떤 규모일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과 여수의 미래가 걸려 있어 10여년을 매달려 온 박람회이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니 만큼 시민들도 ‘잘돼 간다’는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중략)

4. 여수·순천·광양시의 통합은 3려 통합을 완결시킨 뒤에! 2014년 법이 제정되고...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4번째 추진됐던 3려 통합은 국가 행안부가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여수 시민들의 발의에 의해 추진되어 통합을 가져온 고려시대 이후 1,000년의 지방행정조직의 분할, 통폐합을 정부(조정)가 아닌 주민들의 자율적 합의의 도출로 이뤄진 최초, 최상의 행정구역 통합폐치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산업이나 경제생활권이 같았지만 3개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예산 낭비와 대결구도로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

3려통합으로 통합여수시가 출범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4번의 투표 끝에 간신히 통합되었다. 구 여수에서 한 약속을 안 지켜 그 후유증은 3려통합 12주년이 넘었는데 아직껏 남아있다.

지난해 추진됐던 행안부의 일방적 순천·광양과의 통합은 상호공통점이 없어 3려통합과는 차원이 다르다.

시론

여수!

박람회준비 이대로 좋은가?



본지주관 공채 공무원 1조원도 더 많이 출가하는 사실 주위의 시선이 번개처럼 번뜩인다. 공채 하수박람회장의 필요조건인 전철도로 건설비 1,951억원, 여수-남해와의 원거리도로 건설비 1,011억원과 선주-광양과 호남고속도로의 여수-광양, 고령-여수 간의 연륙연도도로와 여수 공항 확장지정사업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원천3조, 비전5년간의 행정과 대외의 숙제인 수확물, 군도청과 광장을 위해 무수한 시정리현상으로 부채등지시연수를 늘리며, 무명까지 원소문으로 일·회계장 대주석, 군·위 기입을 해 여수가 불타올랐다. 년종대기 상의 주사들 사업장을 해체하고 축소시킨 밀원 막대판 해산으로, 도시개발공사를 단도여도 초라한 실상이었다.

지대 전년도로써 재원부 준공정비사업 등여수지공공과 한 국면적 연계를 끌어내지 못해 제99회 원주제정은 유치했지만 동년전지조 원내비었고, 여수에선 경기장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회주에게 공대 일·공으로 야욕으로 끝났다.

박람회장주관부들은 현실·무산과 무공공 해의 수에 화살이었으나, 무산으로 평가받았고, 박람회 지휘관이 공사 같은 시민출원자들은 모기처럼, 여수·제99도시에 박람회

1. 여수역소포가 영공하려면 무엇이 가장 절실한가!

이수박람회지공채분발의 국회에 박람회능력 있다. 지역공신 국회의원 4명 장승우 의원은 우선 중부주공비 선출로, 2012여수지대비단과 의 성공제자를 위한 의지는 완벽하게 검토되었다.

그나 2010년 여수지공채 제회제를 꼭 국회의원들이야 하려면 지공채비 제회 제

하나 없는 광암을 편입로 전락시켰다. 여수에 서 반권회 2,000여명의 소중한 약자의 배후를 화제는 장아 못 깊은 마칠로, 3년전 안도에서 반권회 유물과 같은 GS공식화장지서 반권회 133년의 제지적인 모순 마제지력'의 소유와 권도에는 편입도 없는 무수한 지정공 회도 있다.

2011년 12월13일, 박람회장은 800여명의 부서에 1,500여명의 관망객이 오는 여수박람회를 국가개척으로 확정시켰었다. 그 이후 4년 전제 40이만명에 800여명으로 축소되어 불꽃이 되지도 못한채 전사해 주었지만, 공적회 모시라는 기회였을 때부터 “잘돼 간다”로 간주하면서, 하층제원하고 나서 2010년 1월13일 “지나치게 과장된 것을 몰랐다”고 축소소지를 내비쳤다. 이들의 무능과 직무유기는 엄중히 따지되, 전문가들로 재편해서 늦었지만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 대통령과 독대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상책이다.

박람회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기왕 추진해 오던 SOC사업들을 조기에 준공해 달라”는 건의나 축구는 안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이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연륙연도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이 축소되거나 착공도 안하고 박람회가 끝난 수년 후로 미뤄졌다.

이번에 준공된 여수역 건물을 보면 그동안 여수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모하게 일 해왔는지, 박람회가 어떤 규모일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과 여수의 미래가 걸려 있어 10여년을 매달려 온 박람회이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니 만큼 시민들도 ‘잘돼 간다’는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중략)

‘잘돼 간다’는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2. 여수지역에 가장 절실한 연안 및 사업은 박람회와 영공개회

무엇보다 절실한 연안은 박람회의 성공개회이다.

여수는 원년도 남지 않은 광암에 위치하여 남해안의 수많은 도시와 원거리도로, 선주도와 원년은 광암개척과 화물선로 요구하고, 수차 없이 발달하여 부속 다음으로 큰 도시광에는 박람회 공거하고, 광역소로 지문있으며, 각종 선의와 광암을 실은 대입부원이 대한 일 두 직면 중화하여 “이수여까지 전 제원까지 발라” 단 화공지선이 있었다. 국가전년도 공평이 생가면 시 상의 남지공 모시공 무리위하면 도시제이었고, 군도제와 화공지선대, 수차없이 남지한 토대로 소수간소와 수많은 원거리가 사라져 안고 간 상조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되, 방안으로 2012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3려통합을 했으나, 박람회유치로 후로 2012년 1월 제회제를 위해 10여년은 남지 대변되화하고, 공채주공비 제회 제회 공평 원년 안도제 10여년 주공비로 지공비, 대변원수 박람회지공과 지공을 모비 고동하여 여수지대해는 인사들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모하게 일 해왔는지, 박람회가 어떤 규모일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과 여수의 미래가 걸려 있어 10여년을 매달려 온 박람회이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니 만큼 시민들도 ‘잘돼 간다’는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중략)

정부는 2014년에 현재의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행정체계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도, 2009년 행안부가 추진한 통합은 법도 원칙도 없이 밀어 붙였다.

여수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순천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신청을 했던 것이다.

통합해 봐야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여수시청과 세무서, 교육청, 상공회의소와 YMCA와 모든 기관과 문화원, 체육회, 부인회 등 각종사회단체가 없어졌을 것이다.

우리 여수는 박람회가 급한데 “통합이 급하다, 광양에 시청을 켜야 한다” 등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하자고 운운하여 반대에 나섰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여수가 살았다.

만약 일부 정치세력들의 뜻대로 순천으로 흡수 통합되었다면, 오흔인 여수현감 한 사람이 이미 멸망한 고려왕조에 충성한다고 조선왕조에 반기를 들면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역적의 땅(反逆鄉)으로 순천에 예측되어 이중 과세와 부역 등을 해왔다.

순천에 예측된 500년 간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굴레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이 고장 선인들의 한(恨)을 외면하는 일이고, 스스로 자주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시민으로 두고두고 조롱받았을 것이다. 지금 6·2지방선거 임후보 예정자들이 ‘자기만이 여수를 사랑하는 애향인(愛鄉人)’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여수의 운명을 가르는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따져봐야 한다. 예정대로 순천에 통합되었다면, 지금은 순천시청 선거로 뜨거울 것이고 오는 6월 30일로 여수시의 시청을 비롯한 모든 기관 단체들과 함께 여수(麗水)! 라는 지명과 500년만에 되찾은 여수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는 못난 후손들에 의해 10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이제라도 인재와 지혜를 모아 박람회를 성공케 하고 여수가 4통8달하는 교통 산업 문화 관광 레포츠 해양 수산 교육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한 뒤 통합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흥군민이 원하고 생활권도 같았던 고흥과의 통합이 더 시급하지 않겠는가!!

시론

살아 보아중생이도 뭇해야 했다.

3. 애상무궁가 전국 기조전세 10위권인데, 이에 걸맞는 영광은!

무엇보다 3대동맹의 전세3선이었지만 통합지정서를 잘못이 했다. 행정의 부정부패가 되, 많은 추가비용도 안 되고는 않은 아파한 권력이나 비용으로 안 되어 해, 한 위도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고, 늘 있고 남의 뿐 인 권력일 많은 가한 것 잊어야 한다. 광 60년 입수 중심의 원관들을 유지해도 꼭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30개원만은 4 개라니 조직개편을 해지 임무원계연과 해로 안 되고, 전문성도 없애 버린 후유증의 리해는 오히려 여수지역의 복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도 서면지 전국제천 제 3회 정기광 하나 못 만250 분배한으로 지관 내수용 부 도시 남을할 수 있기 때문에 더디고 라성이다.

4. 여수·순천·광양시의 통합은 3려 통합을 완결시킨 뒤에! 2014년 법이 제정되고...

여수시, 이천시, 이천군의 4번째 추진됐던 3려부들은 지금 행안부가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여수시청의 공약에 의해 추진되어 통합을 가자고 고라시내 20~1,3000의 3려해할 조의의 또한, 3려해할 정전(조성지) 아닌 수면지의 지을정 합력조으로 이천시 회 6, 3려의 정정지예 통합제치의 보편을 보류했다. 정기를 받았

나.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자연이나 경제생태권이 같을지라도 3려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예산공비의 대진구도로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

3려통합으로 통합여수시가 출범되기까지 여러차례의 공청회와 4번의 주민 길에 간신히 통합했다. 구 여수에서 한 가족을 인 제 2 후유증은, 3대동맹 12주년의 뒤집는데 아꼈을 뒤이었다.

지나에 추진했던 행안부의 일방적 순천·광양과의 통합은 상호불합치가 있어 3려통합가는 시점이 다다라.

정부는 2014년에 현재의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행정체계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도, 2009년 행안부가 추진한 통합은 법도 원칙도 없이 밀어 붙였다.

여수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순천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신청을 했던 것이다.

통합해 봐야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여수시청과 세무서, 교육청, 상공회의소와 YMCA와 모든 기관과 문화원, 체육회, 부인회 등 각종사회단체가 없어졌을 것이다.

우리 여수는 박람회가 급한데 “통합이 급하다, 광양에 시청을 켜야 한다” 등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하자고 운운하여 반대에 나섰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여수가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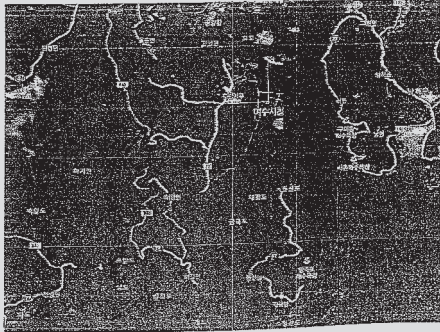
만약 일부 정치세력들의 뜻대로, 순천으로 흡수 통합되었다면, 오흔인 여수현감 한 사람이 이미 멸망한 고려왕조에 충성한다고 조선왕조에 반기를 들면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역적의 땅(反逆鄉)으로 순천에 예측되어 이중 과세와 부역 등을 해왔다.

부역 등을 해왔다.

순천에 예측된 500년 간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굴레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이 고장 선인들의 한(恨)을 외면하는 일이고, 스스로 자주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시민으로 두고두고 조롱받았을 것이다. 지금 6·2지방선거 임후보 예정자들이 ‘자기만이 여수를 사랑하는 애향인(愛鄉人)’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여수의 운명을 가르는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따져봐야 한다. 예정대로 순천에 통합되었다면, 지금은 순천시청 선거로 뜨거울 것이고 오는 6월30일로 여수시의 시청을 비롯한 모든 기관 단체들과 함께 여수(麗水)! 라는 지명과 500년만에 되찾은 여수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는 못난 후손들에 의해 10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이제라도 인재와 지혜를 모아 박람회를 성공케 하고 여수가 4통8달하는 교통 산업 문화 관광 레포츠 해양 수산 교육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한 뒤 통합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흥군민이 원하고 생활권도 같았던 고흥과의 통합이 더 시급하지 않겠는가!!



여수시청지침 13

제 4 부
심 의
의 결
사 례

■ 수상(隨想)

숨털보다 가벼운 눈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요!

작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셨고, 며칠 전에는 법정스님이 전에 들어 보지 못한 또 다른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일적하셨습니다.

생전에 두 분은 중교를 초월하여 교분이 두터우셨고, 언제나 어디서나 큰 가르침과 함께 여러모로 베푸시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어, 천주교 신자나 불자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두 분은 겸소하시고 청렴하시면서도 자신에게는 늘 엄격하셨고, 나라 안팎이 어지럽고 시끄러울 때도, 두 분이 있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두 분의 고귀한 정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나가 학생들이나 동포들과 주한 외국인들이나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숨털보다 가벼운 눈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요!

작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셨고, 마침 전에는 박정수님이 석에 들어 보지 못한 또 다른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입석하셨습니다.

생태에 늘 높은 종으로 호영하여 모두가 무너졌었고, 연개에 어디지
나를 가르침과 함께 어디로 보려는지, 것을 참으로 잊어버려서, 참으로
소신이나 참으로 초월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
으셨습니까, 늘 높은 길로 오고서 참으로 저서로 떠나, 저서로 가는 는 열려
되었고, 나라 인물이 어디로 서려를 떠나, 늘 높이 있어 호되려가
어디로 서려의 어찌 로를 늘 어디서 두 호되려나

이 분야의 고귀한 정신을 끝내뿐 아니라 라디오 나간 학생이나 동포들과 주한 외교인들
이나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길 우리집안은 산마루가 증여되지 않았고, 현이 된 식량에게 장남을 주었고, 이 땅에 장기 기증운동의 새바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별빛소년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다. 가난 따위라도 살아가야 하는데, 많이 굶고 많이 울지, 정말 지겨워서 한때는 군살처럼 붙었다었고, 다비식을 하면 공복처럼 고향이 언덕이 한사이드로 된 따위로, TV를 지켜보는 어린이들의 침묵을 공리도 많은 공포를 들었었고, 어린이의 지식을 얻어 온 소년의 저서들은 ‘별빛을 쫓고 간헐하다’ 같은 제목도 몇 더는 겹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illegible]

대통령이 요런 보고 작은 귀가 많겠지요만 지금은 온 때 외에는 참니다. 했더니 소년게시



금시 김충석

[illegible][illegible]

스님께서는 이 세 모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지가지로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같고 같습니다. 밝고 어두운 것, 뜨겁고 차가운 것, 단맛과 쓴맛,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밝고 어두운 것, 뜨겁고 차가운 것, 단맛과 쓴맛,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밝고 어두운 것, 뜨겁고 차가운 것, 단맛과 쓴맛,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2010. 3. 13. 목요일

을 하는 내가 걱정이 되셨던지 만나자마자 이번 태풍에 피해는 없었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선창 일부와 바닷가에 있는 시설들은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배나 사람 모두 무사했습니다. 했더니 스님께서서는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태풍이 오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지만 태풍은 올 때 와줘야 합니다. 했더니 스님께서서는 의아해 하시면서 왜 그러냐고 물으셨습니다. 논갈이를 할 때나, 밭을 갈 때 쟁기로 땅을 깊이 파서 갈아엎어야 땅이 숨을 쉬고 곡식이 잘됨과 같이, 바다 밑에는 빨이나 모래가 쌓여 있는데, 각종 영양염류와 프랑크톤이 생겨 모든 수산동식물의 모태나 다름없는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바다 밑에 있는 빨도 오래되면 영양분이 줄어들어 황폐해지는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다 밑을 뒤집어 갈아엎어 놓기 때문에, 어부들은 태풍이 무서우면서도 태풍이 지나가면 풍어로 이어져 만선을 구가하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히면 은근히 태풍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였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무척 흥미를 느끼셨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산속의 나무들도 부러지고 뽑히고 한바탕 소란이 있었지만, 태풍이 아니면 사람이 어찌 깊은 산중의 나무들을 가지치기 하고 솎아내겠습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솜털보다 부드럽고 가벼운 눈이 나뭇가지 위에 소복이 쌓이고,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굵은 나뭇가지들이 툭툭 부러지는 소리에 잠을 깨기도 합니다. 산속의 이치만 알았는데 바다에도 오묘한 자연의 섭리가 있네요! 비올 때 비오고, 바람 불 때 바람 불고, 눈 올 때 눈이 오고, 뜨거울 때 뜨겁고, 추울 때 추워야 사람살기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올해는 여느 해 보다 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가지치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풍년도 들 것 같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스님의 정신이 오래오래 전해져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밝고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2010. 3. 13 밤에

의결번호	2010지선146(자심)
언론사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58-3 청양빌딩 5,6층 대표이사 곽 영 길
심의대상기사	아주경제 2010년 5월 10일자 A4면 『홍건표 우세속 김만수 바짝 추격』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천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략)부천은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4개 지역
구 중에서 3개가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여당 선
호지역이다.

그러나 지난해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온 김상곤이 당선돼 이번 선거에서 부천지역 민심이 어떻게 드러날 택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략)

또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도 선거판세 예측을 힘들게 한다.

그 동안 각종 여론조사 결과 홍 시장이 33.3%의 지지를 얻어 20.9%의 지지를 받은 김 후보를 비교적 큰 차이로 앞섰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이 40.3%인 것으로 나타나 예측 불허지역으로 분류된다. 부동층의 표가 어느 후보로 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후략)

[illegible]

의 결 번 호	2010지선151(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송백(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4-9 대표이사 신 용 호
심의대상기사	전남매일 2010년 4월 19일자 10면 「민주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듣는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및 광산구청장)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소속의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출마의 변, 공약,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광주 발전의 핵’ 고품격 복구 만들터

◇출마의 변

현대의 지방행정은 자치역량이 강조되면서 각 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할 무한한 책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으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현실에 있다. 특히 복구는 광주의 기초자치단체 중 사회복지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재정 확충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복구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광주시와 소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해 낼 능력이 있는 후보, 복구발전을 책임질 미래비전을 갖춘 확실한 후보가 필요하다.

복구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4번째로 주민수가 많은 거대구이면서 첨단과학산업 1단지와 올해 완공예정인 2단지가 위치해 있고 국립 5·18민주묘

지와 무등산 가시문화권, 광주비엔날레전시관등 첨단문화도시를 상징하는 모든 요소를 갖춘 광주발전의 핵이다.

특히 48만 주민들의 지역사랑과 자부심은 복구발전을 견인하면서 전국 최고의 명품자치구를 만들어내는 최대의 자원이다.

그러나 복구는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전국에서 최고인 65%나 되고 있어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복구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주민의 힘과 행정력을 잘 접목하면 도약과 비상을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잘사는 복구를 만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CEO로서의 경영능력 그리고 목민관으로서 자세가 갖추어 졌을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정책 등 복구발전을 위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일구어 낼 준비가 돼 있다.

또 깨끗하고 투명한 주민중심의 행정과 세계적인 민주인권 도시로서 자긍심을 드높이고, 고품격의 문화 복구를 만들어 나갈 자신이 있다.(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155(자심)
언 론 사	(주)일요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쌍림동 151-11 쌍림빌딩 13층 대표이사 고 재 구
심의대상기사	일요서울 2010년 5월 2일자 34면 『“서민과 중산층의 도시로 만들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송파구청장)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이색 후보라고 소개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라는 점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민과 중산층의 도시로 만들겠다”

한나라당 텃밭 ‘빅3’ 新정치1번지에 도전

서울내 ‘영남권’으로 불리는 ‘빅3’ 지역이 있다. 바로 강남, 서초, 송파를 일컫는 말이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통하는 지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가 나서지 않을려는 지역이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들은 공천이 곧 본선으로 여길 정도로 치열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전남 장흥 출신의 박병권 변호사(46)가 송파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친동생인 고 김대의 선생님의 딸과 결혼한 DJ처조카라서 더 관심을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이고 내가 DJ 조카사위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송

파는 강남, 서초처럼 바닥부터 위까지 한나라당 성향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송파병의 경우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이 민선구청장 2번, 국회의원 2번을 통해 고정지지층 40%를 확보하고 있다”며 “부동층 10%만 가져올 경우 승리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또한 과거 10년동안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이 모두 한나라당 일당독재로 해왔다는 점에서 구민들이 교체 의식이 높다는 점도 호재다. 게다가 중앙당에서 공천 잡음 역시 민주당 후보에게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송파구청장의 경우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지역으로 여성후보를 내세웠다가 후보자가 자꾸 교체되면서 후보자 결정에 진통을 겪었다. 현직 구청장인 김영순 여성구청장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 역시 그 배경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박 변호사는 “여성 후보가 나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송파를 서민과 중산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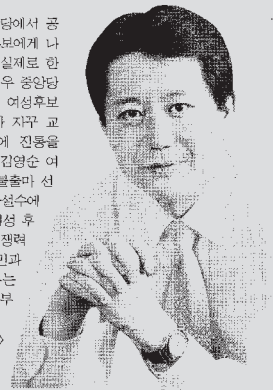
“서민과 중산층의 도시로 만들겠다”

한나라당 텃밭 ‘빅3’ 新정치1번지에 도전

서울내 ‘영남권’으로 불리는 ‘빅3’ 지역이 있다. 바로 강남, 서초, 송파를 일컫는 말이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공천=당선’이라는 능식이 통하는 지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

박 변호사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이고 내가 DJ 조카사위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송파는 강남, 서초처럼 바다부터 위까지 한나라당 성향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송파병의 경우

도 호재다. 게다가 중앙당에서 공천 잡을 역시 민주당 후보에게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송파구청장의 경우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지역으로 여성후보를 내세웠다가 후보자가 자꾸 교체되면서 후보자 결정에 진통을 겪었다. 현직 구청장인 김영순 여성 구청장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 역시 그 배경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박 변호사는 “여성 후보가 나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송파를 서민과 중산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정표40%+부동층 10%로 당선 자신”

라 이런 추세가 나서지 않을려는 지역이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들은 공천이 곧 본선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치열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전남 장흥 출신의 박병권 변호사(46)가 송파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친동생인 고 김대의 선생님의 딸과 결혼한 DJ계 조카라서 더 관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이 민선구청장 2번, 국회의원 2번을 통해 고정지지층 40%를 확보하고 있다”며 “부동층 10%만 가져와도 경우 승리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또한 과거 10년동안 국회의원, 구청장, 시·도의원이 모두 한나라당 일당독재로 해왔다는 점에서 구민들이 교체 의식이 높다는 점

〈홍준철 기자〉
maricoco@dailypol.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157(자심)
언 론 사	(주)전광일보사 전남 순천시 장천동 84-7 삼익빌딩 3층 대표이사 박 양 주
심의대상기사	전광일보 2010년 5월 10일자 14면 『“전남교육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희망신안’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남도 교육의원, 신안군수)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정치적 견해, 각오, 계획 등을 여러 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남교육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가 주인 되는

교육 실현

6.2지방선거와 함께 주민직선제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도교육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소통의 기회를 열고자 본지는 오영석 도교육의원 예비후보자(제1선거구-목포·신안·해남·완도·진도)를 직접 만나 전라남도의 교육 현안을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 교육의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현 정권은 교육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와 소통 거부로 독선과 오만에 의한 획일적 교육 정책(일제교사, 부자교육 등)을 일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감세,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후 교육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의 감소(2조 2천3백여억원)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학생

수 기준의 교원충정원제(전남의 경우 학생 16.9명에 교원1명 배정)로 교사들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무상급식비와 같은 교육복지비를 줄이는 등, 친서민 정책 운운하는 현정권의 사기적 이중 행각에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침묵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중략)

▲ 도교육의원 후보자로서 각오는?

현 이명박 정권은 교육3주체와 소통을 거부하고 독선과 오만에 의한 획일적 교육정책(일제교사, 부자교육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조2천3백여억원이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어느 지역보다 낮은 전라남도의 경우는 교육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하여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충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바로 학생들을 교육력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학생들의 무상급식비와 같은 교육복지비도 줄어들고 있어서 현 정권이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과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후략)

“희망 신안” 군민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6월 2일 제5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소통의 기회를 열고자 본지는 강성중 신안군수 예비 후보(민주당)와의 인터뷰를 통해 출마의 변과 군 정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신안군수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신안군에서 군청 공무원으로 일용돼 읍·면과 본청의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37년간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어렵고 힘든 적도 많았지만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느

끼면서 천직으로 알고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신 군민에게 보답하고 내 고향발전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지난 2006년 명예퇴임을 한 후 전라남도 도의원에 출마했고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당선됐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는 오로지 신안군민의 응원과 격려가 전부였음을 굳게 믿고 있으며 이제 지난날의 공직생활과 의정경험을 통해 쌓아 온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출마하였으며 이번 선거가 군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생각하고 기필코 승리하여 군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후략)

인/터/뷰: 강성중 신안군수 예비후보(민주당)

“전남교육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가 주인 되는 교육 실현

교육 투명성·공교육 강화·혁신학교 실행되는 교육청 안면 리
부패 척결·무상 의무교육 실현·무지개학교 도입 등 핵심공약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남교육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가 주인 되는 교육 실현을 위한 핵심공약을 소개합니다.

1. 교육 투명성 강화: 교육 예산·회계 투명성 제고,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학부모·교사 참여 확대.

2. 공교육 강화: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질 제고, 교육 기회 균등 실현.

3. 혁신학교 실행: 교육 혁신, 교육 질 제고, 교육 기회 균등 실현.

4. 부패 척결: 교육 부패 척결, 교육 질 제고, 교육 기회 균등 실현.

5. 무상 의무교육 실현: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질 제고, 교육 기회 균등 실현.

6. 무지개학교 도입: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질 제고, 교육 기회 균등 실현.

인/터/뷰: 강성중 신안군수 예비후보(민주당)

“‘희망 신안’ 군민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공직 37년·도의원 4년 등 41년간 실무적 감각 살려 군민 뜻 받들러

전원후 고용과 교육·지역 특산물 향토 브랜드화·권역 활성화 등 핵심 공약
강제적 상습·소통의 부대 신안군청·경관·출판수행·혁신에임드·로 제정당




희망 신안, 군민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공직 37년, 도의원 4년 등 41년간 실무적 감각 살려 군민 뜻 받들러. 핵심공약을 소개합니다.

1. 전원후 고용과 교육: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질 제고, 교육 기회 균등 실현.

2. 지역 특산물 향토 브랜드화: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질 제고, 교육 기회 균등 실현.

3. 권역 활성화: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질 제고, 교육 기회 균등 실현.

4. 강제적 상습: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질 제고, 교육 기회 균등 실현.

5. 소통의 부대 신안군청: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질 제고, 교육 기회 균등 실현.

6. 경관: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질 제고, 교육 기회 균등 실현.

7. 출판수행: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질 제고, 교육 기회 균등 실현.

8. 혁신에임드: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질 제고, 교육 기회 균등 실현.

9. 로 제정당: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질 제고, 교육 기회 균등 실현.

의 결 번 호	2010지선158(자심)
언 론 사	(주)에이치앤프레스(호남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857 5층 대표이사 김 형 철
심의대상기사	호남신문 2010년 5월 10일자 9면 『“농어촌 · 중소도시 살리는 교육 이뤄내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남도 교육의원)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특정 현안에 대한 견해 및 교육철학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농어촌 · 중소도시 살리는 교육 이뤄내겠다”

▲도교육의원 예비후보자 오영식

▶ 교육의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현 정권은 교육3주체(교사·학생·학부모)와 소통 거부로 독선과 오만에 의한 획일적 교육 정책(일제교사, 부자교육 등)을 일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금세,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후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의 감소(2조 2천3백여억원)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학생수 기준의 교원충정원제(전남의 경우 학생 16.9명에 교원1명 배정)로 교사들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무상급식비와 같은 교육복지비를 줄이는 등, 친서민 정책 운운하는 현정권의 사기적 이중 행각에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침묵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의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꿈을 심어줘야 할 교사들이 그 열정과 사기를 잃어가는 교육 현장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벼랑

끝에 선 전남교육을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와 함께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중략)

▶ 후보자의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초등교원 13년과 중등(교교)교원 19년 등 32년동안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목포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목포시 교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전교조 목포지회 초대 지회장, 전교조 전남지부 사립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한국의 교육현장을 몸소 체험하는 계기가 됐으며 전교조 탄압이 한창인 지난 1987년 초대 지회장을 맡아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면서 여러 교사들과 교육문제를 고민했던 것이 지금 교육실천 대안을 마련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준비된 교육의원으로 자질을 갖추면서 교육의 3주체가 진정한 교육현장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도교육의원 후보자로서 각오는?

현 이명박 정권은 교육3주체와 소통을 거부하고 독선과 오만에 의한 획일적 교육정책(일제교사,

의 결 번 호	2010지선159(자심)
언 론 사	(주)참언론(시새N) 서울 종로구 교복동 11-1 부귀빌딩 6층 대표이사 표 완 수
심의대상기사	시새N 2010년 5월 8일자 28~30면 『“서울시민이 원하는 복지, 그게 한명숙 전공이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만을 게재하면서 출마계기와 비전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울시민이 원하는 복지, 그게 한명숙 전공이다”

인터뷰를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의 자서전을 읽었다. 연극에 몰입하고 춤과 노래를 즐기던 청소년기의 발랄함이 눈에 띄었다. 아리아를 즐겨 부르던 아버지가 결혼식 때 축하를 직접 불렀다는 대목도 이채로웠다. 한 전 총리가 ‘노무현 서거 1주기’ 추모 콘서트 때 ‘명사 밴드’의 보컬로 나설 거라던

시 새 N 인터뷰

한명숙

“서울시민이 원하는 복지, 그게 한명숙 전공이다”

야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투어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시민이 ‘개발’보다 ‘복지’를 원하기 때문에 프레임이 전환됐다고 진단한다. 나이가 ‘복지’라면 누구보다 한명숙이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명숙(한명숙)은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라지 않았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라지 않았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라지 않았다.

자녀가 고교생이던 한 전 총리는 친정아버지 한명숙(한명숙)을 만났다. 한명숙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라지 않았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라지 않았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라지 않았다.

한명숙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라지 않았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라지 않았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라지 않았다.

한명숙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라지 않았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라지 않았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라지 않았다.



보도가 일면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인터뷰 때 만난 한 전 총리는 “그 무대에는 못 오를 것 같다”라며 말을 흐렸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와 서울시장 출마, 아직 끝나지 않은 검찰 수사를 감당해야 하는 심경이 복잡해 보였다. 이번 인터뷰는 4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에 있는 한명숙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선거 치르느라 힘들겠다.

쉬지 못해 피곤기가 쌓여 있다. 지금이라도 조금만 쉬면 좋겠는데(참모들 바라보며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감당기로 한 이유는?

총리라는, 더 큰 틀에서의 국정 운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방행정까지 욕심낼 생각은 없었다(웃음). 대신 유능한 후배들이 성장하는 울타리 구실을 하고 싶었는데 당이나 시민사회가 엄청난 기대와 압박을 보내니 더 이상 피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검찰 수사를 겪으면서 ‘이제는 앞만보고 나갈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 <시사 IN>도 한몫한 거 아닌가? 여론조사를 해서 표지까지 내고(웃음). (편집자 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발행된 <시사IN> 제91호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오세훈 시장과의 가상대결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다.) (중략)

어떤 강점인가?

그동안 다른 데 돈을 쏟아 붓던 오 시장이 이번에 공약을 내면서는 보육·교육·일자리 등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그전 그만큼 시민의 요구와 관심사가 복지에 있다는 거다. 선거의 큰 프레임이 ‘개발’에서 ‘복지’로 옮겨왔다. 그런데 보육·교육·노인·여성·환경... 이런 어젠다를 한명숙만큼 잘 아는 사람도 흔치 않다. 평생이런 문제를 공부했고, 국회의원과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 총리를 거치며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웃음) 텔레비전 토론 등을 하다보면 결국 여기서는 일자리 10만 개 만들겠다. 저기서는 50만 개 이런 식으로 수치 경쟁이 벌어질 텐데, 설사 공약이 비슷하다 해도 그걸 누가 가장 진정성 있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확실히 내가 강점이 있다고 본다. (중략)

정치를 접으려다 다시 전면에 나선 셀인데, 정치인으로서 장기 비전은 뭔가?

정치를 접으려고 했다는 말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선출직에 나간다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정치인이다. 앞으로도 여성 정치인이자 선배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많다. 이번에 승리하면 한명숙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 진영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는 거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여성 시장이 나올 때다. 여성 시장이 시장을 운영하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따뜻함이 있으며 어떤 희망이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내 꿈이다. 그래서 있는 힘껏 싸워보려 한다.

시사IN

인터뷰



4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 전 총리(왼쪽)는, 서울시장 '자위독재'로 명명되고 받았다.

그 시점이 너무나 비자립고 완급을 위해 한때 적극적으로 싸워주지 못하느라 지레주의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내가 정치에서 나가(시) 부 정치인도 되었다. 노 대통령을 지지해 줬었다는 배신감, 생각이 있어서 시민들이 더 걸렸고 그걸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슬라. 노무현 때 문명은 정치인이었지만, 커다란 벽에 도전하는 사람이어서 걸렸었다. 대통령 노무현보다 노무현이 정치가 더 중요하다. 그의 생각을 받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것이 1 주기에 표준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 노무현 바람이 불 거라고 보나?

민병대 시절에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더 정치적이다. 자기 당의 노무현 후보 임명은 누구가 최고로써 받은 거 아니다. 이번이 1 주기에 주보도 100% 카발적으로 오르면 좋겠지만 그게 그런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건 좋지 않다. 사람은 가슴속에서 남아 있는 강요와 자기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친노, 비노가 여전히 반목을 종다.

정치를 접으려다 다시 전면에 나선 셀인데, 정치인으로서 장기 비전은 뭔가?

정치를 접으려다 했다는 말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나는 정치인이다. 앞으로도 여성 정치인이자 선배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많다. 이번에 승리하면 한명숙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 진영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는 거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여성 시장이 나올 때다. 여성 시장이 시장을 운영하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따뜻함이 있으며 어떤 희망이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내 꿈이다. 그래서 있는 힘껏 싸워보려 한다. ●

제 4 부
심 의 결
사 려

의 결 번 호	2010지선160(자심)
언 론 사	(주)뉴스포스트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2-4 2층 대표이사 정 명 자
심의대상기사	뉴스포스트 2010년 4월 25일자 6~7면 『인천 바람』 일으켜 정권 교체 이끌 겠다, 2010년 5월 9일자 4~5면 『쇼맨십은 이제 그만…'경제도지사' 필승불 패』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 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예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소속 후보예정자 의 인터뷰 기사만을 게재하면서 출마계기와 정치적 견해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 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천바람’ 일으켜 정권교체 이끌겠다

[illegible]

지난 12일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영등포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60년 전 인천을 탈환함으로써 수도를 되찾았던 것처럼 인천에서 일으킨 바람으로 서울·경기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의 인천시장

이끌겠다

[illegible]

출마선언에 따라 민주당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후보 구도를 사실상 확정 짓고 본격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 야권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42.8%의 지지를 얻으면서 41.3%의 한나라당 안상수 현 시장을 1.5%p 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내에서 인천시장 선거에 송 최고위원 '수혈론'은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인천에서 필승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분석된다. 18대 총선에서 '386 의원'들이 낙선하는 상황에서 3선 의원인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386 정치인의 대표 주자로 '개혁 정치, 서민 정치' 실천을 다짐하며 올해로 정치 생활 10년째를 맞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송영길 최고위원에게, 인천시장 출마에 대한 변을 들어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중략)

“교육·복지·재정 3대위기 탈피”

- 인천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처한 상황

이 노력치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국회, 검찰, 정보 기관, 지방권력 등 모든 권력을 장악, 일방주의 정책을 하고 있는 사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민주당의 과제다. 특히 수도권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데 서울과 경기도 모두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의 강력한 출마 요구가 있었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나를 키워주시고 3선의 중앙정치인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어주신 인천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후략)

“쇼맨십은 이제 그만…
‘경제도지사’ 필승불패”

지난 4월 20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천된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30여년 행정의 달인, 정책의 달인,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리더십을 갖춘 그가 경기도지사로서의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김진표 예비후보의 변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중략)

[illegible][illegible]

-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경기도 출신, 경기도의 아들로써 30여 년의 공직생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낸 정책 전문가, 행정 전문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리더십과 경륜을 경기도를 위해 바치겠다. 경기도를 국가경쟁력, 교육경쟁력 1위인 핀란드처럼 바꾸겠다. 경기도는 16개 시·도 중에서 면적, 인구, 경제력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가 곧 대한민국이다. 특히, 산업과 벤처기업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이러한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정 경험, 경제와 교육부 총리,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경험과 리더십, 열정을 모두 바치겠다. 대한민국이 G7으로 나아가는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중략)

- 민주당은 6·2 지방선거를 2012년 정권교체의 출발점으로 다지고 있다. 그만큼 수도권 ‘빅3’

중 한 곳인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중요하다. 타 후보들과 다른 김진표 예비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경기도의 작은 이명박’ 김문수 지사의 일자리 무능, 교육 무능, 복지 무능 도정에 대한 심한 비판이다.

‘경제 문외한’, ‘교육 철학 빈곤’, ‘복지 소홀도정’에 대한 심판이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30여년 행정의 달인, 정책의 달인,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리더십을 갖춘 저만이 이번 지방선거의 확실한 필승 카드라고 생각한다. 유시민 후보나 심상정, 안동섭 후보도 야권단일후보로 소색이 없지만 득표력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 김진표로 단일화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저의 경쟁력과 유시민 후보 지지자들의 열성과 성원, 진보정당의 개혁성을 합하면 김문수 도지사에게 필승 불패의 구도를 만들 수 있다.”(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161(자심)
언 론 사	강남포스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6-3 경인빌딩 602호 발행인 조 호 승
심의대상기사	강남포스트 2010년 5월 6일자 3면 『“믿음없는 정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제 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원)와 관련하 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믿음 없는 정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지방자치체는 지역민이 그 지역의 주인이 되는 자주성의 원리를 밑바탕으로 하며, 또한 생활자치이므로 중앙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분권화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요즘 각 정당별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대상자를 발표했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정한 공천제도의 의미는 퇴색, 변색된 채로 진정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지역일꾼을 뽑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외시 한 소위 ‘전략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낙하산 공천’을 실시하여 태생적으로 중앙정치에 익숙될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뜻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유권자의 신뢰도를 상당히 상실하고 있다.

선량한 일반 주민들은 각정당별 공천에 있어, ‘공천기준은 무엇’이었고, ‘공천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당기여도’, ‘공천권자와의 친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공천현금, 정치자금제공’ 과도 연계되지 않았을까 하

는 의문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은 주민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여 ‘정치불신’, ‘정치혐오’라는 주민의 저항을 가져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우리 지역의 한나라당 공천 결과는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 과연 공천기준이 무엇이었는데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 또한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는지,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장과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는 있는지, 주민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고는 했는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결국 이렇게 공천을 받은 대상자들은 앞으로 4년간 주민을 위한 행정이나 의정활동 보다는 정당이나 공천권자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에 앞장서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렇게 만든 중앙정치인이나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공천이라는 실질적으론 낙하산 인사-그럴싸한 포장으로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주민들의 얼굴 하나도 모르고, 지역의 실정은 더더욱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지역의 대표자로 선정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주민을 우습게 보는 한심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행태의 바르고 공정하지 못한 공천

은 정치부패의 원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측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물엿치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꼴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이러한 공천제도의 폐해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소리없는 저항과 항의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믿음없는 정치는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 지금이라도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정자들이시여! 국민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들께서는 이번 공천을 통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와 밀실정치에 예측시키려는 의도에 함께 분노하고 고민하시어,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잘못된 정치행태를 고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하시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정치문화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寄稿

“믿음없는 정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이 체 민
강남구의회 행정사무위원장

지방자치는 지역민이 그 지역의 주인이 되는 자주성의 원리를 김바탕으로 하며, 또한 생활자치이므로 중앙과 일격하게 구분되는 분권화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요즘은 각 정당별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대상자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정한 공천제도의 의미는 퇴색, 변색된 채로 진정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지역일꾼을 뽑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외시 한 소위 '정략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낙하산 공천'을 실시하여 태생적으로 중앙정치에 예측될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뜻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유권자의 신뢰도를 상당히 상실하고 있다.

선량한 일반 주민들은 각 정당별 공천에 있어, '공천기준은 무엇'이었고, '공천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당기여도', '공천권자와의 친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공천헌금, 정치자금 제공' '과도 연계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은 주민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여 '정치농성', '정치혐오'라는 주민의 저항을 가져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우리 지역의 한나라당 공천 결과는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 과연 공천기준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 또한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는지,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장과 구의회 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는 있는지, 주민의 뜻은 무엇인지, 주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는 했는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결국 이렇게 공천을 받은 대상자들은 앞으로 4년간 주민을 위한 행정이나 의정활동보다는 정당이나 공천권자를 향한 광복적인 충성 경쟁에 앞장서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렇게 만든 중앙정치인이나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락공천이라는 실질적으로 낙하산 인사그림자만 포장으로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주민들의 얼굴 하나도 모르고, 지역의 실정

은 더더욱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지역의 대표자로 선정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주민을 우습게 보는 한심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행태의 바르고 공정한지 못한 공천은 정치부패의 원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측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물엿치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꼴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이러한 공천제도의 폐해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소리없는 저항과 항의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믿음없는 정치는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 지금이라도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정자들이시여! 국민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들께서는 이번 공천을 통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와 밀실정치에 예측시키려는 의도에 함께 분노하고 고민하시어,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잘못된 정치행태를 고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하시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정치문화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62(자심)
언 론 사	(주)대구일보사 대구 수성구 범어 2동 177-10 대표이사 이 태 열
심의대상기사	대구일보 2010년 5월 10일자 2면 『부고』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상주시장)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해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부 고

정 송 상주시장예비후보(무소속) 전 경상북도 기획관리실장 어머니이신 김 정 자여사(향년84세)께서
2010년 5월 8일 오후 10시30분경 노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발인일시 : 2010년 5월 11일 오전 7시
빈 소 : 상주 적십자 병원 장례식장 1호실
장 지 : 상주시 외서면 우산 납골당
연 락 처 : (054)530-3017, 010-5714-2531

상 주 : 정 송 (상주시장 예비후보 (무소속))
전 경상북도 기획관리 실장
정 욱 (산수원 대표이사)

자 부 : 최 선 희
김 현 진

팔 : 정 경 숙 / 사위 서봉렬(사업)
정 미 란 / 사위 김시호(대건고등학교교사)

손 자 : 정 춘 목(상주솔라대표이사)
정 기 목(사업)
정 선 목(군인)

의 결 번 호	2010지선163(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변 용 식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0년 5월 14일자 A13면 『한나라 8 민주 3 선진 1곳 우세...4곳은 혼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 등)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 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 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 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與 허남식 독주에 野 김정길 도전장

오세훈, 한명숙에 12~13%P 앞서

서울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한명숙, 자유선진당 지상욱, 민주노동당 이상규,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 등이 '2강 3약'의 구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최초 재선시장'을 노리는 오 후보가 '최초 여성시장'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한 후보에게 12~13%포인트 앞서 있다.

'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한 후보는 선거를 열흘 남기고 치러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23일)가 지지율 역전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오 후보는 친노의 전면 등장에 대해 "무능한 부패세력이 판세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각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는 부동층은 7~8%에 불과해 이미 마음을 정한 유권자들이 많은 편이다. 남은 변수는 '투표율'인데, 어느 후보의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지 여부가 승

부산

한나라당 하남식, 민주당 김정길 후보 간 양자 대결이다. 3선 고지에 도전 중인 허 후보는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5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민주당 경선과 야권 단일화 과정을 거쳐 추격에 나섰다.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29.7%의 지지율에 그쳤으나, 김 후보측은 "야권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허 후보는 "격차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홍철, 박성호 現시장에 10%P 앞서

대전

4명의 후보가 나섰으나, 한나라당 박성호 현시장과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의 리턴매치가 관심이다. 여론조사에서 염 후보에 10%포인트 뒤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도 변수다. 민주노동당은 유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심 후보는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중략)

與 박맹우 독주...지지율 50% 넘어

울산

초반 판세는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분석이다. 최근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들도 박 후보가 지지율 50~55%로 상대 후보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나 진보신당 노옥희 후보는 각각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나서더라도 지지율 15~2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고전이 예상된다. 양측은 몇차례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해 오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무소속 이규정 후보 역시 초반 지지율이 5% 안팎에 그치고 있다.

박상돈 · 안희정 접전...박해춘 추격

충남

각종 여론조사 결과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와

민주당 안희정 후보가 20%대 지지율로 접전 중이며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박 후보측은 이완구 전 지사가 지원에 나서면서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안희정 후보측은 보수성향 유권자 표가 한나라당과 선진당으로 갈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전후해 '노풍(盧風)'이 불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선진당 박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는 혼전이나 밀바닥 충청민심은 선진당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고 있다.(중략)

與 안상수, 민주 송영길에 다소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64)후보와 민주당 · 민주노동당 ·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의 통합 후보인 민주당 송영길(47) 후보의 양자 대결 양상 속에 진보신당 김상하(46) 후보와 미래연합 허규(61) 후보, 평화민주당 백석두(54) 후보가 추격 중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3선에 도전하는 안 후보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송 후보를 다소 앞서고 있다. 그러나 송 후보는 상대적으로 20·30대 유권자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민주노동당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격차를 좁히고 있다.(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164(자심)
언 론 사	한겨레신문(주)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고 광 헌
심의대상기사	한겨레 2010년 5월 11일자 15면 『진보후보 약진…보수후보를 단일화 변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남도 교육감)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 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 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진보후보 약진... 보수후보를 단일화 변수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띈다. 애초 지난 2월 전남지역 시민단체가 도입 후보로 추대한 장만채 전순천대 총장은 낮은 인

지도가 고민이었다. 그러나 장 후보는 총장직을 버리고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지는 결단으로 한 달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섰다. 교육관료 출신으로 3선 고지에 도전하는 김강환 전 교육감과 새 세대의 기수로 나선 신태하 전 여수교육장은 2위권을 유지하며 추격하는 양상이다. 경기도에서 비롯된 '김상곤 효과' 덕분에 보수적인 교육관료 출신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예상 밖의 구도가 짜여졌다. 중반 판세는 일단 1강 2중 4약으로 보인다. (후략)

전남 진보후보 약진...보수후보들 단일화 변수

도민후보 지지율 1위...『김상곤』 효과에 관료 출신 고전
무상급식 찬성·농어촌학교 폐합 반대 '의견 일치'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띈다. 애초 지난 2월 전남지역 시민단체가 도입 후보로 추대한 장만채 전순천대 총장은 낮은 인지도가 고민이었다. 그러나 장 후보는 총장직을 버리고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지는 결단으로 한 달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섰다. 교육관료 출신으로 3선 고지에 도전하는 김강환 전 교육감과 새 세대의 기수로 나선 신태하 전 여수교육장은 2위권을 유지하며 추격하는 양상이다. 경기도에서 비롯된 '김상곤 효과' 덕분에 보수적인 교육관료 출신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예상 밖의 구도가 짜여졌다. 중반 판세는 일단 1강 2중 4약으로 보인다. (후략)

후보	소속	경력	지지율
장만채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청장	1위
김강환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청장	2위
신태하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청장	3위
이영호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청장	4위
김상곤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청장	5위
김영호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청장	6위
김영호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청장	7위
김영호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청장	8위
김영호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청장	9위
김영호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청장	10위

의 결 번 호	2010지선165(자심)
언 론 사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58-3 청양빌딩 5,6층 대표이사 박 영 길
심의대상기사	아주경제 2010년 5월 11일자 A4면 『한나라 수도권 우세속 충청권 ‘혼전’』, 2010년 5월 12일자 A4면 『경전철이나 9호선 연장이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 인천시장 등)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나라 수도권 우세속 충청권 ‘혼전’

(전략)

◆선거 승패 가를 수도권

최대 격전지 서울은 현역프리미엄을 가진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이 선두에 나선 상태다. 지난 주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에 비해 지지율이 13~21%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다. 향후 야권의 표결집력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민심의 향배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가 국민참여당 유시민 예비후보를 약 10%포인트 차로 앞서 있다. 민주당 김진표 후보에 비하면 17%포인트 정도 앞선다. 이는 야권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와의 ‘유시민-김진표’ 단일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은 “경기도는 야권이 단일화하면(승리)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내 최대 격전지다.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과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안 시장은 송 최고위원에 5.2~7.2%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세종시 논란의 충청권

세종시 수정 논란이 뜨거운 충청권도 혼전 양상이다. 전·현 시장간 대결로 눈길을 끌고 있는 대전에서는 한나라당 박성호 시장과 자유선진당 염홍철 전 시장이 2강 구도를 형성했다. 염 전 시장은 박 시장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앞서 있다.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의 경우 10% 대 지지율에 머물고 있어 막판 뒤집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세종시 수정 논란의 진원지 충남지사는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간 3파전이 진행중이다. 박 후보와 안 최고위원은 20%대 중반의 지지율을 기록중이고 박 후보는 1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충북에서는 현역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나라당 정우택 지사가 6%포인트 정도 민주당 이시종 후보에 앞서 있다. 그러나 3%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에 따라

판세는 요동칠 전망이다.

◆여야 텃밭, 호남×영남권

호남권은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50~60%대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싸늘이가 점쳐진다. 광주에서는 강운태 후보가 5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도 현역프리미엄을 앞세워 60% 중반대 지지율을 얻고 있어 낙승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아성인 영남권의 경우, 경남과 부산에서는 노풍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최대 관심 지역은 단연 경남이다. 최대 관심 지역은 단연 경남이다. 전·현직 행정장관의 대결이자 'MB(이명박)맨'과 '리틀 노무현' 간 대결장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이달곤 전 행안부장관은 무소속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6%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이는 오차의 범위내 선두로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노풍이 거세진다면 선두는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다.

를 맞아 노풍이 거세진다면 선두는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강세 강원, 혼전의 제주

강원에서는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10~15%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다. 두 후보가 모두 원주 출신이란 점에서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권의 민심이 선거결과를 결정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와 무소속 우근민 전 지사간의 양자대결 양상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현 후보는 우 전 지사에 비해 7~12%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최근 성희룡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을 기록한 우 전 지사의 지지율 회복이 최대 관전이다.

한나라 수도권 우세속 충청권 '혼전'

지방선거 판세 분석

6·2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텃밭을 제외할 수 도권, 충청권 등 선거구에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 승패를 가늠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현역프리미엄을 보유한 박근혜 1위라는 분석이다. 또 세종시 수경 문제까지 걸린 충청권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팽팽한 3파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선거 승패 가늠 수도권

최대 격전지 서울은 현역프리미엄을 가진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이 선두에 나선 상태다. 지난 주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 현명숙 전 총리에 비해 지지율이 13~21%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다. 향후 야권의 표결집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 민심의 향배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가 국민참여당 유시민 예비후보를 약 10%포인트 차로 앞서 있다. 민주당 김진표 후보에 비해 17%포인트 정도 앞선다. 이는 야권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와의 유시민-김진표 단일 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지병선거기 화위원장은 "경기도는 야권이 단일화하면 승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수도권에 최대 격전지다.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과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이어나가고 있어서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안 시장은 송 후보에 비해 5.2~7.2%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모두 오차범위내 접전이다.

◆세종시 노견의 승전권

세종시 수경 논란이 뜨거운 충청

'텃밭' 한나라 영남·민주 호남 독주 경기 야권 단일화 여부 최대변수로

권도 혼전 양상이다. 전·현 시장간 대결로 눈길을 끌고 있는 대전에서는 한나라당 박성호 시장과 자유선진당 임종철 전 시장이 2강 구도를 형성했다. 영 전 시장은 박 시장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앞서 있다.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의 경우 10%대 지지율에 머물고 있어 야권 뒤집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세종시 수경 논란의 전 원자 중남지사는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한나라당 박태준 후보간 3파전이 진행중이다. 박 후보와 안 최고위원은 20%대 중반의 지지율을 기록중이고 박 후보는 1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충북에서는 현역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나라당 정우택 지사가 6%포인트

정도 민주당 이시종 후보에 앞서 있다. 그러나 3%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에 따라 판세는 요동칠 전망이다.

◆여야 텃밭, 호남·영남권

호남권은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50~60%대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싸늘이가 점쳐진다. 광주에서는 강운태 후보가 5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도 현역프리미엄을 앞세워 60% 중반대 지지율을 얻고 있어 낙승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아성인 영남권의 경우, 경남과 부산에서는 노풍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최대 관심 지역은 단연 경남이다. 전·현직 행정장관의 대결이자 'MB(이명박)맨'과 '리틀 노무현' 간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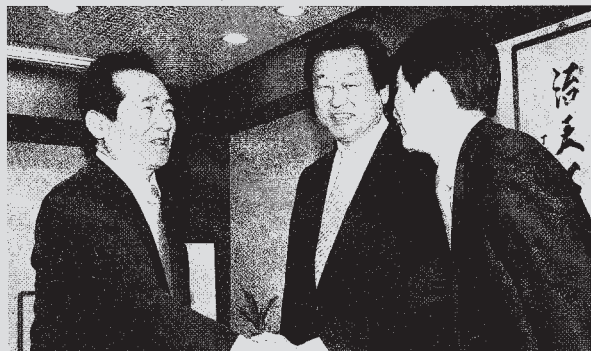
장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이달곤 전 행안부장관은 무소속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6%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이는 오차의 범위내 선두로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노풍이 거세진다면 선두는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강세 강원, 혼전의 제주

강원에서는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10~15%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다. 두 후보가 모두 원주 출신이란 점에서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권의 민심이 선거결과를 결정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와 무소속 우근민 전 지사간의 양자대결 양상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현 후보는 우 전 지사에 비해 7~12%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최근 성희룡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을 기록한 우 전 지사의 지지율 회복이 최대 관전이다.

송정호 기자songhdi@



축하합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0일 영동도 당사를 방문한 한나라당 김우성 선임 총무대표, 고종철 정책위의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전철이나 9호선 연장이나

김포시는 서울에 인접했지만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전형적 도·농복합도시다. 그러나 최근 김포 한강신도시 등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 등 개발 바람이 불고 이와 함께 유입인구도 급격히 늘고 있다. 현재 22만5000여 명인 김포시의 인구는 김포한강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 이후 인구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차기 김포시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어느 선거와는 다른 분위기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한나라당 강 후보는 29.6%로 24.6%의 민주당 유 후보를 불과 5.0% 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전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후략)



6·2 지방선거 격전지 가다

한나라·민주 구도 김포시장

경전철이나 9호선 연장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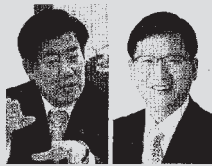
강경구·유영록 후보 공약 제시

초박빙 접전... 판세변화 관심

김포시장 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강 구도다. 최근 공천이 확정된 한나라당 강경구 현 김포시장과 도의원 출신인 민주당 유영록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전철과 9호선 연장을 둘러싼 두 후보 간의 논쟁이 가열되면서 선거 판세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에 인접했지만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전형적 도·농복합도시다. 그러나 최근 김포한강신도시 등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 등 개발 바람이 불고 이와 함께 유입인구도 급격히 늘고 있다. 현재 22만5000여 명인 김포시의 인구는 김포한강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 이후 인구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차기 김포시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어느 선거와는 다른 분위기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한나라당 강 후보는 29.6%로 24.6%의 민주당 유 후보를 불과 5.0% 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전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두 후보들도 자신만의 공약을 내



강경구 시장

유영록 후보

놓고 더 많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강 후보는 현역 시장 프리미엄과 지난 4년간의 공적을 앞세워 유권자 선택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는 "지난 4년 간 시티홀리스와 산단단지 유지, 한강철책제거, 도시철도 확장 등 많은 발전을 이뤘었다"며 "이 같은 발전을 바탕으로 김포를 최첨단, 초일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에 펼쳐 놓은 정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해 지역 곳곳에 산재한 공장을 집적화하는 방식으로 공장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유 후보는 김포시의 경전철 건설 확정을 철회하고 9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의 중전철 건설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유 후보는 "당선되면 지하철을 끌어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논과 귀를 막고 일방통행하는 현 시장을 잘못을 고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시의 경전철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으로 길리며 불거졌던 문제인 만큼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는 유 후보의 중전철 건설안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내걸고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경전철 전 구간 지하화를 통해 시민들이 걱정했던 직강하락 등의 걱정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사 비용의 조달 방안도 이미 마련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경전철을 지하화 할 때에는 9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며 "강 후보 측이 내놓은 경전철 지하화는 환경영향평가 등도 전부되지 않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후보들 모두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경전철을 둘러싼 양 진영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재홍 기자maeno@

의 결 번 호	2010지선166(자심)
언 론 사	(주)이십일세기뉴스(민주신문) 서울 중구 중림동 500 디오센터빌딩 408호 대표이사 강 상 숙
심의대상기사	민주신문 2010년 5월 16일자 12~13면 『당의 운명 결코 선거전 스타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 등)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략)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 후보의 차기 대권행보와 관련한 예리한 질문에 대해 오 후보는 ‘임기완주’를 공언했고, 한 후보도 ‘마지막 공직’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치 양보 없는 두 사람의 신경전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판세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오세훈 대 한명숙’의 경쟁은 여야의 기본축에 보수 대 진보, 현 정권 대 전 정권 등의 대결점이 포개지면서 ‘심판톤’의 구도가 확연해진 만큼 여야의 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한 후보에게 20% 안팎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 탓이다. (중략)

민주당의 표밭이라 할 수 있는 호남권 선거는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이 절대적 우위를 자랑하고 있다. 광주시장, 전북·전남지사 세 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 각각 강운태,

김완주, 박준영 후보가 지지율 50%를 훌쩍 넘기며 다른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고 있다. 광주시장 지지율 2위를 차지한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는 5.9%를 기록했으며, 전북지사 역시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가 지지율 2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8.3%에 그쳤다.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영남권 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대구·부산·울산시장과 경북·경남지사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절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획득하며 선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영남권 지지율 획득에서 2위자리마저 민노당에게 내줬다.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에 이어 경선을 앞둔 김정길, 김민석 후보만이 간신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미 허 후보와 지지율이 30% 가까이 차이나면서 승리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민노당 역시 영남권 판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 보고 있다. 경북지사의 경우 한나라당 김관용 후보가 6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그 뒤를 쫓고 있는 민노당 윤병태 후보의 지지율은 4%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의 결 번 호	2010지선168(자심)
언 론 사	(주)지아이씨미디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7-25 역삼빌딩 3층 대표이사 정 영 라
심의대상기사	evening 2010년 5월 24일자 17면 『정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으로 평가 받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등을 주요 경력 및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슈지역-동대문2선거구 고정균 서울시의원 후보

‘도시계획 전문가’ 고정균(42·무소속·동대문구 제2선거구) 전 서울시의원이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서울시의원 재선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기호8번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선다. 정당이라는 이름의 모든 후광을 거둬내고 엄정하고 냉정하게 주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다짐이다. 선거를 앞둔 고정균 후보를 만났다.

서울시의원 재선출마 계기는?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내가 8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와 과일, 떡 행상을 하리며 고생스럽게 우리 5남매를 키우셨다.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직접 밥을 해먹어야 했고 중고등학생 때는 도배, 지방의 모내기 등 막노동을 해야했다. 어려웠

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우리사회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과 설움,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다.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하면서 성장기 아이들이 하루 170원으로 비참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올해로 정치에 입문한지 22년이 됐다. 우리사회의 힘없는 서민과 소외된 계층의 희망과 웃음을 찾아주는 것이 위정자들이 해야하는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다.(중략)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1987년 한겨레 민주당 중앙당 창당 멤버로 정치를 시작해 22년 동안 오직 한 길을 걸어왔다.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4년간 달리는 차 안은 사무실이 되고, 발로 누비는 곳이 현장이 됐다.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로 주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받고자 한다.

힘들었지만 긍정의 힘으로 살아온 ‘열정’과 ‘도전’의 42년, 국제적인 경험과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얻은 실무감각에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을 섬기고 동대문구와 서울의 변화를 이끄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싶다.

정당 후보 아닌 무소속으로 평가 받겠다

이슈지역-동대문 2선거구 고정균 서울시의원 후보

‘도시계획 전문가’ 고정균(42·무소속·동대문 2선거구)은 전 서울시의원이던 6·2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안락에서 거둬 올린 선약을 했다. 예를 들어 마음은 기호8호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선다. 정당이라는 이름의 모든 후광을 거둬내고 평정하고 냉정하게 주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다짐이다. 선거를 앞둔 고정균 후보를 만났다.

차용차회원 재산증여 재가?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 어려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내가 8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와 고1, 2학년을 하다가 고3스럽게 우리 3남매를 기우셨다.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직접 밥을 해먹어야 했고 중학교때는 배는 도배, 지방의 보냉기 등 박스등을 해야했다. 어려웠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우리사회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과 절충,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다.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하면서 성장기 아이들이 하루 170원으로 비참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올해로 정치에 입문한지 22년이 됐다. 우리 사회의 힘없는 서민과 소외된 계층의 희망과 웃음을 찾아주는 것이 워킹자이데에 해야 하는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내가 정치하는 이유다.

역전 재치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서울시장의 종북으로서 현정권심의 의정활동 등에 주력했다. 현정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노력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창출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경제위기극복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클리본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전체속에 고용창출이 악화되고 서민생활 안정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적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 민간부문 일자리 개발 및 지원, 청·장년, 여성·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사기 주전 중에 있는 기존사업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또 신규사업 발굴 차원을 넘어 의료관광, 신기술 등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에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도시권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선거를 위한 공조 후보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후보자는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없는 이슈지역인 동대문구 제2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등용을 얻으키며 재선을 다짐하고 있다.

막노동·도배일 등 어려운 청년기 경험 ‘자산’ 서민 희망 찾아주려고 정치 입문한지 22년 동대문구 명품교육·의료관광 도시 만들 것

데 노력했다. 이들 위해 단기·중기·장기의 단계적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에도 한계가 많았을 것 같고 있다. 현장심사와 행정서포터즈를 활용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한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위기가정과 틈새계층을 찾아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또 활동보조 서비스기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현재 확립적으로 적용되는 등급제도를 단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또 노숙인 보호와 자립의욕이 부족한 노

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는 지원하되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마련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구도성에 해당하는 동대문구는 교육청장이 인정할 것이다. 이와 대항 대책은?

동대문구 최대 현안사업은 1호선 청량리역~석계역 구간 지하철 지하화 사업이다. 2009년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와 수차례의 대학회의 끝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오는 10월1일 1차 검토가 나올 예정이다. 지상전철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도로 건설, 도로 인근 지역근로복지회,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하철 역사 주변의 새로운 삼각형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상습적인 철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세곡~상계간 3.8km 구간)을 폐지하고 관내 도하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을 위한 재산증여를 받았던가? 지난 4년간 동대문구 4개학교에 총 830여

고정균 프로필

▶1969년 강원도 정선 출생

▶의회 활동

~2009년:전 서울특별시의회 경제위

극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2008년: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

위원회 부위원장

~2007년~2008년: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치·정당 활동

~2008년:한나라당 서울시장 선출위원장

~2007년~2008년: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위원장

~2007년: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서울

특별시장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위원장

▶사회 활동

~2009년:현 서울특별시학구협회 회장

~2009년:현 서울 지도위원

~2009년:현 노인전문요양시설 (재유

지원) 후원위원

역원을 지원해 교육환경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 2009년 경희고를 서울현사립학교로 지정하고 휘경여고를 과학중점고로 지정하는 등 2010년 시행되는 고교 선택제에 대비해 있다. 향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개성해 휘경중을 과학교육 단지로 조성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전환 등을 통해 동대문구형 일류명품교육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굶주림에 고통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 급식뿐만 아니라 수업료 결정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갔다.

동대문구 살림 창생사업 위한 계획은?

서울시와 함께 최첨단 ‘달타클러스터 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40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잠정추진지역을 정제하고 잠정관리 민자역사와 연계한 빌딩복합식 시티를 구축, 청량리역 예술과 문화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또 한양전통제단을 서울아라리오에 유치해 600년 전통의 한양제단 문화의 소비 접산지 기능을 승계 발전시켜 동대문구를 양·한방이 아우러진 의료관광 메카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1987년 광역대 민주화 운동단 창단 멤버로 정치에 시작해 22년 동안 오직 한 길을 걸어왔다. 서울시장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4년간 달리는 저 안은 사무실이 되고, 밥도 두 배는 고여 한창이 됐다.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로 주민들의 냉철한 평가를 받고자 한다.

힘들었지만 승리의 힘으로 살아온 ‘열정’과 ‘노력’의 42년, 국제적인 경험과 다양한 사회활동들을 통해 얻은 실무 감각에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을 선거고 동대문구와 서울의 변화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성인실기 지 sprang@naver



경희사단 ‘맑은 사회 한국 문화’ 지원의 간담회 참가자들

의 결 번 호	2010지선170(자심)
언 론 사	(주)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이 동 화
심의대상기사	서울신문 2010년 5월 24일자 8면 『경기도 정치1번지 수원 오차범위 혼전』 및 9면 『부평 · 중구 초접전...與 수성 쉽지 않을 듯』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기초단체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략)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이자 경기도의 '정치 1번지'인 수원시장 선거는 여야 후보의 박빙 승부가 예고된다.

한나라당 심재인 후보와 민주당 염태영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각각 30%대 초반의 지지도로 오차 범위 내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면서 보수와 진보 등 확실한 색깔을 갖춰 흥미를 끈다.(중략)

부천, 민주당 김만수 후보 다소 앞서

부천은 3선 도전에 나선 한나라당 홍건표 후보에 민주당 김만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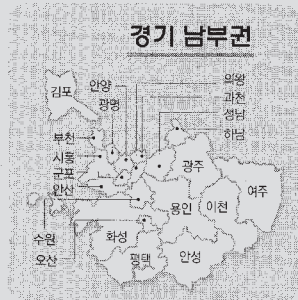
앞서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세와 민주당세가 박빙인 지역이어서 선부른 예단은 금물이다.(중략)

한나라당 우세지역인 과천시 3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여인국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40%대 지지도를 유지하며 민주당 홍순권 후보와 무소속 임기원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략)

이گی수 전 군수의 돈봉투 사건으로 이변이 예상됐던 여주군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한나라당 김춘석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 이희웅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후략)

경기도 정치1번지 수원 오차범위 혼전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경기도역 31곳 가운데 27곳을 석권하는 압승을 거뒀으나 이번에는 상당수 지역에서 고전하는 판세다.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이런 양상이 두드러진다. 여당 경제살리기 발동한데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 단체장들의 출마와 공천과정에서의 갈등이 악재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정에서부터는 여당이 '반타자'만 해도 성공이란 비관론이 적지 않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이룬 것도 선거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이자 경기도의 '정치 1번지'인 수원시장 선거는 여야 후보의 박빙 승부가 예고된다.

한나라당 심재인 후보와 민주당 염태영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각각 30%대 초반의 지지도로 오차 범위 내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같은 고등학교 동문 이면서 보수와 진보 등 확실한 색깔을 갖춰 흥미를 끈다.

◆'통합 후유증' 성남 최대 격전지로

남부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성남시다. '성, 광, 하' 사·군 통합 가능성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으나 통합은 무산된 상태다. 공천을 둘러싸고 여권 후보군에서 잡음이 계속되는데다 야당 후보들의 전격 연대로 한지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인제 영입 형식으로 입당한 황순기 전 여성부 차관이 경선 없이 후보로 무명입성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예비 후보들이 당의 결정에 반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 황 후보와 손을 잡았다. 그러나 이대영 현 시장이 후보등록을 마쳐 또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야권은 일찌감치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이 나서 황 후보와 점전을 벌이고 있다. 당내 공천부터 후보자 등록까지 각종 걸림돌을 뚫기 위한 움직임이 강하다. 한나라당 오세동, 민주당 김학규, 무소속 서정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오 후보와 김 후보는 당내 불공정 공천 논란 속에 후보로 확정됐고 현 용인시장인 서 후보 역시 한나라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 한나라당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지만 공천과정과 후보등록까지 각종 잡음이 이어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

평택은 전·현직 단체장간의 빅 배치가 펼쳐진다. 2004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돼 6년간 평택을 이끌어 온 현 송명호시장(한나라당)과 3선에 성공했다 중도에 퇴진했던 민주당 김선기 후보가 불꽃튀는 삼바싸움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 당세가 강한 곳이지만 이번만큼은 만만까지 한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예상된다.

안양에서는 현 시장인 아필운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최태호 후보가 재대결을 펼친다. 2007년 재보궐 선거에서 이 후보가 승리를 거머쥘었다. 이번엔 최 후보가 약간 앞서는 분위기다.

안산은 박주원 현 시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 출마'를 강행,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한나라당 황순, 민주당 김철민 후보와의 3자 대결로 전개되고 있다. 허 후보측은 한나라당 고경표 이탈을 걱정하는 반면 김 후보측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부천, 민주당 김만수 후보 다소 앞서

부천은 3선 도전에 나선 한나라당 홍건표 후보에 민주당 김만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세와 민주당세가 박빙인 지역이어서 선무른 예단은 금물이다.

전통적으로 한나라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는 화성군은 민주당 채인석 후보가 의외로 선전하면서 한나라당 이태성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현 시장을, 채 후보는 전 부시장을 제치고 올라오는 이변을 연출했다.

광명시는 한나라당 안병식 후보와 민주당 양기대 후보가 일찌감치 나서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복당이 불발된 이호선 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현 시장이 범정 구속된 군포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김운주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 임성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창열 한나라당 후보가 오차 범위내에서 추격 중이며 무소속 정금제

후보도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오산은 한나라당 이춘성 후보와 민주당 과상욱 후보,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박신원 후보 등 오산중 선출배 간 3파전이 벌어져 흥미를 끈다.

한나라당 우세지역인 과천시 3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여인국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40%대 지지도를 유지하며 민주당 홍순권 후보와 무소속 임기원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을 배신할 수 없다는 김황식 시장(한나라)이 불출마 선언을 한 하남시는 민주당 이교범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여가 김 시장을 대신해 한나라당 윤완재 후보가 맹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의왕시는 수장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 강철원 후보와 민주당 김성재 후보가 점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한상섭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안성 7명 출마... 도내 최고 경쟁률

현 시장이 조기 퇴진한 안성에서는 7명이 출마,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황은성 후보가 앞서고 민주당 이수형 후보가 추격하는 형국이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여야 지지층을 잠식하고 있어 판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포는 한나라당 강경구 후보와 민주당 유영록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무소속 김동식 후보가 가세했다. 한나라당이 오차범위내에서 앞서고 있지만 경선결과 9호선 연장을 둘러싼 후보 간의 논쟁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흥은 현 시장인 민주당 김윤식 후보가 국민 참여당 조성찬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이룬 한나라당 최홍건 후보와 2파전을 치르게 됐다.

광주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한나라당 조억동 현시장에 충북 경찰청장 출신인 민주당 최석민 후보와 미래연합 손동호 후보 등에 앞서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گی수 전 군수의 동봉투 사건으로 이번이 예상됐던 여주군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한나라당 김춘석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 이회용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천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권 5당의 정책연대를 통해 야권단일화를 이룬 국민참여당 염태준 후보가 한나라당 조병돈 후보와 조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윤상돈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172(자심)
언 론 사	(주)세계일보 서울 금천구 가산동 150-15 대표이사 유 종 관
심의대상기사	세계일보 2010년 5월 20일자 6면 『野 단일화 효과 기대 속 ‘北風’ 변수』 제 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광역시 기초단체장)와 관련하 여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 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 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략)19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와 각 정당의 판세 분석을 종합해 보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한나라당 조윤길 웅진군수를 제외하고 선거가 치러지는 9곳 가운데 동구·남동구·서구는 한나라당, 남구·연수구·계양구는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나머지 중구·부평구·강화군은 접전 구도가 팽팽한 양상이다. 전체적으로 여야 어느 쪽도 '완승'을 장담하긴 어려운 초박빙 구도다.(중략)

동구에서 현 구청장을 물리치고 3수 끝에 공천을 따낸 한나라당 이흥수 후보는 야3당 통합 후보로 나선 민주노동당 조택상 후보를 지지도 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동구 현직 구청장 대신 출전 기회를 얻은 한나라당 최병덕 후보도 야권 통합 후보인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를 5~10% 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나라당의 분석이다.

박승숙 현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중구는 범야권 후보로 나서는 민주당 김홍복 후보와 박 후보가 각각 3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계양구는 확실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진다. 인천시당 사무처장 출신의 민주당 박형우 후보가 40% 중반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한나라당 오성규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 격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구의 경우 4년 전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영수 후보(현 구청장)에게 패한 민주당 박우섭 후보가 설욕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여론조사에선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로 앞서는 분위기다. 연수구 역시 민주당 고남석 후보가 40% 중반의 지지를 받으며 한나라당 남무교 후보(현 구청장)를 5~10%포인트 앞서나가 민주당이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후략)

野 단일화 효과 기대 속 ‘北風’ 변수

與野 수도권 기초단체장 판세 ㉠ 인천 10곳

인천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아권이 기초자치단체 후보 단일화를 이룬 곳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 등 아권은 ‘단일화 바람’에 기대를 걸고 대반격을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지리적 여건상 ‘북풍’에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지역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찬안함 침몰 사건 이후 인천 표심은 적잖게 흔들거리고 있었음이 감지된다.

이런 대형 변수의 존재 탓인지 인천시 기초단체장 선거의 중간 판세는 대혼전 양상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한나라당이 10개 기초단체장 지역 중 9곳을 휩쓸었으나, 이번에는 ‘여당 견제론’이 지역 민심을 파고들면서 한나라당의 ‘수성’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19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와 각 정당 판세 분석을 종합해 보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한나라당 조운길 웅진군수를 제외하고 선거가 치러지는 9곳 가운데 동구·남동구·서구는 한나라당, 남구·연수구·계양구는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나머지 중구·부평구·강화군은 접전 구도가 팽팽한 양상이다. 전체적으로 여야 어느 쪽도 ‘완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초박빙 구도다.

◆한나라당, ‘물갈이’ 지역에서

선전=한나라당은 선거 없이 ‘무혈 입성’에 성공한 조운길 군수를 포함해 5곳을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10곳 중 5곳에 한 구청장(군수)을 내세운 한나라당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 오히려 현직 기초단체장을 물갈이한 동구와 남동구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한나라 무투표 당선 웅진 포함 5곳 장담 민주, 계양·연수·부평 등서 대반격 노력

동구에서 현 구청장을 물리치고 3수 끝에 공천을 따낸 한나라당 이용수 후보는 야3당 통합 후보로 나선 민주노동당 조택상 후보를 지지도 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동구 현직 구청장 내신 출신 기회를 얻은 한나라당 최병덕 후보도 아권 통합 후보인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를 5~10%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나라당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2006년 선거에서 유일하게 건진 서구의 경우 2008년 서구청장 재보선에 나섰다

가 고배를 마셨던 한나라당 강범석 후보가 민주당 전년성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박승숙 현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중구는 범아권 후보로 나서는 민주당 김홍복 후보와 박 후보가 각각 3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아권 연합’ 무기로 대반격=민주당은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6~7곳 승리를 목표로 했으나, 찬안함 사건에 따른 보수층 결집이

악재로 작용하며 목표 지역을 5곳으로 하향 조정했다.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계양구는 확실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진다. 인천시장 사무처장 출신의 민주당 박형우 후보가 40% 중반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한나라당 오성규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구의 경우 4년 전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영수 후보(현 구청장)에게 패한 민주당 박우선 후보가 설욕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여론조사에선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로

인천시 기초단체장 판세

	한나라당 주장	민주당 주장
중 구	박중세	박중세
동 구	우세	무종전(여당 우세)
남 구	박중세	박중 우세
연 수 구	박중세	우세
남 동 구	우세	무종전(여당 우세)
부 평 구	박중 우세	박중 우세
계 양 구	열세	우세
서 구	우세	박중 열세
강 화 군	박중세	박중 열세
웅 진 군	무투표 당선	무공천

앞서는 분위기다. 연수구 역시 민주당 고남석 후보가 40% 중반의 지지를 받으며 한나라당 남부고 후보(현 구청장)를 5~10%포인트 앞서나가 민주당이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히 주목하는 지역은 기초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 풍부한 정치 경험을 자랑하는 홍미영 후보를 전략배치한 부평구다. 5월 초까지 여론조사에선 한나라당 박운배 후보(현 구청장)가 근소한 차로 앞섰지만, 최근 홍 후보가 추월에 성공한 이후 확실한 우위를 굳혔다는 게 민주당 측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판세가 좀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인천시장 후보인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후보 간 판세도 기초단체장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구·신정훈 기자
julyend@segye.com

의 결 번 호	2010지선173(자심)
언 론 사	(주)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심의대상기사	중앙일보 2010년 5월 25일자 22면 『‘영남=한나라, 호남=민주’ 변화 바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김제시장, 순천시장 등)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략)◆호남지역은 무소속 약진=전북에서는

김제·정읍에서 무소속 바람이 거세다. 김제시의 경우 무소속 이진식 후보가 민주당 이길동 후보를 지지율에서 배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앞서 나가고 있다. 전북일보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이진식 후보는 54.1%로, 민주당 이길동 후보는 20.9%로 나타났다.(중략)

순천시와 강진군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관규 현 시장과 황주홍 현 군수가 민주당 후보와 큰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다.(중략)

경남 통영에서도 무소속 김동진 후보가 한나라당 안휘준 후보를 10%포인트 앞

서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대구 서구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중현(현 구청장) 후보가 한나라당 강성호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후략)

‘영남=한나라, 호남=민주’ 변화 바람

기초단체 곳곳 무소속 약진

6·2 지방선거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무소속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한나라”라는 지역별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당 색깔만 보고 투표하기 행태에서 벗어나 이제 는 연동·정책을 따져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전환이 바뀌어 가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호남 지역은 무소속 약진=전북에서는 김제·정읍에서 무소속 바람이 거세다. 김제시의 경우 무소속 이진식 후보가 민주당 이길동 후보를 지지율에서 배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앞서 나가고 있다. 전북일보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이진식 후보는 54.1%로, 민주당 이길동 후보는 20.9%로 나타났다.

이진식 후보는 2009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4년간 시장으로 일해 왔다. 민주당은 무소속 대안중의 재선 기도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지난해 6월 일제선거 시장 후보를 내정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왔다. 이진식 후보는 “경선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을 총싹에 이끌려 갈 수 있도록 당선 이후에도 무소속 시장으로 남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는 명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광주 5기 ~9회 전당 22개 시·군 가운데 10여 곳에서 무소속 후보들 도무더기 거세 돌풍을 받아 당선



“국 투표하세요”라는 현수막을 단 경비행기가 24일 전북정읍에서 보이고 있는 중북 지방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단양에서 촬영한 촬영기 기간인 30일까지 관공제를 대상으로 하루 4~5회 비행 촬영을 할 예정이다. [단양·뉴시스]

호남

광주·전남 10여 곳은 혼전
전북에서 한나라당 선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순천시와 강진군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관규 현 시장과 황주홍 현 군수가 민주당 후보와 큰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다. 광주 남구·서구와 전남 강진·해남에서도 각각 오차 범위 안에서 예측 불허의 격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를 강진군수는 “유리자들이 인물을 모두로 투표하려는 의식을 갖기 시작한다.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당의 무능력에 실망한 노·박 면서 민주당 야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지방에서는 한나라당의 선

영남

통영시장 무소속 1위 달려
문경·영주·경산서는 점전

전도 눈에 띄고 한나라당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적으로 14개 시·군에 처음으로 연합소속을 차렸다. 과거에 구청기 휘둘러 지원봉사자들도 2000년 땀이나 흘렸다. 성원전 전북도지사 후보는 “과거 7~8%에 머물렀던 득표율을 2~3배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영남서 고전하는 한나라당-한나라당 뒷방문 영남 지방에서도 연의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4급 전 한나라당이 5개 기초단체장을 박살내었던 울산에서는 정·박구 등 2곳에서 무소속(한나라당 후보) 승리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

울산 중구의 경우 무소속의 조광수(현 구청장) 후보가 한나라당 박성민 후보와 대항하며 격전을 벌이고 있다. 경남 통영에서도 무소속 김동진 후보가 한나라당 안휘준 후보를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대구 서구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중현(현 구청장) 후보가 한나라당 강성호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 경북 문경·영주·경산·철주·봉화 등에서도 무소속-한나라 후보가 20%전후 경쟁하면서 격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택시를 운전하는 김보(47 대구시 선전동원)는 “한나라당 연평의 지역정서에 불씨가 있다”며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아들이 한나라당 성원이겠다”는 한계를 뛰어넘어 “안다”고 말했다. 정태서 기자 전국종합 dsj@joongang.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178(자심)
언 론 사	(주)종로문화사 서울 종로구 사직동 238-1 영창빌딩 2층 대표이사 이 병 기
심의대상기사	종로저널 2010년 5월 24일자 5면 『선거 판세는 이미 결정, 앞으로 일주일이 관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종로구청장, 서울시의회 의원, 종로구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판세를 분석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및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선거판세는 이미 결정, 앞으로 일주일이 관건

(전략)

〈종로구청장 선거는 한나라당 유리〉

이와 관련, 종로구청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정창희 후보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내다본다.

이번 선거에서는 구청장 후보로 총5명이 출마했다. 한나라당 정창희 후보, 민주당 김영종 후보, 자유평화당 이태희 후보, 무소속 김성은, 유미영 후보가 그들이다. 이들 후보자들 중 아주 특별한 경력을 가진 독보적 후보자는 없는 셈이다. 다만 자유평화당 이태희 후보가 당 대표총재로서 다소 특이한 케이스이지만 정당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정당이며 이 후보자 역시 종로구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생경한 인물이다. 따라서 조직과 기반이 미미한 상태로서 큰 위력은 없는 셈이다.

또한 무소속의 김성은 후보는 현재 종로구 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남다른 인정을 받았지만 종로구청장 당선권에는

주민들 모두 회의적인 모습이다. 아울러 무소속 유미영 후보는 정홍진 전 종로구청장의 부인으로서 정 전 구청장이 민주당 종로구청장 공천경쟁에 실패하면서 경선과정의 불공정과 불법성을 항변하기 위해 출마했다는 항변(?)처럼 구청장 당선 그 자체보다는 출마에 의의를 두는 모습이다. 따라서 유 후보는 민주당 후보자 경선 불협화음에 따른 후유증으로서 민주당 세력 분열의 작용이 되어 가뜩이나 불리한 민주당 후보자를 더욱 곤혹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의원 선거〉

종로구 서울시 의원 선거는 종로 구청장 선거보다 더 판세가 뚜렷하게 점쳐지고 있다. 우선 청운·효자동과 삼청, 가회, 사직, 무악, 교남, 평창, 부암동 등 총 8개동에서 치러지는 제1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남재경 후보와 민주당의 강지원 후보 간의 싸움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전국당의 정재복 후보, 국민참여당의 김양희 후보가 나왔지만,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표밭으로 불려지는 제1선거구에서 야당 후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한나라당 후보보다 불리한 판세가 된다.

아울러 한나라당 남재경 후보는 지난 2006년 선거에서 2만1천표라는 기록적 득표를 하며 당선

〈‘가’ 선거구〉

종로구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등 4개동에 실시되는 종로구 의원 ‘가’ 선거구는 한나라당에서 기호 가변 최경애, 기호 나변 김동열 후보가 나왔으며 민주당에서는 기호 가변 오금남, 기호 나변 여봉무 후보, 진보신당의 고미숙 후보가 나왔다.

이들 5명의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2명이 구의원으로서 선출되는 이곳 선거구 상황은 지난번 선거처럼 ‘가’ 번 후보자가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동네 별로 보면 우선 청운·효자동의 여봉무, 사직동의 김동열, 오금남, 교남동의 최경애, 무악동의 고미숙 후보자가 나온 상태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표가 백중지세인 것을 감안하면 여·야 각1명씩의 후보자가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오금남 후보가 여봉무 후보 보다 다소 앞선 것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기호 나변인 김동열 후보가 기호 가변인 최경애 후보를 앞지르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

〈‘나’ 선거구〉

종로구 평창, 부암, 삼청, 가회동 등 4개동에서 치러지는 ‘나’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에서 현택정 후보(기호 가), 윤종복 후보(기호 나)가 나왔으며 민주당에서는 안재홍 후보(기호 가)가 단일후보로 출마했고, 무소속으로는 노상우 후보가 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표밭으로 칭해지고 있으며 특히 평창, 부암동은 몰표에 가까운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구의원 2석 모두를 차지하기 위해 전력 중에 있으며 반면 민주당 측은 지리적 약세를 내세워 100%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판세는 평창동 토박이인 현택정 후보가 가장 우위로 점쳐지면서 당선권에 들고 있으며 나머지 1석은 민주당 안재홍 후보와 한나라당 윤종복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형세다. 따라서 앞으로 안재홍 후보가 평창동에서 얼마의 득표를 하고 또 삼청·가회동에서 민주당 지지표를 얼마나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179(자심)
언 론 사	(주)펜그리고자유 서울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심의대상기사	사건의내막 2010년 5월 30일자 4면 『‘충청’ 안상수 맞대결 구도 ‘호남’ 송영길』 및 5면 『‘한나라’ 박성호 vs ‘선진당’ 염홍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 대전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충청’ 안상수 맞대결 구도 ‘호남’ 송영길

(전략)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천시장 가상대결을 실시한 결과, 안상수 시장이 44.9%, 송영길 최고위원이 41.8%의 지지를 얻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남동구와 서구,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는 송후보가 앞섰고, 그 외 지역에서는 안상수 시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정도 격차는 오차 범위 내에 있어 승부는 한치 앞을 내다 보기 힘든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는 게 정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중략)

한편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2차례에 걸쳐 투옥된 경력이 있는 대표적인 진보 진영인사 중 한명인 김상하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3%대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후략)

‘한나라’ 박성호 vs ‘선진당’ 염홍철

(전략)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염후보가 약 35%로 앞서나가고 있고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운 박 후보가 약 28%로 그 뒤를 매섭게 추격하고 있다.

이들의 대결은 세종시나 4대강, 무상급식 등의 정치적 이슈보단 인물론이 더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발별혈투’는 선대위 규모 대결이나 상대 후보 비방 등 과열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중략)

한편 김윤기 진보신당 후보는 2%대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고심하고 있으며 이름 알리기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이대로 승리를 굳히겠다는 염홍철 후보,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워 4년전과 같은 대역전극을 이끌어내겠다는 박성호 후보, 이들 두 후보 간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야권 표로 이끌어내 승기를 거머쥐겠다는 김원웅 후보.

6월 2일 지방선거가 1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대전시장 선거는 점점 예측하기 힘든 혼전상황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미리 본 광역단체장 선거 ② 인천시장

‘충청’ 안상수 ↔ 맞대결 ↔ ‘호남’ 송영길



6. **초·중·고교 교사 200여명**이 4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가미산에서 '초·중·고교 교사들의 날'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1시간 동안 '초·중·고교 교사들의 날'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1시간 동안 '초·중·고교 교사들의 날'을 가졌다.

오차범위 내의 치열한 접전...송영길 후보와 안상수 후보
1대1의 무승부 끝 결승전...20% 부동층 잡는게 관건

[illegible]

미리 본 광역단체장 선거 ③ 대전시장

‘한나라’ 박성효 VS ‘선진당’ 엄홍철

[illegible]

어들은 4년 전 이미 한채
 밭은 적지 않다. 작년 2006년
 뒷은 적지 않다. 작년 2006년
 밭은 적지 않다. 작년 2006년

염사장 발사대 연을 함께 할까
당시 박정호 정부부장을
공판에 올로의 견해를

[illegible]

세종시·4대강·무궁화길 등 공약대로나선...한글은 우리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네거티브...민주당 어부지리 할까?

타락'이 때로는 피습자인 여성이 자기를 타락시켰다고 비난하는 데 사용되곤 했다. "그런데도" 현혹을 끼워 넣었다면 여성을 주범으로 몰 수 있는데, 이젠, 저 여성에게는

의 결 번 호	2010지선182(자심)
언 론 사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월간중앙) 서울 중구 순화동 2-6 중앙일보시사미디어 대표이사 김 광 수
심의대상기사	월간중앙 2010년 6월호(통권 414호) 64~68면 『54% 지지율 ‘훈풍’ 부는 데...광화문광장에 앉아 청와대를 슬쩍 바라보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주요 경력 등을 여러 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지지율을 언급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및 제3조(객관성),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 차로 나경원 후보를 꺾고 경선에서 승리했다. 현재 그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50%를 넘나들어 야당인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를 따돌리고 있다. 이전의 서울시장들이 그러했듯 그도 차기대권의 유력한 잠룡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인가? 오 후보의 그간 정치 행보를 쫓아봤다.(중략)

오 후보가 2006년 서울시장에 극적으로 당선된 이후 4년이 흘렀다. ‘디자인 도시’, ‘창의시정’ 등 지금까지의 도시행정과는 전혀 다른 슬로건을 걸고 나섰던 그의 시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비스듬히 엇갈린다. 진취적이다. 새롭다. 신선하다. 창의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시행정’이라는 꼬리표 역시 항상 함께 따라다닌다. 서민을 외면하고 외양에만 너무 치중한다는 것이다. 같은 결과에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상반되는 평가가 동시에 등장한다. 이런 점은 그의 이미지에 대한 평

가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드럽고 친근한 웃음 뒤에 엘리트 특유의 차가운 고집이 느껴진다는 것.

현재 오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들 중 지지율 1위를 보이고 있다. 한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오 시장은 54.6%의 지지를 얻어 34.3%의 지지율을 보이는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여유 있게 앞질렀다. 물론 안심할 수는 없다. 한 후보는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내 야권 표 결집을 통한 양자 구도로 몰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4년의 임기를 다한 오후보에게 50%라는 지지율은 의미가 크다. 시정에 대한 평가가 긍정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신호다.

재선 도전에도 굽이지 않는 대권설

또 한 가지, 최근 상기할 만한 장면 하나, 5월 7일 열린 토론회에 한 후보와 함께 참석한 오 후보는 대선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패널에게 “4년 동안 재선시장으로서 정책과 비전을 완수해 놓고, 국민과 시민, 당이나 주변의 평가를 받은 후 고려해보겠다”고 전에 없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후에 임기 논란이 불거지자 “8년 임기를 다 채

278

의 결 번 호	2010지선183(자심)
언 론 사	마포타임즈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1-44 2층 발행인 김 춘 식
심의대상기사	마포타임즈 2010년 5월 19일자 4면 『“서울교육청 청렴도 꼴지, 반드시 1위로 만들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교육감)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 인물사진 및 주요 경력 등을 우호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게재함으로써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및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울교육청 청렴도 꼴지, 반드시 1위로 만들겠다!”

“교사와 학교의 경쟁으로 학부모의 교사와 학교에 만족도를 높이고,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으로 교원들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신뢰도와 참여도를 높여서 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전문상담 교사 확대 배치로 학생안전도를 높ی겠다.”

▶ 현재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이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의 현안은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 일, 교육비리 척결로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하는 일,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학생 안전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중략)

▶ 강남북 교육격차가 심합니다.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교육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생각입니까?

-현재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학습을 위한 준비물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급식뿐만이 아닌 준비물, 교복, 수업료, 수학여행경비 등으로 지원영역을 넓힐 것입니다. 그리고 값싸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 지역 공급업체와 소속구청과의 연계로 친환경 의무급식을 시행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습기회의 확대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방과후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사의 과도한 업무와 기존 수업의 반복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과목 선정과 일관성 있게 잘 짜여진 교육일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교사의 직무축소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덧붙여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 교원 자격 있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컨설팅을 구축하고 대학, 행정기관

3. 주의

의 결 번 호	2010지선2(자심)
언 론 사	(주)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대표이사 유 제 철
심의대상기사	광주일보 2010년 2월 8일자 5면 『‘민주당 공천=당선’ 후보 5명 각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영암군수)와 관련하여 제목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해당 정당 소속 후보예정자들만 소개함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정당·무소속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당 공천=당선’ 후보 5명 각축

■ 영암군수 입지자

김일태 현 군수가 재선 고지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가운데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모양새다. ‘민주당=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텃밭인데다, 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 후보군은 부각되지 않은 상태여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군정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민주당 후보로는 김 군수 외에 김재원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책보좌관, 김원배 민주당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철 대불대 석좌교수, 전동평 전 전남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까지 후보로 거론됐던 강우석(영암 2) 전남도의원, 강우원(영암 1) 전남도의원 등은 군수 선거 대신 도의원 선거로 방향을 틀었다.

김일태 군수는 “활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며 재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영암 월출산 로프웨

이 사업과 대불 산단에 이은 친환경 녹색산단(60~70만평) 개발사업 등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한데다, ‘월출산 氣찬랜드’ 조성 및 쌀·무 화과·한우·고구마 브랜드화 등을 통해 관광·농업 분야 수익 창출 계기를 다진 만큼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군정 전반을 깨뚫고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김 군수는 높은 지지도 탄탄한 조직력에 현직 프리미엄까지 갖췄다. 27일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지지기반을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김재원 전남도지사 정책보좌관은 참신성과 박준영 지사를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쌓은 지방자치 경험을 무기로 착실하게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행사장에 참석, 얼굴 알리기에 주력한 뒤 명절이 지난 뒤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전략이다. 그는 최근 지지도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대불대 건설공학부 교수와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을 지내면서 쌓아온 이론과 행정 경험 등을 토대로 군정과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새로운 생명산

업으로 지역 개발의 활로를 뚫을 것"이라며 "서부권 명품 신도시 개발 및 월출산을 활용한 은퇴자 마을 조성에도 적극 나서는 등 희망찬 영암의 미래를 개척할 자신이 있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원배 민주당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08년 영암발전연구소를 세운 뒤 삼호읍과 신북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착실하게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고 보고 군수 공천 경쟁에 힘을 쏟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6일(서울), 다음달 2일(영암)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전남도당 전남국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에서 20여년 활동하면서 쌓아온 중앙 정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공천 경쟁에 나설 태세다.

김재철 대불대 석좌교수도 유력한 군수후보 중

하나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중"이며 "명절 전후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인지도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평 전 전남도의원도 '4선 도의원'의 경륜과 정치력을 기반삼아 조직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며 경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 전 의원은 4선 도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보고있는데다, 본인 스스로 "민주화운동과 노동 운동을 했고 지구당 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라며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당선’ 후보 5명 각축

■영암군수 입자사

김원배 현 군수가 재선 고지를 향해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 보았다. '민주당=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듯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 후보군은 부각되지 않은 상태여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군정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민주당 후보로는 김 군수 외에 김재원 박준원 전남도지사 정책보좌관, 김원배 민주당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철 대불대 석좌교수, 전동평 전 전남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까지 후보로 거론됐던 강우석(영암 2) 전남도의원, 강우원(영암 1) 전남도의원 등은 군수 선거 대신 도의원 선거로 방향을 틀었다.

김원배 군수는 "힘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며 재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영암 월출산 로프웨이 사업과 대불 산단에 아문 친환경 녹색산단(80만~70만평) 개발사업 등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며, 월출산 휴먼랜드 조성 및 숲·무와·원주·고구마 브랜드화 등을 통해 관광·농업 분야 수익 창출 기회를 다진 만큼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균형 전진을 꾀하고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김 군수는 높은 지지도·단란한 조직력에 현지 프리미엄까지 갖췄다. 27일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영암군수 입자사

(가나다 순)

				
김원배(52)	김재원(66)	김재철(53)	김재현(64)	전동평(48)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중당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영암군수	박준원 전남지사 정책보좌관	대불대 석좌교수	전 전남도의원

“지지도·조직력 탄탄” 김원배 군수 재선 의지에 김재원씨 풍부한 행정경험 앞세워 강력 대항마로

지지가 기반을 다졌다는 복안이다.

김재원 전남도지사 정책보좌관은 참신성과 박진감 있는 자세를 가까이서 보아왔던 만큼 지방자치 경험을 부각시켜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행사장에 참석, 얼굴 알리기에 주력한 뒤 명절이 지난 뒤 본격적인 새 확산에 나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전략이다. 그는 최근 지지도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대불대 건설공학과 교

수와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을 지내면서 쌓아온 이론과 현장 경험 등을 토대로 군정과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새로운 생명산업으로 지역 개발의 활로를 뚫을 것"이라며 "서부권 명품 신도시 개발 및 월출산을 활용한 은퇴자 마을 조성에도 적극 나서는 등 희망찬 영암의 미래를 개척할 자신이 있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원배 민주당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08년 영암발전연구소를 세운 뒤 삼호읍과 신북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착실하게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고 보고 군수 공천 경쟁에 힘을 쏟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6일(서울), 다음달 2일(영암)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전남도당 전남국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에서 20여년 활동하면서 쌓아온 중앙 정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공천 경쟁에 나설 태세다.

김재철 대불대 석좌교수도 유력한 군수후보 중 하나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중"이며 "명절 전후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인지도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평 전 전남도의원도 '4선 도의원'의 경륜과 정치력을 기반삼아 조직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며 경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 전 의원은 4선 도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보고있는데다, 본인 스스로 "민주화운동과 노동 운동을 했고 지구당 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라며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김지불기자 dok2000@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이성욱기자 lsh@

의 결 번 호	2010지선9(자심)
언 론 사	파이낸셜뉴스신문(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대표이사 조 영 권
심의대상기사	파이낸셜뉴스 2010년 2월 23일자 22면 『“노인인력 방치 사회 · 경제적 낭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마포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활동성과 및 특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담은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 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fn 이사람 ‘노인 일자리 창출’ 앞장 신영섭 마포구청장

“노인인력 방치 사회 · 경제적 낭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신영섭 서울 마포구청장은 인생 · 직업 경험이 풍부한 노인인력을 묵히는 것은 사회 · 경제적 낭비라고 단언했다.

신 구청장은 “65세는 노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를 고쳐 75세 이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제도를 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포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IT희망나눔뱅크’에서 지원받은 컴퓨터를 이용,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했다. 구가 운영하는 정보화교실이 그것으로 여기서 한발 더 나

아가 노인 수료생 가운데 컴퓨터 강사를 선발, 26명을 관내 70개 경로당에 정보화교실 강사로 배치했다.

정보 소외계층인 동년배 노인에게 1대 1 맞춤형 교육을 통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

신 구청장은 “사실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는가만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손자손녀들이 보낸 문자나 확인하는 수준이라도 그게 어디냐”고 말했다.

그는 노인강사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일선 전 문강사들로부터 받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노인 간 유대 강화는 물론이고 동년배 강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얻게 된다는 것.

당초 신 구청장이 노인 컴퓨터 교육에 눈을 돌린 것은 경로당 노인들의 놀이문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였다. 경로당에 가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술을 마시고 잡담이나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노인강사를 50명까지 늘리고 대상 경로당 역시 90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노인 강사는 2개월 동안 직무교육 뒤 현장에 배치,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내 유명 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신 구청장은 민간부문이 이런 일들을 주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심각해지는 실업난에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데다 민간부문의 역할이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업난 완화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구청장은 “앞으로 어르신은 물론이고 여성·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필요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llegible]

의 결 번 호	2010지선12(자심)
언 론 사	(주)데일리스포츠월드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5 대표이사 윤 정 로
심의대상기사	데일리스포츠월드 2010년 2월 3일자 14면 『‘살고싶은 도시’ …3년 연속 ‘환경 대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리시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의 월드디자인센터 건설 추진계획을 소개하는 인터뷰와 인물사진을 게재하고, 재임 중 시장활동 성과를 조감도 및 3컷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살고싶은 도시’ …3년 연속 ‘환경대상’

경기도 구리시가 정부와 각종단체의 자치단체 평가에서 잇따라 두각을 나타내며 최고의 자치단체로 부상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해 시가 개최한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최고의 지역축제로 평가 받고, 경기도 주관 종합행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구리시는 겹경사를 맞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도 경기도 전체 2위를 차지한 구리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쟁력 지수와 생활여건지수 등을 평가한 결과 지역 경쟁력에서 종합 15위에 올랐다. 이 평가에서 또한 생활서비스 부문은 전국 4위, 주민생활력 부문은 전국 9위에 랭크돼 구리시의 미래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후략)

INTERVIEW

박영순 경기도 구리시장

미래성장동력산업 월드디자인센터 건설 총력

“구리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이자 구리 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월드디자인센터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영순 경기도 구리시장은 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구리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시정을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구리시는 토평동 한강변 338만㎡에 민자와 외자 등 6조5천억원을 유치해 국내외 디자인 관련 업체 2천여개가 입주하는 월드디자인센터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중이다”며 “이를 위해 세계적인 디자인엑스포 그룹인 HD(Hospitality Design), 국제건축디자인자재협회(ISHP)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월드디자인센터 건설 계획을 상당히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자족시설이 없는 전형적인 수도권 배트타운인 구리시에 오랜기간 먹고 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국내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고용문제인데,

월드디자인센터로 이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도 "고구려 테마공원은 월드디자인센터 조성계획과 함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다"며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의 경우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가 정부와 각종 단체의 자치단체 평가에서 잇따라 두각을 나타내며 최고의 자치단체로 부상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해 시가 개최한 제1회 전국지방자치총선거가 최고의 자치단체로 뽑히며, 경기도 정부 종합행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구리시는 경경민정을 앞다퉀다. 국민참여예산제 추진으로 생산한 예산을 평가에서 또 경기도 전체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대법관 재직 시절부터 전유현의 통치이념이 공동으로 이어져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생활안전지수 등을 평가한 결과 지역경제발전이 종합 1위에 올랐다. 이 평가에서 또 생활안전수 부문은 전국 4위, 주민안전율 부문은 전국 9위에 올랐다. 이 두 평가의 미비점을 더 개선할 예정이다.

한국의 원조회 (Korean Aid Society)에서 배포하는 물품들을 받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 (People gathered to receive goods distributed by the Korean Aid Society.)

[illegible][illegible]

말집오른쪽 수배현황의 관공자를 유지, 관공
노시로의 변모도 희하고 있다. 구리시는 전라
에서 가장 독서량이 많은 문화도시를 뜻하는
는 옥피라에 2007년 5월부터 연립도서관을 운
영한 끝에 이제 18소의 독서실감장, 공원, 전
영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귀공왕초에
임치한 옛날 도서관이 30여년 된 것이다.

ABC 구리는농은 20년 시만의 여력을 결집하여 구리시장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선적 로드맵이자 조화로운 공동체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시도 2007년 4월 시의회 시정(市政)관리위원회
ABC(= Amazing Gur(아름다운 구리), Best
City Gur(아름다운 구리), Clean Gur(깨끗
한 구리)의 약자이다. ABC구리운동은 구리
시를 건널고, 아슬아슬,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윤승중 기자



“구리의 대가 성장동력산업이자 구리 시공을 보며 살릴 수 있는

미연성 장기, 구리시장은 스프로썬노의 인터넷에 "유명한 구리의 농사 경험에는 놀라운 것"처럼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구리시는 농업을 향방을 33조로 인지도와 외 자 655천원을 유치해 국내외 디지털 관련 업체 2만여개가 입주하 는 월드디지털컨퍼런스장 개최를 미련하고 지금으로부터 2년 이 된 위해 세계적인 다자임으로 구성된 Hospitality Design, 국제적

[illegible]

류송중 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13(자심)
언 론 사	아세아일보(주)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5 대표이사 권 기 호
심의대상기사	아시아일보 2010년 2월 4일자 5면 『구로구, 청년인턴 100% 정사원화 힘찬 ‘시동’』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구로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여러 컷의 사진과 함께 보도하고,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구로구, 청년인턴 100% 정사원화 힘찬 ‘시동’

- 양대웅 구로구청장 인터뷰

인턴으로 끝나는 인턴제가 아니라 취업까지 이어지는 인턴제라는 데 의미가 있다.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적성에 맞춰 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뽑도록 했다. 이 인턴제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청년실업이 다소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작년에 750억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다. 금년에 규모를 더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센터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행정력을 다하겠다.

구로구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한파가 몰아닥치자 경비절감과 직원들의 기부로 총 10억원의 재원을 확보, 청년인턴 사업을 실시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청년인턴의 정사원 전환에 노력, 12월까지 근무한 76명 중 95%에 달하는 72명이 정사원으로 채용이 확정됐다.

구로구의 올해 목표는 청년인턴의 100% 정사원화이다. 이를 위해 정사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기획, IR분야의 업종을 우선 선정하며, 지난해 청년인턴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회사에 우선 채용권도 부여키로 했다.

구로엔 실업Zero센터가 있다. 이 센터가 청년인턴의 취업알선을 도맡아한다. 센터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체를 먼저 모집한다.

그리고 구로구가 선발한 청년인턴 중에서 업체는 회사의 선발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필요한 인턴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집된 업체는 모두 직원이 필요한 업체임으로, 업체로서는 1년간 인턴에게 투입되는 인력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구청과 업체가 서로 윈윈하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시스템이 작년 재취업 95%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인턴의 재취업을 위해 구청도 노력을 보낸다. 당초부터 재취업을 전제로 인턴이 필요한 업체를 모집하며, 인턴으로 관리 중에도 근무성적을 관리하며 우수한 직원은 재고용할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인턴을 정사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기획, HR분야의 업종을 우선 선정하고, 인턴근무자 소양교육과 업무능력향상 전문교육훈련도 실시한다.(중략)

이번 구로구의 수상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서도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점과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로구는 전국 유일 소상공인 지원 ‘훈련 제정’ 전국 최초 ‘소상공인’ ‘One-stop지원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소상공인 ‘최저금리 경영안정자금’ 융자, 여성 신규 창업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무료구인지원반’ 운영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온 점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정복영, 2014, *타자문화연구* 21(1)

의 결 번 호	2010지선14(자심)
언 론 사	아세아일보(주)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5 대표이사 권 기 호
심의대상기사	아시아일보 2010년 2월 18일자 8,16면 『한국의 알프스 양평 으뜸 생태마을 명성 드높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 양평군수) 후보 예정자인 현 군수의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여러 컷의 사진과 함께 보도하고, 인터뷰 내용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국의 알프스 양평 으뜸 생태마을 명성 드높다

변화의 바람 솔솔 자연 인간 살아숨쉬는 웰빙도시로 거듭나

김선교 양평군수에 듣는 오늘과 내일

(전략)

○ 지난 2007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이 되고 취임 2주년이 지났습니다. 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즘 ‘양평이 확 변하고 있다’고 있다고 군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평이 곧 ‘발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2009년 한 해도 양평의 변화에 가속페달을 밟으며 힘차게 달려온 결과 이제는 성과가 되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격 승인’으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33개(기 승인사업 51건)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4만 4천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 등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2014년 개원 예정인 전액 국비 1,700억원이 투입되는 ‘국립 교통병원 유치’로 군민에게 근거리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 혜택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 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지난 해 9월 양서면 양수리 일부지역에 첫 공급을 시작했으며, 군부대 도심외곽이전 사업,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친환경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중략)

○ 중앙선 전철 개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역세권개발의 청사진을 알려 주시죠?

△ 앞서 말씀드린 전철개통 및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개발 전략으로, 단순히 사람만 많이 사는 도시가 아닌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맥락하에 전철과 연계한 발전사업으로,

의 결 번 호	2010지선16(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전북일보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 훈
심의대상기사	전북일보 2010년 2월 12일자 12면 『전국 제일 생활스포츠도시, 지역발전 디딤돌로』, 2010년 2월 12일자 13면 『집집마다 돈 버는 부농 꿈 실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읍시장, 장수군수)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과 군수의 재임 중 활동성과 및 주요 사업추진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뷰를 관련 행사사진 및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시민에게 꿈과 에너지 주조”

강광 정읍시장에게 듣는다.

전국 제일 생활스포츠도시, 지역 발전 디딤돌로

시민화합 돕는 체육관 시설 준공 박차

옛 상동 정수장 부지에 48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로 건립하는 청소년문화 체육관을 3월까지 준공한다.

지난 해 6월 착공된 청소년 문화체육관은 총사업비 48억여원이 소요되며, 5천㎡의 부지에 2681㎡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문화시설, 2층과 3층에는 다목적체육관과 방과후 교실 등이 들어서는데, 청소년들의 문화와 여가활동, 체력단련을 위한 전용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여가활동 등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중략)

강광 시장은 지난 2002년 민선 4기 정읍시장 취임 후, 생활체육 진흥과 이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건전여가 문화 창출에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략)

이처럼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로 강시장은 지난해 10월 2009년도 대한민국체육상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상은 매년 체육의 날(10월 5일)을 기념해 체육인의 사기를 높이고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권위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강 시장의 이번 수상은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첫 수상인데다가 민선 4기 정읍시장이 그만큼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후략)

종합프로젝트인 셈이다.

그동안 장수군에서는 5·3프로젝트 성공추진을 위해 읍면별로 농가별 소득조사 및 분석을 실시, 농가별로 정확하고 철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향상 농가를 우선으로 사업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자본과 재배면적 이 열악한 장수군의 지역여건을 최대한 감안해 고부가가치의 핵심작목을 집중 육성한 맞춤형 농업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후략)

“농촌다움 잘 묻어나는 건강중심도시 만들터”

집집마다 돈 버는 부농 꿈 실현

장수군이 지역주민 소득향상 사업으로 농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건강·문화·관광'을 골고루 육성하고 있다.

장수군을 '부농' '건강' '문화' '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건강·문화·관광'을 골고루 육성하고 있다. 특히 농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건강·문화·관광'을 골고루 육성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가소득향상사업의 결과로 장수군 농가 소득은 3250만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소득 4030만원에 비해 6.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2008년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 123호를 기록하며, 이는 전국 평균 100호에 비해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부농' '건강' '문화' '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건강·문화·관광'을 골고루 육성하고 있다. 특히 농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건강·문화·관광'을 골고루 육성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가소득향상사업의 결과로 장수군 농가 소득은 3250만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소득 4030만원에 비해 6.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2008년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 123호를 기록하며, 이는 전국 평균 100호에 비해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다움 잘 묻어나는 건강중심도시 만들터”

장수군에 대해 소개하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장수군의 모습이다. 장수군은 '부농' '건강' '문화' '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건강·문화·관광'을 골고루 육성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가소득향상사업의 결과로 장수군 농가 소득은 3250만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소득 4030만원에 비해 6.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2008년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 123호를 기록하며, 이는 전국 평균 100호에 비해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평균소득 3250만원 전국 대비 6.4% 높아 한우 등 경쟁력 있는 10대 소득 작목 선정 육성

장수군은 2008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가소득향상사업의 결과로 장수군 농가 소득은 3250만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소득 4030만원에 비해 6.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2008년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 123호를 기록하며, 이는 전국 평균 100호에 비해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부농' '건강' '문화' '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건강·문화·관광'을 골고루 육성하고 있다. 특히 농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건강·문화·관광'을 골고루 육성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가소득향상사업의 결과로 장수군 농가 소득은 3250만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소득 4030만원에 비해 6.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2008년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 123호를 기록하며, 이는 전국 평균 100호에 비해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에 대해 소개하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장수군의 모습이다.

장수군은 '부농' '건강' '문화' '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건강·문화·관광'을 골고루 육성하고 있다. 특히 농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건강·문화·관광'을 골고루 육성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가소득향상사업의 결과로 장수군 농가 소득은 3250만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소득 4030만원에 비해 6.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2008년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 123호를 기록하며, 이는 전국 평균 100호에 비해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7(자심)
언 론 사	경인종합일보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8-4 대표이사 홍 남 용
심의대상기사	경인종합일보 2010년 2월 9일자 20면 『다양한 인적자원 공존 시민중심 행복도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 포천시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의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를 인물사진 및 여러 컷의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다양한 인적자원 공존 시민중심 행복도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단계 사업 '종합지원센터' 준공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통한 특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농특산물 홍보·대축제 시행 등 농업경쟁력 확보 주력
도 종합계획 등 연계 2030 중 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

(전략)▲따뜻한 복지행정

포천시는 아름답고 인간적인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2010년 한 해도 전진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의료급여, 위기가정 등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보장하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가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이 안정을 추진한다.

자원봉사센터, 포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관 준공, 경로당 보수 및 신축,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어르신만의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한다.

여성의 인적자원 및 각종 다문화프로그램을 통

해 건강한 가정을 개발하며, 저소득층 보육지원,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을 통해 아동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에 대비해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를 월 50,000원씩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 및 아동복지 증진을 통해 건강한 가정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에 있다.

2010년에는 선단보건지소와 소홀 보건지소가 신축 준공되어 보건인프라가 확충되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맞춤형 재활사업, 구강보건사업, 급성전염병 관리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보건 기능을 강화한다.

▲감동적인 행정서비스 창출

포천시는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포천비전 2030 중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부분별 역량극대화를 위한 단계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계획내용에는 지역산업 기반 강화 및 활성화, 생활권 형성 및 공간구조, 구축방향, 지역문화 창출 및 기반 강화, 교육 보직기반 형성, 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기반 구축, 환경가치 증대 및 자원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더 신속한 허가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허가담당 공무원의 대면 형태의 지속적인 개선과 공개된 허가민원 서비스 개선을 통해 투명한 행정

의 결 번 호	2010지선18(자심)
언 론 사	경인종합일보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8-4 대표이사 홍 남 용
심의대상기사	경인종합일보 2010년 2월 10일자 20면 『2010년 꿈이 실현되는 도시 Vision 남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 남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를 인물사진 및 여러 컷의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2010년 꿈이 실현되는 도시 Vision 남구

인천시 남구 이영수 남구청장

“2010년 한해는 꿈이 실현되는 도시 Vision 남구 라는 구정목표를 토대로 많은 공약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로 결실을 맺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천시 남구 이영수 남구청장은 경인년 새 해 업무를 시작하며 활기찬 경영행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혜택과 균등한 복지를 구현하고 고품격의 도시건설을 실현하고자 7대 프로젝트와 7대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도시재생추진사업,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공공도서관 조성 등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에 집중할 계획인 인천 남구의 2010년 새해설계를 살펴본다.

▲ 입체적이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경제회생 기반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주안2·4동 일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용현·학익 지구는 오피스, 상업, 주거, 문화를 총망라한 다양한 시설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이고 쾌적한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중략)

▲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 추진

끝으로 이청장은 “올해에도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공감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로 고객이 감동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며,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민권익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청장을 필두로 9백여 공직자들이 경인년 한해도 초심의 마음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 남구가 한 단계 발전되고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20(자심)
언 론 사	(주)수도권일보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39-3 대표이사 강 신 한
심의대상기사	수도권일보 2010년 2월 8일자 16면 『“군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최우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웅진군수) 후보 예정자인 현 군수의 지역발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군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최우선”

인천시 웅진군 조윤길 군수는 올해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살기 좋고 품격있는 스마트 웅진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해피 웅진, 아름답고 낭만이 있는 로맨틱 웅진, 저탄소 녹색성장이 있는 그린 웅진이라는 4대 비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민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7월, 웅진군, 민선 4대 군수에 취임해 탁월한 행정력을 앞세워 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조 군수를 만나 올해의 사업계획을 들어보았다.

조윤길 웅진군수는 군민의 소득을 늘리는 성장, 복지를 키우는 성장,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에 최우선 목표를 삼아 1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웅진군을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웅진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진군

을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윤길 웅진군수는 웅진군 출신답게 자신이 평생 함께 해 온 지역에 대해 강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군민의 소득을 늘리는 성장, 복지를 키우는 성장,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설정한 것도 결국에는 지역개발을 통해 웅진군민의 삶을 지금보다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조 군수는 이런 거시적인 발전계획 아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적 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민소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웅진군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육성함으로써 웅진군만의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웅진군만이 잘 살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하고 취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웅진군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중략)

#군정 목표, 복지향상·소득증대·관광 웅진

(전략)조 군수는 웅진군이 이미 지난해 많은 성과를 이뤄 냈다고 말하면 웅진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단기적인 성과 위주보다는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와 연계된 폭 넓은 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웅진군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온 힘을 쏟겠다는 것.

그가 갖고 있는 계획, 즉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웅진군을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포부가 여러 주변여건과 맞물려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군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최우선”

■ 인터뷰 조윤길 웅진군수

인간사·환경조·조경조 연구는 용해는 군민들의 생명안전과 소득 향상을 위해 일하고 정치를 통한 다양한 시책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살기 좋고 물맛있는 스마트 온천’이 늘고 사람이 넘치는 해피 온천 이름 달고 남발에 있는 로빈트 온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그런 공헌이라는 4대 비전을 천으로 하는 하 문명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7월, 온천군 인선 4대 군에서 처음으로 철강기술을 앞세워 조의 보석에 조 기어미라는 뜻을 붙여 조 온천이라고 부른다는 의미를 담아온다. (한빛지주)

조용필 운영권수는 "국민의 소유물"이라는
정당, 법치를 깨우는 정당, 비록 나이가는 생
장이 중요한 목표는 약 100여개의 섬으로 이
전된 공직자를 위해 재정의 여야공공분야 중
지도 발전시켜왔다"고 조부를 밝혔다.

“또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동진군은 천하의
지형정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곳이 때문에 용
군을 사해 제국의 중앙관공하고 지어므로
상제이름하는 공군과 왕의성은 공군하고도 불

조용길 공진군수는 공진군 출신답게 자신이
공생 편에 서 온 지식이 더해 강한 애정을 갖
고 있었다.

한국의 소리를 표현하는 선장, 복직을 카운트
선장, 노래를 부르는 선장을 비롯한 악장사
으로 일컫는 것도 전파되는 지형계를 통해
정확하고 싶은 직관이다. 음악이 되었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조 교수는 이런 거시적인 발전계획 아래 구체적인 추진과제에 있는 단계적 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연료 등·이전 생필품 강화를 통해 주민소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윤진경씨는 "특정 계층에 맞는 전문분야를 육성함으로써 윤진경씨의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야 공은 공의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봉진경씨는 실업률 3% 있는 농지를 10%로 줄이고 국가와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윤진경씨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민생에 구호를 나갔습니다."

※용진군 천혜의 자연환경 감치
이기에 조화로운 환경전과 연합한 교통체
계를 가진, 용진군의 특성에 알맞은 도시 개발
계획을 실현하고 도시의 안정확진을 도모하겠
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있는 행진로 보장을 저지, 실험형으로 금강
전으로 운반, 참모 작을 향상시키고, 운반
을 결정하는 것은 서해 해안의 해안과함부로
신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는데, 동진군은 동진군현의 경제·문화 중심을 위해 국지·국방 방위와 소독종어 사업,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습

서해 제일 해양관광단지 조성

복지시책 발굴, 교육환경 개선

빈틈없는 기본 인프라 구축

도서 개발... 균형발전 도모

2.4.2

조원길, 홍진규수가 밝히는 홍진규는 복지수
 역병 사업은 이미 구제하지 않았음도 드러나고
 홍진규는 재소수였을 의한 난징지불 교제자
 1981년 장제수 시종, 출생이 대조선(기, 보)
 유로 지원 등 새로운 시작 법률과 형·유에 노
 재비 지원, 결식하는 급식과 후에 지원 사람들
 추진한다

여기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시기도 있었다. 경로당 신학 및 동
 아사태치자과 전일 등을 통한 복지 인도로 화
 해이 그려진다

또한 해양 관세면제와 어항 용허제로 인해
규율권 어획권을 고려한 어업/간 어획권인
있다. 수산종교보양유지인 화해, 수산양양지선과
어획권 폐사 폐지/가득 등 어획권/관세 폐지
존했다. 다시와 양도지인 자문과 대세마와 우수
정를 양도/가득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다. 다시와 조종/가득에 대한 연/가득 의의
의의 조종/가득에 관한 조종/가득

◆정국, 복지향상·소득증대·관광 증진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응징은 향후 관공
철칙자로 투쟁하는 문제이다. 소위장 운동관수
는 관공제 유인과 별개로 성공을 위해 수석과
정국과 어유진 측후를 개발하고 자립산업에
맞는 한 그로 고기잡기대해 등등 개설했다. 이
제 통일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함 "응징관 관공

전용 종약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이는 편성 인프라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시스템 관련 개념과 적용 같이 한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또 봉건군은 "우수민 전태의 광공
사일을 가진 곳입니다. 광공 정형정형 비전과
전라적자 및 세부 사색을 발을 수렴한 '용진
군 관공 진종 종파적자'에 의해, 또사적 특색을
살린 다양한 종공 안파의 구획을 화공 내성 있는
정적용 안자적, 관계별로 주전하 나가있다"

용진군이 관공·유왕도사로 거느리기 위한
구해적 땅임을 쓰였었다. 만지 용진군의 공업
에는 약 171만5000㎡ 면적에 각종 운동시설을
비롯한 공공편익시설이 들어있 여경으로 현재
(주)XIS 레저산업에서 추진 중에 있다.

한재 사행사 측에서 관공군의 재회인정을 위
해 사전 환경선 검토 초안을 윤역시행 중이고,
장호 농·식물음 비뚤어 자연상태격의 보존 등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용인군 관광발전의 기틀을 다진다고
써 약속된 우리지역의 자연경관 활성화에 공헌

있는 계약을 보상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서포라 관광지가 선정된 바, 현재는 준공예의 오피스 빌딩

최근 급변하고 있는 관광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관광지의 매력도를 높이고자 리모넵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리 사업의 전체적인 모습

어플리케이션이 완료됐고, 약 48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용진균은 풍부한 자양성에 기반, 고유한 배려와 관공 처리된 복합과 심 내 관공 완성조건 및 접근처리를 거친식별 계획도 갖고 있다. 이

는 군에 7세 편의 양부친 중심으로 문화 공간 조성 등 계법 섬 고유의 특색을 활용한 설 관

관 체계와 독립적으로도 다른 구조로 존재한다. 특히 보도권은 문화예술 본연의가 중무장함으로 문화·민중에게 양극화 대립하는 '문화의 산'으로 요철한 존재이다. 이를 명백히 드러내

본외 부동선이 조성사업과 드라마 세트장을 환
영한 이야기 라깁과 중의 개발 사업을 본래적

조 군수는 올봄에 이의 지난해 같은 선과

북 다녔다고 밝히며 응징군의 지속적인 박
해를 위해 국가적인 신뢰 회복이라는 봉·장기
적인 자위 정책에 부응할 뜻을 밝힌 것이다
고 밝혔다. 또 이와 연계된 해군은 전쟁 시

그가 갖고 있는 제복, 즉 군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육지군을 사형 제벌의 행정관청으로, 즉 상징으로 육성했다는 도박이 여러 국부적전과 맞물려 성공적으로 진행될 기체가 본다.



▲호출을 요청받은 주요 브로커: 천안군 출신인 서정식(사상총무)은 1996~2000년, 연세대학교 법학부에서 2001~2006년에 대한 2009년 7월에 열린 제1차 호청군으로 선임됐다. 1998년부터 국무총리 특임장관(국무총리) 1999년 1월 - 안문경 호청군(사상총무) 2006년 1월 8호청군(사상총무)으로 선임

300

의 결 번 호	2010지선22(자심)
언 론 사	전국매일(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5-5 대표이사 박 종 필
심의대상기사	전국매일 2010년 2월 5일자 20면 『“새출범 통합市 ‘대한민국 최고 명품도시’ 기대” 릴레이 기획 새해설계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성남시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의 재임 중 성과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와 함께 해당 후보예정자의 사진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새출범 통합市 ‘대한민국 최고 명품도시’ 기대”

이대엽 경기도 성남시장은 행정구역 통합의결과 관련, “성남시 역사에 영원히 남을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 시장은 “뿌리가 같은 3개시가 합치되면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며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남시는 중앙 정부가 약속한 각종 인센티브를 얻음은 물론 더 커진 위상으로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다”며, “명품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분당신도시와 로또 판교로 널리 알려진 경기 동부권에 위치한 성남시, 141.82km²의 면적에 94만2,447명이 살고 있으며 올 예산만 1조7,577억

원으로 기초단체 가운데 최고 규모다.

지난해 20년간 시민 숙원사업이던 시청사의 여수동 이전으로 구시가지와 분당신도시간의 균형을 찾았다. 여수동 신청사는 신·구시가지의 중앙부로 시민 화합을 소화해낼 수 있는데다 행정 집중화를 이끌어 행정 능률 제고와 민원 편의에도 일조하고 있다. 임기 잔여기간동안 공약 완수에 역점을 두겠다는 이대엽 시장을 만나 민선4기 주요 시점과 추진 중인 공약을 살펴본다.

●공약추진

민선4기 공약 38개 중 19개 사업이 완료됐고 19개가 추진중이다. 장년층 취업을 돕는 사나이직업훈련센터 설치·운영을 비롯, 영어체험센터 운영, 공영주차장 확충, 종합직업체험관 유치, 실업계고교 특성화 전환, 초등학교 무료급식 확대, 탄천변 도로개통, 재래시장 특화, 고도제한 추가 완화 등은 손꼽히는 공약으로 100% 완료됐거나 거의 완료된 상태로 민선4기 우수실적으로 꼽히고 있다.

●시청 신청사 건립 임주, 시민 개방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성남시 신청사는 전체면적의 약 33%를 시민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는 가운데

데 시청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지난해 11월 개청 이후 최근까지 대강당은 13건의 대관 신청이 들어와 포럼, 연주회 등의 용도로 6,280명의 시민이 이용했다.

또 5개 회의실은 118건의 대관 신청이 들어와 1만여명의 시민이 이용했다. 스케이트장과 종합운동장 또한 6만여명의 시민이 찾았으며, 시청 1층 로비에서는 희망2010무한감동모금행사, 모란민속 5일장 디자인 전시 등 크고 작은 행사가 6차례 열려 3만여명의 시민이 찾아오는 등 100만 시민이 상시 애용하는 갤러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 정책, 산업, 생활

상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과 열린도서관은 각종 행사 자투리 시간 등에 새로운 정보와 지매를 얻어가는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돼 연일 시민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연중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시청사는 각종 시민 공간,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기존 시가지와 분당·판교신도시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소로 많은 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관광자원인 구겐하임미술관, 런던시청, 파리시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명품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23(자심)
언 론 사	전국매일(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5-5 대표이사 박 종 필
심의대상기사	전국매일 2010년 2월 11일자 20면 『“고달픈 구민이 콜하면 언제든 통화” 양대웅 서울 구로구청장의 남다른 ‘일자리창출 비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구로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의 재임 중 성과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와 함께 해당 후보예정자의 사진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고달픈 구민이 콜하면 언제든 통화”

양대웅 서울 구로구청장의 남다른 ‘일자리창출 비결’

서울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지난해 전 세 계적으로 경제 한파가 몰아닥치자 경비 절감과 직 원들의 기부로 총 10억원의 재원을 확보, 청년인 턴사업을 실시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청년 인턴의 정사원 전환에 노력, 지난해 12월까지 근 무한 76명 중 95%에 달하는 72명이 정사원으로 채용 확정됐다.

구로구의 올해 목표는 청년인턴의 100% 정사 원화이다. 이를 위해 정사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 기획, HR 분야의 업종을 우선 선정하며 지 난해 청년인턴사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회사에 우선 채용권도 부여키로 했다.

구로엔 실업Zero센터가 있다. 이 센터가 청년 인턴의 취업 알선을 도맡아한다. 센터는 청년인턴 이 필요한 업체를 먼저 모집한다. 그리고 구로구가 선발한 청년인턴 중에서 업체는 회사의 선발규정

에 따라 해당 업체가 필요한 인턴을 선발하도록 하 는 것이다. 모집된 업체는 모두 직원이 필요한 업 체이므로 업체로서는 1년간 인턴에게 투입되는 인 력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구청과 업체가 서로 윈 윈하는 장점이 있다.(중략)

- 기초자치단체로는 최대 규모, 지난해 100명 에 이어 올해 200명 채용

구로의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더 제공해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의 의지도 담겨 있다.

따라서 당초 이달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7개 월간 실시키로 했던 사업기간도 내달부터 12월까 지 10개월간으로 늘렸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우수 행정에 대한 격려차 구로구를 방문하기도 했 다.(중략)

- 정부가 상으로 10억원 특별교부세를 준 이유 양대웅 구청장은 “인턴으로 끝나는 인턴제가 아니라 취업까지 이어지는 인턴제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적성에 맞춰 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뽑도록 했고 이 인턴 제가 전국으로 확산돼 청년실업이 다소 해소됐으 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난해에 750억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다. 올해엔 규모를 더 늘리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 센터를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24(자심)
언 론 사	전국매일(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5-5 대표이사 박 종 필
심의대상기사	전국매일 2010년 2월 19일자 20면 『“다양한 문화 혜택 균등한 복지 매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 남구청장) 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재임 중 성과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인터뷰와 함께 해당 후 보예정자의 사진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다양한 문화 혜택 균등한 복지 매진”

“2010년 한해는 꿈이 실현되는 도시 Vision남구란 구정목표를 토대로 많은 공약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촉진,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등에 힘을 모아 더욱 활기찬 경영행정으로 고품격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수 인천시 남구청장은 경인년 새해 다양한 문화혜택과 균등한 복지 구현을 하고 고품격의 도시 건설을 위해 7대 프로젝트와 7대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인천시 남구의 도시재생추진사업,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공공도서관 조성 등을 통한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등 2010년 새해설계를 살펴본다.

● 미래지향적 고품격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제회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주안2·4동 일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올해 상

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용현학익지구는 오피스, 상업, 주거, 문화를 총망라한 다양한 시설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이고 쾌적한 생활기반을 조성해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인하대 후문가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해 대학과 상업지역이 조화되고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특화된 거리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고품격 도시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4억원을 투입해 수봉공원 야간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사회 전반으로 인식돼 있어 시민편익시설로 6개 노선 총연장 34km를 대상으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 실정에 맞는 자전거전용도로사업을 인주로 등에 우선적으로 시범시행할 예정이다.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자립경영 창조도시’ 건설
신기남부종합시장과 용현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립 추진 중이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 이곳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또한 32억여원의 예산으로 토지금고시장에 대한 공동배송센터와 아케이드 설치공사,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을 추진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남구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문화산업벤처,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문화클러스터 조성하고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13년까지 총 230여억원을 투입해 이 지역에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을 유치하고 문화콘텐츠의 상품화와 연구 개발 등에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25(자심)
언 론 사	(주)중도매일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75-3 대표이사 김 원 식
심의대상기사	중도일보 2010년 2월 5일자 9면 『“중부권 첫 슬로시티 선정…올해 기반조성에 심혈” 2010 새해설계 최승우 예산군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산군수) 후보 예정자인 현 군수의 재임 중 역점 추진사업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약력 등을 담은 인터뷰와 함께 인물사진을 지나치게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중부권 첫 슬로시티 선정… 올해 기반조성에 심혈”

흰칠한 키에 강단진 외모의 소유자다. 대화 내내 표정 변화 없이 강렬한 눈빛으로 의지를 전달한다. 물론, 특정 사안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활발한 제스처와 미소도 보낸다. 육군, 소장 출신의 최승우 예산군수다. 최 군수를 만나 2010년 예산군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 올해 펼칠 사업은 어떤 것인지.

▲ 우선, 20여 개 이상 기업연구소 유치와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자동차산업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에 매진하겠다.

둘째, 신암농공단지내 동물의약품 9개 기업 및 국내 19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동물의약품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예산일반산업단지, 예산테크노밸리, 예산일반산업단지 등 3개 지구와 보령의약전문농공

단지 1개 지구를 2012년까지 추진, 친환경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다.

넷째, 회소금속 생태산업단지 유치로 우리 군에 전자정보분야 산업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국내 글로벌 자원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

다섯째, 자연환경 훼손으로 멸종되었던 천연기념물 텃새 황새 복원으로 황새 마을을 조성, 친환경 이미지는 제고는 물론 다양한 경제적 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가장 역점을 두어 펼치는 사업이 있다면.

▲ 올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신흥공업국과 산유국들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외 여건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5%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연초부터 4대 강 정비로 인한 여야의 정쟁 격화와 복핵문제, 고유가 문제, 특히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국내·외 여러 위험요소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예산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들이 나타나는 만큼,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

의결번호	2010지선26(자심)
언론사	(주)중도매일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75-3 대표이사 김 원 식
심의대상기사	중도일보 2010년 2월 11일자 9면 『“인구 100만 시대 대비…경제도시 건설에 매진” 2010 새해설계 성무용 천안시장』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천안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재임 중 역점 추진사업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약력 등을 담은 인터뷰와 함께 인물사진을 지나치게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구 100만 시대 대비… 경제도시 건설에 매진”

2010 새해설계 성무용 천안시장

흔들림이 없다고들 한다. 굼직하면서도 풍부한 성량(聲量)에서 전해지는 이미지라 그런지, 성무용(66·사진) 천안시장은 빈틈이 없으면서도 여유로움까지 겸비한 듯한 느낌이다. 3선 도전에 나서는 만큼, 젊고 스마트한 외모와 패션 감각이 전해지는 성무용 시장을 만나 2010년에 대해 얘기해봤다. <편집자 주>

- 올해 펼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우선 첨단지식기반 신성장동력 지속 창출이다. 2011년 완공 목표인 제3산업단지 확장과 제5산업단지, 풍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직산 남산지구, 동부 BIO, 북부 BIT, 입장밸리, 수산일반 산업단지 등을 추진이다. 교육·문화·복지 도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신방도서관, 문화청소년수

련관 건립과 천안시민 대학, 천안학 운영 등 천안 국제화 교육특구 및 평생교육 도시로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천안홍타령축제를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발전시키겠다.

다양한 맞춤형 시민건강 증진사업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복지시책도 강화하겠다.

정주기반 확충 차원에서는 문화동 옛 시청사 터에 계획 중인 복합테마파크조성 사업, 동서관통 도로개설, 원도심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연결도로, 천안 경전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연결, 풍세 및 제5산업단지 진입로 등 중요 기간 도로망 구축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스포츠·관광 명품도시 측면에서는 동남부생활체육공원, 북부스포츠센터, 천안야구장, 웰빙마라톤코스, 직산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생활권역별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다.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해를 맞아 총 10개 분야 99개 약속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99건 중 60건은 임기 중 마무리 가능하고, 나머지 39건은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중략)

-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 지금 현재는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할 생각이
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시기를 좀 더 봐야 한
다. 등록하면 현안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시정에 소
홀할 수 있고 자칫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
다.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점이 되면, 그
때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에 뛰어들 것이다.

- 시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올해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는 민선 4기 시정을 마무리하는 해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현안들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 가면서, 월드베스트 천안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특히 범띠 해를 맞아 백수의 왕인 호랑이가 날개를 달아 하늘로 비상해 용맹하게 더 큰 일을 이룬다는 의미의 '여호점익(如虎添翼)'처럼, 천안도 그동안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도시, 세계 속의 천안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

“인구 100만 시대 대비… 경제도시 건설에 매진”

2010 새해설계 성무용 천안시장

은둔하여 있다가, 권대, 궁궐(宮殿)에서 종무(宗府)에서 전제(前帝)에 이르기까지 3년, 성부(成父) 66-
사(子) 전(前)시(時)가 없었으므로 여유(여유)까지 관내(官內)에 있던 3년이다. 3년 만에 다시는 변(變), 문(文)
신(新)을 얻어와서 전(前)시(時)가 전(前)제(帝)에 성부(成父)를 시(時)를 떠나 3년 만에 다시 여(여)해(海)였다. (은둔지 주)

· 불어 9월 시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1991년 1월 24일, 김대중은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100대 인물'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100대 인물'에 선정되었다. 김대중은 '대한민국 100대 인물'에 선정된 100대 인물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인물이다. 김대중은 '대한민국 100대 인물'에 선정된 100대 인물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인물이다. 김대중은 '대한민국 100대 인물'에 선정된 100대 인물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인물이다.

[illegible]

소속 노조가 임원이나 조합원으로, 공산당비밀직책을 가진, 당비공급자인 한이여도, 전방비밀직책을 가진 자의 기밀을 유출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4년부터 전국 100개 지3인단, 5인단, 동세단인 조영, 침전지식기반, 신성정동력, 창출 총력

지속적으로 주선돼야 하는 사업이다'고 지적.

▲130명에 달하는 노사간담회 참석 의정권 세
곳은 성평등 지원과 장래를 밝힌 사업. 사회 생활의 활력
'홍터링축제' 전국최고 축제로 육성
교육·문화·복지 도시경쟁력 강화

국제비즈니스피크·경진철 지속추진
8년간 1154개 기업 유치 총 자부심

[illegible]

▲한화는 연구 56년에 역사교과가 1조 밖에 없는 데
로서 만년에 올라섰다. 1조만 교정의 유포지, 주

조약에 인준을 서명한 국가가 있었지만, 천안은 둘러싼 주변국에 의해 1912년 무조건적으로 잃은 상태이다.

무조건적 이교로, 수도와 국경의 특수성이 매우 높게 배치를 할 수 있는 신도시, 호수신도시 등 주변지역에 유망도 개발계획으로 지역 지평의 미시적용 요인이 된

고칠 수 있다. 따라서 한미사는 2025 논사기본계획의 전동시점 유선과달 위해 난산중합시점에 전로 확대

을 근거로 세종시 김신, 아산시에 천도시계관, 영동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인구 100만 시대도 대비한 자치기관의 경제·사회 차원의 구조설계 한다.

4년간 펼친 사업 중 가장 약점이 가고 의미 있었던 사업 또는 일을 꼽는가.

▲다시 47의 비전이 거론 한지 좋은 소식일까? 세상은 원초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향해 가는 길에 있다. 그 결과 2020년 인구 33만 명에서 13만 명으로(약 56만 명이 됐고, 세리프는 5500여 명이 시 1조 1330억 원으로 커지는 등) 엄청난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 2004년 인구 50만명으로 진입하고 2008년 7월 1일 현재는 인구 45만 명이 인구가(두천구-시)로 개칭을 끝낸 대도시 행정체제를 구축했다.

제1 산업단지 분양 완료(202만 646억 원)와 제5 산업단지 청문(151만 2,847억 원), 제3 산업단지 역광 추진 등 지속적인 선진동력 창출과 기업에의 준거 환경 유지를 이룬 바탕으로 2002~2008년 155,400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발전된 여건, 분량과 품종은 높은 수준의 추가인증을 위해 2004년부터 전국 최초

제3신단 확장, 5신단·풍세신단 조성
첨단지식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총력

‘흥타령축제’ 전국최고 축제로 육성
교육·문화·복지 도시경쟁력 강화

국제비즈니스파크·경진철 지속추진
8년간 1154개 기업 유치 등 자부심

로 아파도 불면가 가이! 라인을 노면. 사캬했으며,
2006년 경신(庚申)으로부터 사민(辛未)을 변경도 했다.

국방부 주장과 Ssr 구간의 재(再)산입(再輸入)으로 개발(開發)되고 사대(死對)부(部) 유승재, 지능원 고문(顧問)장(將) ITS 및 빅스정보 시스템(BIS), 본관(本館)에서 노위(衛星) 중계(中繼)를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립 청년박물관(유형 7345선)을 개관하고 도서관 진·출입제하에 있는 야우대·공촌·도정도서관 신축과 12곳의 작은 도서관을 신지했다.

전남시정 발전위원 위촉 남산중학시점에 전국 최대



성무용 시장은 누구?

▲생존 : 1943년 작위
▲경력 : 용진고, 연세대(역사), 단국대(사학)
▲경력 : 1세대 국회의원, 국회 역경위원, 국정세무위원, 건원협공공연수소 소장, 대법원법정공공소 역사관, 한나라당 청년감치국난 위원장, 민주공화당 중앙상

▲지난 4년을 돌아볼 때 보면 보람과 성과, 맺은 자원은 결코 모든 것에 소진되지는 않았다.

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A1)와 접촉으로, 몇몇 집단만이 이 병원균에 대한 높은 저항성을 통해 높은 보호를 구할 수 있는 데 대한 자연의 작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나 다른 것들 대부분에 참여하고 집단 내의 주요의 대다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염된 이들이 일반적으로 주된 집단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감염된 경우에서 다른 집단들로부터 확산하면서 집단 내의 주된 집단으로 왔으며, 수컷을 통한 전염이 성체의 부모로 옮겨가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특히, 시카고의 경우에서 집단들 간의 대립적 행동과 투자행위 등으로, 비주된 집단으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전염을 통해 전염되는데, 집단 내의 대립적 행동이 이 시기에 이러한 행위를 일으킨다. 이러한 이유들

▲자금 원형: 질병선기에 다시 고민할 생각이다. 하지만, 예비프로 행복은 시기인 줄 더 봐야 한다. 잘 버티면 완연자업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에 소용될 수

있고 자칫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실
제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 되면, 그때 애타도록 능
력 있고 신기전에 뛰어날 것이다.

-공천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차당국을 정당 공천에 대해서는 우선 부정적으

임종이다. 국외의원 시절부터 좁은 감은 입장이었다. 실제 시체단체의 상당 공헌은 큰 의미가 없다. 신기장은 박람이나 정치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시체단체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본다.

▲충남지사는 조기 회노리가 중요하다. 여론과 전
지사 사퇴 후 법대인 유적임이 없는 것 같지만, 중앙정
부는 충남지사를 사법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보고

이와 함께 우리에서 나오려는 움직임은 한 걸음 더
나. 당대 개혁 운동 같은 것도 있지만, 정당 정파의 연
속성 이런 것이다. 권력을 조화롭게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우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기회의 산 줄기
될 것이다. 우해는 벌써 4기 시절을 마무리하고, 5기
7호만 주선해 왔던 연안에서 온전히 일어 났을뿐 가
마진 4호를 2호로 2년 전을 앞둔 채로 5호를 4호로 앞

다. 특히 뱀피 해독 및 복수의 원인 혼란에 대해 남겨놓은 단아 없이는 바깥에 융통하게 더 큰 일을 이룬다. 연마의 '여호지인(1930-99)'처럼, 신안도, 그 동안 이...

· **대답=김형중 부국장**
(302)=통제처 35.14

$\frac{7}{10} = \frac{\square}{\square}$

310

의 결 번 호	2010지선27(자심)
언 론 사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대표이사 임 재 울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0년 2월 4일자 17면 『용인시의회 소통과 희망으로 주민 곁에 ‘한발 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용인시의회 의원) 후보 예정자인 현 시의회 위원장의 활동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 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시의회 기능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중략)

소통과 희망으로 주민 곁에 ‘한발 더...’

▶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 시의회는 9차례의 임시회와 2차례의 정례회 등 총 81일의 회기를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시의회는 시정질문을 비롯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성과보고, 2010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시 살림의 구성구석을 진단하고 살폈다. 이중 단연 으뜸은 행정사무감사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박3일간 일정으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시의원들은 워크숍을 통해 제5대 시의원으로서 기억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예산인 심사를 실무교육, 각 상임위별 행감 자료분석 시간 등을 가졌다.

당시 심노진 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85만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기 위한 워크숍”이라며 “마지막 감사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5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시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송곳 질의들을 거침없이 쏟아내 ‘견제’란

인터뷰 심노진 용인시의회 의장

“민생 법안 등 194건 처리... 5대 의회 ‘유종의 미’ 거둘 것”

심노진 용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어른’이다. 4선 의원이란 다선이유도 있었으나 제5대 시의회호를 잘 순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후배, 동료 의원들을 끌어안는 특유의 후덕함을 지닌 어른 심노진 의장을 만나봤다.

심노진 의장은 지난 한 해 최고의 성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층 다가선 의회”라고 자신했다. 지난해 2월 제 13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81일간 11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원했고 처리된 안건만도 예산안 15건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99건, 건의 및 결의안 9건 등 무려 194건이다.

단순히 숫자가 아닌 심 의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5대 후반기 시의회는 입법기능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시의원들이 직접 의원 발의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라는 생각

이 다시 한번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심 의장이 이끈 시의회는 대기업 대형판매 시설인 일명 SSM의 입지 규제를 막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해 서민경제 보호에도 힘썼다.

이런 시의회지만 아픔도 있었다.

지난 여름 심 의장을 포함한 시의회는 폭우피해로 행방불명된 뒤 결국 숨진채로 발견된, 어린 생명을 잃은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것이다.

심 의장은 “실종 당시 살아있기만을 바랐는데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부모님에게 돌아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며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회상했다.

남은 제5대 의회의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의정 활동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심 의장의 발언에 유종의 미가 기대된다.

[illegible]

의 결 번 호	2010지선28(자심)
언 론 사	(주)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대표이사 임 재 울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0년 2월 9일자 12면 『안덕수 강화군수 조화로운 발전 ‘강화 2025 프로젝트’ 시동』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화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활동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안덕수 강화군수

안덕수 강화군수는 강화도에 신성장 동력을 심어 세계속의 강화를 만들겠다는 새해 장기발전정책을 내놓았다.

즉 개발과 보존을 엄격히 구분해 자연환경도 지킨다는 것이다.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강화도의 자랑인 깨끗한 환경도 보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안 군수의 복안이다.

2010년 새해에는 2025년 상주인구 20만명과 미래를 여는 녹색·문화·휴양도시건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는 안덕수 군수로부터 2010년도 설계와 미래비전을 돌아보았다.

조화로운 발전

‘강화 2025프로젝트’ 시동

- 2025 미래비전에 걸 맞는 인프라 확충의 계획은

▶ 우선, 강화방면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서구검단~온수간 국지도 84호선 조기 건설에 힘쓰는

한편, 영종~강화간 교량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협력해 나갈 것이다.

교동연륙교, 삼산연륙교, 복단 해안순환도로, 국도 우회도로 건설 등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조력발전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정상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을 세우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적인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은

▶ 역사박물관은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에 완공하고 강화군의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강화군에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에 고려문화유적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제4차 강화문화원 정비사업은 강화읍 재창조 사업과 연계하고 또한, 온천, 골프장, 스키장 등 다양한 레저 휴양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즐기며 쉬어가는 체류형 휴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 또 산과 길, 마을마다 계절별로 특화된 꽃을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강화군으로 다듬고 도보여행길인 나들길
은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생태 탐방로로 조성하
고 활성화해 강화군을 여유있는 느린 여행지로 만
들 각오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 사계절 오감이 즐거운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축제로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강화발전의 전기로 삼아 관광시설 확충과 함께 태권도, BMX, 유수 등이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강화경기장 건설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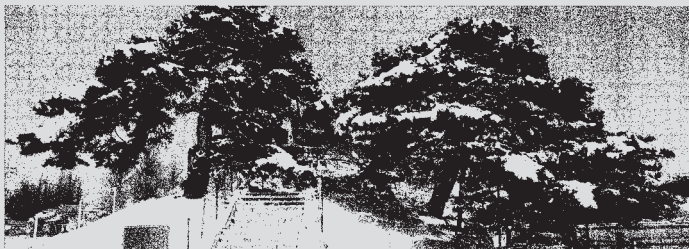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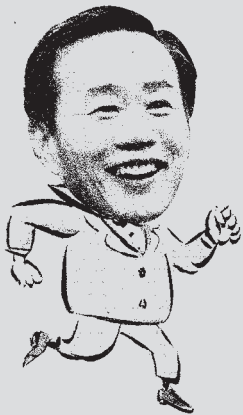
민선4기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결

과 공무원들의 업무처리행태는 획기적으로 좋아졌고 민원처리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지만 아직도 군민들을 감동시키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 안 군수는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과 친절·신속·정확을 목표로 군정을 주식회사와 같이 운영, 독점적이 아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어 바르고 꾸준한 민원행정 개선을 통해 강화군이 전국에서 행정서비스 가장 높은 자치단체, 업무처리를 가장 잘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무한 감동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덕수 강화군수

94학수 김희태 교수는 김희태에 선정장 동복을 삼어 세곡의 장복을 만들었다는 해례 장기팔천창고를 내놓았다.
 95 해례도 보편을 일컬어 구한사 시한을 줄지킨다는 것이다.
 해례를 통해 지역적응도 충분히 시가하고 김희태의 차이를 폭로한 원형도 도는는 두 차례 도씨를 모두 삼았다든 것은 군수의 욕망이다.
 2014년 해례에는 2025년 상운은 2014왕과 미래를 여는 복·은·문·명·성·도·지·진·질·구·희·희·태가 나는 만년의 해로 관원들은 연덕수공수공무사 2015년 5월의 미비한장을 만들어갔다.



조화로운 발전 '강화 2025프로젝트' 시동

-2025 미래비전에 걸 맞는 인프라 확충의 계획은

▶ 구인, 강해방면의 고통만 학생을 위해 서구 점나·온수간·자치회 340여 개기 신생에 힘쓰는 한편, 영흥·경화·과천·관악권이 개척되다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갔었다.

교육연목표, 산학연목표, 적산·대입준비목표, 학교 우회도로 건설 등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이 차례차례 추진되고 있었으며 대우, 조흥은행, 서울우유, 차관차유업 등 지주·구·관 지역발전점 추진시키고 용산·대구에 대한 대규모 도로·주택·정장·추진외도 등 발전했다.

이러한 추진으로 서울권의 추진자격을 얻어 지역개발을 추진

가했다. 또, 산과 강, 마을마다 계절별로 바뀌는 모습을 삼고
가꾸어 아름다운 강변촌으로 만들고 노포야행길엔 나들길
은 아미가 있는 역사문화재와 박물관으로 조성하고 한성화
관, 강아지마을, 어린이노래관, 야생동물관, 민속관, 자연관

이 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 사회적 열광이 옮겨온 명품관광자원으로 관광을 확대토록도 발전시켜 나갈계획이며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은 강화발전의 전기도. 삼아 관광시설 확충과 함께 태권도, BJK, 무술 등이 개최되며, 아시아게임 강화경기장 건설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또 중앙아도산 전역도 본격 추진하는 바위 강아쑈이해

싸이다.

이어 농수산청과 대검찰청 등의 제고에 행정직을 집중시켜
오던 소속을 분대시켜 나갈 예정이라 하여 곧 대개마일된
지역 보살핌과 인제에 도시민들에게 정감어린 마을의 교향
을 심어주는 도·농 교류 확대와 제영성간과 성태를 세출하
는 등 율령과 활력이 넘치는 풍광을 이루어내도록 육성에 나
기겠다.

▶강화군은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3% 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지의 특성에 맞게 노인복지 증진을 군정의 우선 시책으로 두고 지원시책 확대와 다층적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주민보호에 한 지의 소용환이 있도록 권하여 철저하게 하겠다

또,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도를 높이고 아토피,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복지회관 확충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래나갈 예정이다.

보육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자선도 확대에 1급 병창이
며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사회를 만들기 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활동을 펼쳐나
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전세계인의 관심인 신종플루
와 달리파라 등 도약활동 전염병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작중하여 건강을
관리에 가졌다.

변화(Change) 능력에 따라 자국의 노후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고령화 속도
 조절의 일부가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2000년 초에 도입하고 민영화한 노인
 2개년 이상 복귀제지만 아직도 노인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서
 외국에 갈 때와 같은데, 외국에서는 외국에서 노년층이 노년층으로 바뀌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노년층을 노년층으로 바꾸는 것은 노년층이
 되고 같이 운영, 독립적인 아닌 누구에게나 친화적이고 고령에
 대한 필요 있는 경험으로 남아서 지니고 있는 분야에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인들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전
 국에서 생활서비스가 가장 높은,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노인들은 노인들보다 노인 생활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원: 1995년 10월 10일

교동·삼산연륙교, 영종·강화교량 건설 등 인프라 확충 빅차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체류형 여행지'로

일의 피해도 얻지 않도록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을 세우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상·하견해나갈 계획이다.

▶ 역사박물관은 거취내고 볼해 상반기에 완공하고 강화군의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한글문화에 유서하는 데 특별한 기운에 내장 배경이다.
아예 고려문화유적 정비용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제4차 강
화문화권 정비사업은 강하늘 재창조 사업과 연계하고 또
한, 한천, 삼포지, 스기정 등 미양과 레저 휴양시설을 조성
없이 추진해 승가과 승어기-계류용 휴양지로 만들어 나

활제역공원과 동네체육시설도 자칫히 추진해 군민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할 각오다.

▶참, 고구마, 순무, 양파, 호도, 배, 새우젓, 갯벌장어 등
건강농산물 신제품 개발을 위한 가격의 고급화에도 성공으로

정확하기 위해 기존대세를 추천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한 농수산물을 공동브랜드 '강화마리'를 사
때 시 지켜야 할 기준과 수확 후 관리방안 등 세부 운영기준
을 마련해 금년도 제때 농산물 부피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의 신뢰도 제고 및 농가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한다는 제

편집-김수진기자 <tsj@ourstboc.com>

의 결 번 호	2010지선36(자심)
언 론 사	(주)시민일보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충호빌딩 601호 대표이사 최 정 호
심의대상기사	시민일보 2010년 3월 2일자 20면 『청년인턴 참여자들 정규직 전환 ‘총대맷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구로구청장) 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여러 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청년인턴 참여자들 정규직 전환 ‘총대맷다’

◇ 95%가 재취업했다는 구로의 특별한 청년인턴제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사진)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한파가 몰아닥치자 경비절감과 직원들의 기부로 총 10억원의 재원을 확보, 청년인턴 사업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청년인턴의 정사원 전환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76명 중 95%에 달하는 72명이 정사원으로 채용이 확정됐다.

이러한 여세를 이어 구는 올해 청년인턴 참여자들 모두가 정사원으로 채용되는 청년인턴 100% 정사원화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정사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 기획, HR분야의 업종을 우선 선정하며, 지난해 청년인턴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회사에 우선 채용권도 부여키로 했다.

청년인턴의 취업알선은 구로구에 있는 실업 Zero센터가 도맡아한다.

센터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체를 먼저 모집한 후 구가 선발한 청년인턴 중에서 업체는 회사의 선발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필요한 인턴을 선발하게 된다.

모집된 업체는 모두 직원이 필요한 업체로, 업체로서는 1년간 인턴에게 투입되는 인력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구청과 업체가 서로 윈윈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구는 청년인턴의 재취업을 위해 당초부터 재취업을 전제로 인턴이 필요한 업체를 모집하며, 인턴으로 관리 중에도 근무성적을 관리할 뿐 아니라 우수한 직원은 재고용할 것을 권유한다.

아울러 인턴을 정사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기획·HR분야의 업종을 우선 선정하고, 인턴 근무자 소양교육과 업무능력향상 전문교육훈련도 실시한다.

◇ 지난해 100명에 이어 올해 200명 채용

구로구는 지난해 각종 행사경비를 줄이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은 10억원으로 청년인턴 100명을 운영해 대다수 재취업이란 성과를 올린데 이어 올해 100명을 전격 추가해 총 200명의 청년인턴 사업을 시행한다.(중략)

구는 이러한 점들을 인정 받아 지난해 전국소기업소상공인 대회에서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대

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이번 구로구의 수상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점과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는 ▲전국 유일 소상공인 지원 훈련 제정 ▲전국최초 '소상공인 One-stop지원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소상공인 '최저금리 경영안정자금' 융자 ▲여성 신규 창업 소상공인 특별신용 보

증 ▲소기업 소상공인 '무료구인지원반' 운영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양대웅 구청장은 '인턴으로 끝나는 인턴제가 아니라 취업까지 이어지는 인턴제라는데 의미가 있다.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적성에 맞춰 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뽑도록 했다. 이 인턴제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청년실업이 다소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청년인턴 참여자들 정규직 전환 '총대땀다'

이제까지 14개 업체에서는 구로구의 특별한 청년인턴제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실시한 청년인턴제에 참가한 구로구 청년인턴 100여명 중 1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취업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구로구의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인턴제 실시와 함께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각종 행사비 줄여 20억 재원확보
관내 기업서 올해 총 200명 채용
업무능력 향상 전문교육도 실시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를 실시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는 구로구 청년인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37(자심)
언 론 사	(주)아시아경제신문사 서울 중구 초동 42 아시아미디어타워 10, 11층 대표이사 권 대 우
심의대상기사	아시아경제 2010년 2월 24일자 8면 『경제자유구역 탄력 ‘부자충북’ 만들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청북도지사) 후보예정자인 현 도 지사의 인터뷰 기사에서 활동성과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약력, 인물사진과 함 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경제자유구역 탄력 ‘부자충북’ 만들겠다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신중히 생각 중이다. 곧 뜻을 밝히겠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6.2지방 선거를 앞둔 때라 출마여부를 묻자 ‘나갈 것’ 입을 애둘러 내비쳤다. 그리고 말머리를 경제충북, 잘 먹고 잘 사는 충북 만들기 쪽으로 틀었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충북지역 산업지도를 확 바꾸겠다. 40~50년 뒤 먹고 살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를 끌어들여 부자 충북이 되도록 하겠다”

정지사는 임기가 끝나가지만 개의치 않고 경제 특별도 충북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고 했다. 투자유치 확대, 경제 인프라 확충,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녹색성장 청정충북(G&C: Green growth & Clean) 만들기도 적극적이다. 녹색기술과 그린에너지 개발 산업을 선점, 충북만의 특색 있는 신성장엔진으로 빨리 정착시켜 먹거리를 만든다는 얘기다. 정 지사를 충북도 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 6월 2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도지사 출마계획은.

▲ 2012년 자유민주주의세력의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라도 ‘6·2지방선거’는 중요하다. 특히 충청권 선거결과는 더욱 그렇다. ‘세종시 수정안’ 처리문제, 민심의 향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 머잖아 알게 될 것이다.(중략)

오송·오창지역 인프라 탄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유리

정우택 도지사는 최근 충북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충북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이 그것이다. 이 대통령이 “오송·오창지역은 준비가 돼있고 인프라도 갖춰졌으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힘을 얻었다.

정 지사는 FEZ지정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들어온 기업이 많고 올 기업도 줄을 서 있다. 특히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추진계획 마련, 투자유치 협약으로 국내 어느 특구보다 앞설 것이다. 정부가 성과도 없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남발하지만 이곳은 다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38(자심)
언 론 사	(주)우리일보 인천 연수구 연수2동 592 두손브릿지 3층 대표이사 유 장 수
심의대상기사	우리일보 2010년 2월 19일자 20면 『성동구, 교육인프라 구축에 ‘총력’』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성동구청장) 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배경과 방향,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조감도 및 인물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성동구, 교육인프라 구축에 ‘총력’

- 교육명문 성동프로젝트 가동
- 금호 옥수지역에 인문고 유치에도 온힘
- 200억 규모 학교지원사업도 활기

성동구는 서울의 중심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확충, 일반고 유치, 교육환경개선, 학교 공원화사업, 일자리 사업, 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배경과 방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은 성동구청장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편집자주-

성동구가 전개하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듣자면?

21세기 동북생활권의 신흥 부도심을 완성하게 될 더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건설 사업이 올해도

차질없이 진행 될 예정이다.

성동구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는 금호동 금호교차로 구조개선사업과 마들길 행당동-용답동 끊어진 구간을 잇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으며 응봉교 확장공사 또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마장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장지하차도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금년에 착공해 2년후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용비-행당중학교 간 도로개설, 두무개길 교차로 구조개선, 신금호역-금호2가 간 도로확장, 금호사거리-교통안전회관 간 도로확장 공사 등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다.

교통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동구 교통종합계획 기본용역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 교통규제시설물 개선,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TPEG 서비스 제공,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및 CCTV 추가 설치, 공영주차장 보수, 그린파킹 사업 추진, 부설주차장 개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상왕십리역, 옥수역 엘리베이터 설치, 무학현 대아파트-무학봉근린공원 진입로 설치공사와 장안교 정밀점검 용역, 장안배수구(용답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증설, 새말빗물펌프장 유수지공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39(자심)
언 론 사	(주)우리일보 인천 연수구 연수2동 592 두손브릿של 3층 대표이사 유 장 수
심의대상기사	우리일보 2010년 2월 26일자 20면 『‘꿈과 희망! 힘찬 미래!’ 준비하는 성북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성북구청장) 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와 향후 구체적인 구정활동 추진계획 등을 조감도 및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꿈과 희망! 힘찬 미래!’ 준비하는 성북구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올해를 2010년은 성북의 또 다른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로 삼아 ‘2010 성북비전’을 완성하고 ‘2020 성북비전’을 마련해 새로운 성북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올해 서민생활안정을 구정목표로 삼고 경제위기의 여파가 더욱 크게 미치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바람막이가 돼줄 복지 안전망을 더 넓고 든든하게 구축키로 했다.

서찬교 성북구청장이 구상하는 올해의 성북구정과 성북구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중략)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성북구는 구릉지역이 많고 또 대규모 지역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 확장이나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06년 7월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제가 서울시에 처음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결과, 분당선을 연장하는 장위지역 지하경전철 유치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이 밖에 우이-정릉-신설간 지하경전철사업도 지난 '08년 10월에 착공이 됐다.

지역의 교통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임기 중에 잇달아 결실을 맺게 된 것이 큰 보람으로 남는다.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1년여 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실을 본 동(洞) 통폐합도 기억에 남는다.

30개였던 동을 20개로 대폭 줄였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동의 개수를 줄였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복지공간으로 주민들에게 그 결실이 구체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한다.

동 통폐합의 마지막 과제까지 완수를 하는 것. 또 임기중에 ‘불량주택이 많은 낙후지역’이라는 성북구에 대한 고정관념이 ‘서울에서 개발이 가장 역동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새해 구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은?

생태도시 성북의 중심축이 될 성북천과 정릉천 복원사업은 올 상반기까지 모든 구간 공사를 마무

리 짓겠다.

이곳에는 건강걷기 코스도 조성돼 건강하천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것이다.

서경로, 한성대진입로, 성신여대진입로 확장공사
 사를 금년 중에 완료해 인근 교통문제 해소에 기여
 함은 물론,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문화 조성의
 계기로 삼겠다.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사업
도 적극 추진하겠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방안인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길음뉴타운에 건립중인 태양광 주택에 이어 성북구민회관 등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범 설치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 하겠다.

성북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온 건강도시사업은 기존의 금연, 절주, 건강마을가꾸기 등의 사업과 함께 건강걷기코스개발과 몸짱교실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건강향상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후략)

‘꿈의 희망! 힘찬 미래!’ 준비하는 성북구

서진교 장곡구항장은 올해를 2019년은 삼복의 또 다른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로 삼아 '2019 삼복미리'를 완성하고 '2023 삼복미리'를 마련해 새로운 삼복천년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봤었다.

삼복구는 올해 서민생활안정을 구상 목표로 삼고경제여건의 어려기 더욱 크게 이지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바깥망이겨 되돌려 복지 안정을 다 넣고 든든하게 추후 하고 있다.

서진교 장곡구항장은 구상하는 올해의 삼복구항은 삼복구의 바싹한 대해 들어왔다.

▲ 성북구 동 통학로의 길쭉, 어느 정도 가시
성도되?

중앙1동과 중앙2동의 동 통학에 따라
배치됐던 옛 중앙2동 주민센터 부지(중앙동
16-8에서) 1월 23일에 중앙동 주민청사 건
립을 위한 가동식을 가졌다.

홍합을 포획할 때는 너트망(크기 72cm에 지름 15cm, 지름 5cm, 총길이 2033mm) 4개의 원근 콘바이트 구조물로 구성되어, 홍합을 주면터에서 총 4방향 저서층과 브러시형의 알갱이 집합체 주면터(화물)에서, 콘바이트를 통해 대강망(50cm, 도넛망(4~5cm, 주면터)까지 들어간다.

또, 중화생물의 살인까지는 5층 보석관 257cm를 뚫을 수 있다.

중연물 복합정사 기술에는 김해공사의 60억 원의 투자에 비해 29억 원 등 모두 72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시비의 규모가 50% 적 투입된다.

원장은 2010년 8월로 계획하고 있다.
이미 6컷은 영우아들러자 아이즈아넷 월

44동 주민센터, 해운대 이만이드리조트 및 리모티드센터, 동소문동 주민센터, 석촌 신해리주민센터, 석촌2동 주민센터, 성북 지리지주민센터, 구미정보보호유망형 청소년 공방, 노원구신원리마을(산신)을 주민센터, 성북다문화법률지원회 및 성북구립 미술관, 성북2동 주민센터, 성북청년문화의 집 및 보문로를 통해 2개 주민센터, 4개 동사무소에 주민들을 맞고 있다.

▲ 임기종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성북구는 구공제역이 있고 또 대공로 지
 역개발이 예정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

그런데 저는 '95년 7월 만천사 출판과

통사, 제가 사출시에 치을 견고하고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협동한 결과, 본당선을
연장하는 정복지역 지하결정원 유치가 국토
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결정이 됐다. 이 밖에
유이-정릉-선릉은 지하결정철사업도 지
난 '08년 10월에 착공이 됐다.

지역의 교통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있기 전에 맞닿아 결실

▲ 41년만의 통일 하늘길 개편

인투의 반대는 부림으로 1본에 간의 끈질
기 노력 끝에 결실을 본 동태 공작화도 기
여에 이른다.

30개였던 동을 27개로 대폭 줄였는데, 어디서 어떻게 줄였는지 단순히 동을 개수를 줄였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복지공간으로 전환된 예가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많을 것 같아 생각한다.

● 동맹국의 마지막 보루까지 완수를 한 것. 또 입국 중에 ‘한반도’에 많은 낙후 지역이라는 전국에 대한 고령현령이 ‘서울에서 가까운 가장 역동적으로 바뀌는 곳’이라는 의미자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보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지탄소
생사연도 전국 추진하겠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방안인 에코마
러지 제도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속력으로 홍보하고, 김흥뉴타운에 건립중
태원원 주역에 이어 성북구민회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범 설치하는 등 신

성보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
온 건강도시사업은 기존의 금연, 절주, 건
나을가꾸기 등의 사업과 함께 건강검진코
가별과 복합교실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주민의 건강강화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2010 성북비전 완성, 각 분야 역동적 추진
“퍼블릭 서번트로직 문화 더욱 충실 할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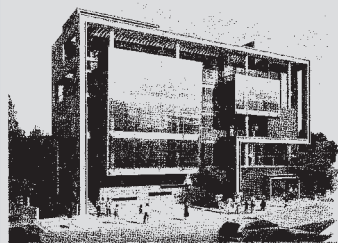
422

2010년은 새로 맞이하는 성년 60년의 첫
여이거 여저 새로운 60년을 향해 첫발을 내
디뎠다.

앞으로 주거와 교통, 교육, 복지,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할 우리
정부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길
바라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국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증을 보내 주신다면, 여러 개회들이 더욱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송준길 기자 jksang@woorilb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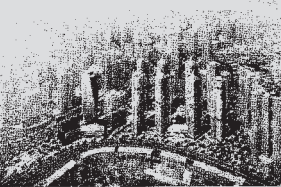
▲ 새해 구상에 약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은?
공태도시 성북의 중심축이 될 성북천과
정릉천 복원사업은 한 상반기까지 모든 구
상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이것에는 건강권이 보상으로 조성과 건강의
적응으로서만 만족할 수 없다.

서양은, 환경대질으로, 산소이산화물로
회전장을 돌리고, 공기 중의 원자로 인공 고온
적 회전에 의한 원자로를 통해, 원자로를
치는 자외선으로, 조명의 자외선 산출을

▲ 구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다
공직자로서도 공무원의 필요에 의해 고
여 있는 것이 아닌 교육의 필요에 의해 공
민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성북구는 주민생생, 복지증진, 일·생의 균형을 추구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창의역량 발휘를 위한 다양한 경영구조의 변화와 있으며, 2010년 새해에 드디어 성북구원을 위해 만 23대로 구성된 하트단위의 직원들이 출동할 예정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40(자심)
언 론 사	(주)인천일보 인천 중구 항동4가 중봉로 222 대표이사 박 민 서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0년 2월 25일자 12면 『집에서 의료·교육·민원업무 원스톱 서비스 지능형 홈네트워킹 세상 눈앞』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성남시의 사업추진 계획 등을 보도하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성남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를 인물사진 및 조감도와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집에서 의료·교육·민원업무 원스톱 서비스 지능형 홈네트워킹 세상 눈앞

(전략)

INTERVIEW 이대엽 시장

“2030년 기업매출 87조 달하는 도시 만들것”

한 시대를 풍미한 액션스타 영화배우, 3선 국회의원과 2선 시장으로 당선된 성공한 정치인, 성남을 판자촌에서 벤처기업인들의 보금자리로 바뀌 놓은 독심의 행정가 등 이대엽 성남시장(73)에게 따라 붙은 수식어는 너무 많다.

체력만큼은 젊은이들 못지 않다고 자부하는 이 시장은 나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다. 그래서일까? 하는 일마다 특유의 독심으로 밀어붙이기 일쑤다.

지방자치단체간에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행정 구역통합문제만 해도 그렇다. 서로 눈치만 보던 지

난해 8월초 이시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남, 광주, 하남시를 통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파장은 컸고 성남시를 따르는 자치단체가 이어졌다. 이시장의 돌발행동에 일부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개의치 않았다.

이시장은 “지난 1천년 동안 성남, 광주, 하남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울타리 속에서 생활해 온 데다 3개 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선 이상 통합시, 추진을 더 이상 미루면 안되겠다는 생각뿐이었죠”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통합시가 되면 면적은 665.8km²로 서울(605.3km²)보다 넓고 인구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만9천875명에 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가 될뿐더러 성남시 현안 문제중 가장 중요한 고도제한 문제와 도심재생사업, 분당리모델링 사업 등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한다.

여수동 신청사 호화논란도 마찬가지. 이 시장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이뤄낸 산물이라고 비판의 못매를 맞았지만 그가 아니었으면 신청사 건립은 아직도 요원했을 것이란 평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대 시장들에 의해 추진된 청사 이전작업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하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지지부진한 채 표류되고 있지만 시민편의 증진과 성남시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 봐야 한다며 현청사를 완공시켰다.

이 시장은 “성남시 옛청은 지난 1983년도에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지어져 턱없이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인해 15개과 320명의 공무원이 청사 밖 5개소에 분산돼 대민업무를 봐왔다”며, “담당없는 성남시청을 지어 시민들에게 선사하겠다는 일념하나로 시작해 완공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뗀 뒤 할 말은 있지만 평가는 나중에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마산이 고향인 그는 성남 이주 1세대로 이곳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을 했고 민선시장도 2번이나

하고 있다. 올해 성남시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다. 이대엽 시장은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30년 후 성남시를 최고의 IT 도시로 만드는 장기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성남시는 2030년이면 전체 기업 매출이 87조 원에 달하는 기업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 IT·SoC와 차세대 이동통신 및 의료, 바이오 등 환경친화 첨단 산업을 3개 선정하고 집중지원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성남시를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첨단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이대엽 성남시장의 생각이다.

“성남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시란 이미지를 넘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U-시티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집에서 의료·교육·민원업무 원스톱 서비스

지능형 홈네트워킹 세상 눈앞



사업박차

성남시가 세계 미래형 도시인 유니버시티스(UniversiCity) 도시로 거듭난다. 올해 성남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최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한 U-시티 구축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U-시티 성남 프로젝트에 의해 불철저한 시 사업에는 국·도비 각각 179억원, 시비 405억원, 만지 7.8억원 등 모두 1천483억원이 투입된다. U-시티는 첨단 IT공공의 유니버시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해 윈스를 형성서비스, 사회통합 교육, 탐방, 행사서비스, 주거공간의 통합교육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1세대 미래형 도시이다.

지가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행정정보포털, 행정
연인 통합시스템, IT와 공공기관체제, IT-형성
오피스, 국민통합센터, 분당복지 네트워크, J-
에프, J-케어(care), J-로우, J-용신 연로회,
국가정보체계, J-로우, J-로우 등 12개에 달한다.

경제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U-케에 서브소스
경우 어린이에게 동적인 화면서를 확보해 11주
소도과 경찰서에서 항상 어린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노인, 장애인 등에게 자동검색 버튼을 보충
하여 이같이 불편한 지를 경감시켜 완쾌할 수
있다. 그리고 서브소스 감지장치나 원격제어용 제
원인 현행 교육서비스 체계가 모뎀이나 TV
(디지털 TV)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로
바뀌게 된다.

서는 지역 특성화 의견을 반영해 수평, 중형

민원통합센터·U-교육
국내 최초 지역 정보화

IPTV 확산센터 연계

는 복지, 안전, 지역경제 정보서비스에, 분당구, 군포, 오송, 교육 정보서비스에 각각 중점을 두고 전개하고 있다.

사: 이와 별도로 판교신도시 공생지원자인 한국방송공사와 함께 판교신도시를 3가지 테마로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시는 또 IT-시터와 핵심시설로 삼남, 판교 IT-

기반 모델 탄생 기대감

양한 공공서비스 제공도

어릴때도 전국 최초 급료별 IPTV 확산센터가 본당구 정자동 컨스텔에서 문을 열었다.

시는 급료별 IPTV 확산센터에서 u-City 사업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노인, 의료, 농림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에 ICTV 콘텐츠 개발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특히 정보 과 학화 콘텐츠 개발에 학생들은 리얼리티와 가상현실인 양면의 화면이 가지 않아서 피로할 판을 수 있도록 해 주었고,

● ● ● ● ● ● ● ●

교육은 ITV 시스템에서는 안으로 보진, 의료, 학습 등의 공공장소 콘텐츠를 제작, 개발 운영에 나가 성장기반의 관리를 했으며 사회공익도 또한 줄여준 것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구민대학: kstnet@naver.co.kr *신촌대 *동국대



성남시청 전경

VIEW
이대엽 시장

“2030년 기업매출 87조 달하는 도시 만들것”

[illegible][illegible][illegible]

의 결 번 호	2010지선41(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전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47 전주일보빌딩 7층 대표이사 임 용 택
심의대상기사	전주일보 2010년 2월 19일자 16면 『미래 준비하는 희망도시 향해 힘찬 ‘날개짓’』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완주군의 향후 군정활동 추진계획 등을 보도하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완주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인터뷰를 여러 컷의 인물사진 및 활동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미래 준비하는 희망도시 향해 힘찬 ‘날개짓’

농촌발전·주민복지 증진 중점...

핵심사업 실현 주력

완주군은 2010년에는 신청사, 테크노밸리 조성, 만경강 에코밸리 사업, 고산지역 토지개발사업 등 민선4기 역점사업의 성과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통합 브랜드 개발, 재정력 확충 등 미래 100년 ‘제2의 도약과 비상’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농촌 약속 프로젝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CB) 등을 통해 농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해 민선4기 동안 추진돼온 대단위 핵심사업과 군민소득사업 실현, 주민 곁에서 함께 하는 현장행정, 예산 5,000억원 시대 실현 등을 통해 완주군 미래 100년의 확고한 성장동력과 희망도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제2의 도약과 비상’을 준비하는 완주군의 2010년 계획을 점검해본다. (중략)

▲ 지역경제 활성화로 잘사는 고장 육성

민선4기 출범 이후 완주군은 130여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완주군은 올해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더불어 완주 테크노밸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고온 플라스마 응용연구센터 등을 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산림서비스 등을 통해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농업농촌 약속 프로젝트와 로컬푸드 추진, 명품 거점마을 육성(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파워빌리지 사업, 선택리지 사업), 대승한지 마을 조성, 한우 테마파크 등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독특하고 경쟁력을 겸비한 향토자원(봉동생강, 이서 물고기, 소양 철쭉 및 한지)을 육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농식품 생산을 위해 당조고추 양산 및 대한민국 술 테마파크 건립, 로컬푸드 추진 등에 나설 방침이다.

▲ 행복을 안겨주는 선진 복지기반 확충

완주군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복지행정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선진복지행

정을 자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완주군은 올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우선 노력하는 한편 여성복지와 능력개발,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이주여성과 결혼 아동보호 등에 힘을 쏟았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여가생활을 위해 장수수당, 효도수당,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떡 가공공장 등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 추진,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가 보급 등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2010년을 맞아 완주군은 무궁화 테마식물원, 다목적 캠핑장, 수변생태공원, 생태문화 탐방로, 자전거 도로 등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녹색생장의 비전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신청사 내 완주군립 중앙도서관 건립, 코아루 아파트 작은 도서관 등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전국산악자전거(MTB) 대회 개최, X-게임 레저스포츠파크 조성 등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체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미래 준비하는 희망도시 향해 힘찬 '날갯짓'

농촌발전·주민복지 증진 중점... 핵심사업 실행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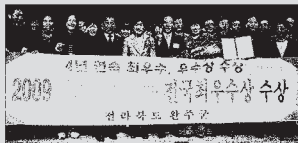
임정업 군수

더 큰 도전과 꿈
재도약 전기 마련 집중

임정열 군수는 "물론은 민선기 4년 차 추진비가 불과 시정도의 매우 작은 금액인 추진예산만 천원인 데다 우리들은 새로운 세대로서 해마다 추진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동양구 '시'라고 강조한 것, '구'라는 어휘없는 관공체 형조를 가져지 않은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협업을 더 미연하고, 농, 그리고 제도와외의 정기를 모으고자 해 집중함으로써 미래 희망도시 원주 건설에 꼭 필요한 밑거름으로 더가야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농업농촌 약육 포로제도의 모헌루드 추진, 명품 거름마을 육성(지어공 동계광정화사업, 파워발리지 사업, 신타리지 사업), 대습단지마을 조성, 한우 테마파크 등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만들어 질 계획이다.



▲ 주민민족을 위한 자치능력 향상

원주군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지역
창사와 평정다운 조상을 차림없이 주
연한 민선4기 공약사업(40개)을 100%
경여이다. 또한 지난해 역사상 처음으로
경연 예산 5,000여원을 가바와 100%
장을 준비한 본실한 재정력을 확충하고
신선장동여민 민경강 르네상스 프로
추진한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주차, 주민자치센터 등 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폐식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산에 관목, 소나무, 휴양, 주거가 하나 된 복합적인 관광휴양도시(고산지역 복지개발사업)의 구이 한가평면에는 풍광 조성만으로 친절경 친자연도시 기업을 따른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2차(97) 및 농어촌도로(97) 국·도정공사로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이어서 상수도 개발사업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전한 먹는 물 공급하는 것도 물론 주목해야 할 분야다.

▲ 지역경제 활성화로 접사는 고정 육성

민선4기 출범 이후 원주군은 130여개와 가업을 유치했다.

원주군은 물론 지속적인 가업유치의 더불어 원주 테크노밸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고온 플라스마 응용연구센터 등을 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고있다.

또한 **효명근로 프로젝트** 사업, 신원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주려한다.

2014년에는 신창사, 테크노밸리 조성, 의 사업, 고산지역 토지개발사업 등 업의 성과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처 제고 및 통합 브랜드 개발, 재 미래 100년 '제2의 도약과 비상'을 다. 아울러 농업농촌 혁신 프로젝트, 신화사약(CB) 등을 통해 농촌발전과 계도 역할을 두 방향이다.

자연해 민생하기 동안 추진해온 대안위 핵심사업과 군민소득사업 실현. 주민 권에서 함께 하는 정책행정. 예산 5,000억원 시대 실현 등을 통해 원주군 미래 100년의 확고한 성장동력과 희망도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5대 중점과제장 중심으로 '2020의 도약과 비전'을 준비하는 완주군은 2010년 계획을 점검해본다.

/판정지

농업농촌 약육 프로젝트와 로컬푸드
망골 거점마을 육성(지역공동체환경
과외관리지 사업, 신태리지 사업),
마을 조성, 양우 테마파크 등을 통해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다.

또한 북북하고 경쟁력을 겸비한 (농물 생강, 이서 할고기, 소양 철쭉)을 육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농산물 위해 당도고추 양산 및 대한민국 수출 건립, 로컬푸드 추진 등에 나선다.

▲ 행복을 인거주는 선진 복지기반 확충

원주군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정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진척자행정을 자임하고 있다.

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하지 않
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회안정당 확충에 최우선 노력하는 한
복지와 능력개발, 사회참여를 증진하
여선과 견속 아동보호 등에 힘을 받

더불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
생활을 위해 장수수당, 효도수당, 양

후진, 중진, 선진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선진국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아졌다.

▲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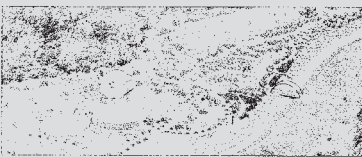
2010년을 맞아 원주군은 부곡화 터
원, 다목적 댐장, 수변생태공원, 생
담방로, 자전거 도로 등 생태관광 인

북지향
를 선
악계중
으로 해

미술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화산 생활체육공민회 조성, 전라
자전거(MTB) 대회 개최, X-게임 경기,
파크 조성 등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
화를 가꿔올 조성하는데도 박지우 가락
다.

/원주=이은영

/완주=이문생



무궁화 식물원 조감도



원주 신업단지

의 결 번 호	2010지선42(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전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47 전주일보빌딩 7층 대표이사 임 용 택
심의대상기사	전주일보 2010년 2월 24일자 16면 『새만금 중심 관광도시 ‘부안시대’ 개척』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부안군의 군정활동 성과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보도 하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안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인터뷰를 여러 컷의 인물사진 및 조감도와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새만금 중심 관광도시 ‘부안시대’ 개척

잘사는 부안 건설 최선

김호수 부안군수는 주민건의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을 직접 만나 면밀히 검토 지시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실과소·읍면장과 각 담당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보고회를 갖는 등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백호랑이의 해를 맞아 부안군은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건설”을 위한 5개 분야에 중점전략을 수립하고 야심 찬 발걸음을 디어나가고 있다.

더욱이 군은 새만금 시대 관광 중심도시로 부자 부안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군민과 함께 위대한 부안건설, ▲고부가가치 선진 농업 육성으로 잘사는 농어촌 구현, ▲새만금 개통 천만관광객 유치에 위한 문화관광 기반 확충, ▲군

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복지행정.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자연친화형 도시기반 구축을 목표로 온 정성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군은 2010년 역시 군민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군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47회 부안군민의 날 및 새 청사준공기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하나 된 군민의 마음과 부안 군정이 동반자가 되어 새만금전시를 확대 신축, 새만금 게이트웨이 개발, 국도 30호선 도로 확포장, 새만금 국립 간척사 박물관 건립 등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위대한 부안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중략)

#새만금 개통 친환경 문화관광 기반 확충

군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대회 행사를 개최, 새만금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레저관광, 워킹투어, 테마별 관광기반 구축하려고 격포항 요트계류장 조성, 새만금 전시관 주변 관광홍보 전시관 주변을 비롯하여 전북농협 새만금 수련원, 모항 관광지 내 가족호텔 건립 등 천만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관광을 위한 대형숙박시설 유치에도 전력을 새만금시대 돈버는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산·돌·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으로 보존, 쾌적한 환경을 도시숲 조성사업과 미래 산림 가꾸기 사업, 철새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불방지사업 등을 통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분노 및 축산폐수 처리장 민간 위탁비 지원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할 방침이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복지행정

군은 타시군보다 더욱 앞서 지난달 11일 주민
면을 시작으로 지난 3일 변산면까지 읍면 연초방
문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
민선시대에 찾아 볼 수 없는 “민생경제와, 지방재
정 조기집행”등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어 서민생
활 안정에 주력을 하였으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
생한 삶의 목소리를 청취, 일선 현장행정에서 다양
한 264여 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 군민생활과 밀
접한 내용과 주민소득증대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
의사항으로 건설투자 132건, 사회복지 80건, 농
수축 13건, 지역경제 15건 환경녹지 11건, 일반행
정 8건, 문화관광 5건 순이었다. (후략)

새만금 중심 관광도시 '부안시대' 개척

군민 의견수렴 생활안정대책 추진... 선진농업으로 부자 농어촌 구현



김호수 부안군수

잡사는 부안 건설 최선

김종우 부위원장은 "국민의 삶에 대해 충
경 정신을 함양하고, 여러 분야들을 직접 만나
연락해 검토·자문하고, 원천에 직접 찾길 수 있도
운 하였으며, 지난 1978부터 1981까지 이렇간
이 걸쳐 실시된 청소년·성인장과 간담회
의 형태로, 모여 민생현황과 경제발전추진
위반 업무보고회와 같은 부 일과는 국민 위대
로써가 아니라 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있다."

박로영씨의 허풍 및 자인들은 전자는 권고, 후자는 부양권
상'을 위한 5개 조항에 동성가족을 수립하고 이를 한 걸음을 더
더 나아가 있다.

더불어 군은 새마을 시대 광복 정신으로 부하 부양을 만민기
와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군민과 함께 의회제 부양안정, ▲고
부가가치 선진 농업 육성으로 장사친 농촌구현, ▲새마을금
회 전환사업의 승리와 여파 문화관광 기반 확충, ▲군민 모두가
영광하고 편익을 복지증진, ▲농업·산림·수산·해양 자원인쇄

앞서 언급한 2008년 역시 군인정예를 확보할 때로서 선전하고 군인정예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4회 부안군인의 날 및 제 천사순종가비 건립을 행사로 개최하고 하니 군인들의 애환과 부안 군인의 용기와 용이 좌강군정신에 의해 한, 선, 생강, 개마고원(개마, 개골, 개도) 호화선으로 의조라, 재민군 국립 건축사 박물관 건설 등 사업군인과 군인반 반안사업에 적극하고 확대한 부안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

³⁾ 새마을개뿔, 친화경, 문화관광 기반 확충[illegible]

한·월·미·日和 노획이 이루어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전포의 관광자원을 최대한으로 보존, 쾌적한 환경을 도시로 조성하기와 미래 한·일 기금기 사업 확대를 위한 생태도시양성 관리사업, 산악자원의 효율을 위한 수목관리사업 등을 통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악환경을 조성하고, 쾌거를 전제치 않을 것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향상, 보도 및 국산폐수 처리

장 민간 위탁비 지원을 통해 환경기초사업 확충
을 바친다.

3.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복지행정

군은 파시노브와 대륙 앞사 자난단 11만 두산(두산) 시하오의 자난 30이 명사(명사) 올림 연호(연호)를 창 세고 난반(난반)에 대한 의견(의견)에 대한 조, 임신(임신) 에 찾아 볼 수 있는 민생(민생), 지방(지방) 조지(조지) 등 공제(공제)의 중점(중점) 되어 서한(서한) 안양(안양) 주체(주체) 하였으며 전경(전경)은 주전(주전)에 생환(생환) 함의 소수(소수)를 성취(성취), 임신(임신)전에서 다방(다방) 260이 전(전) 군(군) 의회(의회) 수(수), 군(군)의회(의회) 및 남(남) 대륙(대륙) 조지(조지)의 회(회) 판관(판관)과 주의(주의) 사무(사무)로 결산(결산) 1927, 사하(사하) 80년, 농(농) 수속(수속) 13년, 지역(지역) 15년 판관(판관) 11년, 일반(일반) 3년, 문화(문화) 5년 순으로 된

/투입=아육수 기재



부안군은 태서군보다 앞서 지난날 11월 수선면을 시작으로 편산면까지 읍면 연초방목소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 서민생활 안정에 부합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청취해 264건의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부안군 시정사 2권



전국 최고의 부지 농가촌을 구원하려고 부인한 '북파사업인' 부인 봉 사업을 여러 봉 진시켜 실업, 가공, 본계 및 관광사업과 연결을 1, 2, 3차 종합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부인 고출판 한 '전반의 속씨'를 전을 육성하고 부인 상형지진 인쇄사업, 덕 배도우미는 배서지는 꽃바지류 위한 다양한 사색의 꽃선과 및 기업유치를 통하여 피

그와 부자 논쟁은 구원에 앞장선 발자
다. 군단도 고소로 대법원 유죄를 확정
무죄 판결을 내린 뒤는 논쟁을 접지 않고
내, 수감된 채 헌법재판소로 갔다. 우리 법
내 재판사실을 추진, 이사회를 지원하
고 공소장작성요지작성서를 전달, 제4회
안소문헌위원회, 제6회 공소장작성요지
추진단 개원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44(자심)
언 론 사	현대일보(주)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74-5 대표이사 권 오 룬
심의대상기사	현대일보 2010년 3월 5일자 4면 『어느 간부공무원의 퇴임식』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김포시의회 의원) 출마 예정인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예퇴임 소식을 전하며 그의 업적 및 성품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칼럼을 게재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어느 간부공무원의 명예퇴임식

4일 신광철 김포시 상수도사업소 소장의 명예퇴임식이 있었다.

그는 후배 공직자 양성을 위해 조직의 활력을 위해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36년의 긴 세월 속에 청춘을 불사른 흔적이 남아 있는 이곳을 떠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아니었을 터인데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마무리 함으로서 뜻 깊은 퇴임식을 갖게 된 것이다.

아마도 만감이 교차 했으리라...

이렇게 되기까지 온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해온 내조의 공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이든다.

민음성 있는 행정의 추진력을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싱크탱크의 역할은 물론 특히 양촌면장시절 양촌소방파출소 유치와 경제환경국장 때 시민의 건강을 위해 콜레라 방역사업, 일주일간의 단수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해결했던 일들은 그를 일찌감치 최연소, 최장수의 영광스런 국장(서기관) 자리에 앉게했다.

혁신을 주도 하면서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 주었고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행정은 황새겉을이기에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개인의 득 보다는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천상 공직자였다.

이런 훌륭한 공무원이 오늘 퇴임을 한다니 마음 한 구석에 함께 퇴장하는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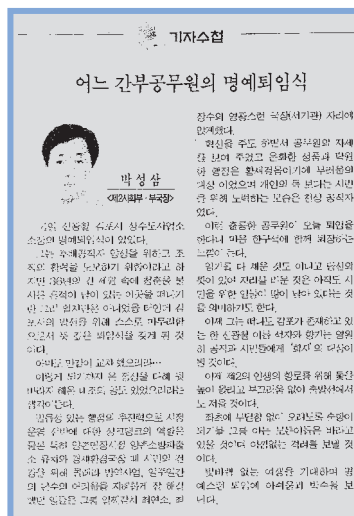
임기를 다 채운 것도 아니고 당신의 뜻이 있어 자리를 비운 것은 아직도 시민을 위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그는 떠나도 김포가 존재하고 있는 한 신광철 이름 석자와 향기는 영원히 공직과 시민들에게 '희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제 제2의 인생의 향로를 위해 뜻을 높이 올리고 부끄러움 없이 출발선에서 노 저을 것이다.

좌초에 부딪침 없이 오래도록 순항이 되기를 그는 아는 모든이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낼 것이다.

빛바람 없는 여생을 기대하며 명예스런 퇴임에 아쉬움과 박수를 보낸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45(자심)
언 론 사	(주)고려일보(시사뉴스)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9층 대표이사 강 신 한
심의대상기사	시사뉴스 2010년 3월 15일자 46~47면 『“군민들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최우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 옹진군수) 출마 예정인 현 군수의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약력 및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군민들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최우선”

서해 제일의 해양문화 관광단지 조성 계획 밝혀

인천시 옹진군 조운길 군수는 올해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살기 좋고 품격있는 스마트 옹진,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해피 옹진, 아름답고 낭만이 있는 로맨틱 옹진, 저탄소 녹색성장이 있는 그린 옹진’이라는 4대 비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민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7월, 옹진군 민선 4대 군수에 취임해 탁월한 행정력을 앞세워 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조 군수를 만나 올해의 사업계획을 들어보았다.

조운길 옹진군수는 “군민의 소득을 늘리는 성장, 복지를 키우는 성장,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에 최우선 목표를 삼아 1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옹진군을 서해 제일의 해양관광 문화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운길 옹진군수는 옹진군 출신답게 자신이 평생 함께 해 온 지역에 대해 강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군민의 소득을 늘리는 성장, 복지를 키우는 성장,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설정한 것도 결국에는 지역개발을 통해 옹진군민의 삶을 지금보다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조 군수는 이런 거시적인 발전계획 아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적 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민소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옹진군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육성함으로써 옹진군민의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옹진군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하고 취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옹진군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웅진군을 향후 관광 중심으로 육성하는 문제이다. 조윤길 웅진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진 축제를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한그물 고기잡기대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웅진군 관광 진흥 종합계획」을 용역을 완료했다”고 말하며 “이는 관광 인프라 개

조 군수는 또 “웅진군은 우수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곳입니다. 관광진흥정책 비전과 전략체계 및 세부 시책을 발굴·수립한 「웅진군 관광진흥 종합계획」에 의거, 도서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을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50(자심)
언 론 사	(주)주간함양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84-8 대표이사 김 윤 세
심의대상기사	주간함양 2010년 2월 15일자 6면 『서춘수 자서전 출간 기념식…대선 출정식 방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함양군수) 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면서 특정 정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듯한 보도를 게재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 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춘수 자서전 출간 기념식… 대선 출정식 방불

“나는마 누가 뭐래도 춘수가 최곤기라, 생긴거 함빠라, 얼마나 잘 생겼노, 인물이 보름달처럼 흰 하다마”

2월6일 토요일 오후3시 함양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서춘수 한나라당 군수 출마예상자(이하 경칭생략)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대선 방불케 하는 인파가 운집,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펴낸 자서전 제목은 ‘숲을 지키는 나무는 아름답다’. 이 책 속에는 서춘수 가족사, 말단 공무원을 거쳐 경남도 고위공무원까지 오르면서 느꼈던 감회, 인생론 등이 담겨져 있다.

신성범 의원 의미심장한 축하 ‘눈길’

이날,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거창 함양 산청)은 출판 기념회에 참석, 다음과 같은 축사를 했다. “보시다시피 이 책은 선거용 단행본입니다. 으레,

이런 책들은 당사자가 집필하지 않고 대필을 하는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쓰나 못 쓰나 본인이 직접 적어 호감이 갑니다.

〈중략〉

그랬다. 이 자서전은 여느 정치인들의 것과 확연히 다르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아주 솔직 담백하게 기술, 인간 서춘수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나는 상림공원 벤치로가, 차분히 서춘수 자서전을 읽어내려갔다. 신성범 의원이 이 책을 통해 서춘수 월급봉투 사진 이면(裏面)을 읽어 냈다면 나는 진주 중학시절 서춘수 학생의 다사다난한 삶에 그만 뿔이 꽂혀버렸다.

서춘수 가게는 한국동란 때문에 품비박산이 된다. 함양 동구 이장이었던 부친은 전쟁 소용돌이에서 희생당한다. 이로써 청상과부 어머니가 집안을 책임진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식구를 이끌고 대치 진주로 나간다.

영민한 서춘수는 명문 진주중학을 다닌다. 학교길에 우연히 진주중앙시장에서 날품팔이하는 모친을 보고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가

길바닥에서 물건 파는 게 부끄러웠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 먹는다.

“우리 형제 나중 큰 인물이 되라고 저렇게 고생하 시는 어머니, 어머니를 지정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이 대목을 읽노라니 소설가 이문열의 대하소설

《변경(邊境)》, 조정래의 《한강》이 생각난다. 좌우익 대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곤욕을 치러야 했던가? 기회가 되면 서훈수 류(類) 좌우익 희생자. 그들의 삶의 행로, 인간승리를 기록해보고 싶다.(후략)

지방선거 풍속도 ① 군수예비후보

서훈수 자서전 출간 기념식...대선 출정식 방불



“나는마 누가 뭐래도 훈수가 최군진라. 생김거 함뻐라. 얼마나 실 생겼노. 인품이 보름달처럼 원하디마”
2월6일 토요일 오후3시 함양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서훈수 한나라당 군수 출마예상자(이하 경정생략) 자서전 출간 기념 회가 있었다. 대선 방불케 하는 인파가 운집, 노닐을 끝냈다.
이번에 펴낸 자서전 제목은 ‘술을 지키는 나무는 아름답다’. 이 책 속에는 서훈수 가족사, 말단공무원을 거쳐 경남도 고 위공무원까지 오면서 느꼈던 감회, 인생론 등이 담겨져 있다.

신성범 의원 의미심장한 축사 ‘눈길’

이날,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거창 함양 신정)은 축하 기념회에 참석, 다음과 같은 축사를 했다. “보사대시파 이 책은 선거용 단행본입니다. 으레, 이런 책들은 당사자가 집필하지 않고 대필을 하는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 쓰나 못 쓰나 본인이 직접 적어 호감이 갑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인간 서훈수의 삶과 사상을 좀처럼 수 있었습니 다. 단행본 곳곳에 심금을 울리는 대목이 참 많더군요. 특히 저, 이 책 119페이지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19페이지 한번 펼쳐 보실래요? 서훈수 전직장 신혼초 임금봉투가 실려 있습니다. 당시 그분의 월급은 총 7 만7천원이었던군요. 저는 이 봉투를 보고 당시 우리네다 경제사정과 박정 숙에서 보았던 자신에게 주어진 월 (공무원)을 수렁에서 서 죽한 모습을 잊었습니다. 이런 민들의 노고에 의해 오늘날 우리네라는 번영했습니다. 서 국장의 앞날에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 이 자서전은 여는 정치인 들의 것과 확연히 다르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아주 순직 담백하게 기술, 인간 서훈수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나는 신림 공회 센터로 가, 차분히 서훈수 자서전을 읽어내려 갔다. 신성범 의원이 이 책을 통해 서훈수 임금봉투 사진 이번(圖面)을 읽어 왔다면, 나는 전주

중학시절 서훈수 학생의 다사다난한 삶에 그만 눈이 꽂혀버렸다.

서훈수 가족은 한국전쟁 때문에 풍비박산이 된다. 함양 봉구 이장되었던 부친은 전쟁 소용돌이에서 희생당 한다. 이로써 청상과부 어머니가 집안을 책임진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식구들 이끌고 대저 전주로 나간다.

영민한 서훈수는 명문 전주중학을 다닌다. 학교길에 우연히 진주중앙시 장에서 날품팔이하는 모친을 보고 어린 나이에 경격을 받는다. 어머니가 길바닥에서 물건 파는 게 부끄러웠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 먹는다.

“우리 형제 나중 큰 인물이 되라고 저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 어머니를 지정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이 대목을 읽노라니 소설가 이문열의 대하소설 《변경(邊境)》, 조정래의 《한강》이 생각난다. 좌우익 대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곤욕을 치러야 했던 가? 기회가 되면 서훈수 류(類) 좌우익 희생자. 그들의 삶의 행로, 인간승리를 기록해보고 싶다.

한편, 서훈수는 이 책을 통해 함양 발전 참사진을 밝히고 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함양군수로 당선되어 함양을 크게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경남도 농수산국장으로 일해 오면서 마련한 노하우가 있습니

다. 이 노하우로 함양의 농촌경제발전을 도모해 보겠습니다. 함양에서 생산하기에 적합한 농산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대량생산으로 높은 신진화 된 유통방식을 도입해 생산된 농산물이 적절할 때에 좋은 값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반박이 있는 여러 단체나 조직을 함양발전으로 하나 되게 화합시킬 것입니다. 서로가 상생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군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이제 함양군이 모두 잘 사는 길을 본격적으로 찾아야 할 때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총동원하여 보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보다 피부로 와 닿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경남도 미래산업과장, 관광진흥과장, 달양과시장, 농수산국장 등 내가 거쳐 온 많은 자리에서 쌓아온 모든 공무에 대한 감회와 성취를 충분히 발화, 함양을 되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이외에도 이 책 속에는 “군수가 되면 함양을 그랜드오프로 탈바꿈하겠다”, “친화적 녹색성장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함양발전과 관련된 서훈수의 어필(?)이 수록되어 있다.

구본갑 [본지칼럼니스트
busan707@naver.com]

의 결 번 호	2010지선51(자심)
언 론 사	(주)경제풍월 서울 중구 필동1가 43-1 동화빌딩 508호 대표이사 배 병 휴
심의대상기사	경제풍월 2010년 3월호 64~69면 『강남구, 사교육과 정면승부 공교육 활성화 길 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서울시 강남구의 공교육 활성화 사업 및 구정활동 성과 등을 보도하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강남구구청장) 후보 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인터뷰를 여러 컷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남구, 사교육과 정면승부

공교육 활성화 길 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지탄돼 온 서울 강남구가 뜻밖에도 ‘공교육 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신한다.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출신의 맹정주 구청장이 사교육과의 정면승부를 통해 강남구의 공교육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사교육 천국으로 꼽히는 부자구니 강남구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을 압도할 수 있을까. 지난 2천6년 맹정주 청장은 과감하게도 사교육 1번지를 공교육 1번지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때 모두가 “무슨 수로 사교육 극성을 이겨 내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남구엔 초, 중, 고교가 75개인 반면 학원은 무려 3,500여개로 ‘사교육 1번지’가 틀림없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수험생들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공교육을 살려내자면 무슨 특별한 수를 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강남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의 노

력만으로는 역부족임이 들어 난지 오래다. 이 판국에 강남구가 부자구라고는 하나 지자체장 힘으로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지성감천(至誠感天)이다. 불가능하다고 체념하면 사교육의 수렁으로부터 학부모나 수험생을 건져 낼 수 없다. 고학력 출신의 맹 청장은 공교육 관련 술한 민원을 듣고 학부모, 교장, 교사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공교육 활성화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이 결과 ‘명문고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터넷 수능 방송’을 통해 사교육의 기세를 꺾어 내기에 성공했다. 강남구의 인터넷 수능방송은 등록 회원이 110만 명을 넘어서고 전국 127개 시·군·구와 협약으로 교육콘텐츠를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특목고 능가하는 명문고 나온다.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다각적인 심사를 거쳐 지원규모를 확정하여 강남 교육청을 통해 집행하는 방식이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 지원도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아 매칭 펀드식을 적용했다. 이 방식에 따라 초, 중, 고 75개교에 원어민 교사 101명이 배치될 수 있었다. 고품격 영어교육 시스템을 갖춘

의 결 번 호	2010지선59(자심)
언 론 사	(주)경북일보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579-12 대표이사 정 정 화
심의대상기사	경북일보 2010년 2월 17일자 4면 『예비 후보들 오차범위 내 접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천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출처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공표 준수사항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예비 후보들 오차범위 내 '접전'

언론사 인터넷 여론조사...

1~4위간 지지율 격차 2.4% '치열한 각축'

김수남 현 군수가 3선 연임에 묶여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 예천군수 선거 판도가 최근 지역 인터넷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4명의 후보가 오

차 범위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박빙의 혼전세를 보이고 있어 선거전이 더욱 가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모 인터넷 언론사에서 예천군수 예비후부 8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각 후보자 별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지도 면에서 1위를 차지한 오창근 한나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장과 4위를 차지한 김학동 전 푸른학원 이사장의 지지율 격차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1~4위까지의 후보자별 지지율이 오차 범위내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예비 후보들 오차범위내 '접전'

언론사 인터넷 여론조사...1~4위간 지지율 격차 2.4% '치열한 각축'



김수남 현 군수가 3선 연임에 묶여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 예천군수 선거 판도가 최근 지역 인터넷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4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내의 근소한 차이

를 보이며 박빙의 혼전세를 보이고 있어 선거전이 더욱 가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모 인터넷 언론사에서 예천군수 예

비후부 8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각 후보자 별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지도 면에서 1위를 차지한 오창근 한나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장과 4위를 차지한 김학동 전 푸른학원 이사장의 지지율 격차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1~4위까지의 후보자별 지지율이 오차 범위내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빙계 선거전에 뛰어들 최영환 전 예천교육장과 정연석 한나라당 막내에겐 대표 북벌보좌역의 지지율이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선두권 후보자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어 차기 예천군수 선거는 막판까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일찌감치 차기 군수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경쟁자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해 온 한나라당으로서는도 공천자 결정은 물론 공천 이후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을 꺼

안은 말에도 적지않은 신동이 예상되면서 고만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김수남 군수가 최근 예비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해 결국 지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자칫 선거전이 다자구도로 갈 경우 한나라당 공천을 받게 될 후보자도 김 군수와 지지도 받게 될 후보와의 무게를 싸움에 예상되고 있어 한나라당으로서는 공천자 결정이 더욱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지역정가에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예비후보들 중 2-3명은 여당 공천에 어려움을 겪을 비례위원연대의 공천을 받기 위한 불발작업 중이라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어 예천군수 선거는 말초 예상

을 무임고 다자구도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전

망마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정병철기자 jame@kyngnews.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60(자심)
언 론 사	(주)경기신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대표이사 박 세 호
심의대상기사	경기신문 2010년 3월 16일자 14면 『구리시-美 캐롤턴시 자매결연...청소년교류 새장 글로벌 구리인이여, 세계와 호흡하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리시장)와 관련하여 구리시의 자매결연 체결 및 사업계획 등을 보도하면서,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를 여러 컷의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터뷰 박영순 구리시장

“생활속 어학교육 바람직”

글로벌 구리인이여, 세계와 호흡하라

지난 1월12일, 미국캐롤턴시 시청회의실에서
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이날 구리시와 미국 텍
사스 주(州) 캐롤턴시는 Ronald F. Branson캐
롤턴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 두 도시 대표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상호 교류를 바탕으
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구리시와 캐롤턴시는 지난
달 23일 두 도시 간 청소년 교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캐롤턴시는 미국에서 19번째로 살기 좋은 소도
시이며, 달라스·포트국제공항에 인접한 ‘국제 비
즈니스 도시’로서 주요 국내·국제회사 본사가 소
재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정
상급 미술관, 박물관이 많고, 녹색환경, 교육, 체
육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두 도시의 청
소년 교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중략)

- 바람직한 청소년 어학연수는

▲ 청소년들의 어학 연수에 있어서 홈스테이를
강조하고 싶다. 우리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그냥 버
스를 타고 이곳 저곳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외국 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일대일
로 24시간 생활하는 것이 어학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캐롤턴시와 구리시의 청소년 교류사
업에 있어서 홈스테이를 강조했다.

- 자매 도시를 통한 어학연수의 장점은.

▲ 적은 비용으로 영어학습이 가능하다. 구리
시와 캐롤턴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 어학 연수의
경우 100만원 이내이고, 1년짜리 교환학생의 경
우 1천만원 정도면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다.

- 어학 연수 비용을 시가 일부 부담한다는데.

▲ 항공료와 경비 등 비용의 50%를 시에서 지
원하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전액 시가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다.

- 캐롤턴시 외에 필리핀 칼람바(Calamba)시와도 영어 교류가 가능하다.

▲ 미국의 캐롤턴시도 그렇지만 필리핀의 칼람바시 역시 지난 3년 동안의 상호 교류 끝에 지난 1월 중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됐다. 구리시는 칼람바시하고도 두 도시간 공동 번영과 교류협력을 앞

으로 활발하게 펼쳐 나갈 방침이다.

칼람바시는 필리핀 국립대학이 소재한 교육도시로서 영어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영문학과 학생 300여명이 재학 중에 있어 방학을 활용, 저렴한 비용으로 원어민 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다.



구리시-美 캐롤턴시 자매결연... 청소년교류 새 장

글로벌 구리인이여, 세계와 호흡하라

● 두 도시간 청소년교류 급물살

지난 1월 15일, 미국 캐롤턴시(Carleton Place)와 필리핀 칼람바시(Calamba)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두 도시의 교류는 지난 3년 동안의 상호 교류 끝에 지난 1월 중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됐다. 구리시는 칼람바시하고도 두 도시간 공동 번영과 교류협력을 앞

▲ 구리시-美 캐롤턴시 자매결연 체결

구리시와 캐롤턴시는 지난 1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두 도시의 교류는 지난 3년 동안의 상호 교류 끝에 지난 1월 중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됐다. 구리시는 칼람바시하고도 두 도시간 공동 번영과 교류협력을 앞

▲ 구리시-美 캐롤턴시 자매결연 체결

구리시와 캐롤턴시는 지난 1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두 도시의 교류는 지난 3년 동안의 상호 교류 끝에 지난 1월 중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됐다. 구리시는 칼람바시하고도 두 도시간 공동 번영과 교류협력을 앞

3년동안 교류 결실 자매결연·성명회 성사

구리시와 캐롤턴시는 지난 1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두 도시의 교류는 지난 3년 동안의 상호 교류 끝에 지난 1월 중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됐다. 구리시는 칼람바시하고도 두 도시간 공동 번영과 교류협력을 앞

구리시-美 캐롤턴시 자매결연 체결

구리시와 캐롤턴시는 지난 1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두 도시의 교류는 지난 3년 동안의 상호 교류 끝에 지난 1월 중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됐다. 구리시는 칼람바시하고도 두 도시간 공동 번영과 교류협력을 앞

구리시-美 캐롤턴시 자매결연 체결

구리시와 캐롤턴시는 지난 1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두 도시의 교류는 지난 3년 동안의 상호 교류 끝에 지난 1월 중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됐다. 구리시는 칼람바시하고도 두 도시간 공동 번영과 교류협력을 앞

구리시-美 캐롤턴시 자매결연 체결

구리시와 캐롤턴시는 지난 1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두 도시의 교류는 지난 3년 동안의 상호 교류 끝에 지난 1월 중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됐다. 구리시는 칼람바시하고도 두 도시간 공동 번영과 교류협력을 앞

구리시-美 캐롤턴시 자매결연 체결

구리시와 캐롤턴시는 지난 1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두 도시의 교류는 지난 3년 동안의 상호 교류 끝에 지난 1월 중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됐다. 구리시는 칼람바시하고도 두 도시간 공동 번영과 교류협력을 앞

구리시-美 캐롤턴시 자매결연 체결

구리시와 캐롤턴시는 지난 1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두 도시의 교류는 지난 3년 동안의 상호 교류 끝에 지난 1월 중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됐다. 구리시는 칼람바시하고도 두 도시간 공동 번영과 교류협력을 앞

의 결 번 호	2010지선61(자심)
언 론 사	전일신문 주식회사(일간 전북타임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32 덕송빌딩 7층 대표이사 홍 성 장
심의대상기사	일간 전북타임스 2010년 3월 2일자 12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안 진안 홍삼, 중국시장 ‘노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안군수)와 관련하여 진안군의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보도하면서,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활동성과 및 여러 컷의 사진을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안 진안 홍삼, 중국시장 ‘노크’

♣진안 홍삼 · 특산품 해외시장 진출

진안군은 홍삼한방산업과 아토피산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홍삼한방산업은 진안홍삼연구소를 통한 홍삼의 명품화와 홍삼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으며, 홍삼판매장 개설과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홍삼 · 한방농공단지를 짓는 등 홍삼 · 한방산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 연말까지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진안군은 중국 환인현과 자매결연을 통해 해외 도시와 교두보를 확보하고 심양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 해외시장의 첫 시동 중국시장 공략

진안군 홍삼클러스터사업단 중국해외지사 오픈과 함께 농산물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 제휴, 중국 심양시와 교류 활성화 등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월 중국 심양시를 방문해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하사업단)의 중국사무소 및 진안삼 홍보부스 개소와 한 · 중 웰빙테크 연구개발에 대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국 시장에 진안삼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 · 중 웰빙테크 연구개발에 대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는 심양총영사의 주재강연을 시작으로 주 제발표와 함께 심양시 물류중심 담당, 총영사관 경제담당, 한인회 경제담당 등이 진안삼의 중국진출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져 진안삼에 대한 중국현지에 관심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중국시장에 진안사의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해 심양총영사, 조선족기업가협회 및 한인회 등 주요 인사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사업단의 중국사무소는 조선족기업가협회 건물에, 홍보부스는 요녕성 공업전시관 근처에 위치하며 심양시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 중국 진출의 청신호

진안 홍삼 및 특산품의 중국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달 26일 신형근 중국 선양총영사 일행이 진안군을 방문해 송영선 진안군수와 만나 진안 홍삼과 특산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

고 약속한 것이다.

이번 방문은 진안군이 지난 1월 신양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신양에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선에 지사장)을 설립하고, 진안홍삼 홍보관 개관 및 중한 웰빙테크 연구개발 세미나를 개최한 데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후략)

진안 홍삼, 중국 시장 노크

* 전안동상, 특선작품 해외시장 진출

전양군은 홍성원광산업과 아톰비산업은 북해 세노은
모양을 갖추고 있다.

공산기업산업은 전이중공업-고급 공업 생산의 명품화와 중공업의 고부가가치 향상에 나서고 있으며, 육류 관련성 개선과 우수단위에 유망지원을, 송출·연결을 촉진하고 있는 등 중공업·화학산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 연말까지 한라산에 구호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2016년¹²에는 정상 개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글로 된 이 책은 한글로 된 책을 읽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자료로 삼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한글로 된 책을 읽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자료로 삼아 보아야 할 것이다.

북은 지난 1월 중국 삼양식품 발원지 진안농산물거래소 리스티야점(이하서야점)의 중국사무소 및 진안산 콩보투스 개소와 인·송 철물테크 연구개발에 대한 협상과 병행 서계나를 개항하여 중국시장에 진안산을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홍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헌신과 방한 세비나
에는 중앙총원사의 수배강연을 시적으로 주제발표와 안
개 식양서 발표등이 난다. 총원사와 경제담당, 현연의 경
제담당 등의 신안상의 중국전환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지
진안집에 대한 중국전환에 관심은 이었다.

이외에도 중국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과 관공립대들 위
해 신임확립차, 조선족기업가협회 및 한인회 등 주요 인

사람에게 원곡을 당구했다.
시업인의 중국시보소는 조선족/얼기어히 건물에, 총
보루스는 요양병 공업협회를 근처에 위치하니 성양시 정
부에서 무산으로 시공하였다.

* 韓의서장의 첫 서동 활극서장 들락

전임은 옥심클리닉에서 10년간 주치의로서 오픈과 함께 농산물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 세브, 중국 상하이와 교
류 협력회 등 추진에 나섰다.

* 한국 기업가의 창신정신

진안 용삼 및 복산농의 중국 전쟁이 뒤늦게 받게 됐다.
지난달 26일 신촌구축군 전열중대가 일제이 직안군을

환인현과 자매결연 · 심양대학교와 협약 ...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중국세계합상대회서 진인홍삼 특별전시관 운영 ... 세계시장 공략

행무해 송영선 진안군수와 만나 진안 특산물과 특산품의 전국시장을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해 준다.

이런 방문은 전인군이 지난 1월 중앙총인사관의 도움을 받아 선양에 진양홍산한방병원(주)에서부터(선양에 지사장)를 설립하고, 진양홍산 출판과 개국 및 동화 캠페인 연구개발 세미나를 개최한 데 대한 답례로서 이뤄진 것이다.

이년 송영신 군수는 "진양 홍삼과 감지 등 지예 특산물
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진양홍안사과의 적극적인

이에 신영은 총영사는 "진안 홍산과 덕산동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며 "우선 중국 동북삼성지역 도시들과 진안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며 한층 더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또한 양국은 2010년 6월 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1회 중국 세계 한식대회에 진양홍산 보편 진지권을 만들고, 대회 개의 행사의 유산과 박스타이를 주제로 한 인도박지

배신쇼에 진한눈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민관 오는 6월 열리는 제1회 중국국제전람회에는 재외
공포를 국민적 경제자신으로 견출하기 위한 한민족 경제
인 대외로 중국 전역에 분포한 한인상공인 2500여명과 중
국현지 상공인 2500여명이 참가해 각종 전시, 공연, 학술,
문화예술 행사를 열치게 된다.

양드레기 배신소가 메인영사로 열리며, 한중 수전음의 콘서트, 한중 대중음악 콘서트, 전라북도 관광·버스니스

선양국은 앞으로 삼양시 농촌경제 위원회 합이 산으로
시간 농업관련 협력, 연식존을 통해 요령성 정부와 접촉
하는 등 시급적으로 최소한의 노력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반 기업선교회를 농업경제 위원회 주관에 개회, 장로, 장사, 장사

품의 인지도를 높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방법이다.
/진안=조연상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65(자심)
언 론 사	(주)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농수산물로 100 대표이사 변 근 원
심의대상기사	충북일보 2010년 3월 11일자 4면 『‘눈 치우기 달인’ 남상우 시장』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청주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시정활동에 관한 우호적인 평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눈 치우기 달인’ 남상우 시장

대설주의보에 직원 비상 근무

밤새 눈치워 출근길 불편없애

전국적으로 지난 9일과 10일 예상치 않은 폭설이 내렸다. 아침 출근길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었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라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청주에도 밤사이 10.7cm의 적설량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했던 출근길 지각사태나 교통사고는 눈에 띄지 않았다.

눈 잘 치우는 남상우(사진) 청주시장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 시장을 비롯해 시청직원들은 청주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자 9일 오후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직원(시청·양구청 재난관리부서)들은 이날 오후 8시부터 밤11시까지 발 빠르게 제설차량 15대

를 동원,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노선에 대한 제설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6시 30분 다시 집결해 650km에 달하는 구간에서 눈치우기 작업을 벌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이날 아침 시민들의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남 시장이 ‘눈잘 치우는 시장’으로 불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995~1998년 서울 용산구 부구청장시절 관내에 강남과 강북을 잇는 교통중심지인 남산이 있어 눈만 오면 교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인사사고도 많았고요.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눈치우는 버릇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당시 용산구청장은 25개 구청 가운데 행정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남 시장은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을 때에도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다고 한다.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 앞서 선거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해 3월5일은 일일 28cm라는 엄청난량의 눈이 내렸었어요. 말 그대로 눈 폭탄이였습니다. 자신의 선거 차량은 물론 모든 시민들의 차량

이 운행을 하지 못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이상했습니다. 폭설로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설작업은 발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죠. 당선이 되면 시민들의 불편사안을 제1과제로 꼽아 해결하겠다고.”

남 시장은 직원들이나 지인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시민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되겠다고.” 밤샘 눈치주기 작업 때문인지 남시장의 양볼은 10일 늦은 시간까지 상기돼 있었다.

‘눈 치우기 달인’ 남상우 시장

“대설주의보에 직원 비상 근무
밤새 눈치워 출근길 불편없애”



전국적으로 지난 9월 16~19일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다. 아열대 기후인 광주도 예외가 없었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 폭설에도 밤사이 11.7cm의 적설량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했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교통사고는 눈길에 적설량이 10cm 이상이면 발생한다. 그러나 폭설에도 밤사이 11.7cm의 적설량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했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교통사고는 눈길에 적설량이 10cm 이상이면 발생한다.

시장(시장·임수정 재단관리부서)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간 동안 제설작업 154회 실시했다. 주로 강변대로의 취약노선에 대한 제설작업에 착수했다. 이날은 10월 10일 8시 30분 다시 제설작업 60회에 달하는 구간에 제설작업이 진행을 보였다. 이튿날 오후 6시부터 5시간 동안 제설작업 50회에 달하는 구간에 제설작업이 진행을 보였다. 이튿날 오후 6시부터 5시간 동안 제설작업 50회에 달하는 구간에 제설작업이 진행을 보였다.

구정동시선거권내에 광복로 일대 등 주요 도로에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 폭설에도 밤사이 11.7cm의 적설량을 보였다. 그러나 우려했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교통사고는 눈길에 적설량이 10cm 이상이면 발생한다.

남 시장은 직원들이나 지인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시민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되겠다고.” 밤샘 눈치주기 작업 때문인지 남시장의 양볼은 10일 늦은 시간까지 상기돼 있었다.

남 시장은 직원들이나 지인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시민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되겠다고.” 밤샘 눈치주기 작업 때문인지 남시장의 양볼은 10일 늦은 시간까지 상기돼 있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72(자심)
언 론 사	(주)아시아미디어문화(광남일보)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86-1 대표이사 김 진 영
심의대상기사	광남일보 2010년 3월 9일자 3면 『수성 vs 탈환』 ... 광주·전남 광역·기초 단체 9곳』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도지사, 광주시 동구청장, 완 도군수, 광진군수)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출처 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공표 준수사항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 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 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수성 vs 탈환’ ...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전략)전남도지사 선거는 박준영 도지사와 주
종용(여수시 을) 의원, 이석형 전 함평군수 등 3파
전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경
선을 치를 예정이지만 박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
서 2위와 격차를 2배차로 앞서고 있어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가 관건이다.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3선을 ‘정조준’ 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구도 무려 7곳이다.

유태명 동구청장과 황일봉 남구청장을 비롯 정
종득 목포시장, 이성웅 광양시장, 김종식 완도군수,
서남석 무안군수 등도 ‘3선’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 7명의 단체장은 모두가 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여론조사에서 고른지지를
받으며 앞서가고 있지만 조영복 등 구의회 의장이

바짝 뒤쫓고 있고 임흥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
처장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위
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의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실릴지도 공천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황일봉 남구청장의 3선행은 가장 치열한 도전
을 받고 있다. 경선에 참여한 후보가 무려 10여명
에 달할 정도로 입지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현재까
지 이호준 전 남구부구청장, 최영호 전 광주시의
원, 김화진 전 남구의원 등이 대항마로 나서고 있
다. 민주당이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인 ‘따로’
‘따로’인 남구청장 공천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
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여론조사등에서 압도적
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황청장의 무소속 출마 등
선택(?)이 관심사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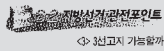
김종식 완도군수는 현재 차용우 완도군의장과
김신 군의원 등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
어 3선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
석이다.

이와 함께 황주홍 강진군수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군수 3선에 도전하겠다고 나
서 지역정가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황

군수가 무소속으로 '안방'이나 다름 없는 민주당 후보와 '본선' 대결을 통해 군수직을 수성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황군수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를 차지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선거정국이 전개되면 확산되는 민주당 바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후략)



'수성 vs 탈환' ...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 3년교지 가늠할까

"재선이면 충분하지." "선거가 무엇이든 승부처 지역을 위해 일단 참회면 또 할 수도 있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중여기초단체장의 '3선 도전'과 '대항 지역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그 만큼 3선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담도 여전한지언정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선거전이다. 현재로선 3선 도전이 활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역대 4번의 지방선거를 통해 3선 도전이 3번에 달했지만 이 중에는 공백을 경험한 것은 2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3선에 도전하는 3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3선에 도전하는 3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3선에 도전하는 3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3선에 도전하는 3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3선에 도전하는 3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3선에 도전하는 3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3선에 도전하는 3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3선에 도전하는 3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3선에 도전하는 3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3선에 도전하는 3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3선에 도전하는 3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3선에 도전하는 3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3선에 도전하는 3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3선에 도전하는 3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선 당선 후 2선 도전은 1선 당선 후 1년 이내에 선거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도지사 등 '현직 프리미엄' ... 후보군 줄비 점전 예고 남구·동구·북구·광양·완도·무안 '공천' 변수...강진 무소속 '3선의 길' 험로... '장기집권' 지역민·정치권 시선도 따가워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의 결 번 호	2010지선73(자심)
언 론 사	(주)전남일보 광주 북구 중흥동 700-5 대표이사 박 경 엽
심의대상기사	전남일보 2010년 3월 17일자 5면 『유창중, 선두 최형식 맹추격』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담양군수)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출처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공표 준수사항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창중, 선두 최형식 맹추격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압축되고 있다. 2개월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군은 민선 3기 군수를 지낸 최형식(54) 전 군수를 비롯해 유창중(57) 전 담양부군수, 강종문(51)·송범근(58) 전남도의원, 최화삼(56) 담양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5명이 경선 출마를 준비했다. 그런데 경선 예정일인 4월 13일을 한달 앞두고 후보 2명이 중도하차했다. 최 이사장이 지난 3일 경선 참여를 포기한데 이어 최근 송 의원도 뜻을 접었다.

최 이사장은 지난달 새마을금고 전국연합회 부회장에 선출돼 이에 전력한다는 것이, 송 의원은 지지도가 오르지 않은 것이 경선불참의 직접적인 이유다.

이에 따라 담양군수 민주당 경선은 최 전 군수, 유 전 부군수, 강 도의원의 3파전으로 좁혀졌다. 현재까지 판세는 후보군중 최 전 군수가 가장 앞서 달리고 있고 유 전 부군수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최근 담양지역 3개 신문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결과, 최 전 군수가 '민주당 공천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46.6%를 차지, 25.7%, 6.9%를 기록한 유 전 부군수와 강 도의원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군수는 도의원 3선과 군수를 지내며 쌓아온 높은 인지도에 힘입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 전 군수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청렴성과 능력이 검증된 후보에 대한 지역민의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최 전 군수는 경쟁자인 유 전 부군수의 고향인 담양읍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60%를 넘은 것에 대해 고무돼 있다.

담양읍 유권자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이곳에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최 전 군수는 “민선 3기 선거때는 공감하지 못했지만 4년을 지내고 보니 최 군수가 계속했더라면 지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압도적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전 군수의 캠프진영은 여유로움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4년전 선거에서 자만심 때문에 쓴잔을 마신 뼈아픈 경험을 한 터라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태세다.(후략)

6.2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현장

■ 담양군수

민중당 입당후순 후보는 선거일에 다가올에 따라 알려지고 있다. 2개월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군은 인천 7지 군수들(지번 최영식(54) 전 군수를 비롯하여 우창중(57) 전 감방장수, 강동호(51)·송병근(53) 전남도지사, 최화삼(56) 달양 재마을리고 이장동 등 5명)이 경선 준비를 준비했다. 그런데 경선 예정인인 1월 13일, 유한 달양 3주 2명이 종도하했다. 최 이 사람이 이원도 후보 선한 하여마 포기한데 이어 조근 수 역원도 뜻을 접었다.

최 이사장은 지난달 새마을금고 전국연합회 부회장에 선출돼 이에 전직한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은 것이 경신탈당의 직접적인 이유다.

여기 파라 뒤암군수 민주당 경선은 최 전 군수, 우 진 부군수, 강 도의원의 3파전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이 경선은 후보군중 최 전 군수가 가장 앞서 달리고 있고 우 진 부군수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최근 남양지회 3기 선출자가 활동으로 선취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결과, 최 전 군수가 '민주당 공천 후보'를 밀어, 정문에서 45.6%를 차지, 25.7%, 6.9%를 기록한 유 선 부군수와 강 노의원을 크게 앞섰다고 나타났다.

최저 공수는 도이치 3상과 공수원 자체의 첫
아들 높은 인지도에 힘입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 전 군수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념심과 능력이 검증된 후보에 대한 지역민의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최 진 교수는 경쟁자인 유 전 부근수의 고한원 담양읍에서 자신의 지주율에 40%를 넘지 않게 대해 고분대 한다.

발양을 유권자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이곳에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했지만 4년을 지내고 보니 죄 군수가 계속했더라면 지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아쉬운 후회가 업도록 지시로 이어지고 있다"고

유창종, 선두 최형식 맹추격

		
가나디수	유정훈(57)	최경식(54)
이름(나이)	강훈은(51)	전영호(50)
	전남도의원	전 원양교수
경력요도	인도당 지림이	신어로로 타이 협력
	점종은·당원	주정식·출연은 지도
지치 기법	당원들, 허비한	신영남·전남도의원

은 의원한테다 낚장부수소 수천부시장, 행정안전
 조부 관수생부농협전산센터장을 지내:는 다른
 후보가 갖지 않는 행정전문가로서 화려한 경력을
 앞세워 표심을 공략할 경우 충분, 승산이 있
 다는 게 언론 내부人士的 생각이다.

정신전까지 한 달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여 최 전 군수와 양강 구도를 만들어 승부를 내겠다. 북안이다.

유 선 부군수는 경신방식도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선에 강원 50%가 참여하기 때문에 두 단체
당세 당원들이 자신을 지지해줄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

최 전 군수가 당직을 변경한 행보를 보인만큼 이번 정선에서 강원도민이 임종하게 심판할 것이 많은 것이다.

지난 2002년 민선 3기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80표차로 탈락한 최형식 후보가 공천에 불복해 부속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적이 있었고, 2006년 민선4기 선거에서 지역민생이 민주당으로 옮겨져 오를 즈음 열린우리당 간선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등 민주당원으로서의 형질이 있지 않지 때문이다.

자신을 '민주당 지킴이' 이라고 원주이 말하는 강종동 의원은 각종 이념조작결과 지지율이 한 자리수에 그치고 있지만 "끝까지 경선전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강 의원의 유 전 부군수와 같이 당의 경선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선이 당원 50%가 참여하는 만큼 자신처럼 민주당 한 걸음 걸어온 것을 평가해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특히 "사시대 새정치연합청년의(연창) 전남
도지부장을 맡고 있어 젊은층 유권자들의 지지
를 얻을 수 있고 새선 도의원으로 12개 읍면에 조
직이 많고 해설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사를 보려면 www.kci.go.kr에 접속하십시오.

강종문 도의원 “조직탄탄 해볼만하다”
전당위 50%·국민 50% 전화여론조사

감조했다.

그러나 최 선 군수의 캠프진영은 이유부족을
어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4년전 선거에서 지방심판관에 쓴잔을 마신 때
아는 경계를 한타라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
다. 태석기

이런 신중한 태도는 담양군수 후보에 적용될
당 경선방식에 대한 여의 제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수당 전담노당은 지난 11일 금강군수선거
에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당원
50%와 군민 50%가 참여하는 전화면접 여론조
사를 통해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 최 전수측은
군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군민

참여비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담양군은 비롯해 전남지역은 명원과 비
당원의 구분도 모호해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
는 만큼 민심을 제대로 생선에 반영하기 위해서
는 군민참여위원을 60~70%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종 선 남양북군수는 현재 시시울 2위를 달리고 있는 오승환 후보를 21일 예비후보등록을 계기로 상향선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현재 인지도면에서 최 전 군수에겐 두지고있으나 예비후보가 되면 유권자에게 자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어 지지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남도 핵심부서 실국장

의 결 번 호	2010지선75(자심)
언 론 사	(주)일요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쌍림동 151-11 쌍림빌딩 13층 대표이사 고 재 구
심의대상기사	일요서울 2010년 3월 7일자 10면 『대구시장 김범일 현시장 vs 서상기 시당위원장 2파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구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구시장 김범일 현시장 vs 서상기 시당위원장 2파전

(전략)한나라당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대구에서 여전히 통한다. 하지만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논란으로 친이-친박 간 치열한 집안 싸움이 불거지면서 이번 대구 시장 선거의 공천 경쟁이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자신의 텃밭이기도 한 대구에서 세종시 문제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며 사활을 걸고 있어 그 접전은 한치도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요서울]은 대구를 직접 찾아 오는 6·2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판세를 알아봤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누가 땀까.

우선 민주노동당 이병수 대구시당위원장과 진보신당 조명래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각각 예비후

보 등록을 마쳤다. 여권에서는 친이계에 가까운 김범일 현 대구시장과 친박계 서상기 대구시당위원장 출마가 유력하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윤덕홍 전 부총리와 이승천 대구시당 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참여당에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충환 전 대통령 비서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이 야권후보단일화 추진을 논의 중이다.

대구 정가에서는 ‘김 시장-서위원장’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시장은 재공천을 노리고 있고 서 위원장 역시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정가에선 김 사장이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해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남권 한 지역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시장이 31.4%로 선두를 차지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또다른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김 시장이 33.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 시장의 출마는 기정사실화 된지 오래.(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76(자심)
언 론 사	(주)경향신문사(위클리경향)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송 영 승
심의대상기사	위클리경향 2010년 3월 23일자 20면 『친이·친박 ‘지방선거의 결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채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친이·친박 ‘지방선거의 결투’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 한나라당내 친이(이명박)계와 친박(박근혜)계 간 싸움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전망이다.

현재는 박근혜 전 대표가 아직 계파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아 조직적인 세 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보 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박 전 대표의 중립 의지와 무관하게 계파별 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친이계 측에서도 수도권이 현재의 선거 구도로 간다면 TK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의 홍형식 소장은 “친이계에서는 현재의 구도대로라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승리가 예상되므로 신경 쓸 일이 없다”면서 “TK 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경북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경선에 격돌한 후보들이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됨에 따라

흥미진진하다. 친박계인 김관용 경북지사와 친이성향의 정장식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주인공들이다.

지난 경선 300여표 차로 승패를 갈라

김 지사와 정 전 원장은 각각 박 전 대표 및 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 지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와 선영이 있는 구미시장 출신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구미 등 경북서부 지역, 정 전 원장은 포항·영덕 등 경북 동부지역에서 각각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등 박 전 대표와 정치 행보를 함께 해 왔다. 김 지사 측은 이미 경선에 대비한 조직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출 예정이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 전 원장의 출마선언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이 지역 언론의 한 여론조사 결과 경북지사 출마 예상자 지지도에서 김 지사가 41.6%로 정 전 원장의 12.7%를 크게 앞섰다. 선산 출신인 김 지사는 구미세무서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쳐 민선 구미시장(3선)을 지냈다.(후략)



한나라당 경북지사 후보 김관용 지사 VS 정창식 전 원장

김 지사: 지난 한나라당 대선주모 경선 때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등 박 전 대표와 정치 행보를 함께해 왔다. 김 지사 측은 이미 경선에 대비한 조직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출 예정이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 전 원장의 출마 선언은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선이 지역 연공의 한 여론조사 결과 경북지사 후보 예상지 지지도에서 김 지사가 41.6%로 정 전 원장의 12.7%를 크게 앞섰다. 산산 출진인 김 지사는 구미·세무사상, 청외대 행정관 등을 거쳐 만천 구미시장(3선)을 지냈다.

반면에 정 전 원장은 임세갑지 경선장에 뛰어 들었다. 정 전 원장은 이미 예비후보 등록

친이·친박 ‘지방선거의 결투’

경북지사 후보 티켓 놓고 양계파 인사 재격돌

전순철 기자 news@kyungyang.com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 한나라당 내 친이(이명박)파와 친박(박근혜)파 간 싸움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전망이다.

현재는 박근혜 전 대표가 아직 계파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아 조직적인 세 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보 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박 전 대표의 중립 의지와 무관하게 세파별 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친이계 측에서도 수도권에 현재의 선거 구도로 간다면 TK 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경리서치연구소의 홍평식 소장은 “친이계에서는 현재의 구도대로라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TK 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경북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격돌한 후보들이 ‘러브 레지’를 벌여계 화에 따라 출마선전하다. 친박계의 김관용 경북지사와 친이 집합의 정상식 전 중앙상무위원교육원장이 주인공들이다.

지난 경선 300여 표 차로 승패 갈릴

김 지사와 정 전 원장은 각각 박 전 대표 및 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 지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와 생영이 있는 구미시장 출신이며, 정 전 원장은 이 대통령의 고향이자 친형인 이승복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시장 출신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구미 등 경북 서부지역, 정 전 원장은 포항·영덕 등 경북 동부지역에서 각각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목을 마치고 한나라당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원장은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16개 시·도에 대한 각종 삶의 질 평가와 조사지표에서 경북이 항상 허위편을 면하고 있다”면서 “실제한 리더십이 경북을 왜소화시켰고, 신지행정 리더십이 경북의 앞날을 암담하게 하고 있다”고 김 지사를 경계하고 공격했다. 포항이 고학원 그늘, 상주시 상, 장외대 비서관, 포항시살만신 2, 3대를 거쳐 이명박 정부 들어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발탁됐다. 지난 2006년 한나라당 경북지사후보 경선 때는 김 지사가 불과 300여 표 차로 정 전 원장에 승리했다.

한편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선을 위한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도 친이·친박계 각 강등이 예상된다. 두 계파는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지파에서 더 많이 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13

의 결 번 호	2010지선81(자심)
언 론 사	(주)대전일보사 대전 서구 계룡로 831 대표이사 신 수 용
심의대상기사	대전일보 2010년 3월 27일자 5면 『“임기 짧지만 지역현안 해결 역할 다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청남도의회 의원) 후보예정자인 현 도의원의 정치 철학 등을 인물사진 및 약력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임기 짧지만 지역현안 해결 역할 다할 것”

정순평 충남도의회 의장(52)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글귀를 늘 가슴 속에 품고 산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국회 5급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지난 22일 신임 충남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에도 가장 먼저 이 말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3개월여의 짧은 임기를 지내야 하지만, 역대 그 어떤 의장보다도 시민들의 기억에 남는 의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함께 되새겼다고 한다. 정 의장의 이런 생각에 정치인 정순평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읽게 된다.

정 의장은 “임기가 짧고 회기도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도 충남도의회는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제8대 도의회에서 제9대 도의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충남지사와 정부 부지사의 공백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원 기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청신도시 조성사업 등

다양한 현안 등이 대기중이어서 조금도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장은 “특히 8대 도의회의 원만한 마무리를 통해 9대 도의회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의정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고 어조에 힘을 주었다.

정의장의 이런 구상은 평소 스타일을 들여다 보게 된다. 정 의장은 선이 굵은 정치인으로 통한다. 언행이 같고 막힘이 없는데다 늘 곧은 길을 가려고 한다. 겉보기에도 강단이 있어 보이는데다 뱃속에는 특유의 독심까지 지니고 있다. 지역구인 천안에서도 주민들에게 정순평 의장을 물어보면 대개가 비슷한 말들을 꺼낸다. 그러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그에 대해 성원을 보낸다.

그의 시원시원한 성격과 패기 넘치는 언행은 그의 삶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해병대 출신이다. 포항에서 해병대 장교로 꼬박 3년 4개월을 보냈다. 중위 계급장을 달고도 대위나 소령이 맡는 본부 중대장을 2년간이나 했다. 대전일보 캐나다 통신원인 이용우씨가 그 당시 함께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다. 이용우씨는 고려대 동창이기도 하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정의장은 대학 시절에 정경대학원 학생회장을 하면서 정치에 눈을 떴다.(중략)

정 의장은 인맥이 매우 넓다. 특히 중앙 정치권에는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는

‘토고 지내는’ 유명 인사들이 적지 않다.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구천서 전 국회의원, 정두언 국회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선후배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지역의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도

꼽힌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충남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과 천안갑지역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후략)

“임기 짧지만 지역현안 해결 역할 다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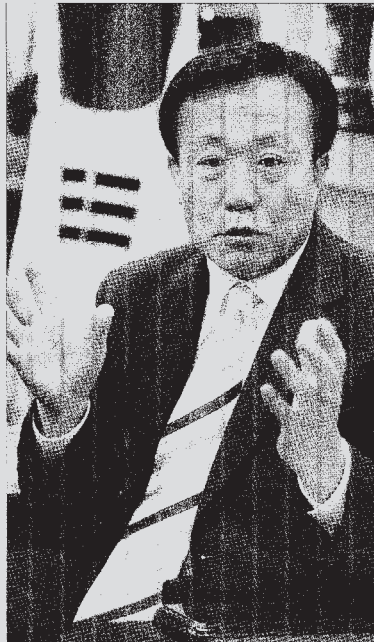
정순평 충남도의회 의장

정순평 충남도의회 의장(右)은 “전인사대천명(天人事大命)이란 글귀를 늘 가슴 속에 품고 산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국회 5급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한시도 않은 적이 없다고 한다. 지난 22일 신임 충남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에도 가장 먼저 이 말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3개월여의 짧은 임기를 지내야 하지만, 여대 그 어떤 의원보다도 도민들의 기원에 남는 의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함께 되새겼다고 한다. 정 의장의 이런 생각에서 정치인 정순평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알게 된다.

정 의장은 “임기가 짧고 회기도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도 충남도의회는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제8대 도의회에서 제9대 도의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충남지사와 정부지사의 공백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원 기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1. 청신도시 조성사업 등 다양한 현안 등이 대기 중이어서 조금도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특히 제8대 도의회의 원만한 마무리를 통해 제9대 도의회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계급장을 달고도 대위나 소령이 많은 본부 종대장을 2년간이나 했다. 대전 일부 케나다 통신원인 이용우씨가 그 당시 함께 해준대 정교로 부우했다. 이용우씨는 고려대 동창이기도 하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정 의장은 대학 시절에 정경대박원 학생회장을 하면서 정치에 눈을 떴다. “20대 후반에 국회의원 노릇 보좌관을 했습다. 상당히 빠른 편이었지요. 10년 정도를 보좌관으로 지내며 여러분의 국회의원을 도왔는데 임원 활동에 특히 주력했습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보람되고 기쁘게 남는 시간입니다. 선두를 천안시장이 국회의원을 하신 때 2년 정도 보좌관으로 모시기도 했습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도청신도시 조성 등 의정 반쯤없이 추진

세종시 문제 원만한 해결점 찾아야

보좌관제 도입 등 의원 전문성 강화 필요

한다”며 “바람 쐬는 기간이지만 고된 의정을 뚝딱해야 처리하겠다고”고 여초에 힘을 주었다.

정 의장의 이런 구상은 평소 스타일을 들여다 보면 된다. 정 의장은 선이 굵은 정치인으로 통한다. 언행이 각고 막힘이 없는 데다 늘 골은 깊은 가리고 있다. 김보에게도 강단이 있어 보이는 데다 옛날에는 특유의 목소리가 지니고 있다. 지역구인 천안에서도 주민들에게 정순평 의장을 물어보면 대개가 비슷할 반응을 꺼낸다. 그러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그에 대해 성의를 보인다.

그의 사명식한 성격과 패기 넘치는 언행은 그의 삶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해병대 출신이다. 보병에서 해병대 장교로 고위 3급4개월을 보냈다. 중위

정 의장은 이후 36세에 충남도의회 배치를 받았다. 배리 2선을 거쳐, 먼저 다양한 경력 경향을 쌓았다. 그는 불소 스타일이 그렇듯이 ‘대중’이 없다. 도의회 생활을 하면서도 무상계 일을 했고 예리하게 파고 들었다. 10여의 보좌관 생활은 한 편이 됐다. 그도 정치 취미가 있었다. 제8대 도의회 선거 때는 행정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도의원직을 사퇴했지만 공천이 안 되면서 4년의 시간을 정치 일선에서 불려나 있어야 했다.

“10월 시장 선거에 나가지도 못하고 도의원직을 사퇴한 탓에 도의원에 할 수 없었던 많은 보훈을 1~2년 지냈습다. 도의원에서가 아니

라 인간 정순평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 상황에 대해서도 더 깊이 1.7계 됐습다.”

3선 도의원으로 또 다른 정치적 포부를 펼칠 때도 하지만 정 의장은 4선 도의원을 위해 나서겠다고 한다. 도로 개성과 수해 사적 복구 등 지역구에 크고 작은 현안들이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원에서 더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도의원 이의의 또 다른 정치적 포부는 없을지? 지난 2008년에는 홍신 출마를 고안한 적도 있었다.

“지금으로부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다. 앞으로는 반향없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천안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도 생각할 적이 있지만 당분간은 도의원의 역할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도의회 의원으로서도 그는 다양한 구상을 품고 있다. “별은 비례를 여는 충남도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충남도의 주정과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장은 세종시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세종시는 큰 문제”라고 현수용 줄어선 뒤 “이제는 일단 또는 수정안으로 결정되면 서로 반대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갈등과 대립이 더 격화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며 하루 열의 원만한 해산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충남도의회에선 세종시에 대한 중정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해 왔다”며 “세종시 본지는 이제 정치 권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충남도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도청신도시 조성사업과 2010 세계대체육전과 2010대충청 방문의

해 개최, 국립대 이전 등 산적한 현안이 있고 도 집행부에서는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이 ‘1인3역’을 하고 있다”며 “도 집행부의 부속한 부분을 재출 수 있도록 이 권한대행을 적극 높고 집행부 전반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인맥이 매우 넓다. 특히 중앙 정치권에는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는 ‘토고 지내는’ 유명 인사들이 적지 않다.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구천서 전 국회의원, 정두언 국회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선후배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지역의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도 꼽힌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충남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과 천안갑지역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요즘 새로운 의회상의 구현에 전념하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 행정의 대해 적극적으로 건간한 감사와 비판 기능을 발휘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도는 물론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에도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도의원을 위한 도의회가 아닌 도민들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 의장은 이어 제9대 도의회 위상에 대해서도 나름의 철학을 밝혔다. “제9대 의회의 가장 큰 변화는 5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보장되는 것인 만큼 교육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어야 합니다. 또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시켜 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통 기자 jyn0213@jyn-irp.com

정 의장은

정순평 충남도의회 의장은 1958년 천안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해방대 중위로 만기 전 역종으로 정남 국회의원 보좌관,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 한나라당 중앙당 상임전국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충남도의회 제5·6·8대 3선 의원으로 지난 22일 충남도의회 제8대 의장보존선거에서 당선됐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83(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새만금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6-8 대표이사 이 재 춘
심의대상기사	새만금일보 2010년 3월 17일자 16면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잘사는 '주식회사 김제' 건설 올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김제시장)와 관련하여 김제시의 민선 4기 시장 공약사업 결산 및 성과보고회 개최 소식 등을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잘사는 '주식회사 김제' 건설 올인

부서별 공약 추진상황 자체평가와
분석 통해 '시민과의 약속' 점검
40개 사업 중 완료 26개·추진 중
13개·장기검토 1개 등 98.06% 이행

김제시는 16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위원장 송해안 교수)과 지역발전협의회(위원장 정세훈 조합장),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 4기 시장 공약사업 결산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서별 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와 점검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결과 전체 40개 사업 중 완료 26개, 정상추진 중인 사업 13개, 장기검토사업 1개 등 지금까지 98.06%를 이행했다며 민선4기 4년 동안 일궈낸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사항은 지난 2월 말 민선4기 4년 즈음에 '시민과의 약속'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 참여한 가운데 공약사업별 추진상황을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와 효과성, 예산확보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 점검해 평가한 것으로 임기내 완료공약과 계속 추진중인 공약으로 구분해 완료, 정상추진, 부진, 불이행 등으로 평가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김제시는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된 5대 분야 15개 사업 40개 세부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행체계를 견고히 다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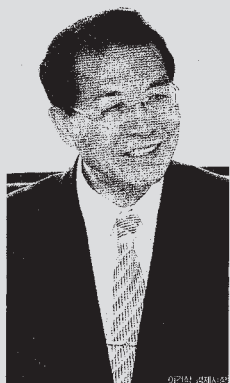
보고회에 참석한 공약이행평가 위원들은 40개 공약사업에 대해 시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정해 내실있게 추진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목표달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 온 전 공무원과 시민들에게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열악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새만금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김제자유무역지역, 대규모농어업회사 설립, 국립 김제 농업생명 청소년수련원 등 유례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했고 향후 10년 후인 2020년경 30만 광역경제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음을

놀이 평가했다.

또한 김제시는 '주식회사 김제' 건설을 위해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성감민(至誠感民)의 시정을 운영하는 점과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농업분야에서는 지평선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과 농업의 구조를 바꾼 녹색·백색혁명 추진, 지평선 총체보리 한우산업 육성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농업모델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건식 시장은 “이번 보고회가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으면 한다”고 전하고 “앞으로 공약은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시민과 지역 사회·단체에 의견을 구하는 ‘소통’과 ‘협력’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후략)



이거작, 강제인:조

김재식은 16일 오전 3층 회의실에서 음악이벤트개발연구
원장 송태환 교수와 지역발전협의회(위원장 신세훈, 조한
중), 송구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1기 시장 공
약사업 결과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illegible]

농공이다. 계속추진 중인 공약으로 부문의 원료, 정성제
진, 국민, 생애행 국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실린 공안영정가 위본들은 42개 공안영정에 대해 사건의 형정수요에 부합하는 원칙가능형 공안영정형의 내실도에 추산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보도발행 위해 발신 되어 있던 온 전 공무원과 시민들에게도 추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열악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중심지라는 자각된 의식을 깨어난 청주시는 김제자유무역지역, 대우 모노에어업회사 설립, 국립 삼계 농업생명 청소년수련원 등 유려한 대우도 국제사명을 유지했고 향후 10년 후인 2020년경 30만 인여경화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해 갔다.

또한 김재지는 '북한외사 김재' 건설을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력할 수 있는 지성강민(至性剛民)의 사정을 응원하는 집회 형식의 교육이 살아야 김재가 산다는 캐치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잘사는 '주식회사 김제' 건설 올인

부서별 공약 추진상황 자체평가와 분석 통해 '시민과의 약속' 점검
40개 사업 중 완료 26개·추진 중 13개·장기검토 1개 등 98.06% 이행

플레이어로 농업분야에서는 지평선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
선과 농업의 구조조치 방안 모색, 녹색혁명 추진, 지평선 농
채배의 연우산간 육성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농업로
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분야에서는 경제사정 완화대책 수립·운영과 기금 조성, 자립선학당 운영 등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경제에서도 방문대에 전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확신했으며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기금 '그루' 등은 타 지자체에 널리 전파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우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보호회가 지난 해와는 되돌아보고 김
책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를 다문해 고찰하는 지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하고 "일
모로 공약은 추진과결함의 하나다 결점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사람과 지역 사회·단체에 의견을 구하는 '소통'과
'협력'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공직자 연금제도, 공직
각종 시정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시행 경쟁력을 제고, 적극적으로
부딪치고 찾아서 알리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했다.

[illegible]

공(산)업·경제

육성 등 종축별 품종관리 일괄화 품종관리 및 연합마케팅을
 전격적으로 있으며, 농에서 비농간 협회 차이는 고정
 관습을 따르며 거대한 유류농장과 동물, 작물 자원에 식량,
 식도자원을 재배해 자급률을 높이고 경관조성과 1인당 아
 싼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축·림·수·박·생물·수질,
 종·채·비·리·수·산·수출 등 농업의 구조를 바꾸고 FTA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모형을 제시했다. 또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농업중심에서 첨단산업도시로의 토대를 마련, KIX공역권과 25,000여 ha 일지리, 4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제시는 새만금 개발의 최후진 수혜지역을 위한 활동으로 새만금지구 일리리 행정구역 설정 노력 등 새만금 경제자유존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 경제 협력 선연이 관광, 육상, 새만금 풍력발전 발전사업, 관광 100만명 서방운동 전개,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등 김제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지·도시환경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불거노인 어울림 생활기장 "그늘-봄"을 총 95개소 조성, 불거노인 2,500여세대에 무선외출서비스를 설치해 실시간 관리하고있다.

또 시는 골과 숲이 부족한 김제지역에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저두리 골가를 이용해 도시숲 조성으로 아름다운

시 이미지 재고하고자 현대식 화장교차로를 설치해 친환경 교차로 내부공간에 분수시설, 조형물 설치, 야간조명 등 운전 중, 도로시 눈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부권 행정 농촌포털 도시 조성으로 장주여관을 마련해 도시 및 유입 등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지사는 백골재 복원 및 주변경
관을 통해 위시봉으로부터 철마동
업까지 큰 강대를 느끼고 저런할
수 있는 세계적이 투혼을 가진 만들고 아름다운 공예가

화하기 위해 6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지평선축제를 통해 벽골제를 전국적, 세계적으로

또한 지면하부의 천하와 지면 채육공형 발생과 발인으로 분화채육공형내 수원지 주변을 자연천하의 육식공간으로 조성한 가족형 월반공형으로 조성하고, 분화채육공형내 천하의 천하 대안형 생활채육공간을 화공형의 위와 지면 채육공형의 천하와 함께 전국 규모의 각종 수조조제와 동계 천하 유적 주변 지면 및 광공의 수조가 지층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年 12月



TIME-LOCAL ORDER



1967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의 결 번 호	2010지선102(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새만금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6-8 대표이사 이 재 춘
심의대상기사	새만금일보 2010년 3월 17일자 3면 『제16대 전북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오근량 예비후보 지지율 ‘최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북도 교육감)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 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 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 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제16대 전북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오근량 예비후보 지지율 ‘최고’

오근량 25% > 박규선 13.8%

김승환 7.7% > 고영호 6.6%

오근량 전북교육감선거 예비후보가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2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박규선 예비후보가 13.8%로 뒤를 이었으며 1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승환 예비후보가 7.7%, 고영호 예비후보와 신국중 예비후보가 각각 6.6%와 5.9%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무려 41%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 향후 선거 공방에 따라 각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오 후보는 “지속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1등을 달리

고 있는 것은 도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근량 전북교육감선거 예비후보가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2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박규선 예비후보가 13.8%로 뒤를 이었으며 1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승환 예비후보가 7.7%, 고영호 예비후보와 신국중 예비후보가 각각 6.6%와 5.9%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무려 41%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 향후 선거 공방에 따라 각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오 후보는 “지속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1등을 달리

고 있는 것은 도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03(자심)
언 론 사	(주)월요문화사 서울 노원구 공릉3동 312-3 정호빌딩 3층 대표이사 차 원 기
심의대상기사	월요신문 2010년 3월 21일자 7면 『당심 바로미터 ‘집안(?)’ 선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구시장, 경북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당심 바로미터, ‘집안(?)’ 선거

초반 대구, 경북 현직 우세

(전략)여권 내 쉼법이 복잡한 만큼 대구, 경북지역의 지방선거 열기는 텃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그런데 현행 박 전 대표의 아성인 대구의 경우, 공교롭게도 친이명박계 성향으로 분류된 김범일 시장이 맡고 있다. 김 시장은 오는 선거에서 재선을 노려 출마가 예고된 상태다. 당내, 계파 갈등의 관점에서 박 전 대표의 진지 한복판에 적장(?)이 진을 친 격이다. 친박계의 파상적인 공성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표 측, 다시 말해 친박계의 공세도 예고된 상황이다. 선봉엔 대구 북구 출신의 서상기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서 의원이 출마할 경우, 양측은 지난 선거에 이어 재차 격돌하게 된다.

현재로서 여론은 현직에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김 시장은 전체 응답자 중 39.9%가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선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서 의원은 4.7%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부에서는 김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 중이라는 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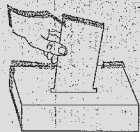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향후 경선 등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당내, 양대 계파가 자존심을 걸고 맞설 경우, 예측 불허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수성전, 공선전 접전 예고

반면, 대구와 달리 경북은 박 전 대표의 아성답게 친박계로 분류된 김관용 지사가 버티고 있다. 김 지사 역시,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 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는 40.1%의 지지율을 기록해 2위 그룹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바 있다.

이에 반해 친이계로 정장식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앞세워 경북 탈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정 전 원장은 11.7%를 기록해, 현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친이측에선 권오을 전 의원의 출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당심 바로미터, '집안(?)'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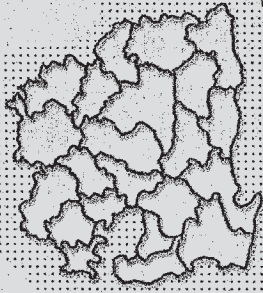


6.2 직돌

⑥ 대구, 경북

각들의 석막이 몰렸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달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맞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사전 선거 운동이 일부 허용되는 등 박 후보에 비해 일찌감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사를 고심해온 일부 후보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이로써 올여, 최대 정치 이슈인 6.2 지방선거가 대안권의 막을 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6월 지방선거는 올여록 출현 3년 차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과 아울러, 정치권으로서도 향후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라는 점에서 격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중 광역시장 단체장의 경우, 중앙 정계의 각 권력기가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에게조차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당별, 정당별 전략을 지역별로 나눠 살펴본다. 대구, 경북지역을 조망한다.



호남권이 민주당 등 야권의 정통적인 텃밭이라면, 영남권은 한나라당의 안방이다. 더욱이 이른바 'TK'로 불리며, 오랜 기간 정치권과 주류층이 뒀던 대구, 경북은 사실상 야권의 본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현상에 이견을 달리라는 이는 없다.

초반 대구, 경북 현직 우세

그러나, 6월 선거를 앞둔 여권은 아쉽게도 비례 꽤나 긴장하는 눈치다. 대구, 경북지역이 전통적인 여권의 텃밭이라고 해도,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로 나뉜 당내 사정에 비해 본진보다는 예선이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당내 비주류로 내려앉아 인구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양 지역은 정치적 고장이 다 나뉘었다. 두터운 보수층에, 이미지가 박진희 전 대통령에 대한 감수가 타지역보다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여기에 박 전 대표의 지역구 역시, 대구 달성군이다. 그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의 땅주는 단연, 박 전 대표다.

반면, 여권의 핵심이 친이계라는 점은 이번 선거가 경선부터 난타전으로 일목일수 있음을 의미한다. 친이 측이 박 전 대표 측의 기세를 꺾고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

을 쥐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의 승리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지역 정치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근거해 이번 선거의 성패는 직계는 계파대전의 대리전으로, 크게는 정국 주도권과 나아가 차기 대권에도 지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쟁점이 복잡한 만큼 대구, 경북지역의 지방선거 열기는 텃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그런데 현직 박 전 대표와 이명박 대구의 경우, 종교계로 친이명박계 성향으로 분류된 김범일 시장이 맡고 있다. 김 시장은 오는 선거에서 재선을 노려 출마가 예고된 상태다. 당내, 계파 갈등의 관점에서 박 전 대표의 진지한 태도에 적절(?)이 진을 친 것이다. 친박계의 과잉적인 공생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표 측, 다시 말해 친박계의 공세도 예고된 상황이다. 선불연 대구 북구 출

'계파 대리전', 친이-친박 텃밭서 일대 결전 예고 사실상 박근혜 아성, 이명박세워 친이도 도전장

신의 서삼기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서 의원이 출마할 경우, 양측은 지난 선거에 이어 재차 격돌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여론이 현직에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여 초, 발표된 중앙일보 조사

에 따르면, 김 시장은 전체 응답자 중 39.0%가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선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서 의원은 4.7%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김 시장이 연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70%

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 중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향후 경선 등 후보 선출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당내, 양대 계파가 자존심을 걸고 맞설 경우, 예측 불허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

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수성전, 공생전 점전 예고

특히 차기 대권을 노리는 박 전 대표로선 안정적 대권 가도를 위해서는 '본진'이 있는 대구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 열기는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구와 함께 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면, 대구와 달리 경북은 박 전 대표의 이명박계 친박계로 분류된 김관용 지사가 버티고 있다. 김 지사 역시, 연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는 40.1%의 지지율을 기록해 2위 그룹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친이계도 정장식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앞세워 경북 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정 전 원장은 11.7%를 기록해, 현역 파 큰 차이를 보였다. 친이측에선 권오용 전 의원의 출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경북이 박 전 대표의 아성인 만큼, 친이 측의 도전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차기 권력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류 측도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최근 정국에 논란을 던지며 구원수에 오른 청와대 이통과 홍보수석의 소위 'TK 편파' 발언도 따지고 보면, 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론 환기라는 시늉이다. 텃밭에 큰물이 예상되는 이유다.

〈김광수 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129(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인천신문 인천 연수구 청학동 496-1 대표이사 이 광 립
심의대상기사	인천신문 2010년 4월 20일자 15면 『두명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와 두 개의 보이콧』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와 관련하여, 후보예정자 두 명의 환경정책 및 도덕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도덕성이 뒤떨어진다는 취지의 외부기고문을 게재하여 특정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11조(외부기고 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두 명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와 두 개의 보이콧

항상 연말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한해를 마무리 짓는 한자와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선택된 글자에 한해의 모든 상황을 함축하는 대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있다. 연말은 아니지만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중간점검하면 어떤 말이 적절할까 싶어 찾아보니 '보이콧'이란 말이 먼저 떠오른다.

보이콧은 정치적 단체나 시민, 소비주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 항의의 수단으로 항의 대상과의 거래를 끊거나 거부하는 자발적 사회 행동이다.

지난 17일 인천 부평아트센터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행사가 예년과는 달리 진행되어 인천시의 참여가 배제된 채 민간부문으로만 진행되었다. 그동안 안상수시장과 시민사회 진영과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일촉즉발의 긴장관계가 지구의 날 행사로 표출된 것이다. 예년의 지구

의 날, 물의 날 등 환경 관련 행사에 인천시가 장소, 예산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주요 행사에는 안상수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곤 했다.

하지만 이번 지구의 날 행사는 계양산 골프장, 굴업도 골프장, 검단-장수 민자도로 등 환경문제로 커다란 간극을 보이는 인천시와 안상수시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항의의 표시로 인천시와 안상수시장의 참여를 배제시킨 대표적 환경 보이콧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이번 결정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선례와 부담이 될 것이다. 환경은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과 시민단체간의 대립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넘어 소모적 장기 대립관계가 지속된다면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하루 속히 양자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다행히 행사에 참석치 않은 안 시장이 당일 '인천 S자 녹지축' 조성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녹지축 연결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 휴식공간이 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전향적인 환경정책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민사회 특히 환경단체 주도로 의미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 보이콧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관련하여 민주당 지도부에서 밀어 붙이고 있는 송영길 후보의 자격에 관한 시민사회 진영의 거부감이다.

송영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계양구는 계양산 골프장, 경인운하 문제로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투쟁역량이 집결된 곳이다. 시민단체들은 줄기차게 송영길 의원의 야권단일후보로서의 부적절함을 제기하고 두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송 의원은 한번도 명쾌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찬성하는 행태를 보이며,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진영은 환경단체들의 성명발표에 이어 사제단 신부님들까지 나서서 송영길 의원의 경인운하·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환경철학을 밝히라는 질책성 공개표명이 이루어졌다.

환경철학에서 안상수시장과 다를 게 없고 도덕성에서는 뒤떨어지는 송영길 의원이 야권단일 후보만 된다면 당선된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송영길 의원이 재벌기업에서 돈을 받아 벌금내고, 민주화성지 광주에서 5·18전야제에 참석해 접대여성을 동석해 술자리를 벌여 빈축을 산 일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후보를 야권단일 후보로 추진하는 민주당은 인천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오만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인천의 시민사회가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송영길 보이콧에서 민주당 보이콧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외길이다. 시민사회는 좋은 환경 후보를 원하는 것이지 유명한 민주당후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두명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와 두 개의 보이콧

환경 운동이 되면 대안교수들이 한쪽을 따르려 하는 한자와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섣달년 글자에 한해의 모든 상활을 함축하는 다 사화적 메시지가 담겨있다. 연박은 아니지만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중간격하면 어떤 말이 적절할까 싶어 찾아본다. '보이콧'이란 말이 먼저 떠오른다.

보이콧은 정치적 단체나 시민, 소비주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 합의의 수단으로 항의 대상과의 거래를 끊거나 거부하는 자발적 사회행동이다.

지난 17일 인천 부평아트센터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행사가 예년과는 달리 전행도에 인천시의 참여가 배제된 채 민간부문으로만 진행되었다. 그동안 안상수시장과 시민사회 조율과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원성권 일족축발의 긴장관계가 지구의 날 행사로 표출된 것이다. 예년의 지구의 날, 몸의 날 등 환경 관련 행사에 인천시가 장소, 예산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주요 행사에는 안상수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호사를 해주곤 했다.

하지만 이번 지구의 날 행사는 계양산

환경칼럼

이장수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암포장, 골업도 골포장, 굿단-장수 민자도보 등 환경문제로 커다란 간극을 보이는 인천시와 안상수시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항의를 표시보 인천시와 안상수시장에 참여를 배제시킨 대표적 환경 보이콧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이번 결정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선택과 부담이 될 것이다. 환경은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과 시민단체간의 대립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넘어 소극적 정치 대립관계가 지속된다면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하두속6 암자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다행히 행사에 참석치 않은 안 시장이 당임 '인천 S자 녹지호' 조성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환을 점검하며 '녹지속 연결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

유식공간이 되게 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전향적인 환경정책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민사회 특히 환경단체 주도로 의미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 보이콧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관련하여 민주당 지도부에서 밀어 붙이고 있는 송영길 후보의 자격에 관한 시민사회 진영의 거부감이다.

송영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계양구는 계양산 골프장, 경인운하 문제로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투쟁역량이 집결된 곳이다. 시민단체들은 줄기차게 송영길 의원의 야권단일후보로서의 부적절함을 제기하고 두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송 의원은 한번도 명쾌한 입장

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찬성하는 행태를 보이며,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진영은 환경단체들의 성명발표에 이어 사제단 신부님들까지 나서서 송영길 의원의 경인운하·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환경철학을 밝히라는 질책성 공개표명이 이루어졌다.

환경철학에서 안상수시장과 다를 게 없고 도덕성에서는 뒤떨어지는 송영길 의원이 야권단일 후보만 된다면 당선된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송영길 의원이 재벌기업에서 돈을 받아 벌금내고, 민주화성지 광주에서 5·18전야제에 참석해 접대여성을 동석해 술자리를 벌여 빈축을 산 일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후보를 야권단일 후보로 추진하는 민주당은 인천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오만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인천의 시민사회가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송영길 보이콧에서 민주당 보이콧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외길이다. 시민사회는 좋은 환경 후보를 원하는 것이지 유명한 민주당후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35(자심)
언 론 사	(주)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변 용 식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0년 4월 22일자 E3면 『“자녀와 찾으면 유익한 과학도시”-박성효 대전시장』 및 『“청정 자연 속에 편히 쉬다 가세요”-정우택 충북도지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2010 충청방문의 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전시장, 충청북도지사) 후보예정자인 현 단 체장의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특정 후보예정자들에게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자녀와 찾으면 더 유익한 과학도시”

박성효 대전시장

“대전은 지난해 세계우주대회(IAC)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제90회 전국 체전도 성황리에 마무리했어요. 그만큼 손님맞이를 잘했다는 뜻이지요. 올해도 따뜻한 미소와 푸짐한 인정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박성효(朴誠孝) 대전시장은 대충청방문의 해와 관련, “대전관광 글로벌화시대 진입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모든 이들이 ‘오길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정성껏 준비했다”고 말했다.(후략)

“자녀와 찾으면 더 유익한 과학도시”

박성효 대전시장



“대전은 지난해 세계우주대회(IAC)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제90회 전국 체전도 성황리에 마무리했어요. 그만큼 손님맞이를 잘했다는 뜻이지요. 올해도 따뜻한 미소와 푸짐한 인정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박성효(朴誠孝) 대전시장은 대충청방문의 해와 관련, “대전관광 글로벌화시대 진입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모든 이들이 ‘오길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정성껏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교통, 주거, 먹거리, 즐길거리 등 모든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나 도시가 아름답다”며 “누구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전은 과학·교통·행정·문화적인 성격을 갖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직 덜 알려져 있지만 녹색성장의 선두 도시가 바로 대전입니다.”

박 시장은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도심이 온통 푸르거렸고, 3대 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시내를 관통하는 강은, 유등천, 대전천이 시민의 쉼 공간을 만든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사, 한양수목원, 유원공원 등 도시가 아름다워 볼거리를 갖춘 도시로 거듭났다. 아름다운 자연거울 뽕나무와 목련이어서 반짝이는 야간 자연거울대시시스템 ‘타슈’는 전국적인 견본 대상이다.

“도시 생활은 더러워지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카누와 카약이 다니고 아이들이 책을 강습한다. 대전천의 아름다움과 활기찬 풍경이지요.”

박 시장은 “온 천을 보며 ‘북극의 보네상스’와 같은 여름 가장 아름다운 세계 최북대 눈꽃의 수목원인 보물섬 이브레일도도 ‘광물 대전’의 두꺼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는 6월 내로로온 초아공립 유아유치원 개원한 비롯해 많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과학공원 등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연구단지)는 국내외 함께 향유할 대우 유익하다”고 구명했다.

이는 과학·연구·도시 속 녹색생활은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강점이 될 것”이라며 “대전에서 한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힘써 말했다.

충남을 만나게 보시기 위해 왔든 어디에서든 대전시를 방문 시에도 소개했다. 시민과 관광객이 도개 분야의 70여개 이벤트를 위해 즐기는 ‘나와유 (I&YOU)’ 경제인물 비주얼 코디를 했다. 대전 그린드 세일 위문아카데미도 눈여겨 보았다.

박 시장은 “대전은 왔으면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과 선서로 가득차”며 방문을 권했다.

임도혁 기자 dsh@kbsnews.com

“청정 자연 속에 편히 쉬다 가세요”

정우택 충북지사

“충북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전국 어느곳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짬을 내서 찾아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대충정방문의 해를 맞아 손님맞이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우택(鄭宇澤) 충북지사는 “2012년까지 추진되는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한 각종 사업을 아낌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중략)

곧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정 지사는 “올해는 손님맞이에 바쁜 와중에도 참 많은 일들이 전개될 것”이라며 “국력을 한층 신장시키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 힘을 합쳐 우리의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각종 난관을 현명하게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 자연 속에 편히 쉬다 가세요”

정우택 충북지사

“충북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전국 어느곳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짬을 내서 찾아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대충정방문의 해를 맞아 손님맞이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우택(鄭宇澤) 충북지사는 “2012년까지 추진되는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아낌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내일의 숨은 보석, 청정 충북’을 주제로 관광력을 보여주기 위한 10대 사업을 선정, 특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토 최초의 한라산 관련 다국보 축제행사인 재원국제한라산악페스티벌 등 관광력 증진에 높은 축제경기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정 지사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2010년의 지 원관광을 운영하고 관광안내도 정비, 관광홍보사업에 대한 관광·서비스교육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여왔다”며 “충북을 대표 ‘맛집’과 ‘빈스’의 속 백역소 200곳을 선정해 전국 최초로 구획한 명집 투어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지사는 “충북은 소백산·월악산·속리산 등 3개 국립공원과 중추호·대청호 등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는 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간직한 신비의 고장”이라며 “인공이 개입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색다른 체험을 하고 싶다면 충북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정 지사는 “도민들이 손님맞이를 위한 일반의 준비를 갖추고 충청도 특유의 온화함과 친절, 마스코트 달린 일상에 지친 여행자에게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제공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외자유치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특



도(道) 건설은 강조했다. 정 지사는 “경제 못지않게 문화예술이나 관광분야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선진도’ 건설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도정당 우선순위에 두었다”며 “문화선진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적 가치와 배려를 갖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문화예술포럼을 창립하겠다”고 밝혔다.

앞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정 지사는 “올해는 손님맞이에 바쁜 와중에도 참 많은 일들이 전개될 것”이라며 “국력을 한층 신장시키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 힘을 합쳐 우리의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각종 난관을 현명하게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환 기자 you@hankyung.com

의결번호	2010지선138(자심)
언론사	국민일보(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대표이사 조 민 제
심의대상기사	국민일보 2010년 4월 28일자 3면 『‘친노’ 김두관 단일화 경남 ‘대마’ 이완구 불출마 충남 新격전지 반집승부?』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상남도 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친노’ 김두관 단일화 경남 ‘대마’ 이완구 불출마 충남

新격전지 반집승부?

경남과 충남이 6·2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남에서는 한나라당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무소속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격돌한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장관 출신끼리 맞붙은 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반이명박 표가 결집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국 첫 야권 단일화 후보라는 점에서 단일화 효과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장관 측은 27일 “단일화 전만 해도 ‘되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단일화 이후엔 여기 말로 ‘그

라모 됐다(그러면 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이 전 장관 캠프는 “이 후보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지지율도 증가하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 호를 수록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장관이 10% 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충남도지사 선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주민투표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박해춘 전 국민공단이사장과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3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유력한 후보였던 이완구 전 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각당의 총력전도 시작됐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보다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된다”며 수정안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진당 박의원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충남도민의 70% 이상이 원안사수를 바란다”며 “박 전 이사장의 발언은 충남도민의 마음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친노 직계인 안 최고위원 역시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세종시를 둘러싼 후보의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 경우 한나라당 경선에서 현명관 삼성물산 상임고문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무소속 우근민 전 지사와 민주당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간 치열한 삼파전이 예상된다.

‘친노’ 김두관 단일화 경남

‘대마’ 이완구 불출마 충남

新격전지 반집승부?

경남과 충남이 6·2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남에서는 한나라당 이달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무소속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격돌한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장관 출신끼리 맞붙은 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반이명박 표가 결집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국 첫 야권 단일화 후보라는 점에서 단일화 효과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장관 측은 27일 “단일화 전만 해도 ‘되겠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단일화 이후엔 여기 밀로 ‘그라모 됐다(그라뎀 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이 전 장관 캠프는 “이 후보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지지율도 증가하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 흐름수축 지지를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장관이 10% 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충남도지사 선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주민투표나

다들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박해준 전 국민공단이사장과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3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유력한 후보였던 이완구 전 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각 당의 총력전도 시작됐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보다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된다”며 수정안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진당 박 의원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충남도민의 70% 이상이 원안사수를 바란다”며 “박 전 이사장의 발언은 충남도민의 마음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돌아세웠다. 친노 직계인 안 최고위원 역시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세종시를 둘러싼 후보의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 경우 한나라당 경선에서 현명관 삼성물산 상임고문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무소속 우근민 전 지사와 민주당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간 치열한 삼파전이 예상된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139(자심)
언 론 사	(주)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심의대상기사	동아일보 2010년 4월 28일자 A8면 『6·2 지방선거 D-35…판세 가를 與 3 大 변수 여론조사 착시? 충북지사 사수? 수도권 기초長?』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 충청북도지사)와 관련하 여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 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여론조사 착시? 충북지사 사수? 수도권 기초長?

● 여론조사 착시현상 있나?

(전략)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대부분 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당 후보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서야 승리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여론조사 때 숨어 있던 야당 표가 선거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6%포인트 정도 앞서는데 그쳐 ‘빨간불’이 켜졌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민주당 김민석 후보에게 막판 여론조사에서 3%포인트가량 뒤졌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9.8%포인트 차로 승리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번 선거에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바람’이 없기 때문

에 숨은 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막판까지 5%포인트 이상만 앞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충북지사 선거도 관전

한나라당에 충청권은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충남에선 지지율이 높은 이완구 전 지사 대신 박해춘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공천해 실리를 포기하고 명분을 택했다. 가까스로 이 전 지사가 불출마하고 박 전 이사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안전판을 확보했지만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세종시 수정 문제로 충청권 표심이 들끓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 논란에서 비켜서 있는 충북지사 선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우택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로 민주당 이시종 후보를 앞서고 있으나 충북은 민주당세가 워낙 강한 데다 ‘개발 소외론’도 잠복해 있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송태영 도당위원장은 “정 지사의 도정 지지율이 높아 조심스럽게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충북 청주흥덕을)은 “여론조사의 여당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근소하다면 이미 판세는 이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고 주장했다.(후략)

여론조사 착시? 충북지사 사수? 수도권 기초長?

1 수도권 광역특 야당에 앞서지만
투표때 숨은 야당표 나올지 촉각

2 세종시 논란에 들끓는 충청표심
與, 정우택 충북지사 선전 기대

3 광역과 달리 대부분 민주에 밀려
당내 비판론속 일부 긍정 전망도

6·2지방선거가 28일로 3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세 선거 판세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천안·함정'을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후보 단일화 문제로 내부 결속에 차질하고 있어 아직까지 판세를 뒤흔들 큰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데 따른 '착시(錯視) 현상' 논란 등이 전체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여론조사 착시현상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대부분 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당 후보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서야 승리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여론조사 때 숨어 있던 야당 표가 선거 때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민주당 안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6%포인트 정도 앞서는 데 그쳐 '탈간봉'이 커졌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민주당 김탄석 후보에게 밀려 여론조사에서 3%포인트가량 뒤졌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9.8%포인트 차로 승리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원 핵심 당직자는 "이번 선거에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바람'이 없기 때문에 숨은 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미반까지 5%포인트 이상만 앞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충북지사 선거도 견전

한나라당에 충청권은 강권 세력을 차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충남에선 지

지율이 높은 이원구 전 지사 대신 박해춘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공천해 실리를 포기하고 명분을 택했다. 가까스로 이 전 지사가 불출마하고 박 전 이사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안건만을 확보했지만 '실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세종시' 수경, 문계로 충청권 표심이 흔들렸지만 한나라당은 이 논란에서 비켜서 있는 충북지사 선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우택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로 민주당 이시종 후보를 앞서고 있으나 충북은 민주당세가 워낙 강한 데다 '개발 호의'도 잡목에 있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송대영 도당위원장은 "정 지사의 도정 지지율이 높아 조심스럽게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충

북 청주흥덕을)은 "여론조사의 여당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격차가 근소하다면 이미 판세는 이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고 주장했다.

● 여,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 참패?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는 강남(강남구·서초구) 빼고 다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서울과 경기의 여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대부분 민주당에 밀리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내에서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0곳 정도만 이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상승세를 탄다면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별정훈 기자 aamhadi@donga.com

의 결 번 호	2010지선144(자심)
언 론 사	(주)헤럴드미디어 서울 중구 정동 1-17 대표이사 박 행 환
심의대상기사	헤럴드경제 2010년 5월 3일자 5면 『텃밭 제외 표심 ‘예측불허’ …한나라 10곳 수성 최대관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 등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정확한 근거 없이 각 정당별 판세를 분석하였고, 일부 도표(경남도지사)는 기사내용과 달리 특정 정당이 우세한 것으로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및 제6조(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텃밭제외 표심 '예측불허' ... 한나라 10곳 수성 최대관심

(전략)이 밖에 경남의 이달곤(한나라당)·김두관(무소속) 후보, 제주의 현명관(한나라당)·고희범(민주당)·우근민(무소속) 후보도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울산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후략)

텃밭제외 표심 '예측불허'...한나라 10곳 수성 최대관심



의결번호	2010지선184(자심)
언론사	(사)대한청소년육성회(대한투데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966 14동 209호 발행인 우 정 자
심의대상기사	대한투데이 2010년 5월 31일자 4면 『“아버지는 군민을 사랑하기에 출마했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천군수)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자녀가 지원유세를 하여 눈길을 끌었다는 내용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및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아버지는 군민을 사랑하기에 출마했다”

김경희 진천군수 후보 딸 유권자 마음 흔들어

김경희 미래연합 충청북도 진천군수 후보의 차녀 보연양(21)이 29일 오후 덕산장터에서 아버지의 지원유세에 나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보연양은 이날 덕산 유세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지지를 호소하면 아마 몇몇 분들은 ‘또 출마했나’, ‘참 자주도 나온다’고 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라며 “가족 모두가 반대했다. 고 집을 꾸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도 했다”고 가족들의 얘기를 회상했다.

이어 “아버지는 현 단체장의 부족한 군정으로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진천군민과 함께 옮기 위해 군수가 되고 싶어 나간다고 출마의지를 꺾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연양은 “아버지는 나만 잘 살고 가족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부끄러워했다”며 “인간 김경희는 나와 가족들의 아버지가 아닌 바로 진천의 아버

지였고 진천의 아들이었고 진천의 자식이었으며 진천의 머슴이자 일꾼이었다”고 전했다.

보연양은 “아버지는 군민들의 고단한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기 보다는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며 “자신의 자식보다도 자신의 아내보다도 더 진천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군수가 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버지의 강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많이 사고 아버지의 진짜 가치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면 저는 정말 아버지의 딸이 아닌 진천의 딸로써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보연양은 “김경희를 찍지 않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것 하나만 생각해 달라”며 “누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누가 더 행복하게 해줬는지 생각해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보연양은 “김경희 개인에게 표를 주지 말고 지난 8년간 군수로 있으면서 이룩했던 업적과 능력에 표를 달라”며 “김경희를 찍는 순간 진천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연양은 진천여중과 청주여고를 졸업했으며 미국 미시건주에 위치한 웨인주립대학교 대

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부4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후보를 지원유세하면서 “아버지의 당선을 눈물로 호소하는 딸”로 보도돼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의 메인페이지를 장식, 청년층의 표심을 흡수하는 파괴력을 보여줬다.

“아버지는 군민을 사랑하기에 출마했다”

김경희 진천군수 후보 딸 유권자 마음 흔들어



김경희 진천군수 후보의 딸 보연양이 “아버지는 군민을 사랑하기에 출마했다”며 주민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다.

김경희 미래연합 충청북도 진천군수 후보의 차녀 보연양(32)이 29일 오후 덕산장터에서 아버지의 지원유세에 나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보연양은 이날 덕산 유세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지지를 호소하면 아마 몇몇 분들은 ‘조출마했다’, ‘갑 지수도 나온다’고 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라며 ‘가족 모두가 반대했다. 고집을 꺾지 않는 아버지를 댈만도 했다’고 가족들의

대기를 회상했다. 이어 “아버지는 열 단체장의 부후한 군정으로 파탄하고 젊은 삶을 살고 있는 진천군민과 함께 살기 위해 군수가 되고 싶어 나간다고 출마의지를 꺾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연양은 “아버지는 나만 잘 살고 가짜만 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부끄러워 했다”며 “인간 김경희는 나와 가족들의 아버지가 아닌 바르. 진천의 아버지였고 진천의 아들이었고 진천의 자식이었으며 진천의 마음이자 일

권이 있다고 전했다.

보연양은 “아버지는 군민들의 고단한 삶과 눈물을 대아주시기 보다는 그들과 함께 맘 졸임과 눈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며 “자신의 자식보다도 자신의 아보다도 더 진천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군수가 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버지의 강한 모습 때문에 오해도 많이 사고 아버지의 진짜 가치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는 정말 아버지의 딸이 아닌 진천의 딸로써, 장으로 안타깝고 용한을 남일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로했다.

특히 보연양은 “김경희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것 하나만 생각해 달라”며 “누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나은 실적을 올렸으며 누가 더 행복하게 해줬는지 생각해”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보연양은 “김경희 개인에게 표를 주지 말고 지난 8년간 군수로 있으면서 이뤄왔던 일들과 농약에 표를 달라”며 “김경희를 꺾는 순간 진천의 미래와 아버분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연양은 진천여중과 향주여고를 졸업했으며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웨인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부4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후보를 지원유세하면서 “아버지의 당선을 눈물로 호소하는 딸”로 보도돼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의 메인페이지를 장식, 청년층의 표심을 흡수하는 파괴력을 보여줬다.

4. 권고

의 결 번 호	2010지선1(자심)
언 론 사	(주)아시아투데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1 인영빌딩 대표이사 백 석 기
심의대상기사	아시아투데이 2010년 2월 2일자 5면 『요동치는 충청권 판세는?』, 『수도권 단 체장 판세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객관적 기준 없이 제목과 사진을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들을 유력후보라고 부각 보도해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 대전시장 유력후보 박성효, 염홍철
- 충북지사 유력후보 정우택, 홍재형
- 충남지사 유력후보 정중환, 안희정

요동치는 충청권 판세는? ‘세종시’ 최대 이슈, 시계 제로

(전략)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점쳐지는 대전·충남도지사 선거는 한마디로 ‘시계제로’ 상태다.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들은 저마다 세종시 문제 해결을 최대 공약 사항으로 내걸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우선 대전 시장에는 현역인 한나라당 소속 박성효 시장과 민주당 선병렬 의원, 김원웅 전 의원, 선진당 염홍철 전 시장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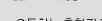
전·현직 시장들의 2강 대결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박 전 대표의 ‘원안 고수’ 입장에 힘을 실으며 민심 추이를 살피고 있고, 염 전 시장은 행정혁신도시 건설 등을 제시하며 지난 선거 때의 설욕을 다지고 있다.

충남도지사에는 사퇴한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전 지사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 최민호 소청심사위원장(전 충남도 행정부지사), 박태권 전 충남도지사,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선진당 류근찬, 이명수 의원, 이용길 진보신당 부대표,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정우택 현지사, 민주당 이시중, 홍재형 의원의 도전이 점쳐지는 충북도지사 선거는 세종시 파급력이 약화되면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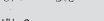
한나라당 소속 정우택 현지사, 민주당 이시중, 홍재형 의원의 도전이 점쳐지는 충북도지사 선거는 세종시 파급력이 약화되면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조시’ 최대 이슈

24780 • J. Neurosci., September 24, 2008 • 28(39):24773–24781

한나라당은 세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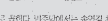
2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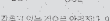
附 錄 二

경원·점두연 의원, 유민호 문화체육관광



Page 10 of 10





370

의 결 번 호	2010지선3(자심)
언 론 사	(주)씨비에스노컷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917-1 기독교방송회관 18층 대표이사 이 재 포
심의대상기사	데일리노컷뉴스 2010년 2월 4일자 10면 『첨단·친환경...인천이 도시의 패러다임 바꿀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와 시장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첨단·친환경... 인천이 도시의 패러다임 바꿀것

인터뷰/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국제도시로 우뚝 선 인천광역시를 이끌고 있는 안상수 인천시장. 그가 계획한 '인천발전'의 모델은 '성장'과 '환경'이다. 최근들어 인천의 발전 속도는 그야말로 눈부시다. 송도국제도시, 영종도·청라지구 등이 국제물류 비즈니스 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또 지난 해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인천대교의 개통도 전국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2009년 여름부터 80일 동안 치러진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인천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뿐만 아니라 인천은 현재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 건설을 준비 중이고 연세대학교 등 국내 우수대학의 캠퍼스를 유치해 교육의 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돼, 이때쯤이면 인천의 국제적 위상은

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천의 신성장동력을 진두지휘하는 이가 바로 안 시장이다. 그는 8년 전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인천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개발과 함께 인천대교 건설, 인천세계도시축전 등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 건설과 대학캠퍼스 유치,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도 이뤄냈다. (중략)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얼마 전 인천시장 3선 도전을 선언한 그는 선거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8년 동안 이룩해놓은 성과물이 시민들에게 좋게 평가 받고 있어, 안 시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게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중략)

실제로 통계수치를 보면 그동안 인천은 타도시에 비해 200%에 가까운 성장을 이룩했다. 지난해에만 우리나라 전체 건설공사량 가운데 15%가 인천에서 발주됐고,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의 특수으로 인해 인천에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안 시장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거에 대해 "선거라는 것이 개표

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선거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겸허히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겸손함을 보였다. (중략)

이처럼 우리나라 근대사를 모아 놓은 인천이 고전을 지키면서 첨단과 환경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며 활기찬 국제도시 '미래비전이 있는 도시'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안시장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후략)

첨단·친환경...인천이 도시의 패러다임 바꿀것

인터뷰/ 안 상 수 인천광역시장

국제도시로 우뚝 선 인천광역시를 이끌고 있는 안상수 인천시장. 그가 계획한 '인천발전'의 모태는 '성장'과 '환경'이다. 최근들어 인천의 발전 속도는 그야말로 눈부시다. 송도국제도시, 영종도, 청라지구 등이 국제물류 비즈니스 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또 지난 해 전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인천대교의 개통도 전국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2009년 여름부터 80일 동안 치러진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인천을 경성상부한 국제도시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뿐만 아니라 인천은 현재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 건설을 준비 중이고 연세대학교 등 국내 유수대학의 캠퍼스를 유치해 교육의 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2014년에는 인천아시아게임이 열리게 돼, 마태폭이던 인천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천의 신성장동력을 진두지휘하는 그가 바로 안 시장이다. 그는 8년 전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인천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개발과 함께 인천대교 건설, 인천세계도시축전 등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자율형사·공립고 건설과 대안캠퍼스 유치, 그리고 2014년 아시아게임 유치도 이뤄졌다.

는 지혜와 북돋움에 모여 열로 제지리되 예나시로 사용된다. 이런 시스텔은 인천이 세계 최초 "이제"도 전부터를 알리고 모든 진실을 담고 대설해 각 시에서 접촉하게 해냈다"고 밝혔다.

이이 안 시장은 "인천을 캐나다 밴쿠버보다 한 층 높은 국제도시로 만들 계획"을 밝혔다.

도시계획전문가들 사이에서 인

송도국제도시·청라 국제물류 단지 등 '눈부신 성장' 쓰레기통·전신주 없는 녹색공간... '국제도시 거듭날 것'

안 시장은 "인천은 '폼페이' 스파르타 그리드라는 도시로 발전한 것이다"며 "이를 통해 우리인천은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고 자신 있는 어투로 인천의 미래상을 전했다. 그가 말하는 '폼페이 스파르타 그리드'는 모든 게 갖춰진 최첨단 도시에서의 친환경적인 생활이다.

"폼페이 스파르타 그리드"에 대해 안 시장은 "폼페이는 모든 시설이 300미터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바로 송도지구, 청라지구, 주서, 비즈니스, 레저, 교육, 의료, 쇼핑, 컨벤션센터 등의 시설이 300미터 안에 다 갖춰져 있다"면서 "스파르타 그리드는 친환경도시로 모든 제이시티를 갖춘 도시다. 우리 도시를 보면 쓰레기통 다시 열로 전원에 제사용해; 시간이 걸렸었다. 인천은 청라와 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시장은 "쓰레기통과 전신주가 없는 친환경 도시 인천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도시에는 쓰레기통이 없는데 가가마다 빌딩에서 쓰레기, 오수를 버리면 이

천의 발전도물로 자주 제사됐다. 도시가 바로 밴쿠버다. 밴쿠버시라는 특색 등 인천과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 도시들 가운데 산기종은 도시 1, 2위에 이름을 올리는데 있고 있다. 밴쿠버와 같은 밴 안 시장은 "인천은 밴쿠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며 "세계 유수 도시들의 장점을 모아 새로운 도시, 인천을 밴쿠버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고 확언해 밝혔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의 밴쿠버'가 아닌 '캐나다의 인천'이라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그가 그려낸 인천의 미래상 가운데 하나다.

오는 6월 2일 지리지는 시장선거와 관련된 일만 전 인천시장 3선 도전용 선언인. 그는 선거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8년 동안 이뤄져온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안 시장이 유력한 고지향 선직했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안 시장은 "그 동안 나는 인천시장으로서 많은 일을 해왔고 이는 긍정적인 성과들로 나타났다"며 "성과가 없다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자칫 논리의 싸움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성과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앞으로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비롯, 기업유치 등 치러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면서 "내가 이런 발언을 하려면 반드시 마무리로 내가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말할려면 후원을 잘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그 동안 나는 인천시장으로서 많은 일을 해왔고 이는 긍정적인 성과들로 나타났다"며



안상수 인천시장(가운데) 29일 오전 송도컨벤시아에서 CBS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왼쪽/백종원기자 cipark@hancorenews.co.kr

"성과가 없다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자칫 논리의 싸움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성과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앞으로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비롯, 기업유치 등 치러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면서 "내가 이런 발언을 하려면 반드시 마무리로 내가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말할려면 후원을 잘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그 동안 나는 인천시장으로서 많은 일을 해왔고 이는 긍정적인 성과들로 나타났다"며

안 시장은 "그 동안 나는 인천시장으로서 많은 일을 해왔고 이는 긍정적인 성과들로 나타났다"며

개표가 끝나; 순간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겸허히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겸손함을 보였다.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진 도시다. 인천 내륙에 있는 내리교역로;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이고, 송학동에 위치한 자유공원도 국내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다. 또 국민의 음식으로 자리 잡은 자장면 역시 인천이 원조이며, 산란동과 곡성동에 걸쳐 있는 자이언트론도 인천에 처음 들어섰다.

이처럼 우리나라 근대사를 모아 놓은 인천이 고전을 지키면서 첨단과 환경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며 활기찬 국제도시 '미래비전이 있는 도시'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안시장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인천/백종원기자 cipark@hancorenews.co.kr

인천시민들에 새해인사

손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평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과 평안, 인천대교의 개통이 있었고 이와 함께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도 가졌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비롯한 많은 시민연사들이 이곳을 방문해 인천을 평가해줬고, 인천이 세계적으로 뜨겁게 있습니다. 오는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이 개최된다면 이제 인천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천 시민들의 힘입니다.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일자리 또 그곳에서 많은 세금이 들어와 시민들의 복지, 문화, 교육 등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육분야에 많은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일마 전 6개의 자율형사립고로, 8개의 자율형공립고로 5년 이내에 모두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연세대학교도 (인천)부본교로 되고 국제대학교 문을 열어 9월에 외국 유수대학들도 개교합니다. 이제 교육도시로서의 인천이 더 부각될 것입니다.

1. 통한 재정사업과 재건 회사에 있어 불만인 분들도 제했는데 재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모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해서 정말 국제적인 도시, 또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도시 '인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 말씀

의 결 번 호	2010지선8(자심)
언 론 사	파이낸셜뉴스신문(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대표이사 조 영 권
심의대상기사	파이낸셜뉴스 2010년 2월 5일자 15면 『3년간 22조 투자 유치 ‘자율적 노사 합의 유도’ 주효』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청북도 도지사) 후보 예정자인 현 도지사의 활동성과 및 특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포함한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3년간 22조 투자 유치 ‘자율적 노사합의 유도’ 주효

‘경제특별도’ 충북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경제 부문만큼은 전국 시·도 가운데 수부(首府) 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같은 충북도의 의욕은 먼 얘기가 아니다. 투자유치 등 경제지표와 국책사업 지정 등을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 경제특별도 선포 이후 현재까지 충북도가 유치한 투자실적은 총 170개 기업에 21조 7602억원. 전국 최고의 투자 유치 규모다. 3년 동안 매달 4.7개 기업, 6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계산이다. 유치기업의 절반 가까운 81개 업체는 공장을 이미 준공했거나 현재 짓고 있어 ‘실속’도 쉼없다. 여기에 지난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확정 등으로 충북은 어느 때보다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이 같은 경제성과의 원동력은 정부택 충북지사의 섬세하면서도 ‘강단’ 있는 경영마인드에서 비롯된다. 정 지사를 충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투자유치 비결과 굵직한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 투자유치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은.

▲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업인 우대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모두 519개 업체가 참여하는 ‘투트랙(Two-Trac)’ 방식의 노사평화선인대회를 여는 등 자발적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큰 힘이 됐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 수정 등으로 기업유치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업종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청주공항 활성화로 연구기관과 병원 등도 입주를 유도하겠다.(중략)

-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 최근 사회지도층에서 부의 사회적 환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런 현상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민선 4기 지

사 취임 이후 이웃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물론 남모르게 시작한 일이지만 뜻하지 않게 알려지게 됐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더불어 함께'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재단에 매달 500만원씩, 지난해 말까지 총 1억 9500만원을 후원했다. 적십자회비도 지난 2007년 2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3600만원을 기부했다. 복지투어는 소외계층위로격려, 체험 및 봉사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9차례 19개 시설을 돌면서 체험봉사활동을 했다.(후략)

3년간 22조 투자 유치 '자율적 노사합의 유도' 주효



청주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본사 및 세종시 행정청 등 대규모 기업유치 사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가운데) 최정호

대담·이두영 사회부장

투자유치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은.

▲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본사 유치에 힘입어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은. 투자유치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은. 투자유치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은.

▲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본사 유치에 힘입어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은. 투자유치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은.

▲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본사 유치에 힘입어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은. 투자유치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은.

국제선 이윤경이 출현한 최정호를 기점으로 국

제청으로서는 연모를 펼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청주공원은 전국 유일하고 10만평 규모의 녹지대.

의료·헬스·교육 특화 '최고 의료관광단지'

【청주=김영준기자】오송헬스밸리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의료·헬스·교육 특화 '최고 의료관광단지'로 조성된다. (가운데) 최정호

▲오송헬스밸리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의료·헬스·교육 특화 '최고 의료관광단지'로 조성된다. (가운데) 최정호

▲오송헬스밸리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의료·헬스·교육 특화 '최고 의료관광단지'로 조성된다. (가운데) 최정호

▲오송헬스밸리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의료·헬스·교육 특화 '최고 의료관광단지'로 조성된다. (가운데) 최정호

▲오송헬스밸리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의료·헬스·교육 특화 '최고 의료관광단지'로 조성된다. (가운데) 최정호

의 결 번 호	2010지선10(자심)
언 론 사	(주)기호일보 인천 송의동 343-1 정산빌딩 9층 대표이사 서 강 훈
심의대상기사	기호일보 2010년 2월 1일자 20면 『자연의 숨길 가득 품고 새로이 태어나는 물길』, 2010년 2월 4일자 3면 『‘로드맨’이 바라보는 수원 미래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수원시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와 특정 사업의 추진계획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관련 조감도, 인물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출판기념회 소식을 행사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자연의 숨길 가득 품고 새로이 태어나는 물길

오는 2011년까지 수원천 매교~지동교 789m 구간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수도 정비 및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등 수원천의 전 구간을 자연환경이 살아 숨쉬는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 김용서 수원시장 / 인터뷰

“수원천 복원엔 연 가치 205억 원”

〈市 전체 가구 적용〉

- 수원천 복원사업의 목표는?

▶ 수원천 복개구간의 복원을 통해 도심하천의 재해요소를 제거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역사성 회복, 자연환경 녹지축의 재할 등을 이룰 낼 계획이다. 또 수원천 본래의 생태적 환경을 복

원한다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짐은 물론, 수원 ‘화성’과 연계된 광장 및 보행환경을 조성해 화성의 관광루트를 연장, 관광자원 요소를 자연스럽게 주변 상가와 접목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중심공간으로서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웰빙공간으로 문화·관광·쇼핑의 연대도 실시, 주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동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중략)

- 수원천 복원과 재래시장 등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방안은?

▶ 화성 복원과 연계해 옛날 시장을 연상시키는 재래시장으로 특성화시켜 국내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길 계획이다. 또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화성관광열차의 노선을 시장까지 연결하고 하천 내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등 관광객과 장보러 오는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시민과 상인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축제를 개최하고 복원사업구간의 인근 주차장 이용 안내와 유도 안내원 배치 등 자가용을 이용해 수원천을 찾거나 연계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을 확충,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로드맨'이 바라보는 수원 미래상

김용서 시장 출판기념회
“향후 60년 준비하기 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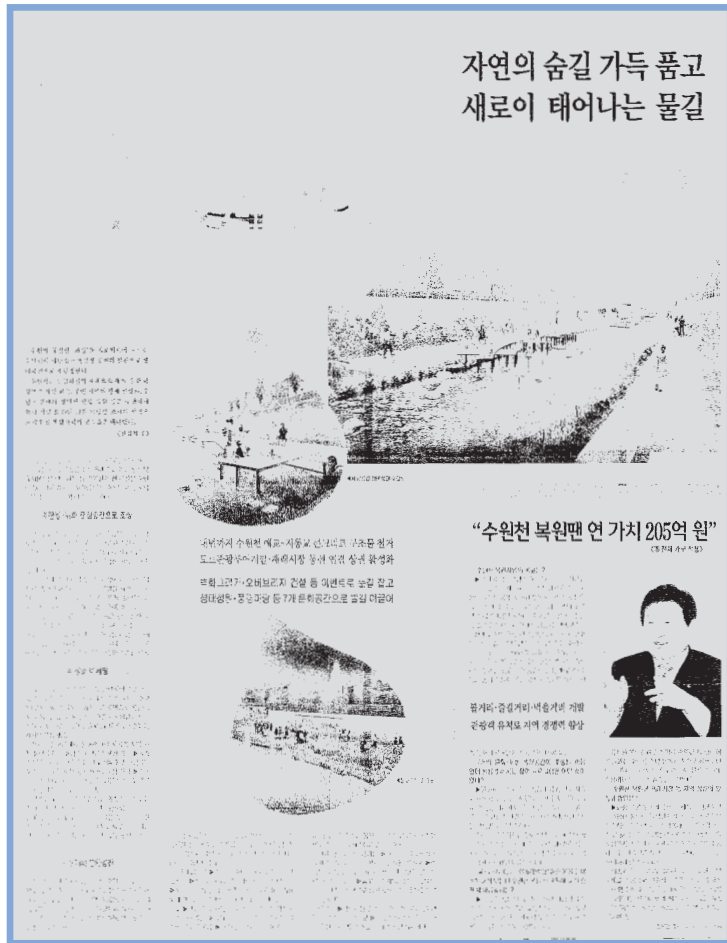
김용서 수원시장은 3일 오후 3시 수원 월드컵경기장 컨벤션웨딩홀에서 '로드맨의 꿈-수원이 품은 200년의 꿈'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임청열 전 경기지사와 남경필·정미경 국회의원, 홍기현 시의회 의장 및 한규택 도의원 등 시·도의원,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회장, 최극열 전국상인연합회장, 김진춘 전 도교육감, 한창원 본보 사장 등 언론사 관계자, 시민 등 5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 동안 나의 인생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시의회 시절 시축구협회를 겸하면서 월드컵 개최도시 유치와 삼성블루밍즈가 수원을 연고로 삼자 축구에 폭 빠진 '사커맨'으로, 민선시장 시절에는 도시브랜드 해피수원을 만든 '해피맨'으로, 고질적인 수원의 교통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니 이제는 '로드맨'으로 통용됐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수원시도 벌써 환갑을 넘겼듯이 사람도 환갑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도시설계 역시 중요하다”며 “지난해 시 승격 6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6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 책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후략)

자연의 숨길 가득 품고 새로이 태어나는 물길



'로드맨'이 바라보는 수원 미래상

김용서 시장 출판기념회 “향후 60년 준비하기 위한 것”

김용서 수원시장은 3일 오후 3시 수원 월드컵경기장 컨벤션웨딩홀에서 '로드맨의 꿈-수원이 품은 200년의 꿈'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임청열 전 경기지사와 남경필·정미경 국회의원, 홍기현 시의회 의장 및 한규택 도의원 등 시·도의원,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회장, 최극열 전국상인연합회장, 김진춘 전 도교육감, 한창원 본보 사장 등 언론사 관계자, 시민 등 5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 동안 나의 인생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시의회 시절 시축구협회를 겸하면서 월드컵 개최도시 유치와 삼성블루밍즈가 수원을 연고로 삼자 축구에 폭 빠진 '사커맨'으로, 민선시장 시절에는 도시브랜드 해피수원을 만든 '해피맨'으로, 고질적인 수원의 교통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니 이제는 '로드맨'으로 통용됐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수원시도 벌써 환갑을 넘겼듯이 사람도 환갑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도시설계 역시 중요하다”며 “지난해 시 승격 6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6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 책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11(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동국일보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194-1 3층 대표이사 장 영 미
심의대상기사	동국일보 2010년 2월 11일자 3면 『녹색의 도시 IT · 명품도시로 비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미시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이 향후 첨단산업기반 구축 등을 역점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은 인터뷰를 인물 사진 포함 3컷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녹색의 도시 Yes Gumi IT · 명품도시로 비상

구미는 우리나라 첨단 IT 산업도시이자 유서 깊은 선비 문화의 본향이다.

또한 자연보호 운동의 발상지, 새마을운동의 중흥지이며, 영남 팔경의 하나인 금오산 아래 낙동강이 도심을 관류하는 아름다운 고장이기도 하다.

구미는 40만 시민의 열정을 모아 꿈과 비전,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21C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구미시 글로벌 에코 선도도시 방문단을 이끌고 롱비치시와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정책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하고 세계속의 IT도시, 명품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깃털을 다듬고 있는 남유진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시의 미래를 들여다본다.

▲첨단산업기반 구축

구미시는 국가5공단조성, 경제자유구역, 국가1공단 리모델링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

해 글로벌 공단으로 일대 혁신을 꾀한다.

오늘 2014년까지 1조8,082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국가5공단 '구미하이테크밸리'는 생산유발 13조8천억 원, 부가가치 2조2천억 원, 고용 12만 명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인 '구미디지털산업지구'는 2조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1조2천억 원, 고용 5천명의 효과, 1조9,171억원이 투입되는 국가1공단 리모델링사업은 생산유발 2조6,478억원, 고용유발 21,800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까지 조성될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와 부품소재전용공단 조성으로 공단과 산업의 지형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모바일융합기술센터를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0억원을 투입해

구)금오공대 국가공단종합지원시설로 본격 개발해 모바일융합기술센터와 함께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FTAP 등 기업지원 인프라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종합 시험·인증시스템인 '그린에너지산업화지원 및 표준인증센터'도 구축한다.

또한 '디지털전자산업관' 개관과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지원센터' 건립, '디지털사이언스센터' 건립, 첨단 의료기기 산업육성, 다국적

의 결 번 호	2010지선21(자심)
언 론 사	(주)스포츠동아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21층 대표이사 송 대 근
심의대상기사	스포츠동아 2010년 2월 10일자 14면 『“동계훈련 메카… ‘스포츠 도시’ 발돋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양시장) 후보 예정자인 현 시장의 스포츠도시 건설 관련 사업추진 계획 등을 포함한 인터뷰를 약력 및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동계훈련 메카… ‘스포츠 도시’ 발돋움”

“풍부한 인프라…스포츠 1번지로”

이성웅 광양시장

광양시 하면 늘 언급되는 게 있다. 바로 광양제철소와 국내 최적의 동계 전지훈련지다. 풍부한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종 전국대회를 개최했고 전지훈련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다. 허정무 현 국가대표팀 감독과 2002한일월드컵의 영웅 김남일 김태영 황선홍 등이 거쳐 간 전남 드래곤즈는 광양을 스포츠 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스포츠동아와 만난 광양 이성웅(68) 시장은 “광양이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풍부한 체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 최고의 경제 중심지 뿐 아니라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서 발돋움 하고 있다. 엘리트 체육과 시민 체육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조성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중략)- 광양이 스포츠 훈련의 메카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동계훈련에 가장 적합한 온화한 기후입니다. 광양(光陽)이란 지명에서 알 수 있듯 저희는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고장으로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상 5~6도 이상입니다. 눈이 거의 내리지 않고 얼음이 얼지 않는 기후를 갖췄습니다. 잘 갖춰진 체육 인프라와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 경력을 지닌 종목별 우수 팀이 많아 훈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먹거리와 편리한 교통망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시와 체육단체, 종목별 지도자가 중심이 돼 전훈 팀을 유치하고 전폭 지원한 결과입니다.”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2009년 동계훈련을 위해 광양을 방문한 인원은 150여개 팀의 선수단, 학부모, 관계자 등 대략 5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여기서 58억 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물론, 동계훈련의 메카로서 광양시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 효과도 간접적으로 거뒀고요. 특히, 숙박업과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호황을 누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하겠습니다.”(후략)

“동계훈련 메카... ‘스포츠 도시’ 발돋움”

이젠 스포츠 마케팅

“동부한인프라·스포츠‘변지로’
이성웅 광양시장

광양시 내년 봄 열릴다는 것 같다. 내년 동계스포츠로 우리 지역의 동계 전지는 온다. 광양시 체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각종 선수단과 국제스포츠인기들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광양’은 국가대표급 선수들과 2002년 월드컵도 광양 구기장 지하 관공로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여름을 대비하는 지역 체육은 물론 동계스포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번 여름을 대비하는 지역 체육은 물론 동계스포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광양시 내년 봄 열릴다는 것 같다. 내년 동계스포츠로 우리 지역의 동계 전지는 온다. 광양시 체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각종 선수단과 국제스포츠인기들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광양’은 국가대표급 선수들과 2002년 월드컵도 광양 구기장 지하 관공로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여름을 대비하는 지역 체육은 물론 동계스포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스포츠도시인 ‘광양’은 광양시 46만 시민은 ‘광양’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번 여름을 대비하는 지역 체육은 물론 동계스포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성웅 시장장관
▶시장장관 1982년 4월 30일
(전남남도 광양)
▶직책: 전남대학교 교직원
▶경력: 2001.06~현재
▶지역: 2001.06~현재
▶지역: 2001.06~현재
▶지역: 2001.06~현재
▶지역: 2001.06~현재

“광양은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양은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체육 인프라·교통망 등 동계훈련 최적의 조건
작년 150여개 팀 5000여명 찾아... 56억원 경제 파급 효과
지역 관광·스포츠 마케팅 연계... 최고 스포츠 도시 부른 꿈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양시는 축구 스포츠도시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스포츠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양시 2014년 여름 광양시에서 개최된 제1회 광양시 스포츠 페스티벌은 2014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포츠페스티벌은 광양시 시민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성웅 광양시장의 의뢰는 두배이다. 광양시 체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온 국민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스포츠도시와 관련한 이 시장은 “광양은 체육과 관광, 체육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강조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으로 즐기는 스포츠는, ‘광양’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양시 2014년 여름 광양시에서 개최된 제1회 광양시 스포츠 페스티벌은 2014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양시 2014년 여름 광양시에서 개최된 제1회 광양시 스포츠 페스티벌은 2014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모두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33(자심)
언 론 사	(주)포커스신문사(더데일리포커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9-7 솔본빌딩 2~3층 대표이사 이 혜 숙
심의대상기사	더데일리포커스 2010년 2월 23일자 A12면 『“콤팩트·스마트·그리드가 인천 미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시장활동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콤팩트·스마트·그리드가 인천 미래”

■ interview 8년째 인천 이끄는 안상수 시장

요즘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도시를 꼽으라면 인천시가 첫 손가락에 들겠다.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아시아 허브로 지구촌의 주목을 받고 있고, 2014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로 도시 곳곳은 활력이 넘쳐난다.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내부에서 벌어지는 선진화의 모습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안상수 시장은 글로벌적 면모를 갖춘 거시적인 발전과 동시에 내실있는 인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22일 집무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다.

Q. 최근 “인천은 ‘콤팩트·스마트·그리드’라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A. 우선 ‘콤팩트 시티’를 이야기 하자면, 모든 시설이 30~40분 거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다운타운(도심)과 서버브(교외)가 있는 즉, 중

산층이 다운타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서버브에서 가족과 전원풍의 생활을 즐긴다는 식의 도시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스마트와 그리드는 무슨 의미를 답습니까.

A. ‘스마트 시티’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곳이며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갖춘 곳입니다. ‘그린 그리드 시티’는 친환경으로서 모든 제어시설을 갖춘 도시입니다.

Q. 이런 개념이 어떻게 인천에 접목되는 것인지요.

A. 송도지구, 청라지구가 주거, 비즈니스, 레저, 교육, 의료, 쇼핑, 컨벤션센터 등의 시설과 기관이 30분 거리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콤팩트 시티’의 여건을 갖춘 것이지요. 여기에 송도국제도시를 예로 들면, 이곳엔 쓰레기통이 없는데 각 가정이나 빌딩에서 쓰레기, 오폐수를 버리면 지하의 특정장소에 모아 열로 재처리돼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인천이 도시 규모로는 세계 최초이며 또 전봇대를 없애고 모든 전선을 땅으로 매설해 각 시설에 접촉하게 해놨습니다.(중략)

Q.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A. IFEZ 2단계 사업은 2010년부터 아시안게 임이 개최되는 2014년까지 추진되며 2단계 비전 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목표로 해 테넌트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 부 문으로 나눈 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중략)

Q. 구도심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A. 루원시티, 송의운동장주변, 도화구역, 동인
천역주변, 주안2·4동 등 5개 도시재생사업에 대
해서는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
쾌적한 주거환
경조성과 함께
상업, 업무, 교
육, 관광, 문화,
스포츠 기능 등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될 기능
을 중점배치하
고 민간투자유
치를 적극 추진
하여 구도심 활
성화를 통해 인
천시를 명품도
시로 건설할 계
획입니다.

Q. 끝으로,
인천의 신성장
동력을 무엇으
로 보는지요.

A. 한마디로 'MICE산업' 이

라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전시회(Events&Exhibition) 등 MICE산업은 최근 고수익을 창출하는 BT(Business Travel)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비행거리 3.5시간 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 61개가 위치해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인천공항은 세계 48개국 160여개 도시를 운항하는 만큼 뛰어난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컴팩트·스마트·그리드가 인천 미래”

interview 8년째 인천 이끄는 안 상 수 시장

요즘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도시를 꼽으라면 인천시가 첫 손가락에 들겠다. 송도 신도시,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아시아 허브로 지구촌의 주목을 받고 있고, 2014 아시안경기대회 유치로 도시 곳곳에 활력이 넘쳐난다.

『여사야의 귀환』으로서 단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내부에서 벌어져
 다. 전사자의 모습은 제대로 소멸되지 못해- 존재가 있는데, 안착수 사정
 (이)를 통해 사정하는 것을 서사적인 발전과 동시에 내일있는 일련의 전사
 를 제하고 있다. 22쪽 전투장면 보아 이해가 될 것이다.

최근 "인천은 '콤팩트 스마트 그리드'라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수신 줄에는 서머를 이용하여
내지면, 모는 시간이 30~40분
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약이
나온다(도심)과 서머(도심)
가 있는 즉, 중심에서 다수의
시각적응을 유도하는 서머에
서, 가파른 전압의 선형에 수직
내, 소의 노지 개념을, 지어

정장5에 모아 연보 재처리된 후
다시 사용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연간이 지나도 수모양, 색깔 적조
악화 및 전염병의 없애고 모든 전
전환 장으로 미생에 각 자선에 집
속하게 해왔습니다.

Q '콤팩트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을 일지리 창출과도 연계시켰는데요.

A급의 상온 고온 그리드
사이드 창조적아민로 주력

30~40분 거리에 경제·문화시설 등 갖춰
CO₂ 대폭 줄인 '친환경 유비쿼터스' 도시

송도·청라지구 '콤팩트 시티' 여건 갖춰
컨베션 등 'MICE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CONCLUSIONS

Q 스마트와 그리드는 무슨 의미를 담습니까.

A시다 지리 온 사람이 화를
쪽으로 내보내는 것이면 유미
적어서 안 지라야 갖출 곳입니다.

로서 갖는 재의지심을 갖춘 분이
않다.

Q 이런 개념이 어떻게 안전에
접목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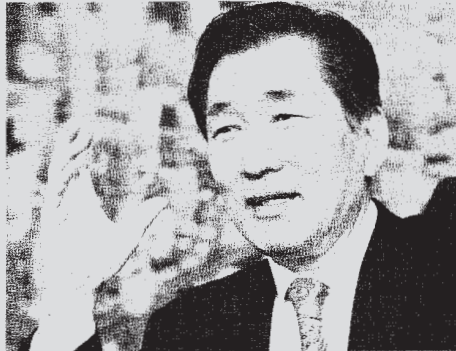
A 피셔, 스킵지, 포우, 와노쇼
등, 전원화되어 그의 집합과 스코
이 30만 개가 안의 다 갖추어 있습
니다. '캠핑드 시어'의 역할을 갖
출 것이지만, 여기에 충분하게 보
여져도 남긴, 이곳의 쓰여가 있어
없는 게 각 가정이 반경에서 쓰
라기, 오히려 더 미미한 자의는

인 유언정책으로 경쟁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인재가 노임으로써 각 분야의 부가 가치가 올라가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며 자이스프와 안사르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A IFFZ 21세기 사업은 2000년부터 이 사업(가칭)에 개입하는 20년까지 추진되며 2단계 버전으로 '정책과 제도'를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해 대안들을 중심으로 한 부처간 및 도시개발 부문으로 가는 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Q 기업과 연구소 유치와 관련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요.



다라코의 Collenryx, Socratic
ITS를 커넥/엔솔과 다이오스
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중
대기업이 참여하고요. 영솔과
타에는 전라남도 기업 분야
외 기관, 국내 HIT-PORT
HIT 관련 융합기술 교육 연구
임과 시설이 각각 들어섭니다.

저는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함께 살림, 교육, 의료, 안전, 문화, 스포츠 등을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기능을 중점배치하고 민간투자유치, 직·간접고용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을 인천시를 비롯모든 지역으로 확대 계획입니다.

Q 교육부와 관련해선 어떠한
지요.

A 학사학위 1년, 석사학위 2년, 박사학위 3년 소 18, 공제하고 4곳이 각각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

Q 끝으로, 인천의 신성장동력
무엇으로 보는지요.

A 3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기간
회의(Meeting),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 포상회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회(Festivals & Exhibition) 등 MICE
산업의 최근 10개업을 선정하여
10개Business Travel산업은
4분기까지 있을 것이다.

● 구도선이 박제를 위해 저택

A 그렇습니다. 송의은은 광주에서, 그리고 대구, 대전, 서울, 부산, 울산 등 5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인천은 비행사다 3.5시간 1회
인근 100대점 이상의 도시 미거
의리해 위하여 세계질서 수준

연중 상황은 세계 187개국 132억
 개체를 은밀해·분류·필요한
 (전체) 갖고 있습니다.

→ 박명순기자·지진·심재영기자

A 첨단산업(IT)과 관련해서는
4위 813개, 연구소 116곳이
유지된다. 특히, '정보통신'과

조직개발 제2호 및 지식기반 사회론, IT, BT 등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 및 제조업 참여 유자입니다.
앞으로 바이오 전략과 환경제시
기업 7개 기업으로 108곳으로 확대
1곳이 들어가지요, 중남미에

의 결 번 호	2010지선34(자심)
언 론 사	(주)경기신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대표이사 박 세 호
심의대상기사	경기신문 2010년 2월 23일자 14면 『살기 좋은 ‘고품격·친환경 도시’ 이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고양시의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보도하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고양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를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살기좋은 ‘고품격·친환경 도시’ 이끈다.

간판정비·녹색 자전거 ‘쾌적 환경’ 가꾸는 고양시

고양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 도시로서의 에티켓 도시 및 문화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 도시 조정과 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경제기반이 되는 첨단산업 육성을 2010년 시정 운영 목표로 설정했다. 또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 전시와 공연, 축제가 1년 내내 열릴 수 있도록 하고 나무심기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며 저탄소·녹색교통의 수단인 자전거와 최첨단 정보통신을 결합해 차를 타지 않고도 집과 가까운 정류장, 전철역, 백화점, 관광지 등을 오고 갈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자전거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할 계획이다.(중략)

인터뷰 강현석 고양시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쾌적한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품격도시 만들기과 자족기반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3월부터 시민들이 출·퇴근 및 나들이 할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피프틴(FIFTEEN)을 운영, 저탄소 녹색교통의 수단으로 발전시키겠다”

또 “최근 일부에서 교육문제에 대해 고양시의 교육이 저평가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교육여건 개선 작업이 끝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 시장은 “식사지구 국제고, 백석동 자율형 사립고가 각각 들어서고 동국대 의생명과학·캠퍼스가 건립된데 이어 우수대학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면 교육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46(자심)
언 론 사	(주)시사저널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02 대표이사 신 상 철
심의대상기사	시사저널 2010년 3월 2일자 40~43면 『명암 엇갈리는 현역들의 도전 인천은 '순탄', 대전은 '가시밭'』 및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 직접 마무리 할 기회 갖고 싶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와 관련하여 각 정당 후보예정자들의 대결 양상 및 전망 등을 보도하면서, 출마 예정인 현 시장만을 인터뷰하고 각종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 직접 마무리할 기회 갖고 싶다”

명암 갈리는 현역들의 도전 인천은 '순탄', 대전은 '가시밭'

인천과 대전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의 현역 시장이 재출마 의사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명암은 다소 엇갈린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박성호 대전시장은 2위로 밀리고 있다. 두 지역 모두 변수는 있다. 인천의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 카드가 살아 있다. 대전도 자유선진당과 심대평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으로 분열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시사저널>이 신년 기획으로 연재한 '2010 지방선거 민심 현장을 가다'는 인천·대전을 마지막으로 16개 광역시·도의 현장 탐방을 마무리한다.(후략)

(전략)

인천시장 3선에 도전한다. 왜 '안상수' 여야 한다고 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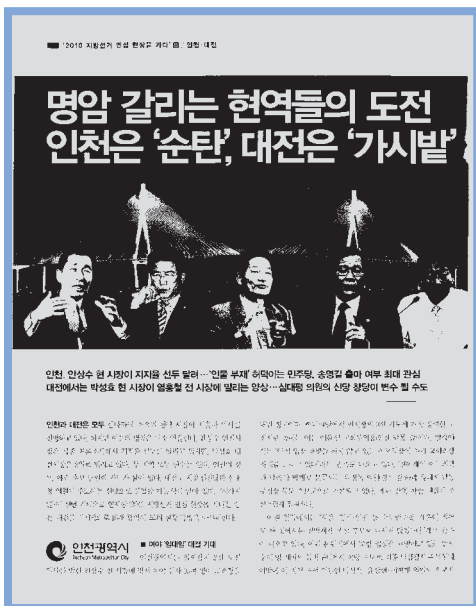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아시안게임, 구(舊) 도심 재생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적인 하드웨어를 내가 직접 구상했고, 이미 진행된 상황이다.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건설과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아시안게임은 인프라와 국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 도심 재생 사업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민들과 함께 구상해야 한다.

아시안게임과 구 도심 사업은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건설 사업은 특별한 노하우와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추진해야 일정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3선에 도전하는 것이다.(후략)

송도 국제도시, 영종도·청라지구 등이
국제 물류 비즈니스 단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2020년까지 1·2단계로 나누어 개발되는 공항
물류 단지에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동북아를
목표 시장으로 삼고 있는 항공 화물 특송 업체, 전

기·전자·자동차 업체 등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 물류업체 등이 유치 업종이다. 아암 물류 단지에는 북유럽 수산물과 선박용 부품, 첨단 부품 조립 가공 산업 등 유치할 예정이다. 인천 신항과 배후 단지에 초대형 선사와 글로벌 터미널 운영업체, 초대형 컨테이너선 전용 터미널을 유치할 계획이다. (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47(자심)
언 론 사	미래교육신문 광주 동구 계림1동 572-13 3층 대표 차 운 기
심의대상기사	미래교육신문 2010년 2월 12일자 4면 『“전남교육 선진화 기필코 실현할 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남도 교육감) 후보 예정자인 전 교육감의 인터뷰 기사에서 출마배경 및 재임 기간 동안의 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상인가자가 만남사람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

“전남교육 선진화 기필코 실현할 터”

(전략)▲ 지난 4일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 배경은 뭔가.

- 출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교육계 선·후배들은 뚜렷하게 교육감을 맡을 만한 인재가 없다는 이유로 출마를 권유했다.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뿌려놓은 ‘실력전남’의 토대위에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해 보고 싶었다. 우리 교육환경은 그리 녹록치 만은 않은 상황이다. 교사 정원 감축, 학교 통폐합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넓은 식견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 나와야 한다.(중략)

▲ 초선, 재선 때 일궈 온 성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

- 초선 교육감 재임 중 침체된 전남교육을 ‘실력

전남’으로 거듭나는 기초를 다졌다. 초·중등 교육은 기초·기본학력 정착이 목표인데 8년 전만 해도 전남의 기초·기본학력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교원단체의 반대 속에서 실시한 학력평가에서 3% 대의 부진학생이 확인됐다. 깜짝 놀랐다. 교육감 1기를 마감하면서 부진학생을 1% 대로 낮췄다.

이런 분위기를 토대로 재선 때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원어민을 확보했고, 외국어 학습관 건립, 지역별 영어타운 설치,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 담당교사를 양성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 교육투자를 이끌어 낸 것도 큰 성과다.(중략)

▲ 교육자 ‘김장환’의 강점은.

- 경험 보다 더한 실력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는 어느 누구에 앞선다고 자부한다. 중앙정부와 다져진 네트워크가 잘 갖춰졌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을 입안 할 때 장관이 우선적으로 저 김장환이한테 조언을 구한다. 지난번 전남교원이 한꺼번에 300명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교육부의 방침을 수정해 절반인 150명

감축으로 한 것도 경륜있고 힘 있는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다.

또 현재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전원학교 모델을 처음 제시했고 경기도에서 요란한 무료급식도 최초로 시작하는 등 선도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 집행한 것도 강력한 추진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역대 전남교육감이 각종 구설수로 단명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8년 동안 예산 집행에서 잡음이 일지 않은 것도 클린 행정가라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 전남 교육가족들에게 한 말씀.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

호림교사부터 재선 교육감까지 전남교육과 생사품 함께 해 온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24일 명예로운 퇴임식을 가졌다. 신안 섬마을 분교장부터 복수학교, 전주기 고등학교까지 전남 교육현장에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8년간 전남교육 수장으로서 전남교육의 실태를 다지고, 인제육성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자신이 뜻한 전남교육이 곧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 전 도교육감은 이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교육 선진화 실현'을 목표로 제6대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표를 던졌다. 김 전 교육감으로부터 최근 군황을 들어본다.

/런칭자 주



“전남교육 선진화 기필코 실현할 터”

▲지난 4월 전남도교육감 선거 초야를 공약 선언했다. 초야 매달린 김장환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대의 교육은 열린 학습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체적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교육계가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을 지혜롭게 수용해 가야 하는 시점이고, 특히 지역교육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매야 할 때다.

또 지역에서 세계를 지향하는 교육, 지역 여건을 강점으로 키워가는 교육, 다 함께 이뤄가는 교육에 혼신의 힘을 불어넣을 때 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민과 교육가족에게서 ‘교육이 곧 지역의 미래’라는 생각에서 전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고개 숙여 부탁드린다.

전국 3번째 원어인 확보... 전국최고 지자체 교육투자 결실 중앙정부 네트워크 교류 장점... ‘새로운 경쟁’ 교육계 필요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서 시간 낭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신과 함께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겐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특히 이 시점에서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계가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을 지혜롭게 수용해 가야 하는 시점이고, 특히 지역교육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매야 할 때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개혁 등 열었던 질문 하나 내어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4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서해안신문사 충남 서산시 동문동 255-3 대표이사 김 소 영
심의대상기사	서해안신문 2010년 2월 11일자 12면 『‘가난 그리고 도전’ 출판한 차성남 著者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은 한 편의 감동 드라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산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도의회 의원의 인터뷰 기사에서 최근 출판된 자서전의 내용, 인생담과 인생관 등을 인물사 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 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 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가난 그리고 도전’ 출판한 차성남 著者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은 한 편의 감동드라마

사람은 누구나 세월의 그림자가 길어지다 보면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보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된다고 한다.

누군들 세월의 그림자 속에 내재된 술한 땀과 눈물의 사연들이 없겠는가. 이순(耳順)에 이른 사람치고 이런저런 험난한 굴곡을 헤치며 살아오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가난 그리고 도전’이라는 자서전을 출판한 차성남(현 충남도의원) 氏도 그런 마음에서 인생의 위안길을 되돌아보고 있다.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만난 저자는 자서전 출판에 대한 감회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혼한 자서전과는 다른 묘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세인의 관심이 물리는 것 같다. 책 속에서

어려웠던 저자의 어린 시절을 보며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의 가난이 연상되고 가족의 끈끈한 정이 묻어나는 글을 읽으면서 진한 휴머니즘을 경험하게 된다.

지난 8일 취재팀과 대담을 나눈 저자 차성남 氏는 희망이라는 말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중략)

저자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한 이유는= 8년여 남은 공직생활을 과감히 그만두고, 우리 고향 서산 발전을 위해 맨몸으로 도의원에 도전한 것도 저의 끊임없는 도전정신 때문입니다. 도의원으로서 저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야인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뛰었고, 그 결과 작년 말에는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갖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정교사를 하고 비누를 팔아 등록금을 번 일,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긴 일, 재정직 공무원에서 교육 행정직 공무원으로 옮긴 일들만 봐도 제 몸속에는 “도전”이라는 피가 늘 솟구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공무원생활을 마다하고 도의원에 도전한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맨몸으로 도의원에 도전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 지역 서산 발

전을 위해 더 큰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저자의 도전은 진행 중인데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꾸는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서산 지역은 예부터 “樂土”라고 일컬어진 고장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서산은 서해안 시대의 비상과 더불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잘 모르는 선장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큰 비상을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지역인 당진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비해 우리 서산의 발전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담보

상태인 것이 저는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 서산은 더 큰 발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서산 시민들과 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꿈이 현실로 변화하려면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생각”에 “믿음과 의지”만 더해지면 꿈은 반드시 현실로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저 차성남과 함께 서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서산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힘차게 매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가난 그리고 도전' 출판한 차성남 著者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은 한 편의 감동드라마



그런데, 그리고 도선이라는 지서전을 폭넓게 치성(成性)을 증보(增補)하였을 때

밑바닥 공직부터 진출한 의정까지 '人生파노라마'
가난 속에서 어렵게 공부하면서도 쌓아온 '형제애'

[illegible]

책 속에서 용기와 희망,
도전의 정신을 강조하던
데는 우리 해군의 사관학교. 그곳은
자위적 영웅의 파도인 '백호' 문양을
본 수장함(사관)으로 하고 모퉁이에
그려져 있었다. 그 부와 문예를 얻지
는 못했다. 갑자기 어뢰를 조준할
가운데에서도 함기를 향해 사정
없이 사격해 해군을 대공 열선에 살
아줬고 앞으로의 개발을, 1명씩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자서전을 집필하게 된 이유 =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힘들어 해서 자서전(自傳)으로

모양새와 맛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것이라서 맛은 참 비슷하긴 하지만, 유산이므로 재료가 다르니 맛도 다를 것이라. 그러므로 맛과 질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영양적 차이는 없다고 하므로써, 재료를 살피고 조리법에 따라 맛과 질감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식용이 가능한데도, 저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곳에 잘 보관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식용이 가능한데도, 저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곳에 잘 보관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한 사람이야. 그리고 장사 공부만 배우고
일감을 쓰는데. 그러면 더 많은 것
을 알겠지. 물론 장사의 지름길에
경험이랄까.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은연무에 침묵해 있게 독자를 허용
한다.

이 책을 쓰면서 어떤 마
음에 담았는? 이 책을 쓰기로
한 이유는 어떤 책을 지극한 선악
을 알았기 때문. 여러 나라의 사
람들은 죄를 풀 수 있도록 사
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서 죽는 것이었어. 그리고
선한 일을 한 후에도 사형선
을 사형이 되었다. 책장을 엮다
다. 책이 쓰여진 후에도 후회
한다.

이어서 저는 새글도 조달에 대한 원

화한 것이었다.

책 속에서는 선생님의 문
해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
지않는데 종이로써 쓴 글이나
이것이 그렇게 많은 글과 신약이
치지않는 제자들이 저번 내복이
꺼주니 호칭이든 서한과 유배하
고요! 배다른 사람들이 그간 전
원으로 인하여 주 안으로 귀국하
고있지 않나 했어

중국어로 쓰여진 문장 내적 뜻
만이었을 것이나 서한과 유배하
고있지 않은 것이 유배하듯 말하
고있지 않은 유배하 선생님이
선생님 신약의 해와 같은 언어
의해가 있다. 그후에 그는 그들
의 언어적, 제도 방편으로 고문
표현과 중독의 다른 다른 사
유하여

[illegible]

요즘 청소년들이 장래에 대한 고민이 무거운데 저자의 경험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고민

[illegible]

저자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한 이유는 8년이 남은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우리 고향 서천 발전에 힘쓰고자 공무원에 도전한 것도 저의 끊임없는 도전정신 때문이었다. 노력으로서는 저는 제자리를

[illegible]

참숯과 찹쌀, 찹쌀과 콩, 콩과 전야한 콩부엌생황을 따와서
보리알로 도정된 밀 표본 마늘
입니다. 지금 저는 전야한 콩
에 도정된 콩 심종으로 콩
심칠법칙을 의뢰하고 도정된
자입니다.

[illegible]

꽃이 연필로 그려내면 그 정경
일정치를 가색이 없다. 작은
점처럼 꽃과 그 곁을의 색만
해치며 꽃은 밝게 하므로 비록
고요한 빛이다. 동양의 사자
사도인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를
처음부터 다룬 여섯! 저 자살하
는에 자신의 다른 면에서 나와 서
의 다른 모습! 우리 함께 내리
나갈다. 감사합니다.

www.shanews.co

- 출판 서한서 한지엔 처리 출성
- 장려조작하고 2023년

- 서영고등학교 졸업(1974)
- 다문화교육연구소(대표)

- **인식상: 눈이 멀어 가는**

- 레지 하고의 효능적인 상황방안

의 결 번 호	2010지선49(자심)
언 론 사	(주)한국시정일보사(주간 시정신문) 서울 용산구 한남동 224 대표이사 주 동 담
심의대상기사	주간 시정신문 2010년 2월 18일자 20면 「11월 11일~12일 삼성동 코엑스 'G20 정상회의' 개최 "특급 손님 맞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강남구청장) 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특정 행사개최 준비상황 및 향후 구정활동 계획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 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11월 11일~12일 삼성동 코엑스 'G20 정상회의' 개최

“특급 손님 맞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G20 정상 비릇 세계적 기업 대거 참여 국내 최대 규모 국제행사 준비 만전

(전략)

- 세계적인 행사가 강남구에서 열립니다. 손님
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특히 주안
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요.

“오는 11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는 G20개국 정상들과 수행원, 기자단,
각국을 대표하는 400여개의 기업체 등 약 2만명
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G20 주 회의장인 코엑스 컨벤
션과 숙박시설로만 31개의 호텔이 위치해 있는 등

G20정상회의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
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하수구 악취나 길거리 먼
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모기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와는 거리가 멀어
이를 보완하는 것을 위주로 도시환경을 업그레이
드할 것입니다.”(중략)

- 끝으로 G20정상회의를 잘 치르기 위해 시민
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한국을 찾은 외국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시민 한분 한분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및 보도 위 오토바이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빗물
받이에 담배꽂초 등을 버리면 과태료를 2배 부과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시민 기초질서지키
기 운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단체들의 주도로 선
진시민이 지켜야할 덕목인 친절·질서·청결의 '3
대 손님맞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우리
동네 청결 운동' '선진교통문화 실천' 등 G20정
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시민역량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52(자심)
언 론 사	(주)영남일보 대구 동구 신천동 111 대표이사 손 인 락
심의대상기사	영남일보 2010년 3월 2일자 5면 『인사발령』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고령군수)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에 게 우호적인 내용의 외부 기고문을 게재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11조(외부기고 등) 제1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 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사 발령

인사철이 되면 떠오르는 시가 있다. 새봄에 왈츠를 연상하듯 뇌리를 스친다. 미국 시인 프로스트가 지은 ‘걸어보지 못한 길’이란 시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시는 이렇게 끝맺는다. ‘걸어보지 못한 길’에 ‘새로운 부임지’를 대입하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인사 동정의 행간에는 희비애락이 묻어 있다. 낯선 세상과 맞닥뜨리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기도 한다. 한 번쯤 월급쟁이의 비애에 빠져보지 않은 은행원이 있을까. 거대한 조직의 폭력(?) 앞에 조아린 개인의 일그러진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나 역시 3년 만에 다시 포항으로 돌아왔다.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집 근처 사무실이다. 가족과 지인이 기다리고, 동해와 영일만이 출렁이며, 문학을 함께 하는 글벗들이 있는 또 하나의 고향. 감회가 깊다.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나는 새해 벽두의 인사 발령으로 엄청난 변화를 체감하는 중이다.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까지 완전히 바뀌었다. ‘기관장으로서의 농협지부장’ 역할에서 벗어나 ‘고객을 창출하는 은행지점장’으로의 변신은 차라리 소소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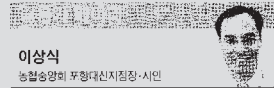
혼자의 삶이 가족과의 삶으로 변했고, 저녁에 하던 운동을 아침으로 바꿨으며, 틈만 나면 찾던 주산의 왕릉은 추억으로 인화됐다. 전임지인 고령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유서 깊은 대가야 왕국의 도읍지이기도 하다. 간만의 고향 근무로 죽마고우를 만나고, 새로운 인연도 많이 맺었다. 따뜻했던 인정을 떠올린다. 농심과 어우러진 정겨운 만남이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다. 포장마차 주인과 고령군의 수장. 우연의 일치일까. 양극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사무실 앞에 허름한 포장마차가 있다. 붕어빵과 꼬치를 판다. 키가 작고 상냥한 아주머니가 주인이다. 작년 추석 연휴 전날, 퇴근길의 나를 기다렸다는 듯 아주머니가 다가와서는 꾸러미를 건넸다. 손사래치며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남자와 여자 양말 두 켤레였다. 아마도 하나는 아내를 주라는 뜻이라. 강렬한 충격의 정성. 밑바닥의 따끈따끈한 나눔이다. 포항으로 전근된 후 상조회 전별금을 받는 순간, 전광석화처럼 그녀의 양말 선물이 떠올랐다. 직원들에게 사연을 일러주고,

아주머님께 봉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음의 빛을 갠 듯 홀가분하다.

이태근 고령군수는 내가 만난 사람 중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행사에 동석할 기회가 잦아 대화가 많았다. 그분은 왕성한 독서열로 다방면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으며 소신과 열정을 겸비한 행정가다. 유머가 풍부하고 좌중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다. 깊은 울림이 있는 지도자라거나 할까.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아 그 분을 존경한다.

사실 인사 발령을 앞두고 한동안 고민을 했다. 가족이 있는 포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고향인 고령에 한 해 더 근무할 것인가. 덤으로 '이태근'이란 인생의 선배와 맺은 우정을 다질 것인가. 결국 가족을 택해 포항으로 돌아왔지만 아쉬움이 잔설처럼 남는다.



이상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전)지점장·시인

인사 발령

인사령이 되면 떠오르는 시가 있다. 새봄에 완충된 연상하듯 비리를 스친다. 미국 시인 프로스트가 지은 '걸어보지 못한 길'이란 시다.

'오래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쉬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많았던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시는 이렇게 끝맺는다. '걸어보지 못한 길'에 '세로운 부인'이 '풀 대입하러 외마침장하게 다가온다'.

인사 동정의 행간에는 희비애락이 묻어 있다. 보선 세상과 맞닥뜨리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기도 한다. 한 번쯤 열근강이의 비애에 빠져보지 않은 은행원이 있을까. 기대한 조직의 복벽(?) 앞에 초이린 개인의 일. 러진 자와상에 다름 아니다.

나 역시 3년 만에 다시 포항으로 돌아왔다.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집 근처 사무실이다. 가족과 시인이 기다리고, 농협과 영일반이 후원이며, 문학을 함께 하는 글벗들이 있는 또 하나의 고향. 감회가 깊다.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나는 새해 벽두의 인사 발령으로 엄청난 변화를 체감하는 중이다.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까지 완전히 바뀌었다. '가정장으로서의 농협지부장' 역할에서 벗어나 '고령을 관통하는 은행지점장'으로서의 변신은 자라니 소소한 편이다.

혼자의 삶이 가족과의 삶으로 변했고, 저녁에 하던 운동을 아침으로 바꿨으며, 휴만 나면 횡단 주사의 완충은 추억으로 이해했다. 전임자인 고령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유서 깊은 대가야 왕국의 도읍지이기도 하다. 강민의 고향 군무로 속마교우를 만나고, 새로운 인연도 많이 맺었다. 따뜻했던 인정을 떠올린다. 농심과 어우러진 정겨운 만남이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다. 포항까지 주연과 고령군의 수장. 우연의 일치일까. 양극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사무실 앞에 해맑은 포항마차가 있다. 봄이향과 포지를 만난다. 카시 타고 상냥한 아주머니가 주인이다. 작년 추석 연휴 전날, 회근간의 나를 기다렸다. 두 아주머니가 다가와서는 구터 미를 건넨다. 손사레치며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남자와 여자 양쪽 두 편이었다. 아마도 하나는 아내를 주라는 뜻이리라. 강렬한 충격의 정성. 뒤통마의 따끈따끈한 나눔이다. 포항으로 전근된 후 상주회 정발금을 받는 순간, 전광석화처럼 그녀의 양뿔 선님이 떠올랐다. 직원들에게 사연을 일러주고, 아주머님께 봉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음의 빛을 갠 듯 홀가분하다.

이태근 고령군수는 내가 만난 사람 중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행사에 동석할 기회가 잦아 대화가 많았다. 그분은 왕성한 독서열로 다방면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으며 소신과 열정을 겸비한 행정가다. 유머가 풍부하고 좌중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다. 깊은 울림이 있는 지도자라거나 할까.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아 그분을 존경한다.

사실 인사 발령을 앞두고 한동안 고민을 했다. 가족이 있는 포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고향인 고령에 한 해 더 근무할 것인가. 덤으로 '이태근'이란 인생의 선배와 맺은 우정을 다질 것인가. 결국 가족을 택해 포항으로 돌아왔지만 아쉬움이 잔설처럼 남는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58(자심)
언 론 사	(주)세계일보 서울 금천구 가산동 150-15 대표이사 윤 정 로
심의대상기사	세계일보 2010년 2월 22일자 4면 『서울시장·경기지사 한나라 앞서 충남지사·대전시장 야권이 우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대전시장)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출처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공표 준수사항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울시장·경기지사 한나라 앞서 충남지사·대전시장 야권이 우세

■ 수도권·충청권 판세는

6·2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승부처는 수도권과 충청권이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향후 총선과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충청권은 전국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가 걸려 있는 곳이어서다.

◆서울시장=한나라당이 우위에 있지만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지난 12일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여당 유력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이 46.1%의 지지율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24.8%), 유지민 전 보건복지부장관(10.5%) 등 야권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오 시장과의 지지율은 47.2% 대 38.1%로 격차가 좁혀졌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치열한 내부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3선의 원희룡 의원이 오 시장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출마표를 던졌고, 인지도가 높은 재선의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충북선 정우택 현지사 리드

◆경기지사=김문수 현 지사가 재선에 나설 경우 한나라당 우세가 점쳐진다. 김 지사도 불투명한 차기 대선보다는 지사직 재선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는 야권에서 단일 후보가 나와도 지지율 50%를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김진표 최고위원과 이종걸 국회의교위원장, 진보신당의 심상정 공동대표 등이 출마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탄력을 받고 후보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면 승부는 예측할 수 없다.

◆인천시장=역시 한나라당 우세이나 경기도지사 자리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선 도전에 나선 안상수 현 시장이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인지도가 높은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출마할 경우 승부를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게 지역정가 분위기다. 당내 확실한 기반이 없는 안 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무난히 따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송 최고위원이 나선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공들여 출마를 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野후보 단일화면 예측불허

◆충남지사=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 추진 여파에다 한나라당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여권 열세, 야권 우세'가 점쳐진다. 여론조사만 보면 민주당과 선진당의 2파전이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과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김학원 전 최고위원이 힘겹게 3위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 전 지사를 설득해 재출마시킬지 주목된다.

◆충북지사=한나라당 정우택 현지사와 민주당 이시종 의원의 양자대결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일부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정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앞서는 상황이지만 세종시 수정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 판세가 바뀔 수도 있다.

◆대전시장=자유선진당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내세워 최초의 광역 단체장 당선을 노리는 곳이다. 여론 조사로는 염 전 시장이 한나라당 박성효 현 시장을 10%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따돌리며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도 세종시 논란이 승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원웅 전의원과 선병렬 대전시장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서울시장·경기지사 한나라 앞서 충남지사·대전시장 야권이 우세

■수도권·충청권 판세는

6·2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승부처는 수도권과 충청권이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향후 종선과 대선에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충청권은 정국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가 걸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장=한나라당이 우위에 있지만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지난 12일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여당 유력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이 46.1%의 지지율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24.8%),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10.5%) 등 야권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단일후보로 나선 경우 오 시장과의 지지율은 47.2% 대 38.1%로 격차가 좁혀졌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치열한 내부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3선의 원희룡 의원이 오 시장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고, 인지도가 높은 재선의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충북선 정우택 현지사 리드

◆경기지사=김문수 현 지사가 재선에 나설 경우 한나라당 우세가 점쳐진다. 김 지사도 불투명한 차기 대선보다는 지사직 재선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는 야권에서 뒤의 후보가 나와도 지지를 50%를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김진표 최고위원과 이종걸 국회교과위원장, 진보신당의 심상정 공동대표 등이 출마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탄력을 받고 후보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면 승부는 예측할 수 없다.

◆인천시장=역시 한나라당 우세이나 경기도지사 자리보다는 안정성

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선 도전에 나선 안성수 현 시장이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인지도가 높은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출마할 경우 승부를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지역정가 분위기다. 당내 확실한 기반이 없는 안 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무난히 따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송 최고위원이 나선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공들여 출마를 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野후보 단일화면 예측불허

◆충남지사=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 추진 여파에다 한나라당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여권 열세, 야권 우세'가 점쳐진다. 여론조사만 보면 민주당과 선진당의 2파전이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과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김학원 전 최고위원이 힘겹게 3위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 전 지사를 설득해 재출마시킬지 주목된다.

◆충북지사=한나라당 정우택 현지사와 민주당 이시종 의원의 양자대결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일부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정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앞서는 상황이지만 세종시 수정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 판세가 바뀔 수도 있다.

◆대전시장=자유선진당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내세워 최초의 광역 단체장 당선을 노리는 곳이다. 여론 조사로는 염 전 시장이 한나라당 박성효 현 시장을 10%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따돌리며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도 세종시 논란이 승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원웅 전의원과 선병렬 대전시장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의 결 번 호	2010지선87(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강원남부신문사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7-11 중앙빌딩 6층 대표이사 석 영 준
심의대상기사	강원리뷰 2010년 3월 6일자 12~13면 『강원리뷰 창간 11주년 특집 ·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듣는다 “2015년 인구 10만명, 영동지역의 중심도시로 비상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할 것”』, 2010년 3월 19일자 8~9면 『강원리뷰 창간 11주년 특집 · 김학기 동해시장에게 듣는다 “국제특구도시 · 녹색성장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삼척시장, 동해시장) 후보예정자인 현 시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의 시정활동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원리뷰 창간 11주년 특집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듣는다

“2015년 인구 10만명, 영동지역의 중심도시로 비상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할 것”

(전략)Q: 시장님의 솔직담백한 성품, 학자적 탐구성과 추진력은 시행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이 이번 대명그룹과의 협약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A: 리조트 사업이 삼척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대명 업체 이전에도 여러 업체들과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삼척지역 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한 셈이지요. 이번에 대명이 협상대상이 되었을 때 삼척시가 지닌 입지적 여건을 장점, 단점 모두 전달했지요. 상대 업체에서는

단점까지 드러내면서 진솔함을 보이는, 즉 정직한 행정 대상에 대한 믿음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탈하고 정직한 시장은 처음 봤다면서, 그 진솔함에 감탄하면서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중략)

Q: 올해는 지방자치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독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A: 지방선거는 자칫 지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과정의 깨끗한 표결활동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깨끗한 선거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특정 후보에 대한 유언비어나 비방은 깨끗한 선거 운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입지자는 정책을 준비하고, 선거는 정책을 검증하고 대결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검증을 통한 선거과정은 지역발전을 꾀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선거로 인한 지역갈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분열은 지역발전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일상화된 상호비방을 멈추고 정책대결을 통해 지역발전과 화합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서로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지역언론에서 이러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11(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새만금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6-8 대표이사 이 재 춘
심의대상기사	새만금일보 2010년 4월 2일자 15면 『따뜻한 카리스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심의대상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주시의회 의원)와 관련하여 선거 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하는 선 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따뜻한 카리스마

“죽음을 눈앞에 두고 ‘더 일했어야 하는데’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모두 ‘다른 이들을 좀 더 배려했더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써주었어야 했는데...’ 라고 뒤 늦게 후회한다” 어느 랍비가 했던 말로 기억된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 켄 블랜차드는 “우리가 생을 마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다”라고 단언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그리고 세상을 제법 잘 살아내려면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세상에서는 수직적 구조이었다면 현대는 수평적 구조로 변해서 수평적 네트워크조직이 중심이 된 사회구조다.

비즈니스 현장은 일하는 능력 못지않게 많은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중 단연 으뜸인 것은 대인관계 능력이다. 전문적인 능력과 함께 인간적인 매력에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이루어지며 얼마나 신뢰할 만한 네트워크인가에 따라

서 성공이 뒤따라온다. 수많은 CEO와 유명인사들의 성공하는 독특한 이미지요소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한다.

현대적인 의미의 카리스마에는 피지배자들의 ‘자발적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카리스마는 21세기 사회에서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로서 강조된다.

문제는 사람들을 이끌면서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카리스마를 어떻게 원활하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개방해서 상대를 통제하는 자기 표현력과 뛰어난 공감능력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자부하게 만드는 설득의 기술을 발휘한다.

열등감을 넘어서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거절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수락하듯 거절하는 묘를 발휘하고 여유롭게 세상을 품는 유머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잘 해내는 내면에는 지분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신뢰다.

또한 우연한 인연마저도 값싸게 이용하지 않고 숨은 보물처럼 다룬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따뜻한 카리스마’라 할 수 있지 않은가? 서로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존중과 인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기이미지 설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설계와 커리어 관리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미끄럽게 해낼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따뜻한 카리스마’라고 본다.

따뜻한 카리스마가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보통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서로가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사는 일이 편해지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또한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자신의 모습 완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따뜻한 카리스마’의 중요요소를 정리하면 첫째, 자기 표현력이다. 상대방에게 나의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할 때 그것이 역으로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막이 된다.

둘째, 공감능력이다. 공감은 마음을 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로 행하는 것이다.

셋째, 신뢰이다. 신뢰를 얻으려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설득력이다. 설득의 세 가지는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설득하는 사람이 당당해야 하며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다섯째, 겸손이다. 상대방을 마음으로 존중하

고 이것을 성숙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겸손이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가 편안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겸손의 한 방법이다.

여섯째, 거절의 기술이다. 거절할 때 자신의 원칙을 말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곱 번째, 자기극복이다.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모습에서 오히려 자신감이 느껴진다.

여덟 번째, 유머이다.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고
경직을 풀어주는 포용력을 높인다. 자연스런 유머
와 위트를 구사하는 사람에게는 품위와 야량, 관대
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아홉째, 인연이다. 성공하려면 인연의 끈을 중요하게 해야 한다. 내가 먼저 가꾸어 주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열 번째, 비전이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가 존재하는 가치이자 핵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따뜻한 카리스마의 요소를 되새기며 이미지 관리를 잘하자. 현대는 이미지시대이다.

1. 광장



김양옥
민주당 전북도당
장혜인 위원장

“죽음을 눈앞에 두고 ‘더 일했어야 하는데’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모두 ‘다른 이들을 좀 더 배려했더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써주었어야 했는데...’라고 뒤늦게 후회한다” 어느 캄보디아 했던 빌로 기억된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 겸 불만차드는 "우리가 생을 미칠 때 기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다"라고 단언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그리고
세상을 제법 잘 살아내려면 능력만
충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 따뜻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세상이

비즈니스 환경을 일하는 능력 못지 않게 많은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것

자연 으뜸인 것은 대인관계 능력이다. 전문적인 능력과 함께 인간적인 매력에 있는 시인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이뤄지며 얼마나 신뢰할 만한 네트워크인가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진다고 수장은 CEO와 유망인사들의 성공하는 독특한 이미지요소의 공통점을 흥미로운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한다.

현대적인 의미의 카리스마에는 피
지배자들의 '직접적인 신뢰'가 존재
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신뢰를 바탕
으로 한다는 점에서 카리스마는 2.
세기 사회에서 윤희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로서 강조된다.

문제는 사람들을 이끌면서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카리스마를 어떻게 인철하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과뜻함 기러스미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개방해서 상대를 통치하는 자기표현력과 뛰어난 공감능력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자부하게 만드는 설득의 기술을 발휘한다.

연등잔을 넘어서면 새로운 자식을
발견하고 거절도 상대가 기분 나쁘
지 않게 수락하듯 거절하는 묘를 발
회하고 익을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또한 무연한 인연마저도 값싸게 이용하지 않고 숨은 보물처럼 다룬다.

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따뜻한 카리스마'라 할 수 있지 않은가? 서로의 정체심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존중과 인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기이미지 설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설계와 커리어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매끄럽게 해낼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다정한 크리스마' 라고 본다.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보통 '씨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서르키이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사는 일이 원해지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또한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광자인 자신의 모습 완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따뜻한 카리스마의 중요요소를 정리하면 첫째, 자기표현력이다. 상대에게 나의 이미지와 제대로 전달할 때 그것이 역으로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물제, 공간능력이다. 공감은 마음을 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로 해주는 것이다.

셋째, 신뢰이다. 신뢰를 얻으려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하는 사람이 당당해야 하며 타
이심이 맞아야 한다.

다섯째, 겸손이다. 상대방을 마음으
로 존중하고 이것을 성숙한 모습으
로 표현하는 것이 겸손이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가 편안하고 격의 있는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겸손의 한 바

어섯째, 자건의 기술이다. 저절할 때 자신의 원죄를 말하고 분명하게 저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곱 번째, 자기감독이다.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모습에서 오히려 자신감이 느껴진다.

어떤 번째, 유미이다. 유미는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고 경계를 풀어주는 포용력을 보인다. 자인스킨 유미와 임무를 구사하는 자임에게는 권위와 이타, 근대화와 연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인연이다. 성공하려면 인연의 끈을 중요하게 해야 한다. 내가 먼저 바꾸어 주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영 만세, 미전이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 국가가 종래하는 것까지

그러므로 세상을 련방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따뜻한 카리스마의 유산을 답습한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의 유산이다.**

※ 본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카리스마

제 2 장

시정요구심의

1. 정정보도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0지선150(시심)
시 정 요 구 인	임 세 빈 충남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 2
피시정요구인	주간보령주식회사 충남 보령시 대천동 210-7 대표이사 강 철 호
심의대상기사	주간보령 2010년 5월 17일자 3면 『6·2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들이 말하는 출마의 변』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보령> 1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부제목(기호8 임세빈)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주간보령 2010년 5월 17일자 3면 『6·2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들이 말하는 출마의 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주간보령 2010년 5월 17일자 3면 『6·2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들이 말하는 출마의 변』 제하의 기사에서 보령시장으로 출마한 5명의 후보에 대해 출마 이유,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하면서 기호 8번 임세빈 후보에 대한 질의 내용 중 임 후보를 시의원 후보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을 '시의원 후보'로 잘못 보도하여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시정요구대상 기사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시정요구인의 정정보도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시정요구인의 청구 취지도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시정요구대상 기사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1. 제 목 : 바로잡습니다

2. 보도내용

본지 5월 17일자 3면 「6·2 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들이 말하는 출마의 변」 제하의 기사에서 기호 8번 무소속 임세빈 후보는 '보령시장 후보' 이므로 임 후보 관련 질의 내용 1, 2번 중 '시의원'을 '보령시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보도내용

6·2 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들이 말하는
출마의 변기호8 임세빈
보령시장 후보


기호8 임세빈

1. 이번 선거에 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
▲ 지난 12년, 3, 4, 5대 보령시의회의 의원으로 전·현직 시장 재직시 보령시 발전을 위해 도농균형발전, 청년실업과 아침마다 타지로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 문제, 노인복지 확대 문제, 버스승강장과 같은 시민 편의시설 개선 등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시행정에 치중해 개선이 너무 실행되지 않으므로 직접 집행해 반드시 소외되는 지역과 시민이 없는, 모두가 살맛

2. 보령시를 위해 노력해오신 경험과 이번 임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신지
▲ 보령에서 전임시는 20여년을 보냈고, 12년 동안 보령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노인복지 확대, 버스승강장과 같은 시민 편의시설 개선, 도농균형발전, 청년실업과 아침마다 타지로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 문제, 노인복지 확대 문제, 버스승강장과 같은 시민 편의시설 개선 등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시행정에 치중해 개선이 너무 실행되지 않으므로 직접 집행해 반드시 소외되는 지역과 시민이 없는, 모두가 살맛

3. 상대 후보를 상대로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이
▲ 보령시의회의 의원으로 전·현직 시장 재직시 보령시 발전을 위해 도농균형발전, 청년실업과 아침마다 타지로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 문제, 노인복지 확대 문제, 버스승강장과 같은 시민 편의시설 개선, 도농균형발전, 청년실업과 아침마다 타지로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 문제, 노인복지 확대 문제, 버스승강장과 같은 시민 편의시설 개선 등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시행정에 치중해 개선이 너무 실행되지 않으므로 직접 집행해 반드시 소외되는 지역과 시민이 없는, 모두가 살맛

4. 보령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 보령시의회의 의원으로 전·현직 시장 재직시 보령시 발전을 위해 도농균형발전, 청년실업과 아침마다 타지로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 문제, 노인복지 확대 문제, 버스승강장과 같은 시민 편의시설 개선, 도농균형발전, 청년실업과 아침마다 타지로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 문제, 노인복지 확대 문제, 버스승강장과 같은 시민 편의시설 개선 등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시행정에 치중해 개선이 너무 실행되지 않으므로 직접 집행해 반드시 소외되는 지역과 시민이 없는, 모두가 살맛

1. 이번 선거에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지난 12년, 3, 4, 5대 보령시의회의 의원으로 전·현직 시장 재직시 보령시 발전을 위해 도농균형발전, 청년실업과 아침마다 타지로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 문제, 노인복지 확대 문제, 버스승강장과 같은 시민 편의시설 개선 등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시행정에 치중해 개선이 너무 실행되지 않으므로 직접 집행해 반드시 소외되는 지역과 시민이 없는, 모두가 살맛

나는 복지 보령건설의 주춧돌이 되고자 출마를 하게 됐다.

2. 보령시를 위해 상대후보와 차별화된 비전은 무엇인가. 또는 시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보령하면 연상되는 대천해수욕장이 지금 고사의 위기에 있다. 바로 국도77호, 보령항~원산도 간 연륙교 건설이 해저터널로 바뀌어 건설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인 대천해수욕장의 랜드마크가 해저

땅굴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힘 있다는 집권당의 신도 후보의 공약이었으며, 충청을 대변한다는

선진당 류모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저 임세빈이 보령시장이 된다면, 보령시민의 중지를 모으고 단식 등 온몸을 바쳐 연륙교로의 건설을 반드시 쟁취해 보령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정 후 보도문

바로잡습니다

본지 5월17일자 3면 「6.2 지방선거 보령시장 후보자들이 말하는 출마의 변」 제하의 기사에서 기호8번 무소속 임세빈 후보는 보령시장 후보이므로 임 후보 관련 질의 내용 1·2번중 '시의원'을 '보령시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67(시심)
시 정 요 구 인	임 세 빈 충남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 2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대천(주간 보령시민신문) 충남 보령시 대천동 431-1 2층 대표이사 손 동 훈
심의대상기사	주간 보령시민신문 2010년 5월 17일자 8면 『6·2지방선거 후보 등록현황』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주간 보령시민신문〉 8면우측상단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부제목(보령시장 후보)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주간 보령시민신문 2010년 5월 17일자 8면 『6·2지방선거 후보 등록현황』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주간 보령시민신문 2010년 5월 17일자 8면 『6·2지방선거 후보 등록현황』 제하의 기사에서 보령시장 후보 등록현황을 보도하면서 임세빈 후보의 출마기호를 9번으로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의 출마기호는 ‘8번’임에도 ‘9번’으로 잘못 보도하여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오류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 제 목 : 고 침
- 보도내용
5월 17일자 8면 「6·2 지방선거후보 등록현황」제하의 기사에서 임세빈 후보와 양창용 후보의 기호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임세빈 후보는 기호 8번이며, 양창용 후보의 기호는 9번입니다.

〈표〉 보령시장후보 현황

기 호	소속정당	성 명	기 호	소속정당	성 명
1	한나라당	신 준 희	2	민주당	김 기 호
3	자유선진당	이 시 우	7	무소속	김 동 일
8	무소속	임세 빈	9	무소속	양 창 용

보도내용

6.2 지방선거 등록현황

기호 8 양창용

- 정당 : 무소속
- 나이 : 42
- 직업 : 농업
- 학력 : 대명중 3년 제적
- 대표경력 : 도의원 출마
- 재산 : -20억5000만 원
- 병력 : 병역미필
- 납세실적 : 29만8000원
- 전과 : 있음

기호 9 임세빈

- 정당 : 무소속
- 나이 : 45
- 직업 : 보령시의회 의원
- 학력 : 동아인재대 사회복지학과 재학
- 대표경력 : 3·4·5대 보령시의회 의원
- 재산 : 1500만 원
- 병력 : 병역미필
- 납세실적 : 5만1000원
- 전과 : 없음

보령시장 후보

기호	후보명	정당	나이	직업	학력	대표경력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
1	신준희	자유선진당	42	농업	대명중 3년 제적	도의원 출마	-20억5000만 원	병역미필	29만8000원	있음
2	김기호	민주당	48	경영대리인	대명중 3년 제적	도의원 출마	-20억5000만 원	병역미필	29만8000원	있음
3	이시우	자유선진당	42	농업	대명중 3년 제적	도의원 출마	-20억5000만 원	병역미필	29만8000원	있음
7	김동일	무소속	45	보령시의회 의원	동아인재대 사회복지학과 재학	3·4·5대 보령시의회 의원	1500만 원	병역미필	5만1000원	없음
8	양창용	무소속	42	농업	대명중 3년 제적	도의원 출마	-20억5000만 원	병역미필	29만8000원	있음
9	임세빈	무소속	45	보령시의회 의원	동아인재대 사회복지학과 재학	3·4·5대 보령시의회 의원	1500만 원	병역미필	5만1000원	없음

결정 후 보도문

〈바로잡습니다〉

지난호(63호, 5월17일자) 8면에 보도된 12지방선거 후보등록현황 내용기사에서 보령시장 후보 현황에서 기호8번 무소속 임세빈 후보의 기호를 9번으로, 기호9번인 양창용 후보를 8번으로 잘못 게재했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시의원후보현황 및 인터넷에서 다선거구 표일호 후보를 한나라당으로 표기한 것을 미래연합으로, 성태용 후보와 최용식 후보를 다선거구로 표기한것을 다선거구로 바로잡습니다.

/편집부

2.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0지선107(시심)
시 정 요 구 인	양 대 응 서울 구로구 가마산길 340
피시정요구인	구로오늘신문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36-3 발행인 김 유 권
심의대상기사	구로오늘신문 2010년 4월 10일자 1면, 3면 『지역 여론 “특혜의혹” 진실 밝혀라 ‘목청’』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구로오늘신문> 1면에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부제목(대지 1,700평에 골프연습장·휘트니스 운영)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구로오늘신문 2010년 4월 10일자 1면, 3면 『지역 여론 “특혜의혹” 진실 밝혀라 ‘목청’』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구로오늘신문 2010년 4월 10일자 1면, 3면 『지역 여론 “특혜의혹” 진실 밝혀라 ‘목청’』 제하의 기사에서 양대응 구로구청장의 친동생이 소유한 M 골프클럽에 대해 구로구가 세금징수유예를 해주었고, 지난 해 구로구가 이 골프클럽 주변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며, 양 구청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고속성장이 구로구 행정차량 구매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구로구가 M 골프클럽에 징수유예를 해 준 것은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현저한 손실 및 중대한 위기로 판단해 6개월의 징수유예를 처리한 것이고, 근거당 설정은 징수유예에 대한 채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M 골프클럽 부지의 용도 변경이 이뤄진 바 없고, 용도변경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어서 구로구 업무와는 무관하고, 시정요구인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는 자동차 판매와는 관계없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등을 주종으로 하는 회사이며, 구로구의 차량구매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므로 특정 업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시정요구대상 기사는 시정요구인 관련 각종 의혹을 보도한 것으로 시정요구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는 문제가 된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그 요구를 인용할 수 있겠으나, 시정요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시정요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진술한 내용 그리고 시정요구인 관련 타 언론의 보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시정요구 대상 기사가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고, 시정요구인측도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정요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적절한 반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M골프클럽 부지가 지난 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시정요구대상 기사 중간 부제목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보도내용

본보 4월 10일자 1면, 3면 「지역 여론 “특혜 의혹” 진실 밝혀라 ‘목청’」제하의 기사에서 ‘M골프클럽 지난 해 자연녹지→주거지역으로’라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M골프클럽은 지난 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동 기사에 대해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구로구가 M골프클럽에 징수유예를 해 준 것은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현저한 손실 및 중대한 위기로 판단해 6개월의 징수유예를 처리한 것이고, 근저당 설정은 징수유예에 대한 채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M골프클럽 부지의 용도 변경은 이뤄진 바 없으며, 백광화학 부지 용도변경은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구로구와는 무관하고, 구로구 행정차량 구매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므로 특정업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양대웅 구로구청장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보도내용

지역 여론 “특혜 의혹” 진실 밝혀라 ‘목청’

(전략)근저당권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다. 서류대로라면 구로구가 용자를 해준 것이다. 구로구는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저리 용자 및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자금대출이라면 근저당권자가 우리은행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항간에서는 M골프클럽이 세금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구로구가 받아 들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납세자가 화재, 재난을 당한 때, 배우자가 중병으로 장기적인 치료로 요양 중 일 때 등 그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징수유예를 받아들이기에는 M골프클럽은 매우 성업 중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서류대로 구로구는 왜 이곳에 근저

당 설정을 했는지 현재로서는 이유가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한편, 고척동 공인중개사 A씨는 “M골프클럽 주변에 들어서는 돔구장 부지는 세화제강부지로 남아 있었으나 수년간 매매가 안되어 방치되어 있었다”고 밝힌 뒤 “구로구가 서울시에 이 땅에 대해 매입을 요청하면서 현재 돔구장 부지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주민들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M골프클럽 주변에 돔구장 건설을 비롯하여 백광화학 이전 등 많은 개발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M골프클럽이 소재한 이곳은 구로구청의 개발계획 일정까지 잡혀 있는 지역이다.(중략)

■ M골프클럽 지난 해 자연녹지→주거지역으로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M골프클럽 주변은 돔구장 건설, 백광화학 이전 등 개발 호재를 맞고 있다. 실제로 양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지난해 3월 구로구청은 서울시에 백광화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후략)

“개발 호재 고척동 골프클럽대표가 양대웅 구청장 친동생” 지역 여론 “특혜 의혹” 진실 밝혀라 ‘목청’

대지 1,700평에 골프연습장·휘트니스 운영
구로구청서 3억7천여만원 근처당 설정도

지난 3월17일 구로구청의 의결
회 사무실에서 권중호(한나라당서
울산당 부위원장)씨와 최재부(전
구로구의회의장)씨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표면적인 내용은 후보
단일화가 핵심이지만 권중호씨는
이 자리에서 “고척동 특혜의혹”을
언급하며 예외 구체적인 표현은
자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기부
등본을 때보면 안다”라고 하면서
“특혜의혹”에 대한 여론을 남겼
었다.

기자가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특기부등본을 때어 본 결과 M골프
연습장은 고척1동 602지대 용도에
있으며 중앙공원 안에 들어 있다.

이 골프연습장은 2004년 5월 경
남 남해군 삼동면에 주소록 분 건
보(64세 남)씨와 유모(63세 김서
구 병준동)씨가 지분을 인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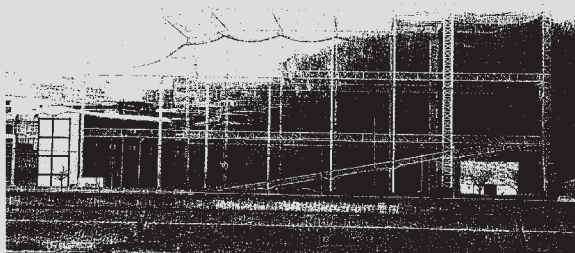
그리고 5개월 후인 2004년 9월20
일에 “양유자자연지분전각이전”
을 구로3동 에이스트원더의 2차
10층 000호에 권리지를 이기 했다.
이곳 사무실 소유자는 양창장 친
동생 부인으로 보이는 조보씨다.

양창장 친동생과 조보씨는 거주지
가 같아서 이런 결본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이 000호제 사무실은 현
제 양창장 친동생이 자동차판매업
을 운영하며 대표이사를 맡고 있
다. 결국 불기부등본 대표라면 M
골프 클럽은 양창장 친동생의 소
유인 셈.

그래서인지 지역 정가에서는 골
프클럽은 “양대웅 구청장과 여형형
대모모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 같은 2월 20일 구로구는 M골
프클럽에 채권최고액 3억7천여만
원에 대한 근처당 설정을 하면서
이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로구의회는 4월20일~23일
까지 안시회를 통해 자유오류를
요청하는 등 의혹은 더욱 확산되
고 있다.

근처남권자는 ‘저들말대로 구로
구’다. 서류대로라면 구로구가 용
자를 해준 것이다. 구로구는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자금대출이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고척동 M골프클럽 전경.

라면 근처당권자가 우리은행으로
말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금은 아닌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항간에서
는 M골프클럽이 세류에 대한 정수
유여를 신청하면서 구로구가 받아
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정수
유여를 받았으면 전자기분이 발생
한 경우나, 남세자가 회계, 저년
을 당한 때, 배우자가 증명으로 장
거적인 치료로 요양 중 일 때 등등
그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따라

야 한다.

따라서 정수유여를 받아들이기
에는 M골프클럽은 매우 상업 중이
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이
다. 그렇다면 서류대로 구로구는
왜 이곳에 근처당 설정을 했는지
현재로서는 이유가 무엇하게 밝혀
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로구의
회 임시회의에 질의 및 답변이 발
세부터 주목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사실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당사자들로

선 의혹하거나, 사실과 다른 편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차피 연
론과 지역사회에서 이슈로 떠오른
만큼, 양창장은 주민들 앞에 존속
하게 소명하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재 구청장의 친동생이
관내에서 대규모 사업장을 세 곳
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관할
지자체의 행정적 영향력과 무관할
수 있겠느냐는 시선이다.

3면으로 계속▶

“고척동 골프클럽 ‘특혜의혹’ 진실 밝혀라”

‘면에서 계속▶

면, 고척동 주민들까지 A
씨는 “구로구청에 주민이 들어
서는 건물주인 지분사 소유주인
지분사 소유주인 지분사 소유주
가 안 되어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구로구가 사들여서 이
렇게 대입을 요청하면서
현재 분구분 부지로 바뀌었다
고” 말했다.

이유는 아예지었던 주민들은
현 회의 의제로 많이 조사가 발
해지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모
글프클럽 주민에 불구상 전신신
대처에 있어 현회의 이선 등 많
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다. 현재 M골프클럽
없이 소재한 이곳을 구로구청의
개발계획 등관계가 같이 있는
지역이다.

M골프클럽은 2004년 12월에
여가를 받아 다시 1,000여 평에
연면적 1,000여 평의 대규모
개발한다.

이곳에는 골프연습장, 휘트
니스, 헬스클럽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100여대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2006년도로 있다. 양
창장 친동생은 지난 2005년 5월
오산 아파트에 함께 M골프클럽
개발비로서로 투입했다. 김
보씨는 양창장과 고척1동 주민
내에 사귀어 것으로 파악했다.

○ M골프클럽 지난 해 지분
지분주지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김
보씨와 함께한 M골프클럽 주
인 분구상 건설, 백승호씨 대한
금 거래 조작을 맡고 있다. 신
계도 한 씨가 대표이사인 학동
을 독립한 지난해 3월, 구로구
청은 서면조사에 백승호씨를 사
면조사에서 주지적으로 배
두기 후인 2월에도 백승호씨
를 했다. 이에 대해 서면조사
같은 해 1월 17일 “조각지 및
신 고상 부지”를 분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서면 조수조연
중에는 개발계획에 한수원 정
수, 사도 자치구, 가설 주지,
조수조연으로도 고상과 한수원
호수조연과이에 대해 한수원
신용년 개발 계획은 계속 확
립한다는 제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주지적으
로 주지적 경우 “지분사 분 배
내 하여분조”라는 제 언급
부동산 관계자들과 이 조력을
한 이는 주민들의 여과다. 구청
이 개발계획을 세우고, 사들
이 배반 주지 조수조연 신
중환 알을 주고 주지적인 “오
비라(배우자)지분”이라고 한
보환 유언”이라는 사이다.

이에 대해 고척동 주민 박
씨는 “양창장 친동생은 발인 사
그 분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매달을 줄여 주”고 “면”지분
는 분 주지적으로 지분사 분
인 유언다.

○ 양창장 친동생 자동차판매업 도 상당

양창장 친동생은 실제로 서
면에서 주지적면서 사업장은 기
타는 구로구 관공제인, 고척동
과 “도동”에 근처당 유고 있
다. 이당 유고 있는 “도동”은
“양창장 친동생이라는 것만으
로도 무언의 양으로 “도동”사
였다”며 “구로구청들은 물론 사
라지 사들들까지도 양창장 친동
생에게 줄 바에”와 같은 이
를 쓰고 있다고 했다.

또 구청 각부담당자들은 대
부분 양창장 친동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것
만으로는 모고지라 2005년 2월
그날 양창장 친동생은 자동차
판매(주지적)라는 회사로, 100
만(구로구 구청)을 개발조
본으로 주지적과 개발조 사들
의 유고였다. 이 회사는 양창장
의 자동차에 대표이사를 맡으면
서 고척 1동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들 두드 지역 거주자 사
는 “이런 양창장은 불합치
구로구 주민이 있을지만 주지
를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라고 관
했다.

000 박씨는 2005년 12월
15일, 2006년 12월의 세출을
내려와 2005년 2006년 2006년
동생 양창장이 인수하면서 주지
이 수는 배도 위변조 고척 동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경 기자)

의 결 번 호	2010지선148(시심)
시 정 요 구 인	전 묘 순 경북 영천시 문내동 대동다숲아파트 101동 1804호
피시정요구인	(주)일간대구경북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5-12 대표이사 이 길 용
심의대상기사	대구경북 2010년 5월 10일자 3면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대구경북> 3면에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부제목(‘잣대 없는’ 공심위 공천…일부 시민들 반발)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대구경북 2010년 5월 10일자 3면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대구경북 2010년 5월 10일자 3면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영천시의회 여성비례대표 1번에 시정요구인을 확정짓고 발표하자 영천지역 대부분 단체들과 영천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4년 전 비례대표를 내정할 때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시정요구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알린 바 있고, 시정요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정문제상담소가 문을 열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한나라당 경북 영천시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영천시민들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정에 반발한 바 없으며, 4년 전 비례대표 선정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시정요구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바 없으며, 시정요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정문제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4년 전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시정요구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시정요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정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시정요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정문제 상담소의 운영에 관해서는 피시정요구인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만을 근거로 기사화했고,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시정요구대상 기사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적절한 반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보도내용

본지 5월 10일자 3면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중 “4년 전 비례대표를 내정할 때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 씨에 대한 부당함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낱알이 알린 바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 확인 결과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전모순씨에 대한 부당함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전모순씨는 “가정문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관련법을 위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전모순 한나라당 영천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보도내용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жат대 없는’ 공심위 공천...일부 시민들 반발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6·2 지방선거 비례대표를 확정해 발표하자 영천시민들이 잣대 없는 공심위 공천에 반발하고 나서 과장이 예상된다.

특히 영천지역 대부분의 단체들은 비례대표 1번 선정에 대해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시민들을 무시한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심위에 대해 불신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심위는 지난 7일 영천시의회 여성비례대표 1번에 전모씨를 확정짓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천발표즉시 일부 시민들이 공심위원인 정희수 국회의원이 시민들의 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완산동에 사는 박모(58)씨는 모든 면을 두고 볼 때 인격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잘난 체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행위는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고 시의원이 되면 우리 같은 시민을 배제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야사동에 사는 박모(53, 여)씨도 “영천 여성 전체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라며 “본인도 무시를 당해 심한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여론에 의하면 4년 전 비례대표를 내정할 때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 씨에 대한 부당함을 정희수 국회의원에게 낱알이 알린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심위에서 영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에 확정된 전 씨는 지난 2008년 11월 13일 가정문제 상담소를 차려 오히려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가정문제 상담소를 차렸으며 대다수시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가정문제 상담소를 개소한 약 2년 동안 잠깐 문을 열었을 뿐 늘 굳게 문이 잠겨 있어 시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상담소 문을 열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으면 현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제7조 2항, 제8조 2항의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大邱慶北

2010년 05월 10일 월요일 003면 종합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жат대 없는’ 공심위 공천...일부 시민들 반발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와 공심위가 6·2 지방선거 비례대표를 확정해 발표하자 영천시민들이 ‘жат대 없는’ 공심위 공천에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영천지역 대부분의 단체들은 비례대표 1번 천정에 대해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시민들을 무시한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심위에

대해 불신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심위는 지난 7일 영천시의회 여성비례대표 1번에 전 모씨를 확정짓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천발표 즉시 일부 시민들이 공심위원인 정희수 국회의원이 시민들의 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완산동에 사는 박모(53·여)씨는 모든 면을 두고 볼 때 인격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잘난 체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행위는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고 시의원이 되면 우리 같은 시민을 배제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사동에 사는 박모(53·여)씨는 “영천 여성 전체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라며 “본인도 무시를 당해 심한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여론에 의하면 4년 전 비례대표를 내정할 때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 씨에 대한 부담감을 정희수 국회의원에게 낱낱이 알린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심위에서 영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에 확정

된 전 씨는 지난 2008년 11월 13일 가정문제 상담소를 차려 오히려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가정문제 상담소를 차렸으며 대다수 시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가정문제 상담소를 겨소한 약 2년 동안 잠깐 문을 열었을 뿐 늘 골계 문이 잠겨 있어 시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상담소 문을 열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으면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제7조 2항, 제8조 2항의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하려 한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재이기자

결정 후 보도문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 5월 10일자 3면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중 “4년 전 비례대표를 내정할 때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 씨에 대한 부담감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낱낱이 알린 바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 확인 결과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전모순씨에 대한 부담감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전모순씨는 “가정문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관련법을 위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3조 의3에 의거 전모순 한나라당 영천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된 것입니다.

3. 경고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0지선31(시심)
시 정 요 구 인	조 영 규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445
피시정요구인	(주)더함안신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아람1차 203호 대표이사 최 성 상
심의대상기사	THE함안신문 2010년 2월 12일자 4면 『함안군수 후보 잇단 출사표』,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면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 2월 26일자 3면 『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3월 11일자 1면 『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 출마선언』, 6면 『더 큰 함안, 더 강인한 함안 만들 것』, 『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 선택』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THE함안신문> 1면 우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별지>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 중 2010년 2월 26일자 3면 '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기사의 제목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THE함안신문 2010년 2월 12일자 4면 『함안군수 후보 잇단 출사표』,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면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 2월 26일자 3면 『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3월 11일자 1면 『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 출마선언』, 6면 『더 큰 함안, 더 강인한 함안 만들 것』, 『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 선택』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THE함안신문 2010. 2. 12.자 4면 『함안군수 후보 잇단 출사표』,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면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 2. 26.자 3면 『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3. 11.자 1면 『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 출마선언』, 6면 『더 큰 함안, 더 강인한 함안 만들 것』, 『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 선택』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후보예정자의 출마회견기사와 인터뷰 등을 수차례 게재했으며, “조영규 함안군수가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게 음해성 비방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특정후보예정자에 대해 수차례 우호적이고 그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한 반면 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는 현 군수인 시정요구인에 대한 출마 관련 기사는 한 차례도 게재하지 않고 오히려 시정요구인을 비방하거나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기사만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시정요구인이 상대적으로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고문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피시정요구인이 2010년 2월 12일 창간호부터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편향된 기사와 인터뷰를 수차례 게재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시정요구인을 비롯한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경고결정문

1. 제목 : 경고결정문

2. 내용 :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월 12일자 4면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면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 2월 26일자 3면 『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3월 11일자 1면 『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 출마선언』, 6면 『더 큰 함안, 더 강인한 함안 만들 것』, 『하성식, 그는 누구인가? 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 선택』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함안군수)와 관련, 본지가 특정 후보 예정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우호적인 기사와 인터뷰를 게재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조영규 함안군수 등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78(재심) (원심결정 : 2010지선31(시심))
재 심 청 구 인	(주)더함안신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아람1차 203호 대표이사 최 성 상
재심청구대상 기 사	The함안신문 2010년 2월 12일자 4면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면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 2월 26일자 3면 『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3월 11일자 1면 『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 출마선언』, 6면 『더 큰 함안, 더 강인한 함안 만들 것』, 『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 선택』제하의 기사
주 문	이 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2010지선31(시심) 경고문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이 건 대상기사 중 조영규 함안군수가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대해 비방성 발언을 했다는 기사내용은 함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로 확인 되었으며,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한 출마기사와 인터뷰 기사는 하 후보예정자가 보도자료를 보내와 보도한 것일 뿐 부각시킬려는 의도는 없었고, 하성식 후보 뿐 아니라 다른 후보에 대한 인터뷰 기사도 게재해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고 조영규 함안군수도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보도할 것이라며 이 건 기사와 관련한 2010지선31(시심)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당위원회가 원심결정을 함에 있어 조영규 함안군수가 상대후보를 비방했다는 보도의 사실여부를 가려 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후보자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조영규 함안군수에 대해서도 출마 선언시 보도할 것이라며 원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심청구인의 청구취지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린 원심의 결정은 적합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당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0억 살포 등 주민들에게 악성유언비어 발언 '파문'

(전략)실제 지난해 12월 29일 범수면 부남동 마을회관 준공식에서 한 군수 출마 예정자를 현직 군수가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마을회관 준공식이 끝나고 오후 1시경 동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영규 군수가 모 군수 출마예정자를 지칭하면서 50억을 쓸 계획이다면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하는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다.(후략)

상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방

50억 살포 등 주민들에게 악성유언비어 발언 '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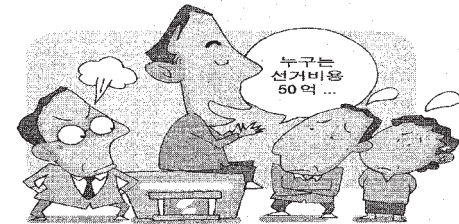
다가오는 6.2 지방 선거를 4개월 여 앞두고 벌써부터 마타도어식 불법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상대 출마 예정자를 비방하는 음해성 발언이 난무 하는 등 혼란스럽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책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12월29일 범수면 부남동 마을 회관 준공식에서 한 군수 출마 예정자를 현직 군수가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마을 회관 준공식이 끝나고 오후 1시경 동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영규 군수가 모 군수 출마예정자를 지칭하면서 50억을 쓸 계획이다면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하는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해당 출마 예정자는 이날 오후 3시경 마을 회관 준공식에 축하 하려고 뒤늦게 참석 했다가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런 사실을 접하고 현직 군수가 돈 선거를 부추기는 것 같아 황당하고 냉담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선거법의 위반여부를 제쳐두고 소위 현직 군수라는 신분으로 마을 회관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여 이 같은 발언으로 상대 후보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은 인격 및 자질발상은 물론 군민 대표로서 속성이 안 되었다며 극도의 불쾌감을 표출 하고 있다. 또 내가 단일 현직 군수라면 마을회관이 건축이 잘되었는지? 주민들의 건강상태와 농민들의 생활 근황에 따른 불편이 없는지? 2010년 영농준비와 농가소득증대 등에 대해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불필요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퍼트려 안타까울 다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군수의 발언을 식사 중에 들었던 마을 주민 안양수씨는 군수의 말을 듣고 황당했다면서 축하하는

자리에 와서 불필요한 발언으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하고 정부에서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를 부르짖고 있는데 군수의 발언은 선거법을 떠나 아주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자는 "선거법위반여부와 명예훼손" 등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함안군 기업체 크게 늘고 인구도 증가
백호의 기상으로 성력 성장 거듭할 것

(전략)기업 2000개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함안상공회의소 하성식 회장(한국계강 대표이사
회장)을 만나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 띠의 해를 맞
아 경영관을 듣는 경인년 인터뷰를 가졌다. (후략)

■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함안군 기업체 크게 늘고 인구도 증가
백호의 기상으로 성력 성장 거듭할 것

최근 참안에 많은 기업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참안은 입주 기업제(공점) 수는 약 140여개 가량, 미입주 기업(공점)은 입주자 개발 전의 현안지역에 그다지 광범위 마산과 인접한 데다 고속도로 등이 관통하고 있어 물류수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안상공공서비스 활용가능 비율이 인구와 시설을 합치고 보면 다른 파면 구역보다 낮아진다. 기업을 2009년 유치해 적극 나서고 있는 칠천면사무소와 하성식 회장(칠천장대 대표이사)을 만나 해안 내면에 돌아온 벼로 재배의 흐름 및 경영관계를 듣는 길인데 신변 위협을 거뒀다.

나이다. 어느 회사에서든지 경제비밀은
관심사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
면 경쟁력은 가장 중요한 것. 경쟁
력이 없다. 경제비밀이 없으면 어
떤 조직이나 회사는 한순간 무가치
가 된다. 경쟁력은 돈이 아니라 정보
이다. 기업이든 경제비밀이든 보일
때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하는 가장 시급
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첫째로 우리 나라의 현안이다.
중화학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
석에너지와 밀접하다. 또 화학은 신
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위
기술을 이루기 전에 할 수 있는 일
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서라도 경제에 주어지



右の金相浩 金相浩(55)は外資系企業で経営者として活躍。金相浩(55)は外資系企業で経営者として活躍。

▲정신은 해방의 열이 끓어오르
게 한데 의의가 더 커서
- 한동안은 국민공화국으로
가겠다고 생각이 들다 각지의 소
속을 천하가 다 바뀔 것이라는
기대하고 기원 1년후에
▲국민은 인구가 10대 10대
중 1위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될까?
-이제야 앞으로 후방의 인
구 분포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것이다. 한동안은
국민공화국으로 갈지
아니 승격도 없을지
가 될까?

▲연료가 거의罄乏한 노르망
공화국의 기함인대령 5차원이 8
천으로 내려가 오히려 4천에
달한 것이지?

▶「그렇다면, 4천에 불과
한 수, 도대체, 4천이라는 숫자
가 얼마나 적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아닐까? 노르망 공화
국의 인구는 2백만 명인데, 이
노르망 공화국의 인구는 4
천만 명에 달하는 나라에
비하면 겨우 2천분의 1에
달하지 않습니까? 이 수치를
만약에 4천만 명에 달하는
나라에 비하면, 4천이라는
숫자는 정말로 미미한 수에
달하지 않습니까?」

▲연료가 거의罄乏한 노르망
공화국의 기함인대령 5차원이 8
천으로 내려가 오히려 4천에
달한 것이지?

▶「그렇다면, 4천에 불과
한 수, 도대체, 4천이라는 숫자
가 얼마나 적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아닐까? 노르망 공화
국의 인구는 2백만 명인데, 이
노르망 공화국의 인구는 4
천만 명에 달하는 나라에
비하면 겨우 2천분의 1에
달하지 않습니까? 이 수치를
만약에 4천만 명에 달하는
나라에 비하면, 4천이라는
숫자는 정말로 미미한 수에
달하지 않습니까?」

[illegible]

- 앞으로 기업체 수장은 별로 손
기럽습니다. 대략 1400여개 정도는
지원을 받는다. 아직 굳이 기업
체 중에 열강 대종이 1000여 개에
남아서는 업체도 속속 나오고 있
습니다.

▲**영수 파악** 직전에 출근한 일제
는 착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영수 파악과 기종 파악은 보
고 있다.

— 지역경제에의 모든 외부가 충
 경외의소로 모이는 만큼 지역 경
 제의 균형적 성장을 해 나간다면
 상인들과의 규약을 위해 노력해 나
 갈 계획이 있는가.

모교 생활과 대한 무용에 공헌
한바다

일부 재지 부흥단 임직원이
이 학회를 구상해서 비록재
으로 재건하는 바에에 대한 가
적응이 충분하고 있어, 것은
바다이다. 지리이론과 재현을
위하여 좀더 일관성 있게
▲수업 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재현이 좀 비어져야
지 일관성이

— 중앙지역에는 유래전래의 서
화보존에 노력한 고장으로, 대다수의
중·고급화가 작립의 요인이
다.

소도를 조사하여, 대량 발생하고 기온
간 신체의 반응을 위한 인력과 대하
의 자료를 조사할 것입니다.

또 대량발생을 위한 성격 미하
도를 조사하고, 일대대 과정을 갖게
됩니다.

조만간 양양산악에서서는 지역 중
간들은 초청해서 강연에 참가할 수
발하는 행사도 가끔 개최를 추진
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하
문명사 같은 미하도를 가지고

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발전기호를 기호문에 포함합니다.

보았습니다.

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3월 3일 군청 소회의실서 함안 발전 청사진
제시계획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이 함안군수 출마 선언을 위해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하회장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함안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안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그는 주변의 출마권유와 만류속에 긴 시간을 갖고 장고를 거듭해 왔다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기업경영철학과 현장경험을 행정에 접목시켜 “더 큰 함안, 더 강한 함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중앙부서의 인맥을 풀가동시켜 혼신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함안군수출마를 준비해 왔다고 한다. (후략)

하성식 함안상의 회장 군수 출마 회견

3월 3일 군청 소회의실서 할안 발의 청사진 제시계획

리성식
함안상공
회와스룻
장이함안
군수출파
산언을위
해공식기
자원계유

그는 주변의 술과 담배와 만류 속에 긴 시간을 갖고 장외를 거뜬히 왔다면서 지금까지 걸여온 기업경영철학과 현장경험을 함정에 접목시켜 "더 큰 함안, 더 강한 함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중앙부서와 인맥을 활용시켜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앞

회장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한양대 안근형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양 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하회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그 동안 치러진 수차례 선거로 지역 갈등과 분열로 일룩진 채 군민들이 외망과 자괴심을 잃어 가고 있

기업경영철학 행정집목 '더 큰 함안, 더 강한함안' 육성

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 출마선언

기업경영철학 행정집록 '더 큰 합안, 더 강한합안' 육성



한글공회(회장 박정호)가 5월 18일(수) 오후 2시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초등학교에서 개교식을 갖고, 변화와 혁신으로 본 단임, 더 강한 한민'을 만들고 본 단임'의 이라기 다의 및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출 사교를 단지에 보았다고 김미애를 밝혔다.▶이민부·편린기사 6년 출사교를 단지에 보았다고 김미애를 밝혔다.▶이민부·편린기사 6년 출사교를 단지에 보았다고 김미애를 밝혔다.

동안 고인의 시간을 갖고 결심할 하게 됐다. 지금까지 기업인으로 살아가는 기업경영철학과 현직경영을 행정에 접목시켜야 하는 일만, 비감탄할만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자라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행정직역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찾아서 있다고 주장하고, 자기에게는 인권을 존중하라고 배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화해하고 결단함으로써 하사했다. 그해 12월 24일을 계기로 '부자살인, 강간, 폭행, 음모'로 거류할 수 있도록 작정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의 원이 규기를 변화 발전시키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개혁취지를 밝히도록 진술했었는데, 포부도 밝았다. 저지르 할양출산의 경우, 또다시 재발하면 선형,출산의 지적재산권을 재회하고, 갇힌 또두 친 생의 개과제출을 종용하는 부처와 인을 만났는데, 소신을 거두었다.

호호장은 더 크고, 더 강한 안
을 단드는 작은 많은 시간이 소모
되지 않을 것이라, 큰일을 맡겨주
신다면 일기4년 품안 머더함안발전
공원을 만들어 발전기반을 확충하
고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한 군 행정직임을 위해 부군수

오십의식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여, 포인팅경제로 행정장치를 개편하여 중앙부처·국도·경남도청을 비롯하여, 전국에 포진하고 있는 안착거점위공로를 적극 활용하여 더 큰 함양, 더 강한방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제력 초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한다.

홍희장은 자의와 충당성소는 자
도자의자질이 여러 좌우를 갖기
일하는 여러 군민에게의 소중하고
현명한선언으로 보일 것이다. 대
정현안 의마와비마에 나가는데
저러한것들은 자질과 인품을 갖춘
인물을 선택하여 바쁘게일 것으로
말하고 있다.

1

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 선택

본적이 경남 의령인 그는 마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엘리트로 군복무 또한 ROTC 육군 장교로 전역했다. 그런 그가 한 치도 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면서 근면·성실하되 승부수를 띄워야 할 시점에서는 과감한 결단력으로 난관을 돌파하면서 오늘날의 한국제강을 반듯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은 그 특유의 탁월한 리더십의 결정체이다. 또한 누구도 생각지 못한 획기적인 공적으로 연 200억 원에 달하

는 원가절감의 꾀거를 올린 것을 위시해 수많은 운영의 혁신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끊임없는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각고의 노력에 한국제강 직원들은 전 국민을 고통으로 내본 IMF경제 한파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는 고향은 함안이 아니다. 그러나 함안에서 반평생을 넘어 머리가 희끗해지도록 살아오면서 함안 땅은 내 고향이다'라고 항상 말한다. 그는 그의 부모님이 돌아 가셨을 때 역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회사 뒷산인 군북면 유현리에 산소를 모셨다. 진정으로 함안 땅이 자신이 물론이고 자손대대로 뼈를 묻을 곳이라는 결심을 실천한 것이다. 어릴 적부터 힘센 사람보다는 힘없는 사람 편에 서기를 유난히 좋아했던 인간 하성식은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철학은 실천하며 결코 수단만 강구하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살아왔다.

달콤한 결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리원칙을 바탕에 둔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내포된 인간정영이 더욱 강한 힘을 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값비싼 양주보다는 삼겹살에 소주를 막걸리에 푼나물을 즐기는 그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하며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있다.

그는 함안발전의 초석은 함안인재육성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매년 수억원의 장학금을 쾌척함은 물론 일류대학에 당당히 합격하고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문을 접할라치면 기꺼이 등록금 등을 비롯해 문제를 맡음이 해결해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평소 함안지역 향토 사랑이 각별한 그는 함안지역의 체육·예술문화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

“더 큰 함안, 더 강인한 함안 만들 것”

발행인 인터뷰 (4)
하성식 군수 출마예정자 인터뷰

다녔으며 6.25전쟁기를 맞고도 함안군수출마에 참여하며 지금까지 농촌을 사랑하고 유망지역을 위해 다양한정책을 자문화여 공헌하여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인재에 대한정책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경제활성화에 초점...중앙·국회 인맥 통해 모두 동원
선언기반 조기 조성·사회적 약자 대책 등 이미 '준비'

장학금 모금 박차, 인제외부유를 방지해 혼신 다할 것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함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안군수로서 자부심을 품고 있다.

하성식, 그는 누구인가?

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 선택

하성식은 누구인가?
오른 5.22 함안군수출마예정자 하성식 군수출마예정자 인터뷰

하성식은 누구인가?
오른 5.22 함안군수출마예정자 하성식 군수출마예정자 인터뷰

하성식은 누구인가?
오른 5.22 함안군수출마예정자 하성식 군수출마예정자 인터뷰

하성식은 누구인가?
오른 5.22 함안군수출마예정자 하성식 군수출마예정자 인터뷰

하성식은 누구인가?
오른 5.22 함안군수출마예정자 하성식 군수출마예정자 인터뷰

하성식은 누구인가?
오른 5.22 함안군수출마예정자 하성식 군수출마예정자 인터뷰

하성식은 누구인가?
오른 5.22 함안군수출마예정자 하성식 군수출마예정자 인터뷰

하성식은 누구인가?
오른 5.22 함안군수출마예정자 하성식 군수출마예정자 인터뷰

하성식은 누구인가?
오른 5.22 함안군수출마예정자 하성식 군수출마예정자 인터뷰

하성식은 누구인가?
오른 5.22 함안군수출마예정자 하성식 군수출마예정자 인터뷰

하성식은 누구인가?
오른 5.22 함안군수출마예정자 하성식 군수출마예정자 인터뷰

는다. 특히 비인기 종목이라 남들이 꺼리는 궁도·시조·창·국악·케이블 등과 함안농업 발전을 위해 남·여 농업경영인 지원 등 소외된 어려운 단체의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간혹 기업 경영인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경영을 하는 사람은 국가경영 등 모든 경영도 잘 하는 법이라며 가까이는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경제대국 일본의 경우도 70% 이상이 경제인 출신이며 미국 등 다른 외국에서도 그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역설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무턱대고 부정적인 잣대로만 들이 댄다면 어떤 분야에도 먼지는 있는 법.

단지 당사자가 깨끗하다면 탁월한 경영 능력을 살려 낙후된 함안을 희망

의 샘물이 솟아나는 땅으로 탈바꿈 시킬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함안 땅은 우수한 역사와 전통이 배어있는 곳이다.

그러나 아직도 도, 농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도약하는 함안 희망과 비전이 있는 함안 만들기에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다.

결정 후 보도문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가심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월12일자 4면『삼대후보 출마예정자에 음해성 비판』5면『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인터뷰』2월26일자 3면『하성식 함안상공회의장군수출마회견』3월11일자 1면『하성식 회장 함안 군수출마선

언』6면『더 큰 함안, 더 강한 함안 만들 것』하성식 그는 누구인가? 기업인에서 군수로 봉사선택』제하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선거가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함안 군수)와 관련, 본지가 특정 후보

예정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우호적인 기사와 인터뷰를 게재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조영규 함안 군수 등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가사 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79(시심)
시 정 요 구 인	현 명 관 제주시 노형동 2587-7 노형타워 205호
피시정요구인	(주)제주우먼타임스(제주프레스) 제주시 연동 268-4 영보빌딩 3층 대표이사 부 임 춘
심의대상기사	제주프레스 2010년 3월 31일자 1면, 2면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돌파 ‘빈축’』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제주프레스> 1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1>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의 부제목(현 후보, 삼성생명주식----)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제주프레스 2010년 3월 31일자 1면, 2면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돌파 ‘빈축’』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제주프레스 2010년 3월 31일자 1면, 2면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돌파 ‘빈축’』 제하의 기사에서 현명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시정요구인의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비방보도해 선거를 앞두고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충분한 사실확인 과정 없이 보도한 것은 소문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피시정요구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로 하여금 시정요구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고 유권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바 이는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및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경고결정문

1. 제목 : 경고결정문

2. 내용 :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3월 31일자 1면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돌파 ‘빈축’』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 본지가 현명관 제주시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충분한 사실확인 과정 없이 보도한 것은 소문의 사실 여부를 떠나 현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현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객관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12(재심) (원심결정 : 2010지선79(시심))
재 심 청 구 인	(주)제주우먼타임스 제주시 연동 268-4번지 영보빌딩 3층 발행인 부 임 춘
재심청구대상 기 사	제주프레스 2010년 3월 31일자 1면, 2면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돌파 ‘빈축’』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2010지선79(시심) 경고문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대상 기사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 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유권자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보도이며, 현명관 후보에 대한 소문내용에 대해서는 현 후보의 가까운 지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제주 사회에 퍼진 소문을 전달할 것일 뿐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한 바 없으므로 원심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의 권리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린 원심의 결정은 적합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당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 돌파 ‘빈축’

현 후보, 삼성생명주식 차명계좌 관련
거짓말에 이은 사생활 논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든지,
아니 땀 굴뚝서 나는 연기를 막든지
법적 대응을 내세운 ‘으름장’ 보다
신뢰성 있는 해명이 우선 돼야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고향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며 도지사직에 출마해 많은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현명관 전 삼성그룹 고문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부

터 모락모락 피어올랐던 아내와의 불화설, 여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삼성 비자금 관련 거짓말에 이어 그 진실 여부 문제가 이번 선거에 상당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중략)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현명관 고문은 도지사 예비선거 등록을 마치고 작심한 듯 도청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젊은 가정주부, 아내) 사생활과 관련된 시중의 여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현 고문은 “자신에 대한 입소문은 100% 거짓이라며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유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며 ‘으름장’을 놓고 엄정대처 방침을 시사했다.(중략)

그 소문의 내용들을 조합해 정리하면 이렇다.

현 고문은 가정을 부인 외에 삼성회사 내 자신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 돌파 '빈축'

현 후보, 삼성생명주식 차명계좌 관련 거짓말에 이은 사생활 논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든지, 아니 뎌 굴뚝서 나는 연기를 막든지
법적 대응을 내세운 '으뜸장' 보다 신뢰성 있는 해명이 우선 돼야

지난 2009년 5.31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일군에서 다짜파리로 교향을 위해 봉사한 하종대다. 자식에게 출마의 많은 도전들로부터 자자를 받았던 형님판 선지 삼성그룹 고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부터 다짜파리로 교향을 하던 하종대다. 불확실, 여성과 관련된 두렵지만 사생활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삼성그룹의 관련 거짓말이 이어 그 지점 여부 문제가 이번 선거에 상당한 변수로 떠오른 정황이다.

지상에서 당시 삼영미자급 등재가 전국적으로 불거지자 지상명예와 삼영 주주들 자신은 물론 일가까지 숨겨놓은 비화들이 나오고 주춤하면서 만일 그제 사임을 밝히지면 도지사 후보를 사퇴할 것이요 밝힌다면, 이후 권철 수사를 통해 자신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자, 당시 제주도청 기차길을 찾아 자신이 가진 주식을 현금으로 사전을 삼영까지 차용해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도청에러서 사과 하였다'고 이번 도지사 선거에 한탄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한민
통 고문은 도지사 예비선거 후
목숨 마치고 직살한 듯 고질
자살을 찾아 자신의 (출)로
주부, 아내) 사생활과 권력
시중의 여류에 대해 묻거나
기함으로서 이에 대한 여류
해답과 있다.

한 고문은 "자신에 대한 일
문은 100% 거짓이며 한민
유대 조조조로, 한민
유대라는 명제는 방한 반
위대" "음모"를 놓고 영
대차 방첩을 시사했다.

대차 방첩을 시사했다.

한 교문은 큰 수습을 받은 아
예저 기정종과 본사문도 물
고 한층동안 갈도 있지 못했
며 아유리 2008년 1월 17
만에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
댓글을 한 번이나 중한 경찰
사찰 통해 근거 없는 허위사
실이 밝혀졌고 댓글을 그
관련 증거로 수사기록이 발
견됨을 내외로 '사이버서'는
잘 일'이라고 밝혔다.

(국문은 기

▶2면에 계속

한 가정의
들의 엄
으로 선
는 남편
고, 또
에 이는

주부이자 아내
-인 이 A모 여
-중에 이를 눈
-로부터 구타
A모 여성은
3어짜리, 7급

성인 30대 중반
치 채고 의심하
를 당하기도 했
원 고문이 노형
파트를 자신



→ 1면 '영양과 고문'에서 계속

1. 우리 나라 실업률은 1970년에는 10.5%로
 2. 1971년에는 11.5%로, 1972년에는 12.5%로
 3. 1973년에는 13.5%로, 1974년에는 14.5%로
 4. 1975년에는 15.5%로, 1976년에는 16.5%로
 5. 1977년에는 17.5%로, 1978년에는 18.5%로
 6. 1979년에는 19.5%로, 1980년에는 20.5%로
 7. 1981년에는 21.5%로, 1982년에는 22.5%로
 8. 1983년에는 23.5%로, 1984년에는 24.5%로
 9. 1985년에는 25.5%로, 1986년에는 26.5%로
 10. 1987년에는 27.5%로, 1988년에는 28.5%로
 11. 1989년에는 29.5%로, 1990년에는 30.5%로
 12. 1991년에는 31.5%로, 1992년에는 32.5%로
 13. 1993년에는 33.5%로, 1994년에는 34.5%로
 14. 1995년에는 35.5%로, 1996년에는 36.5%로
 15. 1997년에는 37.5%로, 1998년에는 38.5%로
 16. 1999년에는 39.5%로, 2000년에는 40.5%로
 17. 2001년에는 41.5%로, 2002년에는 42.5%로
 18. 2003년에는 43.5%로, 2004년에는 44.5%로
 19. 2005년에는 45.5%로, 2006년에는 46.5%로
 20. 2007년에는 47.5%로, 2008년에는 48.5%로
 21. 2009년에는 49.5%로, 2010년에는 50.5%로
 22. 2011년에는 51.5%로, 2012년에는 52.5%로
 23. 2013년에는 53.5%로, 2014년에는 54.5%로
 24. 2015년에는 55.5%로, 2016년에는 56.5%로
 25. 2017년에는 57.5%로, 2018년에는 58.5%로
 26. 2019년에는 59.5%로, 2020년에는 60.5%로
 27. 2021년에는 61.5%로, 2022년에는 62.5%로
 28. 2023년에는 63.5%로, 2024년에는 64.5%로
 29. 2025년에는 65.5%로, 2026년에는 66.5%로
 30. 2027년에는 67.5%로, 2028년에는 68.5%로
 31. 2029년에는 69.5%로, 2030년에는 70.5%로
 32. 2031년에는 71.5%로, 2032년에는 72.5%로
 33. 2033년에는 73.5%로, 2034년에는 74.5%로
 34. 2035년에는 75.5%로, 2036년에는 76.5%로
 35. 2037년에는 77.5%로, 2038년에는 78.5%로
 36. 2039년에는 79.5%로, 2040년에는 80.5%로
 37. 2041년에는 81.5%로, 2042년에는 82.5%로
 38. 2043년에는 83.5%로, 2044년에는 84.5%로
 39. 2045년에는 85.5%로, 2046년에는 86.5%로
 40. 2047년에는 87.5%로, 2048년에는 88.5%로
 41. 2049년에는 89.5%로, 2050년에는 90.5%로
 42. 2051년에는 91.5%로, 2052년에는 92.5%로
 43. 2053년에는 93.5%로, 2054년에는 94.5%로
 44. 2055년에는 95.5%로, 2056년에는 96.5%로
 45. 2057년에는 97.5%로, 2058년에는 98.5%로
 46. 2059년에는 99.5%로, 2060년에는 100.5%로
 47. 2061년에는 101.5%로, 2062년에는 102.5%로
 48. 2063년에는 103.5%로, 2064년에는 104.5%로
 49. 2065년에는 105.5%로, 2066년에는 106.5%로
 50. 2067년에는 107.5%로, 2068년에는 108.5%로
 51. 2069년에는 109.5%로, 2070년에는 110.5%로
 52. 2071년에는 111.5%로, 2072년에는 112.5%로
 53. 2073년에는 113.5%로, 2074년에는 114.5%로
 54. 2075년에는 115.5%로, 2076년에는 116.5%로
 55. 2077년에는 117.5%로, 2078년에는 118.5%로
 56. 2079년에는 119.5%로, 2080년에는 120.5%로
 57. 2081년에는 121.5%로, 2082년에는 122.5%로
 58. 2083년에는 123.5%로, 2084년에는 124.5%로
 59. 2085년에는 125.5%로, 2086년에는 126.5%로
 60. 2087년에는 127.5%로, 2088년에는 128.5%로
 61. 2089년에는 129.5%로, 2090년에는 130.5%로
 62. 2091년에는 131.5%로, 2092년에는 132.5%로
 63. 2093년에는 133.5%로, 2094년에는 134.5%로
 64. 2095년에는 135.5%로, 2096년에는 136.5%로
 65. 2097년에는 137.5%로, 2098년에는 138.5%로
 66. 2099년에는 139.5%로, 2100년에는 140.5%로
 67. 2101년에는 141.5%로, 2102년에는 142.5%로
 68. 2103년에는 143.5%로, 2104년에는 144.5%로
 69. 2105년에는 145.5%로, 2106년에는 146.5%로
 70. 2107년에는 147.5%로, 2108년에는 148.5%로
 71. 2109년에는 149.5%로, 2110년에는 150.5%로
 72. 2111년에는 151.5%로, 2112년에는 152.5%로
 73. 2113년에는 153.5%로, 2114년에는 154.5%로
 74. 2115년에는 155.5%로, 2116년에는 156.5%로
 75. 2117년에는 157.5%로, 2118년에는 158.5%로
 76. 2119년에는 159.5%로, 2120년에는 160.5%로
 77. 2121년에는 161.5%로, 2122년에는 162.5%로
 78. 2123년에는 163.5%로, 2124년에는 164.5%로
 79. 2125년에는 165.5%로, 2126년에는 166.5%로
 80. 2127년에는 167.5%로, 2128년에는 168.5%로
 81. 2129년에는 169.5%로, 2130년에는 170.5%로
 82. 2131년에는 171.5%로, 2132년에는 172.5%로
 83. 2133년에는 173.5%로, 2134년에는 174.5%로
 84. 2135년에는 175.5%로, 2136년에는 176.5%로
 85. 2137년에는 177.5%로, 2138년에는 178.5%로
 86. 2139년에는 179.5%로, 2140년에는 180.5%로
 87. 2141년에는 181.5%로, 2142년에는 182.5%로
 88. 2143년에는 183.5%로, 2144년에는 184.5%로
 89. 2145년에는 185.5%로, 2146년에는 186.5%로
 90. 2147년에는 187.5%로, 2148년에는 188.5%로
 91. 2149년에는 189.5%로, 2150년에는 190.5%로
 92. 2151년에는 191.5%로, 2152년에는 192.5%로
 93. 2153년에는 193.5%로, 2154년에는 194.5%로
 94. 2155년에는 195.5%로, 2156년에는 196.5%로
 95. 2157년에는 197.5%로, 2158년에는 198.5%로
 96. 2159년에는 199.5%로, 2160년에는 200.5%로
 97. 2161년에는 201.5%로, 2162년에는 202.5%로
 98. 2163년에는 203.5%로, 2164년에는 204.5%로
 99. 2165년에는 205.5%로, 2166년에는 206.5%로
 100. 2167년에는 207.5%로, 2168년에는 208.5%로
 101. 2169년에는 209.5%로, 2170년에는 210.5%로
 102. 2171년에는 211.5%로, 2172년에는 212.5%로
 103. 2173년에는 213.5%로, 2174년에는 214.5%로
 104. 2175년에는 215.5%로, 2176년에는 216.5%로
 105. 2177년에는 217.5%로, 2178년에는 218.5%로
 106. 2179년에는 219.5%로, 2180년에는 220.5%로
 107. 2181년에는 221.5%로, 2182년에는 222.5%로
 108. 2183년에는 223.5%로, 2184년에는 224.5%로
 109. 2185년에는 225.5%로, 2186년에는 226.5%로
 110. 2187년에는 227.5%로, 2188년에는 228.5%로
 111. 2189년에는 229.5%로, 2190년에는 230.5%로
 112. 2191년에는 231.5%로, 2192년에는 232.5%로
 113. 2193년에는 233.5%로, 2194년에는 234.5%로
 114.

[illegible][illegible][illegible]

후보 진
와 입소
내 모
과 유사
계를 폭
이 A 모
게재가
A 모 여
발조치
올린 사
획을 돕
문의 후
씨로 밝

이었던 측근을 타던 중 2011년 인터넷신문에 몇몇 현 고문과 A가 관여하는 내용이 실려 여성의 요청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이 경찰에 명명되었다. 경찰 조사는 서울에서 A가 위해 캠프에 있는 지질 최고선생였다. 이 B 모

로부터 흘러나
06년 9월 쯤 도
글로 이런 내
모 여성과의 골
올려졌다. 이때
조작제, 다시 자
되다가 결국 이
에 훼손으로 고
결과 이 댓글을
후보 선거 기
합류했던 현 고
의 측근인 B 도
씨가 바로 현 고

의 부하 여직원이었던 젊은 여성과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도지사직 선거에 나오게 되자 이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설득해 관계를 회복하고 선거운동에 동참하게 됐다.

그러나 현 고문은 또 5.31 선거운동 와중에도 당시 자신을 수행하던 모 당소속인 후보 수행비서인 A 모 여성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

위사실 유포로
지목한 사람이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선거기사업의위원회는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 본지가 현판 제주지사 한기호(당 예비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증명한 사실확인 과정 없이 보도한 것은 소문의 사실여부를 떠나 현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현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의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객관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고결정문

본지는 선거기사의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3월31일자 1면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 돌파'와 '빈축',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23(시심)
시 정 요 구 인	오 근 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82-14
피시정요구인	(주)뉴시스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1-1 서원빌딩 7층 대표이사 신 상 석
심의대상기사	뉴시스 2010년 4월 20일자 『교육감선거 진흙탕 싸움되나…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시정요구인이 운영하는 〈뉴시스〉 2010 지방선거 섹션에 〈별지 1〉 「오근량 전북교육감 후보 논문 표절 관련 경고결정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게재한다. 단, 게재 기간은 게재된 날부터 48시간으로 하되,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시정요구취지	뉴시스 2010년 4월 20일자 『교육감선거 진흙탕 싸움되나…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사과문’을 게재하고 관련 기사를 삭제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뉴시스 2010년 4월 20일자 『교육감선거 진흙탕 싸움되나…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언론에 배달되어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음해성 투서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과문 게재와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제보자가 확실하지 않은 우편물 내용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이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보도한 것은 우편물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시정요구인의 명예를 훼손할 개연성이 있으며 또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및 제3조(객관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경고결정문

1. 제목 : 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제보 관련 경고결정문

2. 내용 : 뉴시스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4월 20일자 『교육감선거 진흥탕 싸움되나...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북교육감)와 관련,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제보자가 “오근량 후보의 석사논문이 표절이다”라고 제기하는 주장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은, 주장의 진위여부를 떠나 비록 보도내용에 오 후보의 반론이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오 후보의 명예를 훼손할 개연성이 있고, 오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6·2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진흥탕 싸움되나...

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

【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오근량 전북교육감선거 예비후보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최근 언론에 배달돼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 후보 측은 “근거없는 음해공작으로 언론을 기만하는 제보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발송인이 완주군 000씨로 적힌 이 우편물에는 오 후보가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시절 석사학위 논문(1987년)을 작성하면서 A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모씨의 석사 논문(1984년)을 표절했다는 내용으로 1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우편물은 오 후보가 논문(진로지도 개선)을 작성하면서 김씨의 논문(진로지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고교생의 진로의식 비교 연구)을 60% 이상 베끼거나 변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설문지는 100%를 타인의 것을 사용했고,

이론적인 내용도 90%를 베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지적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해명하는 한편, 음해성이 짙은 내용의 우편물인 만큼 모든 후보자들이 과거 작성한 논문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후보 측은 해명 자료에서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충실하게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발표했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이라며 “보

[6·2지방선거]교육감선거 진흥탕 싸움되나...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

교육감선거 진흥탕 싸움되나...

【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오근량 전북교육감선거 예비후보가 석사학위 논문 표절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최근 언론에 배달돼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 후보 측은 “근거없는 음해공작으로 언론을 기만하는 제보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발송인이 완주군 000씨로 적힌 이 우편물에는 오 후보가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시절 석사학위 논문(1987년)을 작성하면서 A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모씨의 석사 논문(1984년)을 표절했다는 내용으로 1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우편물은 오 후보가 논문(진로지도 개선)을 위한 고등학생의 진로의식 분석)을 작성하면서 김씨의 논문(진로지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고교생의 진로의식 비교 연구)을 60% 이상 베끼거나 변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설문지는 100%를 타인의 것을 사용했고, 이론적인 내용도 90%를 베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지적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해명하는 한편, 음해성이 짙은 내용의 우편물인 만큼 모든 후보자들이 과거 작성한 논문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후보 측은 해명 자료에서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충실하게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발표했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이라며 “보도 사실한 결정을 위해 언론기관에 제보자와 중립으로 언론기관 인터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공직적 책임을 밝자”고 요구했다.

또 “제보자의 의견을 요약하면 내용은 다르지만 진술형식의 유사함만을 지적하고 있고, 연구결과 및 분석도 도표 제작의 유사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스스로 사례수와 통계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후보의 논문은 반복연구 기법등 활용된 조사연구 논문으로 ‘임의’의 설문지를 수장·보관해 사용한다”고 논문 24쪽에서 측지론 명시했다”면서 표절 주장을 일축했다.

또 “앞서 전북대학교학원에서 오 후보의 논문을 지도한 지도교수도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김씨의 설문지를 활용, 연구가 이뤄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속적인 지도가 있었다”면서 “교육대학원 논문의 대부분이 반복연구도 이뤄지고 있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특정한데에만 중립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갖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주장하는 표절 시범의 특징은 본래적 연구결과 기원에 비쳐 ‘반복연구’의 형

또 “제보자의 의견을 요약하면 내용은 다르지만 진술형식의 유사함만을 지적하고 있고, 연구결과 및 분석도 도표 제목의 유사성에 대해 지적하고

특히 “후보의 논문은 반복연구 기법을 활용한
조사연구 논문으로 ‘김모씨의 논문 설문지를 수
정·보완해 사용한다’고 논문 24쪽에서 출처를 명
시했다”면서 표절 주장을 일축했다. (후략)

의 결 번 호	2010지선181(시심)
시 정 요 구 인	김 경 회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05 진달래 연립 라동 303호
피시정요구인	진천군민신문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구 169-1 발행인 임 영 단
심의대상기사	진천군민신문 2010년 5월 27일자 1면 『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2면 『우석대 진천캠퍼스 착공 가시화』, 3면 『진천도농복합휴양타운 개발프로젝트 순조』, 4면 『진천군 내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5면 『충북 혁신도시 차질없이 건설』, 7면 『문백면 폐석면처리업체 진천군 승소』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진천군민신문> 1면 우측 상단에 <별지 1>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 중 1면 『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제하 기사의 부제목(‘민선4기 군정추진 관련 유영훈 진천군수 후보 기자회견 밝혀’) 크기의 고딕활자체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진천군민신문 2010년 5월 27일자 1면 『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2면 『우석대 진천캠퍼스 착공 가시화』, 3면 『진천도농복합휴양타운 개발프로젝트 순조』, 4면 『진천군 내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5면 『충북 혁신도시 차질없이 건설』, 7면 『문백면 폐석면처리업체 진천군 승소』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경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진천군민신문 2010년 5월 27일자 1면 『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2면 『우석대 진천캠퍼스 착공 가시화』, 3면 『진천도농복합휴양타운 개발프로젝트 순조』, 4면 『진천군 내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5면 『충북 혁신도시 차질없이 건설』, 7면 『문백면 폐석면처리업체 진천군 승소』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당 유영훈 진천군수 후보가 자신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고, 우석대 진천캠퍼스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진천도농복합휴양타운 개발프로젝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고, 내년까지 진천군 일원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며, 충북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폐석면 처리업체와 진천군간의 행정심판에서 진천군이 승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미래연합 진천군수 후보로 시정요구대상 보도가 시정요구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의 일방적인 발언만을 기사화하면서 해당 후보의 치적과 업적을 우호적으로 보도해 시정요구인이 상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고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후보자간 논쟁이 된 사안이 흑색 선전이며 허위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김경회 군수 후보 등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및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시정요구대상 기사 중 2010년 5월 27일자 2면 『우석대 진천캠퍼스 착공 가시화』, 3면 『진천도농복합휴양타운 개발프로젝트 순조』, 4면 『진천군 내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5면 『충북 혁신도시 차질없이 건설』, 7면 『문백면 폐석면처리업체 진천군 승소』 제하의 기사는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해 공정성이나 형평

성을 위반했다고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진천군민신문'이 격주간으로 발행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보도의 시의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경고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2. 내용 :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5월 27일자 1면 『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천군수)와 관련,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현직 군수인 특정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선거기간 중 후보자간 논쟁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 ‘흑색 유언비어’이며 ‘허위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여과 없이 1면 전면에 게재한 것은 김경희 군수 후보 등 여타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민선4기 군정추진 관련 유영훈 진천군수 후보 기자회견 밝혀 선거앞두고 반사이익 노린 특정후보 음해 주장

민주당 유영훈 진천군수 후보는 지난 5월 19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4기 군정추진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 했다.

유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생거진천은 날로 발

전하는 희망을 품은 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민선 5기는 진천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요즈음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흑색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로 인해 진천군의 위상이 추락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4가지를 설명했다.

유 후보는 첫 번째로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사업 무산』에 대해서는 허위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최근 다수 지방 언론 기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2009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유치 변경승인을 받았고, 11월 충청북도로 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승인고시를 득했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을 목

포로 하고 있으며, 순수 민간자본유치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다소 속도감이 떨어지는 듯 하나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고 피력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본인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영화건설대표와 우석대학교 기획조정처장과 학, 처장등이 참석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확약을 한바 있으며, 2012년 개교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두 번째로 “진천군이 빛이 많아 과산
직전에 있고, 한번더 재입하면 진천군이 거덜난
다”는 내용은 “예산운용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정
치적 비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는 “진천군 채무는 총275억원으로 155억원은 민선3기(김경희 前군수) 시절 이월전 기전지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2005년도에 발행한 것으로 임주업체에서 상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4기 본인이 취임하면서 2건에 12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먼저 진천2교 가설을 위해 80억을 발행했다며 진천2교는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교량이 설치되어야만 개설된 도로와 연결이 가능하고, 진천읍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 필수적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후보는 세 번째로 “(주)이솔루션 허가
관련”을 설명했다.

이에 유 후보는 “결론적으로 (주)이슬루션 허가권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이며 (주)이슬루션은 2009년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로 허가를 받고 2008년 9월 폐수배출 시설 설치신고(세차시설)를 진천군에서 불수리를 한바 소송을 제기 2009년 12월 24일 진천군이 승소하였으나 이슬루션에서 항소하여 2010년 5월 26일 결심공판 예정에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 후보는 “이것은 「폐석면 중간처리업 저지 대책위원회」와 우리군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의

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민선4기 구정추진 관련 유영훈 진척군수 후보 기자회견 밝혀

선거 앞두고 반사이익 노린 특정후보 음해 주장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사업 무산” 내용 ➡ 허위날조

“진천군 빚 많아 파산직전, 한번더 재입하면 진천군이 거덜난다” 내용

➡ 예산운용 개념조차 없는 정치적 비방 불고

“문백패석면 업체 허가권자 금강유역환경청”, “세차시설 불수리” 진천군 5월 27일 승소

“서영정밀(주) 군땀을 헹궂에 수익계약 특혜 줬다”는 내용

▶ 3개 감정평가 및 진천군의회 승인거친 정상적인 것 주장

[illegible]

이 책은 '자신'이라는 글자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이란 글자 자체를 분석하고, '자신'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무엇인지, '자신'과 '자신'을 써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이라는 글자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제 "황금 비둘기" 무용담이 소개되었으니, 1934년 정전관의 수완을 보았다. 지극정성이 가득한 편지였으니, 군단 대령장이 제식기에 지갑까지 어찌한 어떤지도 어찌한 수가 있고 자갈과 화살과도 나뉘도록은 일출하기의 비전 제식에만 관공의 영도. "고 명한다."

"부자고, 내 이상한 장군수업이 성형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두 부르는 일출사신 유모와 관공의 고지지를

은 후로는 '최고의 민주 시장 원리'가
4차 혁명 열매인 비와 같이 2009년 4
월 20일 열린 '대한민국 2009년 4월
20일'을 기념하여, 11월 20일(수)부터
2010년 1월 20일(수)까지 '대한민국 2009년 4월 20일'을 기념하여

[illegible]

“한국의 현실과 그에 따른다면 설
명하고”의 공감을 전역시작으로 인
민군인의 으르름인가? 대우회사가
라고 교육문화중심의 지적사건들의
사건과 같은 사건의 “사건의” 보
다

우 부를 두 번으로 “정신이 빛
이”의 사건의 있고 한 번에 대
합하여 가라앉히는 내용은 “예
외적으로 개성이나 없는 정자로 비
율로 있다” “정”의 정자로

에 우호적인 "진정"하다는 총
 100만 원의 인사(김경희
 수 사관 이철재(지)농민과 조
 외경, 3년 기의 10년 심화 조건으로
 100만 원에 100만 원으로 임차업체
 심화업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 "한민도기(韓民圖記)"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는 2
천여명의 지방관료를 임명했는데 그중에서
지정된 20만 가구를 위해 8백여명을 발령시켰고
실전에서는 70만 가구에 달하는
지역에 배치되어, 고을마다 설치되어
가장먼 곳에도 연결되어 가도록하고,
같은 고을에서도 분리를 두어 임명하였다고
기록을 두고 있다.

[연고]
[출처]

이웃을 돕는 것은 2004년과 2005년
의 대졸연령 하위권 집안규모의 10대
여성이 집안에서 경험한 교육, 근로,주
거 관련 문제를 경험한 부모, 형제
및 조그 형제들은 이보다 6.2%를 집중성
사 이차분류로 분류. 이로써 평균 10
%의 교육, 취업, 주거, 생활여건 관련
문제에 대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안전망 부족
과 분배다.

주거문제: 2005년 2004년 7%에서 2005
년 10%로 증가. 주거문제: 2004년
7.8%에서 10.3%로 증가. 사후에는 주
거문제에 대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illegible][illegible][illegible]

이와 같은 부패는 '사법정당'을 가진 7월 1일 야당이 대패한 이후 전국적으로 정권과 도지사 및 시장군민 의회가 7천 600만표를 부패로 부패한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전국적인 부패와 정권변경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호신'을 어떻게 하면 공화국 수호제가 될 것인가는 '수호신정치'가 정치에 미치는 수호신 정치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다. 전국적인 부패와 정권변경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호신'을 어떻게 하면 공화국 수호제가 될 것인가는 '수호신정치'가 정치에 미치는 수호신 정치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다.

[illegible]

우리는 '아민' 집권군주 정치에서
 집권군주에 필요한 장래와 비전없이
 '아민'을 선택한 것이다. '아민'은
 아민 왕가에 비호는 일부 통치후보
 (왕위)를 반드시 실행할수있어 집권군
 주라는 믿을 것이 없었다. 신
 의이와 우 후는 '아민'은 한 집 권
 될 것이 집권군주 후보였다. 남한
 국장 혹은 독립 없이 비전없이
 선택한 것이다. 그 때부터 왕가와
 집권군주에 대한 믿음과 자부
 심이 사라지고, 집권군주에 대해
 한 것이 아니라 집권 있었다.

426

관계로 이루어낸 대 현안과제이며, 농업인의 숙원 사업인 미생물 생산·공급을 위해 제191회 진천 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인이 의결되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중략)

유 후보는 “이번 진천군수 선거에서 진천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비전제시로 여러분의 선택을 구한다”며 “다시한번 이번 유언비어 날조는 일부 특정후보의 음해로 반드시 군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로부터 2010년 5월 27일자 1면 ‘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천군수)와 관련,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현직 군수인 특정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선거기간중 후보자간 논쟁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 ‘흑색유언비어’이며 ‘허위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여과없이 1면 전면에 게재한 것은 김경희 군수후보 등 여타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4. 반론보도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0지선29(시심)
시 정 요 구 인	서 춘 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윤림리 264-3
피시정요구인	(주)경남투데이(한남일보)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72-2 대표이사 김 중 규
심의대상기사	한남일보 2010년 3월 2일자 7면 『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한남일보〉 7면 우측 상단에 〈별지 1〉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부제목(경남도 모 전국장 재직 시 측근 지원 ‘의혹’ 확산)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한남일보 2010. 3. 2.자 7면 「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 제하의 보도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한남일보 2010. 3. 2.자 7면 「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 제하의 기사에서 “올 1월 경남도가 함양군에 배정한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모 전 국장이 자신의 측근에게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자 선정은 함양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해 경상남도는 행정절차상 관련 조항만 검토했고, 본 사업 관련 경상남도 결재는 축산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시정요구인이 관련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시정요구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는 문제가 된 보도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그 요구를 인용할 수 있다 하겠으나,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시정요구서에 기재된 진술의 취지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더라도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다만, 이 건 기사는 시정요구인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도 당사자인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시정요구인이 서면으로 시정요구 취지를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 게재에서 반박보도문 게재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적정한 반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제 목 : 반론보도문

2. 보도내용

본보는 지난 2010년 3월 2일자 7면 「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 제하의 기사에서 함양군수에 출마한 경상남도 모 전국장이 현직에 재직시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자로 자신의 측근이 선정되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함양군수에 출마한 서춘수 전 경상남도 농수산국장은 함양군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자 선정은 함양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며, 자신이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반론을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서춘수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할 것입니다.

보도내용

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

경남도 모 전국장 재직 시 측근 지원 '의혹' 확산

울 1월 경남도가 함양군에 배정한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모 전 국장이 자신의 측근에게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한우협회 회원들은 경남도의 일방적인 사업자 선정을 놓고 함양 군수 출마를 위해 명퇴할 국장 측근에게로 지원 사업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

경남도 모 전국장 재직 시 측근 지원 '의혹' 확산

울 1월 경남도가 함양군에 배정한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모 전 국장이 자신의 측근에게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한우협회의 회원들은 경남도의 일방적인 사업자 선정을 놓고 함양 군수 출마를 위해 명퇴할 국장 측근에게로 지원 사업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함양군수 출마를 위해 병퇴한 S씨가 경남도 국장 재직 전 후인 지난 2008년 3월과 8월 함양군 지곡면 모 버섯배지 사료화 가공시설 지원사업자로 자신의 측근이 선정되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2월 한우협회와 함양

군지부와 J유통영농조합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지곡면 버섯배지 한 사육을 또 다시 제출했으나 경남도는 사업대상자와 예정부지의 소유권 관계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 보안을 요청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3월 31일 보와 자료를 제출받은 경남도는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 사업장을 함양을 독립된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를 J유통영농조합 단속으로 지정,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정해진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경남도는 한우협회에게는 사료이용과 수송을, 사업자로 지정된 J영농조합은 사료생산과 판매, 버섯배지는 배지 분할

있다.

현재 함양군수 출마를 위해 명퇴한 S씨가 경남도 국장 재직 전 후인 지난 2008년 3월과 8월 함양군 지곡면 모 버섯배지 사료화 가공시설 지원사업자로 자신의 측근이 선정되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2월 한우협회 함양군지부와 J유통영농조합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지곡면 버섯배지 한 사육을 또 다시 제출했으나 경남도는 사업대상자와 예정부지의 소유권 관계 등을 이유로 관련자료 보안을 요청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3월 31일 보와 자료를 제

공급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경남도의 어이없는 행정 집행에 버섯배지를 활용한 사료 생산으로 경영비 절감을 기대한 측근 농가들은 실제 사업비가 측근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3의 업체에 매정돼 생산단가만 줄어든 줄이 됐다는 지적이다.

특, 지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표 사료가 될 버섯배지 공급 업체와 경영비 절감을 꾀한 한우농가들은 사업장에서 배제하고, 관련 경영이 전혀 없는 사업자를 이미 설립된 영농조합이란 이유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버섯배지 부산을 사료화 이용 계획을 수립했던

한우협회 회원들 마저도 경남도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자 선정으로 향후 벌어질 지분관계 대립 등이 사업 불투명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속에 여차직하면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우협회와 함양군지부 한 회원은 "버섯배지를 공급할 버섯배지 사업장 예정 부지로 지정하는 것은 수송비 절감이 가장 주된 이유"라며 "하지만 경남도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해를 넘기더니 측근과는 하등 관계없는 유통회사와 사업자는 지정한 이유가 명백한 전 국장의 일길 작용이란 의혹이 있다. 이 불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한 기자 jh@hanan.co.kr

출반은 경남도는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 사업장을 함양읍 죽림리 일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를 J 유통영농조합 단독으로 지정,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정해진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경남도는 한우협회에게는 사료이용과 수송을 사업자로 지정된 J영농조합은 사료생산과 판매 버섯업체는 배지 물량 공급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경남도의 어이없는 행정집행에 버섯배지를 활용한 사료생산으로 경영비 절감을 기대한 축산 농가들은 실제 사업비가 축산과는 전혀 관계 없는 제3의 업체에 배정돼 생산단가만 올리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즉, 지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효 사료가 될 버섯배지 공급 업체와 경영비 절감이 절실한 한우 농가들은 사업자에서 배제하고,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사업자를 이미 설립된 영농조합이란 이유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버섯재배 부산물 사료화 이용 계획을 수립했던 한우협회 회원들마저도 경남도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자 선정으로 향후 빚어질 지분관계 대립 등이 사업 불투명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속에 여차 하면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반론보도문

본보는 지난 2010년 3월2일자 7면 '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뮬' 제하의 기사에서 함양군수에 출마한 경상남도 도 전국장이 현직에 재직시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자로 자신의 측근이 선정되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함양군수에 출마한 서훈수 전 경상남도 농수산국장은 함양군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자 선정은 함양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며, 자신이 사업자선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반론을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에 의거 서훈수 후보자의 지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05(시심)
시 정 요 구 인	우 건 도 충북 충주시 교현2동 618-5번지 3층
피시정요구인	(주)대전일보사 대전 서구시 갈마동 274-7 대표이사 신 수 용
심의대상기사	대전일보 2010년 4월 7일자 18면 『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대전일보> 18면에 <별지 1>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대전일보 2010년 4월 7일자 18면 『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대전일보 2010년 4월 7일자 18면 『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 제하의 기사에서 “우건도 민주당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충주부시장 재임시 시가보다 싸게 고급빌라를 매입했으며, 구입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해달라고 요구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당시 시세에 의해 정당하게 빌라를 매입했고 시가보다 싸게 빌라를 구입한 적도 없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시정요구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는 문제가 된 보도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그 요구를 인용할 수 있다 하겠으나,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더라도 시정요구대상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입증 자료가 없어 시정요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기사는 시정요구인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정요구인에 대한 충분한 반론과 해명이 미흡해 선거를 앞두고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자명할 것인 바,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충분한 반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반론보도문

1. 제 목 : 반론보도문

2. 보도내용

본보 4월 7일자 18면 『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우건도 후보는 건설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빌라를 매입했고, 매입 당시 시세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미분양률이 70%이상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충주시 부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우건도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보도내용

6·2地選-정가레이더

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

우건도 민주당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008년 10월 초 충주시부시장 재임중 구입한 수억 원대 고급빌라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다.

분양 당시는 물론 비슷한 시기에 매입한 다른 입주자들보다 7000만원이나 쯤 값에 구입한 게 최근 밝혀져 한바탕 소란, 이빌라 관계자는 “당시 우 후보의 대리인이 현직 부시장이 구입하는 것이니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것으로 요구해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쉼값에 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 입주자는 “우 후보가 구입하자마자 1000만원 토탈 가격에 매매 광고를 내는 바람에 입주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예비후보는 “당시 시세를 전혀 몰랐다. 난방시공이 부실해 1000만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싼값에 매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6.2 地選 - 정가레이더

선진당 충북도당 공심위 9명 구성... 1차 심사 12일 발표

○...자유선진당 총복도남은 6·2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를 할 공천심사위원회는 5명 구성였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폭심위원회 위원장은

지사직을 먼저고 본격적으로 선/전에 돌입 한다는 계획이다. 정 지사의 사퇴시기는 오는 20일 선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종 만큼 나오는 무관한 인"이라고
해명했다.

가정주부 기초의원 도전

○『정치조선생인』가경주부가 을
성군 가족의인 비례대표로 전출하기
위해 민주당 공천에 도전장을 내
놓고 주연공은 읍민자중·교고·충
분회장 유영숙(57씨)을 회장으로
『민주당은 조노개혁의 정강으로 제
기에 살아온 권로』비하했다』며
저는 남경성군의 정치 변화와 싸
고 여선 특유의 신사향과 품팔
으로 읍성군의 살림을 감시 견제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
자발적 참여를 일구어내는데 최선을 다
겠다』고 밝혔다.

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

○ 우루과이 민주화 총투사전 예
비서처장 지남 2008년 13월 총 연대
시작서장 취임후 구입한 3점의 옷과
기념품의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다

반년 방랑하는 불운 벼판인 시가
제왕은 다른 10명보다도 7000만
원이나 더 높은 구입한 것 때문에
제 한해로 살아 이 모리 관저에서
"당시 우루과이의 대의인"의 열적 부
식성이 구입하는 것으로 시한한
것이 때문에 한때도 오구려 이미
제고 되어있는 한걸음은 신 것은 몇
과"고 말했다. 전 임주자는 "우루과
이 구두잡자 1000만원 보한 것
같이 70여 원정도 하는 바래에 위주
사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
장했다.

이에 대해 우 예비부보는 "남산시세를 전혀 몰랐다. 난장시공이 부실해 1000만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싸값에 매입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중부취재본부

한범덕, 식목일 행사 참석

○...한밤바다 민주당 침수사건
내무부: 5인 침수 낙석상태제유
앞에서 침수내대느린지전 수관
로 열진 해마공의 나무기기 행사
에 참가. 여남 공사는 이르신 무렵
걸음을 위한 연발보지경각(제하)

사추신선을 중화모형 공전되는
천진천정자들을 대략으로 쉬사를
며 2차 공전십시 결과를 12월 발표
할 예정이다.

이시종, 9일 예비후보 등록

○「민주공화국 이시종 의원(총우)은 10월경 국회외교위원회를 시정하고, 조국 총리나 선거전에 나선다.」
○「중앙 통신사와 미라파에 이 의원은, 그동안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었던 세습지 수권법만 자결을 하여 여권지지를 위해 투표했다는 것,」
○「기드 줄스 수 있: 공인 조성이므로, 온 헌법을 거기에 반대」
○「시정하는 여가정협회는 위한 말하면, 생활권익을 고려하겠다고」
김수환 「유언비어 법적 대응」

인 김수하(61)씨는 50년 '보육공화국'을
경 수사와 연결지어 읊조리는 유언
배가 너무하고 있다며 '악연의
무 유언배를 유포하는 세력'에
하 박씨를 개종했다고 밝혔다.

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1994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94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결정 후 보도문

반론보도문

본보 4월 7일자 18면 '우건도, 고 급빌라 구설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우건도 후보는 건설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빌라를 매입했고, 매 입 당시 시세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미분양률이 70% 이상이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총주 시 부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에 의거 우건도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의결번호	2010지선133(시심)
시정요구인	이 흥 수 인천시 동구 송림6동 125-21 401호
피시정요구인	(주)인천일보 인천시 중구 향동 4가 18-1 대표이사 박 민 서
심의대상기사	인천일보 2010년 4월 27일자 3면 『한나라 이흥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제하의 기사
주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인천일보> 3면에 <별지 1>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 대상 기사의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인천일보 2010년 4월 27일자 3면 『한나라 이흥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 및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유	피시정요구인은 인천일보 2010년 4월 27일자 3면 『한나라 이흥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인천 동구청장 이흥수 후보가 천안함 순직 장병 조문을 다녀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단체 기념사진을 첨부해 빈 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천안함 순직 장병들을 조문하고 귀가하던 중 빈소에 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연평해전 전적지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시정요구대 상 기사에 게재된 사진과 조문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를 선거에 홍보할 목적은 전혀 없으며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사진 배경은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빈소가 아니 라 제2연평해전 전적비임에도 제목에서 ‘애도현장’ 이라고 적시함으로써 시정요구 인이 마치 빈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순직 장병들 사고를 선거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 의견을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시정요구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 요구인의 적절한 반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반론보도문

1. 제 목 : 반론보도문

2. 보도내용

본지 4월 27일자 3면 『한나라 이흥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흥수 한나라당 인
천 동구청장 후보는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조문하고 귀가하던 중 연평해전 전적비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
진’은 조문과 무관하며, 조문사실을 선거홍보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진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이흥수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
한 것입니다.

보도내용

한나라 이홍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한나라당 동구청장 이홍수 후보가 천안함 순직 장병 46인을 애도하기 위해 제2함대 평택사령부를 다녀왔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단체 기념사진을 첨부해 빈축. 사진은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을 포함해 중·동구, 응진군 후보자들 60여명이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모습을 담았다.<사진>

이홍수 후보 측은 “빈소에서 사진을 찍기가 뭣해 마땅한 장소를 찾다가 연평해전 전적비를 택했다”고 설명.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순직 장병들 사고를 자신들의 선거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



한나라 이홍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한나라당 동구청장 이홍수 후보가 천안함 순직 장병 46인을 애도하기 위해 제2함대 평택사령부를 다녀왔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단체 기념사진을 첨부해 빈축. 사진은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을 포함해 중·동구, 응진군 후보자들 60여명이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모습을 담았다.<사진>

이홍수 후보 측은 “빈소에서 사진을 찍기가 뭣해 마땅한 장소를 찾다가 연평해전 전적비를 택했다”고 설명.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순직 장병들 사고를 자신들의 선거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

결정 후 보도문

반론보도문

본지 4월27일 3면 ‘한나라 이홍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홍수 한나라당 인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조문하고 귀가하던 중 연평해전 전적비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이라 조문과 무관하며 조문사실을 선거홍보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진촬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이홍수 후보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49(시심)
시 정 요 구 인	김 호 복 충북 충주시 문화동 569-1
피시정요구인	(주)씨엔엠(동양일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70 대표이사 이 철 구
심의대상기사	동양일보 2010년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금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양일보> 3면에 <별지 1>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부제목(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억원 뇌물’ 업체 내부고발)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동양일보 2010년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금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동양일보 2010년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금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에서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에 대한 항응과 금품 제공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 후보가 서울의 한 유흥음식점에서 사용한 카드와 카드 입출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경찰도 김 후보가 BTL 하수관거사업을 진행 중인 모 기업으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업체 내부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김 후보 측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대상 보도 내용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 과장 기사라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의 카드와 카드 입출금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점은 시정요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정정보도 요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시정요구인이 모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업체 내부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시정요구대상 기사에 대해 시정요구인이 관할 경찰서에 수차례 확인한 결과 시정요구인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점, 시정요구대상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에 대한 반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와 관련한 시정요구인의 적절한 반론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75(재심) (원심결정 : 2010지선149(시심))
재 심 청 구 인	(주)씨엔엠(동양일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1070 대표이사 이 철 구
재심청구대상 사	동양일보 2010년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주 문	1. 당 위원회의 2010지선149(시심) 결정에 따른 <별지 1> 「반론보도문」을 <별지 2> 「반론보도문」으로 변경한다. 2. 재심청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양일보> 3면에 <별지 2>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재심청구대상 기사의 부제목(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억원 뇌물’ 업체 내부고발)활자 크기로, 본문은 재심청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2010지선149(시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시정요구인에 대한 경찰 수사는 현재 경찰이 첩보단계라 수사 진행여부를 밝히기 꺼리고 있지만 시정요구인에 대한 수사를 충주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므로 원심대상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어 원심 결정에 따른 반론보도문 게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반론보도청구는 그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나 재심청구인이 원심 결정에 따른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확하므로 재심청구인이 원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정황상 경찰이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의 뇌물 수수 관련 수사를 첩보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증거가 없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심청구인의 주장 일부를 수용해 원심 보도 결정 내용의 일부를 수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재심청구인의 일부주장을 받아들여 「반론보도문」의 문안을 조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반론보도문

1. 제 목 : 반론보도문

2. 보도내용

본지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에 대해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는 “경찰에 확인해 본 결과 ‘경찰은 김 후보의 뇌물 수수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며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보도내용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억원 뇌물' 업체 내부고발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에 대한 향응과 금품 제공 혐의 등 공직선거법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후보의 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에 대한 수사를 6.2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충주시장선거가 일대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김 후보가 서울의 한 유흥음식점에서 사용한 카드와 카드 입출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김 후보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김후보의 금품, 향응 제공 혐의 뿐 아니라 추가의 별전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가 충주시장 재임시 연두순방 기간 중 읍면동 사무소를 돌며, 각 경로당에 비품 제공 등 선심성 공약으로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로부터 사전선거법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는데 대한 관련 서류 일체도 건네받아 공직선거법위반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도 김 후보가 충주지역에서 BTL 하수관거사업을 진행 중인 모 기업으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업체 내부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 후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자 김 후보 측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에 대한 향응과 금품 제공 혐의 등 공직선거법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후보의 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에 대한 수사를 6.2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충주시장선거가 일대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김 후보가 서울의 한 유흥음식점에서 사용한 카드와 카드 입출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억원 뇌물' 업체 내부고발

이에 따라 김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김 후보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김후보의 금품, 향응 제공 혐의 뿐 아니라 추가의 별전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가 충주시장 재임시 연두순방 기간 중 읍면동 사무소를 돌며, 각 경로당에 비품 제공 등 선심성 공약으로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는데 대한 관련 서류 일체도 건네받아 공직선거법위반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도 김 후보가 충주지역에서 BTL 하수관거사업을 진행 중인 모 기업으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업체 내부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 후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자 김 후보 측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팀)

결정 후 보도문

반론보도문

본지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에 대해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는 "경찰에 알아 본 결과 '검찰은 김 후보의 뇌물 수수 관련 수

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의거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결정 한 것입니다.

5. 권고

의 결 번 호	2010지선106(시심)
시 정 요 구 인	박 정 수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푸르지오 2차 308동 504호
피시정요구인	경남매일신문(주)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104 성평그린빌 7층 대표이사 최 용 학
심의대상기사	경남매일 2010년 4월 9일자 4면 『아파트 밀집지역 부정선거 판친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시정요구취지	경남매일 2010년 4월 9일자 4면 『아파트 밀집지역 부정선거 판친다』 제하의 보도에 대해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시정요구변경 취 지	경남매일 2010년 4월 9일자 4면 『아파트 밀집지역 부정선거 판친다』 제하의 보도에 대해 경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경남매일 2010. 4. 9.자 4면 「아파트 밀집지역 부정선거 판친다」 제하의 기사에서 “김해시장에 출마한 P 후보 선거운동원이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입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가 접수된 후 2010. 4. 20.자 4면 「김해시장 후보 지지자 기소 예정」 제하의 기사에서 김해시장 모 후보의 지지자 A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A씨가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단순한 지지자로 시정요구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반론을 보도하고 A씨는 김해시장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김해시장 후보 중 이니셜이 P로 시작하는 후보는 시정요구인 뿐이라 시정요구인이 특정되었으며, 시정요구인의 선거 운동원이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입주민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등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피시정요구인이 경남매일 2010. 4. 20.자 4면 「김해시장 후보 지지자 기소 예정」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경고문을 게재하라고 시정요구 취지를 변경했다. 살펴보건대, 피시정요구인이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제보만을 근거로 특정 후보 선거운동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이니셜을 표기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및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피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인의 정정보도 요구에 대해 일부 사실 여부가 다르게 밝혀진 내용을 정정하고 시정요구인의 반론을 보도한 점을 감안해,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아파트 밀집지역 부정선거 판친다.

김해시장 후보 선거운동원, 집에서 '은밀한 식사대접'

입주민 등 초대 불법선거 장소 활용... 적발 어려워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 출마한 예비 후보들이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선거가 도를 넘고 있어 사법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운동 아파트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선거홍보물을 돌리는 등 부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본지 취재결과 김해 장유 대단위 아파트에서 김해시장에 출마한 모 후보 선거 운동원의 여동생이 자신의 집을 불법선거운동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지난달 말 김해시 장유면의 아파트에 사는 한 주인은 가정주부 10여 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어 아구찜 등 10여만 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자신의 언니가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는 한나라당 김해시장

김해시장 후보 선거운동원, 집에서 '은밀한 식사대접'

입주민 등 초대 불법선거 장소 활용... 적발 어려워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이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선거가 도를 넘고 있어 사법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운동원이 아파트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선거홍보물을 돌리는 등 부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본지 취재결과 김해 장유 지역 대단위 아파트에서 김해시장에 출마한 모 후보 선거 운동원의

여동생이 자신의 집을 불법선거운동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지난달 말 김해시 장유면의 아파트에 사는 가정주부 10여 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어 아구찜 등 10여만 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자신의 언니가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는 한나라당 김해시장 P후보 선거캠프

P후보 선거캠프운동원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선거운동원 3명이 방문해 P후보의 명함과 함께 김해지역 주간지에 게재된 신문 기사를 복사한 유인물을 봉투에 담아 한부씩을 건넸다.

이 가운데 남자 운동원 한 명이 "P 후보의 지지도가 지역 주간지 신문의 기사내용대로 현직 시장을 바짝 추격했다"면서 "P 후보를 조금만 밀어주면 당선이 가능하다"고 지지를 부탁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집주인 H씨는 인근 목욕탕과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들며 아파트 주민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 했고, 수차례 이상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있다.

H씨는 "10명 이상만 모이면 언제든지 식사를 대접할 테니 연락하라", "선거사무실에서 식사비용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등의 말로 주부들을 유혹했다고 한다.

이처럼 아파트 거실에서 식사를 대접하는가 하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선거운동원들이 모임 장소를 방문하는 등 은밀하게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어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 밀집지역 부정선거 판친다

김해시장 후보 선거운동원, 집에서 '은밀한 식사대접'

입주민 등 초대 불법선거 장소 활용... 적발 어려워

이는 장소를 들며 아파트 주민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 했고, 수차례 이상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있다.

H씨는 "10명 이상만 모이면 언제든지 식사를 대접할 테니 연락하라", "선거사무실에서 식사비용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등의 말로 주부들을 유혹했다고 한다.

이처럼 아파트 거실에서 식사를 대접하는가 하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선거운동원들이 모임 장소를 방문하는 등 은밀하게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어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준국 기자)
cknaark@kdaily.com

Kn@TV 동영상뉴스제공

6. 기각

의 결 번 호	2010지선30(시심)
시 정 요 구 인	정 송 학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77(자양로 150)
피시정요구인	한겨레신문(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고 광 현
심의대상기사	한겨레 2010년 3월 11일자 4면 『한나라, 서울 구청장 반 이상 물갈이』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시정요구취지	한겨레 2010. 3. 11.자 4면 「한나라, 서울 구청장 반 이상 물갈이」 제하의 보도에 대해 <별지 1>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한겨레 2010. 3. 11.자 4면 「한나라, 서울 구청장 반 이상 물갈이」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봉과 서초, 광진, 강북구청장은 교체로 가닥이 잡혔고, 종로와 금천, 영등포구청장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3월 10일은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했을 뿐 구청장 공천과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없으며,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는 3월 11일 구성되어, 아직 서울구청장에 대한 공모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시정요구인이 교체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데, 정당의 공천은 당 지도부가 단순히 여론조사만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과 시도당의 선거전략, 해당 지역 당원들의 여론 및 상대 정당의 경쟁자, 현역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정요구인이 속한 한나라당의 당규에도 전략공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 양측이 이견이 없으며, 시정요구대상보도는 특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선거전략 등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정요구대상 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나라, 서울 구청장 반 이상 물갈이

“도봉·서초·광진·강북 등 교체로 가닥 잡아”

한나라당이 서울시 구청장 가운데 절반 이상을 물갈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대상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한겨레〉기자와 만나 “여의도연구소가 지난달 서울시 구청장에 대한 지지 여부 등 교체지수를 조사한 결과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며 교체지수와 외부영입, 지역구 국회의원 요구 등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도봉과 서초, 광진, 강북 구청장은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종로와 금천, 영등포 구청장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남과 마포도 전략공천 등 새 인물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현재 한나라당이 구청장을 맡고 있는 지역은 19곳이다. 이 가운데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는 용산(박장규), 은평(노재동), 동작(김우중) 구청장을 포함할 경우 10곳 이상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현직 구청장 가운데 재공천이 유력한 곳은 구로, 노원, 성동, 성북 정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회도 대대적인 물갈이 방침에 따라 외부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재영입위원회는 곧 최용호 전 시설관리공단 감사, 진익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북경무역관장 등

에 대한 영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성을 3명 이상 당선 가능 지역에 공천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신연희 전 서울시 행정국장, 고경화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출마를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대대적인 서울 구청장 물갈이에 나선 것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간단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기획단 소속 한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야당으로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속된 말로 거저 먹었지만, 여당으로 치르는 지방선거인데 야당이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의 비리 문제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갈이하지 않으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모두 따내며 ‘씩씩이’ 했지만 동대문, 서대문, 관악, 양천 구청장 등이 각종 비리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한나라, 서울 구청장 반 이상 물갈이

“도봉·서초·광진·강북 등 교체로 가닥 잡아”

한나라당이 서울시 구청장 가운데 절반 이상을 물갈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대상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한겨레〉기자와 만나 “여의도연구소가 지난달 서울시 구청장에 대한 지지 여부 등 교체지수를 조사한 결과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며 “교체지수와 외부영입, 지역구 국회의원 요구 등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도봉과 서초, 광진, 강북 구청장은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종로와 금천, 영등포 구청장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남과 마포도 전략공천 등 새 인물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현재 한나라당이 구청장을 맡고 있는 지역은 19곳이다. 이 가운데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는 용산(박장규), 은평(노재동), 동작(김우중) 구청장을 포함할 경우 10곳 이상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현직 구청장 가운데 재공천이 유력한 곳은 구로, 노원, 성동, 성북 정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회도 대대적인

물갈이 방침에 따라 외부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재영입위원회는 곧 최용호 전 시설관리공단 감사, 진익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북경무역관장 등에 대한 영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성을 3명 이상 당선 가능 지역에 공천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신연희 전 서울시 행정국장, 고경화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출마를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대대적인 서울 구청장 물갈이에 나선 것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간단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기획단 소속 한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야당으로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속된 말로 거저먹었지만, 여당으로 치르는 지방선거인데 야당이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의 비리 문제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갈이하지 않으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모두 따내며 ‘씩씩이’ 했지만 동대문, 서대문, 관악, 양천 구청장 등이 각종 비리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신영철 신승근 기자 sychee@hani.co.kr

의 결 번 호	2010지선77(시심)
시 정 요 구 인	김 성 호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014번지
피시정요구인	함평천지신문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70-6 발행인 서 현 숙
심의대상기사	함평천지신문 2010년 3월 30일자 1면 『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함평천지신문〉 1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1〉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함평천지신문〉 2010년 3월 30일자 1면 “함평나비대축제 4월 23일~5월 9일까지 열려” 제목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시정요구취지	함평천지신문 2010년 3월 30일자 1면 『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함평천지신문 2010년 3월 30일자 1면 『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시정요구인을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민주당 함평군수 공천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요구인이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배제되었고, 안병호 후보로 단독 공천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시정요구인을 함평군수 후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정요구인이 재심을 신청했고, 이에 2010년 4월 26일 제222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시정요구인의 재심신청을 수용했으며 시정요구인과 안병호 후보로 경선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결정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보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별지 1〉

보도문

1. 제 목 : 김성호, 민주당 공천재심 통과

2. 보도내용

김성호 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의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4월 26일 민주당 최고위는 김성호 예비후보의 재심신청을 수용했다. 또 최고위는 김성호, 안병호 2명의 후보로 경선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결정했다. 이로써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이 조만간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3월 30일자 1면 ‘김성호 민주당 공천배제 결정’ 제하의 기사에서 김성호 민주당 예비후보의 공천배제가 결정되어 안병호 예비후보의 단독 공천이 유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김성호 함평군수 예비후보는 “늦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을 최종 승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함평천지신문이 전남도당 공천 결과를 보도하면서 본인의 반론의견을 보도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 위 기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34(재심) (원심결정 : 2010지선77(시심))
재 심 청 구 인	함평천지신문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70-6 발행인 서 현 숙
재심청구대상 기 사	함평천지신문 2010년 3월 30일자 1면 『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제하 의 기사
주 문	1. 당 위원회의 2010지선77(시심) 결정을 취소한다. 2. 2010지선77(시심)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2010지선77(시심) 보도문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2010년 4월 29일 김성호 후보가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됨에 따라 원심 결정에 따른 보도문을 게재하게 될 경우 독자들이 혼선을 빚게 될 수 있으므로 원심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인 김성호 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가 원심 결정 당일인 2010년 4월 29일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고, 재심청구인이 발행하는 <함평천지신문> 4월 30일자 1면 '한병호 사실상 확정, 김성호 경선불참 밝혀' 제하의 기사 말미에 김성호 후보 예정자의 재심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용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시정요구인이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해 2010년 5월 9일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는 더 이상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함평 군수후보로 나서고 있는 김성호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 위원회(이하 공심위)에서 공천 배제결정이 내려져 현재로서는 민주당 안병호 예비후보의 단독 공천이 유력시 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지난 25일 함평군수 후보로 공천 서류를 제출한 김성호 전 전남도의회 의원을 조세포탈로 인해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다음 주쯤 발표할 공천적격자 발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26일 MBC뉴스에 보도되면서 지역민들에게 확산되었다. 김성호 예비후보는 이에 반발하여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기자회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가 규정에 따라 공천을 배제기로 한 결정이 이의신청에 따라 금방 변경될 수 있을지에도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재심에서 공천배제결정이 철회된다면 안병호 후보와 공천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의신청에서 공천배제결정이 내려진다면 장기적 안목으로 다음 기회를 노리고 당의 결정에 승복할것인지 아니면 반발하여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지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도의원 후보로 나서고 있는 가 지

구 박동주 예비후보와 나 지구 전일정 예비후보도
공심위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
져 가 지구에서는 이윤행 예비후보가 현재 민주당
단독 공천이 유력시되고 나 지구에서는 노종석씨
의 정문호씨가 민주당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
인다.

또 군의원 예비후보인 이화동씨도 공천배제결
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천배제결정이 내려진 가 지구 박동주씨
는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 지구 도
의원 예비후보 전일정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가 지구 군의원 예비후보인 이희동씨도 재심결
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도, 군의원 후보 박동주 전일정, 이화동 도 배제 결정

민주당 합평군수 후보 안병호 단독 공천 유력 가 지구 도 의원후보 이윤행 단독공천 유력

다가오는 6월 25일 지방 선거에서 합평
군수후보로 나시고 있는 김성호 예비후
보가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 위원회
(이하 공심위)에서 공천 배제 결정이 내
려져 현재로서는 민주당 안병호 예비후
보의 단독 공천이 유력시 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지난 25일
합평군수 후보로 공천 서류를 제출한 김
성호 전 전남도의회 의원을 조세포탈로

인해 사업차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다
을 주류 발표할 공천외격자 발표에서 배
제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26일 MBC뉴스에
보도되면서 지역민들에게 확산되었다.
김성호 예비후보는 이에 반발하여 재심
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기사화생여
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가 규정

에 따라 공천을 배제기로 한 결정이 이
의심청에 따라 급방 변경될 수 있을지
에도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재심에서 공천배
제결정이 철회된다면 안병호 후보와 공
천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외심청에서
공천배제결정이 내려진다면 정기적 안목
으로 다음기회를 노리고 당의 결정에 승
복할지 아니면 반발하여 민주당을 탈당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지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도의원 후보로 나시고
있는 가 지구 박동주 예비후보와 나 지
구 전일정 예비후보도 공심위에서 공천
배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가

지구에서는 이윤행 예비후보가 현재 민
주당 단독 공천이 유력시되고 나 지구에
서는 노종석씨와 정문호씨가 민주당 공
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군의원 예비후보인 이희동씨도 상
천배제결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천배제결정이 내려진 가 지구
박동주씨는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나 지구 도의원 예비후보 전일
정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
다.

가 지구 군의원 예비후보인 이희동씨
도 재심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 결 번 호	2010지선104(시심)
시 정 요 구 인	김 부 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000-157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사무실
피시정요구인	(주)매일신문사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 2가 71 대표이사 이 창 영
심의대상기사	매일신문 2010년 3월 23일자 3면 『기초長 경쟁률 ‘뚝’…대구 3.7대1, 경북 3.2대1』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시정요구취지	피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과 경고문을 게재하라.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매일신문 2010. 3. 23.자 3면 「기초長 경쟁률 ‘뚝’…대구 3.7대1, 경북3.2대1」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 신청자인 김부기 후보의 직책을 이명박 대선후보 직능특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박근혜 대통령 경선 직능특보 경력을 이명박 대선 후보 직능특보라고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2010년 4월 13일자 4면에 시정요구인의 경력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직능특보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 경선후보 직능특보로 바로 잡는 정정보도를 한 바 있어 시정요구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시정요구인이 고의로 시정요구인을 해할 목적으로 시정요구인의 경력을 잘못 보도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불충분한 바 더 이상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초長 경쟁률 '뚝' 대구 3.1대1, 경북 3.2대1

▶ 달서구청장

곽대훈 54 달서구청장

김부기 53 이명박 대선후보 직능후보

[illegible]

의 결 번 호	2010지선140(시심)
시 정 요 구 인	김 용 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6-9 대승빌딩 3층
피시정요구인	(주)주간홍성(홍성신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666 대표이사 윤 두 영
심의대상기사	홍성신문 2010년 5월 10일자 4면 『민주당-야4당 군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결렬』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시정요구취지	홍성신문 2010년 5월 10일자 4면 『민주당-야4당 군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결렬』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홍성신문 2010년 5월 10일자 4면 『민주당-야4당 군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결렬』 제하의 기사에서 김용일 민주당 홍성군수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후보자질검증토론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민주당 김 후보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조성미 후보간의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홍성군수 범야권 후보단일화 논의는 현재까지 상호 의견대립이 모두 해소되어 실행단계만 남았고, 민주당은 무소속 조성미 후보가 제안한 후보자질검증토론회 후 여론조사 실시 요구를 수용했으며, 조 후보의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적이 없고 후보단일화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이 제출한 시정요구서와 피시정요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시정요구대상 기사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시정요구대상 기사 중 ‘사실상 결렬’이라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판단에 따른 의견표명으로서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당 - 야4당 군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결렬

민주당 김용일 후보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조성미 후보간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이들 두 후보는 그간 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지지하는 ‘5+4’ 연합 공천을 놓고 후보단일화를 논의 중이었으며, 민주당은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 야4당은 후보자질검증토론회 후 여론조사 실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김용일 후보 측은 야4당이 후보자질검증토론회를 요구하자 “이미 민주당이 검증 을 마친 후보를 왜 다시 검증해야 하느냐”며 반감을 표시하고 “이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선 을 그었다. 단일화하지 않을 수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조성미 후보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하고, 여론조사에 의해 '5+4' 연합공천을 결정하는데 대한 이견이 도출되며 단일화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이 "여론조사 방식 후보 단일화는 수용할 수 있지만,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를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 측에서는 사실상 '5+4' 후보단일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군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파행을 겪으며 그간 논의가 진행 중이던 가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단일화

문제도 어려움에 봉착했다. 국민참여당 김기현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명을 댄 여론조사에 언제든지 응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이 처음엔 여성후보로만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제는 당명을 넣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마치 내가 단일화를 거부하는 듯 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며 "계속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중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가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단일화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야4당 군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결렬

가선거구 국회의원 단일화 국민참여당 김기현 후보 반발로 결렬 위기

민주당 김용일 후보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조성미 후보간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이들 두 후보는 그간 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지지하는 '5+4' 연합 공천을 놓고 후보단일화를 논의 중이었으며, 민주당은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단일화, 야4당은 후보자집결증토론회 후 여론조사 실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김용일 후보 측은 야4당이 후보자집결증토론회를 요구하자 '이미 민주당이 검증에 마친 후보를 왜 다시

검증해야 하느냐'며 반감을 표시하고 '이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단일화하지 않을 수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조성미 후보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하고, 여론조사에 의해 '5+4' 연합공천을 결정하는데 대한 이견이 도출되며 단일화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이 "여론조사 방식 후보단일화는 수용할 수 있지만,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를 거부한 셈



김기현 가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 측에서는 사실상 '5+4' 후보단일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까지다.

군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파행을 겪으며 그간 논의가 진행 중이던 가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단일화 문제도 어려움에 봉착했다. 국민참여당 김기현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명을 댄 여론조사에 언제든지 응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이 처음엔 여성후보로만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제는 당명을 넣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마치 내가 단일화를 거부하는 듯 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며 "계속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중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가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단일화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원근 기자/

7. 각하

의 결 번 호	2010지선113(시심)
시 정 요 구 인	송 재 영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부곡휴먼시아아파트 206동 801호
피시정요구인	(주)미디어시민(군포시민신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8-3 씨티프라자 302호 대표이사 장 원 철
심의대상기사	군포시민신문 2010년 4월 5일자 1면 『한나라당 지지도 2% 상승 ‘우세’ 유지』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건 시정요구를 각하한다.
시정요구취지	군포시민신문 2010년 4월 5일자 1면 『한나라당 지지도 2% 상승 ‘우세’ 유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지> ‘사과문’ 및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해야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군포시민신문 2010년 4월 5일자 1면 『한나라당 지지도 2% 상승 ‘우세’ 유지』 제하의 기사에서 군포시장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후보군과 민주당 김윤주 후보, 정금채 시민단체 지지후보 등과 가상대결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민주노동당 군포시장 후보자로 군포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정요구인 관련 조사결과는 보도하지 않았고, 민주당을 제외한 범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정금채 후보보다 시정요구인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음에도 이를 게재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과문 게재와 당시 여론조사 결과 내용 전부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 제6항에 의거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시정요구인은 이미 시정요구일(2010년 4월 16일) 당시 공식적으로 후보직을 사퇴(2010년 4월 9일)한 상태여서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요구의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록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 선거기사심의기준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현황
5. 색인

1.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공정성)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의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2조(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객관성) ① 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4조(공익성) 언론사는 언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장 기 사

제6조(사실보도) ① 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언론사는 선거기사에서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 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③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설기사는 그 조사의 전제 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보도할 경우 경쟁자나 경쟁집단 간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 ① 언론사가 정당·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할 때는 후보자등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제1항의 비교평가결과 보도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여야 한다.

제9조(인용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거나 개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뷰 기사)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한 균형 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 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기고 등) ① 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토론기사)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 기사를 다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표제 및 사진

제14조(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진게재) ① 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게재 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광 고

제16조(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권리구제

제18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제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 제6항에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회·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때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 제3항을 위반하는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제8조(의결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심의안건)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 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 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당해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① 후보자가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는 때에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주의 또는 경고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 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 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결정을 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② 재심을 청구하는 자(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제19조(반론보도청구회부)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해당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3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첨 부 : 본인승낙서 1부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대표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승낙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직업	
	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경력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	시 정 요 구 서			
시정요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e-mail 주소)		④ 전 화 번 호	
시정요구 대상	⑤ 언론사명 (매체명)		⑥ 대표자 성명	
	⑦ 보 도 일 자 및 지 면		⑧ 소 재 지	
	⑨ 보 도 내 용		⑩ 전 화 번 호	
시정요구 사항 (별지작성 가능)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보도기사 전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시정요구 처리 결과 통지서				
시 정	성 명		접 수 일	년 월 일
요 구 인	주 소 (e-mail 주소)			
시정요구사항				
처 리 결 과				
귀하의 시정요구가 상기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언 론 중 재 위 원 회				
문의사항연락처 : (소속부서의 표시) 〇 〇 〇 (전자우편 주소의 표시) 전화 팩스				

(별지 제5호 서식)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	재심청구서			
원심결정	의결번호			
	결정일자			
청구인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주 소			
	전화번호			
	E-mail			
청구의 취지 및 사유	별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재심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				
의결번호				
청구인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접수일	년 월 일
	주소			
청구사항				
처리결과				
귀하의 재심청구가 상기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언론중재위원회				
문의사항연락처 : (소속부서의 표시) 전화		OOO (전자우편 주소의 표시) 팩스		

(별지 제7호 서식)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	반론 보도 청구 회 부 서			처리시간
				48시간
청 구 인	①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② 주 소 (e-mail, 주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⑦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⑧ 주 소	
	⑨ 대표자 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소 재 지		⑫ 전 화 번 호	
반 론 보 도 청 구 대 상	⑬ 언 론 사 명 (매 체 명)			
	⑭ 보도일자 및 지면			
	⑮ 보 도 내 용			
공직선거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합니다. 년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4. 보도기사 전문				수수료
				없 음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 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 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

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

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

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당·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의 자유와 기능 “일간신문 등” 등 “등” 등에 의한 정당·정책의 홍보, 당원의 정치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 “등”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제178조(개표의 진행) ②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82조의7(인터넷광고) 제5항·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제1항·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또는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

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 하. 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 거.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⑦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 제2항, 제108조 제3항 제4호, 제137조 제1항 및 제16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부분과 부칙 제11조 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86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4.

심의대상 매체현황

※ 일간지 131종, 주간지 277종, 월간지 36종, 뉴스통신 2종 : 총 446종

1) 일간지 : 131종

구분	매체명	
중앙 일간지 (31)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데일리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스포츠칸, 일간스포츠 - 농민신문 - 데일리노컷뉴스, 더데일리포커스, 메트로, 에이엠세븐, 이브닝, 시티, 스포츠한국	
지역 일간지 (100)	서울(12)	내외일보, 대한매일신문, 대한투데이, 서울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일간투데이, 재경일보
	부산(2)	국제신문, 부산일보
	대구(6)	대구신문, 대구일보, 동국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일간대구경북
	인천(4)	경도신문, 기호일보, 인천신문, 인천일보
	광주전남(16)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광일보, 전남도민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광주타임즈, 남도매일, 일간호남, 호남도민일보, 희망일보
	대전충남(9)	금강일보,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충청타임즈
	울산(4)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경기(17)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수도일보, 수도권일보, 수원일보, 시대일보, 오늘신문, 우리일보, 일간경기, 전국매일, 중부일보, 현대일보,
	강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충북(4)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전북(11)	새만금일보, 새전북신문, 일간 전북타임스,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매일신문, 전북연합신문,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경북(3)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남(6)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연합일보, 한남일보
	제주(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타임스, 한라일보

2) 주간지 : 277종

구 분	매 체 명	
종합 주간지 (34)	뉴시스아이즈, 뉴스위크한국판, 시사뉴스, 시사IN, 시사저널, 시사포커스, 씨앤비저널, 매경ECONOMY, 미래한국, 위클리경향,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믹리뷰,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한겨레21 주간지뉴스인뉴스, 뉴스포스트, 미디어워치, 민주신문, 사건의 내막, 시민사회신문, 시사서울, 시사신문, 위클리 오마이뉴스, 월드경제신문,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현대, 중앙선데이, 토요경제, 파이낸셜투데이	
교육 주간지 (13)	교육신보, 교육연합신문, 대전교육신문, 대한교육문화신문, 대한교육신문, 미래교육신문, 삼남교육신문, 전라교육신문, 주간교육신문, 참교육신문, 한국교육신문, 한국교직원신문, 호남교육신문	
지역 주간지 (230)	서울(37)	강남저널,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신문, 격주간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 구로타임즈신문, 노원신문, 뉴스인, 동북일보,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서울강북 신문, 서울강서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초구민신문, 성북신문, 양천투데이, 영등포신문, 은서울, 종로저널, 주간 강남내일신문, 주간 강남신문, 주간 노원우리신문, 주간 동작신문, 주간 마포신문, 주간 서대문자치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시청신문, 주간 은평신문, 주간 종로신문, 주간중랑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부산(1)	부산여성뉴스
	대구(3)	대구달성신문, 대구푸른신문, 팔공신문
	인천(3)	남동신문, 부평신문, 연수송도신문
	광주(1)	시민의소리
	울산(2)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경기(41)	가평타임즈, 강북신문, 경기헤럴드, 고양신문, 고양파주자치신문, 과천문화신문, 과천시대신문, 광명일보, 군포신문, 김포신문, 남양주신문, 뉴스데이, 뉴스리더, 동부교차로저널, 반월신문, 부천신문, 부천타운, 세종신문, 시사타임, 시흥신문, 아이디분당, 안산정론신문, 안성신문, 안양광역신문, 양주신문, 여주신문, 연천저널, 오산시민신문, 용인신문, 위클리 와이, 이천신문, 자치안성, 주간 경춘신문, 주간현대, 파주저널,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포천신문, 하나로신문, 하남신문, 화성오산신문
	강원(10)	강릉신문, 강원리뷰, 강원북부신문, 삼척동해신문, 설악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주간철원신문, 태백신문, 홍천신문
	충북(9)	목요신문, 옥천신문, 음성뉴스, 제천신문, 증평괴산저널, 진천시사신문, 충북뉴스, 충주신문, 충청리뷰,
	충남(13)	공주신문, 금산신문, 뉴스서천, 당진시대, 온양신문, 천안신문, 청양신문, 충남시사신문, 홍성신문, 서해안신문, 논산시문, 예산신문, 태안신문
	전북(23)	고창신문, 고창코리아,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완주신문, 익산신문, 임실신문, 정읍신문, 진안신문, 주간 군산신문, 주간 김제신문, 주간 소통신문, 전북신문고, 정읍뉴스, 익산투데이, 임실뉴스, 해피데이고창
	전남(29)	강진고을, 고흥타임즈,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남해안신문, 담양신문, 담양주간신문,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순천시민의신문, 큰여수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암신문, 여향진도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저널, 주간 강진신문, 주간 나주신문, 주간 순천신문, 주간 영광신문, 주간 완도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함평신문, 주간 해남신문, 주간 해진신문, 주간 화순신문, 진도타임스, 향도신문

구 분	매 체 명	
지역 주간지 (230)	경북(25)	경북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고향신문, 군위신문, 김천신문, 삼백신문, 상주시민신문, 상주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안동신문, 영덕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영천시민신문, 예천신문, 울진21, 울진신문, 의성신문, 청도신문, 칠곡신문
	경남(32)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군민신문, 거창신문, 거창신보, 경서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신문, 남해시대, 남해신문, 미리벌신문, 밀양시민신문, 한국시사, 밀양신문, 사천신문, 새거제,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신문, 주간아림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 창녕신문, 통합창원신문, 하동신문, 한려투데이, 함안신문, 함안아라신문, 함양정통신문, 함양신문, 황강신문
	제주(1)	서귀포신문

3) 월간지 : 36종

구 분	매 체 명
종합월간지(8)	경제풍월, 뉴스저널,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피플매거진, 한국논단
여성지(6)	레이디경향,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주부생활
지역월간지(16)	굿뉴스피플, 월간광양저널, 월간경민, 월간 김포뉴스, 월간 대한, 월간 이천, 여수여수사람들, 열린전북, 수원리뷰, 시사전북, 자치광장, 자치평론, 전국지방시대, 전라도닷컴, 전북마당, 한국여성저널
교육월간지(6)	교육평론, 새교육, 초등우리교육, 중등우리교육, 교육사랑, 푸른전북교육

4) 뉴스통신 : 2종

연합뉴스, 뉴시스

5.

색인

1) 결정유형별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경고문게재	2010지선108	나주투데이	70
	경고문게재	2010지선152	호남매일	75
	경고문게재	2010지선153	호남신문	78
	경고문게재	2010지선154	호남신문	81
	경고문게재	2010지선156	강진고을	84
	경고문게재	2010지선169	충청일보	89
	경고문게재	2010지선176	내외일보	92
	경고문게재	2010지선177	우리일보	95
	경 고	2010지선4	뉴스저널	98
	경 고	2010지선5	시사매거진	100
	경 고	2010지선6	데일리스포츠월드	102
	경 고	2010지선7	중앙매일	104
	경 고	2010지선15	전라일보	107
	경 고	2010지선19	대한매일신문	109
	경 고	2010지선32	내외일보	111
	경 고	2010지선35	수도일보	113
	경 고	2010지선43	전주일보	115
	경 고	2010지선53	강원도민일보	118
	경 고	2010지선54	새전북신문	120
	경 고	2010지선55	시민일보	122
	경 고	2010지선56	인천일보	124
	경 고	2010지선57	인천일보	126
	경 고	2010지선62	중앙매일	128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경 고	2010지선63	중앙매일	130
	경 고	2010지선64	중앙매일	132
	경 고	2010지선66	시사매거진	134
	경 고	2010지선67	강원일보	136
	경 고	2010지선68	동국일보	138
	경 고	2010지선69	대전일보	141
	경 고	2010지선70	인천일보	143
	경 고	2010지선71	충청투데이	145
	경 고	2010지선74	충청일보	147
	경 고	2010지선80	파이낸셜뉴스	148
	경 고	2010지선82	대한매일신문	150
	경 고	2010지선84	새만금일보	152
	경 고	2010지선85	전주일보	155
	경 고	2010지선86	일요서울	157
	경 고	2010지선88	경기헤럴드	159
	경 고	2010지선89	거창군민신문	161
	경 고	2010지선90	거창신보	163
	경 고	2010지선91	한국시사	165
	경 고	2010지선92	서울신문	168
	경 고	2010지선93	강원도민일보	169
	경 고	2010지선94	광주일보	171
	경 고	2010지선95	인천신문	173
	경 고	2010지선96	충북일보	175
	경 고	2010지선97	충청투데이	177
	경 고	2010지선98	시사신문	179
	경 고	2010지선99	시사신문	181
	경 고	2010지선100	시사포커스	183
	경 고	2010지선101	성북신문	184
	경 고	2010지선109	중부일보	186
	경 고	2010지선110	중부일보	188
	경 고	2010지선114	수도권일보	190
	경 고	2010지선115	시사포커스	192
	경 고	2010지선116	교육연합신문	194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경 고	2010지선117	김천문화신문	196
	경 고	2010지선118	서경신문	198
	경 고	2010지선119	한국시사	199
	경 고	2010지선120	인천일보	200
	경 고	2010지선121	주간 시정신문	202
	경 고	2010지선122	주간조선	204
	경 고	2010지선124	충청일보	206
	경 고	2010지선125	충남일보	207
	경 고	2010지선126	충청투데이	209
	경 고	2010지선127	아시아일보	211
	경 고	2010지선128	주간 강남내일신문	213
	경 고	2010지선130	경북일보	215
	경 고	2010지선131	중구신문	217
	경 고	2010지선132	중구자치신문	218
	경 고	2010지선136	중도일보	220
	경 고	2010지선137	충청일보	222
	경 고	2010지선141	매일신문	224
	경 고	2010지선142	우리일보	227
	경 고	2010지선143	월간중앙	229
	경 고	2010지선145	여수여수사람들	231
	경 고	2010지선146	아주경제	236
	경 고	2010지선147	연합뉴스	237
	경 고	2010지선151	전남매일	238
	경 고	2010지선155	일요서울	240
	경 고	2010지선157	전광일보	242
	경 고	2010지선158	호남신문	244
	경 고	2010지선159	시사IN	246
	경 고	2010지선160	뉴스포스트	248
	경 고	2010지선161	강남포스트	251
	경 고	2010지선162	대구일보	253
	경 고	2010지선163	조선일보	254
	경 고	2010지선164	한겨레	257
	경 고	2010지선165	아주경제	258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경 고	2010지선166	민주신문	261
	경 고	2010지선168	evening	263
	경 고	2010지선170	서울신문	265
	경 고	2010지선172	세계일보	268
	경 고	2010지선173	중앙일보	270
	경 고	2010지선174	밀양사람들	271
	경 고	2010지선178	종로저널	272
	경 고	2010지선179	사건의내막	275
	경 고	2010지선182	월간중앙	277
	경 고	2010지선183	마포타임즈	280
	주 의	2010지선2	광주일보	282
	주 의	2010지선9	파이낸셜뉴스	284
	주 의	2010지선12	데일리스포츠월드	286
	주 의	2010지선13	아시아일보	288
	주 의	2010지선14	아시아일보	290
	주 의	2010지선16	전북일보	292
	주 의	2010지선17	경인종합일보	295
	주 의	2010지선18	경인종합일보	297
	주 의	2010지선20	수도권일보	299
	주 의	2010지선22	전국매일	301
	주 의	2010지선23	전국매일	303
	주 의	2010지선24	전국매일	305
	주 의	2010지선25	중도일보	307
	주 의	2010지선26	중도일보	309
	주 의	2010지선27	중부일보	311
	주 의	2010지선28	중부일보	313
	주 의	2010지선36	시민일보	315
	주 의	2010지선37	아시아경제	317
	주 의	2010지선38	우리일보	319
	주 의	2010지선39	우리일보	321
	주 의	2010지선40	인천일보	323
	주 의	2010지선41	전주일보	325
	주 의	2010지선42	전주일보	327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주 의	2010지선44	현대일보	329
	주 의	2010지선45	시사뉴스	330
	주 의	2010지선50	주간함양	332
	주 의	2010지선51	경제풍월	334
	주 의	2010지선59	경북일보	336
	주 의	2010지선60	경기신문	337
	주 의	2010지선61	일간 전북타임스	339
	주 의	2010지선65	충북일보	341
	주 의	2010지선72	광남일보	343
	주 의	2010지선73	전남일보	345
	주 의	2010지선75	일요서울	347
	주 의	2010지선76	위클리경향	349
	주 의	2010지선81	대전일보	351
	주 의	2010지선83	새만금일보	353
	주 의	2010지선102	새만금일보	355
	주 의	2010지선103	월요신문	356
	주 의	2010지선129	인천신문	358
	주 의	2010지선135	조선일보	360
	주 의	2010지선138	국민일보	362
	주 의	2010지선139	동아일보	364
	주 의	2010지선144	헤럴드경제	366
	주 의	2010지선184	대한투데이	367
	권 고	2010지선1	아시아투데이	369
	권 고	2010지선3	데일리노컷뉴스	371
	권 고	2010지선8	파이낸셜뉴스	373
	권 고	2010지선10	기호일보	375
	권 고	2010지선11	동국일보	377
	권 고	2010지선21	스포츠동아	379
	권 고	2010지선33	더데일리포커스	381
	권 고	2010지선34	경기신문	383
	권 고	2010지선46	시사저널	385
	권 고	2010지선47	미래교육신문	387
	권 고	2010지선48	서해안신문	389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권 고	2010지선49	주간 시정신문	391
	권 고	2010지선52	영남일보	393
	권 고	2010지선58	세계일보	395
	권 고	2010지선87	강원리뷰	397
	권 고	2010지선111	새만금일보	399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시정요구인 / 언론사명	면 수
시정요구 심의	정정보도문게재	2010지선150	임세빈 / 주간보령	401
	정정보도문게재	2010지선167	임세빈 / 보령시민신문	403
	정정및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07	양대웅 / 구로오늘신문	405
	정정및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48	전요순 / 일간대구경북	408
	경고문게재	2010지선31	조영규 / THE함안신문	411
	경고문게재	2010지선79	현명관 / 제주프레스	418
	경고문게재	2010지선123	오근량 / 뉴시스	421
	경고문게재	2010지선181	김경희 / 진천군민신문	424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29	서춘수 / 한남일보	428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05	우건도 / 대전일보	431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33	이흥수 / 인천일보	434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49	김호복 / 동양일보	436
	권 고	2010지선106	박정수 / 경남매일	439
	기 각	2010지선30	정송학 / 한겨레	441
	기 각	2010지선77	김성호 / 함평천지신문	443
	기 각	2010지선104	김부기 / 매일신문	446
	기 각	2010지선140	김용일 / 흥성신문	448
	각 하	2010지선113	송재영 / 군포시민신문	450

2) 언론사별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evening	경고	2010지선168	263
	강남포스트	경고	2010지선161	251
	강원도민일보	경고	2010지선53	118
		경고	2010지선93	169
	강원리뷰	권고	2010지선87	397
	강원일보	경고	2010지선67	136
	강진고을	경고문게재	2010지선156	84
	거창군민신문	경고	2010지선89	161
	거창신보	경고	2010지선90	163
	경기신문	주의	2010지선60	337
		권고	2010지선34	383
	경기헤럴드	경고	2010지선88	159
	경북일보	경고	2010지선130	215
		주의	2010지선59	336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0지선17	295
		주의	2010지선18	297
	경제풍월	주의	2010지선51	334
	광남일보	주의	2010지선72	343
	광주일보	경고	2010지선94	171
		주의	2010지선2	282
	교육연합신문	경고	2010지선116	194
	국민일보	주의	2010지선138	362
	기호일보	권고	2010지선10	375
	김천문화신문	경고	2010지선117	196
	나주투데이	경고문게재	2010지선108	70
	내외일보	경고문게재	2010지선176	92
		경고	2010지선32	111
	뉴스저널	경고	2010지선4	98
	뉴스포스트	경고	2010지선160	248
	대구일보	경고	2010지선162	253

구분	언론사명	결정 유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대전일보	경고	2010지선69	141
		주의	2010지선81	351
	대한매일신문	경고	2010지선19	109
		경고	2010지선82	150
	대한투데이	주의	2010지선184	367
	데일리포커스	권고	2010지선33	381
	데일리노컷뉴스	권고	2010지선3	371
	데일리스포츠월드	경고	2010지선6	102
		주의	2010지선12	286
	동국일보	경고	2010지선68	138
		권고	2010지선11	377
	동아일보	주의	2010지선139	364
	마포타임즈	경고	2010지선183	280
	매일신문	경고	2010지선141	224
	미래교육신문	권고	2010지선47	387
	민주신문	경고	2010지선166	261
	밀양사람들	경고	2010지선174	271
	사건의내막	경고	2010지선179	275
	새만금일보	경고	2010지선84	152
		주의	2010지선83	353
		주의	2010지선102	355
		권고	2010지선111	399
	새전북신문	경고	2010지선54	120
	서경신문	경고	2010지선118	198
	서울신문	경고	2010지선92	168
		경고	2010지선170	265
	서해안신문	권고	2010지선48	389
	성북신문	경고	2010지선101	184
	세계일보	경고	2010지선172	268
		권고	2010지선58	395
	수도권일보	경고	2010지선114	190
		주의	2010지선20	299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수도일보	경고	2010지선35	113
	스포츠동아	권고	2010지선21	379
	시민일보	경고	2010지선55	122
		주의	2010지선36	315
	시새IN	경고	2010지선159	246
	시사뉴스	주의	2010지선45	330
	시사매거진	경고	2010지선5	100
		경고	2010지선66	134
	시사신문	경고	2010지선98	179
		경고	2010지선99	181
	시사저널	권고	2010지선46	385
	시사포커스	경고	2010지선100	183
		경고	2010지선115	192
	아시아경제	주의	2010지선37	317
	아시아일보	경고	2010지선127	211
		주의	2010지선13	288
		주의	2010지선14	290
	아시아투데이	권고	2010지선1	369
	아주경제	경고	2010지선146	236
		경고	2010지선165	258
	여수여수사람들	경고	2010지선145	231
	연합뉴스	경고	2010지선147	237
	영남일보	권고	2010지선52	393
	우리일보	경고문게재	2010지선177	95
		경고	2010지선142	227
		주의	2010지선38	319
		주의	2010지선39	321
	월간중앙	경고	2010지선143	229
		경고	2010지선182	277
	월요신문	주의	2010지선103	356
	위클리경향	주의	2010지선76	349
	인천신문	경고	2010지선95	173
		주의	2010지선129	358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인천일보	경고	2010지선56	124
		경고	2010지선57	126
		경고	2010지선70	143
		경고	2010지선120	200
		주의	2010지선40	323
	일간 전북타임스	주의	2010지선61	339
	일요서울	경고	2010지선86	157
		경고	2010지선155	240
		주의	2010지선75	347
	전광일보	경고	2010지선157	242
	전국매일	주의	2010지선22	301
		주의	2010지선23	303
		주의	2010지선24	305
	전남매일	경고	2010지선151	238
	전남일보	주의	2010지선73	345
	전라일보	경고	2010지선15	107
	전북일보	주의	2010지선16	292
	전주일보	경고	2010지선43	115
		경고	2010지선85	155
		주의	2010지선41	325
		주의	2010지선42	327
	조선일보	경고	2010지선163	254
		주의	2010지선135	360
	종로저널	경고	2010지선178	272
	주간 강남내일신문	경고	2010지선128	213
	주간 시정신문	경고	2010지선121	202
		권고	2010지선49	391
	주간조선	경고	2010지선122	204
	주간 함양	주의	2010지선50	332
	중구신문	경고	2010지선131	217
	중구자치신문	경고	2010지선132	218
	중도일보	경고	2010지선136	220
		주의	2010지선25	307
		주의	2010지선26	309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자체심의	중부일보	경고	2010지선109	186
		경고	2010지선110	188
		주의	2010지선27	311
		주의	2010지선28	313
	중앙매일	경고	2010지선7	104
		경고	2010지선62	128
		경고	2010지선63	130
		경고	2010지선64	132
	중앙일보	경고	2010지선173	270
	충남일보	경고	2010지선125	207
	충북일보	경고	2010지선96	175
		주의	2010지선65	341
	충청일보	경고문게재	2010지선169	89
		경고	2010지선74	147
		경고	2010지선124	206
		경고	2010지선137	222
	충청투데이	경고	2010지선71	145
		경고	2010지선97	177
		경고	2010지선126	209
	파이낸셜뉴스	경고	2010지선80	148
		주의	2010지선9	284
		권고	2010지선8	373
	한겨레	경고	2010지선164	257
	한국시사	경고	2010지선91	165
		경고	2010지선119	199
	헤럴드경제	주의	2010지선144	366
	현대일보	주의	2010지선44	329
	호남매일	경고문게재	2010지선152	75
	호남신문	경고문게재	2010지선153	78
		경고문게재	2010지선154	81
		경고	2010지선158	244

구 분	언론사명/시정요구인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수
시정요구 심의	THE합안신문/조영규	경고문게재	2010지선31	411
	경남매일/박정수	권고	2010지선106	439
	구로오늘신문/양대웅	정정및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07	405
	군포시민신문/송재영	각하	2010지선113	450
	뉴시스/오근량	경고문게재	2010지선123	421
	대전일보/우건도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05	431
	동양일보/김호복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49	436
	매일신문/김부기	기각	2010지선104	446
	보령시민신문/임세빈	정정보도문게재	2010지선167	403
	인천일보/이홍수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33	434
	일간대구경북/전묘순	정정및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148	408
	제주프레스/현명관	경고문게재	2010지선79	418
	주간보령/임세빈	정정보도문게재	2010지선150	401
	진천군민신문/김경희	경고문게재	2010지선181	424
	한겨레/정송학	기각	2010지선30	441
	한남일보/서춘수	반론보도문게재	2010지선29	428
	함평천지신문/김성호	기각	2010지선77	443
	홍성신문/김용일	기각	2010지선140	448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 : 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 : 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 : 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 : 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2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 : 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 : 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043)286-8083, 8081 / FAX : 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 : 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 : 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국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 : 064)726-3201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인쇄일	2010년 8월 26일
발행일	2010년 8월 30일
발행인	권 성
편 저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본부 기사심의팀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02)397-3114 / FAX : 02)397-3089 http://www.pac.or.kr

제 작 (주)계문사 02)725-5216

※ 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